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정우진

201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목차	1
색인(Abbreviations).....	12
 연구핵심 찾아가기(Busy Reader's Guide).....	15
국문요약.....	16
Executive Summary	34
 제 1장 연구개관	6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5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70
1) 기존의 논의.....	70
A. 정부의 논의.....	71
B. 기존 연구.....	72
2) 기존 연구의 의미와 한계.....	75
A. 구체적이지 못한 한국형 프로그램 선정 기준.....	75
B. 한국적 경험의 내용과 적용성에 대한 논의 부족.....	75
C. 비교우위 개념에 대한 단선적 분석.....	76
D. 타 공여국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 제한.....	76
E. KOICA의 사업성과 및 역량평가 부재.....	77
F. 수원국 및 국제적 수요에 대한 분석 미흡.....	77
3) 본 연구의 범위 및 한계.....	77
4) 연구방법.....	80
5) 용어 사용에 대한 노트	81
 제 2장 한국형 원조의 개념	82
1. 원조의 조화성(Harmonization)과 원조분업	82

1) 원조분업의 차원	83
A. 국가내(In-country).....	83
B. 국가간(Cross-country).....	83
C. 분야별(Cross-sectoral).....	83
2) 원조분업의 원칙	84
3) 원조분업의 현황과 문제	84
2. 선진국의 특화된 원조	86
1) 노르웨이의 경험 공유 프로그램: Oil for Development Initiative (OfD).....	86
A. 수원국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요청.....	87
B. 석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 정책과 산업 기술	88
C. 원조 관련 부처와 석유 섹터 노르웨이 공기관과의 협력.....	88
D. 연구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한 협력기관의 참여.....	90
E. 평가를 통한 성과 증명	91
F. 원조의 규모.....	91
G. 노르웨이의 국가적 프로파일(Profile).....	91
H. OfD에 대한 비판.....	92
2) 일본(Japan): Infrastructure-FDI 모델과 일본 개발경험의 적용 가능성.....	92
3) 오스트리아(Austria)의 틈새시장 전략: 유기농 농업	94
4) 스페인(Spain): 문화와 개발 섹터로 질적 차별화	95
5) 포르투갈(Portugal): 언어적 비교우위와 제도적 유사성.....	96
6) 룩셈부르크(Luxembourg): 자국의 산업을 이용한 마이크로파이낸스	97
7) 영국(UK): 개발협력 조율 능력	98
8) EC: 재정지원이라는 원조방식 및 다국경 사업에 대한 비교우위	98
3. 특화된 개발원조를 위한 요소	99
1) 공급적 측면: 무슨 원조를?	100
A. 최근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이끈 제도와 타국에의 적용성.....	100
B. 주요산업과 관련이 있고 기술력을 보유.....	101
C. 타 공여국과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틈새시장 분야.....	101
D. 성과의 증명.....	101
E. 국제적 개발협력의 목적과 규범에 부합.....	102
F. 중점 분야간 연결성	102

G. 국가적 이미지와 프로필(Profile)	102
2) 과정적 측면: 어떻게?	103
A. 원조의 규모	103
B. 원조방식	104
C. 협력 파트너	104
3) 수요적 측면: 어느 국가에?	104
A. 공여국과 수원국의 유사성	104
B. 수원국의 의지와 관심 및 수요	106
C. 원조 소외국	107
D. 공여국 개발주체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	111
4. 특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원조방법	112
1) 전통 공여국의 원조방식	112
2) 신흥 공여국의 원조방식	114
3) 한국의 원조방식	116
5. 한국형 모델의 정의	122

제 3장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125

1. 분야별 지원의 정의 및 범위	125
2.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섹터별 지원 비교	127
1) 한국과 DAC 공여국의 섹터별 지원 추세 비교	127
A. 상위 섹터 지원의 전 세계적인 추세(Trend)와 한국의 지원 추세 비교	127
B. 섹터 지원의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지원 추세 비교	130
2) 한국과 DAC 공여국의 하위 섹터별 자원 분배 비교	136
A.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세부 분야별 ODA 비중 비교	137
B.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세부 분야별 ODA 지원액 비교	138
C. 분야별 주 공여국	140
3. KOICA와 타 공여국의 중점 분야 비교	146
1) 협력단의 7개 섹터를 중점 분야로 표방한 국가의 수	150
2) 각 섹터 및 주제별 중점 국가 수	151
3) 평균 섹터 수 비교	153
4) 타 공여기관과 KOICA 중기전략에 명시된 섹터 내 사업의 목표와 내용비교	153

4. KOICA의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154
1) 전체 분야.....	155
2) 교육 분야.....	158
A. 교육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158
B. 교육 분야 평가.....	160
C. 교육 분야의 비교우위.....	162
3) 보건 분야.....	163
A. 보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163
B. 보건 분야 평가.....	167
C. 보건 분야의 비교우위.....	170
4) 행정 분야.....	171
A. 행정제도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171
B. 행정제도 분야 평가.....	174
C. 비교우위.....	180
5) 정보통신 분야.....	181
A. 정보통신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181
B. 정보통신 분야 평가.....	182
C. 정보통신 분야의 비교우위.....	185
6) 지역개발 분야.....	188
A. 지역개발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188
B. 지역개발 분야 평가.....	192
C. 비교우위.....	194
7) 산업 에너지 분야.....	196
A. 산업 에너지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196
B. 산업 에너지 분야 평가.....	201
C. 산업 에너지 분야의 비교우위.....	204
8) 환경 분야.....	207
A. 환경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207
B. 환경 분야 평가.....	209
C. 환경 분야의 비교우위.....	211
5. 섹터 분석 총정리.....	213

제 4장 분석틀과 데이터베이스.....	215
1. 분석틀(Framework).....	215
1) 열(Column).....	216
A. 공급적 측면.....	216
B. 수요적 측면.....	227
2) 행(Row): 섹터별 국별 프로그래밍.....	230
A. 분야-세부 분야-CRS Code-세부 프로그램 예시.....	230
B. 3가지 프로그램 요소별 사업 예시.....	231
2. 데이터베이스.....	231
3. 점수.....	234
 제 5장 한국형 모델의 선정.....	 237
1. 선정기준(Criteria)을 다양화한 프로그램 선정.....	237
1) 종합적 고려.....	237
2) 공급적 측면 위주.....	238
3) 차별성 제외.....	238
4) MDG 중심.....	239
5) 한국의 현재 중점 육성사업 중심.....	240
2. 선정된 프로그램의 장 · 단점과 과제.....	241
3. 최종 선정.....	245
 제 6장 한국형 모델의 수행.....	 247
1. 한국형 모델 사업화 방안: 직업훈련을 예시로.....	247
1) 한국적 경험의 요소.....	247
2) 비교우위.....	249
3) 차별성.....	250
4) 사업성과를 통한 개선방안.....	252
5) 국제적 수요와 수원국의 요청.....	258
6) 지원 가능 지역.....	260
7) 지원규모.....	262
8) 원조방법.....	262

A. 정책자문.....	263
B. 인프라 구축.....	263
C. 인적역량개발.....	264
9) 협력기관.....	266
2. 한국형 모델 사업화 가이드라인.....	269
3. KSP와 프로그램 통합안.....	271
1) KSP 프로그램.....	272
2) KSP와 KOICA 사업 비교 및 통합 필요성.....	273
3) 통합방안.....	279
4. 후보 한국형 모델 통합안.....	281
5. 협력단 내에서 비교우위에 근거한 협력사업 실행방법.....	281
1) 업무분장.....	281
2) 한국형 모델의 시행순서.....	282
3) 국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KOICA 업무 프로세스에서 본 연구의 활용.....	283
6. 기존 섹터부서의 사업과 한국형 모델 사업의 차이 요약.....	285
제 7장 제언 및 결론	287
1. 제언.....	287
1) 지식의 축적, 분석, 전파의 강화	287
2) 섹터 재정비.....	291
3) 한국형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Process) 개선	293
2. 결론.....	293
별첨(Annex).....	299
별첨 1. 한국의 시대별 과제, 성장방식 및 주요전략.....	299
별첨 2. 설문조사 결과.....	300
별첨 3. 관계 부처 분야별 한국형 프로그램.....	304
별첨 4. DAC Member's Priority Sectors.....	306
별첨 5. Comparison of Priority Sectors, Goals and Targets of KOICA, USAID and JICA	308
별첨 6. Common Sub-sectors of KOICA, USAID and JICA.....	310

별첨 7. 분야별 평가 및 프로젝트 사후평가 보고서 목록.....	312
별첨 8. KOICA CRS 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1-'07.....	314
별첨 9. DAC 양자 무상 ODA CRS 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319
별첨 10. KOICA CRS 코드별 지원액과 사업형태.....	328
별첨 11. 양 · 다자 유 · 무상 ODA CSR 코드별 지원 총액, 비중, 순위 '02-'07	333
별첨 12. KOICA의 CSR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1-'07.....	341
별첨 13. DAC 양자 무상 ODA CRS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346
별첨 14. 절대적 주 공여국 평균 지원액 '02-'07.....	354
별첨 15. 상대적 주 공여국 평균 지원비중 '02-'07.....	363
별첨 16. MDG: Official list of MDG indicators.....	371
별첨 1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374
참고문헌.....	438

표 목차

[표 1] KOICA의 중점 및 일반 지원국의 공여국 수와 CPA.....	109
[표 2] KOICA의 중점 및 일반 협력 대상국 중 상대적 원조 소외국.....	111
[표 3] OECD DAC 역량개발 가이드라인을 따라 조명해 본 KOICA 단기 연수사업...	118
[표 4] 신흥 공여국과 전통 공여국 사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	120
[표 5] KOICA와 DAC 회원국의 분야별 ODA 비중 비교 2001-2008년, 2007-2008년..	137
[표 6] 한국과 DAC 회원국 세부 분야별 원조액 비교 2007년.....	139
[표 7] 분야별 주 공여국 2001-2007년.....	141
[표 8] 분야별 주 공여국 2007년, 2008년.....	144
[표 9] KOICA의 7개 섹터별 목적(Goal)과 타겟(Target).....	147
[표 10] KOICA 원조목적코드별 총 지원액 합계 2001-2007	156
[표 11] DAC 양자 무상원조 원조목적코드별 총 지원액 2002-2007	157
[표 12] KOICA 교육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159
[표 13] 타 공여기관 교육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159
[표 14] KOICA 보건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165
[표 15] 타 공여기관 보건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166
[표 16] KOICA 행정제도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172
[표 17] 타 공여기관 행정제도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173
[표 18] KOICA 정보통신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181
[표 19] 타 공여기관 정보통신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182
[표 20] 정부혁신 국내외 공인 인증, 수상, 및 수출 실적.....	187
[표 21] KOICA 지역개발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190
[표 22] 타 공여기관 지역개발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191
[표 23] KOICA 산업 에너지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198
[표 24] 타 공여기관 산업 에너지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199
[표 25] 양자 유상지원의 CRS 코드별 순위.....	203
[표 26] KOICA 환경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208
[표 27] 타 공여기관 환경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209
[표 28] 정책,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의 세 가지 프로그램 요소와 각 요소별 사업형태...	231
[표 29]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부사업을 예시로	232

[표 30] KOICA 44개 세부 분야에 대한 점수표.....	235
[표 31]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종합적 측면.....	238
[표 32]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공급적 측면.....	238
[표 33]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차별성 기준 제외시.....	239
[표 34]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MDG 중심.....	239
[표 35]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한국의 현재 중점 육성사업 중심.....	240
[표 36] 상위 점수를 획득한 23개 프로그램.....	240
[표 37] 직업훈련에 관한 2010년 수요조사.....	259
[표 38] 한국형 모델 발굴의 프로세스(Process).....	270
[표 39] KSP 사업예산, 지원국가 수, 지원 국가 2004-2008.....	272
[표 40] KOICA 행정제도팀의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사업과 KSP 사업 비교.....	274
[표 41] 전략, 사업발굴 및 집행과정.....	283

박스(Box) 목차

[박스 1] 섹터 관련 용어 정리.....	126
[박스 2]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성공요소 및 보완점.....	177
[박스 3] 새마을운동을 통해 본 한국적 경험과 적용성.....	218
[박스 4] 농촌종합개발 분야의 비교우위.....	220
[박스 5] 다부문 종합 농촌개발 사업의 차별성 분석.....	225
[박스 6]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한 KOICA의 성과.....	226
[박스 7]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본 국제적 개발목표 및 MDG와의 연관성.....	228
[박스 8] 특정 국가 및 지역 그룹에 참여적 지역개발사업의 적용 가능성.....	230
[박스 9] 경쟁력 있는 상위 10개 프로그램.....	241
[박스 10] 최종 선정 상위 5개 한국형 모델 후보.....	246
[박스 11] 교육부문 직업훈련원의 사업성과.....	253
[박스 12] 직업훈련의 MDG 기여.....	258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형 모델의 득과 실	70
[그림 2] 원조분업의 세 가지 차원	84
[그림 3] 노르웨이의 경험 공유 프로그램: OfD의 구성 요소	87
[그림 4] Oil for Development의 운영체제와 협력기관	89
[그림 5] 특화된 개발원조를 위한 세 가지 요소	99
[그림 6] KOICA의 7대 분야별 44개 주요 프로그램	149
[그림 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216
[그림 8] 분야-세부 분야-CRS Code-세부 프로그램 예시의 연결고리	230
[그림 9]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적인 요소	248
[그림 10] 한국형 직업훈련사업의 운영체제 및 관련기관	267
[그림 11] 한국형 경제개발전략 추진능력 강화사업의 운영체제 및 관련기관	280
[그림 12] 단일 국별 프로그램 하에 사업형태별, 요소별 연계 강화	285

차트(Chart) 목차

[Chart 1] 상위섹터 차원에서 공여국 지원 추세 2001-2008	128
[Chart 2] 상위 섹터 차원에서 한국의 지원 추세 2001-2008	129
[Chart 3] 상위 섹터 차원에서 한국과 DAC 공여국의 지원 추세 비교	130
[Chart 4] DAC 공여국의 사회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131
[Chart 5] DAC 공여국 사회 부문 중 공공행정 부문의 세부 지원 1995-2004	131
[Chart 6] 한국의 사회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132
[Chart 7] DAC 공여국의 경제 부문 지원추세 2001-2008	133
[Chart 8] 한국의 경제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134
[Chart 9] DAC 공여국의 생산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135
[Chart 10] 한국의 생산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136
[Chart 11] DAC 공여국들이 표방하는 중점 분야: KOICA 섹터에 따른 분류	151
[Chart 12] DAC 공여국들이 표방하는 중점 분야: 일반적 섹터와 테마에 따른 분류 ..	152
[Chart 13]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교육분야 세부 지원 비교	158

[Chart 14]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보건 분야 세부 지원 비교.....	164
[Chart 15]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행정제도 분야 세부 지원 비교.....	172
[Chart 16]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정보통신 분야 세부 지원 비교.....	181
[Chart 17]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지역개발 분야 세부 지원 비교.....	189
[Chart 18]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산업 에너지 분야 세부 지원 비교.....	197
[Chart 19]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환경 분야 세부 지원 비교.....	208
[Chart 20] KSP 사업 지원예산 및 지원국 숫자 추이 2004-2009.....	273

색인(ABBREVIATIONS)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발협력위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7

범분야, Cross-cutting issue, 78

분야별 상대적 ODA 비중, 137

분야별 절대적 ODA 원조액, 138

상대적 주 공여국, 140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

Sector-allocable aid, 126

절대적 주 공여국, 140

주제, Theme, 151

한국의 수원국으로서 경험 106

한국형 모델의 정의, 122

한국형 사업의 브랜드 294

한국형 위험성, 한국형 비판, 68

Accra Agenda for Action, AAA, Triple A

아크라 행동강령/계획, 84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 90

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 개발은행, 180

Automated Meter Reading System, AMR

자동원격검침시스템, 201

Bridging the Poverty Gap Program, BPG, BPGP

빈곤 격차 해소 프로그램, 294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캐나다 국제개발처, 76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시민사회단체, 171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 107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국별/국가지원전략, 118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협력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가능 원조, 103

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CRS Code

원조목적코드, 126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영국 국제개발부, 98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

배전자동화시스템, 201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경제협력기금, 유상원조, 203

European Commission, EC, 유럽 위원회, 94

European Council, EC, 유럽 이사회, 82

European Union, EU, 유럽 연합, 82

Exchange of Notes, EN, 28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192

Fragile State, FS, 취약국, 92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독일 기술협력공사, 162

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HIPC

고채무국, 108

Higher sector, 상위 섹터/분야/부문, 126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he

Fourth, HLF-4, 제4회 서울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 6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T, 정보통신, 73

Information Technology-Biotechnology-
Nanotechnology, IT-BT-NT,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융합 기술, 244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10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252

International Programme for Petroleum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etrad
석유국 산하 국제협력 프로그램, 87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GmbH, Inwent,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독일국제능력
개발원, 269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일본 국제협력은행, 93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일본 국제협력기구, 76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지식공유사업, 6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한국개발연구원, 68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협력단, 65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1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독일부흥금융고, 289

Least Developed Country, LDC, 최빈국, 66

Low- and Middle-Income Country, LMIC
중저소득국, 67

Low-Income Country, LIC, 저소득국, 6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 283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국가개발계획, 276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ad,
노르웨이 국제개발청, 86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NPD
노르웨이 석유이사회, 86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적개발원조, 68

On-the-Job Training, OJT 직무교육훈련, 25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67

Parallel Implementation Unit, PIU
병행 프로젝트 집행 단위, 113

Partner country, Recipient country
협력 대상국, 파트너국, 수원국, 81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빈곤감소전략, 276

Program-Based Approach, PBA
프로그램형 접근법, 112

Project Design Matrix, PDM
프로젝트설계 일람표, 283

Research and Development, R & D
연구개발, 283

Results-Based Management, RBM
결과중심관리, 28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현시비교우위, 204	Development, UNCTAD
Sector Program Support, SPS	유엔무역개발회의, 176
섹터 프로그램 지원, 11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Sector, 섹터/분야/부문, 127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88
Sector-Wide Approach, SWAp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섹터별 접근법, 112	Development, USAID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SDE,	미국 국제개발처, 153
개발경험공유 프로그램, 294	Upper-Middle-Income Country, UMIC
Sub-sector, 하위 섹터/분야/부문, 127	고중소득국, 67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ency, Sida,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 256	세계무역기구, 274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VET, 직업기술 교육, 256	

연구핵심 찾아가기(BUSY READER'S GUIDE)

장	내용	페이지
제 1장	[그림 1] 한국형 모델의 득과 실	70
	기존 연구의 의미와 한계	75
제 2장	[그림 3] 노르웨이의 경험공유 프로그램: OfD의 구성 요소	87
	[그림 5] 특화된 개발원조를 위한 세 가지 요소	99
	[표 4] 신흥 공여국과 전통 공여국 사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	120
	한국형 모델의 정의	122
제 3장	[그림 6] KOICA의 7대 분야별 44개 주요 프로그램	149
	섹터 분석 총정리	213
제 4장	[그림 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216
	[표 29]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부사업을 예시로	232
	[표 30] KOICA 44개 세부 분야에 대한 점수표	235
제 5장	선정기준(Criteria)을 다양화한 프로그램 선정	237
	[박스 9] 경쟁력 있는 상위 10개 프로그램	241
	[박스 10] 최종 선정 상위 5개 한국형 모델 후보	246
제 6장	[그림 9]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적인 요소	248
	[그림 10] 한국형 직업훈련 사업의 운영체제 및 관련기관	267
	[표 38] 한국형 모델 발굴의 프로세스(Process)	270
	국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KOICA 업무 프로세스에서 본 연구의 활용	283
	기존 섹터 부서의 사업과 한국형 모델 사업의 차이 요약	285
제 7장	지식의 축적, 분석, 전파의 강화	287
	결론	293

국문요약

I. 연구배경

한국형 모델의 유용성과 위험성

한국형 무상원조는 한국이 정부 주도로 단시일에 이룬 개발경험을 다른 개도국의 개발을 돕는 데 활용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과 파급력을 높이고, 제한된 자원¹⁾으로도 선진국과 차별적인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부각되어 왔다. 또한 한국형으로 선택된 원조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한국의 중점 섹터를 전문화시켜 향후 원조분업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이는 글로벌 펀드(Global fund)와 신흥 공여국 등 점점 다양해지는 원조 수행자들로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국제원조체제(Global aid architecture) 하에서 새로운 DAC 회원국으로서 자리매김을 막 시작하는 공여국인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형 원조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한국의 독특한 경험이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협력국에게 유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여자 위주의 원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²⁾ 또한 한국은 신흥 공여국으로서 국제원조사회의 모범관행을 배우고 타국과의 협조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독자적 노선의 추구는 이를 방해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³⁾

1) DAC 도너 2007년 평균 ODA = 4.70백만 달러: 한국 2007년 ODA = 0.70백만 달러/DAC 도너 2007년 평균 GNI 대비 ODA = 0.45%: 한국 2007년 GNI 대비 ODA = 0.09%

2) (KOICA, 2007), 이는 선진 공여국의 기술협력이 받는 비판과도 일맥상통. Actionaid (Actionaid International, 2005)는 공여국이 낡은(Outdated) 개발 모델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식(Generic knowledge)인 것처럼 수원국에 처방하려 한다고 지적. 또한 수원국의 많은 문제들은 정치·역사적인 문제인데 비해 공여국은 자국의 전문가와 기자재를 사용한 기술적인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비판.

3) (권율, 김한성, 박복영 외, 2006), 국제협력단 내 설문조사, (경향신문, 2007)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형 원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양자 무상원조의 개념과 범위를 우리나라 양자 무상원조의 대표적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협력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정립된 정의에 따라서 분야별로 한국형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분석틀(Framework)을 만들고, 이 분석틀에 따라 국제협력단의 주요 사업을 분석하여, 모델 한국형 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프로그램들을 세부 섹터 레벨에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후보 프로그램들 중 가장 경쟁력 있게 선정된 최종 후보사업들을 가지고, 이를 기존 섹터 부서에서 수행했던 사업방식과는 다른 한국형 모델로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분석틀과 특화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협력단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형 원조모델 시행을 위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며 결론을 맺었다.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2007) 등 기존 한국형 모델과 관련한 연구는 한국형 모델의 분야와 패키지(Package)화된 원조방식을,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에서의 정부 논의는⁵⁾ 개발경험 전수 현황 및 문제점, 전 정부적 추진 전략과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특정 분야와 지역을 다룬 연구로는 새마을운동의 대 개도국 적용성과⁶⁾ 우리의 개발 당시와 유사한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사용하였던 경제정책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있다.⁷⁾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구체적인 일관된 한국형 모델의 선정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이러한 기준을 44개 세부 분야별 분석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논의가 다차원적인 비교우위의 개념에 대해 섹터를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접근을 한 면이 있다면 본 연구는 비교우위를 지역 및 원조방식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으로 개념으로 해석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타 공여국과 한국의 중점 분야에 대한 비교분석, 협력단의 사업성과(Results) 및 역량(Capacity)에 대한 평가, 협력 대상국 및 국제적 수요분석의 미흡으로 연구를 실제 협력사

4) (전승훈, 이경구, 이재홍, 손성애, 2007), (전승훈, 이태주, 김달현, 이태희, 전은영, 2006), (권율, 김한성, 박복영 외, 2006) 참고.

5) (경제정책 비서관실, 2007), (관계부처합동, 2007) 참고.

6) (정기환, 김용택, 허장, 2007), (허길행, 전승훈, 유철, 최미애, 2008)

7) (박복영, 채욱, 이제민, 2007)

업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앞으로 협력단이 강화해 갈 국별 프로그램의 관점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이⁸⁾ 이미 한국적인 개발 경험을 원조사업에 어느 정도 녹아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단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실증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정책 보고서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적 개발경험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고찰하거나 보다 더 원조 효과성이 있는 섹터를 계량경제적으로 분석하거나,⁹⁾ 사업부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혹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개발경험과 주요 분야

한국적 모델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하나로 압축하여 개도국에 시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이를 더 세분화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의 성공적 개발 요인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한국 정부에 의한 개발”¹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이 빈곤을 극복한 수원국으로서 주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교훈은 “수원국 주도적”인 원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¹¹⁾ 이를 핵심 분야별로 살펴본다면, 먼저 행정제도 분야는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개발단계에 맞는 산업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 경제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에너지 분야는 산업활동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 공공재로 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편 보편적 교육 분야와 보건 분야 등 형평적 사회정책은 국가 주력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낙후된 농어촌의 개발을 도모하여 불균형한 발전에 따른 사회 통합이 꾀하여졌고, 환경분야에서는 이와 연계한 산림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되어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국가 정보화, 즉 IT도 우리의 주요한 개발 분야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면에서 보면 국제협력단의 7대 분야, 즉 교육, 보건,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 에너지, 환경은 현재

8) 일반적 ODA 지원 사이클을 통해 지원되는 프로젝트 사업. 여기에는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과 같은 특별기금이나 지원 시기가 불투명한 인도적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도 포함되지 않음.

9) (Dollar, David. & Pritchett, Lant., 1998), (Clemens, Michael., Radelet, Steven., Bhavnani, Rikhil., 2004), (Hansen, Henrick. & Tarp, Finn., 2000) 등의 페이지

10) (Stiglitz, Joseph, 1996), (Leipziger, Danny. & Kim, Kihwan., 2000)

11) (이경구, 2004) (Joo, Dong-Joo., 2009)

12) KOICA 정보통신팀 검토자료(2010.1)

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국의 주요 개발 섹터에 기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³⁾

II. 한국형 모델의 개념

원조분업의 의미와 타 공여국 사례 분석

한국의 놀라운 개발경험을 우리만의 독특한 장점을 살린 개발협력 사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원조의 동향과 논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공여국의 비교우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자국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 협력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여국간의 중복 사업을 줄이고자 하는 원조의 조화성(Harmonization) 원칙 하에 원조분업(Division of labor)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원조분업은 공여국들이 한 수원국에서 관여하는 분야 및 지역을 축소시키라는 “국가 내 원조분업”과 원조 소외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국가간 원조 분업”, 그리고 “섹터적 비교우위”의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진다.¹⁴⁾

원조 분업 논의에 이어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먼저 노르웨이(Norway)의 경험 공유 프로그램인 “Oil for Development (OfD)”는 한국형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준다. 노르웨이는 효과적인 정부정책을 통해 석유와 가스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관리·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산유 생산 개도국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OfD라 한다.¹⁵⁾ 이 프로그램은 석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정책과 석유 섹터에 대한 기술, 원조 관련 부처와 석유 섹터 공기관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민간 협력기관과 국제기구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석유 섹터 원조에 대한 외국기관의 평가¹⁶⁾를 받아 원조의 성과를 증명하고, 수원국의 지속적 요청과 함께 원조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다음으로 일본은 건설 부문 투자가 선진국 중 가장 큰 강점과 자국 경제개발 모델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통해 개도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을 돕는 것을

13) 더 자세한 분야별 개발경험은 [별첨 1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참고.

14) (OECD, 2009b), (Schulz, Nils-Sjard., 2007), (Roeske, Kerstin., 2007) 참고.

15)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2008)

16) Danish Energy Authority

비교우위로 본다.¹⁷⁾ 일본은 경제개발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명하고¹⁸⁾ 시대적 적절성이 다소 떨어지는 일본의 개발모델을 원조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조사에 투자해 왔으며, 동시에 환경이나 인권침해의 위험이 큰 대규모 인프라 사업 실시를 위한 지침을 강화해 왔다.¹⁹⁾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일본과 원조철학과 전략이 비슷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Austria)는 대규모 공여국들이 모두 농업을 비교우위로 주장하는 에티오피아(Ethiopia)에서 유기농 농업이라는 틈새 분야와 소외된 틈새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공여국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전략을 보여준다.²⁰⁾ 스페인은 타 공여국에서 볼 수 없는 “문화와 개발”이라는 범분야(Cross-cutting issue)를 지원하여 새로운 섹터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²¹⁾ 또한, 발달한 자국의 국제금융산업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지원하는 룩셈부르크의 예에서 자국산업과 ODA의 전략적 연계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²²⁾ 더불어, 협력국과 언어적·제도적·문화적 유사성을 비교우위로 삼고 있는 포르투갈의 예는 지역적 비교우위의 측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의 경험에만 의지하는 것은 비교우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였다.²³⁾ 정책대화, 재정지원 등 원조방식에 대한 비교우위에 대해 교훈을 주는 영국과²⁴⁾ EC의 사례도²⁵⁾ 함께 논의되었다.

17) (OECD, 2004)

18) 일본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정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사후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를 실시하였다. 베트남 하노이(Hanoi) 고속도로와 하이퐁(Hai Phong) 항구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종적·횡적 조사를 포함한 이 평가는 프로젝트 후에 FDI와 직업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빈곤가구가 줄어들고 수입원이 다양화되는 등의 빈곤감소효과도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 (OECD, 2004)

20) (OECD, 2009)

21) (OECD, 2007c)

22) (OECD, 2008)

23) (OECD, 2006a)

24) (OECD, 2006b)

25) (OECD, 2007a)

특화된 원조의 요소

이러한 선진 원조사회에서 통용되는 비교우위와 원조분업 개념을 통해 특화된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측면, 즉 (1) 공급 (2) 과정 (3) 수요적 측면에서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어떤 **원조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개발 성과를 이뤄낸 최근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의 주요 산업과 관련되어 기술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원조여야 한다. 동시에 타 공여국의 지원이 미흡한 혁신적인 틈새시장과, 단순히 과거에 원조를 실시해 오던 분야 보다는 “성과”를 증명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 또한 공여국이 여러 개의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을 때 각 분야는 긴밀히 연계되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⁶⁾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과정적 측면**에서는 원조방식 및 접근법과 협력 파트너, 그리고 원조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통적 서구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중간에 있는 한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두 공여국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원조양식(Modality)을 발전시켜야 함을 논의하였다. 원조양식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강점인 정책자문과 신흥 공여국의 강점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양측에서 모두 부족한 인적역량 강화의 측면을 균형 있게 지원하되, 이를 프로젝트, 봉사, 연수, 전문가, NGO 지원 등 개별사업 형태의 장점을 살려서 유기적인 투입요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와 적절한 비용대비 최적의 기술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여국 중심의 원조가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Paris Declaration, Accra Agenda for Action: PD/AAA) 등의 국제 원조 효과성 어젠다에 맞추어 공여국간 공식적 조화의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형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²⁷⁾을 따라야 할 것이다. 협력 파트너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다양한 원조 수행자들을 포함하여 양측의 지식과 기술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국가에 지원을 해야 가장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수요적 면**에서는

26)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유기농 농업은 농업 분야 및 민간부문개발이라는 중점 분야와, 룩셈부르크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직업교육이라는 중점 분야와 연결되어 실시된다.

27) 프로그램 원조는 프로젝트 원조가 공여국 참가 및 통제가 높은 것에 비교,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Program-Based Approach에서의 프로그램은 공여국의 비슷한 단위 프로젝트를 모은 집합체로서의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원국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PBA는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공여국들의 원조흐름을 분류하는 접근법(Approach) 혹은 프로세스(Process)’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공여국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술협력, 예산지원 등은 PBA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양식(Modality)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공여국당 지원양식은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패키지적인 의미에서의 “프로그램” 형태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현주(2010),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Forthcoming) 참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을 갖추도록 수원국이 문화, 지리적 혹은 개발조건 면에서 공여국과 비슷하고,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수원국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타 공여기관의 원조에서 소외된 나라와 공여국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한 협력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의 정의

이러한 비교우위의 세 가지 요소를 전제로 KOICA 양자 무상원조 실시를 위한 전략적 모델로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이 **분야, 지역, 규모**, 그리고 **원조 실시방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란, 한국 정부의 주도로 성공적인 정치·경제·사회 개발을 이끌었던 제도, 지식, 기술, 경험을 타 개도국과 공유하여 국제적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이 산업·기술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으며 타 공여국과 차별화하여 원조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분야**의 원조이다.

원조지역은 한국과 지리·언어·문화·역사 혹은 기타 한국과 개발 초기 조건 면²⁸⁾에서 유사한 나라,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에 관심과 수요가 높은 협력국, 다른 공여기관의 원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가, 그리고 한국 NGO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현지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규모적 측면에서 “절대적 지원규모”는 최소한 해당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CRS Code) 분야에 대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평균 지원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상적으로는 주 공여국의 지원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상대적 지원규모”는 해당 세부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여국의 지원비율을 참조한다.

원조 실시방법은 먼저 개별사업형태가 통합되어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사업요소로 유기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적역량 강화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신흥 공여국과 선진국 원조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조양식(Modality)으로 한다. 한

28) 소득수준, 인구의 크기, 자원유무, 내륙 해안국의 지리적 여건, 내전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적·경제적 혼란 등으로 우리의 개발 초기와 비슷한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박복영, 채욱, 이제민,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국형 사업은 국제원조규범을 준수하며 협력 대상국의 주도 하에 타 공여국과 조화되어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²⁹⁾을 기초로 한 국별 프로그램의 틀에서 프로그램 원조(Program-Based Approach: PBA)의 하나인 섹터별 접근법(Sector-Wide Approach: SWAp)을 사용한 장기적 지원을 실시한다.³⁰⁾ CAS를 통해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SWAp은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타 공여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 개발 관련 분야별 전문성 집적을 위해 국내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다자기구 및 국외 개발기관과도 협조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험을 각 지역에 적합하게 가공 및 적용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 수원국 지방 정부, 수원국 조달 시스템, 현지 컨설턴트,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를 적극 활용한다.

III.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섹터별 지원 비교

이러한 한국형 모델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섹터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협력단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KOICA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상위 섹터, 즉 사회·경제·생산 부문에서 2002-2008

29)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모범사례인 몽골 지원전략 수립 프로세스는 (1)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주인의 식(Ownership) 현황 분석 (2) 수원국 내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분업 현황 분석 (3) 한국 ODA의 기여 가능 분야를 하위 섹터 레벨에서 분석 후 사업 후보 분석 (4) 수원국 정부 및 공여기관과 정책 협의 (5) 후보 사업, 예산 및 사업관리 소요인력, 몽골 국가시스템 활용 방안, 몽골 내 원조 조화 추진안,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위험관리 방안, 그리고 동 CAS 적용시 파리선언 지표별 이행성과 예측 분석서가 포함된 3개년 수원국 지원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세계은행과 외교통상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정유아, 2009)

30) SWAp이란, PBA가 특정 섹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위 개념으로서 SWAp은 PBA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특징을 모두 내포한다. PBA가 범국가적 포괄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면 SWAp은 교육, 보건 등 섹터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SWAp은 이들 특정 분야에 관한 개발 전략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원국 내에서 SWAp이 다루는 섹터들은 빈곤감소전략(PRS)이나 국가개발전략(NDS)에서 우선 과제로 지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DAC가 정리한 SWAp의 구성요소는 1) 수원국 주도의 명확한 섹터 정책과 전략 2) 섹터 전략을 반영한 중기 지출안(MTEF) 3) 섹터를 지원하는 자원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합의 4)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5) 모든 주요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광범위한 협의 메커니즘 6) 섹터 레벨에서 원조 조정과 대화를 위해 형식화된 수원국 주도의 프로세스 7) 보고, 예산기획, 재정관리 및 조달에 관해 조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의된 프로세스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현주(2010),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Forthcoming) 참고.

년까지 DAC 회원국과 한국의 지원성향에 대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경제 부문에, DAC 공여국³¹⁾은 사회 부문,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나 평화구축 부문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절대 지원액 면에서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T)에서 타 공여국 평균보다 4배가 높았고 직업훈련은 타 공여국 평균과 비슷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적거나 비슷하였다. 상대적 비중 면에서 한국은 ICT가 전체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Sector-allocable ai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공여국이 ICT에 투자하는 비중보다 12배가 높았고, 직업훈련의 경우 5배가 높았다. 반면, 기초교육이나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에 투자하는 ODA는 각각 DAC 평균의 6%와 1%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KOICA와 타 공여국의 중점 분야 비교

다음으로 KOICA의 7개 섹터별 44개 세부 분야가 타 공여국의 중점 분야와 차별화가 되는지 살펴보았다. KOICA에서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 중 최상위로 지원되는 세부 분야는 공공행정(18.20%), 직업훈련(7.62%), ICT(6.14%)인 것에 비해, 타 공여국들은 고등교육(4.20%), HIV/AIDS 포함 성병대책(3.2%), 공공행정(3.0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KOICA는 직업훈련과 ICT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제도분야는 협력단과 타 공여국 모두 비중 있게 지원하는데, 사업 초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협력단 행정제도(Governance) 분야의 목표와 타겟은 경제성장전략, 민영화, 수출진흥 등을 포함하는 반면, 타 공여국은 부패나 인권, 분권화 등을 주로 다루었다.

자원분배와 관계없이 KOICA와 타 공여국이 중점 분야(Priority sector)로 ‘표방’하는 분야를 분석하면 ICT, 수송, 무역 등이 비교적 적은 공여국이 지원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³²⁾ 단, 협력단이 중장기 전략에서 중점 목표와 타겟으로 표방하는 사업 분야의 대부분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나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비슷하고,³³⁾ 원조 규모 면에서도 타국 평균 이상 지원하는 부분이 드물어서 현재의 섹터별 전략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원조규모는 크지 않으면서 섹터 수는 타 공

31)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32) (OECD, 2009c)을 참조하여 20개 DAC 공여국에 대해서 조사. ICT는 2개국, 수송은 4개국, 무역은 6개국이 중점 분야로 꼽음.

33) (USAID, 2006) (JICA, 2008) , KOICA 2008-2010년 대외무상원조 중기 전략 참고.

여국 평균 8개에 비해 4개가 많은 최다 12개³⁴⁾를 기록하여 관심 분야를 대폭 줄여갈 필요성도 발견되었다.³⁵⁾

KOICA의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상위 섹터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 이어, 협력단의 7개 섹터를 섹터 내 중점분야, 한국형 경험 공유의 잠재력이 큰 세부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³⁶⁾ 사업평가, 그리고 기술적 비교우위의 시각에서 KOICA 및 OECD 통계, 섹터별 평가 보고서와 기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³⁷⁾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부 분야별로 우리나라 원조의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형태는 프로젝트 사업을 위주로 하되, 연수, 봉사, NGO 지원사업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였다.

교육 분야³⁸⁾는 다른 공여국들이 고등교육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중등교육,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비중이 40%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산업화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한국적인 경험과 우리가 가진 훈련에 대한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집트(Egypt) 쇼브라 자동차 정비센터, 카자흐스탄(Kazakhstan) 자격검정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부터 정책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의 예를 볼 수 있다.

2008년 협력단 사업 중 20%를 차지해 가장 비중 높게 지원되었던 보건 분야는 타 공여기관들이 HIV/AIDS에 초점을 두는 것과 대조적으로 의료 서비스, 즉 병원건립과 의사파견에 초점을 맞추었고, 에콰도르(Ecuador), 페루(Peru) 등에서 인정받는 모자보건센터 건립사업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전염병 관리,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등 한국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3%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다.

34) 다른 공여국과 비교 가능한 단위로 만들기 위해, 여러 소 분야가 합쳐져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계산한 결과임. 예를 들어 산업 에너지는 수송(Transport)과 에너지(Energy) 등으로 분리하여 계산. 또한 이는 “여성” 분야가 중점 분야로 포함되어 계산된 것임.

35) (OECD, 2009c) [별첨 4] 분석결과

36) 세부 분야당 사업 총액으로 분석하였고, 사업건수나 사업연도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력 발전소 건립처럼 사업건수는 적으나 액수가 많이 드는 사업이 과대평가 될 수 있으며, 몇 해에 걸쳐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있는지를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7) 여기서의 논의는 분야별 및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현황(KOICA, 2009c) 및 사업부서와의 면담(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보고서 등 여러 참고 문헌을 토대로 하였다. 주로 참고한 KOICA의 평가 보고서는 참고문헌에 수록.

38) 2008년 협력단 사업의 14%

행정제도 분야³⁹⁾에서는 공공행정 세부 부문이 83.7%로 압도적으로 높게 지원되었는데, 이 중 69.44%는 사무기기 등의 물자지원이어서 한국 경험 공유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 반면 경제전략자문이나 공무원 교육 등 한국의 경험 및 비교우위와 관련 있는 사업들에 대한 비중은 6.15%로 크지 않았다. 또한 행정 분야 정책 공유는 연수생 초청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단기연수는 사업으로 평가하기 힘든 면이 있다. 알제리(Algeria)와 르완다(Rwanda) 등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지원 정책자문은 제안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원국의 역량 등에 대한 논의가 보완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상 한국의 기술적 비교우위가 부각되고 비전통적 개발 분야인 정보통신 섹터는 CRS 코드의 분류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타 공여국과의 비교가 어렵다. IT 분야에서는 통합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제공해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전자정부 지원에 높은 수요요청이 있어서 한국형 관련 사업으로 활발히 실시되어왔다. 단, 가나(Ghana), 라오스(Laos) 등 저소득국에서는 공무원 교육 등 특정 훈련 프로그램 없이는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중저소득국인 요르단(Jordan) 등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협력을 요구하였다.

지역개발 분야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다부문 종합농촌개발이 22.26%로 높게 지원되었다. 이 부분은 한국형 사업인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우리의 성공사례로 인해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른 성과가 다르며, 베트남(Vietnam) 등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와 캄보디아(Cambodia) 등 차후 보완 및 향상이 필요한 사례가 모두 발견되었다.

다른 DAC 공여국의 중점 관심 분야와 비교적 차별적인 산업 에너지 분야는 타 공여기관이 도로운송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에 비하여, 협력단은 수력 발전소가 지원비율 15.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도 기술 연구개발, 운송정책, 전력 송배전 등 여러 사업으로 지원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최신 송·배전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미얀마(Myanmar), 인도네시아(Indonesia) 등의 시범사업과 운송사업으로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립사업 등의 예가 있다.

환경 분야는 아직 협력단 내에서 지원비중이 미흡했고 한국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조림사업 등이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성과가 크게 밝혀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고, 타 공여국의 지원이 낮은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환경 분야 지출의 1.57%

39) 2008년 협력단 사업의 14%

만 차지해 낮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협력단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한 반면, 보건이나 행정,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건축물을 짓고 기 자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나,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다.⁴⁰⁾ 또한 지속 가능성이 낮은 부서별·형태별 단독사업에서 지역체제의 종합적 사업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형 사업의 적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사업에 걸쳐, 수원국의 정치·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들이 겪는 자원과 능력의 제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서 한국의 선진제도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등과 같이 섹터적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섹터와 지역적 지식을 겸비하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분석틀과 데이터베이스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타 공여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단의 기존 프로그램 중 한국형 모델의 정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선별작업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열: 분석 기준

이 분석틀의 열(Column)은 KOICA가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원조를 결정하는 **공급적 측면**의 선정기준(Criteria)으로 (1) 한국적 경험의 내용과 관련기관, 성공요소, 보완점 및 대 개도국 적용성 (2) 일반 산업적 기술 및 ODA 산업에서의 비교우위 (3) DAC 회원과 다자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인지의 여부에 따른 차별성⁴¹⁾ (4) KOICA의 사업성

40) 건축물은 높은 사업비용이 드는데 반해, 교육 및 훈련 등 역량강화는 단위 사업 수당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41) 2002-2007년도 사이에 DAC 양자 공여국과 다자 공여기관의 유·무상 ODA 의 합계 및 평균을 통해 구함. 특정 하위 섹터와 가장 잘 부합되는 CRS 코드들을 먼저 파악한 후, 이 코드들에 대한 DAC 공여국 평균 지원비중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타 원조기관의 평균 지원비중이 낮으면, 차별화 점수를 높게 받는다. DAC 공여국 평균 비중은 KOICA의 7대 섹터에 따라 분야별 비중으로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CRS 코드 43040(다부문 농촌개발)은 주로 협력단에서 농업 분야 하에서 지원되므로 농업 분야 관련 CRS 코드를 모두 파악하여 여기에 지원되는 전체 지원금을 구한 후 이중 43040에 지원되는 비중을 파

과 및 연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타 항목으로 기술은 되어있지 않으나 점수는 산정한 (5) 한국 정부의 중점 육성사업 부문⁴²⁾이 있다. 이와 함께 (1)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달성이 뒤쳐지고 있는 분야 (2) 수원국의 수요요청이 높은 분야,⁴³⁾ 그리고 (3) 우리 경험의 국가 그룹별 및 지역별 적용성⁴⁴⁾을 주요한 **수요적 측면**의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행: 섹터별 프로그램

열에는 7개 분야 44개 세부 분야 프로그램이 각 프로그램이 속하는 섹터, 하위 섹터 및 CRS 코드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제 2장에서 논의한 한국형 프로그램의 정의에 따라서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별 사업 예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분석 기준을 열(Column)로 하고, 협력단의 세부 분야를 행(Row)으로 정렬한 후 이 매트릭스를 분석틀로 하여 44개 세부 분야에 대한 각 기준별 분석이 담긴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에 따라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가 책정되어 점수표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서열 변수(Ordinal variable)⁴⁵⁾인 등 여러 이유로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V. 한국형 모델의 선정

기준을 다양화한 프로그램 선정

이렇게 산정된 점수와 분석 내용은 한국형 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 기본적 계량적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매트릭스(Matrix) 중 어떤 기준(Criteria), 즉 어떤 열(Column)을 포

악하는 것이다.

42) 녹색사업, 수자원 관련 사업

43) 수원국에 대한 2010년 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함.

44) 국가 그룹별: 발전단계, 소득수준(LDC/LIC/MIC), 취약국(Fragile State: FS) 및 고채무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HIPC) 여부, 자원 유무, 인구, 지리적 여건(내륙/해안), 정치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국가 그룹별로 한국적 경험의 적용 가능성과 원조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 CIS 등 지역별로 한국의 경험의 적용 가능성 및 원조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

45) 변수간 간격이 일정한 Interval variable과는 다름.

함시키고 각각의 가중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은 가치적 판단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의 소재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즉, (1) 수요를 포함한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과 (2) 공여자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공급적 측면만 고려한 방법 (3) 다른 공여국이 중점 지원하는 분야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차별화와 관련한 점수를 제외하는 방법 (4) 새천년개발목표(MDG) 목표, 타겟(Target), 지표(Indicator)와 많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 (5)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녹색사업이나 수자원 관련 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점수 책정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23개 프로그램을 우선 리스트로 만든 후, 그 중에서도 상위 3-4위에 속하는 세부 분야로만 10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직업훈련, 전자정부, ICT 인력양성, 경제개발 전략 수립지원, 산림보전, 상·하수 관리개선,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충, 종합수자원개발, 농촌종합개발, 모자보건⁴⁶⁾이다. 이렇게 선정된 10개의 프로그램이 실제 한국형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수행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기 위해 부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파악되어 최종 5개 한국형 모델 후보가 선정되었다. 최종 5개 후보는 교육의 직업훈련, 정보통신의 전자정부, 행정제도의 경제개발전략지원, 지역개발의 참여적 농촌종합개발, 산업 및 에너지의 안정적 전력망 구축이다.

선정된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과제

이렇게 선정된 최종 5개 프로그램은 장·단점이 있다. 먼저 직업훈련의 경우는 협력단 사업 성과와 노하우(Know-how)가 있고 수요요청도 높으나 독일 등 타 선진국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는 우리의 최신 경험 적용이 가능하며 국가 주력 사업과도 부합하나 적용이 용이한 국가가 중소득국 이상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든가 전산화된 행정 시스템을 운영할 공무원 교육 등 포괄적으로 전제해야 할 요소가 많다. 경제개발전략지원은 한국형 제도 및 경험 공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책 보고서가 실제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도전과제와 KDI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6) 모자보건 사업은 MDG 달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형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모자보건 사업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경험을 근거로 상향(Bottom-up) 방식의 가족계획요원제도를 활용하여 가족계획사업과 접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아동질병 통합관리(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 IMCI)” 프로그램에 접목한 “컴퓨터 기반 아동질병 진단 프로그램(Computer-based Learning Program for the Diagnosis of Childhood Diseases: ICATT)”에 집중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 분야를 수원국에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 효율성 향상 부문은 최신 기술과 산업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계획수립-설계-운용’ 등에 이르는 협력 사업의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공여국도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로 지원하는 분야이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도국에서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아직 협력단 내 성과가 더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여적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도국의 수요가 높고 전통 DAC 공여국의 지원이 부족한 틈새시장이며 한국의 직접 개발사례가 어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지만, 농업이 우리의 주력사업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젊은 층 종사자가 적으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노르웨이와는 달리, 명확히 한국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업을 찾는 것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경쟁력 있는 상위 1-5개의 프로그램을 한국형 모델로 ‘수행’하는 방안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한국형 모델의 수행

한국형 모델 사업화 방안: 직업훈련을 예시로

따라서 제 6장에서는 한국형 모델로 선정된 세부 분야의 사업화하는 방안을 종합점수에서 1위를 한 직업훈련을 예시로 설명하였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이 벤치마킹 가능한 한국적인 제도와 경험, 기술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의 경우 이는 정부 주도의 기술자격검정제도와 검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모델 기술훈련학교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전달과정에서 선진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은 IT라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격검정시험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나 수요가 높고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과나 전자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에 있는 한국의 전자 및 통신 관련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연계하거나 산학협력을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조사와 산업분석을 강화하여 공과목, 기술수준, 훈련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섬세한 타겟팅(Targeting)을 통해 특화가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원조 가능 지역도 미리 후보그룹 풀(Pool)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먼저 몽골(Mongol)이나 에티오피아같이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국

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등을 바탕으로 타 공여국의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한국의 비교우위를 제시한 CAS가 있다면 가장 먼저 참고를 해야 할 것이나, 아직 이러한 CAS 수립 전이라면 대안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지역·문화적 유사성이 있어 비교적 쉽게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⁴⁷⁾ 몽골, 중국에 지원이 가능하며, 혹은 우리의 개발 당시와 초기 조건이 비슷한 국가로 자원의존 여부, 소득수준, 인구, 공업화를 위한 기초적 여건 등을 충족한 국가⁴⁸⁾를 고려할 수 있다. 중점 협력 대상국 중 원조 소외국이며 우리 사업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카자흐스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 NGO나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하여 그들의 현지 지식(Local knowledge)이나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더 후보국가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후보국가 그룹별로 소득수준이나 기타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사업의 초점이 달라질 것이다.

원조규모는 DAC 연평균 직업훈련 분야 지원금인 10.77백만 달러 이상, 이 분야 주 공여국인 독일의 76.73백만 달러와 비슷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공여국 직업훈련이라는 원조목적코드(11330)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지원비율을 참고로 직업훈련 세부 분야에 전체 CRS 코드별 ODA 지원액 중 4.12% 이상을 할당하도록 제시하였다.⁴⁹⁾

원조방법은 국별 프로그램 하의 SWAp 형식으로 (1) 직업자격 직업교육관련 법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표준 분석 및 노동시장 정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문과 (2)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진로지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인프라 구축 (3) 관련 공무원 및 현지 교사 훈련을 지원하는 인적역량 지원의 세 요소에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⁵⁰⁾ 또한 프로젝트, 봉사, 연수, 민간협력팀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의 투입물(Input)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봉사단은 직업훈련원의 교사를 훈련시키는 인적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고, NGO 등 현지 밀착형 기관은 작은 농어촌 마을에서 자립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7) 베트남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치구조를 가진다는 면도 있음.

48) 1) 자원 의존형 국가 제외 2) 연간 소득수준이 250~2,000 달러의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 3) 인구 규모에서는 2004년 현재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매우 작은 나라들을 제외 4) 공업화를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중점 및 일반 협력 대상국은 세네갈, 가나, 탄자니아, 말리, 우간다 등임.(박복영, 채욱, 이제민, 2007) 참고.

49) 협력단은 현재 직업훈련 분야에 6.14%를 지원하고 있어 현재로도 높은 비중을 보임.

50) 현재 협력단 프로젝트도 이 세 요소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인프라 구축의 비중이 훨씬 큼.

이러한 한국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이들이 협의체로 운영하는 한국형 사업의 수행체계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1)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해 KOICA,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소가 **집행**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 **협력기관**으로 모델학교 및 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와 직업훈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7개의 국내 NGO, ILO/APSDEP, APEC, UNDP, UNESCO 등 관련 분야 국제기구, 그리고 현지 CSO와 컨설턴트 연구기관 등을 제시하였으며 (4) Inwent 등 국외 평가기구가 수혜자 평가 및 사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수원국과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5) 해외 공관과 KOICA 해외 사무소가 수원국 정부와 협조하여 **사업발굴**과 수요접수기능을 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예시로 기존 사업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한국형 모델의 사업화를 논한 후, 최종 선정된 다른 사업들을 한국형 모델로 발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경제개발전략지원 분야는 KDI의 KSP 프로그램과 KOICA 사업을 사업 수행방식, 공통 지원 분야 및 국가, 장·단점과 공통 이슈를 비교 분석한 후 통합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은 협력단의 한국형 사업 모델 안에서 경제개발전략 추진능력 강화사업의 운영체제를 만듦으로써 가능하다. KDI는 거시경제 정책 전문기관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요 사업집행기관의 하나로 참여하여 이 분야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기서 언급된 우선 분야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형 모델화되어 운영된다면 정부 운영위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KOICA, 수출입은행으로 구성하고 각 섹터별 전문성을 가진 정부부처와 협력기관으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순서는 먼저 본 연구 결과물을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고 한국형 사업의 필요성, 개념, 세부 분야 및 사업 수, 브랜드 명에 대한 협력단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민관 합동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세운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한국형 ODA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결론으로는 한국형 모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수출한다는 우려는 정책적으로는 CAS에 근거한 국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수원국이 우리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실행 면에서는 수원국의 재정 및 조달 시스템 활용, 현지 사무소의 기능 강화와 현지 컨설턴트의 고용, 현지 연구기관 및 CSO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참여적 접근법(Participatory approach)⁵¹⁾을 사용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및 평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참여, 평가 보고서를 영어와 현지어로 발간하여 수원국과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원국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한국 제도와 기술의 지역적 적용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우려로 내실 없이 가시성에 집착할 것이라는 비판은 성과가 있는 분야만을 모델화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원조수행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이상의 것, 즉 국제 모범 관행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는 면에서 독자노선을 간다는 비판 역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적 모델을 특정 한국 기관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시성에 초점을 맞춰 당장 국가 브랜드 향상에 ‘이용’하고자 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내실을 다져야 수원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발협력 평가의 5대 측면에서 보면 한국형 모델은, CAS에 근거하여 적절성을 높이고, 한국 특유의 속도감과 비용 절감적 집행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섹터에 집중하여, 협력기관 및 사업형태간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조 크기를 늘리고, PBA를 실시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현지사무소의 현지 직원고용과 현지 조달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대안적 원조모델과 그 효과성에 대한 화두를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DAC 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잘 다듬고 발전시킴으로써 2011년 제 4회 서울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시 논의를 이끌어 갈뿐만 아니라, 서구와 신흥 공여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1) David Korten의 과정 중심적 “Learner’s approach”나 William Easterley의 “Searcher’s approach” 그리고 Ellerman의 “Doer’s approach” 등은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충족시키며, 현지 지식과 조건을 적용시키고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참여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EXECUTIVE SUMMARY⁵²⁾

CHAPTER I: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Study

Korea, a rather small⁵³⁾ and new player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indispensably needs to pool its resources into areas where it can add the greatest value. Specifically, Korea is encouraged to identify its competencies, narrow down areas of engagement,⁵⁴⁾ and ultimately enhance division of labor with other donors. By capitalizing on its proven capacity, the country can not only focus on implementing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but also survive intense competition among donors. In addition, clarifying the focus of Korean aid bears close relation to the renewal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o bring a new donor's perspective to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a diverse approach to changing global aid architecture, the organization called for structural reform.

The need to develop strengths as a donor has recently sparked a debate over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KDCM) also known as the “Korean Aid Model” or “Korean ODA Model.” Since the inception of KOICA in early 1990s, there has been much

52) This is an executive summary for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by Woojin Jung, published by KOICA in 2010.

53) In 2008, Korea's net ODA amounted to USD 797 million, representing 0.09% of its GNI. As an emerging donor, Korea's ODA volume remains low in comparison to the DAC average ODA/GNI ratio of 0.31% with the lowest ODA/GNI ratio for a DAC member of 0.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According to the OECD DAC's statistics, Korea ranks 19th in terms of total ODA volume, and 25th in terms of the ODA/GNI ratio among the OECD members in 2008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9). However, Korea's ODA has increased since 2000 at a rapid pace. From 2000 to 2008, its aid volume has almost quadrupled from USD 212 million to USD 797 million. Meanwhile, Korea's ODA/GNI ratio has also seen an increase from 0.04% to 0.09% in the same period. Moreover, the country has pledged to raise its aid from the present 0.09% of its GDP to 0.15% of GDP by 2012 and 0.25% by 2015.

5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interest in developing a bilateral assistance model specific to Korea; however, the overall progress made in this area has been marginal.

The basic idea of the KDCM is that Korea should look for ways to share the lessons learned from its successful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 once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aid, has not only achieved impressive economic growth within a generation but also became one of the DAC members.⁵⁵⁾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experience is relevant to a wide range of developing nations⁵⁶⁾ and despite a caveat about using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as an example for others to follow,⁵⁷⁾ there are still valuable lessons the South can learn from Korea.

Nonetheless, there are challenges ahead in embodying Korean-specific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ies. The first obstacle might be difficulty in formulating overseas development programs complementing assistance from other donors. Secondly, whether Korea's unique experience is replicable is an issue. Suspensions have also been aroused as to whether the model is a blueprint approach with an intention to export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to partner countries (PC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odel focuses more on "getting Korea's name out" than on actual development outcomes. Some have also noted that what is critical for an emerging donor like Korea is to benchmark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rather than seeking its own aid model.⁵⁸⁾

55) Korea's membership in the DAC took effect on January 1, 2010.

56) Korea has overcome typical challenges faced by the South and can better understand their constraints. Similar to Korea, most of the emerging economies were newly created republics after the World War II, often conflict-affected, and have scarce natural resources. Whereas the success stories of Hong Kong or Singapore might be considered specific to city states, Korea's success is more relevant to nations with an average size economy and population. Various steps of industrialization that Korea has been going through can also offer useful take-home lessons to both low income and middle income countries. Referring to its experiences, Korea can show that poverty reduction,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can be accomplished together, and can make more practical suggestions for countries with similar pre-conditions. (Park, Bokyoung, Chai, Wook., Lee, Jamin., 2007) "Applicability of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to Developing Nations"

57) Korea revealed structural vulnerability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recent financial turmoil. Korea also experienced with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58) Kwanyool et al. (2006) "Roadmap for the Advancement of Foreign Aid" KOICA In-house Survey, Kyunghang Newspaper, January 25, 2007

Scope, Methodology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In an effort to maximize benefits and minimize risks of the KDCM, this paper studies KOICA's b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model at the sector level.⁵⁹⁾ It builds on the review of literature, interview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ors, in-house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s, and workshops which took place in and out of KOICA. The report will first define an aid model drawn upon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its comparative advantages and partner countries' needs. Then, it will review Korea/KOICA's sector focus in comparison with other donors. Based on the sector analysis and a concept of the KDCM, a framework is designed to select competitive sub-sectors among KOICA's 44 interest areas.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the paper suggests a short list of sector programs and partner countries that match with the established KDCM model best. Finally, the paper describes how KOICA can operationalize the Korean ODA model under its country programs.

Though previous discussions on the Korean ODA strategies present a general notion of the KDCM, sectors and aid modality,⁶⁰⁾ they are limited to some degree. Research in the past such as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a Korean Development Assistance Model"⁶¹⁾ and "Mid to Long-Term Bilateral Aid Policy of Korea"⁶²⁾ do not set out concrete and consistent criteria to determine competitive sub-sectors at KOICA. The report does not specify which particular development experiences in Korea would be the most useful references to the South and whether they can be replicated elsewhere. In addition, past debates seem to miss the multi-dimensionality of comparative advantage but only stress sectoral competencies. Application of previous studies is also restricted in that they do not assess KOICA's organizational capacity to deliver aid. Weaknesses entail the lack of

59) The paper mainly analyzes projects across seven priority sectors of Korea.

60) Chun et al. (2007) suggested three types of Korean Development Assistance Models: the human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the policy and strategy consultation program, and the system and institution building program across eight sectors, education, health, governance, rural development, ICT, industry/energy, environment, disaster relief and reconstruction.

61) (Chun, Seung-hun., Lee, Kyung-gu. and Sohn, Seong-ae., 2007) Published by KDS and KOICA

62) (Chun, Seung-hun. et al. 2006) Published by KDS and KOICA

comparative analysis on priority sectors among DAC members⁶³⁾ and between the DAC and Korea/KOICA. Needs in partner countries and gaps i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hould have been addressed more than on a superficial level. By complementing previous work, the report tries to take a step further in conceptualizing the Korean ODA model.

Discussions in this report are centered around project types of assistance across seven core sectors at KOICA⁶⁴⁾ managed within a regular aid disbursement cycle.⁶⁵⁾ This paper assumes that key development experience of Korea has already been incorporated into KOICA's main projects across sectors. Consequently, it does not review Korean development models on the ground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instead, it tries to elaborate how Korea's experience can be programmed into ODA programs. The paper provides only policy guidelines but not ready-made programs that program divisions can implement immediately. Therefore, in-depth research on selected sub-sectors in primary cooperation countries is further needed to localize the Korean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each PC. It should be also mentioned that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competitive sectors mainly based on Korea and KOICA's capacity concerns but not from a purely "aid effective" perspective.

63) DAC members before 2010: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EC,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UK, US

64) But without excluding other schemes such as training programs, volunteer services, expert dispatch and support for NGOs

65) Discussions in this paper do not include aid with unpredictable nature, such as humanitarian assistance, special funds such as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and allocation for cross-cutting issues.

CHAPTER II: DEFINITION OF THE KOREAN ODA MODEL

Case Studies: Specialized Aid Programs of DAC Members

To formulate the Korean ODA model, it would be useful to examine how other donors incorporate their competences in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briefly looks at the principles of “division of labo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t then turns to specialized aid practices in selected DAC members.

Norwegian programs are good case studies for programs aimed at sharing knowledge with PCs. The Norwegian Oil for Development (OfD) initiative launched in 2005 is geared towards “helping oil and gas producing countries manage their petroleum resource in a way that generates economic growth, promotes the well-being of citizens and at the same time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⁶⁶⁾ The success factors of the OfD probably account for seven pillars as presented in [Figure 1]. They include growing requests from partner countries;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 led by the government; interministerial partnership; techniques and competence across the full cycle of petroleum sector management; collaboration with various playe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crease in aid volume; and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s carried out by a foreign organization, the Danish Energy Agency.

66)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2008)

[FIGURE 1] NORWAY'S OIL FOR DEVELOPMENT PROGRAM



Japan also provides a good case study where it has applied Japan's development experience in its ODA practice by supporting the P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rough ODA loans and the promo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⁶⁷⁾ Korea's development philosophy, strategies and architecture are close to those of Japan. Hence, how Japan handles criticism over its ODA practices while trying to link growth with a poverty reduction agenda has a great deal of implications to Korea. Austria, a small actor like Korea, overcame the dilemma as a modest donor by finding a niche market for its ODA activities in a sector and country crowded by much larger donors. The country has innovative cooperation programs on organic agriculture in Ethiopia and became a niche donor at the local level.⁶⁸⁾ On the other hand, Spanish cooperation has developed a special cross-cutting sector called "culture and development" to support cultural policies

67) (OECD, 2004)

68) (OECD, 2009)

for indigenous people.⁶⁹⁾ The case of Luxembourg reveals a linkage between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nation's major industry. Luxembourg hosts half of the world's top microfinance investment vehicles and thus enjoys its advantage in financial sectors, particularly in microfinance.⁷⁰⁾

Comparative advantage should not be perceived just in terms of sectors but also in terms of regions where donors have linguistic, historic and cultural ties with PCs. For example, Portugal's institutional similarities with its former colonies continue to be the foundation in undertaking specific interventions in those countries.⁷¹⁾ Aid modality is another dimension of comparative advantage.⁷²⁾ The European Union (EU)'s relative strengths lie in the employment of budget support and policy dialogue due to its aid volume, trans-border nature, and potential weight in negotiations with partner governments.⁷³⁾ On the same note, the United Kingdom (UK) can take advantage of its strong policy advisory capacity and leadership to promote multilateral partnership.⁷⁴⁾

Components of Comparative Advantages

A synthesis from all case studies boils down to the three element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 supply side, the process side, and the demand side [Figure 2]. When it comes to the **supply side**, donors should distill findings from their government policies that have produced outstanding development outcomes. Donors should have technical competencies in the sectors of their assistance and track record of accomplishment in aid interventions. Opting for an innovative sector is strongly encouraged, and ideally, a priority sector of a donor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priority sectors of the donor.⁷⁵⁾ In terms of **process**, aid volume, modality and partnership with implementing

69) (OECD, 2007c)

70) (OECD, 2008)

71) (Bucar, Maja. et al., 2007)

72) (OECD, 200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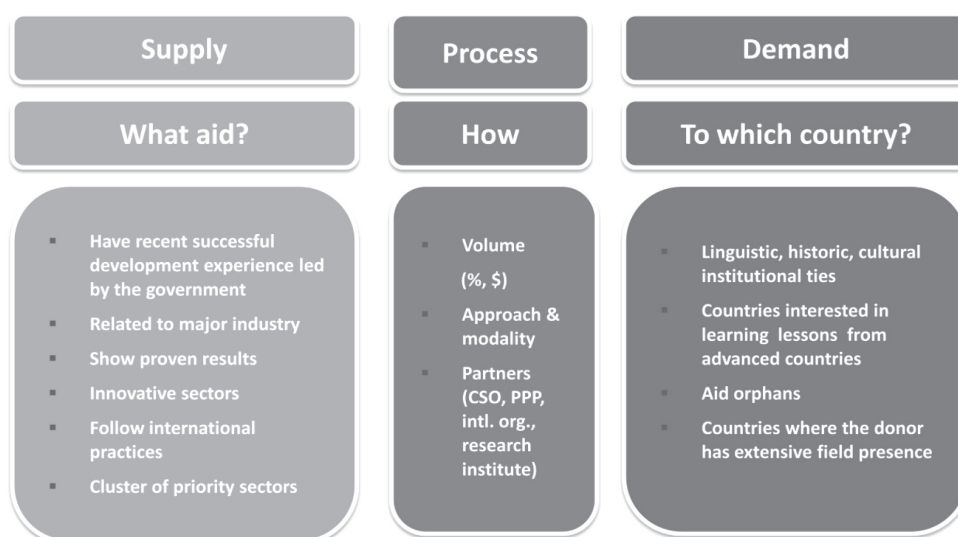
73) (OECD, 2007a)

74) (OECD, 2006b)

75) For example, organic agriculture is connected to Austria's priority of rural development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organiz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 component of comparative advantage. It should be also highlighted that aid practices shall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Pertaining to the **demand side**, support can be given to countries with similar socioeconomic conditions, culture and language that facilitate lessons sharing and good practice. A donor should also balance its comparative advantage with an assessment of partner's needs. Recipients' interests and needs for learning from a particular donor country are vital and they have the final say on the type and level of assistance. In consideration of cross-country division of labor, a donor can support countries that may be neglected by current ODA channels. Further considerations should be also given to countries where the donor has substantive field presence.

[FIGURE 2] COMPONENTS OF COMPARATIVE ADVANTAGE



Defini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KDCM)

Analyzing donors' specialization potential helps define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KDCM) or Korean ODA Model in four aspects: sector, partner country, aid volume, and approach/modality. The KDCM is *KOICA's b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y under which Korea contributes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in need by sharing key policies,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s that have led to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nd tailoring them to partner countries' conditions.

The Korean ODA model covers **sectors** where Korea has technical expertise and can complement the efforts of other donors. Toward managing for results, sector selection should be based on KOICA's aid performance. The KDCM is aimed at achieving globally agreed development objectives by means of adher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on aid.

KDCM assistance should only be directed to developing nations that show interest in benchmarking Korean policies and techniques. Key cooperation partners can have cultural, regional ties or similar development conditions with Korea under the assumption that commonality of development circumstances across two countries will facilitate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skills. In addi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Cs underfunded by other donors. Other considerations include whether the country hosts an extensive number of Korean NGOs and businesses whose local knowledge would be of use for Korea's ODA practice.

The level of aid within the KDCM model should be scaled up at least to the DAC average and possibly to the aid volume of major donors in the respective CRS codes. The share of the assistance in the respective sector should be comparable to a donor whose proportion of aid to that sector is the greatest.

Keeping the primacy of country leadership and donor harmonization in sight, the KDCM should take a multi-year sector-wide approach (SWAp) under the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in order to support programs in the long run. The CAS mechanism will enable PCs to decide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The paper also suggests an integrated aid package, which combines policy advice with infrastructure build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igure 3] exhibits Korea's strategic positioning, which can balance practices of traditional donors with those of emerging ones. Korea should reinforce its policy advisory capacity like DAC sovereigns, while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invest in key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economies equally with other Southern

donors. Korea can also play a great role in increasing stocks of human intellectual capital that is largely underfunded b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Compared to the DAC, Korea can offer assistance at lower cost and with less time; that is, as opposed to non-DAC countries, Korea can provide high quality technologies. Finally, since the KDCM requires diverse skills and experiences at many different levels, development agencies from Korea, PC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should form a partnership in implementing the model. Application of the KDCM should be in a participatory manner, engaging stakeholders at the grassroots level in the whole process of the program.

[FIGURE 3] KOREA'S STRATEGIC POSITIONING BETWEEN EMERGING AND TRADITIONAL DONORS

	EMERGING DONORS	KOREA'S STRATEGIC POSITIONING	TRADITIONAL DONORS
STRENGTHS	• Focus on infrastructure building & production sectors • More egalitarian and innovative aid modalities such as South-South Cooperation • Emphasis on the transfer of alternative technology • People-to-people cooperation • Fast and responsive • Mutual benefit & non-interference principles • De facto adherence to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 Engagement as an opportunity for the future • Non-conditional and free from patronage • Fresh hands-on experience	• Focus on economic sectors • Integrated aid package, which combines policy advice with infrastructure build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Need to promotes synergies among different types of aid • SWApS under the CAS • Make endeavors to meet DAC standards and guidelines • Being responsive and participatory • Offer relatively high-quality technology with cost and time efficiency • Can build a bridge between DAC members and non-DAC countries • First-hand experience	• Focus on social sectors, particularly governance • Characterized by larger size of aid and the use of various aid approach & instruments, such as PBA and budget support • High-quality technologies • Set aid effectiveness agenda such as PD & AAA in international fora • Provide an estimated 90% of global ODA
WEAKNESSES	• Administrative structures for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tend to be relatively diffuse and uncoordinated. • Typically tied • Issues with the sustainability of capacity development • Some cooperation agreements are conducted at the highest political level and outside the existing aid management system. • Not given appropriate voice in the established international fora		• Underfunded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sector • Being risk-averse • Higher cost and a long process • "Fix the problem" approach • Lack of first-hand experience as a partner developing country

<Source: (OECD, 2009c), (OECD, 2009a), (Workshop Steering Committee of the 2nd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09), (Jerve, Alf. & Selbervik, Hilde., 2009)>

CHAPTER III: SECTOR ANALYSIS

Sectoral focus of Korea in Comparison to 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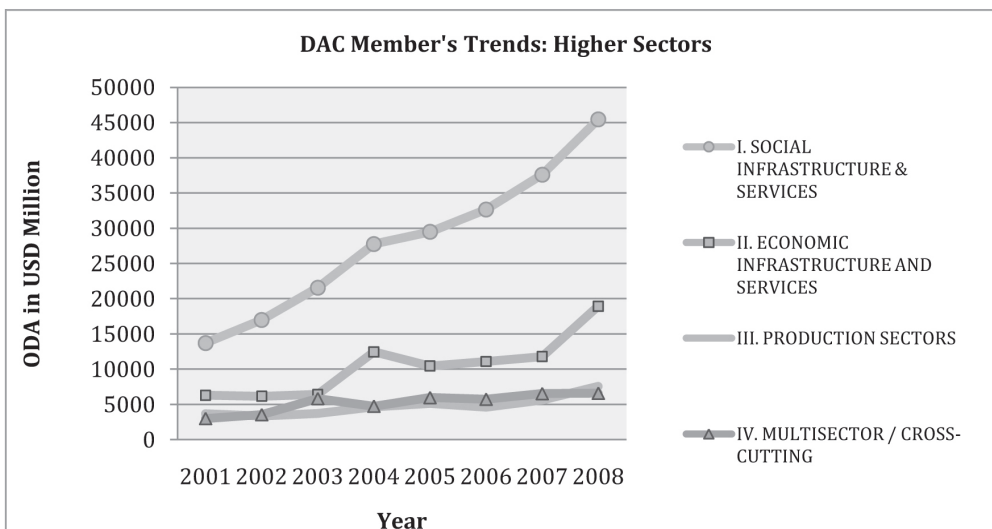
To further assess the competitiveness of KOICA, the paper compares sector focuses of Korea/KOICA with that of DAC members by measuring trends in and the proportion of total sector-allocable ODA.⁷⁶⁾ Korea, where total ODA has grown both in real terms and in terms of percentage of GNI, has put greater emphasis on economic infrastructure and the production sector over time, and particularly since 2006 [Figure 4]. On the contrary, DAC members' aid flows to social infrastructure have seen sharp increases whereas commitment for economic and production sectors as a share of total sector-allocable aid has been going downward as shown in [Figure 5]. Concerning DAC donor's trend, the largest increase has taken place i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ector,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security and peace building" and "gen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⁷⁷⁾ In contrast, the proportion of aid going through agriculture in total bilateral ODA has declined from a 17% share in the early 1980s to 8% at the end of the 1990s.⁷⁸⁾

76) Sector-allocable ODA concerns all ODA flows aimed at fostering a peculiar sector in the recipient country (examples of sectors are: agriculture, education, health, water supply and sanitatio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ransport and storage, etc.) and thus excludes all the contributions that are not susceptible to allocation by sector (e.g., balance-of-payments support, actions relating to debt, emergency assistance, and internal transactions in the donor country). Sector-allocable aid has four main categories, social, economic, production and multisector; and many sub-categories.

77) (OECD,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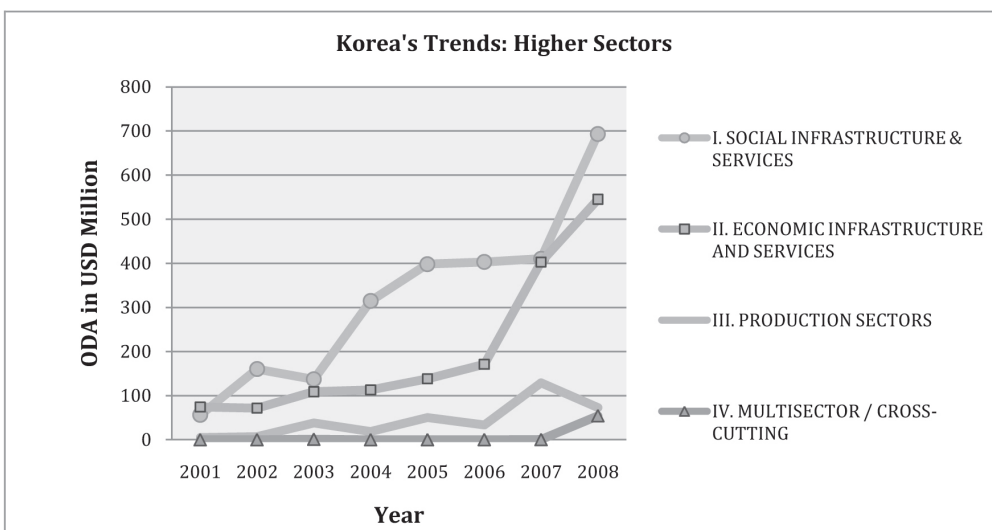
78) (OECD, 2006)

[FIGURE 4] DAC MEMBER'S SECTOR ASSISTANCE TRENDS IN HIGHER SECTORS,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FIGURE 5] KOREA'S SECTOR ASSISTANCE TREND IN HIGHER SECTOR,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Taking a close look at allocation by sector, it is noteworthy that Korea has heavily invested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vocational training.” The amount of disbursement to ICT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average DAC

members in the 2000s; its proportion in the total bilateral aid is almost 12 times higher than that of other donors. Similarly, a proportion of aid devoted to secondary education in 2007 was about five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share of vocational training in the total ODA among DAC members⁷⁹⁾. However, spending on “basic education” and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ve health” was low, accounting for only 6% and 1% of the DAC average, respectively.

Sectoral Focus of KOICA in Comparison to DAC

The portfolio of aid activities in KOICA shows that “vocational training (7.62%)” and “ICT (6.14%)” is the organization’s top sectoral priorities whereas “higher education (4.20%)” and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3.20%)” are the most funded sectors among DAC members. Interestingly, Korea treats ICT as a specific sector rather than a cross-cutting issue [Table 1]. Both parties made a considerably high investment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Table 1 and Table 2]. However, KOICA’s commitment in the sector is concentrated on the advanc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rade promotion 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which is clearly different from typical sub-fields in the government sector, such as the rule of law, decentralization, or corruption. Among KOICA’s main sectors, ICT, transport and energy stands out as areas in which fewer donors are involved. However, activities across KOICA’s main sectors do not seem to be very distinctive from other larger donors. When comparing KOICA’s mid-term goals and targets with those of JICA and USAID, it is found that these two organizations are engaged in all of KOICA’s sub-sectors except for “ICT human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e-government”⁸⁰⁾ [Annex 5, 6]. In regards to the number of sectors, DAC members cover eight sectors on average. Despite much limited resources, KOICA engages in 11 sectors which amount to 44 sub-sectors when disaggregated [Annex 4]. Officially, KOICA has seven loosely defined sectors including education, health, government, ICT, rural development, industry & energy, and environment that permit the organization to engage in a wide spectrum of activities.⁸¹⁾

79) The amount of aid committed to vocational training at KOICA is close to the DAC average.

80) (USAID, 2006), (JICA, 2008)

8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TABLE 1] KOICA'S BILATERAL ODA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	Rank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 General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209,261	18.20%	1
IX.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91010	ADMINISTRATIVE COSTS	97,772	8.50%	2
II.2. Communications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87,625	7.62%	3
I.1.c. Secondary Education	11330	VOCATIONAL TRAINING	70,567	6.14%	4
VIII.2. Reconstruction Relief & Rehabilitation	73010	RECONSTRUCTION RELIEF	52,880	4.60%	5
I.2.a. Health, General	12191	MEDICAL SERVICES	47,567	4.14%	6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43,661	3.80%	7
VIII.1. Emergency Response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39,260	3.42%	8
I.2.b. Basic Health	12230	HEALTH INFRASTRUCTURE	34,232	2.98%	9
I.2.b. Basic Health	12220	BASIC HEALTH CARE	29,673	2.58%	10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29,634	2.58%	11
I.2.a. Health, General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27,510	2.39%	12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21,034	1.83%	13
X. SUPPORT TO NGO'S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17,836	1.55%	14
I.1.d. Post-Secondary Education	11420	HIGHER EDUCATION	16,622	1.45%	15
XII. UNALLOCATED/ UNSPECIFIED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14,238	1.24%	16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 General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PLANNING	13,966	1.21%	17
IV.2. Other Multisector	43040	RURAL DEVELOPMENT	13,442	1.17%	18
II.3. Energy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12,754	1.11%	19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11,080	0.96%	20

[TABLE 2] DAC MEMBERS' BILATERAL ODA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	Rank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20	DEBT FORGIVENESS	72,942.55	20.05%	1
VIII.1. Emergency Response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21,041.00	5.78%	2
I.1.d. Post-Secondary Education	11420	HIGHER EDUCATION	15,293.48	4.20%	3
IX.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91010	ADMINISTRATIVE COSTS	14,345.12	3.94%	4
I.3. Population Pol./ 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 AIDS	11,648.53	3.20%	5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 General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10,937.78	3.01%	6
VI.1. General Budget Support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10,773.82	2.96%	7
IV.2. Other Multisector	43010	MULTISECTOR AID	10,246.60	2.82%	8
XII. UNALLOCATED/ UNSPECIFIED	99810	SECTORS NOT SPECIFIED	9,969.50	2.74%	9
VIII.1. Emergency Response	72040	EMERGENCY FOOD AID	9,813.47	2.70%	10
XI. REFUGEES IN DONOR COUNTRIES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8,599.68	2.36%	11
I.1.b. Basic Education	11220	PRIMARY EDUCATION	7,548.15	2.08%	12
VI.2. Dev. Food Aid/Food Security Ass.	52010	FOOD SECURITY PROGRAMS/ FOOD AID	6,280.56	1.73%	13
X. SUPPORT TO NGO'S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6,112.37	1.68%	14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 General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5,756.69	1.58%	15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3	NARCOTICS CONTROL	5,639.60	1.55%	16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 General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PLANNING	5,480.67	1.51%	17
I.2.b. Basic Health	12220	BASIC HEALTH CARE	4,452.63	1.22%	18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4,451.14	1.22%	19
I.2.a. Health, General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4,045.63	1.11%	20

Analysis on the Seven Priority Sectors at KO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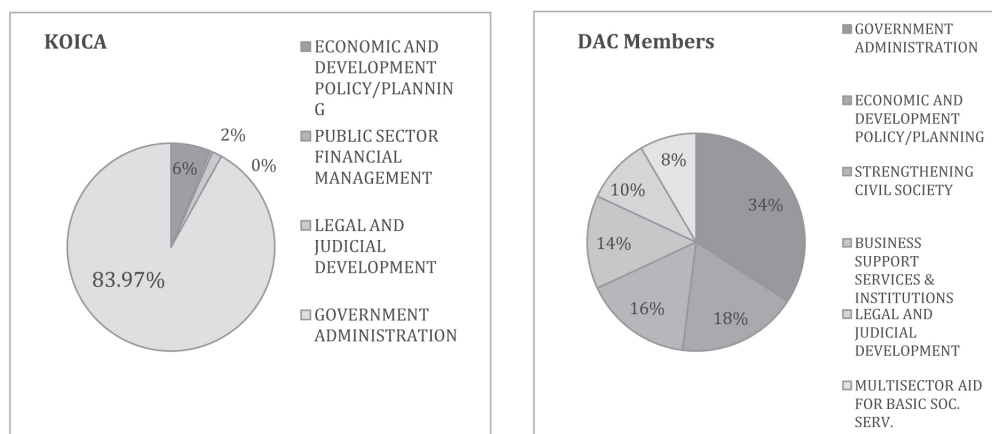
Followed by the overview of sectoral disbursements, the paper reviews KOICA's seven priority from the angle of the sub-sectoral breakdown, findings from evaluation reports, and technical competencies underpinned by Korea's main industry. Results of evaluations suggest that aid focusing on the transfer of Korean experience works well in some fields and countries. For instance, the New Village Movement in Vietnam has spread to other villages with strong political will and interest of Vietnamese government in promo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example is the ICT legislation in Vietnam that was drafted based on Korea's legislation. Smart grid technology⁸²⁾ developed by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s also contributed to resolve power shortages in Myanmar. In Ethiopia, KOICA has also been engaged in a community-based family planning project in reference to Korea's achievement in reproductive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addition, there are a number of outstand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Egypt and community health care centers in Ecuador initiated by KOICA.⁸³⁾

Nonetheless, there still are some challenges in applying Korea's experience. In the government and health sector, less than optimal resources were being used in the fields where Korea can draw upon its development experience. Allocation in the government sector illustrates this issue. Certain sub-sectors like "economic and development planning" are strategic fields in which to implement the Korean aid model. Yet,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 sub-sectors only represent 5.6% of KOICA's aid to the government sector between 2001 and 2007 [Figure 6]. This is different from what is observed in the education and agriculture sectors. Vocational training, a strategic area in which KOICA can apply the country development experience in its ODA practice, comprises 40% of assistance in the education sector. The same applies to the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sub-sector which accounts for 22.26% of the share in the community development sector.

82) Automated Meter Reading System and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83) Shoubra Vocational Training Center Establishment Project (1993-1995, USD 600,000), Shoubra Automobile Maintenance Center Establishment Project (1996-1998, USD 1,500,000), Alexandria Automobile 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Assistance Project (2004-2006, USD 1,800,000)

[FIGURE 6] GOVERNMENT SECTOR BREAKDOWN



<Data Source: KOICA ODA Statistics>

Aid instruments are another issue. Although attempts are already underway to strengthen software assistance, such as policy consulting, a larger part of KOICA's work is on hardware assistance, such as building hospitals and schools. It is also taxing to get key partne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for example, should have been an active partner for programs aiming towar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addition, not many development professionals are available nationwide, partly because only recently has international development been recognized as a field of study and type of profession. Finally, yet importantly, it has been found that the uniqueness of each PC's specific socioeconomic system is often overlooked. Consulting reports to assist Algeria's Industrial Development Plan, for example, were dominated by descriptions on industry policies that worked for Korea but lacked analysis of Algeria's capacities in implementing such policies.⁸⁴⁾ In Laos, projects intended to introduce superior short-maturing Korean rice seed and increase productivity failed partly because there was no assessment on whether or not the taste of a new type of rice would be acceptable to people in Laos and whether or not the seed

84) Based on project completion report on "The Program for Policy Consulting on the Blueprint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Algeria" (2008)

would be marketable.⁸⁵⁾

CHAPTER IV: ANALYTICAL FRAMEWORK AND DATABASE

Analytical Framework and Criteria

A review undertaken for KOICA's aid portfolio highlights the need for the extensive revision of a generalist approach. That is to say, KOICA should reduce sectoral spread and streamline its aid strategies to make a better use of Korea's development model. To this end, an analytical framework is established as exhibited in [Figure 7], which is a matrix of criteria in the columns and the programs in the rows.

[FIGURE 7] AN ANALYTICAL FRAMEWORK

Rows: Programs					Columns: Criteria							
					Supply Side				Demand Side			
Sector	Sub-sector	Examples of Programs	CRS Code		Korea's Experience	Technical competency	Complementarity	Evaluation	MDG/Global Public good	Needs of Partners	Replicability	
				Policy Formulation								
				Infrastructure Building								
				Human Capital Development								
				Score	5 point scale	5 point scale	5 point scale	5 point scale	5 or 1 point scale	5 or 1 point scale	±1 point scale	

The matrix above establishes criteria for identifying and validating potential areas of specialization based on the KDCM. The column of the matrix includes both providers'

85) The Rice Seed Production Project in Lao PDR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system to manage rice seeds, transfer farming technology to provide quality rice seeds and improve the income of farmers. Even in the World Bank, many rice seed projection projects have failed and it was too naïve to believe that Korean superior short-maturing Korean rice seeds could be easily introduced to Laos because rural villages in two countries have many things in common. The seeds were not marketable.

and customer's perspectives. The supply-side criteria are (1)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2) industrial comparative advantage (3) complementarity with other DAC members, and (4) KOICA's performance in the respective sub-sector. Even if not included in the framework, the degree of relevance to Korea's industry outlook⁸⁶⁾ is measured. The demand-side criteria are (1) areas far offtrack in achieving the 2015 MDGs or with inadequat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2) highly requested sectors by PCs and (3) the applicability of Korea's experience to a group of countries categorized by income, reg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The programs in rows are represented by sector, sub-sector, CRS code, and examples of three program components including policy consultation, infrastructure and capacity building. The report offers a KDCM database with a detailed analysis on each program according to the matrix in [Figure 7]. [Table 3] shows scores for each program by each element being measur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uch a quantitative judgment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TABLE 3] SCORES FOR 44 SUB-SECTOR PROGRAMS AT KOICA

Sector	Sub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Technical Competencies	Complementarity with Other Donors	KOICA's Performance	MDG 5-point Scale	MDG 1-point Scale	Number of Requests	Request Score (5-point Scale)	Request Score (1-point Scale)	Applicability	Relevance to Korea's Industrial Priorities in the Future
Education	Basic Education	5	3	3	3	3	1	10	5	1		
Education	Higher Education	3	4	2	4	1	1	6	4	1		
Education	Vocational & Technical Training	5	4	3	5	1	1	18	5	1	1	
Environment	Air Pollution Control	2	3	4	2			2	2	1		5
Environment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Preservation	4	4	4	3	3	1	16	5	1		5
Environment	Capacity Building for Ocean Protection	3	3	4	1	3	1	1	2			

86)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currently fostering industries related to water resources and green growth.

Environment	Eco-friendly Energy Development	3	3	5	2			8	4	1		5
Environment	Improvement of Water Supply & Sewage Systems	4	4	5	3			3	3	1		5
Environment	Waste Treatment	4	4	4	3			4	3	1		5
Environment	Women's Empowerment	4	2	4	2			0	1			
Governance	Development of Transparent and Efficient Government	5	4	1	4			6	4	1		
Governanc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5	3	5	3			9	4	1		
Governance	Encouragement of Market Economy and Financial Sector Reform	3	2	4	4			2	2			
Governance	Legal System and Social Stability	3	4	2	3			5	4	1		
Governance	Promotion of Export Policy and Small- Medium Enterprises	4	4	4	3			1	2			
Governance	Setting up International Trade-Related Infrastructure	3	4	5	2			0	1			
Health	Family Planning	5	4	4	3	4	1	0	1			
Health	Infectious Disease Control	3	3	2	4	5	1	6	4	1		
Health	Local Medical Service	3	3	4	4	1	1	20	5	1		
Health	Maternal/ Child Health Reproductive Health	4	3	4	4	5	1	3	3	1		
Health	Pest Control	5	3	2	5			0	1		1	
Health	Safe Drinking Water	4	3	2	5	2	1	5	4	1		3
Health	Support for Traditional Medicine	3	4	5	3			1	2			
ICT	e-Government	5	5	4	4			16	5	1	-1	

IC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ICT Field	4	4	4	5			4	3	1		
ICT	ICT Usage	4	4	2	2	3	1	1	2			
ICT	Sector-Informatization	4	4	3	4			16	5	1		
Industry & Energy	Airport Infrastructure	4	3	3	3			3	3	1		
Industry & Energy	Electricity Supply Through Power Plant	4	4	4	4			2	2			
Industry & Energy	Harbor Infrastructure	4	4	4	3			2	2			
Industry & Energy	National Land Development	3	3	5	3			5	4	1		
Industry & Energy	Railroad Infrastructure	4	3	2	3			1	2			
Industry & Energy	Road Infrastructure	4	3	1	4			3	3	1		
Industry & Energy	Stable Supply of Electric Power Energy	5	5	1	4			4	3	1		
Industry & Energy	Technical Support for Resource and Energy	3	4	4	3			5	4	1		
Industry & Energy	Urban Planning	4	3	4	5			1	2			
Industry & Energy	Water Resource Development	4	3	4	3	1	1	5	4	1		5
Rural Developmen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5	4	3	4			11	5	1	-1	
Rural Development	Policy for Improving Agricultural Income	4	3	1	3	2	1	2	2			
Rural Development	Storag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of Agricultural products	4	3	4	3			4	3	1		
Rural Development	Support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4	4	5	2			1	2			

Rural Development	Support for Agricultural Research Development of New Agricultural Varieties	4	3	2	4			2	2		-1	
Rural Development	Support for Increasing Rice Yield	4	4	4	2	2	1	4	3	1	-1	
Rural Development	Water Supply for Farming	4	4	3	4			9	4	1		5

CHAPTER V: SECTION OF SUB-SECTORS FOR THE KDCM MODEL

Various Rating Methods

Considering the possible controversy over the normative values of each criterion, this paper computes the sum total of criteria in five ways by including different variables and changing their weights. Scoring methodologies are: giving more weights on demand-side factors; incorporating exclusively supply-side factors, eliminating the niche market column, or stressing industries fostered by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The top 23 sub-sector programs were first chosen, among which three or four programs placed in the top 10 most competitive programs. They are “Vocational & Technical Training,” “e-Govern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ICT Fiel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Preservation,” “Improvement of Water Supply & Sewage Systems,”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table Supply of Electric Power Energy.” Making use of focus groups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a wide range of KOICA staff at both senior and junior levels across planning, policy and program divisions, 10 programs had been reviewed in light of an implementation perspective. Through an organization-wide consultation, five programs were placed on the final list.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Five Selected Programs

[Table 4] presen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st highly scored five programs.

[TABLE 4]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IVE SELECTED PROGRAMS

Sector	Sub-sector	Major strengths	Weaknesses and Issues
Education	Strengthen vocational training	·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can be benchmarked in developing countries in need · KOICA's strong aid performance in this sector · Highly demanded project	· How to differentiate KOICA's programs from those of traditional donors with more experience and resources such as Germany
ICT	Establish e-Government	· New technologies · Korea's major industry · Fits Korea's innovative image · Highly demanded	· May not be major development priorities in PCs · Would be preferred by higher income PCs
Governance	Buil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 Effective in sharing Korea's development policies and model	· Coincides with KSP programs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Difficulties in customizing Korean development policies for emerging economies today
Rural Development	Promote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 Greater demand and lower supply	· Not Korea's major industry, may be faced with technological constraints · Hard to find experts from younger generation's human resource pool
Industry & Energy	Assist stable provision of electricity	· State-of-the-art technology	· Should be combined with IT technologies · May not be a priority in many partner countries. · Other donors also have made considerable investments in this area

CHAPTER VI: PROGRAMMING OF THE KDCM MODEL

Korean Experience

As a next step, the programming of KDCM assistance is presented with the case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scored highest when full variables were factored in. During the initial stag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which particular Korean policies, experiences or skills the partner countries might be interested in adapting. A good example at the institutional level would b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 (NTQT) run by the government. Unlike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where private sectors manage job qualification standards, the Ministry of Labor in collaboration of line ministries oversees the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When PCs a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implementing agencies for the NTQT,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s of Korea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⁸⁷⁾ can be good points of reference.

While sharing Korean experience that can be adapted to local systems, Korea should also come up with activities that would set itself from the rest of the donors. For instance, Korea can help PCs set up a database with questionnaires for the qualification test making full use of its expertise in IT. KOICA could tap into resources and network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h as Samsung, Hyundai and LG, by linking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with Korea's interventions.⁸⁸⁾ Tactful

87)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s of Korea is in charge of 582 technology-oriented trades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s responsible for 21 administrative-capacity-related trades.

88) The long-term goal and mission of **Samsung** Real Dreams is to foster a culture of youth entrepreneurship in Egypt, to improve prospects for employment and income generation for the thousands of young Egyptians expected to enter the job market over the coming years. This program will target over 2,500 students and out-of-school youth and will aim to create 370 internships, jobs and entrepreneurial businesses. (<http://www.ameinfo.com/187484.html>) **SK Telecom** has established IT education centers in Vietnam.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ebsite <http://www.sktelecom.com/>) **LGEIL** is generating self-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in the form of tailoring, knitting, etc. with the help of an NGO named Jan Shikshan Sansthan. LG is also offering refrigeration and CTV repair training programs for the youth. <http://www.in.lge.com/experience%20LG/exp-responsibleCitizen.aspx>. "Moving the World Together" 2008 **Hyundai Motor Company** The 2008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hite Paper stated that Hyundai has provided cars and engines for automobile maintenance centers in Beijing.

targeting for a specific segment of populations, regions, curricula, levels of courses will be essential in order to design the specialized programs. One way to make it possible is to reinforce base-line surveys for the labor market and qualification demand analyses in a targeted region. Along with the efforts for specialization, KOICA can also step up its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programs by drawing general lessons from evaluation reports, and actively feed them back to its project design and implementation.⁸⁹⁾

Partner Countries

KDCM funds in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spent on countries whose top sector development priorities entail vocational training as stated in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National Development Plan, Joint Staff Assessments or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As the CAS lays down selective sectors linked to the country's development strategy as well as KOICA's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context of other donor activities, it would be the first document to review.

Korea's major development actor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KOIC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and Korea Eximbank ar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CASs for Ethiopia and Mongolia. However, CASs for many PC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ese cases, alternative steps can be taken to name potential beneficiaries. To start with, Cambodia, Mongolia or Vietnam can be considered based on their cultural and geographical closeness to Korea. Countries with similar socioeconomic conditions to those of Korea in the 1960s and 70s would be potential candidates. To be specific, if a country's annual income is between USD 250-2,000, their population is no less than 100 million and it has basic conditions for industrialization while its economy is not driven by the export of natural resources, it can be considered to be in comparable conditions to Korea in the past.⁹⁰⁾ Among primary partner states

89) For example, Evaluation on the Education Sector (KOICA, 2008) suggested (1) balance between general skills and technical skills in the curriculum (2) special consideration for women and the socially marginalized (3) incorporation of a polytechnic model and (4) use of project design and management tools.

90) (Park, Bokyoung., Chai, Wook. and Lee, Jamin., 2007) "Applicability of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to Developing Nations"

in Africa, they would be Senegal, Ghana, Tanzania, Mali, and Uganda of which Tanzania and Ghana have submitted TVET project proposals to KOICA. It is also possible to add Uzbekistan and Kazakhstan as relative aid orphans among KOICA's primary cooperation countries. All of these countries also have demonstrated their interest in working with KOICA as reflected in their requests for vocational training projects in 2010, as well since previous years. Among a pool of candidates, priorities can be given for the regions where Korean NGOs or businesses are active, and thereby KOICA can tap into their local knowledge and network.

Volume of Aid

An economy of scale would occur when KOICA scales up its aid to the DAC average. Ideally, the size of aid can be raised up to the level of the most generous donor in the vocational training sector, which is Germany. Whereas the mean size of annual ODA to this sector among DAC members between 2002 and 2007 was USD 10.77 million, Germany, on average, spent USD 76.33 million per year for the same period. It is calculated from each donor's spending on CRS purpose code 11330, which indicates the "vocational training" sub-sector. The KDCM database offers combinations of major CRS codes for each of 44 programs coupled with disbursement of average DAC members and of major donors.⁹¹⁾

Aid Modality and Approach

Institution building,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human capacity development are building blocks of package assistance. Consulting for the management of a training center should be combined with a pilot project, for example, to construct an actual center equipped with educational supplies. At the same time, capacity building for technical and management staff of the center or for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country's TVET constitut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gram. Aid should be undertaken

91) Major donors in a certain sector are defined in two ways: absolute major donors and relative major donors. An absolute major donor in a sector makes the highest investment in terms of absolute dollar amount. On the other hand, a relative major donor in a sector allocates the largest share of their sector-allocable aid to the sub-sector among all donors.

under KOICA's country program and SWAp so that the Southern governments can take the lead throughout the whole program cycle. Different aid schemes such as projects, trainings, expatriate consultants, volunteers and support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should be integrated to a single country program towards common goals and outcomes based on advantages of each input. For example, volunteers can teach technical skills at training centers while NGOs implement skill development initiatives in the informal sector in remote rural areas.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assistance should also be committed for the long-term until intended programs become self-sustain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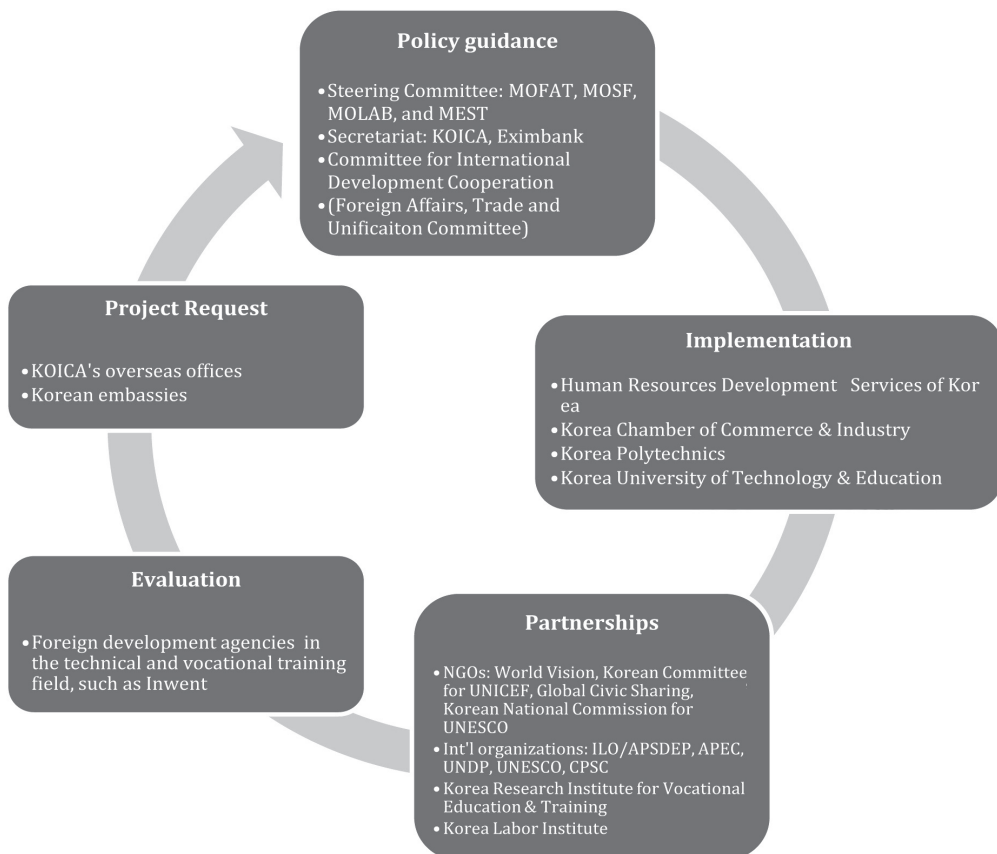
Partner Organizations

Undertaking the KDCM for TVET requires a close collaboration of a range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representing diverse skills and competencies. (Figure 6) shows a potential interagency operating system for the KDCM. An inter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 needs to be formed for the KDCM with representatives from five government bod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the Ministry of Labor (MOLAB),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nd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⁹²⁾ Optionally,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cluded. KOICA, in partnership with Korea Eximbank, can serve as the secretariat. The steering committee guides policies, strategies, and priorities for the KDCM.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programs could be head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s of Korea,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orea Polytechnics, th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nd local participants including PC governments, consultants, research institutions and CSOs. Besides main executing agencies, partnerships should be forged with Korean NGOs that are active in TVE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Asian and Pacific Skill Development Programme

92) As Korean aid is fragmented with four main and 30 other actors with separate aid portfolios, the Prime Minister-led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vides a mechanism for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ILO/APSDEP),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External evaluations should be conducted by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TVET such as Inwent. Working with a foreign organization, conducting evaluations for program participation and making evaluation results accessible to the PC are recommended in order to hold KOICA accountable not only to Korean citizens but also to a wide array of stakeholders across the border. Korean embassies and KOICA's overseas offices in collaboration with partner governments can play a key role in identifying the demand, receiving project proposals, assisting grant writings, and appraising requests for assistance at an early stage.

[FIGURE 8] OPERATING SYSTEM OF THE KDCM AND POTENTIAL PARTNER ORGANIZATIONS



In tandem with the example provided for vocational training sector, the report offers guidelines for how to develop the KDCM for the other selected programs.

Applying the Findings of this Paper to KOICA's Program Management Processes

When establishing CASs and calling for project proposals, KOICA should clearly state how it prioritizes aid sectors and modalities from the early stage of policy dialogue with the recipient governments. This will ensure lower transaction costs for both PCs and KOICA by preventing partner governments from making requests in irrelevant sectors and refraining KOICA from reviewing project proposals in almost all types of sectors. If KOICA invests strategically in initiatives linked to recommended sub-sectors and in less than two or three sectors per country, the impact of its assistance is more likely to be far-reaching.

CHAPTER VII: SUGGESTIONS AND CONCLUSION

Suggestions

In order to consolidate the KDCM, some suggestions have been put forward. KOICA needs to put adequate mechanisms in place to ensure that lessons learned from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are translated into practical knowledge. At the same time, the accumulation,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the knowledge from and across sectors and regions are accordingly linked to program management. Sector classification should also be streamlined more consistent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lthough this paper places emphasis on the operational model to normative fundamentals, sharpening organizational goals will help KOICA set boundaries for its targeted actions. To make headway on current aid practice, improved work processes reflecting the PD/AAA principles are equally as important as developing new program content. An important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the KDCM should look beyond Korea and be proactive on benchmarking for good practices.

Conclusions

To conclude, the paper revisits concerns for the KDCM model and suggests plausible measures to address its shortcomings. A mechanism to secure Southern ownership will be a pragmatic solution to concerns about a blueprint approach, unsuitable development model, and the pursuit of commercial objectives of Korea. According to Action Aid, studies show that technical assistance is only useful where it is focused on long-term capacity building, which is demanded and controlled by the recipient countries as part of wider, nationally-owned strategies for development.⁹³⁾ Recruiting more local consultants and conducting a wide spectrum of consultation processes, not just at government levels but also with the CSOs, will enable KOICA to use indigenous knowledge⁹⁴⁾ in practical terms. It is also important to rely on country systems which incorporat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systems and public procurement management (PPM) systems⁹⁵⁾ when these pass a critical minimum standard. Additionally,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sure that the feedback from PCs are mirrored in the evaluation results, findings from them are followed up on and knowledge from the evaluation is made accessible to local stakeholders, for example, by publishing an evaluation report in English or the local language.⁹⁶⁾ To put more teeth in the mechanisms, the role of field offices is essential, and extended authority should be delegated to the field.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the KDCM should be based on KOICA's aid performance, skills and experience, as the paper suggests, to bypass problems with the KDCM as a means of raising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rather than producing results on behalf of the PCs. In the same context, cautions should be taken for shortsighted benefits of the KDCM to secure contracts for Korean enterprises and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ir exports. Rather, the model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among various development partners. Finally, aid should be viewed as a long-term investment, not as

93) Actionaid International, 2005

94) Based on Korten's "learner's approach"; Easterley's "searcher's approach", Rihan's "non-linear view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Ellerman's "doer's approach"

95) Rhee, Hyunjoo (2009). Use of Country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nd Procurement Systems, KOICA. KOICA's research reports, such as the "Use of Country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nd Procurement Systems," have recently been published to explore ways to integrate the PFM and PPM issues into KOICA's aid delivery systems and procedures.

96) Based on the (DAC Evaluation Network)

something that enables Korea to build the national br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n emerging donor, new member of the DAC, and the chair country of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Korea has greater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become a key part of the international actions. Attaining a growing role, Korea should concentrate its aid in priority sectors which are in demand, where it has a real comparative advantage, and where it can complement the efforts of other donors.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develop its distinctive competencies is to illuminate a development path out of many different choices. By further articulating the KDCM and laying out an alternative donorship to traditional aid models, Korea will be able to boost the voices of the South and bring a fresh approach to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제 1장 연구개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형 원조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1991년 창설 이래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온 주제다. 그러나 오래된 논의만큼 심도 깊은 연구나 개념에 대한 정립, 그리고 체계적인 한국형 무상원조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형 원조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보면 (1)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도모하며 (2) 비교우위가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제한된 원조자원을 최적화하고 (3) 향후 국제사회와의 원조분업에 대비하며 (4) KOICA 선진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화를 달성하면서도 고도의 압축성장⁹⁷⁾을 이룬 우리의 경험을 다른 개도국이 우리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혁(Social economic transformation)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쓰는 것은, 원조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인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원조와 근본적으로 차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모델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하나로 압축하여 개도국에 시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이를 더 세분화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의 성공적 개발 요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국 정부에 의한 개발”⁹⁸⁾이라고 할

97) <한국의 발전관련 통계>

- 1인당 국민소득(\$): 100('63) ⇒ 1,000('77) ⇒ 10,000('95) ⇒ 20,000('07)
- GDP(10억 원): 2,764('70) ⇒ 847,876('06)
- 연평균 7% 고도성장
- 수출액(백만 달러): 32('60) ⇒ 325,464('06)/10,170배 성장
-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15.7('60) ⇒ 250,000('07)
- 평균수명(세): 62.33(남/58.99, 여/66.07)('71) ⇒ 77.46(남/73.87, 여/ 80.82)('03)

98) (Stiglitz, Joseph., 1996), (Leipziger, Danny. & Kihwan, Kim., 2000)

수 있으며, 한국이 빈곤을 극복한 수원국으로서 주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교훈은 “수원국 주도적”인 원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⁹⁹⁾ 이를 핵심 분야별로 살펴본다면, 먼저 행정제도 분야는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개발단계에 맞는 산업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 경제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에너지 분야는 산업활동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 공공재로 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편 보편적 교육 분야와 보건 분야 등 형평적 사회정책은 국가 주력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낙후된 농어촌의 개발을 도모하여 불균형한 발전에 따른 사회통합이 꾀하여졌고, 환경분야에서는 이와 연계한 산림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되어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국가 정보화, 즉 IT도 우리의 주요한 개발 분야라 할 수 있다.¹⁰⁰⁾ 이러한 면에서 보면 국제협력단의 7대 분야, 즉 교육, 보건,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 에너지, 환경은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국의 주요 개발 섹터에 기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⁰¹⁾

특히 우리의 개발경험은, 우리가 개도국으로서 가졌던 여러 초기 제약조건이 현재 많은 개도국과 비슷하며 활용성이 높다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일컬어진다. 우리가 개도국의 개발단계와 비슷한 면으로는 (1) 한국은 다른 개도국처럼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발 국가로, 개도국들이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강대국에게 갖는 경계심에서 자유롭고¹⁰²⁾ (2) 한국전쟁 등 분란을 겪은 국가여서 분쟁이나 내전을 겪는 국가들(Conflict-affected country)에게 시사점이 있으며 (3) 천연자원의 혜택이 적고 (4)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달리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정책과 수출 주도 전략을 택한 점 (5)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중간 크기여서 일반적 인구 규모의 개도국에서 모방 가능한 점¹⁰³⁾ 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며,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산업화 단계를 거쳤다는¹⁰⁴⁾ 면에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¹⁰⁵⁾에서부터 저소득국(Low-Income Country: LIC),

99) (이경구, 2004) (Joo, Dong-Joo., 2009),

100) KOICA 정보통신팀 검토자료 (2010.1)

101)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야별 개발경험은 [별첨 1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참고.

102) 일본도 패전을 딛고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일본은 식민지 통치 경험이 있음.

103) (박복영, 채욱, 이재민,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City state)와는 달리 많은 개도국에 적용 가능함.

104) 1960년대 천연자원 의존적 경제 → 197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 → 1980년대 자본집약적 산업 → 1990년대 기술집약적 산업 → 2000년대 지식정보화 산업

105) 1인당 국민소득(GNI) 750 달러 이하. Human Assets Index(영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에 관한 지수)와 경제지수(농작물 생산량, 재화·서비스 수출의 안정성, 제조 및 서비스 분야가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도, 수출품의 집중도, 작은 경제규모로 인한 핸디캡 여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인구비율)의 세 가

중저소득국(Low- and Middle-Income Country: LMIC), 고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 UMIC)¹⁰⁶⁾까지 여러 개발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별첨 1. 한국의 시대별 과제, 성장방식 및 주요전략 참고].

절대 액수 면이나 GNI 대비 원조비중이 작으며 원조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한국은¹⁰⁷⁾ 이렇게 개발경험 공유를 하는 전략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와 지역을 선정하여 원조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조의 질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하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협력 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2009)는 특히 규모가 작은 공여국들은 소규모 원조자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원조의 분절화(Aid fragmentation)를 줄이는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수원국에게 소규모 원조액 집행과 관련한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찾아서 강화하는 일은 결국 국제사회의 다른 원조기관들과 향후하게 될 원조분업(Division of labor)에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단이 타 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국가를 찾아 성과를 축적해 두어야만 우리가 그 섹터(Sector)와 지역에서 적극적 혹은 지도적 역할의 공여국(Active or Lead donor)으로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맞추어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과 2011년 제 4회 서울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개최를 앞두고 KOICA는 기존의 “늘 해오던 대로(Doing business as usual)”의 방식에서 벗어나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PD)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맞게 원조방식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한국에 관한 DAC 회원국의 특별 검토 보고서(DAC Special

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2회 연속 개선되어야 함. 최빈국은 UN 총회에서 3년마다 정하며, 심사 대상국가는 인구 7천 5백만 명 이하인 나라에 한함.

106) 저소득국: 2007년 1인당 GNI \$935 미만, 중저소득국: 2007년 1인당 GNI \$936-\$3,705, 고중소득국: 2007년 1인당 GNI \$3,706-\$11,455

107) DAC 도너 2007년 평균 ODA = 4.70 USD billion: 한국 2007년 ODA = 0.69 billion, 2008년 0.80 billion/DAC 도너 2007년 평균 GNI 대비 ODA = 0.45%: 한국 2007년 및 2008년 GNI 대비 ODA = 0.09%, 한국 2008년 0.8 billion

Review of Korea)」(2008)는 KOICA의 섹터가 상당히 폭넓게 정의되어 있어 모든 나라에서 어떤 섹터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한 나라에서 섹터를 2-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협력단도 DAC 실사단 방문 당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형 무상원조는 선진원조를 위한 협력단 ODA의 ‘특화방안’과 이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KOICA는 무상원조 중추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원조 관련 기관들에 비해서 “한국형 모델”을 규정하고 대표적 프로그램(Signature program)으로 브랜딩(Branding)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면에서도 본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시행하는 지식공유사업, 즉 “Knowledge Sharing Program(KSP)”은 한국형 경험전수 프로그램의 대표사업이자 한국형 ODA로¹⁰⁸⁾ 알려져 있는데 반해, 협력단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한국형으로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한국형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 원조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유용한 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한국형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국형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과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협력단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협력단 직원의 과반수 이상인 53.8%가 한국의 독특한 원조모델의 실체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응답하였다[별첨 2. 설문조사 결과]. 또한 ‘과거 한국’의 경험이 ‘현재 타 개도국’에 복제 가능한가(Replicable)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국제 컨퍼런스 결과 보고서」(2007)에 의하면 OECD의 개발협력국장인 Richard Carey는 현재 국제정세는 한국이 경제개발을 이룬 1960, 70년대와 매우 다르므로 개도국들은 무조건 한 국가의 개발모델을 따르기보다 여러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자국에 맞는 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태주(2007) 역시 모든 국가들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차이와 맥락(Context)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발경로(Development path)를 찾아야 하며,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며 환경적 자원을 희생시키는 재벌과 성장 위주의 한국적 개발방법은 다른 개도국에게 바람직하지도, 다시 반복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¹⁰⁹⁾

108) 한국형 사업은 한국형 모델로서 실시되는 사업을 의미함.

109) (KOICA, 2007)

그리고 한국형은 한국의 지정학적(Geopolitical)·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대상국에게 최적일 수 있는 원조 보다는 자칫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홍보하거나 원조의 가시성¹¹⁰⁾에 대해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 이는 2009년 베를린(Berlin)에서의 1차 원조 효과성에 관한 워크숍(Workshop)에서도 지적된 바로, 공여국들은 원조의 결과나 이익을 한 기관이나 나라의 공으로 돌려서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 조화성, 상호 책임성, 원조 일치를 해치는 경향이 있으나, 실상 원조 결과는 파트너십(Partnership)의 산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¹⁾ 또한, 가시성에 대한 강조는 한국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들, 즉 원조 효과성이나 자원 최적화의 목적과 상충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을 드러내기 위해, 부품 구입이 용이치 않은 한국 기자재를 보내고, 한국 인력으로 건물을 짓고, 한국적인 제도를 전수해주고자 하지만, 이것은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원국의 역량을 기르기보다는 공여국의 시스템과 기술을 수출하고, 원조의 구속성을 높이며,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라는 원조방법을 강화하는 공급자 중심의 원조로 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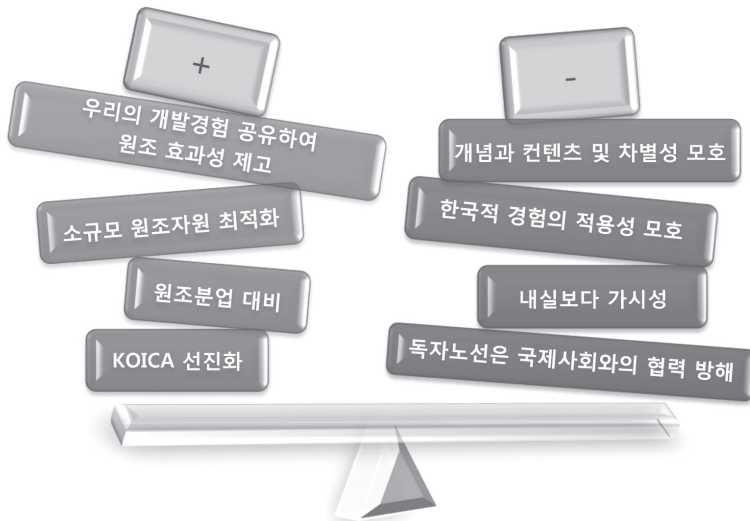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제원조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원조경험(Practice)으로부터 배울 것이 더 많은 나라인데, 한국형과 같은 독자적인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배우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시너지(Synergy)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¹¹²⁾ 이렇게 지금껏 논의된 한국형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10) 여기서 말하는 가시성이란 한국 기자재 사용, 한국인 파견, 한국제도 전수, 한국을 부각시키는 표식(Sign) 등으로 한국이 원조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함. 그러나 사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은 수원국을 원조사업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며 타 공여기구와 원조 통합과 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측면에서의 가시성은 덜 부각됨.

111) Aid Effectiveness Workshop Berlin, June 15-16, 2009 Co-Chair's Summary

112) (권율, 김한성, 박복영, 외, 2006), 국제협력단 내 설문조사, 경향신문, 2007년 1월 25일 ODA 전문가 좌담

[그림 1] 한국형 모델의 득과 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한국형 사업들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한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형 원조모델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이 연구들을 현재 협력단 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작업도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섹터별 프로그램을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한된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형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여기에서는 기존 논의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의 논의

현재까지의 한국형 관련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와 관련 부처 및 KOICA의 정책 문서를 포함한 기존 연구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겠다.

A. 정부의 논의

외교통상부에서는 2005년 4월 원조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적 원조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2005년 7월 국무조정실의 ODA 개선 실무 작업팀은 국제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증진과 우리의 국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영역의 대내외적 환경에 적합한 원조방식이 한국형 원조모델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더 구체화하여 2005년 10월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은 선진 공여국과 차별화된 우리의 역량에 맞는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을 목표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수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타 공여국과 차별 가능한 분야로 경제개발계획,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제도역량 배양, 인프라 구축, IT 분야 등이 언급되었다. 현재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듯, 민주주의적 가치 향상(Good governance)과 지식기반 중심의 제도역량 배양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검토하고, 그간 다수 국가에 소액을 분산지원하던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대륙별로 중점 지원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¹¹³⁾

2007년 9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및 기술협력 사업의 주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종합대책」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월 제 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자료로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¹¹⁴⁾ 여기서는 후발 개도국들에 대한 KDI의 경제개발 컨설팅(Economic development consulting)과 KOICA의 경제개발 분야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새마을운동, 신도시 개발, IT 인프라 구축 등이 개발경험 공유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경험 공유 추진상의 문제점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이는 (1) 국가별 수요에 맞는 체계적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Contents) 개발 미흡 (2)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포괄적 수요조사 미흡 (3) 사업선정 시행과정에서 기관간·사업간 연계 및 협조체제 미흡 (4)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시스템과 우수사례의 차기 사업 반영 노력 부족 (5) 국제적 수준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및 이들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의 미흡 등이다. 경제경험 공유의 추진전략으로는 정부혁신·국정관리, 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경제정책·산업육성, 농어촌개발·

113)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114) 이에 앞서 2007년 12월 21일 국제개발협력 실무 위원회 보고 자료로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안)」이 작성, 제출되었다..

소득증대, 국토개발·사회인프라구축, 보건의료·질병퇴치, 과학기술·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8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각 분야 사업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방식으로 지원하며 현장중심 수요조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별첨 3. 관계 부처 분야별 한국형 프로그램 참고]. 이 논의는 개발 경험 공유에 관한 부처별 합동 추진 방안 및 현재 KOICA의 섹터별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8대 중점 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경험 공유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전수사업을 해외시장 진출, 상품 판로로 확대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협력단이 지향하는 개발협력의 최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KOICA 내에서의 논의는 대외무상원조 중기 전략(2008-2010)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개발경험을 대외원조사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원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며,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교육, 보건, 행정, 정보통신, 농촌, 산업 에너지, 환경에 해당하는 7개 분야에 대한 목적(Goal)과 목표(Target) 그리고 사업 예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표 8. KOICA 2008-2010 중기 전략 참고].

이러한 정부의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는 국제 개발협력 원칙으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가 제시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¹¹⁵⁾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개발경험 공유를 원조모델로 정립하려는 노력은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겠다.

B. 기존 연구

여기서는 한국형 모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i.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2006.2)*¹¹⁶⁾

동 보고서는 빈곤 극복을 위한 16개 분야의 정책 프로그램 패키지인 “한국형 개발협력 정책 프로그램(Korea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개발협력 정책 프로그램의 요건을 “개도국이 발전과정에

115) 4조(기본원칙)의 4항, 참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제안연월일: 2009.12.29, 제안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116) (전승훈, 이태주, 김달현, 이태희, 전은영, 2006)

서 당면하는 주요한 경제·사회적 제반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과 수단을 제시하며 한국이 자신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분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12개 정책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1) 국가건설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영전략 (2) 개발정책 능력배양 (3) 식량자급과 농촌개발 (4) 새마을운동 및 국민정신 함양 (5) 가족계획 국민보건 및 의료 (6)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개발 (7) 공기업의 관리 (8) 국가 기간산업의 건설 (9) 수출진흥과 중소기업의 육성 (10)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T) 산업의 육성 (11) 거버넌스(Governance)와 공공서비스 (12)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대외적 경제안정이다.

동 보고서는 빈곤극복이라는 목표와 한국의 핵심 개발경험 분야에 대해 제시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형 사업의 요건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다음 12가지 정책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즉, 무엇이 개도국 발전과정에서 당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어느 것이 “실질적 능력과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다. 동 보고서는 또한 선진국의 경우 발전의 역사와 과정이 달라서 한국이 가진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개도국에서의 유용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지혜가 보다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한국의 개발 전수사업의 성과(Result) 등을 통해 제시되지 않았다.

ii.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선진화 방안(2006.12)¹¹⁷⁾

동 보고서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진 원조체제를 가리킨다”고 하고, 한국은 선발 개도국으로서 개발연대의 정책과 제도가 많은 개도국에게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비교우위 분야의 예로 인적자원개발(HRD)을 들었고 형태 면에서 우리의 경제개발 및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 지원형 개발조사와 개발 컨설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섹터로는 IT 분야(IT망 구축지원, IT 정책자문, IT 훈련센터 건립), 보건 및 의료 분야, 도시환경 인프라 정비, 환경 분야(소각로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정비, 녹화조림사업)가 언급되었다. 상기 보고서는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의 기본 접근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이에 따라 원조사업의 추진 및 관리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개괄적 수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117) (권율, 김한성, 박복영, 외, 2006)

기존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iii.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2007.2)¹¹⁸⁾

동 보고서는 한국적 개발협력을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비교우위 분야이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성장과정에서 축적해 온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 에너지, 환경, 재난구호의 8가지 분야별로 국제동향과 개발협력 사업실적, 그리고 프로그래밍(Programming) 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특정 분야의 특정 프로그램을 제시한 근거는 개도국의 수요와 요구를 우리의 비교우위 및 선진국과의 차별성과 비교하여 사업의 정합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 보건 두 분야에만 해당하고, 그 내용도 매우 짝박하며 왜 특정 분야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지 이유가 불충분하다. 또한 그 외 6가지 분야는 어떤 근거에서 한국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산업 에너지와 ICT 부문은 무상원조가 아니라 유상원조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설명한 한계가 있다.

상기 보고서는 한국적 개발협력의 요소 및 사업의 유형을 크게 (1) 인적역량개발 프로그램(Human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2) 정책 및 전략자문프로그램(Policy and strategy consulting program) (3) 제도 및 체제구축지원 프로그램(System and institution building support) 세 가지로 보고 각각의 유형으로 각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되어 추진되거나, 위의 2, 3개 유형 사업 모두가 포함된 내용이 하나의 종합적인 개발사업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추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제시는 매우 의미가 있으나, 동 연구는 제시된 3대 개발 요소를 적용한 8개 부문의 사업모델이 타 선진 공여국의 경우와 어떻게 세부적으로 차별화되는지, 또한 그러한 모델이 현재의 국제경제시스템에서도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력단이 각 분야별로 제시된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편이다.¹¹⁹⁾

118) (전승훈, 이경구, 이재홍, 손성애, 2007)

119) 이 세 가지 연구 외에도 한국 개발경험의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의 적용성을 세부적으로 다룬 참고문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의 대 개도국 적용성을 다룬 연구와(정기환, 김용택, 허장, 2007), (허길행, 전승훈, 유철, 최미애, 2008) 우리의 개발 당시와 유사한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사용하였던 경제정책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있으나(박복영, 채욱, 이재민,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이는 특정 분야와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한국형 모델의 선행 연구로는 다루지 않았다.

2) 기존 연구의 의미와 한계

기존 논의 및 연구는 한국형 모델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제시해준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한국형 모델의 핵심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찾아 선진 공여국과 “차별화”시키거나 원조의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수원국 수요가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과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개발목표 및 절차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경험을 전수하는 분야 면에서도 보건, 교육, IT, 정부 및 행정제도, 산업 인프라 구축, 농촌 등 비슷한 섹터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분야의 사업이 어떤 국가 그룹과 지역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논의나 기존의 보고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단에서 한국형 모델을 시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A. 구체적이지 못한 한국형 프로그램 선정 기준

먼저 대략적으로 한국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요소와 제시된 섹터들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 KOICA 중기 전략, 개발공유 활성화 종합 대책안 등에서 제시된 분야들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형에 속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나누는 정의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세부적인 한국형 프로그램 선정으로 활용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한국적 경험의 내용과 적용성에 대한 논의 부족

이전까지의 논거는 “한국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즉시 사용 가능한(Ready-made) 원조 콘텐츠”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험이 다른 개도국에 쉽게 이식될 것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어느 시대적 배경 하에서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되어 어느 제도를 시행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사실(Fact)적인 기술이 프로그램 단위가 될 수 있는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갖춘 핵심 성공요인의 분석과 ‘과거 한국’의 경험을 한국의 개발 당시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현재 다른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하여 개도국에의 전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¹²⁰⁾ 또한,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적 경험은 주로 예전인 1970-1980년대의 경험이며, 2000년대 등 비교적 최근의 경험은 다루고 있지 않고, 시대별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C. 비교우위 개념에 대한 단선적 분석

과거의 논의에서는 비교우위의 다각적 측면(Multi-dimensionality)이 부각되지 않고 주로 섹터 위주의 비교우위로 논의가 되어움을 알 수 있다. 비교우위는 사실 섹터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원조방법, 원조규모 등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적·문화적·역사적 유사성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원조사업을 하는데 있어 다른 공여국들보다 더 ‘비교우위’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일반 산업적 비교우위와 ODA 사업에서의 비교우위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무리 IT 분야에서 산업적 비교우위가 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최고의 산업적 기술과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생산품이 실제 개도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대신 그 분야에서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중소기업체가 ODA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산업적 비교우위가 ODA 산업의 비교우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이런 다양한 비교우위의 측면보다는 단면적으로 ‘사업 섹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또한 분야적 비교우위조차도 왜 한국이 그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국제 경쟁력 비교를 한다거나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D. 타 공여국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 제한

여타 공여국과 차별화할 필요성은 역설되어 있으나 선진국들이 중점 지원하고 있는 분야와 세부 분야가 무엇인지, 각 분야에서 주요 공여국과 KOICA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중점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캐나다 국제개발협회(Canadian

120) -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발견한 점(Lessons learned)을 다른 시간대 다른 지역에 있는 집단에게 일반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성공한 결과 Y(예: 70-80년대의 GDP 증가)가 Z라는 외적 요소(Omitted variables or Compounding variables 예: 세계경제의 호황)가 아니라 특정한 개입 X(예: 정부의 산업육성정책)로부터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의 중점 분야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으나 이는 두 공여국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OECD DAC 가입국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E. KOICA의 사업성과 및 역량평가 부재

기존의 연구는 협력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한국형 프로그램을 제시함에 있어서 무상원조집행의 대표기관인 KOICA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였다. 협력단이 그 동안 시행해 온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적 경험의 공유 가능성과 타국에 대한 적용성을 실제 사업 레벨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라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또한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조직적 역량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시행 가능성이 낮다. 한국형 모델의 실제 수행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협력단이 수행해 온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및 섹터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Performance Assessments), 그리고 제시된 한국형 모델 사업이 협력단의 사업수행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되어 갈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F. 수원국 및 국제적 수요에 대한 분석 미흡

수원국의 수요(Need)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중요성은 언급되고 있으나, 수원국의 수요는 개괄적으로 짧게 언급이 되었을 뿐, 이를 세부 분야별로 분석한 데이터나 자료는 쓰이지 않았다. 또한 협력대상국의 수요는 크지만 공여국의 공급이 부족한 부문이어서 틈새시장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격차(MDG Gap)라든지 MDG 지표(Indicator)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

3) 본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기존 한국형 논의와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그 제한점을 보완하면서 주로 비교우위와 국별 프로그램 실시의 관점에서 한국형 사업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 연구의 2장에서는 먼저 다른 공여국에서의 특화된 원조정책을 고찰한 후, 다차원적인 비교우위와 원조분업의 개념에 따라 한국형 양자 무상원조사업을 정의하였다. 3장에서는 협력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분야의 사업과 이 사업들이 다른 공여국들과 섹터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 2장에서 정립된 정의에 따라서 한국형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3장에서 정리된 섹터별 주요 사업 44개를 한국의 경험, 비교우위,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협력단의 사업성과, 그리고 수원국 및 국제적 수요에 따라 분석하고, 정책,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배양을 패키지화한 데이터베이스로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이 분석을 계량화한 점수표를 제시하고, 점수기준을 달리한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KOICA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한국형 사업을 분야별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차 선정된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수행 가능성을 섹터별 면담을 통해 알아보고 최종 선정을 하였다. 6장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최종 사업 후보들을 실제로 한국형 모델로 사업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별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본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한국형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포괄적인 제언과 한국형 모델의 위험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성공적인 한국형 모델의 시행이 주는 의미를 짚어보며 결론을 맺었다.

이 연구는 한국형으로 특화될 수 있는 섹터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경쟁력 있는 세부 원조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성장모델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많은 학계의 논의가 있는 반면, 섹터 단위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원조를 통해 한국 성장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개발경험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하기 보다는, 한국적 개발경험이 이미 KOICA 무상원조사업의 근간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분야별 원조모델로 정교화시키는 방향으로 범위(Scope)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 연구는 KOICA에서 일반적인 ODA 지원 사이클(Cycle)을 통해 프로젝트 사업을 해 온 7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조의 성격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면에서 제외하였고 기후변화 파트너십과 같이 특별한 기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선정을 위해 무상원조사업을 세부 분야 단위로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같이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여러 분야를 횡단적으로 아우르는 경우나,¹²¹⁾ 한 분야 내에서도

121) 범/교차 분야(Cross-cutting) 사업은 성(Gender), 환경,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이 단일섹터나 사업, 개입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프로그램 주기 전체에 주류화 및 통합되어야 다면적인 빈곤문제의 해결이라는 원조목적달성에 장기적 효과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이는 다분야(Multi-sector)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단 DAC 원조목적 코드에서는 다른 섹터에 할당되지 않는 사업을 Multisector/Cross-cutting(400)에 표기하도록 함. Cross-cutting 접근법과 관련된 연구로는 박명지(2009). “KOICA 사업의 녹색화 방안” 보고서, 박명지(2010). “KOICA”의 범분야(Cross-cutting) 정책통합방안”, 최민경(2008).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 참고.

여러 세부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사업형태는 프로젝트 사업을 위주로 보되, 연수사업과 봉사사업, 개발조사, 전문가 파견 및 NGO 지원도 특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이 원조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기존 한국형 논의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작업은 아니다. 한국형 원조모델에 관한 통념(Myth) 중 하나는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대이나, 그보다는 그간 원조사업을 수행하며 길러온 역량을 극대화하고 향상시키는 작업이 더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간 노하우(Know-how)를 쌓아왔던 사업들의 제약점을 분석, 강화시키는 것이 전혀 해보지 못한 분야의 사업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분야의 사업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 원조성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나면 한국형 사업으로 모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방향은 한국의 무상원조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지, 원조 효과성이 높은 섹터를 모색하는 작업은 아니다.¹²²⁾ 원조효과가 보다 높은 섹터를 찾는 일은 무엇에 대한 효과성인지에 대한 불일치와 수원국마다 우선시되는 개발 분야의 차이, 시대적·정치적으로 중시되는 분야의 가변성, 그리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상 효과귀인(Casual attribution)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원조(X)가 빈곤,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장 평화구축 등 어느 개발목표(Y)에 효과를 미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설사 효과성을 측정할 개발목표를 정립한다고 해도, 어떤 섹터에의 개입이 효과적이냐는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성인 인구의 2/5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에 감염되어 생산적 노동인구가 부족한 스와질란드(Swaziland)와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수출의 60%를 농업에 의존하는 에티오피아(Ethiopia)에게 더 효과적인 개입 분야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효과적 분야라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세계은행이 1998년 「Assessing Aid」를 통해 “건전한 거버넌스, 자유무역, 그리고 정부예산흑자(Good governance, Free trade & Government budget surplus)”를 갖춘 나라에 원조가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후 많은 공여국은 거버넌스 투자를 늘려왔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인프라(Infrastructure)와 식량안보 및 농업, 기

122) 원조 효과성이 높은 섹터와 관련하여 Clemens(2004) 등은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국제수지 지원이 단기성장에 긍정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수원국의 흡수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효용체감(Diminishing returns)을 보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보건, 교육, 환경에 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만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성장과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을 논하였다.

후변화 등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분야들이 시대적·정치적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출판한 보고서조차도 효과성 측정을 시도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이는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¹²³⁾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원조 분야를 찾아가는 방법 보다는 수많은 개발원조 분야 중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찾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하였다.

동 보고서는 정책적 수준의 연구로, 섹터 부서에서 바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세분화된 프로그램 분석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원조 분야 선정의 또 다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는 제외하였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세부 섹터의 국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직개혁안 역시 이 다음 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여기서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단 세부 섹터별로 한국적 경험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경험의 유용성을 판단할 정도의 개괄적인 것이므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은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협력단 정책문서, 연구 보고서, 평가 보고서 및 정부의 정책자료, 수출입은행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등의 보고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외국 원조기관의 문서와 OECD DAC의 보고서, 동료심사(Peer Review) 문서 및 DAC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였다. 문헌자료 외에는 협력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미팅(Focus Group Meeting), 그룹 혹은 개별 인터뷰, 워크숍, 및 온라인 설문 조사(Online Survey), 및 보고서 초안 검토의견¹²⁴⁾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모든 관련 부서와 직급을 망라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협력단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 폭넓은 국내 ODA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정책포럼 및 외부 발표회를 실시하였다.¹²⁵⁾ 대외적으로는 노르웨이(Norway) 원조청, JICA 및 DAC 사무국 직원들과 직접 면담(In-person interview)을 하였다. 또한 제 3차 OECD 세계포럼과 제5회 제주 평화 포럼,

123) Hansen and Tarp(2000)와 Clemens(2004) et al. 은 원조의 효과와 Institution의 질간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124) 협력단 7개 섹터 부서 검토의견 및 KOICA 정책연구실 및 지역조정팀 검토의견 반영. 외부인사 검토의견으로는 외교부 개발정책과 임훈민 과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은미 교수 검토의견 반영.

125) 제 3회 개발협력 이슈 포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 연세대학교 발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발표, 국제개발협력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

제 3회 서울 ODA 국제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논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통계 자료로는 협력단과 OECD 데이터를 주로 참고하였고,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기록원의 국가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기록¹²⁶⁾을 활용하였다.

5) 용어 사용에 대한 노트

DAC 등 개발원조계에서는 원조를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수원국을 “Partner country”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Recipient country”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원조 대상자들 간의 동등한 관계를 담고자 하는 바람직한 설정이다. 그러나 이는 파트너국 혹은 협력국은 문맥에 따라 원조에 참가하는 다른 공여국을 지칭할 수도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는 나라를 지칭할 때는 공여국 혹은 도너(Don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원조를 받는 나라를 지칭할 때는 수원국, 협력 대상국(협력국), 혹은 파트너국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국제개발원조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 하였다. 물론 두 개념은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나 모두 원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ODA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주동주(2008)¹²⁷⁾에 의하면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 원조, 무역, 투자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나 그 중심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물적, 인적 자원 이전을 의미하는 국제 원조가 있다. 한편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는 원조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상업적,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원조다. 이 용어들의 합의에는 장 단점이 있는데, 개발협력이 보다 상호호혜적이고 수혜자와 공여자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조 보다는 뜻이 모호하고 또한 평등한 용어의 사용이 마치 실제 수직적 관계는 바꾸지 않은 채 평등한 관계로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듯한 환상을 준다는 비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¹²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126)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127) (주동주, 2008)

128) Adams (1995)를 인용.(Haslam, P. Schafer, J. & Beaudet, P., 2009).

제 2장 한국형 원조의 개념

본 장에서는 원조분업의 의미와 선진 공여국의 특화된 원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강점에 근거한 한국형 원조의 개념에 대해 정의해 보고자 한다.

1. 원조의 조화성(HARMONIZATION)과 원조분업

공여국들은 원조를 자국의 정치, 외교정책, 안보, 자원, 무역, 이주, 문화파급 등 다양한 분야의 이익 증진을 위한 간접적 도구(Soft tool)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과는 상관 없이 많은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005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 따르면 공여국들은 분절화(Fragmentation)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보완적인 측면(Complementarity)에서 지원을 해야 하며, 각자의 활동이 전체 원조사회에 가치를 더해줄 수(Value-added)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교우위라는 개념은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특히 34 및 35 항(Article)은 공여국과 협력 대상국 모두 적절한 보완적인 분야에 관여하기 위해서 비교우위를 파악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화성과 관련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파리선언은 그러나 원조분업에 대한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나 공여국간의 섹터별·지역별 책임을 할당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DAC 22개의 공여국 중 15개를 포함할 정도로 많은 양자 공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해 온 경험을 살려, 인적·물적 원조분업의 시험대(Testing bed) 역할을 하고 있다. EU에서의 현재 원조분업의 개념은 2006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C)에서 채택된 “EU 보완성과 원조분업의 지침적 원칙(EU Guiding Principles on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과 통합되어 2007년 발표된 자율적인 EU의 원조분업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Division of Labor)¹²⁹⁾에 근거한다.¹³⁰⁾ 여기에는 원조분업의 3가지 차원과 2가지 원칙, 그리고 11개의 지침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차원과 원칙을 간단히 살펴 보겠다.

1) 원조분업의 차원¹³¹⁾

A. 국가내(IN-COUNTRY)

얼마나 많은 공여국이 한 수원국의 몇 개의 섹터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각각의 공여국이 한 수원국에서 보다 적은 수의 섹터에 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B. 국가간(CROSS-COUNTRY)

각 수원국을 지원하는 공여국 수가 균형에 맞는지를 보며, 원조 소외국(Orphan)과 원조 집 중국(Darling)이 생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C. 분야별(CROSS-SECTO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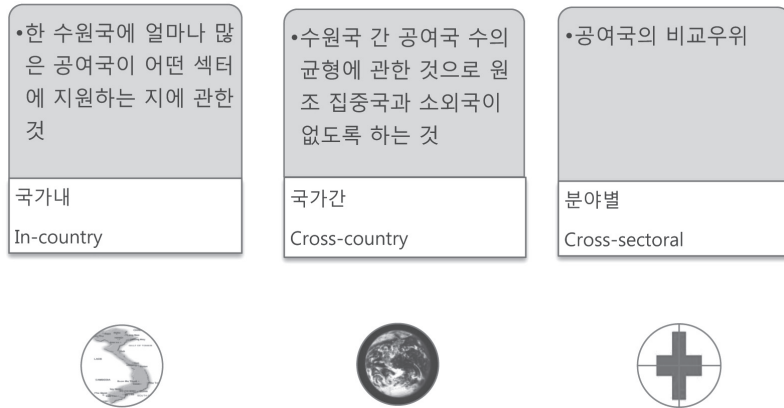
이는 공여국의 섹터적 측면에서 상대적 강점과 비교우위에 관한 것이다. EU 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의 부속서(Annex)인 「위원회 조사 보고서(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SEC (2007) 248/3)」에 따르면 공여국의 비교우위는 ‘수원국이나 타 공여국의 신뢰’, ‘새로운 정책이나 섹터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 ‘신속한 대처능력이나 장기적 예측능력’ 등 일반적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OECD 개발협력 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2009)는 섹터 전문성, 수원국과 협력경험, 직원의 능력과 행동, 재정 규모(Finance volume)를 고려하되, 수원국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조분업의 세 가지 차원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129) 전문: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development/general_development_framework/r13003_en.htm

130) (Schulz, Nils-Sjard., 2007)

131) (Schulz, Nils-Sjard., 2007)

[그림 2] 원조분업의 세 가지 차원



2) 원조분업의 원칙¹³²⁾

EU가 제시한 원조분업의 두 가지 주요 원칙은 (1) 국가 내 원조분업은 수원국 주도여야 하며 (2) 원조분업이 국제적인 원조의 총량이나 원조흐름의 예측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지침들은 공여국이 한 수원국에서 최대 3개의 섹터까지 관여하여, 중점 지원국의 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각 섹터별로 지도적 공여국(Lead donor)을 두고, 타 공여국에게 자금집행과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OECD 원조 효과성 작업반이 EU 개발정책에서의 원조분업에 관한 행동강령과 UN 개발원조 분석틀(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원조분업과 보완성에 대한 모범관행(Good practice)을 작성한 바에 따르면 공여국은 그들이 일하는 지역, 섹터, 주제(Theme)¹³³⁾ 혹은 원조가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 중복된 원조를 피하고, 특히 많은 공여국이 소규모 원조를 지원하는 분절화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원조분업의 현황과 문제

원조분업은 논란의 여지도 가지고 있다.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에서는 공여국의 비교우위를 사정하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때로는 일부러 다양한 원조채널과 수단을 유지할 필요성(Managed diversity)에 대한 언급도 있다.

132) (Roeske, Kerstin., 2007)

133) (Roeske, Kerstin., 2007)

Schulz(2007)는 원조분업이 가진 이슈를 지적하면서, 원조시장(Aid market)에서의 시장 기능과 배분을 하는 한 가지 이상적인 잣대가 “빈곤퇴치(Fight against poverty)”가 아니라 공여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협력모델, 즉 인권, 평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으로 매우 다양해서 도너(Donor)의 특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¹³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원조는 종종 선진국의 대중들에게 어필(Appeal)하는 대중적인 섹터에 몰리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1990년대는 성 평등과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유행했다면, 현재는 공여국들이 기후변화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섹터에 몰리고, 덜 인기 있는 섹터는 주변화(Marginalized)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섹터라는 것은 간혹 동일한 사업에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Labeling)의 차이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보건, 산업 에너지에서 하던 물 관련 사업도 국회나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로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섹터적 포커스(Sectoral focus)나 비교우위가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¹³⁵⁾ 이 밖에도 국제 협력은 다른 정치·외교적·경제적 이유로 이용이 되어 원조 효과성만을 중시한 섹터 및 지역의 선정이 어렵고,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개발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하는 속성(Neo-colonialism)이 있으며, 수원국과 공여국의 수직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수원국이 진정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포화된 섹터에 있는 공여국을 재배치하기는 힘들다. 유로파(Europa)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원조분업은 주어진 섹터나 국가에서 공여국의 가시성을 감소시키고, 공여국간 조율이 쉽지 않다는 운영상의 어려움 역시 가지고 있다.¹³⁶⁾

이와 같이 원조분업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는 이미 분절화를 줄이고 조화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원조의 큰 흐름이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주요 측면이나 원칙들은 우리가 국제 개발 목표에 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찰할 때 참고해야 한다. 특히 한 국가당 3개 이하의 섹터에 관여한다는 원칙과 원조 소외국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 원조 집중국에 소규모 자금제공(Funding)을 지양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 동시에 비교우위 파악시 섹터의 전문성, 원조 규모, 특정 수원국에서의 경험, 직원역량을 고려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수원국이 내려야 한다는 점은 한국적 특화 프로그램을 정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34) (Roeske, Kerstin., 2007)

135) (KOICA-Norad Workshop, 2009) “Norway’s Presence In-Country: Results and Challenges”

136) (Europa, 2007)

2. 선진국의 특화된 원조

다음으로는 한국의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 참조할 수 있는 선진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타 공여국에서 어떻게 비교우위나 틈새시장을 활용한 원조를 실시하는지 알아보겠다. 이 사례들 중 먼저 노르웨이의 경우는 노르웨이 정부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 섹터 사업에 대해 노르웨이 국제개발청(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ad) 청장 및 외교부 관계자들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비교적 세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이 경험공유 모델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나머지 사례들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최근의 동향을 보기 위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실시된 모든 DAC 동료심사를¹³⁷⁾ 검토한 후 특화 원조로 소개 가능한 케이스를 선정한 것이다.

1) 노르웨이의 경험공유 프로그램: OIL FOR DEVELOPMENT INITIATIVE (OFD)

노르웨이의 석유개발원조(Oil for Development Initiative: OfD)는 각 정부부처 및 개발 주체들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지식 및 경험 전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OfD는 과거 20년 동안 노르웨이의 석유 섹터 개발 지원(Petroleum sector development assistance)을 조율·확장한 것이다. 이는 석유 생산국인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석유 생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원 및 수입의 관리와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부패방지 등을 다룬다.¹³⁸⁾ Oil for Development는 주로 석유 자원 관련 법률제정, 관리감독 메커니즘(Management and supervision mechanism), 국제 입찰과정 지원, 석유 산업과 수입관리, 환경보호, 가스(Gas) 화염으로 인한 이주문제,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한다. 2009년에는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모잠비크(Mozambique), 수단(Sudan) 등 9개의 장기 중점 지원국¹³⁹⁾과 제한된 지원을 받는 국가 16개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은 외교부에서 출연되어 대사관들과 노르웨이 원조청인 Norad에게 지원되고, 이는 다시 노르웨이 석유이사회

137) ■ 2009: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2008: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호주 ■ 2007: 덴마크, UC,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 2006: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 미국 ■ 2004: 일본(일본은 최신의 동료심사 보고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원조방식 및 체제가 비슷하여 참고함)

138) 국별 지원의 배분 - 자원관리: 69%, 환경관리: 18%, 수입관리: 12%, 기타(Good governance 등): 11%

139) 2008년 주요 지원국: 앙골라, 볼리비아, 가나,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단, 동티모르, 우간다, 베트남(베트남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원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원조 지원액을 줄여가고 있음)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NPD)와 노르웨이 석유국 산하 국제협력 프로그램 (International Programme for Petroleum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etrad) 등의 집행기관에 분배된다.

다음은 OfD를 받치는 기둥(Pillar)이 되는 요소들과 또 이 요소들의 토양이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 그리고 수원국의 ‘요청-집행-성과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Cycle)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노르웨이의 경험공유 프로그램: OFD의 구성 요소



노르웨이가 OfD와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 동인, 즉 [그림 3]의 필러(Pillar)들을 OfD 2008년 연보 및 웹사이트,¹⁴⁰⁾ KOICA-Norad 워크숍 자료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수원국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요청

석유 섹터 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함께 노르웨이의 원조에 대한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140) <http://www.norad.no/en/Thematic+areas/Energy/Oil+for+Development>

있다. 2005년 Oil for Development Initiative의 발족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반응이자, 동시에 더 많은 수요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OfD는 2008년까지 25개국에 지원을 해왔으며, 58%가 아프리카, 21%가 아시아, 그리고 70%가 중점 협력국에 지원되었다. 노르웨이는 국내에서 성공적이었던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드시 잘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선택하는 정책은 항상 그 나라가 당면한 특정 과제들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원조가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B. 석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정책과 산업기술

국가가 대규모 국영기업을 통해서 관리하는 석유는 노르웨이 경제개발의 핵심으로 수출의 절반, 국가수입의 30%나 차지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섹터의 개발을 통해 세계 제2위의 높은 국민소득¹⁴¹⁾을 누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2009년을 포함, 수년 동안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사회 및 역량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인 석유에서 나오는 자금을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유지에 투자할뿐만 아니라 석유수입이 줄어드는 때를 대비하여 저축함으로써 2009년 9월까지 NOK 2,549(약 \$455조)¹⁴²⁾에 이르는 노르웨이 석유기금(Norwegian Petroleum Fund)을 형성하는 등 건전한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노르웨이는 수십 년 동안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쌓인 노하우와 직접경험(First-hand experience)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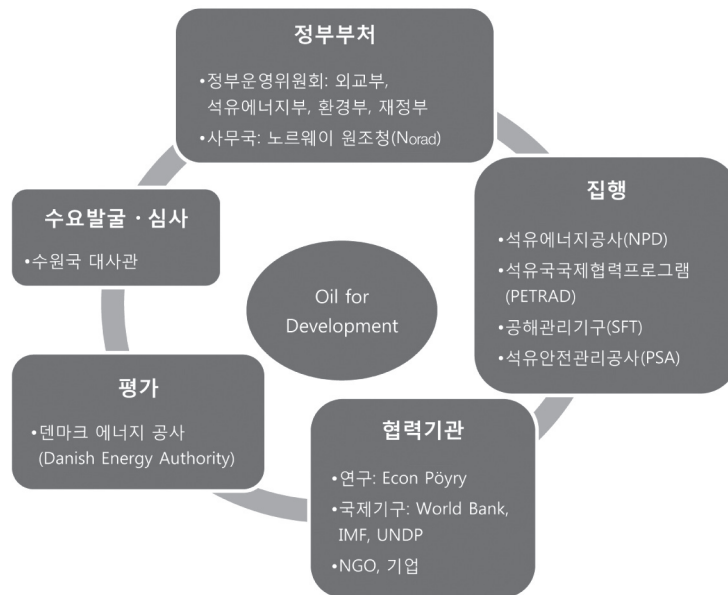
C. 원조 관련 부처와 석유 섹터 노르웨이 공공기관과의 협력

OfD는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정부 관계 부처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OfD의 운영 시스템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141) 2008년 세계은행과 IMF 데이터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GDP (PPP) per capita 는 USD 94,000 이다.

142) 1NOK = 206KRW로 환전시(2009.10.9 기준)

[그림 4] OIL FOR DEVELOPMENT의 운영체제와 협력기관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관계 부처 운영위원회**(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는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 역할을 하며 전략적인 지침과 우선순위, 그리고 주요 사업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를 의장으로 하여 석유와 에너지 자원부(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그리고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로 구성된다.
- **사무국**(Secretariat)은 원조청인 Norad가 맡아서 OfD의 집행과 조정 (Coordination)을 담당하는데, 2009년 현재 12명이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 **노르웨이 대사관**은 지역적 정보와 수원국, 산업체, 시민단체, 국제기구, 다른 공여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OfD 지원 신청서를 주로 받으며, 대사관 직원은 원조 신청서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 **주요 집행기관**은 (1) 석유개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지원해주며 25년 이상의 원조경험을 가진 노르웨이 석유이사회 NPD¹⁴³⁾ (2) 전략적 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

143) Administrative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는 노르웨이 공해관리공사(Norwegian Pollution Control Authority: SFT)¹⁴⁴⁾ (3) 생물학적 다양성, 자원 관리, 생명공학과 관련한 분야를 담당하는 자연 관리이사회(Directorate for Nature Management)¹⁴⁵⁾ 그리고 (4) 석유관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전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연수를 담당하는 정부 재단법인인 석유국 산하 국제협력 프로그램 Petrad와 (5) 해외석유사업과 관련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규제를 지원하는 석유 안전국(Petroleum Safety Authority)¹⁴⁶⁾으로 구성돼 있다.

D. 연구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국내외 기업 등 다양한 협력기관의 참여

이 밖에도 OfD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 **연구기관**: Econ Pöyry, the Bridge Group A/S, M4 International Petroleum Associates A/S 의 연구기관과 컨설턴트가 OfD 지원
- **국제기구**: 세계은행과 함께 “석유 거버넌스 계획(The Petroleum Governance Initiative)”이라는 석유 섹터의 거버넌스, 수입관리, 환경적 문제, 지역개발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20백만 Kroner(크로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화폐단위) 지원. 이 밖에도 IMF,¹⁴⁷⁾ UNDP,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등과 협력
- **시민단체**: 2008년 노르웨이 NGO들이 OfD 수원국 협력 단체들의 역량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24백만 Kroner 지원
- **노르웨이 및 국제 석유/서비스(Oil and Service) 기업**: 석유 회사들은 교육 및 직업훈련, 기술전수, 석유 섹터의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분야에서 도움을 주며,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지역개발 프로젝트 참여

OfD는 OfD가 정부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지, 노르웨이나 국제 석유회사들의 수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산업체와의 협력은 기업들의 역

144) Administrative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145) Administrative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46)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s advisory and executive body in the area of the biodiversity and nature management

147) 안전과 긴급상황 대비, 해외에서의 근로환경에 관해 규제하며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기관

할 및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석유 분야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E. 평가를 통한 성과 증명

2007년 노르웨이의 석유 관련 지원에 대한 평가는 덴마크 에너지 공사(Danish Energy Authority)에 의해서 모잠비크(Mozambique), 방글라데시(Bangladesh), 동티모르(Timor-Leste) 그리고 앙골라(Angola)를 케이스로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평가는 OfD가 행정관리적 역량강화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노르웨이의 석유 섹터 지식이 적절히 사용되었고, 특히 법 개정이나 규제의 틀과 같은 기술적인(Technical) 역량강화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노르웨이가 단순히 외부 평가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외국기관'을 통해 OfD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험전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F. 원조의 규모

OfD 지원 절대 액수와 노르웨이 ODA에서의 비중은 증가 추세로, 2007년 148백만, 2008년 205백만 크로네(Kroner)가 각각 지원되었고, 2009년 약 250 크로네가 지원될 예정이다.¹⁴⁸⁾ 2007년 OfD는 노르웨이 전체 양자 무상원조의 0.96%를, 2008년에는 1.22%를 차지했다.¹⁴⁹⁾ 순지출(Net) ODA에서는 2007년, 2008년 OfD 지원이 각각 0.68%와 0.91%를 차지했다.

G. 노르웨이의 국가적 프로필(PROFILE)

Norad 외교부 인사의¹⁵⁰⁾ 발표자료와 인터뷰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식민지 지배 경험이 없고, 평화 사랑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으며 인권 및 성 평등 분야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점도

148)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2008)

149) 2007년 경우 노르웨이 양자 무상원조액은 USD 2,624백만이었고 이중 OfD가 USD 25백만(148백만 Kroner, 환율 USD 1\$ = 5.8584 Kroner)임. 2008년 노르웨이의 양자 무상원조액은 USD 2,940백만이고, 이중 OfD가 USD 35백만(205백만 Kroner, 환율 USD 1 = 5.7073 Kroner)임. 환율은 경상가격(Current USD)이며, DAC Stats Exchange rates of national currencies per US dollar를 참고.

150) Hertzberg, Hege., Deputy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alysis Unit,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원조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르웨이는 취약국(Fragile State: FS)에서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인식과 지지, 견실한 시민사회,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공무원 등이 OfD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¹⁵¹⁾

H. OFD에 대한 비판

OfD는 처음에 에너지, 재정부, 그리고 환경부가 외부부와 Norad에게 요구하여 만들게 된 공급자 중심(Supply-driven)의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 모델을 수출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또한 산유국의 국가건설(State-building)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뿐 아니라,¹⁵²⁾ 평가에서 지적된 바 대로 산유 개도국의 행정적 역량강화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았다.

2) 일본(JAPAN): INFRASTRUCTURE-FDI 모델과 일본 개발경험의 적용 가능성¹⁵³⁾

일본은 연수와 전문가 파견 등의 원조형태를 가지고 있고, 경제 부문, 인프라 구축 및 농업에 대한 강조 그리고 자신의 개발모델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동질성을 찾을 수 있어 우리의 경험전수 프로그램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국가이다.

일본의 외무성은 경제발전을 빈곤감소보다 더 강조하면서 ODA 지원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촉진을 통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인프라) 개발을 일본 원조의 비교우위로 보고 있다. 인구당 일반건설 부문의 투자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나라로서, 일본은 경제하부구조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크며, 따라서 원조산업 중 인프라 지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다른 공여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¹⁵⁴⁾ 그러나 개도국에서 인프라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Hardware)나 엔지니어링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가회수(Cost recovery), 빈곤층을 고려한 사용자 부담금 제도(Pro-poor user charges) 등의 재정관리 문제와 이주나 환경적 영향 등의 사회적 요소를 프로

151) KOICA-Norad Workshop 자료(2009)

152) (Endberg-Pedersen, Paul., 2009), Norad 원조청장

153) (OECD, 2004)

154) 2001-2007년까지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Sector-allocable aid)를 보면, 일본은 경제하부구조(Economic Infrastructure)에 44.11%를 투자해서 DAC 평균 20.74% 보다 두 배 정도 많이 하고 있다. 이중 수송과 저장(Transport and Storage)을 보면 역시 DAC 평균 8.59% 보다 월등히 많은 24.34%를 투자하고 있다.

젝트에 통합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위험요소가 큰데, 예를 들어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유상으로 지원한 인도네시아의 코토판장(Kotapanjang)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이러한 위기를 DAC 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일본은 또한 개발협력을 무역 및 투자정책과 연결시키면서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FDI를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FDI 확장의 숨은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민간 부문이며(Private sector),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같은 정부기구는 일본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개도국의 공급자와 일본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박람회, 인적자원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외향적인 FDI가 개도국의 재정적 장애를 줄임으로써 고용을 늘리고, 기업간의 무역을 통해 일본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며, 기업들의 경쟁유발효과와 개도국의 기술파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독특한 원조는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DAC 빈곤감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제발전이 ‘중요’하지만 빈곤감소를 하는 데 ‘충분’치는 않으며,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성장의 질, 지속성 및 요소 그리고 분배문제도 경제개발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동료심사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모델과 지원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왔다고 주장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빈곤감소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일본이 중점을 두는 인프라 개발과 FDI를 통한 경제개발이 빈곤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정하기 위해 베트남(Vietnam)에서 사후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를 실시하였다. 베트남 하노이(Hanoi) 고속도로와 하이퐁(Hai Phong) 항구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종적·횡적 조사를 포함한 이 평가는 프로젝트 후에 FDI와 직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빈곤가구가 줄어들고 수입원이 다양화 되는 등의 빈곤감소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료심사는 일본 원조의 또 다른 과제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도시화와 관련해 당면한 공해, 교통혼잡, 슬럼화의 확장, 환경·보건적 문제들도 환경 및 수송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개발철학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개발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하고 성실히 채무를 갚아가면서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원칙에도 적용되어 유상증자와 FDI를 통한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패전 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전쟁 후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비중(Debt service ratio to export)은 4%를 넘지 않았던 반면, 일본의 중점 수혜국들 중 일부는 이 비중이 27%가 넘는다. 또한 일본은 자기 자본과 다른 국내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FDI에 의존적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은 변화무쌍한 국제금융시장환경하에서, FDI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DAC 동료심사는 일본이 전쟁 후 국가건설 경험을 적용하는 데는 수원국에 어떤 선결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뚜렷한 척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본조건이 바탕이 되어있지 않을 때는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유용한 교훈이 될 것이며, 일본의 FDI 모델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원조의 위험성과 대비되는 FDI에의 의존성이 갖는 위험은 무엇인지 다른 DAC 회원국들과 함께 분석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오스트리아(AUSTRIA)의 틈새시장 전략: 유기농 농업¹⁵⁵⁾

많은 공여국들이 난립하는 원조 편애국(Darling country)에서 어떻게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활용할 수 있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는 나라가 오스트리아(Austria)다.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는 에티오피아(Ethiopia)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중점 협력국이지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오스트리아는 국가 전체 원조액의 1%만을 지원받는 비중이 낮은 공여국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08년 실시한 조사¹⁵⁶⁾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거의 모든 공여국들이 농업과 식품안전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오스트리아도 양쪽 모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프로그램은 작은 규모 때문에 그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작은 공여국으로서의 딜레마(Dilemma)를 오스트리아는 유기농 농업의 틈새시장을

155) OECD(2009)

156) EC(2008a)

공략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다. EC(2008b)¹⁵⁷⁾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농업용지를 유기농 농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1996년 DAC의 동료심사도 이미 오스트리아가 이 분야에 비교우위와 전문성이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물론 유기농 사업은 수원국에 이를 발전시킬만한 인프라가 구비되었는지, 국내외 수요가 있는지, 수출형 작물 위주의 농업생산구조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고려 속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¹⁵⁸⁾ 그러나 환경 친화적인 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침식관리(Erosion Control), 완화(Mitigation), 생물학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서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이며, 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민간부문 개발이라는 타 중점 섹터와도 연관되는 전략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¹⁵⁹⁾

최근에 EC에 의해서 실시된 에티오피아 원조분업 현황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작은 공여국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섹터를 2-3개로 줄였다. 25개 공여국 중 5개 나라만이 섹터를 3개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섹터를 많게는 14개까지 커버하는 다른 공여국들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방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지역레벨에서 지방정부의 재무 및 보건부서와 협력하면서 틈새시장이 될 수 있는 소외지역을 찾아서 목표로 삼고,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가시성과 효과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예는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틈새시장 개발, 섹터 수 축소, 소외지역 타겟화(Targetization), 중점 분야끼리의 연관성 강화 등의 시사점을 준다.

4) 스페인(SPAIN): 문화와 개발 섹터로 질적 차별화¹⁶⁰⁾

우리나라처럼 개도국에서 원조국으로 변모한 스페인(Spain)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중점 섹터나 주제 발굴에 대한 교훈을 준다. 스페인의 특별 섹터는 “문화와 개발(Culture and Development)”이라는 범분야(Cross-cutting)이다.¹⁶¹⁾ 문화와 개발 섹터의 목적은 문화를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차원에서 개발의 한 요소 및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개발과 관련된 문화적 정책을 수립하여 상대국의 문화적 정체성 및 유산

157) EC(2008b)

158) 산업 에너지팀 검토의견(2010.1)

159) 오스트리아는 또한 농업연구를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160) (OECD, 2007c; OECD, 2007b)

161) 이 개발 섹터는 해외에서 스페인 문화를 진흥하는 것이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협력을 하는 것과는 예산 면에서 구분된다.

을 강화하고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토착민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 인권문제, 사회적 기회 박탈의 문제를 개발협력사업으로 다루고, 토착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경제·정치·문화적 발달을 이루는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스페인은 문화와 개발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UN이 “토착민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digenous People)”을 내는 데 공동 발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문화와 개발 부문에 스페인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와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이다. 예를 들어 DAC의 동료심사팀은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스페인이 그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데 비교우위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일해 온 스페인의 경험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 협력에 바탕이 되고 있다. 이 섹터가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인권, 성 평 등, 환경, 빈곤 등과 같은 스페인의 다른 중점 분야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5) 포르투갈(PORTUGAL): 언어적 비교우위와 제도적 유사성¹⁶²⁾

포르투갈(Portugal)은 우리처럼 원조규모나 GNI 대비 원조비율이 작은 나라¹⁶³⁾지만 원조의 지역적 집중도는 매우 높다.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아프리카국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유사한 법적·제도적 틀을 가진 과거 식민지여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⁴⁾ 다섯 개의 사하라(Sahara Desert) 이남 아프리카 국에 가는 원조액은 2004년 94%로 DAC 평균 34%와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2006년 DAC 동료심사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언어적 비교우위와 수원국과의 제도적 유사성을 살려서 특화된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동티모르의 포르투갈어 교육지원을 들 수 있다. 포르투갈의 가장 집중적 수원국인 동티모르 정부는 인도네시아 언어인 바하사(Bahasa)를 대체하기 위해 포르투갈어를 도입하면서 포르투갈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포르투갈어는 동티모르의 공공 부문에서 500년 이상 쓰여왔으며 동티모르의 기본적인 법률 및 체제는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는 배경이 되었다.

162) OECD(2006)

163) 포르투갈은 2007년 ODA가 총 4.7억 달러, GNI 대비 0.22%이다. DAC 2007년 평균이 ODA 47억 달러, GNI 대비 0.45%여서 낮은 편에 속한다.

164) Bucar et al.(2007)

포르투갈은 전 교육 과정을 포르투갈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고 공무원, 저널리스트, 법조인, 국제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 등에 대한 언어교육도 제공한다. 2005년에 135명의 포르투갈어 교사와 100명의 교수들이 훈련을 받았고, 175명의 포르투갈어 교육 담당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어 교재에 대한 공급과 포르투갈 유학 장학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학습 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를 통한 공무원 원격교육, 문화센터 및 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특정국의 법적·제도적 모델이나 청사진을 촉진시키는 양자원조 프로그램이 갖는 민감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UNDP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한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DAC 동료심사는 포르투갈 언어교육은 전격적으로 공여국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두뇌유출(Brain drain)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포르투갈에 유학시키기 보다는 교사들을 포르투갈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초등학교 성취 정도 조사(Primary School Achievement Survey)」(2004)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학교 건물, 교과서, 수업시간, 교사의 준비 부족, 인도네시아어를 모국어로 자란 학생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 학생과 교사의 결석문제 등의 고충이 있으므로, 포르투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포르투갈의 원조분업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다룬 Bucar¹⁶⁵⁾는 또한 포르투갈의 과거 경험은 비교우위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비교우위라는 것은 최근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6) 룩셈부르크(LUXEMBOURG)¹⁶⁶⁾: 자국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를 이용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수입창출활동과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에 비교우위가 있는 룩셈부르크(Luxembourg)는 비교우위가 국가 주요 기업 및 산업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룩셈부르크에는 10개의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투자 기구 21개는 총 미화 1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산을 다룬다. 또한 소액금융은 룩셈부르크의 중점 분야인 농촌개발과 직업훈련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룩셈부르크는 (1) 소액금융기관이나 룩셈부르크 NGO가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며 (2) 국제금융 섹터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165) Bucar Maja et al.(2007)

166) OECD(2008)

지원하고 (3) EU나 UN 등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보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인(Inclusive) 금융 섹터를 만들기 위한 로비(Lobby)를 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대한 동료심사는 그러나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관련된 룩셈부르크의 정책참여나 활동에 대한 증거가 제한되어 있고, 프로젝트 발굴 과정에서의 관심도 크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7) 영국(UK)¹⁶⁷⁾: 개발협력 조율 능력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중점 섹터인 “국제기구 개혁(International institutional reform)”은 영국은 EU와 같은 다자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이 국제기구와 조율하여 정책적 지침을 만드는 사례로 नेपाल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2006년 DAC 동료심사에 의하면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들과의 협조 하에 नेपाल에서의 원조가 분란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를 충족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본 운영지침(Basic operation guidelines)”을 만들었다. 이러한 영국의 양 다자 원조 시스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원조 기관들 사이에서 하나의 양자 개발 모델로 일컬어 지면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재정지원과 같은 DFID의 전략을 지지하지 않거나 원조 효과성 아젠다가 정치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들의 해외 사무소 활동이 타 공여국과 조율이 부족한 국가로 꼬리표(label)가 달리는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DFID는 전략은 좋는데 전술은 부족하다고 (“Long on strategy, short on tactics”) 인식되며, 모든 공여국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8) EC: 재정지원이라는 원조방식 및 다국경 사업에 대한 비교우위¹⁶⁸⁾

EC는 원조규모가 갖는 비교우위를 보여준다. 다자기구로서 EC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수원국과의 협상에서 갖는 잠재적인 파급력 때문에 재정지원 및 정책적인 대화라는 원조형식(Modality)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EC는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이에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C는 다국을 포함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의 특성상 여러 나라에 걸친 인프라 건설 및 무

167) OECD(2006b), (OECD, 200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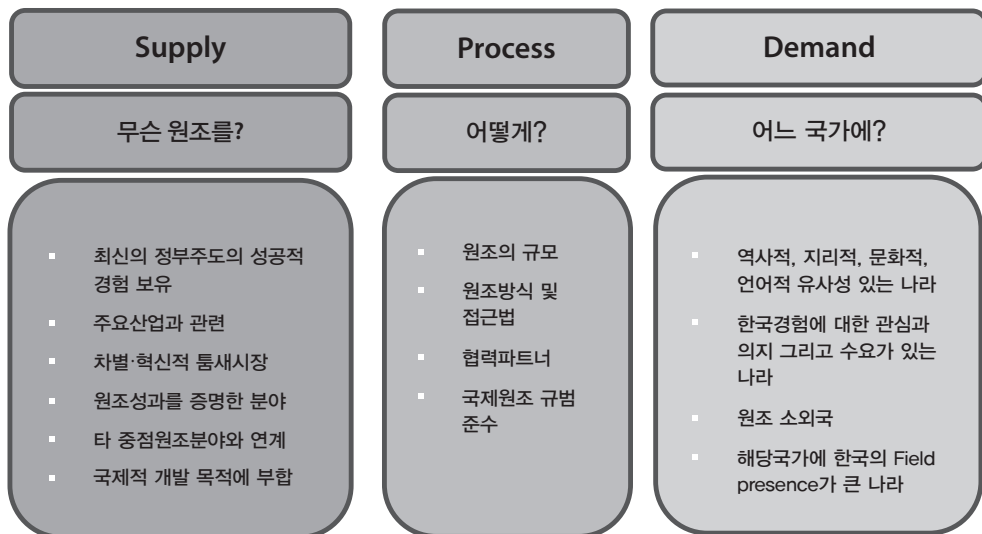
168) (OECD, 2007a)

역에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EU-아프리카 파트너십(EU-Africa Partnership)은 수송, 식수와 위생, 에너지, IT의 인프라를 향상시켜 대륙간·지역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약 5.6억 유로(Euro)가 EU-아프리카 사회기반시설(EU-Africa Infrastructure)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3. 특화된 개발원조를 위한 요소

이와 같은 원조분업의 개념과 선진국이 비교우위와 틈새시장을 살린 원조 사례는 한국이 특화된 개발협력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세 가지 요소란 (1) **공급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급해야 하는가’ (2) **수요적 측면**에서 ‘특히 어떤 나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할 수 있는가’ (3) **과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원조규모와 방식으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해야 하는가’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림 5]는 이 세 가지 요소와 그에 속한 각각의 세부 요소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그림 5] 특화된 개발 원조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여기에서는 특화된 원조를 위한 세부 요소가 앞에서 논의된 국제원조분업의 원칙 및 선진국의 특화 협력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국형 프로그램의 개념형성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다루겠다.

1) 공급적 측면: 무슨 원조를?

공급적 측면에서 어떤 분야의 원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1) 정부정책을 통해 최근의 성공적 개발경험이 있고 다른 나라에 적용 가능한 분야 (2) 국가의 주요 산업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산업적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 (3) 타 공여국과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틈새시장 분야 (4) 평가를 바탕으로 원조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분야 (5)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개발목적과 원조규범에 부합되는 분야 (6) 타 중점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최근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이끈 제도와 타국에의 적용성

노르웨이가 OfD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개발 및 관리제도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를 둘러싼 사회폭동과 갈등이 잦으며 불평등 정도가 심한 타 산유국과 달리,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수입을 공공복지로 환원하고 상당부분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르투갈의 사례연구에 언급된 바처럼, 과거의 경험은 기본이 되나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최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개발모델을 다른 개도국의 원조에 적용하고자 하는 일본도, 일본이 가진 경험이 최신의 것이 아니기에 현재 개도국과 일본의 개발 당시와의 환경적 차이로 인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자국 경험의 타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어디에서나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으나 경험이 최근의 것일수록 ‘시대적 차이’로 인한 관련성(Relevancy)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국의 성공적 제도로 우리는 개발연대의 경험을 주로 인용하게 되나, 비교적 최근의 개발경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사한다.

B. 주요산업과 관련이 있고 기술력을 보유

금융 섹터가 GDP의 28%를 차지하는¹⁶⁹⁾ 룩셈부르크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원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처럼 한 국가의 주요 산업과 기술력은 비교우위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 제품, 통신, 조선, 철강 등의 산업과 비교적 잘 발달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사업¹⁷⁰⁾을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C. 타 공여국과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틈새시장 분야

비교우위의 개념에는 독보적인 분야나 틈새시장이 포함되는데, 그 예가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함께 부각이 되는 오스트리아의 유기농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페인이 문화를 개발의 요소로 다루는 것도 차별화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원조 공여국이 활동을 하지 않는 소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역적 틈새시장면에서, 스페인이 토착민과 같이 주류에서 소외된 계층을 다루는 것은 원조대상 그룹면에서의 차별화이다. 다른 공여국에서 적게 지원하는 분야는 국제적 개발목표와 실제 개발 달성치의 차이가 큰 부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크다 하겠다.

D. 성과의 증명

단순히 과거에 원조사업을 해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문서화된 증거가 특화된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동료심사에서는 스웨덴이 모잠비크에서 원조분업시 비교우위로 주장하는 분야가 단순히 그 섹터에서 과거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부터 왔음을 지적하였다.¹⁷¹⁾ 노르웨이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전문적인 외부, 더 나아가 외국기관의 평가, 혹은 비용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종적·횡적 조사 및 실험적 연구(Empirical study)가 동반된다면 자국의 독특한 원조모델이 효과적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뿐만 아니라, 이 평가에서 얻어진 결론을 원조정책이나 실제 원조의 실행(Practice)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69) Direct budget support

170) (World Economic Forum, 2009)

171) (OECD, 2000d)

E. 국제적 개발협력의 목적과 규범에 부합

특화 프로그램의 공급 면에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점은 MDG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협력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적 원조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FDI와 무역 촉진 프로그램은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이익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일본이 국익과 수출에 더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포르투갈이 동티모르에서 포르투갈어로 된 법제를 만들 때 비록 동티모르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원조라 할지라도, 특정국의 법적·제도적 모델 그리고 청사진을 촉진시키는 원조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공여국의 정치적·외교적·상업적 이익 혹은 자원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거나 DAC ODA 통계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지원들, 또한 개발원조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없는 지원은 특화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제외가 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이나 태권도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공여국이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은 필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수원국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인지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할 것이다.

F. 중점 분야간 연결성

오스트리아나 룩셈부르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특화된 분야는 다른 원조 중점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기농 농업을 지역개발이나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섹터와 연계시켜서 한다. 룩셈부르크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이 나라의 다른 중점 분야인 “직업전문교육(Vocational and Professional Training)”이나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보면 확연히 다른 원조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중점 분야로 정립하고, 각 중점 분야끼리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협력단은 현재 경제, 사회, 생산, 다부문이라는 4개의 상위 섹터 사업 모두를 중점 분야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 사업 간의 연계성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G. 국가적 이미지와 PROFILE

비교우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노르웨이가 가진 평화사랑의 이미지는 노르웨이가 취약국들을 중점 협력국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혁신적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와 관련된 원조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혁신 부분에서 132개국 중 11위를 했을 정도로 세계의 “혁신 강국(World’s innovation powerhouse)”이라고 하였으며, 국가 브랜드 지표(Nation Brand Index)를 발전시킨 Simon Anholt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빨리 적응하고 기술 및 제조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⁷²⁾

2) 과정적 측면: 어떻게?

원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1) 원조의 규모 (2) 원조방식 (3) 다양한 개발 주체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참여이다.

A. 원조의 규모

오스트리아의 동료심사는 오스트리아가 작은 공여국이기 때문에 규모가 효과를 낼 수 있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Critical mass)에 도달해야 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섹터 수를 줄이고 다른 공여국과 함께 일하거나 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반면 EC가 수원국과의 협상력이 큰 것은 원조의 규모(Volume)가 크기 때문이라고 동료심사는 언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OfD도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아무리 원조의 질이 높아도 특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조의 규모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적은 인원이 운용하는 현 체제에서 선정된 특화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지원해야만 단순한 산출물(Output)이 아니라 성과(Outcome)나 파급력(Impact) 차원에서의 지원 결과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원조의 분절화 역시 한 수원국에 소규모의 수원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가능 원조(Country Programmable Aid: CPA)를¹⁷³⁾ 제공하는 다수의 공여국이 있을 때 심각해진다¹⁷⁴⁾는 측면에서도 역시 개별 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전체 사업 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2) (Anholt, Simon., 2003)

173) 수원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원조(파트너국이 자신의 개발 우선순위에 맞추어 자유로이 배정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원조) = 전체 ODA - {예측 불가능한 지원(긴급 구호) + 국가간 흐름이 없는 자금(행정자금, 대학입학허가비용, 개발인식증진, 연구, 공여국 내 피난민) + 정부간 협의를 체결하지 않는 지원(식량지원이나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 + NGO 지원 + 수원국 차원에서 프로그래밍되지 않는 지원(민관협력 PPP)}

174) (OECD, 2009a)

B. 원조방식

영국은 정책 자문에, 덴마크와¹⁷⁵⁾ EU는 직접재정지원(Direct budget support)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원조의 전달방식을 어떻게 혼합(Mix)할 것인가도 비교우위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택해야 하는 원조방식에 대해서는 제 2장 섹션4, “특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C. 협력 파트너

ODA가 정부 대 정부의 지원이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데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파트너가 필수적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정부 외에도 시민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OfD에 참여한다. 또한 노르웨이와 포르투갈 모두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간접지원하며, 다자 기구와의 협조에서 뛰어난 영국은 국제기구 개혁이라는 것을 중점 분야로까지 삼고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이 특화하고자 하는 분야에 양자사업으로는 하기 힘든 민감한 사업이나 대규모 혹은 다국적 자료가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수요적 측면: 어느 국가에?

수요적 측면에서는 (1) 역사적 · 지리적 · 문화적 · 언어적 유사성이 있고 (2) 공여국의 경험에 대한 관심, 의지, 수요가 있는 나라 (3) 원조 소외국이면서 소득이 낮은 나라 (4) 공여국의 해외 사무소, 대사관, NGO, 기업, 연구기관 등이 수원국에 진출해 수원국에서의 현장활동이 활발한 나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 공여국과 수원국의 유사성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포르투갈이나 프랑스가 자국의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자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과 언어 · 제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크게 문화 및 지역적 관점과 개발조건 측면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75) (OECD, 2007d)

먼저 문화 혹은 종교의 유사성, 같은 인종 그룹 등 사회 인구학 · 문화적 요인은 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달, 이식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Cambodia)와 같은 한자 문화권 및 유교문화 등을 공유한 국가나 몽골(Mongol)처럼 인종적으로 비슷한 국가에 유리할 것이다. 이는 일본식 색채가 강한 태국, 인도의 색채가 강한 캄보디아 보다는 한자 문화권에 있고 유교전통, 분단의 경험, 중국의 변방이라는 배경 등 공통적인 속성이 많은 베트남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수요도 높고 우리 경험의 공유와 관련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일례로 베트남의 하노이 및 하이퐁 신도시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Master plan) 사업 당시 강남, 일산, 분당 등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의 도시개발 경험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이 성공사례를 보여준다 해도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는 주거공간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식의 고층 아파트를 짓기는 힘들 것이다.¹⁷⁶⁾ 한국이 남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갖는 경쟁력과 비교우위는 세계은행 조달시장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이 2003-2007년 세계은행 조달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의 82%는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이며, 같은 기간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주는 전무하고 중남미에서도 미미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¹⁷⁷⁾

그러나 지역 · 문화적 유사성만 고려하다 보면 동남아시아권에만 원조가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대륙에서는 한국과 개발 초기 조건 측면에서 유사한 나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인구의 크기, 자원유무, 내륙 혹은 해안국의 지리적 여건, 내전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 경제적 혼란 등으로 우리의 개발 초기와 비슷한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¹⁷⁸⁾

또한 우리의 경우, 한국어를 쓰는 협력국이 없고, 비영어권인 경우 언어적인 제약이 더 심해지는 부분은 언어에서 오는 비교열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어와 불어사용 국가의 경우 전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Costa Rica) 우에파르-노르테 직업훈련원 지원사업(2007년 12월) 당시 스페인어가 공용어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모로코 자동차 정비 지원 당시 프랑스어 사용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후 평가에서 지적되었다. 이는 특히 컨설팅(Consulting)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사업을 할 때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과 같은 비영어권 국가들은 개발은

176) Urban research asian cities, asian architecture 01_hanoi, “아시아의 도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담

177) (이계우, 2009)

178) (박복영, 채욱, 2007)

행 수주에서 컨설팅 부문의 조달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¹⁷⁹⁾ 언어적 비교열위가 드러난다.

B. 수원국의 의지와 관심 및 수요

원조분업의 원칙에 따르면 공여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섹터를 할당해 주는 것은 수원국 주도로 하게 되어있다. 노르웨이도 OfD를 수원국의 요청에 한해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원국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요청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수원국의 수요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장의 수요만큼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가격을 직접 지불하는 소비자는 특정 상품이 꼭 필요하고 가격 대비 구매가치가 있을 때만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수원국은 원조 패키지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행정비용과 같은 비교적 낮은 가격만 지불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조가 아닐지라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¹⁸⁰⁾ 또한 일본의 동료심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요청에 입각하여 지원한다고 해도, 수원국의 기술과 역량 및 파워에 있어서 선진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요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여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수원국은 국가적 개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인적·물적·자원·데이터 부족 등을 겪고, 또한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자원이 흐르는 수직적인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요를 발굴하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현지 대사관이나 사무소의 정치적인 입김 혹은 담당자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으로부터의 수요 조사는 특정 공여국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관심과 그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쌓아온 성과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수요와 함께 정부와 정부 지도층이 경험을 배워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나라도 지식과 기술 이전에 효과적인 국가라 볼 수 있다. 과거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수원자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적으로 원조사업을 계획, 시행하여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항종합제철(POSCO)이나 경부고속도로는 당

179)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180) Action Aid는 수원국이 기술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기술협력을 원해서라기 보다 실상 이와 패키지로 지원되는 다른 지원, 예를 들어 기자재 공여 등을 받기 위한 것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Actionaid International, 2005).

시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등 국제개발기관들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공을 거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⁸¹⁾ 현재 개도국 중에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나라로는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베트남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세계은행의 빈곤감소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성장지향의 의미를 추가하여,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을 작성한 것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공여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공여국의 정책 제언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매우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¹⁸²⁾

C. 원조 소외국

국가간 원조분업에서 논의되었듯 특정 수원국 내에 얼마나 많은 공여국이 존재하며 각 공여국 중 얼마만큼의 주요 공여국이 있는지, 그 수원국의 총 원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분야와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원조 소외국은 공여국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교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적거나, 원조성고가 낮거나 혹은 정부의 부패가 심하거나 원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외된 국가들을 타겟팅(Targeting)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DAC 개발협력 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2009)에 의하면 공여국이 최대 30개인 중국과 모잠비크가 있는가 하면, 원조 공여국이 10개 이하인 나라도 38개나 되며 이들은 주로 작은 도서 국가들이다.

KOICA의 협력 대상국 37개 중 27개, 즉 73%의 국가가 공여국이 20개 이상이어서 KOICA는 대체로 타 공여국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력단 중점 협력 대상국의 평균 공여국 수는 25개로, 중점 지원국 중 공여국 수가 1-8개인 절대적인 원조 소외국은 없다.

그러나 KOICA의 협력 대상국 중 상대적 원조 소외국을 고려한다면 [표 1]을 참고할 수 있다. “공여국 수” 및 “주 공여국” 컬럼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원조 소외국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국가들이며 이 국가들은 파트너 컬럼(Partner column)에 **가로무늬**

181) (이경구, 2004)

182) (권혁주, Hemmingson, Anna., 이영미, 2005)

및 **눈금무늬**로 표시되어 있다. **가로줄**은 공여국 및 중점 공여국 수가 비교적 적은 ‘중점 협력국’을, **눈금**은 공여국 및 중점 공여국 수가 비교적 적은 ‘일반 협력국’을 표시하였다.

이 표의 “공여국 수(Number of Donors)” 컬럼에서 공여국 수 20개 이하인 수원국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일반 지원국¹⁸³⁾ 중에서는 피지(Fiji)와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정도가 공여수가 8개로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더 넓게 본다면 공여국 수가 14개 이하의¹⁸⁴⁾ 자메이카(Jamaica),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이란(Iran)을 포함시켜 이 국가들의 KOICA의 협력 대상국 중 절대적 공여국 수가 적다는 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 공여국(Number of Main Donors)” 컬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컬럼은 CPA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공여국인 동시에, 해당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그 공여국의 국제 CPA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함으로써 공여국에게도 그 수원국이 중점지원국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공여국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것이 5개 이하인 수원국을 **연한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이라크(1)와 요르단(2)이 해당되며 투르크메니스탄(3), 파키스탄(3), 필리핀(3) 등도 주요 공여국이 적은 나라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원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원조 지원금을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이라크(Iraq)나 인도네시아, 필리핀(Philippines) 등은 도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너가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진한 음영**은 공여국 수와 주요 공여국 수가 모두 적은 나라 중 일반 협력국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파트너 컬럼의 **빛금**은 최빈국 혹은 저소득국이자 취약국 혹은 고채무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HIPC)으로, 다방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 가운데 공여국이나 주 공여국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을 나타낸다. 이 중 나이지리아(Nigeria)는 공여국 수가 23개이고 2003-2004년 채무탕감으로 인해 ODA 지원이 높지만 여전히 수요가 큰 국가이고,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는 세 양자 공여국이 ODA의 65%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여국 수가 적다 할 수 있다.¹⁸⁵⁾ 이와 함께 최빈국인 예멘(Yemen)도 2007년 취약국 리스트에는 빠졌으나 취약국의 경계에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⁶⁾

183) 일반 협력 대상국은 평균 공여국 수가 22개로 중점 협력 대상국보다는 평균 공여국 수가 적다.

18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2009)는 공여국 수를 1-4, 5-9, 10-14, 15-23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국제협력단의 협력 대상국 중에서는 14개 이하를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5) (OECD, 2007b)

186) (OECD, 2007b)

[표 1] KOICA의 중점 및 일반 지원국의 공여국 수와 CPA

Regions	Partners	General vs. Primary	Number of Donors	Number of Main donors*	CPA (USD million)	Average CPA per Donor (USD million)	Income	Fragile State	HIPC
S. & C. Asia	Fiji	General	8	5	60	7	UMIC		
S. & C. Asia	Turkmenistan	General	8	3	12	2	LMIC		
N. & C. America	Jamaica	General	13	5	94	7	UMIC		
S. & C. Asia	Papua New Guinea	General	13	2	301	23	LIC	FS	
Middle East	Iran	General	14	9	37	3	LMIC		
North of Sahara	Algeria	General	15	4	218	15	LMIC		
S. & C. Asia	Uzbekistan	Primary	15	5	143	10	LIC	FS	
S. & C. Asia	Morocco	General	16	5	491	31	LMIC		
N. & C. America	Paraguay	Primary	17	4	110	6	LMIC		
S. & C. Asia	Azerbaijan	General	18	5	163	9	LMIC		
S. & C. Asia	Kazakhstan	Primary	18	4	131	7	UMIC		
Far East Asia	Myanmar (Burma)	General	19	10	95	5	LDC	FS	HIPC
North of Sahara	Yemen	General	19	5	299	16	LDC	FS*	HIPC
North of Sahara	Cote d'Ivoire	General	20	7	139	7	LIC	FS	HIPC
S. & C. Asia	Kyrgyz Rep.	General	20	5	203	10	LIC		
North of Sahara	Madagascar	General	20	6	594	30	LDC		HIPC
Europe	Ukraine	General	20	5	350	17	LMIC		
N. & C. America	Dominican Republic	General	21	5	142	7	LMIC		
Far East Asia	Timor-Leste	General	21	6	175	8	LDC	FS	
North of Sahara	Zimbabwe	General	21	11	158	8	LIC	FS	
North of Sahara	Jordan	General	22	2	500	23	LMIC		
South America	Ecuador	General	23	7	245	11	LMIC		
North of Sahara	Nigeria	Primary	23	5	899	39	LIC	FS	HIPC
North of Sahara	Congo, Dem. Rep.	General	24	5	458	19	LDC	FS	HIPC
North of Sahara	Ghana	General	24	7	1030	43	LIC		HIPC
N. & C. America	Guatemala	Primary	24	10	232	10	LMIC		
Far East Asia	Mongolia	Primary	24	6	169	7	LMIC		

Middle East	Palestinian Admin. Areas	General	24	9	636	27	LMIC		
North of Sahara	Tunisia	General	24	5	780	32	LMIC		
North of Sahara	Angola	General	25	10	257	10	LDC	FS	HIPC
North of Sahara	Cameroon	General	25	7	118	5	LMIC		HIPC
N. & C. America	Colombia	General	25	4	699	28	LMIC		
N. & C. America	El Salvador	General	25	9	173	7	LMIC		
N. & C. America	Honduras	General	25	6	410	16	LMIC		HIPC
Middle East	Iraq	Primary	25	1	5956	238	LMIC		
Far East Asia	Laos	Primary	25	11	310	12	LDC	FS	HIPC
North of Sahara	Zambia	General	25	9	801	32	LDC		HIPC
N. & C. America	Bolivia	General	26	8	586	23	LMIC		HIPC
North of Sahara	Egypt	Primary	26	4	1159	45	LMIC		
North of Sahara	Ethiopia	Primary	26	9	1244	48	LDC		HIPC
S. & C. Asia	Nepal	General	26	8	467	18	LDC		
N. & C. America	Peru	Primary	26	8	532	20	LMIC		
North of Sahara	Senegal	Primary	26	8	604	23	LDC		HIPC
Far East Asia	Cambodia	Primary	27	9	494	18	LDC		
Far East Asia	Indonesia	Primary	27	5	2002	74	LMIC		
Middle East	Pakistan	General	27	3	1690	63	LIC		
Far East Asia	Philippines	Primary	27	3	1107	41	LMIC		
S. & C. Asia	Sudan	General	27	11	549	20	LDC	FS	HIPC
Far East Asia	Bangladesh	Primary	28	6	1437	51	LDC		
North of Sahara	Kenya	General	28	9	712	25	LIC		HIPC
N. & C. America	Nicaragua	General	28	9	589	21	LMIC		HIPC
Far East Asia	Sri Lanka	Primary	28	8	866	31	LMIC		
North of Sahara	Tanzania	Primary	28	9	1603	57	LDC		HIPC
S. & C. Asia	Afghanistan	General	29	5	2408	83	LDC	FS	
Far East Asia	Vietnam	Primary	29	9	1997	69	LIC		HIPC
Far East Asia	China	General	30	5	2417	81	LMIC		

<Data Source: OECD Journal on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9", * Number of main donors 행에서 Main donor의 정의: 해당 수원국의 Country Programmable Aid(CPA)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공여국인 동시에, 해당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그 공여국의 국제 CPA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함으로써 공여국에게도 그 수원국이 중점 지원국이 되는 경우>

원조 소외국 측면에서 [표 2]는 [표 1]을 바탕으로 KOICA의 중점 및 일반 협력 대상국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표시하였다. 이는 공여국 수, 주 공여국 수, 수요가 큰 취약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소득별로 나타낸 것이며,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공여국 수 15개 이하를 나타낸다.

[표 2] KOICA의 중점 및 일반 협력 대상국 중 상대적 원조 소외국

그룹	중점 지원국	일반 지원국
LDC	-	Yemen**
LIC	Nigeria**, Uzbekistan	Papua New Guinea, Kyrgyzstan, Cote d'Ivoire**
LMIC	Paraguay, Iraq*, Philippines*	Turkmenistan, Morocco, Azerbaijan, Algeria, Ukraine
UMIC	Kazakhstan	Jamaica, Fiji

<Data Source: [표 1]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 공여국 수가 3개 이하인 나라 중 중점 협력 대상국 ** Need에 비해 원조가 적은 취약국>

D. 공여국 개발주체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

공여국 대사관 및 원조기관의 해외사무소의 규모와 인력이 되고, 공여국의 지역사회조직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 기업, 연구 학술기관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원국과 개발협력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라든지 수원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개발 이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특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원조방법

여기에서는 한국형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원조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어떤 원조방식 및 접근법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한국이 전통적인 서구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중간에 위치한 공여국으로서의 전략적 위치 선정(Positioning)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물론 각 그룹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진 서로 다른 공여국이 존재하고¹⁸⁷⁾ 양자 공여국 외에도 글로벌 펀드(Global funds)나 다자기구, 민간재단 등 역할이 점점 커져가는 개발주체들의 전략과도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양자 공여국 그룹만 다루었다.

1) 전통 공여국의 원조방식

서구권의 전통 DAC 공여국은 빈곤극복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 평화구축 등을 목표로 하여 사회 섹터인 거버넌스와 부패퇴치를 강조하고 정책자문을 중시한다. 또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PD/AAA)에 따라 프로그램형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 PBA),¹⁸⁸⁾ 섹터별 접근법(Sector-Wide Approach: SWAp)¹⁸⁹⁾의 접근방식을 사용하며 예산지원과 공

187) 예를 들어 일본은 경제 분야나 인프라 구축의 강조,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전통 공여국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며 오히려 신흥 공여국 특징을 상당히 공유한다. 신흥 공여국은 아직 어떤 공여국이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표 4]에서 보듯 그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원조방식과 규모를 보인다.

188) 프로그램 원조는 프로젝트 원조가 공여국 참가 및 통제가 높은 것에 비교,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Program-Based Approach에서의 프로그램은 공여국의 비슷한 단위 프로젝트를 모은 집합체로서의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원국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PBA는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공여국들의 원조흐름을 분류하는 접근법(Approach) 혹은 프로세스(Process)’로 해석되어야 한다. 공여국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술협력, 예산지원 등은 PBA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양식(Modality)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공여국 당 지원양식은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패키지적인 의미에서의 “프로그램” 형태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O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OECD, 2006d)에 따르면 PBA는 다음과 같은 특징 공유 (1) 수원국 또는 현지기관의 리더십 (2) 하나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을 (3) 공여국의 보고, 예산책정, 재정관리 및 조달을 위한 공식적인 공여국 조정 및 조화 절차 (4)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재정관리 그리고 감독 및 평가를 위해 현지체제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자세한 사항은 이현주(2010),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Forthcoming) 참고.

189) SWAp이란, PBA가 특정 섹터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위개념으로서 SWAp은 PBA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특징을 모두 내포한다. PBA가 범 국가적인 포괄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면 SWAp은 교육, 보건 등 섹터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SWAp은 이들 특정 분야에 관한 개발전략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원국 국내에서 SWAp이 다루는 섹터들은 빈곤감소 전략(PRS)나 국가개발전략(NDS)에서 우선과제로 지적된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DAC가 정리한 SWAp의 구성요소는 1) 수원국 주도의 명확한 섹터정책과 전략 2) 섹터전략을 반영한 중기지출안(MTEF) 3) 섹터를 지원하는 자원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합의 4)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5) 모든 주요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광범위한 협의 메커니즘 6) 섹터레벨에서 원조조정과 대화를 위해 형식화된, 수원국 주도의 프로세스 7) 보고, 예산기획, 재정관리 및 조달에 관해 조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의된 프로세스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현주(2010),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Forthcoming) 참고.

동지원의 원조양식을 사용한다. 이 국가들은 PD/AAA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규범이나 관행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지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려 한다. 예를 들어 2007년 DAC 회원국 47%가 SWAp을 실시하고 있고,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84.6%에 다다른다.¹⁹⁰⁾ DAC 공여국들은 여전히 많은 수의 병행 프로젝트 집행 단위(Parallel Implementation Unit, PIU)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2007년 평균 지원의 반 정도가 공공재정 관리시스템과 공공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여국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결된 기술협력 비율도 60%에 이른다.¹⁹¹⁾ 이들 전통적 DAC 공여국은 연평균 USD 4.7억 달러, GNI 대비 0.45%의 ODA를 제공, 국제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원조 제공자이다. 이들은 DAC과 같은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개발원조 분야의 어젠다(Agenda)를 만들어가며 모범관행을 공유하고 연구와 실증에 근거한(Evidence-based) 원조수행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 선진 공여국은 분야 면에서 경제 및 농업 분야 비중이 타 섹터와 비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Chart 1 참고: 상위 섹터 차원에서 공여국 지원 추세]. 원조형식 면에서 선진국의 기술협력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을 들이며, 그 비용이 자국의 고비용 기술이나 컨설턴트(Consultant) 등에게 대부분 할당되거나 지나치게 높은 행정비용으로 쓰인다는 단점이 있다.¹⁹²⁾ 「Action Aid」(2005)에서는 선진 공여국에서 연간 지원되는 약 20억 달러가 비효과적인 서구 컨설턴트, 연구 및 훈련비용으로 사용되고 공여국들의 행정비용은 자신들이 NGO 지원시 행정비용으로 허용하는 최고 한계를 70백만 달러나 넘는다고 밝혔다.¹⁹³⁾ 또한 2002-2007년 전체 DAC 공여국의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CRS Code)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 및 생식보건 분야 교육, 보건의료 전문인력양성, 교사훈련, 재무부문교육 등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은 양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전통 공여국들은 개도국 입장에서의 이해가 부족하고 처방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¹⁹⁴⁾ 그리고 식민지배의 빛이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190) (OECD, 2008b)

191) (OECD, 2008b)

192) (Actionaid International, 2005)

193) 캄보디아의 경우 어드바이저(Advisor) 고용의 비용은 1달에 17,000 달러인데, 보통 정부관료가 받는 한 달 40 달러에 비해 수백 배 높은 가격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공여국 컨설턴트에게 지불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4) (OECD, 2009a)

2) 신흥 공여국의 원조방식

반면 중국, 인도(India)등 수원국이면서 동시에 공여국인 비서구 공여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북측 공여국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원조행태를 보인다.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는 수직적이기 보다 미래의 협력관계로 인식되며,¹⁹⁵⁾ 원조(Aid)나 자선(Charity)보다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¹⁹⁶⁾ 그리고 ODA, FDI 혹은 양허성 유상원조간의 개입방법에 대한 구분 없이¹⁹⁷⁾ 이들은 자국의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을 중시하는데,¹⁹⁸⁾ 특히 중국의 경우 일관된 무역과 원조와 투자를 위해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원조를 담당하고 있다.¹⁹⁹⁾

분야 면에서는 농업을 중시하는데, 앞으로는 공중보건, 교육, 인적자원개발, 청정에너지, 환경보호 쪽으로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²⁰⁰⁾ 원조양식 면에서 중국은 도로, 철도,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의 공격적 투자, 기술전수, 인적교류(People-to people) 협력을 중시한다. 또한 ‘상호호혜’와 ‘내정 불간섭’ 그리고 ‘평등’의 원칙으로 자율적 통치를 인정하며 빠르고 대응력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많은 아프리카의 호응을 받고 있다. 대략 GNI 대비 0.1%를 원조에 쓰고 연간 4조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남남협력 현황은 현재까지 160개국에 2,200건의 프로젝트와 165건의 식량지원, 110,000명의 연수생, 600,000명의 전문가 파견, 21,000명의 의료전문가 파견에 이른다.²⁰¹⁾

또한 브라질(Brazil)은 파트너 공여국의 재정지원으로 백신, 학교 급식, 산림녹화, 말라리아 퇴치 등의 남남협력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²⁰²⁾ 상하이 컨퍼런스(Shanghai Conference)에서는 개도국들이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차원에서 남남협력을 선호하므로²⁰³⁾ 중국, 인도(India), 브라질, 남아프리카(South Africa) 등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논의되었다. 남측 공여국은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개

195) (OECD, 2009a)

196) (Workshop Steering Committee of the 2nd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09)

197) (OECD, 2009a)

198) (OECD, 2009e)

199) (Feng, Lu., 2009)

200) KOICA 중국 사무소(2010). 제4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결과

201) (Feng, Lu., 2009)

202) (OECD, 2009e)

203) (OECD, 2006c)

발전력 일치를 중요시하고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통해 결과관리(Managing for results)를 달성하고자 하며, 수원국들은 이러한 남남협력의 원조방식에 호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²⁰⁴⁾ 그 밖에 인도의 경우는 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고등교육기관을 가지고 있고, 과학 분야의 인재가 풍부한 것을 활용하여 지식공유 및 기술협력 등의 역량강화 사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²⁰⁵⁾ 또한 원조 효과성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흥 공여국이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은 서로의 “문서 시스템(Documentation system)”을 통해 공여기간 정기적 조화를 하고자 하고, 쿠웨이트(Kuwait)는 75%의 원조금이 수원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 중국과 베네수엘라(Venezuela)는 다년간 지원을 실시하고 인도와 아랍(Arab)은 재정지원을 한다.

이런 신흥 공여국은 기존 원조관행에 다양성을 불어넣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공여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익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책임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다루는 시각이 약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²⁰⁶⁾ 이 국가들은 개발원조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행정적인 구조가 다소 분산되어 있고, 원조 담당기관들이 다른 정부부처의 부속기관이며 원조활동의 일부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²⁰⁷⁾ 또한 구축성 원조가 아직 많으며, 연수나 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강력한 행정력에 의존하는 생산 섹터의 프로젝트가 폐기된 경우에 발생하는 원조의 투명성이나 구축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²⁰⁸⁾

2008년 총 DAC 비회원국의 ODA는 USD 9,481백만이어서 전 세계 총 ODA 금액인 USD 70,974 백만의 약 13%를 차지하여 아직은 소수(Minority)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 원조액의 경우, USD 731백만에서 81억만으로 추정되는 중국, 150백만에서 1십억만으로 추정되는 인도, 2007년 USD 2,079백만을 지원한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처럼 규모가 큰 국가도 있다. 그러나 2007년 DAC 비회원국 13개국의 평균 지원액은 USD 427백만, ODA/GNI 비율 9개국 평균은 0.1%로 대체로 한국보다 적은 편이라 하겠다.²⁰⁹⁾ 이러한 신흥

204) (Workshop Steering Committee of the 2nd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09)

205) (George Varughese, 2009)

206) (Jerve, Alf. & Selbervik, Hilde., 2009)

207) (Rowlands, Dane., 2008)

208) (Workshop Steering Committee of the 2nd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09)

209) (OECD, 2009a)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UAE), 대만, 기타. 이중 중동 국가들과 기타는 ODA/GNI 비중이 나와 있지 않음.

공여국의 원조는 DAC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형태의 협력에 대한 공유와 지식축적을 할 수 있는 공식적 논의의 장이 부족한 면이 있다.

3) 한국의 원조방식

신흥 공여국이면서 DAC의 새로운 가입국인²¹⁰⁾ 한국은 남남협력의 구분상 ‘남’인지 ‘북’인지 명확하지 않은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²¹¹⁾ UNDP에서는 한국을 “남측 공여국”으로 분류하며, 개발도상국간 협력을 도모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도국인 주축국(Pivotal country)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개발 선진국의 모임인 DAC 가입을 하였고, 연간 7억 달러 규모의 공여를 하며, 세계 13위 안팎의 경제국인 한국을 완전한 ‘남’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수원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이 되었으며 DAC 비회원국으로 활동하다가 DAC 가입국이 되었으므로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위기의 측면에서 보면 특화와 마케팅(Marketing) 면에서 약할 수도 있지만 기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양쪽 그룹의 장점을 골고루 취하면서 두 그룹이 수렴해가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 서구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중간에 있는 한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잡기 위해서는 원조양식 측면에서 선진국의 강점인 정책자문과 신흥 공여국의 강점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양측에서 모두 부족한 인적역량강화의 측면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 「DAC 개발협력 저널」은 최근에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요성이 다시금 환기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²¹²⁾

물론 일본, 독일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원조를 실시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²¹³⁾ 이미 기존 협력단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이런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든 프로그램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게끔 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협력단의 많은 하드웨어 위주 사업들은 건축물이 사업비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두 측면에 대한

210) 2009년 11월 OECD DAC 가입 확정, 2010년 1월부터 회원국.

211) (이현주, 2009a)

212) (OECD, 2009a)

213) 「Japan's 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2005)에서 일본의 중기 ODA 전략 중 4가지 중점 분야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JICA는 개별국가의 개발단계와 상황에 맞게 경제·사회 인프라 정책형성과 제도구축, 인적자원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산업 에너지 분야 같은 사업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 사업처럼 소규모 도로포장 및 교량건설을 해준대거나 파라과이(Paraguay)에서처럼 배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후 배전검침시스템 구축을 하는 구성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형 사업으로 명명하는 사업들은 이 요소가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델을 원조방식 면에서 특화시키고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요소의 원조방식을 통해 개발협력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봉사, 연수, 전문가, NGO 지원 등 개별사업형태가 각자 다른 목표와 사업 사이클을 가지고 단독으로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각 형태의 장점을 살려서 이들을 유기적인 투입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각 원조방식의 연계가 왜 중요한지는 기존의 기술협력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지적하는 DAC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개인의 기술 및 지식향상이 관련 기관이나 제도의 개발과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²¹⁴⁾ 즉, 공여국인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각계 각 분야를 모아서 수원국 관련 기관의 개개인을 짧은 기간 초청하여 한국의 경험을 전달, 훈련시켜 주는 단독 연수사업은 연수생이 속한 기관의 조직적·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면에서 효과적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일례로, 「베트남 국별 연수 현지평가 및 사업발굴 결과 보고서」(2007) 역시 초청연수에 참가한 연수생의 경우 연수 후, 자신감 제고 및 새로운 시각의 정립 등 개인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단기간에 정책입안, 제도개혁 등 소속기관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제도적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2주간의 단기 연수로는 사업의 투입요소가 적어서 공식적인 성과측정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짧은 기간의 문제만으로 단정짓기 힘들다. 모든 연수 프로그램이 1달 이상, 평균 40일인 우리보다 비교적 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본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¹⁵⁾ 그보다는 ‘초청연수’라는 단일한 사업형태에 가지는 사업

214) (OECD, 2006c) 역량(Capacity)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식과 기술향상 이상의 것으로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질, 즉 절차, 인센티브, 거버넌스(Governance)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기술의 축적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속에 통합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과 제도 속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도너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에 좌우되지 말고, 개개 조직의 역량개발전략에 맞추어 수요중심(Highly-customized)이 되어야 하고, 지식의 전달 방향 역시 다방향(Multi-directional knowledge acquisition)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215) Kodama, Akihiko., Training Program Division, JICA 면담(2009. 11)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연수과정 외에 프로젝트 및 전문가 파견 등 다른 형태의 사업과 연계되는 다년간 장기 국별과정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²¹⁶⁾ 다시 말하자면 단독연수사업의 예는 단독적인 개별형태로는 한국형 모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들며 프로젝트, 연수, 봉사 등 사업형태의 통합되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반증한다.

[표 3] OECD DAC 역량 개발 가이드라인을 따라 조명해 본 KOICA 단기 연수사업

KOICA의 연수사업	KOICA 단기 연수사업의 성격	역량 개발 가이드라인
한국경험과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공여국이 경험전수를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한국의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이 연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시각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수원국 조직의 수요 중심
개인을 초청	조직 구성원에 대한 기술 및 지식강화에 초점	조직이나 제도의 역량강화와 연결되어야 효과적
한국의 경험이 주로 강의식으로 전달되고 협력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부족	국별 보고서(Country report) 등 강사와 연수생 양방향 정보전달의 요소도 있으나 강사에서 연수생으로의 정보 전달이 주가 됨.	다방향 정보전달이 중요

<Data Source: OECD 2006b 역량개발 가이드라인 참고>

원조 접근법 측면에서는 한국형 모델의 효과와 파급력을 높이면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Paris Declaration, Accra Agenda for Action: PD/AAA) 등의 국제 원조 효과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또한 공여자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하의 SWAp 접근법으로 한국형 모델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AS와 SWAp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CAS 프로세스는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모범사례인 몽골 지원전략 수립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몽골 CAS는 (1)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주인의식(Ownership) 현황 분석 (2) 수원국 내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분업 현황 분석 (3) 한국 ODA의 기여 가능 분야를 하위 섹터 레벨에서 분석 후 사업후보 분석 (4) 수원국 정부 및 공여기관과 정책 협의 (5) 후보사업, 예산 및 사업관리 소요 인력, 몽골 국가시스템 활용 방안, 몽골 내 원조조화 추진안,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위험관리방안, 그리고 동 CAS 적용시 파리선언 지표별 이행성과 예측

216) KOICA 연수사업부 면담(2009. 11)

분석서가 포함된 3개년 수원국 지원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⁷⁾ 한국형 사업도 이렇게 수립된 개별 수원국의 국가지원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SWAp은 타 공여국과 조화되어 수원국 주도로 수립된 특정 섹터 개발 프로그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이다. 이 섹터별 접근법이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과 다른 점은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협의의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지만 SWAp은 장기적으로 섹터에 대한 전체적(Holistic) 관점에 따라 본다는 점과 프로젝트가 양자의 협상인 반면 SWAp은 공여국의 공동 대화와 조화(Coordination)를 중시한다는 점이다.²¹⁸⁾ 또한 수원국(Host country)의 리더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재정관리,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SWAp 접근법을 공여국인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형 모델을 수원국의 섹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섹터 프로그램 지원(Sector program support)”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²¹⁹⁾

이 SWAp이라는 접근법(Approach)은 원조방식(Modality)과는 구분해야 하며, SWAp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꼭 예산지원이나 공동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이라는 양식이 될 수도 있다.²²⁰⁾ 즉, 한국형 모델은 SWAp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기존처럼 프로젝트로 양식을 띠다고 하여도,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Stand-alone project)와는 다르게, 우리의 지원안이 기획 단계부터 해당 SWAp의 기본문서와 재정문서에 포함이 되고, SWAp 예산안에 계상이 되며, 차후 성과 모니터링 및 재정 모니터링을 SWAp의 거시적인 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와 적절한 비용대비 개도국에 필요한 최적의 기술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는 신흥 공여국의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기술과 선진국의 질이 높지만 고가의 기술을 절충하여 개도국에게 비용 대비 최적의 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개도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유연성과 행정부담을 적게 주는 현재 한국 원조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이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선정시 적절한 수준의 시도와 도전을 감수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 관리도구(Program management tool)로 사업집행에 있어 위험을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17) (정유아, 2009)

218) (OECD, 2006d)

219) 스웨덴과 덴마크가 쓰는 표현(이현주, 2010)

220) (이현주, 2010)

이와 함께 규모에 있어서도 신흥 공여국과 차별화하여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거래비용을 높이기 보다는 절대적 규모가 큰 사업을 소수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집행시 공여국과 수원국 민·관의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포함하여 양측의 지식과 기술이 시너지를 내야만 한국의 경험을 살리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형 모델이 원조방식 면에서 공여국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원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CAS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섹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SWAp 접근법의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사업형태를 통합하여 정책지원, 인프라 등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요소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동시에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후발 신흥국들의 절충이 될 수 있도록 비용 및 시간 대비 최적의 기술로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신흥 공여국과 전통 공여국 사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

	신흥 공여국	한국	전통 공여국
목표 철학	· 자국의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과 개발	· 경제개발과 빈곤극복 모두 고려하되 둘의 연계성 강화 필요 · 개발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 중상주의적 성격 있음	· 빈곤극복에 초점을 두며 지속 가능한 성장, 평화, 안전 고려 · 노르딕 플러스(Nordic+)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 강함
공여국과 수원국 관계	· 공여국이면서 수원국 · 개발협력	· 공여국 ·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있음 · 개발협력	· 전통 공여국 · 시혜적 문제 해결의 관점 원조
중점 분야	· 농업 등 생산 분야	· 경제 분야 비중이 높으며 생산 분야도 전통 공여국 보다 강조 · ICT 가 특이 분야	· 정부와 시민사회, 보건, 교육 등의 사회 분야 강조 · 다부문/범분야 지원 높음

원조 접근법 (Approach) 및 양식(Modality)	· 브라질 등은 남남협력, 칠레는 삼각협력 · 중국은 아프리카에 인프라 구축, 식량지원, 연수, 전문가파견, 의료단 파견, 채무탕감 · 태국은 인프라 구축 · 인도 등은 과학기술인력 바탕으로 인적역량강화 · 교류사업 활발하나 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 · 유, 무상 지원 및 FDI 등의 경계 모호 · 상호호혜 및 내정 불간섭 원칙	· 국별 프로그램 CAS 하, SWAp 방식으로 가야 함 · 프로젝트, 봉사, 민간협력, 전문가 파견 등 각 투입요소의 장점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공통 목표의 프로그램 지원 · 정책, 인프라, 역량강화의 패키지(Package)제공 필요. 이는 신흥 공여국의 장점인 인프라 구축 사업과 선진국의 정책지원을 병행하고, 이와 함께 전통 및 신흥 공여국에서 모두 부족한 인적역량강화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 국내외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활용 필요	· PBA/SWAp의 일부분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 실시정책 및 기술협력 중시 ·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섹터 예산지원(Sector budget support) · 공동재정지원(Basket funding), 공동기술지원(Pooling of technical assistance) · 원조의 조건으로 정책개혁을 요구하는 조건성을 줄여감 · 원조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 부패 수준 등의 기준 존재
국제원조 효과성 원칙 준수 여부	· 원조 효과성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가 늘어남 · 중동국가들은 서로의 문서 시스템을 통해 공여국간 정기적 조화 노력 · 쿠웨이트는 75%의 원조금이 수원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다년간 지원 실시 · 인도와 아랍은 재정 지원 실시 · 구속성 원조(Tied aid) 비율 높음	· 특별검토, 수원국 예산안에 한국 원조금 75% 반영, 파리선언 모니터링 참가 등 PD/AAA 원조 효과성 원칙을 지키려 노력 · 수원국 주도의 원조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CAS를 통해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함. 실행 면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현지 사무소와 현지 컨설턴트 및 NGO 역할 강화. · 평가시에도 수원국에 대한 책임성 강화장치 도입 필요 · 2007년 현재 24.7%만이 비구속성 원조로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매우 높으나 이를 줄여야 함	· 2007년 47%의 공여국이 SWAp, PBA 실시 · 2007년 평균 지원의 45%가 공공재정 관리시스템, 43%가 공공조달시스템 이용하였으나 수원국에 따라 비율 다름 · 공동활동 비중: 공동분석 40%, 공동미션 20% 실시 · 2007년 공여국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결된 기술협력 비율이 60% · 2007년 공여국 평균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비율 84.6%로 비구속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됨 · 2007년 공여국 평균 33 개국에 1601 PIUs 운영하여 2005년의 1817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많음
집행에 있어서 특징	· 수행에 있어서 특징 · (시간, 비용, 기술력) 빠르고, 비용이 낮으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상 · 원조 프로그램의 행정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주 집행기관의 권한이 작음	· 빠르면서 적절한 비용 및 개도국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보유 · 개도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부담을 적게 주는 장점 강화 필요 · 적절한 위험 감수의 균형 요구됨	·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나 대체로 높은 수준 기술보유 · 비교적 철저한 위험 관리(Risk-averse)

규모	· 원조규모 중국(USD 731 million-8.1 billion), 인도 (150 million-1 billion, GNI 대비 0.1% 이하),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규모 큼 · 13개국 평균이 USD 427 million로 한국보다 작음 ODA/GNI는 9개국 평균 0.1% · 2008년 총 비DAC 회원국의 ODA는 총 ODA의 13% 차지	· 2008년 GNI 0.09%로 USD 797 million 지원. 그러나 2015년까지 GNI의 0.25%까지 현재의 약 3배 확장 계획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대규모 공여국에 속함 · 2007년 평균 ODA는 USD 4.7 billion, GNI 대비 0.45% · 국제원조의 90% 이상 제공
국제적 논의의 장	· 국제적 논의의 장(Donor's fora)에 참여 제한 · 어젠다 세팅에서 소외됨 · 사례의 문서화나 공유 적음	· 새 DAC 회원국으로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가교 역할 기대 · 양쪽의 장단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원조 대안 제시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 연구, 성과기록이 중요	· DAC 전통적 회원으로 원조에 관한 어젠다 세팅 (agenda setting) · 연구로 뒷받침된 증거 · 모범관행 사례공유

<Source: (OECD, 2009c), (OECD, 2009a), (Workshop Steering Committee of the 2nd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2009), (Jerve, Alf. & Selbervik, Hilde., 2009), (OECD, 2008b), (이현주, 2010), (Feng, Lu., 2009), (Varughese, George., 2009), (Rowlands, Dane., 2008)>

5.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정의

위에서 논의된 특화 프로그램이 가져야 하는 요소들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 (Positioning)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조 모델을 분야, 지역, 규모, 실시방법 네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분야:** 한국의 성공적인 정치·경제·사회의 개발을 이끌었던 제도, 지식, 기술, 경험을 타 개도국과 공유하여 국제적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이 산업·기술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으며 타 공여국과 차별화하여 원조의 성과를 증명해 온 분야의 개발협력을 “한국형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 **지역:** 한국과 지역, 문화, 언어, 역사적 혹은 개발 초기 조건 면에서 유사한 나라, 한국적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원국, 원조 소외국,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규모:** “절대적 지원규모”는 최소한 해당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CRS Code) 분야에 대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평균 지원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상적으로는 주 공여국의 지원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상대적 지원규모”는 해당 세부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여국의 지원비율을 참조한다.
- **원조 실시방법:** 국제원조규범을 준수하여 수원국 주도로 타 공여기관과 조화되어 실시하며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형태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사업요소로 유기적으로 통합, 투입되어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적역량 강화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원조양식(Modality)이 되도록 한다. 또한 국가지원전략을 기초로 한 국별 프로그램의 틀에서 SWAp 접근법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국내외 및 현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적극 활용한다.

한국형 모델은 한국이 특화할 수 있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별 프로그램이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화 프로그램 및 비교우위에 근거한 사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단내 설문조사 결과²²¹⁾도 70% 이상의 협력단 직원들이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와 비교우위를 살리는 원조가 한국형의 유용성이라고 보았으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즉, 한국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산업적 기술과 인력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Key)이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한국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게 되고 거의 모든 섹터의 방대한 프로그램이 연수사업처럼 짊막하게 축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개발경험’은

221)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과 기능직 등 모든 직종을 다 포함한 협력단 총 직원 370명 중 78명이 응답. 응답자중 남자는 62%, 여자가 30%였고, 정규직이 91%였다. 직급은 임원 1.3%, 부장 9%, 차장 및 팀장 20.5%, 과장 34.6%, 대리 15.4%, 직원 16.7%, 전문직 3.8%였다. 근무연수는 1년 미만인 5.1%, 1년~5년이 25.6%, 5년 이상 15년 미만인 20.5%, 15년 이상이 48.7%로 가장 많았다. 총 정규 직원 분포를 보면 전체 215명 중 남 61%, 여 39%이며, 임원 2%, 부장 9%, 팀장 및 차장 19%, 과장 33%, 대리 17%, 직원 15%이다. 또한 근속연수 1년 이상 5년 미만인 27%, 5년 이상 15년 미만인 20%, 15년 이상이 53%를 차지한다. 정규직 그룹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성별, 직급 및 근속연수 분포와 전체 집단 그것과 대조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설문조사는 대표성에 큰 문제가 없다.

한국형을 특징짓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다른 기준들과 통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한국적 경험이라는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비교우위와 차별성 및 보완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형 모델의 장점을 묻는 KOICA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0.5%가 비교우위 활용, 42.3%가 차별성, 20%가 원조분업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한국형의 요소와도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개념정의에 포함된 “원조의 성과”라는 요소는 결국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제시에 무게를 두자는 것이다.

한국형 모델은 한국의 특수한 경험과 국제 개발 협력 사회의 보편적인 경험, 즉 두가지 대조적인 가치(Value)를 조화하여 정합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었다. 즉 분야와 지역면에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원조실시방법과 규모 면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다.

제 3장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한국형 섹터별 원조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KOICA의 현재 섹터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타 공여국과 한국의 섹터별 지원경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KOICA의 중점 지원 분야가 다른 공여국들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협력단의 섹터별 세부 분야의 원조 현황을 한국적 경험 공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의 협력단 사업 그대로도 분야와 규모 면에서 충분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지식 공유와 밀접히 관련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단의 사업성과와 비교우위를 다룸으로써, 앞으로 한국형 사업을 강화, 수행할 수 있는 KOICA의 역량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분야별 지원의 정의 및 범위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원조목적(Purpose of aid)에 의해서 분류되는 DAC의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CRS) Code)를 활용하여 섹터별 양자원조(Bilateral ODA by sector)를 분석한다. 원조목적코드는 “수원국의 어떤 특정한 경제 사회의 구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고 교육, 연구, 인프라 등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따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폐렴 클리닉의 건축은 기초의료설비(12230: Basic health care infrastructure)가 아니라 전염병 관리(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로 분류되는 것이다.²²²⁾

222) OECD Classification by sector of destination: http://www.oecd.org/document/21/0,3343,en_2649_34447_1914325_1_1_1_1,00.html

다섯 자리로 이루어져있는 원조목적코드는 첫 자리가 가장 높은 상위 섹터, 즉 1 사회, 2 경제, 3 생산, 4 다부문을 나타낸다. 첫 세 자리가 함께 쓰이면 상위 섹터에서 분화된 섹터를 나타내는데 110은 교육, 120은 보건, 130은 인구 등으로 쓰인다. 뒤의 두 자리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으로 끝나면 정책, 행정 등 일반적인 CRS 코드이고 20에서 50까지가 주요 코드이며, 61-79는 조금 더 세분화된 코드이다. 그리고 특정 섹터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코드는 81-89로 끝나며,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는 91-99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박스 1참고].

첫 자리가 1-4로 시작하는 CRS 코드까지가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Sector-allocable aid)이며, 이는 위에 언급했듯 크게 사회하부구조와 서비스, 경제하부구조와 서비스, 생산 섹터, 다부문으로 나뉜다. 5-9로 시작하는 소비재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부채 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원조국 행정 지원, NGO 지원,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은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에 속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일반적 개발목적과 공여국 내 거래(Internal transactions)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분석시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만을 분모로 사용하여 각 세부 섹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그 이유는 긴급구호나 공여국 내 난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채무 관련한 지원은 전적으로 원조 행정주체의 관리 하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분석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³⁾ 선진국과 분야 면에서의 차별화 분석은 지불액 기준 데이터의 질과 수집율이 약정액 기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제 지불액 기준(Disbursement basis)이 아니라 약정액 기준(Commitment basis)으로 하였다.

[박스 1] 섹터 관련 용어 정리

- **원조목적코드(CRS Code)**: “수원국의 어떤 특정한 경제 사회의 구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원조를 분류. 총 5자리
-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Sector-allocable Aid)**: 섹터로 구분이 가능한 원조이며 원조목적코드 1, 2, 3, 4로 시작하고 경제, 사회, 생산, 다부문을 포함
- **상위 섹터/분야/부문(Higher Sector)**: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1),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2), 생산 분야(3), 다부문(4)으로 구성. 코드 첫 자리

223) (OECD, 2006)

· **섹터/분야/부문(Sector)**: 교육(110), 보건(120), 인구(130), (140), 공공정책(150), 운송(210), 통신(220), 에너지(230), 금융(240), 농림수산(310), 공업(320), 무역(330) 등. 코드 첫 세 자리

· **하위 섹터/분야/부문(Sub-sector)**: 섹터의 세부적인 섹터. 예를 들어 교육의 하위 섹터는 초등교육(11220), 중등교육(11300)으로 나뉨. 코드 다섯 자리

<Source>OECD http://www.oecd.org/document/21/0,3343,en_2649_34447_1914325_1_1_1_1,00.html

2.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섹터별 지원 비교

여기서는 OECD 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타 공여국들과 한국의 분야별 분석 경향에 대해서 논의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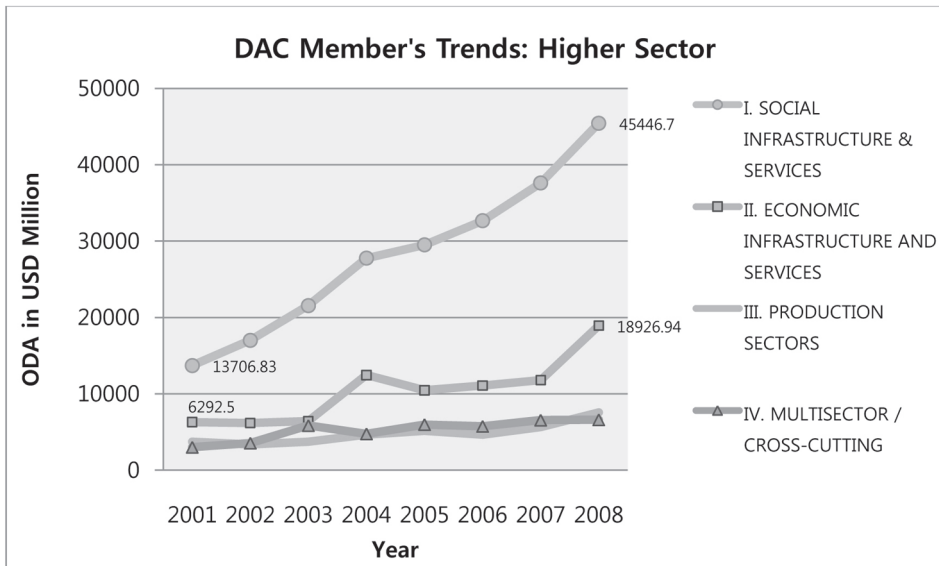
1) 한국과 DAC 공여국의 섹터별 지원 추세 비교

A. 상위 섹터 지원의 전 세계적인 추세(TREND)와 한국의 지원 추세 비교

전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꾸준히 전체 ODA가 실질 지원액(Real-term)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GNI 대비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도 2001-2002년의 USD 360억에서 2003-2004년에 USD 450억²²⁴⁾으로 증가하였다. [Chart 1]을 보면 특히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는 지원량과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상위 분야에 비해 4-6배 정도 많이 지원되고 있다. 사회 부문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150-200억 달러였으나 그 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01년에 비해 3.4배가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3년과 2007년 높게 증액되어 2001년에 비해 2008년에 4배가 되었다. 생산 부문과 다부문은 전체 지원액이 낮을뿐만 아니라 전체 섹터 지원에서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산 부문은 2001년 40억만 달러에서 2008년 75억만 달러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부터 2008년에만 46억만 달러에서 75억만 달러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다부문 원조는 2001년 30억만 달러로 가장 낮았으나 2008년 65억만 달러로 약 2배가 되었다.

224) 불변(고정) 미화 2004년 기준으로(Constant 2004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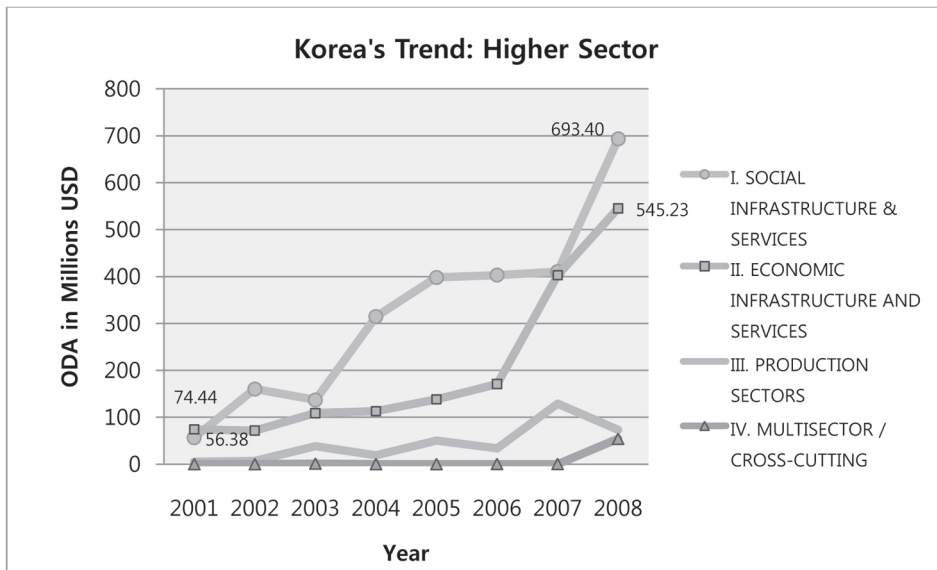
[CHART 1] 상위섹터 차원에서 공여국 지원 추세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Chart 2]에서 2000년대 한국의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 지원비율과 경향을 보면 다른 공여국보다 경제 부문 지원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타 공여국은 사회 부문이 경제 부문보다 3배나 많은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007년에 경제 부문의 비중이 거의 사회 부문과 동일할 정도로 경제에 많은 투자를 했고, 2008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또한 한국도 다른 공여국처럼 생산 부문 비중은 낮아지고, 다부문은 높아져 두 부문이 이제 거의 같은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ART 2] 상위 섹터 차원에서 한국의 지원 추세 200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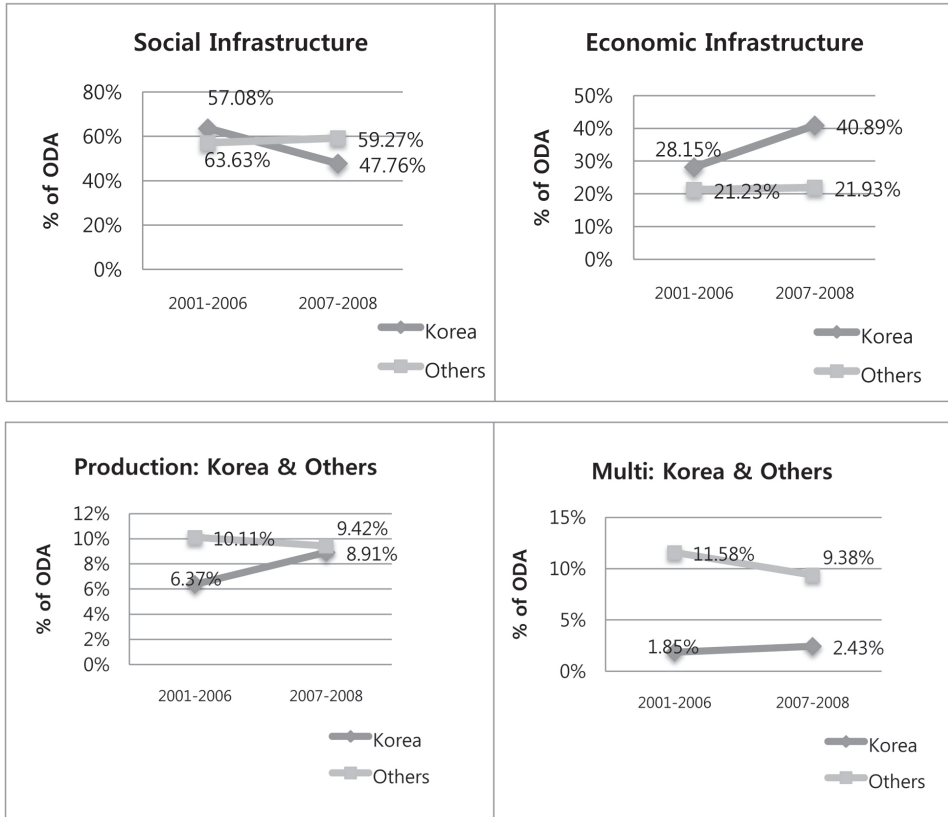


<Data Source: OECD Stats>

[Chart 3]을 보면, 한국과 DAC 공여국의 관심 분야가 최근으로 올수록 확연히 틀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AC 공여국은 점점 사회 부문을 늘리고 경제와 생산 부문을 줄여 왔으나, 한국은 정반대로 경제와 생산 부문을 강화하고 사회 부문을 줄여갔다. 특히 경제 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집중은 최근 더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01부터 2006년까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비율은 한국이 전체 ODA의 28.15%, DAC 공여국 평균 28.15%로 동일하지만, 2007-2008년도만 보면 한국이 40.89%, DAC 공여국 평균은 21.93%로 이 차이는 훨씬 커져있다. 농업 부문을 보면 2001-2006년 평균은 한국이 6.37%로 DAC 평균 10.11%를 밑돌지만 2007-2008년 지원비중은 9% 정도로 비슷하다.²²⁵⁾ 반면, 사회 부문은 DAC가 57.08%에서 59.27%로 약간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63.63%에서 57.76%로 최근 줄어들고 있다.

225) 단,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가 아니라 전체양자원조에서 보면, 한국은 사회, 경제, 생산 부문 모두에서 상위를 보이고, 특히 기초교육을 제외한 교육과 보건, 행정, 통신, 농업에서 높은 우위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섹터별 전체 양자원조 중 상대적으로 소비재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부채 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원조국 행정지원, NGO 지원,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CHART 3] 상위 섹터 차원에서 한국과 DAC 공여국의 지원 추세 비교



B. 섹터 지원의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지원 추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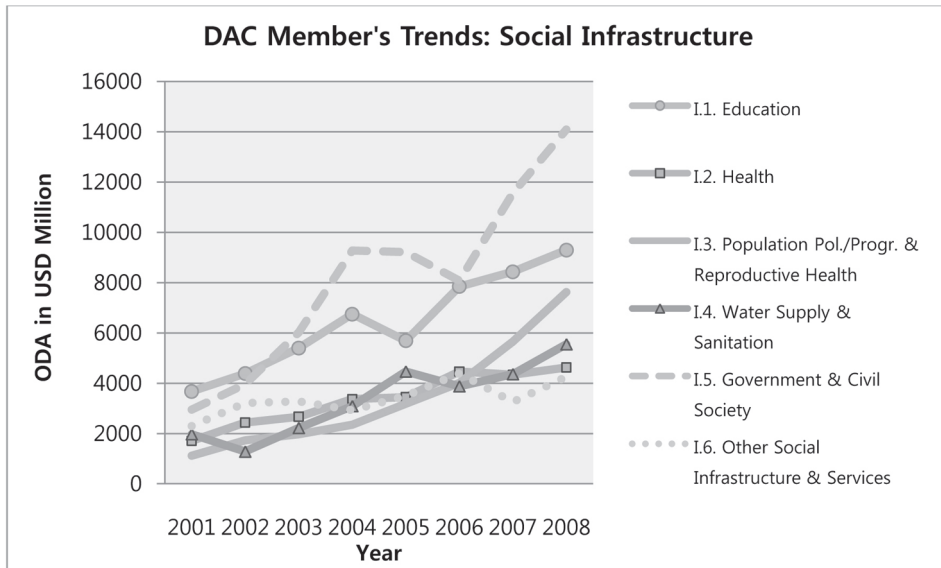
2000년대 사회 상위 부문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Government & Civil Society)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Chart 4: DAC 공여국의 사회 부문 지원 추세].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가파른 지원 증가는 대부분 안전과 평화구축(Security and Peace Building) 하위 부문 및 공공행정(Government Administration) 세부 부문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Chart 5: DAC 공여국의 사회부문 중 공공행정 부문의 세부 지원].²²⁶⁾

「OECD 기초 사회 서비스 분석」(2006)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증가 추세를 보면 공공행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1995-1996년에 비해 2003-2004년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안전과 평화구축 부문은 지원이 거의 없다가 2003-2004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지원은 거의 증가 없이 1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1995-1996년의 20억 달러에

226) (OECD,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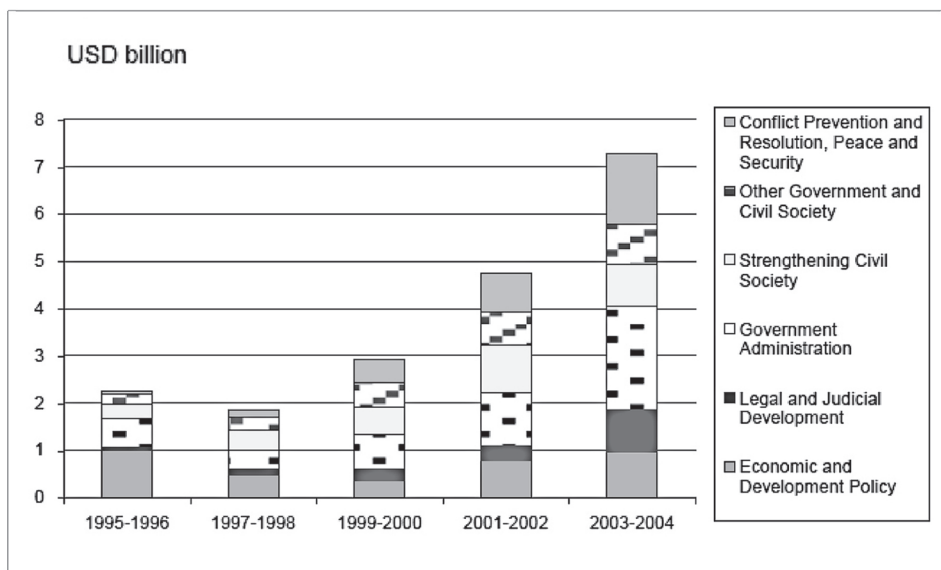
서 2003-2004년에 7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한 “정부와 시민사회” 부문 내에서의 비중이 50%에서 14%로 축소되고 있다.

[CHART 4] DAC 공여국의 사회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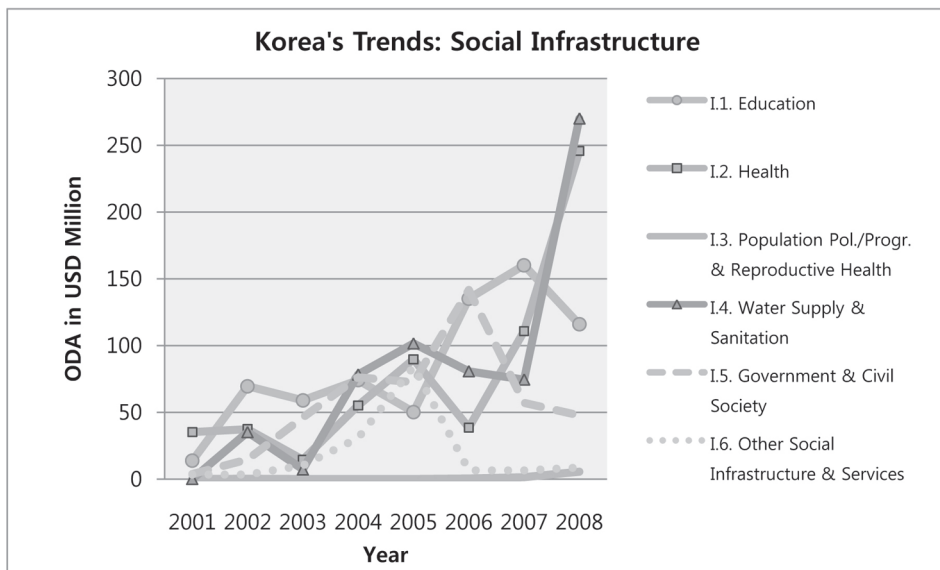
[CHART 5] DAC 공여국 사회 부문 중 공공행정 부문의 세부 지원 1995-2004



<Data Source: (OECD 2006). "Analysis of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1995-2004">

한국의 사회부문은 타 공여국에 비해서 지원의 규모나 중점 지원 섹터의 변동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art 6]. 이는 총 원조액수가 적어서 변동이 폭이 커지기 쉬운 것과 섹터별 다년간의 전략 부재 혹은 중점 세부 분야에 대한 미정립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1-2007년까지는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8년 보건과 식수 분야의 비중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공여국과 현격히 다른 부분은 타 공여국에서 사회 섹터 중 가장 주요한 하위 부분인 정부와 시민사회 부문의 비중이 교육, 보건 및 식수에 비해 낮고 증가세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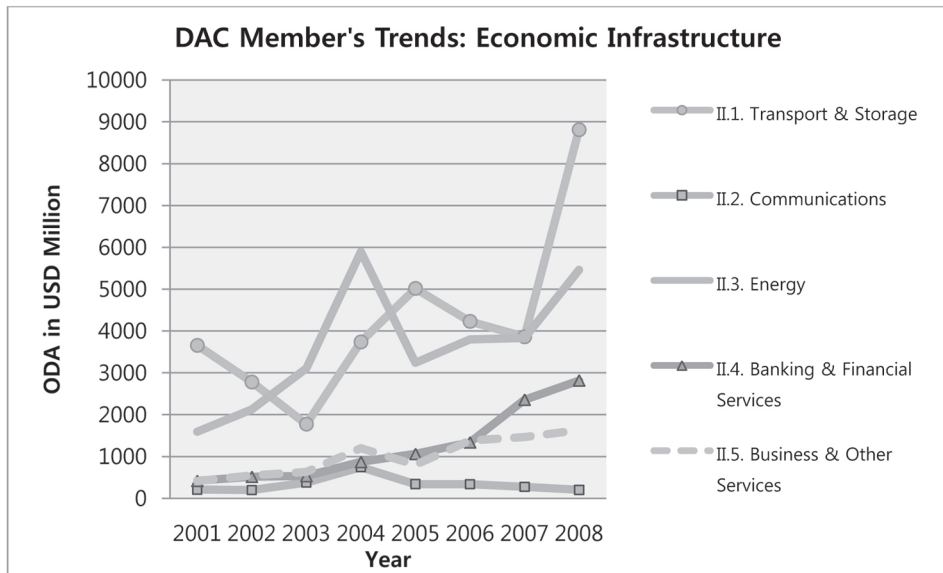
[CHART 6] 한국의 사회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Chart 7]의 공여국 전체 경제 부문은 교통 및 수송과 에너지 하위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배가 늘었던 에너지 부문은 2001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역시 에너지와 비슷하다가 2007-2008년에 다시 5배나 증가하였다. 통신 분야는 계속 변동이 없이 매우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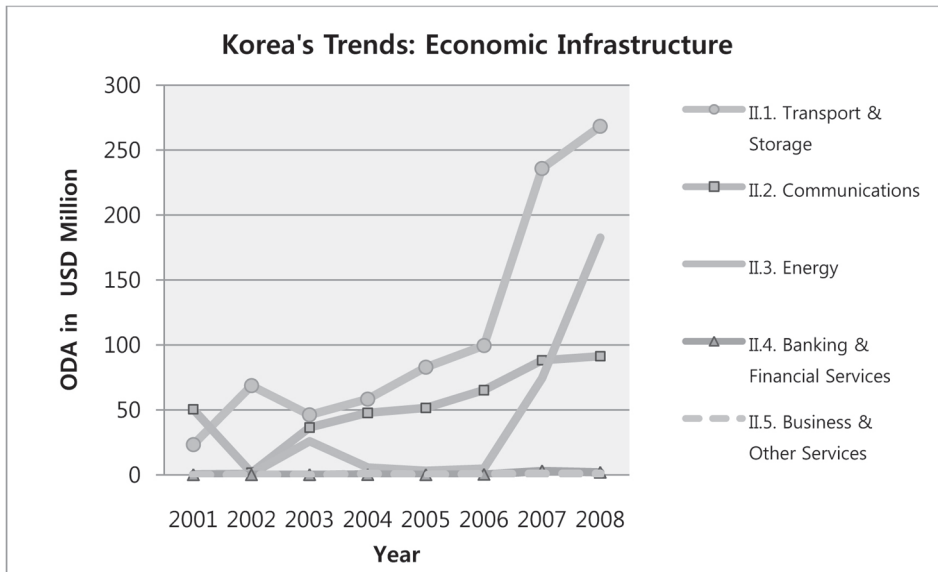
[CHART 7] DAC 공여국의 경제 부문 지원추세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Chart 8]에서 보이는 한국의 경제 부문은 2006년부터 교통은 2.5배, 에너지가 3.5배가 증가하여 최근 두 부문이 감소세에 있는 선진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통신 부문의 경우, 2001년에 비해 지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경제 부문 내에서의 비중도 교통과 에너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확실히 다른 DAC 공여국에 비해서 비중이 높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ART 8] 한국의 경제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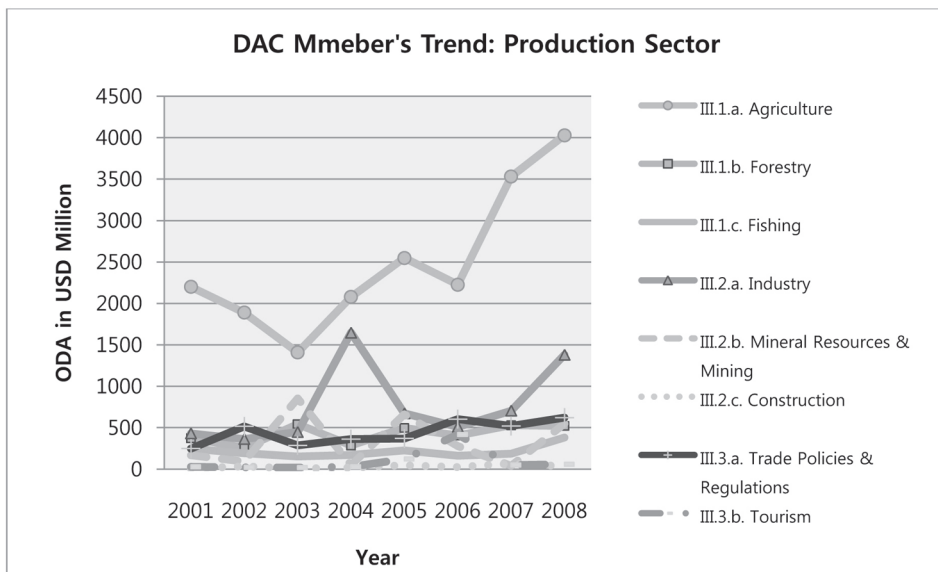


<Data Source: OECD Stats>

생산 부분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8년에는 2001년의 두 배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ODA의 양의 증가에 비해 농업에 대한 원조의 비중은 1980년대 초반 DAC 공여국 총 ODA의 17%에서 2000년에는 6% 밖에 차지하지 않는 등 점점 줄어가고 있다.

「Oxfam Report」(2009)²²⁷⁾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8개 주 공여국의 농업 분야 원조는 1980년대 200억 달러에서 2007년 50억 달러로 1/4이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이 1990년대에 빈곤감소 어젠다(Poverty reduction agenda)에서 제외되어 공여국에서 농업 관련 전문가가 줄어들었으며 농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낮은 데서 영향을 받은면이 있을 것이다.²²⁸⁾ 그러나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Johannesburg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과 2003년 최근 식량가격 위기 등으로 인한 기아와 영양부족의 문제로 인해 세계 식량공급을 늘리고 기후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인식 역시 제고되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Chart 9]와 [Chart 10]에서 볼 수 있듯 한국과 다른 공여국 모두 농업의 비중이 높다.

[CHART 9] DAC 공여국의 생산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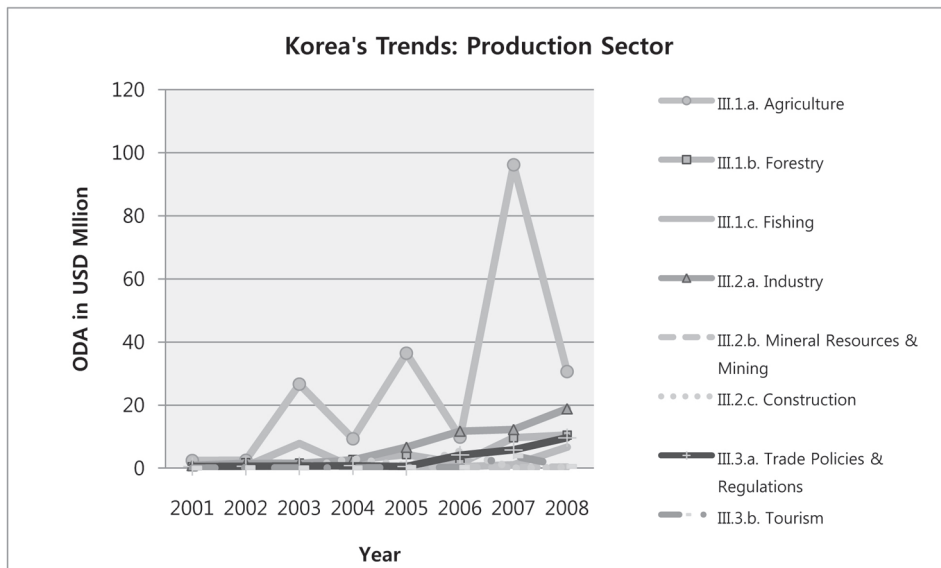
<Data Source: OECD Stats>

227) (Crola, Jean-Denis., 2009)

228) http://www.tcd.ie/iiis/policycoherence/index.php/iiis/development_cooperation/trends_in_agricultural_aid

DAC 공여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생산 부문의 비중이 높아져왔다. 특히 한국은 2007년에 농업 비중이 2006년에 비해 거의 10배가 되어 1억 달러까지 갔다가 2008년 다시 절반 이하인 4천만 달러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원조 중 협력단의 지원만 보자면 2007년 전체의 6.0%인 1천 6백만 달러에서 2008년에 8.8%인 2천 4백만 달러로 농업 부문이 더욱 강화되었다.

[CHART 10] 한국의 생산 부문 지원 추세 2001-2008



<Data Source: OECD Stats>

2) 한국과 DAC 공여국의 하위 섹터별 자원 분배 비교

여기서는 25개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터키(Turkey)와 체코(Czech)를 포함한 공여국들과 한국의 하위 섹터별 자원분배를 비교하겠다. 위에서 논의한 중점 분야는 공여국들이 중점을 두겠다고 '표방'한 분야이고, 이 중점 분야가 실제 얼마만한 규모의 사업으로 '집행'되는지와, 각 섹터별로 가장 많은 절대적·상대적 지원을 하는 핵심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조목적코드별 자원분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A.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세부 분야별 ODA 비중 비교

한 국가 내에서 원조목적코드별로 어떤 세부 분야의 ODA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를 %로 나타낸 것을 **전체 ODA에서의 분야별 상대적 비중**(The share of aid to a specific sector in total bilateral OD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한국과 DAC 공여국의 2000년대 평균 분야별 지원비중을 볼 수 있는 2001-2008년 평균 데이터와 비교적 최근의 경향을 볼 수 있는 2007-2008년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은 교육에서는 중등교육이 6.77%로 다른 나라 평균 1.06% 보다 매우 높게 지원되었으나, 기초교육은 DAC 평균 3.6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약한 편이다. 한국의 기초교육 지원비율은 2001-2008년 평균 0.64%였으나, 2007년 0.55%, 2008년 1.14%로 소폭 늘고 있다. 보건 섹터 지원비율은 전반적으로 약간 높고(한국 11.49% : DAC 6.94%), 특히 식수공급 및 위생(한국 11.38% : DAC 6.88%) 지원비율이 높은 편이다. 농업 분야는 평균적으로 보면 타 공여국과 비슷하게 6%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5] KOICA 와 DAC 회원국의 분야별 ODA 비중 비교 2001-2008년, 2007-2008년

	Korea 2001-2008	Korea 2007-2008	Others 2001-2008	Others 2007-2008
I.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56.66%	47.76%	57.93%	57.93%
I.1. Education	16.93%	11.77%	13.21%	13.21%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5.12%	1.95%	2.46%	2.46%
I.1.b. Basic Education	0.32%	0.80%	3.64%	3.64%
I.1.c. Secondary Education	6.77%	4.49%	1.06%	1.06%
I.1.d. Post-Secondary Education	4.73%	4.53%	6.03%	6.03%
I.2. Health	11.49%	15.06%	6.94%	6.94%
I.2.a. Health, General	4.31%	4.69%	2.58%	2.58%
I.2.b. Basic Health	7.18%	10.38%	4.35%	4.35%
I.3. Population Pol./Program. & Reproductive Health	0.07%	0.93%	7.09%	7.09%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1.38%	14.86%	6.88%	6.88%
I.5. Government & Civil Society	12.42%	4.35%	16.86%	16.86%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8.83%	4.26%	10.21%	10.21%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0.37%	0.08%	2.47%	2.47%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4.36%	0.80%	6.96%	6.96%
II.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32.55%	40.89%	21.45%	21.45%
II.1. Transport & Storage	18.53%	21.77%	8.69%	8.69%
II.2. Communications	10.29%	7.75%	0.69%	0.69%
II.3. Energy	3.49%	11.08%	7.46%	7.46%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0.13%	0.22%	2.54%	2.54%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0.12%	0.08%	2.07%	2.07%
III. PRODUCTION SECTORS	8.51%	8.91%	9.85%	9.85%
III.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6.53%	6.68%	6.42%	6.42%
III.1.a. Agriculture	5.52%	5.47%	5.11%	5.11%
III.1.b. Forestry	0.66%	0.87%	0.88%	0.88%
III.1.c. Fishing	0.34%	0.33%	0.44%	0.44%
III.2. Industry, Mining, Construction	1.44%	1.38%	2.33%	2.33%
III.2.a. Industry	1.12%	1.34%	1.58%	1.58%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0.07%	0.02%	0.69%	0.69%
III.2.c. Construction	0.32%	0.01%	0.06%	0.06%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0.39%	0.67%	0.90%	0.90%
III.3.b. Tourism	0.16%	0.19%	0.19%	0.19%
IV. MULTISECTOR / CROSS-CUTTING	2.29%	2.43%	10.77%	10.77%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1.14%	0.83%	3.18%	3.18%
IV.2. Other Multisector	1.15%	1.60%	7.59%	7.59%
V. TOTAL SECTOR-ALLOCABLE (I+II+III+IV)	100.00%	100.00%	100.00%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한국과 타 공여국의 세부 분야별 ODA 지원액 비교

공여국들끼리 분야별 평균 지원액(USD)으로 섹터별 배분을 비교하기 위해 **분야별 절대적**

ODA 원조액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7년과 2008년에 총 ODA가 699백만 달러에서 803백만 달러로 14.99%나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2015년까지 ODA를 2008년 GNI 대비 0.09%에서 2015년까지 0.25%로 약 2.7배를 늘린다는 약속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 6년의 평균 보다는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ODA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다. [표 6]에서 보듯, 섹터별 지원금액의 2007년 공여국 평균을 구해서 한국과 비교해 보면, 통신 섹터는 타국 평균의 5배로 자원분배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송과 저장은 DAC 평균의 1.22배 이고 중등교육은 타국 평균 정도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금액 면에서 역시 경쟁력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낮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분야들의 절대적 액수가 DAC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분야들은 모두 타국에 비해 지원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 취약 분야로 타국 지원금액의 0.06배인 기초교육과 0.01배인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을 꼽을 수 있다.

[표 6] 한국과 DAC 회원국 세부 분야별 원조액 비교 2007년

(Millions of dollars) 2007	Korea	DAC Average	Proportion of Korea's ODA to the DAC Average
I.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410.5	1688.15	*0.24
I.1. Education	160.17	372.29	*0.43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36.42	67.73	+0.54
I.1.b. Basic Education	5.37	96.09	**0.06
I.1.c. Secondary Education	36.7	39.70	++0.92
I.1.d. Post-Secondary Education	81.67	168.84	+0.48
I.2. Health	110.77	177.09	+0.63
I.2.a. Health, General	15.99	52.51	*0.30
I.2.b. Basic Health	94.78	130.01	+0.73
I.3. Population Pol./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46	232.19	**0.01
I.4. Water Supply & Sanitation	74.52	203.48	0.37
I.5. Government & Civil Society	57.15	524.62	*0.11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56.85	410.59	*0.14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0.3	114.03	0.00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6.44	178.54	**0.04
II.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402.86	584.48	+0.69
II.1. Transport & Storage	235.89	213.06	++1.11

II.2. Communications	88.24	20.92	++4.22
II.3. Energy	74.6	202.38	0.37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3.12	92.00	**0.03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1.01	76.28	**0.01
III. PRODUCTION SECTORS	128.99	278.75	0.46
III.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106.9	195.12	+0.55
III.1.a. Agriculture	96.14	162.13	+0.59
III.1.b. Forestry	9.67	24.33	0.40
III.1.c. Fishing	1.08	10.59	0.10
III.2. Industry, Mining, Construction	12.43	47.62	*0.26
III.2.a. Industry	12.28	47.28	*0.26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0.16	2.57	**0.06
III.2.c. Construction	..	4.71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5.79	34.46	*0.17
III.3.b. Tourism	3.87	3.33	++1.16
IV. MULTISECTOR / CROSS-CUTTING	31.79	303.47	*0.10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10.51	108.19	*0.10
IV.2. Other Multisector	21.28	195.28	*0.11
V. TOTAL SECTOR-ALLOCABLE (I+II+III+IV)	974.14	2854.81	0.34

<Data Source: OECD Stats ※ Proportion of Korean ODA to the DAC Average 칼럼에서 ++ 경우 절대액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거나 비슷한 분야, +표시는 절대액이 다른 나라의 0.5배 이상인 분야, *표시는 절대액이 타국의 0.1-0.5배로 부족한 분야, ** 표시는 절대액이 타국평균의 0.1이하로 매우 부족한 분야 >

C. 분야별 주 공여국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각 분야별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공여국을 **절대적 주 공여국**, 공여국 내의 섹터별 분배를 봤을 때 타국보다 그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 **상대적 주 공여국**이라 칭하겠다. [표 7]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표 8]은 2007년과 2008년의 절대적 · 상대적 주 공여국을 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다.²²⁹⁾

이에 따르면 중등교육은 절대적 지원액 면에서는 프랑스의 지원이 가장 많다. 같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터키(Turkey)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기초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미국이 절대적 주 공여국이고 아일랜드(Ireland)가 상대적 주 공여국이다. 특히 인구 및 생식보건은 미국이 제 2공여국인 영국에 비해 10배나

229) 본 분석 당시에는 2007년 자료만 존재하여 이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2008년 자료를 추가함.

많이 지원하여 독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식수와 위생 부문에서는 일본이 다른 공여국의 2 배 이상을 지원하는 주 공여국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부문은 미국이 절대적, 그리스(Greece)가 상대적 주 공여국이다. 수송 및 저장은 일본이 주 공여국이다. 통신 부문은 2008년 한국이 유일하게 가장 높은 절대액을 지원한 분야이다. 2007년에는 일본이 통신 분야의 절대적 주 공여국이며, 한국은 상대적인 주 공여국이다. 생산 부문은 미국이 주 공여국이고, 농업은 일본과 미국이 주 공여국이다. 임업은 일본이 원조액수 면에서 주요 공여국이고, 핀란드는(Finland)는 상대적으로 높게 투자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업은 EC가 절대적, 덴마크(Denmark)가 상대적 주 공여국이며, 무역정책은 미국과 EC가 절대적, 스위스가 상대적 주 공여국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우리처럼 원조규모가 작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까지 포함한 이 세 나라는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에 80%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기초교육(13%)과 보건(23%) 및 인구(9%) 부문에,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분쟁·평화·치안(25-30%)에 집중적으로 원조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부문에 조금씩 원조를 하는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표 7] 분야별 주 공여국 2001-2007년

2001-2007	절대적 주 공여국	상대적 주 공여국	2위 그룹
I.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US	Turkey, Ireland, Greece	EC, Japan, Germany, France, UK, Netherlands
I.1. Education	France	Turkey	Germany, Japan, EC, Netherlands, US, UK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Japan	Turkey, Luxembourg, Ireland	EC, UK, France, Netherlands, US, Canada, Spain, Germany
I.1.b. Basic Education	US	Ireland, Netherlands	Netherlands, UK, France, EC, Japan, Canada, Germany, Norway
I.1.c. Secondary Education	France	Turkey	Germany, Japan, EC, Spain, Korea, UK
I.1.d. Post-Secondary Education	France	Turkey	Germany, Japan, EC
I.2. Health	US	Ireland, Luxembourg	EC, UK, Japan, France, Canada, Netherlands, Germany
I.2.a. Health, General	Japan, UK	Ireland	France, Netherlands, EC, Norway, Germany, US
I.2.b. Basic Health	US	Czech Republic	EC, Canada, UK, Japan, Germany

I.3. Population Pol./Program. & Reproductive Health	US	United States	UK
I.4. Water Supply & Sanitation	Japan	Japan	US, EC, Germany, Netherlands, France
I.5. Government & Civil Society	US	Greece,	EC, UK, Germany, Canada, Netherlands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US	Australia	EC, UK, Germany, Canada, Australia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US	Greece, Czech Republic	EC, UK, Norway, Germany, Netherlands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US	Spain	EC, France, Germany, Japan, Spain
II.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Japan	Japan	US, EC, Germany, France
II.1. Transport & Storage	Japan	Japan	EC, US, France, Germany
II.2. Communications	Japan	Korea	US, Korea, EC, France, Canada
II.3. Energy	Japan, US	Japan	US, Germany, EC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Germany	Switzerland, UK, Belgium	UK, US, Netherlands, France, Spain, EC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US	Turkey, Netherlands	EC, Netherlands, Germany, UK
III. PRODUCTION SECTORS	US, Japan	Denmark, Switzerland	EC, Germany, France, UK
III.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Japan	Japan, Denmark	US, EC, France, Germany, UK
III.1.a. Agriculture	Japan, US	Denmark, Switzerland, Belgium	France, EC, Germany, UK, Canada
III.1.b. Forestry	Japan	Finland	Germany, EC, Netherlands, UK
III.1.c. Fishing	Japan	Norway	EC, Norway, Spain, Denmark
III.2. Industry, Mining, Construction	US	Denmark	EC, Japan ,UK, Germany
III.2.a. Industry	EC	Denmark	US, Japan, Germany, Denmark, UK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US	Czech Republic	EC, Japan
III.2.c. Construction	UK, Denmark	Denmark	Japan, Italy, Australia, Germany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US, EC	Switzerland	EC, Japan, Netherlands, UK
III.3.b. Tourism	Japan	New Zealand	EC, France, Spain
IV. MULTISECTOR / CROSS-CUTTING	US	Switzerland	EC, Germany, Japan, France, Netherlands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Japan	Czech Republic	US, EC, France, Germany, Netherlands, Denmark
IV.2. Other Multisector	US	Switzerland	EC, Germany, France, Japan

<Data Source: OECD Stats>

[표 8] 분야별 주 공여국 2007년, 2008년

분야	절대적 주 공여국	상대적 주 공여국	2위 그룹
I.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US , EC, Japan, Germany, France	Portugal, Greece, Island (Over 80%)	Canada, Spain, Netherlands
I.1. Education	France , Germany	Austria, France (40–35%)	UK, US, EC, Japan, Netherlands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EC, US, Japan, UK	Turkey, Australia	France, Australia, Netherland, Canada, Spain, Germany
I.1.b. Basic Education	US , UK	Ireland (13%)	France, Netherlands, Germany, Norway, Spain, Canada, Japan, EC
I.1.c. Secondary Education	France , Germany, UK	Turkey (8%)	EC, Japan, Spain
I.1.d. Post–Secondary Education	France, Germany	Turkey, Austria (35–45%)	Japan, Netherlands, EC
I.2. Health	US	Ireland, Canada (23%)	UK, Canada, EC, Japan, Germany, Spain
I.2.a. Health, General	UK	Canada (23%)	France, Canada, EC, Germany, Japan, Denmark, Norway, Sweden, Ireland
I.2.b. Basic Health	US	Canada (17%)	Canada, EC, UK, Japan, Spain, Germany
I.3. Population Pol./Program. & Reproductive Health	US	Island, Luxembourg (9%)	UK
I.4. Water Supply & Sanitation	Japan	Japan	Germany, EC, US, France, Netherlands
I.5. Government & Civil Society	US , EC	Australia, Portugal, Czech, Canada (35–40%)	UK, Germany, Canada, Australia, Norway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US , EC	Australia (35%)	UK, Germany, Canada, Australia, Norway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US , EC	Portugal, Greece (25–30%)	Norways, Germany, UK, Spain, Netherland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US , EC	Spain (17%)	Spain, France, Germany, UK, Japan
II.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US, Japan	Korea, Japan (35–40%)	EC, Germany, UK, France, Netherlands

II.1. Transport & Storage	Japan , US	Korea, Japan (25–15%)	EC, France, Korea
II.2. Communications	Japan, Korea , EC	Korea (9%)	Canada, UK
II.3. Energy	Japan, US	Japan (16%)	Germany, EC, Norway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UK , Germany	UK (20%)	US, Canada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Netherlands, US, EC	Netherlands (16%)	Germany, Japan, Sweden
III. PRODUCTION SECTORS	US, Japan , EC	Switzerland, Japan, Finland, Czech, Korea (13–15%)	France, Germany
III.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US , Japan	France, Finland, Switzerland, Korea (10–12%)	France, EC, Germany
III.1.a. Agriculture	US	France, Korea (10–12%)	France, Japan, EC, Germany
III.1.b. Forestry	Japan	Finland, Japan (4–7%)	Germany, Finland
III.1.c. Fishing	Japan , EC	New Zealand, Greece (1%)	Spain, Norway, Australia
III.2. Industry, Mining, Construction	EC	Czech (3–6%),	US, Japan , Germany, UK
III.2.a. Industry	EC, US, Japan	Czech, EC, Switzerland	Germany, UK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Japan	–	UK, Norway, US, Canada
III.2.c. Construction	UK*	–	Germany, Japan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EC , US	Netherlands, EC (3%)	Netherlands, UK, Japan, Germany, Sweden
III.3.b. Tourism	EC, Spain	New Zealand, Austria, Luxembourg (1%)	Japan, Austria, Korea
IV. MULTISECTOR / CROSS-CUTTING	EC , US, Japan	Italy, Switzerland, Australia (21–23%)	France, Germany, Spain, Netherlands, Australia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Japan, EC, France , US	Italy (18%)	Germany, Spain, Netherlands, Italy, Sweden, UK
IV.2. Other Multisector	EC , US	Switzerland, Australia (17–18%)	Japan, France, Germany, Austria, Spain, Netherlands, Canada

<Data Source: OECD Stats ※ 본 표는 2007년 자료를 토대로 처음에 만들어 졌으나, OECD Stats에서 2008년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이를 2007년도와 비교하여 검토함. 따라서 이 표의 주 내용은 2007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굵은체로 표기된 나라는 2008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절대적 주 공여국”임. *III.2.c. Construction에서 2008년의 주 공여국은 Spain임>

3. KOICA와 타 공여국의 중점 분야 비교

한국의 ODA에서 범위를 좁혀, 여기서는 협력단과 타 공여국의 중점 분야가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겠다. KOICA의 중점 분야는 경제(정보통신, 산업 에너지), 사회(교육, 보건, 행정제도), 생산(지역개발), 다부문(환경) 모두를 담고 있어서 모든 상위 섹터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협력단의 섹터별 세부 분야를 분석하기 위해 2007-2010년 중장기 전략에 따른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 분야의 목적과 타겟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KOICA의 7개 섹터별 목적(GOAL)과 타겟(TARGET)

Sector	Goal	Target
보건의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보급확대(Goal 1)	Target 1: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Target 2: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개선
	모자보건 향상(Goal 2)	Target 3: 임신부건강 수준향상
		Target 4: 유아건강 수준향상
	HIV/AIDS, 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Goal 3)	Target 5: 전염병 예방
		Target 6: 전염병 관리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Goal 4)	Target 7: 안전한 식수공급 확대
		Target 8: 식수원 관리 효율화
교육	기초교육기회 확대(Goal 1)	Target 1: 기초교육시설 확충
		Target 2: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
		Target 3: 교육정책·제도 수립
	직업훈련기반 구축(Goal 2)	Target 4: 기능인력 양성
		Target 5: 양질의 직업훈련 지원
		Target 6: 자격검정제도 수립
	고등교육환경 개선(Goal 3)	Target 7: 교육시설 확충
		Target 8: 고등교육기술 전수
행정제도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Goal 1)	Target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Target 2: 시장경제 정착지원
		Target 3: 산업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제고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Goal 2)	Target 4: 공공행정 역량배양
		Target 5: 부패방지 및 효율적 행정제도 구축
		Target 6: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Goal 3)	Target 7: 선진 법체계 마련
		Target 8: 체제 전환국 법 정비 지원
		Target 9: 사회안정 및 균형발전 지원
	민간경제 활성화(Goal 4)	Target 10: 중소기업 육성
		Target 11: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Target 12: 수출진흥
정보통신	IT 분야 인력양성(Goal 1)	Target 1: IT 교육제도 기반 구축
		Target 2: IT 교육 인프라 구축
		Target 3: IT 교육기회 확대
	전자정부 구축(Goal 2)	Target 4: 제도적 기반 구축
		Target 5: 전자정부 인프라 지원
		Target 6: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
	IT 활용기술 확산(Goal 3)	Target 7: 행정 정보화
		Target 8: IT 활용기술 역량강화

지역개발	농·어업 생산성 향상(Goal 1)	Target 1: 생산기반 정비 및 관리
		Target 2: 연구 및 기술강화
		Target 3: 농·어업 정책 역량강화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Goal 2)	Target 4: 수확 후 관리능력 개선
		Target 5: 농수산물 수출역량 강화
	농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Goal 3)	Target 6: 농어촌생활 인프라 지원
		Target 7: 농·어업 관련 조직강화
		Target 8: 농·어업 외 소득증대
산업 및 에너지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Goal 1)	Target 1: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Target 2: 철도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Target 3: 공항 인프라 구축 지원
		Target 4: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
		Target 5: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지원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Goal 2)	Target 6: 국토종합개발 제도 및 체제 구축 지원
		Target 7: 국토관리 능력강화 및 자립 가능성 제고
		Target 8: 종합 수자원 개발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Goal 3)	Target 9: 전력공급 확대
		Target 10: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확충
		Target 11: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Target 12: 산업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지원
환경 및 여성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Goal 1)	Target 1: 폐기물 관리 개선
		Target 2: 대기오염관리 개선
		Target 3: 상·하수 관리 개선
		Target 4: 토양오염 관리 개선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Goal 2)	Target 5: 산림보전역량 강화
		Target 6: 해양보호역량 강화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강화(Goal 3)	Target 7: 여성개발환경 개선

<Data Source: 국제협력단 2007-2010년 중장기 전략 >

[그림 6]은 위와 같은 중기 분야별 목적과 타겟에 따른 KOICA의 주요 사업을 나타낸다.

[그림 6] KOICA의 7대 분야별 44개 주요 프로그램



이제 OECD의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2009)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DAC 회원²³⁰⁾들이 중점 분야로 표방하는 섹터가 위에 나열한 협력단의 사업

23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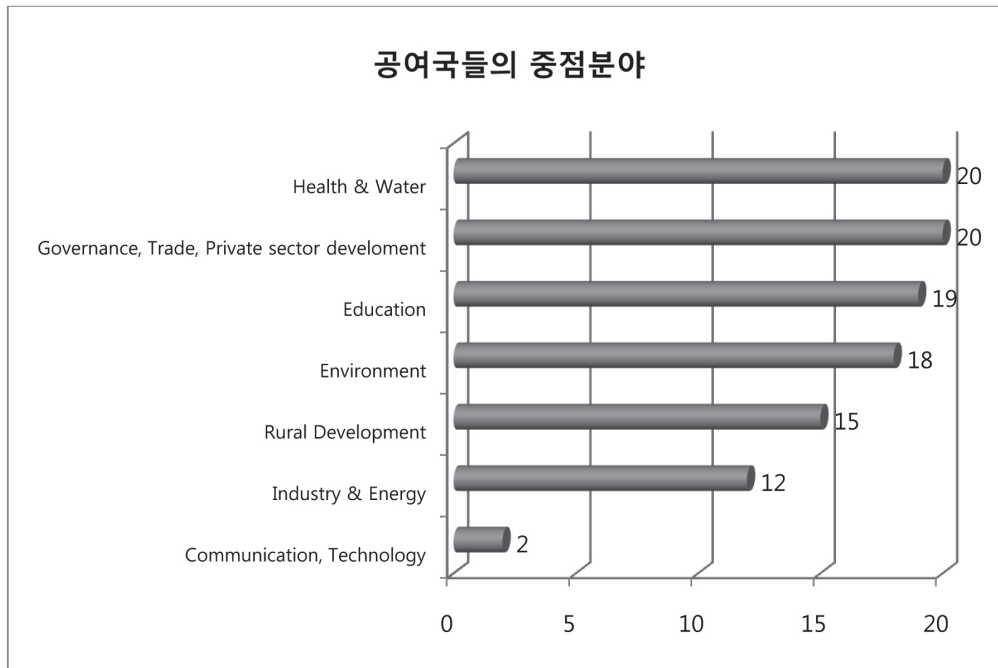
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1) 협력단의 7개 섹터를 중점 분야로 표방한 국가의 수

먼저 23개 선진 공여국들이 중점 지원 분야로 표방한 섹터를 협력단의 7가지 섹터로 재분류하여 섹터별 집중도를 검토하였다. 각 나라별로 섹터를 그룹화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협력단 기준으로 맞추는 재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공기업의 민간화가 다른 나라는 민간 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포함되고, 무역진흥(Trade)이 독립된 주제로 떨어져 나와 있으나 협력단은 이 두 부분이 모두 공공행정(Governance)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국은 식수위생 분야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으나 KOICA에서는 이것이 보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력단 기준을 따랐다. 그리고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은 농업(Agriculture)과 같이 분류하였고, 산업 에너지도 협력단 사업에 맞추기 위해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었다.

[Chart 11]을 보면 ICT와 비슷한 중점 분야는 독일의 신기술(New Technology) 정도여서, 우리나라 무상지원에서 가장 독특한 분야는 정보통신으로 볼 수 있다. 산업 에너지는 23개국 중 12개국인 과반 이하의 공여국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5개국에서 중점 분야로 꼽은 농업은 중간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 및 보건의는 23개국 중 20개국에서 중점 분야로 언급하여 가장 많이 중점 분야로 꼽히는 부문이고 19개국에서 선택한 교육과 18개국에서 꼽은 환경도 매우 일반적인 지원 분야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공공행정과 보건의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여국이 가장 많다는 점과 섹터로서 환경이 농업보다 앞서며 크게 약진했다는 점이다.

[CHART 11] DAC 공여국들이 표방하는 중점 분야: KOICA 섹터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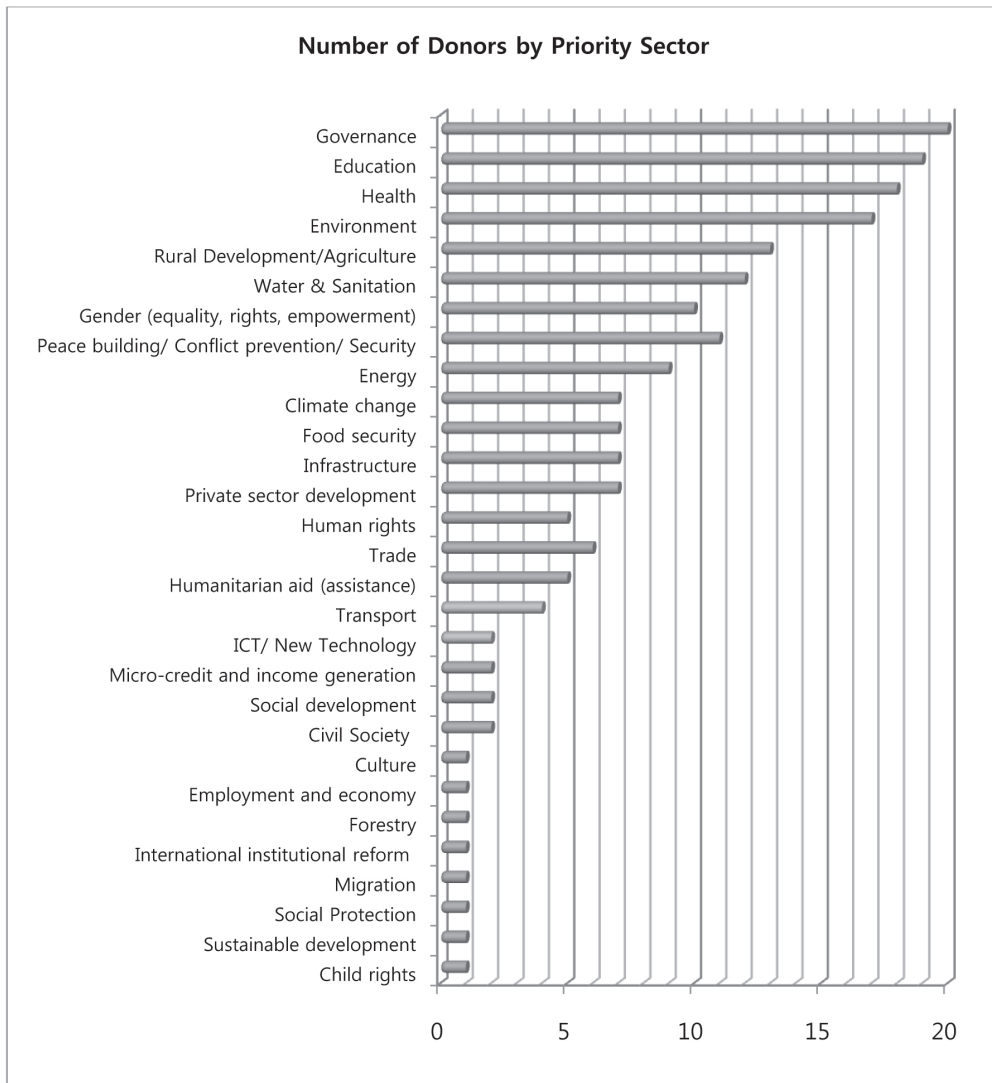


<Data Source: (OECD, 2009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2) 각 섹터 및 주제별 중점 국가 수

위에서는 협력단의 7개 중점 분야들을 얼마나 많은 공여국들이 중점 분야로 삼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이와는 별도로 선진국들이 중점을 두는 섹터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이 7가지 섹터 분류를 원래 타 공여국이 사용한 섹터의 이름을 이용하여 29가지 섹터 및 주제(Theme) 혹은 다부문 분야로 나누어(Disaggregate) 검토하였다[별첨 4: DAC 회원국의 중점 분야]. 그 결과는 [Chart 12]와 같다.

[CHART 12] DAC 공여국들이 표방하는 중점 분야: 일반적 섹터와 테마에 따른 분류



<Data Source: (OECD, 2009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흥미롭게도 교육과 보건을 제치고 공공행정(20개국)이 가장 많이 중점 분야로 꼽힌 것을 볼 수 있다.²³¹⁾ 이를 보면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에서 한국형으로 특화시

231) [Chart 11]의 섹터 분석과 [Chart 12]가 다른 이유는 보건 분야에서 식수 및 위생(Water and Sanitation)을 분리시키는 등 분류법(Grouping)의 차이 때문이다. [Chart 11]은 협력단의 섹터 분류를, [Chart 12]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분류를 따랐다.

키자고 제안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역량향상이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차별화하기 힘든 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과반수 이하로 나타난 세부 분야 중 KOICA 중점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는 2개국이 중점 분야로 꼽은 정보통신 및 신기술(ICT/New Technology), 4개국이 꼽은 수송(Transport), 6개국이 꼽은 무역(Trade), 7개국이 꼽은 인프라(Infrastructure)와 민간 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9개국이 꼽은 에너지(Energy), 그리고 12개국에서 꼽은 물과 위생(Water & Sanitation)이 있다. 즉, 협력단 세부 분야에서는 주로 ICT와 산업 에너지 부문, 그리고 행정 분야 중 중소기업 육성, 무역증진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개발, 보건 중 안전한 식수 사업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이 중점 분야로 덜 내세우는 분야에 해당한다.

3) 평균 섹터 수 비교

[Chart 12]와 같이 보다 세분화 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게 분야를 분류한다면, 협력단 프로그램은 11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Gender)까지 포함시 12개이다. 이에 반해 타 23개 공여국은 평균 8개 섹터를 지원하고 있어 KOICA의 섹터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섹터를 가진 나라는 4개를 중점 지원 분야로 꼽은 스웨덴이고 가장 많은 나라는 12개의 스위스와 한국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공공행정, 환경, 성 평등, 기후변화 등 사회 및 범/교차 분야(Cross-cutting)에 집중하고 있어, 사회, 경제, 생산, 다부문 등 모든 상위 섹터를 커버하는 협력단과 차이를 보인다.

4) 타 공여기관과 KOICA 중기전략에 명시된 섹터 내 사업의 목표와 내용비교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가 중기 사업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와 JICA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렬(Matrix)로 나타낸 결과 전자정부(e-Government) 및 ICT 인적역량강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이 두 나라에서도 사업의 목적(Goal)과 목표(Target)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별첨 5: KOICA, JICA, USAID의 분야, 목표, 타겟 비교 / 별첨 6: KOICA, JICA, USAID의 중복 세부 분야 분석 참고].

4. KOICA의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여기서는 각 세부 분야별 지원내역과 함께 사업평가 그리고 비교우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 협력단이 초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각 섹터별 중점 세부 분야와 사업형태를 분석한 후 그 사업들이 한국적 경험 공유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인지 논의하였다.²³²⁾ 세부 분야별 중점 지원내역은 원조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대규모 고비용 사업에 무게가 실리게 되어 있는데,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추후 분석시 사업건수나 지속성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실제 지불액 기준으로 협력단은 2001-2007년 원조금액에 대해서 합산한 것이며, 타 공여국은 데이터 질 문제로 2001년을 제외하고, 2002-2007년 동안 양·다자, 유·무상을 합한 모든 DAC 회원 및 주요 국제기구 데이터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사용 데이터에 관한 보다 기술적인 설명은 제 4장 분석틀 컬럼에 대한 설명 중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평가에 대한 논의는 분야 및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별첨 7: 분야별 평가 및 프로젝트 사후평가 보고서 목록 참고],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현황²³³⁾ 및 사업 부서와의 면담을 토대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단에서 중점 지원되고 있는 세부 부문의 성과와 경쟁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 수준에 따른 비교우위의 논의를 위해 협력단 및 타 연구기관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이는 주로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선진국의 몇 % 수준에 이르렀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논하였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시 선진국 수준의 기술보다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수준이더라도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맞는 적정기술에 대한 상대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개발단계에 따라 ‘적합’한 기술에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비교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본 보고서는 절대적·기술적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32) 「국제개발협력 통계활용 가이드라인」의 Annex 4 KOICA 지원분야와 DAC 분류기준은 연수, 봉사,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지원 등 각기 다른 형태의 KOICA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사업이 어떤 CRS 코드에 해당되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다. 그러나 사업형태를 통합하여 분야별로 분류해 놓은 기준이 없고, 여기에 협력단의 모든 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모든 CRS 코드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분류기준을 참고하되 각 CRS 코드에 들어가는 사업이 한 개 섹터 이상의 사업으로 실행될 때는 통계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가장 주요하게 지원되는 분야에 속하도록 분류하였다.

233) (KOICA, 2009)

1) 전체 분야

[표 10]은 협력단이 2001-2007년부터 세부 분야별로 지원한 지불액 기준 총액을 계산하여 순위별로 20위까지 나타낸 것이다. KOICA는 공공행정의 비중이 18.20%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7.62%인 정보통신, 그리고 직업훈련이 6.14%로 그 뒤를 따른다. 이로부터 협력단이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비중을 두어왔던 하위 섹터(Sub-sector)가 이 세 분야임을 알 수 있다[전체 표는 별첨 8: KOICA CRS 코드별 지원액과 사업형태 참조].

이를 DAC 양자 무상원조의 지불액 총액과 비교해볼 수 있다. [표 11]을 보면 DAC 22개 공여국에서는 고등교육이 4.20%로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HIV/AIDS가 3.20% 와 공공행정이 3.01%이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표 전체는 별첨 9: DAC 양자 무상 ODA에 대한 CRS 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참조]. 흥미로운 것은 DAC 공여국에서는 채무 변제가 20.05% 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섹터 원조가 국제협력단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채무 변제” 분야의 주 공여국이 프랑스, “HIV/AIDS 포함 성병대책” 분야의 주 공여국이 미국, 초등교육의 주 공여국이 영국인 것을 보면, 총 지원액은 원조액수가 큰 공여국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통점으로는 협력단과 타 공여국 모두 공공행정에 비중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상위 5위까지를 차지하는 하위 섹터는 교육, 보건, 행정제도이며, 협력단의 경우에만 통신 분야가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KOICA 원조목적코드별 총 지원액 합계 2001-2007

섹터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40	공공행정	209,261	18.20%	1
공여국 행정비용	공여국 행정비용	91010	행정 비용	97,772	8.50%	2
통신	통신	22040	정보통신	87,625	7.62%	3
교육	중등교육	11330	직업훈련	70,567	6.14%	4
인도적지원	재건	73010	재건 구호	52,880	4.60%	5
보건	보건일반	12191	의료 서비스	47,567	4.14%	6
교육	교육일반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43,661	3.80%	7
인도적지원	긴급구호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39,260	3.42%	8
보건	기초보건	12230	기초 의료 설비	34,232	2.98%	9
보건	기초보건	12220	기초 보건 진료	29,673	2.58%	10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61	문화 및 레크레 이션	29,634	2.58%	11
보건	보건일반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27,510	2.39%	12
교육	교육일반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21,034	1.83%	13
NGO지원	NGO지원	92010	공여국 내 NGO 원조	17,836	1.55%	14
교육	고등교육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6,622	1.45%	15
구분되지 않은 부문	구분되지 않은 부문	99820	개발인식 증진	14,238	1.24%	16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10	경제개발계획	13,966	1.21%	17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43040	농촌 개발	13,442	1.17%	18
에너지	에너지	23065	수력 발전소	12,754	1.11%	19
물/ 위생	물/ 위생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11,080	0.96%	2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11] DAC 양자 무상원조 원조목적코드별 총지원액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20	DEBT FORGIVENESS	72,942.55	20.05%	1
VIII.1. Emergency Response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21,041.00	5.78%	2
I.1.d. Post-Secondary Education	11420	HIGHER EDUCATION	15,293.48	4.20%	3
IX.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91010	ADMINISTRATIVE COSTS	14,345.12	3.94%	4
I.3. Population Pol./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11,648.53	3.20%	5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10,937.78	3.01%	6
VI.1. General Budget Support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10,773.82	2.96%	7
IV.2. Other Multisector	43010	MULTISECTOR AID	10,246.60	2.82%	8
XII. UNALLOCATED/ UNSPECIFIED	99810	SECTORS NOT SPECIFIED	9,969.50	2.74%	9
VIII.1. Emergency Response	72040	EMERGENCY FOOD AID	9,813.47	2.70%	10
XI. REFUGEES IN DONOR COUNTRIES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8,599.68	2.36%	11
I.1.b. Basic Education	11220	PRIMARY EDUCATION	7,548.15	2.08%	12
VI.2. Dev. Food Aid/Food Security Ass.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6,280.56	1.73%	13
X. SUPPORT TO NGO'S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6,112.37	1.68%	14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5,756.69	1.58%	15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3	NARCOTICS CONTROL	5,639.60	1.55%	16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 PLANNING	5,480.67	1.51%	17
I.2.b. Basic Health	12220	BASIC HEALTH CARE	4,452.63	1.22%	18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4,451.14	1.22%	19
I.2.a. Health, General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4,045.63	1.11%	2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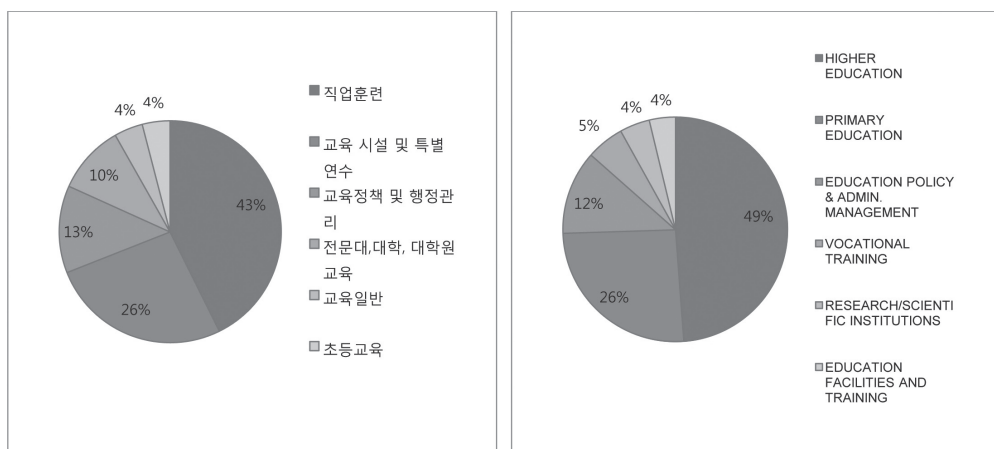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분야별 세부 지원 내역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2) 교육 분야

A. 교육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교육 분야는 협력단 2007-2008년 평균 420억 원이 지원되어 협력단 사업의 17.31%를 차지하며 이는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KOICA에서 2007년 대비 2008년 ODA 총액이 20% 늘어난 것에 비교하여, 이 분야 지원은 5.32% 밖에 늘지 않아 전체에서의 비중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섹터에서는 중등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Chart 13, 표 12] 특히 직업훈련의 비율이 40%에 육박하여 직업훈련원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한국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비중이 크다. 이는 또한 타 공여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과는 차이가 있다[Chart 13, 표 13]. 직업훈련 분야는 프로젝트 사업이 90.96%를 차지하며 연수생이 3.62%인 것으로 보아 교육 분야에서는 직원훈련원이 대부분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훈련 건립의 요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별첨 10: KOICA CRS 코드별 지원액과 사업형태 참고]. 다음으로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가 23.88%로 2위를 차지하는데 73%가 학교 건립사업 등의 프로젝트, 18%가 물자지원, 7%가 연수생 초청의 형태이다. 한국의 의무교육 제도를 전수할 수 있는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는 11.50%를 차지한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 56%와 연수사업 44%로 거의 반반씩 구성되는데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생 초청 등이 그 예이다. MDG와 관련 있는 초등교육은 5% 정도에 그치며, 그 중 대부분인 77%가 초등교육 관련 해외 봉사단 파견으로 쓰이고 있다.

[CHART 13]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교육분야 세부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Chart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서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표 12] KOICA 교육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고등교육	11400	고등교육	75	0.04%	14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6,622	9.06%	4
	11430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6,200	3.38%	7
교육일반	11100	교육일반	6,906	3.76%	5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21,033	11.46%	3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43,661	23.79%	2
	11130	교사 훈련	444	0.24%	12
	11182	교육 연구	608	0.33%	11
기초교육	11220	초등교육	6,689	3.64%	6
	11230	비정규 교육	255	0.14%	13
	11240	취학 전 교육	3,695	2.01%	9
중등교육	11320	중고등학교 교육	6,097	3.32%	8
	11330	직업훈련	70,566	38.45%	1
기타 다부문	43082	연구/과학 기관	695	0.38%	10
Grand Total			183,552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13] 타 공여기관 교육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4,009	10.95%	3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1,255	3.43%	6
	11130	TEACHER TRAINING	451	1.23%	10
	11182	EDUCATIONAL RESEARCH	155	0.43%	11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220	PRIMARY EDUCATION	8,577	23.43%	2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791	2.16%	8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108	0.30%	12
I.1.c. Secondary Education	11320	SECONDARY EDUCATION	948	2.59%	7
	11330	VOCATIONAL TRAINING	1,806	4.94%	4

I.1.d. Post-Secondary Education	11420	HIGHER EDUCATION	16,303	44.53%	1
	11430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763	2.08%	9
IV.2. Other Multisector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1,441	3.94%	5
Grand Total			36,613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교육 분야 평가

「교육 분야 지원사업 분야별 평가 보고서」²³⁴⁾에 따르면 직업훈련 분야가 기초교육 분야보다 효율성, 효과성, 파급효과, 차별성 등에 있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선 투자로서의 직업훈련(직훈)사업은 적절한 산업인력 육성이라는 수원국 개발전략에 부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미래 산업수요와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이미 직훈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여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왔으며 수원국들의 사업 요청이 매우 많다.²³⁵⁾ 또한 직훈 모델이 정형화되어 있고 전문가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의 예로 카자흐스탄의 자격검정센터는 우리 전문가의 자문, 초청연수 경험, 지원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자격 검정을 시행 중에 있는데, 2007년 자격검정을 실시, 850명의 공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고, 특히 현지 건설시장의 활황에 부응하여 검증된 건설 분야 인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있는 자동차 정비, 용접 등 신기술 분야 기능인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 국립기술훈련청의 모범사례로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직훈원에 있는 쇼브라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구축하였다.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은 다른 공여국에서 교육 분야 내에서 평균 4.94% 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40% 가까이 지원하는 우리와 차이를 보이며, 전체 원조시장에서의 공급이 적고 우리가 원조를 집중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별화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 분야 평가 보고서」(2008)는 개도국의 특수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적 여건 및 발전단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

234) (KOICA, 2008)

235)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7) 참고, 또한 2010년 수원국 수요 요청시 18건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에서는 최첨단 직훈시설 보다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국과의 차별성도 문제가 되는데,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평가」(2007)에 따르면 유사 훈련기관으로 독일에서 지원하여 설립된 라오스-독일 기술학교(Laos-German Technical School)보다 한국의 직훈원은 교과과정 특화가 부족하고 훈련기간도 짧은 데다가 학비도 비싼 단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기초교육 분야의 경우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로 학교의 건축 위주로 하며 제도 및 정책적 분야, 성인 기초문해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초기 의무교육 실시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초등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 기초적인 국민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확대해 나갔던 정책, 의무 초등제나 부족한 재원 충족을 위해 2부제나 야간학교를 운용한 경험,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자동 진급제 등의 시행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 교육정책 및 발전역량 개발이라는 사업의 비중이 적고, 교사나 교육 분야 전문가 중 원조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때문이기도 하다.²³⁶⁾

초등교육 분야에서 타 공여국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Early child education) 쪽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DAC 회원국 교육 분야 지원의 0.3%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타 공여기관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분야이며 UNESCO의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2008)도 취학적 교육과 성인교육에 매우 적은 지원이 분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처럼, 예방적 측면의 조기 개입이라는 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클 수 있고, 한국에 유아교육과가 많아서 봉사단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훈련 및 교육 연구는 타 공여국의 평균적 교육 분야 지원에서도 각각 0.3%, 0.4%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다. KOICA에서 현재 이와 관련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가나 교육과학체육부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실시하여 현직 및 보조교사 재교육을 실시, 총 180명의 교사가 교육을 받고 있는 동부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다. 또한 중등학교 교과서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정 교과서에 인쇄기를 지원하고 교과과정 개발에도

236) 교육팀 면담 (2009.10)

자문을 하고 있다.

「교육 분야 평가서」²³⁷⁾에 인용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SWAp을 통해서 개별 프로젝트 중심 혹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하고 일본 교육의 성공사례인 과학·수학 교육 등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발전전략을 개도국 교육발전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교육정책 지원에 43%의 원조를 쓴다. 직훈과 관련해서는 USAID와 독일 기술협력공사(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사업이 있는데 GTZ는 국별개발전략에 근거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인력양성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독일 내 직업훈련 연구소, 대학, 민간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맺고 있다. GTZ는 학교 건축보다는 교육정책부의 자문, 특히 재학생 성비를 유지하는 정책자문 같은 부문의 지원을 중시하여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형으로 제시된 이러닝(e-Learning) 연수사업은 2007-2008년에 한번 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연수평가가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전자 교과서나 원격교육 등 이러닝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제도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국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파트너국만이 이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수원국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동 프로그램의 실질 적용 가능성에는 국별 편차가 크다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C. 교육 분야의 비교우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²³⁸⁾에 의하면 고등교육과 훈련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134개국 중 12위를 하고 7점 만점 중 5.5를 기록해 비교우위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기초교육(Primary education)은 26위이며 열위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산업관리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 직업훈련 관련 기관이 있고, 특히 자동차 정비, 용접, 컴퓨터, 기계, 전자 등의 분야 및 기술교육과 교수법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³⁹⁾

그러나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의 직업훈련 제도는 산업수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며,

237) (KOICA, 2008)

238) (World Economic Forum, 2008)

239) (KOICA, 2007)

인력 개발 및 활용 정책 역시 개개인의 적성을 도외시 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능직보다는 적성과 상관없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여 대학에 가고 인기 전공과 직업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산업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원의 교과목이 편성되고 청소년들은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직업훈련생들은 직업학교에서 기술·기능인으로서의 직업관과 긍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며 수료 후 직업 변경 내지 이탈은 드물다.²⁴⁰⁾ 또한 이원화된 교육제도로 인해 인문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반드시 직업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²⁴¹⁾ 일본의 경우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젊은 인력이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풍토가 있다.²⁴²⁾

교육 분야는 봉사단 활용 여지가 큰 분야라는 점에서도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다. 협력단 봉사단 사업에서도 교육 분야는 2000-2009년간 해외 봉사단의 42.2%,²⁴³⁾ 즉 539명을 배출한 가장 주요한 분야이며 특히 유아교육, 청소년 지도, 기초교육,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봉사자를 구하기 용이하였다. 또한 협력단이 지원하는 민간협력사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개발 NGO 활동 역시 활발한 분야이다. 국제개발 NGO의 2004년 해외 봉사단 파견 분야 역시도 교육 분야가 16건(49%)으로 가장 많고, 여기에 직업훈련 활동 2건(6%)을 합하면 봉사단 및 민간협력을 통한 비교우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⁴⁴⁾

3) 보건 분야

A. 보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보건 섹터는 2007-2008년 평균 51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 지원이 전년 대비 42%나 늘었을뿐 아니라, 평균 21.19%가 지원되어 협력단 분야별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세부 분야는 27.22%가 할당된 의료 서비스와 19.59%가 분배된 기초의료설비이다[Chart 14, 표 14].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인 74.95%는 프로젝트 사업이고 의료단이 그 다음인 23%를 차지한다[별첨 10].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240) (서상선, 2002)

241) (서상선,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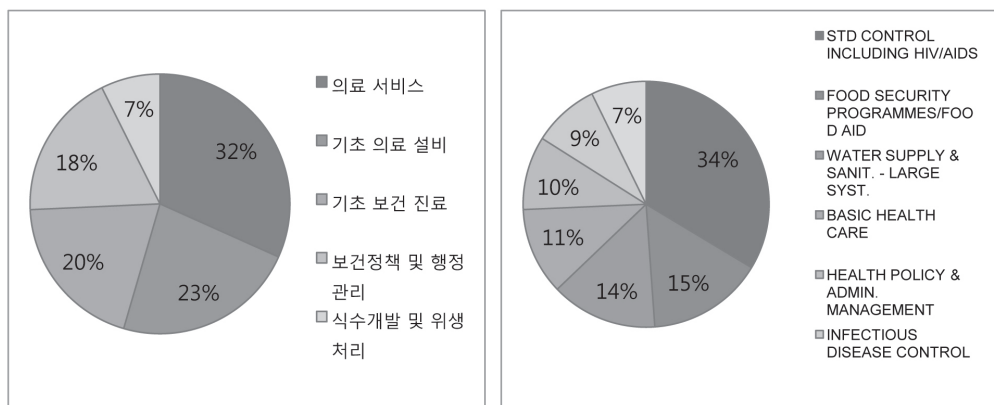
242) (서상선, 2002)

243) 현재 교육이 30.4%, 산업 에너지가 11.8%이나 산업 에너지로 분류된 직종의 봉사자들이 거의 직업훈련교육부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원조목적상 두 가지 모두 교육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44) (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7)

가 주로 병원건립과 보건소 건립, 의료기자재 지원, 그리고 의료인력 등의 파견으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업형태로는 개발조사 사업으로 실시된 파나마의 911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KOICA 보건사업은 HIV/AIDS가 가장 주된 세부 분야인 타 공여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Chart 14, 표 15], 의료 서비스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1.73%의 비중으로 밖에 지원하지 않는 차별화된 분야이다. 보건 분야 내 식수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²⁴⁵⁾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프로젝트(Water Supply and Sanitation-Large systems)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 한국적 경험이 성공적이었던 부문은 전염병 관리(1.94%),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0.01%),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0.69%), 기초 식수공급 및 기초위생(2.88%) 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3% 미만의 지출이 되고 있다. 17.42%가 지원되는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도 지역 의료보험 지원 등의 한국적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100% 연수생 초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 효과를 논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사업요소 투입이 단순하다.

[CHART 14]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보건 분야 세부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Chart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서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245) (OECD, 2009d)

[표 14] KOICA 보건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물/ 위생	14000	식수공급 및 위생	102	0.06%	21
	14010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2,174	1.24%	9
	14015	수자원보호	1,881	1.08%	11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11,080	6.34%	5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4,544	2.60%	6
	14081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17	0.07%	20
기초보건	12200	기초보건	275	0.16%	19
	12220	기초 보건 진료	29,673	16.98%	3
	12230	기초 의료 설비	34,232	19.59%	2
	12240	영양	1,248	0.71%	14
	12250	전염병 관리	3,063	1.75%	8
	12261	보건 교육	373	0.21%	17
	12281	보건 인력개발	700	0.40%	16
보건일반	12100	보건일반	30	0.02%	22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27,510	15.74%	4
	12181	의료교육/ 훈련	2,030	1.16%	10
	12182	의료 연구	3,809	2.18%	7
	12191	의료 서비스	47,566	27.22%	1
생식보건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12	0.01%	23
	13020	생식보건	1,410	0.81%	13
	13030	가족계획	354	0.20%	18
	13040	성병 대책(HIV/ AIDS 포함)	9	0.01%	24
	13081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1,089	0.62%	15
식량지원	52010	식량 안보 / 식량 원조	1,454	0.83%	12
Grand otal			174,748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15] 타 공여기관 보건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2.a. Health, General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4,676	7.26%	5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287	0.45%	18
	12182	MEDICAL RESEARCH	1,175	1.82%	14
	12191	MEDICAL SERVICES	1,117	1.73%	15
I.2.b. Basic Health	12220	BASIC HEALTH CARE	5,540	8.60%	4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1,753	2.72%	11
	12240	BASIC NUTRITION	798	1.24%	16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4,231	6.57%	6
	12261	HEALTH EDUCATION	241	0.38%	19
	12262	MALARIA CONTROL	1,378	2.14%	13
	12263	TUBERCULOSIS CONTROL	720	1.12%	17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204	0.32%	20
I.3. Population Pol./ Reproductive Health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2,192	3.40%	9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2,114	3.28%	10
	13030	FAMILY PLANNING	1,401	2.18%	12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16,253	25.23%	1
	13081	PERSONNEL DVPT: POP. & REPRO HEALTH	22	0.03%	22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10	WATER RESOURCES POLICY/ADMIN. MGMT	2,529	3.93%	8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6,756	10.49%	3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3,513	5.45%	7
	14081	EDUC./TRNG:WATER SUPPLY & SANITATION	129	0.20%	21
VI.2. Dev. Food Aid/ Food Security Ass.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7,378	11.45%	2
Grand Total			64,417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보건 분야 평가

보건 분야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 식수 관리, 기생충 관리 등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구 및 가족계획도 현재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모자보건사업은 MDG 달성이 가장 뒤쳐지고 있는 분야로, 각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²⁴⁶⁾ 이 분야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매뉴얼화된 예방보건 위주의 보건소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모자보건과 아동 사망률 감소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²⁴⁷⁾ 또한 모자보건사업은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고 문제의 약 85%가 1차 보건에서 관장될 수 있다는 사업특성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볼 수 있다.²⁴⁸⁾ 영양 및 백신사업과 함께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인구유입이 많으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도시 외곽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²⁴⁹⁾

사업의 예로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사업(2007-2008/120만 달러)은 보건부 및 국제협력처에서 열악한 국경지역에서의 모범적 협력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센터는 보건부의 협조 하에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최고의 보건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고, 센터 건물 및 내부시설이 우수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은 건축위주의 인프라 제공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여 간호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고 현지주민들과 함께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지 NGO들의 가족계획사업 중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활용하고, 사업 지역인 아르시 지역에 가족계획 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주요 성공 전략 중의 하나였던 지역사회운동(Community mobilization)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보건의료 분야 분야별 평가 보고서」²⁵⁰⁾에 따르면 KOICA의 의료 분야 사업 대부분은 종합병원 건축이나 전국 백신 배포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기적 중·대형 사업 위주로 요청이 들어오며, KOICA 역시 협력 대상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

246) (United Nations, 2008b)

247) (조성준 & 홍소정, 2007)

248) (조성준 & 홍소정, 2007)

249) 보건의료팀 면담(2009. 10)

250) (KOICA, 2008e)

지 못한 채 병원 및 진료소 건립, 기자재 지원,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건설 등 단기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 형태의 기술지원이 가족계획, 전염병 퇴치 등 개별 프로그램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시설이나 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개별 프로그램 형태로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시행하였으나 수직적(Vertical) 보건 사업²⁵¹⁾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자보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DFID만이 MDG 달성을 위한 모성보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여국이다.²⁵²⁾ KOICA 사업은 MDG 목표와 부합하는 식수공급과 모자보건사업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 역량강화, 혹은 인적·기술적 지원보다는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지원과 같은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KOICA는 단독적 보건소나 병원 건립 보다 다른 원조기관과 함께 국가협정(Country compact) 등을 통하여 모자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WHO 등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특히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방향과도 부합할 것이다.

선진국과 차별화 면에서 보면 결과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HIV/AIDS(MDG 6)에 최근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을 비롯, 많은 자원이 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차별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HIV/AIDS를 포함한 성병대책(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control)은 1990-1998년 전체 ODA 지원의 12%만을 차지했으나 1999-2004년에는 25%, 2003-2004년만 보면 거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²⁵³⁾ 예를 들면 르완다 인구의 3%만이 HIV 양성을 보이나, USAID의 대 르완다 원조의 2/3가 AIDS를 위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²⁵⁴⁾ 따라서 질병 부분에서는 HIV/AIDS 보다는 다른 전염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KOICA 는 또한 일본뇌염, 홍역, 간염 등 전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 사업을 하여 일본뇌염의 감염실태 분석과 백신

251) 수직적(Vertical) 프로그램의 예는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GAVI) 등으로 특정 주제와 목적에 지원됨

252) (KOICA, 2008e)

253) (OECD, 2008a)

254) (Smith, James., 2009)

공급 및 효능평가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0년 만에 기생충 감염률을 84%에서 2%로 떨어뜨린 경험과 토양 매개성 기생충을 박멸한 경험을 토대로 2000-2004년까지 중국 측의 기생충 관리사업에 총 100만 달러를 지원, 사업지역 내 간흡충 감염률을 반 이하로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²⁵⁵⁾ 기생충 관련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주요한 질병군 중 하나이며 꾸준한 수요요청이 제안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타 사업과 비교시 단독적인 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므로, 이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수개발 등과 같은 종합적 마을 개선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²⁵⁶⁾

식수개발은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의 우물개발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정과 정수를 거쳐 가정까지 보급하는 식수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공급²⁵⁷⁾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는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건설 등 다수의 해외사업 경험으로 식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원조수행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저비용의 기술이며, 타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동남아 지역에서 빗물 이용시설(Rainwater storage tube)을 설치하거나²⁵⁸⁾ 빗물을 받아 정수하는 사업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⁹⁾ 안전한 식수 사업은 중앙 아시아에서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위생과 관련해서는 중앙, 서부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성과가 매우 뒤쳐져 있는 것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MDG Report)」(2008)는 분석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에서는 또한 보건의료 교육훈련(0.46%)이나 인력개발(0.32%)이 모두 보건의료 분야 비중에서 0.5% 이하인 점을 보아, 보건의료 인적자원개발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 훈련, 연구는 다른 보건 분야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가 많고, 다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될 때가 있어 실제 지원보다 과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⁰⁾

255) (KOICA,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256) 보건의료팀 면담(2009. 10)

257) 상수도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되며, 수자원 공사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함.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

258) (한무영, 허옥경, 김충일 외 2010)

259) 보건의료팀 면담(2009. 10) 자세한 사항은 한무영 외.(2010). “빗물저장튜브 보급을 통한 아시아 물 빈곤 지역 식수난 해결 전략” 국제개발협력학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2010.1) 참고

260) (OECD, 2008a)

또 다른 이유로는 보건의료 인력양성이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고 두뇌유출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력단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1996년 네팔 보건대학 설립사업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단기 연수로 하고 있다. 보건정책 및 행정 그리고 기초보건 인프라 구축 분야도 1990-1998년의 각각 29%, 11%에서 1999-2004년의 18%, 7%로 타 공여국 지원에서 비중이 감소하는 분야이다.²⁶¹⁾

C. 보건 분야의 비교우위

보건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11번째 신약 개발국이며 원료 의약품 합성 등 응용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신물질 개발 기술력, 의료 정보기술, 전자 의료기기 산업 모두 선진국 기술 대비 50-60%이며 3-5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보건 분야 다자은행 수주 면에서도 열세이다.²⁶²⁾ 경쟁력 수준을 보면 의약품은 선진국 대비 61-64%로 4.3년의 기술격차를 보인다.²⁶³⁾ 의료기기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2%로 3.9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의료정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7-60%로 3.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시장은 소규모 의원급이 약 5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보이며,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해외진출 금융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해외진출이 어려운 편이다.²⁶⁴⁾

ODA 산업 면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활용한 전염병의 성공적인 퇴치,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나 녹십자를 활용한 B형 간염 백신 개발, 수자원 공사를 활용한 식수 공급, 정부 차원의 전통 의학에의 지원 및 한의학 교육 인프라 등에는 비교우위가 있다 하겠다. 한의학의 경우, 일본은 한약재료 개발 등에 뛰어나고, 중국은 인적, 물적 자원과 정치적 파워(Political Power)에서 앞선 반면, 한국은 한의학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있고 한의대 교육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²⁶⁵⁾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 등은 ODA 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공

261) (OECD, 2008a)

262) (권율, 박영호, 이종운, 황주성, 2006)

263) 의약품 분야별로는 바이오 보건의료 분야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 보건의료 분야 내에서는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노 바이오 기술 수준은 낮다. 바이오 보건의료 기술은 선진국 대비 58-63%로 3.8년의 기술격차로 보인다.

264) (권율, 박영호, 이종운, 황주성, 2006) 국가별 의약품 및 서비스 기준이 달라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265) 보건의료팀 면담(2009. 10)

공보건 관리인력이나 우수한 의료기술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²⁶⁶⁾

보건 분야 봉사단 파견은 1990-2009년 까지 분야별 파견실적의 15.1%를 차지하는데,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2008)에 따르면 특히 간호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봉사 단원 선발이 쉬운 분야이다. 또한 보건 분야는 민간협력사업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CSO)를 통한 지원이 활발한데, 주로 NGO의 보건의료 분야 활동은 정부사업의 틈새시장인 대도시 주변의 지방 도시에 소규모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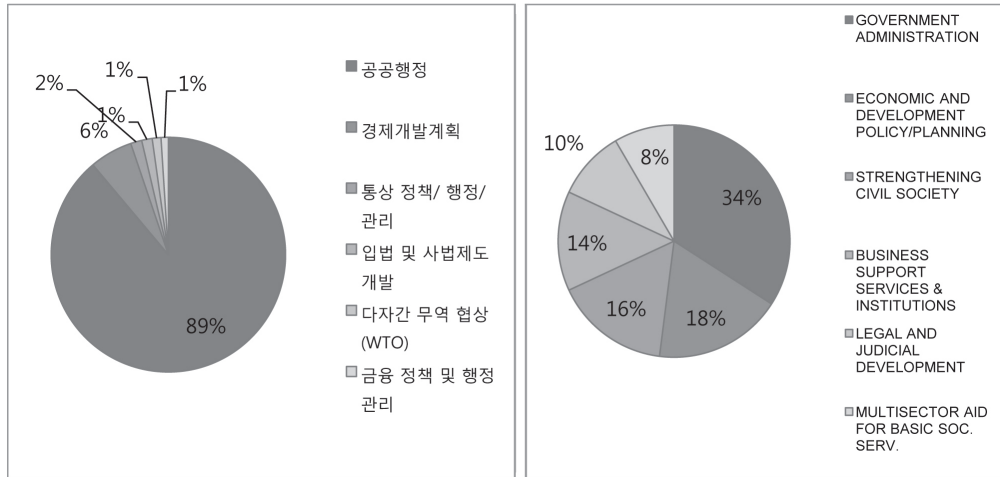
4) 행정 분야

A. 행정제도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행정제도 분야는 2007-2008년 평균 454억 원이 지원되었고, 비중으로는 18.68%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비중 있게 지원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대비 2008년 지원이 -7.72% 감소하여 유일하게 총액이 줄어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섹터에서는 특히 공공행정(Government administration) 세부 분야의 지원비율이 83.87%로 매우 높은 집중률을 보였다[표 16]. 다른 선진국들 역시 공공행정이 20.50%로 세부 분야로는 가장 높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협력단보다는 집중률이 덜하다 할 수 있다[표 17]. 협력단에서 공공행정 분야의 구성을 보면 물자지원이 69.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사업 19%와, 연수생 초청 11.33%이다[별첨 10]. 공공행정에서의 기자재 지원은 차량, 컴퓨터, 사무기기, 신탁기금, 외교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물자지원 등이 대부분이다. 프로젝트는 공무원 교육원 건립사업, 외교부 건립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포함되며, 연수는 지방 행정 외교관 연수, 지식 재산권 제도 연수 등이 들어간다. 이를 보면 행정제도 부문에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의 비중이 매우 커서 한국의 경험 전수에 특화되기는 힘든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개발계획 2.8%, 공공 부문 재정관리 0.2%,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0.69%, 기업강화 및 민영화 0.48%, 무역정책 1.98% 등 한국형 개발 공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전략자문 사업은 총 6.15% 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개발계획 분야는 46%가 연수생 초청, 34%가 물자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행정제도 분야는 경험전수가 대부분 연수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수사업 종료평가에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행정 분야이다.

266) 한국 한의학연구원 개도국 연수사업 담당자과 인터뷰

[CHART 15]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행정제도 분야 세부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Chart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서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표 16] KOICA 행정제도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금융	24010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2,363	0.95%	6
	24020	중앙금융기관	19	0.01%	22
	24081	금융 및 재무 부문 교육	91	0.04%	21
기업	25010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및 제도	2,215	0.89%	8
기타 다부문	43081	다부문 교육 및 훈련	1,106	0.44%	12
기타사회 인프라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611	0.25%	15
	1603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705	0.28%	14
	16050	기초사회서비스 다부문 원조	395	0.16%	17
	16062	통계능력 강화	314	0.13%	18
무역정책	33110	통상 정책/행정/관리	3,616	1.45%	3
	33120	무역진흥	1,859	0.75%	9
	33130	지역 무역협정(RTAs)	413	0.17%	16
	33140	다자간 무역 협상(WTO)	2,833	1.14%	5
산업/공업	32130	중소기업개발	2,346	0.94%	7
안전/평화	15240	동원해제 및 무장해제	18	0.01%	23
	15250	지뢰제거	201	0.08%	20

정부/ 시민사회	15110	경제개발계획	13,966	5.60%	2
	15120	공공부문 재정관리	987	0.40%	13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3,418	1.37%	4
	15140	공공행정	209,261	83.87%	1
	15161	선거	1,222	0.49%	10
	15163	자유로운 정보유통(기자교육)	312	0.13%	19
통신	22000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1,212	0.49%	11
Grand Total			249,493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17] 타 공여기관 행정제도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general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PLANNING	6843	10.77%	2
	1512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1861	2.93%	13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3684	5.80%	5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13032	20.50%	1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6141	9.66%	3
	15161	ELECTIONS	1446	2.28%	15
	15162	HUMAN RIGHTS	2685	4.23%	8
	15163	FREE FLOW OF INFORMATION	670	1.05%	20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737	1.16%	19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2858	4.50%	7
	15230	POST-CONFLICT PEACE BUILDING (UN)	2580	4.06%	9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863	1.36%	18
	15250	LAND MINE CLEARANCE	1255	1.98%	16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39	0.06%	29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 MGMT.	1875	2.95%	11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340	0.54%	22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 SERV.	3218	5.06%	6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394	0.62%	21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10	FINANCIAL POLICY & ADMIN. MANAGEMENT	1196	1.88%	17
	24020	MONETARY INSTITUTIONS	134	0.21%	25
	24081	EDUCATION/TRNG IN BANKING & FIN. SERVICES	49	0.08%	28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5298	8.34%	4
III.2.a. Industry	32130	SME DEVELOPMENT	1733	2.73%	14
III.3.a. Trade Policies & Reg.	33110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083.65	3.28%	10
	33120	TRADE FACILITATION	290.88	0.46%	23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205.59	0.32%	24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60.88	0.10%	27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110.88	0.17%	26
IV.2. Other Multisector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1862.49	2.93%	12
			6843.13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행정제도 분야 평가

행정제도팀 업무는 크게 (1)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2) 정부혁신 및 공무원 교육 (3) 행정 전산화 및 전자정부로 나눌 수 있다. 2010년 9건의 사업요청이 들어왔을 정도로 수원국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인 경제개발전략 수립지원사업은 베트남 경제연구소 지원사업(1994-1995),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사업, 알제리 산업정책개발 자문사업(2007-2008), 르완다 국가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사업(2007-2009) 등을 통해 한국의 정부 주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공유해 왔다.

베트남 경제전략연구소는 CPRS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베트남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연구 및 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자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증권거래소 수립사업은 한국증권거래소의 협조로 7년에 걸쳐 3차 사업으로 장기간 이루어져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핵심적 제도를 구축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⁶⁷⁾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던 반면, 알제리나 르완다 사업의 종료평가에 의하면, 수원국 역량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한국의 사례가 단편적으로 인용되며, 한국의 제도 역시 당시에 우리가 그 전략이 왜 필요했고 또 실행 가능한 동력과 역량이 무엇이었는지 경제·사회적 배경 없이 소개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KDI가 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과 지원 국가 및 전문가 인력풀이 중복될뿐 아니라, 행정제도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경제전략, 수출진흥, 국영기업 민영화, 중소기업지원, 무역협상지원 등의 세부 지원 분야가 중복된다[표

267) (권혁주, Hemmingson, Anna., 이영미, 2005)

40 KOICA 행정제도팀의 경제개발 추진 능력 강화 사업과 KSP 사업 비교 참고]. 또 우리나라는 공여국 평균 1/3 만을 행정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행정 분야 내에서도 경제개발전략 자본비율이 매우 낮으며, 다자은행 등에서 컨설팅 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등을 보면, 이 분야는 이론적으로 한국형 모델의 핵심일 것 같지만, 실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전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다른 개도국은 우리 산업화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역 측면에서 개방되어 있고 산업정책의 선별적·직접적 특성은 사라지고 있어서 한국처럼 보조금 지급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산업정책 영역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²⁶⁸⁾ 또한 노동, 자본, 기술을 분리(De-bundling)하여 외국에서 도입한 우리와는 다르게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국제적인 아웃소싱(International subcontracting)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저개발국의 기업가 육성 혹은 챔피언(Champion) 기업의 출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²⁶⁹⁾ 그리고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던 한국의 고속성장시대와는 달리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동시에 남남협력 및 지역적 통합(Regional integration)으로 인한 개도국간의 교역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으며 우리가 발전을 이뤘던 시기보다 무역 의존도(36.8% : 4.3%)와 부채비율(81.1% : 16.1%)이 높고 제조업 수출비중은 낮으며 강력한 동원 체제도 아니다. 우리의 개발 당시와 초기 조건이 비슷한 나라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으며 우리가 발전을 이뤘던 시기보다 무역 의존도(36.8% : 4.3%)와 부채비율(81.1% : 16.1%)이 높고 제조업 수출비중은 낮으며 강력한 동원 체제도 아니다.²⁷⁰⁾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주 요소들로 냉전 당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²⁷¹⁾, 높은 교육열과 유교문화, 그리고

268)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의 상계가능보조금. 협정문은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서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 수출 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한 산업, 기업 또는 지역에 공여됨으로써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보조금으로 이 경우 상대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자국법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수 있음. 허용보조금은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여되어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을 의미하지만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환경,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은 일정 요건 하에서 허용보조금에 해당됨.

269) (박복영, 채욱, 이제민,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270) (박복영, 채욱, 이제민,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271) Developmental States 이론은 한국과 대만의 기적과도 같은 개발의 결과는 냉전시대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두 나라가 타 신생 독립국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매우 특수한 개발 환경, 즉 높은 원조 수준, 정책적 자유, 미국시장에의 접근성 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모범 사례로는 오히려 인도나 브라질 등 중도적 산업화의 경우가 더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본다 (Haslam et al, 2009).

강력하게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정부(Hard state or Benevolent dictatorship) 등이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조건은 보통 개도국에서 찾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실패와 성공의 요소를 포함한 교훈을 얻고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장하준(2003)은 타 개도국에서 한국 등 동아시아의 경험을 복제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한국이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우수한 제도구축과 같은 선결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 비판한다. 즉, 한국이 우수한 행정제도를 만들고 제도적 적응(Institutional adaptation)을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경험이며, 제도 역시 기술(Technology)이나 시장(Market)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변화하고 적응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⁷²⁾ 덧붙여, 한국이 갖춘 선결조건 때문에 발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발전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인지의 인과관계 방향이 모호할 수도 있다. 이를 보면 한국이 물려받은 역사나 문화, 국가 정체성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Resource endowment and internal heritage)을 다른 개도국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성공적 개발의 핵심적 장애물(Binding constraint)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²⁷³⁾ 역시 최빈국들이 여전히 보조금 제도(Permissible subsidies)나 수량제한(Section B GATT Article XVIII: Quantitative Restriction)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보호무역과 각종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적 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TRIPS)에서 2016년까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시사점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수원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 공여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개발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개발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원조 보완성 측면에서도 필요한데, 선진국들이 정부와 시민사회 부문의 세부 분야 중 분쟁, 평화, 치안(15200)이라든지 정부와 시민사회(15100)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개발계획(15110)은 원조비중을 줄여왔으므로[Chart 5 참

272) (Chang, Ha-Joon., 2003), (Chang, Ha-Joon., 2007) 장하준은 앵글로 색슨 모델의 시장(Market)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행정제도(Bureaucracy)는 그렇지 않다는 시각은 모순되며 둘 다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의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봄.

273) (UNCTAD, 1996)

고], 한국이 이러한 틈새시장을 파고들 여지가 있을 것이다.

원조시에는 한국의 개발전략 및 성공요소와 한국 개발모델의 한계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박스 2].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나라를 선택하여 제조업 등과 같이 수출 주도 성장에 특히 도움이 되고, “개발 측면에서 영양가 있는(Developmentally nutritious)” 산업을 선택하여²⁷⁴⁾ 세계나 금융지원을 하고, 한국의 수입·수출 정도와 품목, 속도와 정책순서, 마켓을 인용하기 보다는 각 개도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지원 산업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²⁷⁵⁾ 예를 들어 행정력의 부재나 무역 자유화 등으로 인해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과 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에게는 한국의 산업정책보다는 동남아시아 혹은 중국의 산업정책과 비슷하거나 더 약한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박스 2]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성공요소 및 보완점

- 박복영 등은 한국의 성장 8가지 요인으로 중화학 공업화가 전반적인 수출 지향적 발전 위에서 이루어지고, 제품주기상 성숙산업의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선별하였으며, 국내시장이 보호된 상태에서 기업들간 유효경쟁(Effective contest)이 진행되었고, 기업가적 재능이 공급되었으며, 수출 보조금과 덤핑에 힘입어 수출이 가능했고, 유평경합과 점진적 개방의 실행을 위한 경성국가(Hard state) 및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박복영, 채욱, 이제민,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 Stiglitz는 한국 정부가 자원을 성과에 따라 배분하여 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활발한 교육정책으로 생산적인 노동력을 만들고 평등한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 정치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수출·교육·기술을 강조한 점, 조율자(Good coordinator)로서 기업간 경쟁을 유발한 점 등을 성공 요소로 꼽았다(Stiglitz, Joseph., 1996).
- Leipziger와 김기환 역시 정부의 건실한 거시경제 정책 사용, 외향적 기업,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육성 등이 적절했다고 본다(Leipziger, Danny & Kim, Kihwan., 2000).
- UNCTAD는 정부가 선택적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 자원을 낡은 사업(Old Industry)에서 새로운 산업(New Industry)로 옮겨 장기적인 사업 발달의 전망을 바꾸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생산품을 다양화한 점으로 보았다(UNCTAD, 1996).

274) (Oyejide, Ademola., 2004)

275) (UNCTAD, 1996)

- 이를 종합하면, 강한 정부가 결과 지향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수출산업 육성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형평 지향적 정책(Pro-equity policy)을 통해 국민의 교육과 보건을 강화하여 이에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양성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한국 모델이 극복해야 할 점은 정부가 금융시장의 배분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관치금융과 외환위기를 가져온 높은 부채비율 및 외환차입일 것이다. 또한 지나친 수출의존과 약세인 내수시장, 높은 석유 의존도 등으로 세계 경제의 충격에 취약하게 되었다. 지나치게 빠르고 강력했던 중화학 산업 육성(Heavy chemical industry drive)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 부실을 가져온 면이 있다.

공무원 교육으로는 한국이 각 공화국을 거쳐 가며 거대부패, 관료부패, 제한된 자원 분배상에서의 부패 등 여러 종류의 부패를 점진적 과정과 금융실명제 등의 제도를 통해 개선한 사례가 활용 가능하다.²⁷⁶⁾ 사업의 예로는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 교육 및 인도네시아 정부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부혁신사례와 부패척결사례를 소개한 것이 있다. 최근의 공무원 행정역량 배양은 세계은행 등에서 강조하는 바에 따라 공공부문 성과관리, 혁신, 부패 등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사례는 1970-1980년대의 경험보다는 1990년 말에서 2000년대, 즉 최근의 경험에서 찾아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²⁷⁷⁾

국제무역 활성화는 협력단과 마찬가지로 다른 선진국도 매우 적게 원조하는 분야다. DAC 회원국 평균을 보면, 무역진흥 세부 분야는 행정제도 분야 내에서 0.46%를 차지하고, 지역무역협정은 0.17%, 다자간 무역협정은 0.1% 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차별화 여지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 사업의 예로 들 수 있는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사업(2008)”의 경우 공동연구와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무부 인력들이 현재 캄보디아와 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역내 협상 등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²⁷⁸⁾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사업 평가 보고서」(2008)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부가 캄보디아의 19개 특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공동연구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거나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한 경우는 협력단뿐이었다고 한다. 국제무역 활성화 세부 분야에서는 관세행정기법, 관세행정 정보화, FTA 금융투자 협

276) (박복영, 채욱, 이제민,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2007)

277) KOICA 행정제도직원 인터뷰(2009.10)

278) (KOICA, 2008g)

상능력 등 다양한 연수과정이 제공된다. 특히 한국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ISO 2000 서비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UN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무역과 IT를 결합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분야를 단기 연수가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으로 패키징화 되면 더욱 틈새시장 공략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경제·무역 정책 공유는 연수생 초청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2007, 2008년 연수과정 종료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대체로 높은 기술 수준의 경우 견학은 이루어졌지만 교육내용이 일반적·개론적 수준이어서 실용적이지 못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한국의 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참가자간 토의를 통해 각 국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연수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또한 때로는 산업시찰이 수원국 사정과 맞지 않고,²⁷⁹⁾ 특정 국가나 지역 전문가가 부재하며, 훈련 기간이 짧고, 언어의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주요한 제언으로 나타났다.

행정 전산화는 정보통신 섹터에서도 실시하나, 정부에서 다루는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행정제도팀에서 실시하고 있다.²⁸⁰⁾ 동 사업의 예로는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 현대화 사업이 있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로부터 마약통제 성공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약통제 경험을 역시 비교우위로 평가받는 IT 분야와 접목시킨 사업으로, 관련 장비를 제공하고 전산망을 구축하여 공무원들이 마약통제자료 수집 및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업이며 전산망 구축 가능성을 제공하였다.²⁸¹⁾ 그러나 평가서에 의하면 방화벽 등의 문제로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시장경제 지원과 관련, 우리의 발달된 증권 시스템을 활용한 베트남 증권거래소와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지원 등의 예가 있다.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1.88%), 금융 및 재무교육(0.08%), 민영화(0.21%)도 타 공여국 및 협력단의 지원이 모두 적은 분야이나, 증권시스템 구축 외에 우리 금융 부문은 영국이나 룩셈부르크와 비교해서 산업적 비교우위가 있는

279) 국가의 주요산업이 농업인 라오스 공무원들에 대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찰이 부적절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음. 또한 수업 중 전자정부 혁신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률이 5%인 라오스에게는 관련성이 적을 수 있음.

280) 예를 들어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 현대화 사업의 경우 베트남公安부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정부와의 사업경험이 많은 행정제도팀에서 맡음(행정제도팀 인터뷰, 2009. 10).

281) (KOICA, 2008c)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C. 비교우위

비교우위 면에서 2008년 세계정부지표(Worldwide Government Indicator)는 한국정부의 제도적 효율성이나 규제 질은 80%로 높게, 정치의 불안정성은 60%로 낮게 보았다.

「2009-2010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관료제도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보았으나 반면 혁신능력(Capacity for innovation)은 우리의 비교우위로 평가했다.²⁸²⁾

한국정부가 보인 모범관행(Good practice)의 요소, 즉 정부가 기업간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유발하고, 자원을 성과에 따라 배분하여 부패의 여지를 줄인 점 등은 우리의 개발경험과는 다른 시기에 상이한 정치·경제 환경을 가진 나라에도 여전히 교훈을 주는 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경험 분석과 전달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제기구의 자료나 다른 공여국의 자료 혹은 개도국에서의 현지조사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협력단이 다른 원조국과 원조분업 차원에서 공동지원을 한다든지 타 공여국과 함께 공동지원전략(Joint Assistance Strategy)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부족한 점에서도 기인될 것이다. 공공행정 경험전수의 다른 장애 요인으로서는 사회 컨설팅 역량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2003-2007년까지 세계은행 수주에서 컨설팅(Consulting) 부문은 0%여서 142위로 최하위이고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도 컨설팅 부문은 0.3%의 수주비율로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²⁸³⁾ 정책 및 사회 컨설팅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도 있지만²⁸⁴⁾ 진입을 위해 장기적인 학습과 시간이 필요한 부문에 많은 시도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⁸⁵⁾

282) (World Economic Forum, 2008)

283) (박복영, 권율, 정성춘,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2008)

284)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에 따르면 세계은행 컨설팅 사업은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아시아 개발은행 컨설팅 사업은 미국, 호주,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파키스탄,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가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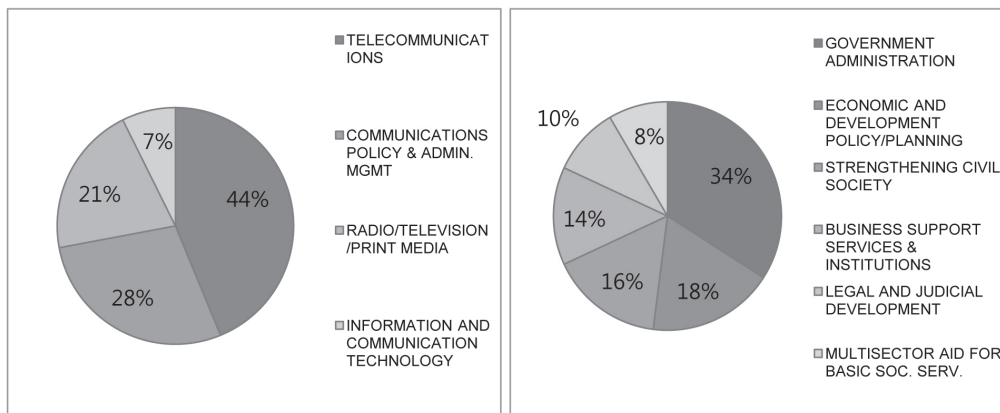
285) 국제개발협력사업 입찰정보 중개업체인 The Development Executive Group(Devex) 대표 Raj Kumar 인터뷰(2009년 7월)

5) 정보통신 분야

A. 정보통신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정보통신 분야는 2007-2008년 평균 327억 원이 지원되었고 협력단 전체의 13.48%를 차지한다.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37%이고 비중 면에서는 11%에서 12%로 소폭 상승하였다. ICT 분야는 전통적인 개발 섹터가 아니기에 하위 섹터가 없어서 자세한 분류는 힘들다. 표 18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 섹터 내에서 협력단은 ICT에 거의 대부분인 89%나 지원하는데, 이는 타 공여국이 ICT에 7%만 지원하는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Chart 16, 표 19]. 정보통신 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사업형태는 69%가 프로젝트고 21%가 해외 봉사단 그리고 8%가 연수생 초청이다[별첨 10].

[CHART 16]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정보통신 분야 세부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Chart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서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표 18] KOICA 정보통신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통신	22010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9,933	10.11%	2
	22020	통신/ 전화	248	0.25%	4
	22030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 매체	432	0.44%	3
	22040	정보통신	87,624	89.19%	1
Grand Total			98,240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표 19] 타 공여기관 정보통신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I.2. Communications	22010	COMMUNICATIONS POLICY & ADMIN. MGMT	511	28.28%	2
	22020	TELECOMMUNICATIONS	791	43.76%	1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372	20.62%	3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32	7.34%	4
Grand Total			1,807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정보통신 분야 평가

독일이 중점 섹터로 신기술(New Technology)을 내세우고 있어서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점 섹터를 정확히 ICT로 내세우는 공여국은 없기에 섹터 자체가 매우 특징적이다. 우리는 정부 주도로 국가 정보화를 추진한 개발경험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서 통신망 보급률이 높거나 세계적인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별 기업활동 차원에서 정보화가 진행된 것과는 다른 성격이다.²⁸⁶⁾ 이러한 측면에서 ICT는 독립된 섹터든 범분야(Cross-cutting)로든 한국의 독특한 개별협력 중점 분야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ICT는 전체 2002-2007년 양·다자, 유·무상 원조를 합한 ODA 사업의 194개 CRS 코드 분류 중 지원총액 면에서 150위를 차지하여 다른 공여국에서 많이 지원되지 않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별첨 11: 양·다자 유·무상 ODA CRS 코드별 지원 총액, 비중, 순위 '02-'07 참고].²⁸⁷⁾ 또한 타 공여국과 섹터별 분배를 비교했을 때 원조자원의 상대적 분배와 절대적 크기, 그리고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수주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사업의 대부분이 정보통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조목적코드상 이

286) 정보통신팀 검토의견. 이렇게 민간이 아닌, 정부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개발한 국가 정보화 사업은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되고 있으며 개도국과도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287) ICT 분야는 전통적인 개발 섹터가 아니기에 상위 섹터로 분류시 하위 섹터가 4개 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하위 섹터가 많은 다른 분야처럼 차별성에 관한 점수를 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 CRS 코드 중 비중과 순서로 차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분석에 있어 제약점이다. DAC 원조목적코드 상 분류원칙에 의하면, 분야별 정보화에서 의료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한다면 이는 보건 섹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에 들어갈 것이고, 전자정부는 목적상 정부부처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거버넌스(Governance) 섹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협력단의 정보통신 분야 사업은 크게 ICT 훈련센터지원, 전자정부지원, 분야별 IT 활용기술 확산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IT 분야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한-베 친선대학 설립사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된 베트남 중부지역 거점도시 다낭에 2,400명 학생의 수용이 가능한 3년제 IT 전문대학을 설립한 1,000만 달러 지원의 최대 규모 사업이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 4개 위탁평가 보고서」(2007)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IT 전문가 훈련센터는 우즈베키스탄 IT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고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방글라데시 훈련센터 역시 여러 기관에서 운영설비, 교과목 구성 현황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였다. 한편 한-필리핀 IT 훈련원 건립사업의 경우는 교육대상, 커리큘럼, 기업체의 인력 및 기술 요구수준, 채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즉,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IT 교육과 훈련센터, 교육생간의 일치가 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사업은 한국의 우수성이 UN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을뿐 아니라 수원국의 수요가 2010년 한 해만 16건으로 매우 높으며, 한국형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자정부사업도 여러 부분이 있겠으나 특히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수원국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²⁸⁸⁾ 이 밖에도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 법무부의 출입국심사브랜드 “KISS”,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 통합 서비스 “포스트넷(PostNet)”, 특허청의 온라인특허출원시스템 “특허로” 등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표 20].²⁸⁹⁾

전자정부사업의 예로, 라오스 전자정부사업은 연수생 초청과 전자정부센터 교육장 기자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정책 관리자와 실무자 과정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공유하며,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 종료 후 라오스의 전자정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었다.²⁹⁰⁾ 단, 데모시스템의 경우 완성도가 낮아 홍보 역할에 그

288) (경제정책 비서관실, 2007)

289) (경제정책 비서관실, 2007)

290) (KOICA, 2008a)

쳤고, 전자정부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확보와 라오스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인터넷 사용자가 낮은 라오스에 적용이 힘들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가나 전자정부 구축사업(2007-2008)에서는 외교부의 여권비자업무를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PC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현지 전압 사정으로 시스템 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외교부 내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를 자체 시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가나 정부 인프라 구축능력과 우리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능력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저소득국의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전기 사정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전산실 전기 안정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시 현지 기술인력이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하며, 사업완료 후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3-6개월간 전문가가 현지 기술자와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²⁹¹⁾ 반면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된 요르단 정치개발부 및 교통부 IT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는 적절한 기자재가 지원되었으나, 이와 함께 초청연수 및 IT 전문가 활동에서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²⁹²⁾

정책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베트남 IT 입법초안 지원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ICT 입법 분석틀(Framework)을 위한 국가비전 제시와 IT 관련 법 초안을 전문가 지원과 연수사업을 통해 제공하였다. 본 안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법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것이라 기대되며, 이 사업은 기자재 지원사업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원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원조의 가능성을 보인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약점으로는 IT법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으며, 해외원조사업 경험과 해당 지역 해당 국가의 IT 섹터 및 콘텐츠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²⁹³⁾ 미얀마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에서는 다소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미얀마 상황에 특화되지 못하여 행동계획(Action plan)이 수립되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미얀마 최초의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였다. 「사후평가 보고서」(2008)에 의하면 연수생들이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 부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요구하였고, 미얀마 정보화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미얀마 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점이 지적되었다.

분야별 정보화 촉진사업의 예로는 몽골 IT Park 구축사업(2002-2003)이 있으며 성공적인 동 사업 이후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설립,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파테말

291) 정보통신팀 검토의견

292) (KOICA, 2007b)

293) (KOICA, 2008d)

라 및 우즈베키스탄의 전자 도서관(e-Library) 사업,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개발센터 IT 구축사업, 우크라이나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의 예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최신 제품이 빠르게 나오는 IT 분야에서 기자재 위주의 공여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즉, 기자재 고장과 소모품 부족, 짧은 제품 주기, 그리고 우리와 IT 사용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충돌로 방치될 가능성으로 인한 낮은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타 공여기관의 활동을 살펴보면 전자정부(e-Government)라든지 정보화 전략수립에 관한 정책 검토는 USAID와 UNDP에서 실시하고 있다.²⁹⁴⁾ 또한 인재육성 관련해서는 JICA와 세계은행, 통신 인프라 정비는 JICA, 세계은행, UNDP 등에서 하고 있다. 전자조달 등은 개발도상국 정보격차해소재단(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에서도 지원 중이다. 미국의 USAID는 일본의 JICA와 제휴를 통해 IT 협력사업 공동평가, 포럼 및 워크숍 참여 등 교류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공여기관의 공동지원 움직임이 있다.

C. 정보통신 분야의 비교우위

우리나라는 높은 IT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2005)에 의하면 양적 지표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급이다.²⁹⁵⁾ 「OECD ICT Outlook」(2008)도, 우리나라의 ICT의 수출 특화도, 즉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가 OECD 국가들 중 1위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IT는 소프트웨어 보다 제조업 비율이 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²⁹⁶⁾ 하드웨어 부문은 최근 중국과 대만의 급부상으로 인해 예전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²⁹⁷⁾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IT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87.9%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경향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차세대 이동통신, 텔레매틱스(Telematics), 광대역통합망, 디지털 TV 방송 분야의 홈 네트워크, 차세대 컴퓨팅 및 주변기기, 지능형 로봇, IT SoC 및 부품, RFID/USN 임베디드 소

294) (조원권 & 박정호, 2005)

295) (홍동표, 고상원, 문성배, 2005)

296) (EIU, 2009)

297) (홍동표, 고상원, 문성배, 2005)

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는 선진국의 83~89% 수준이며, IT 융합과 소프트웨어 솔루션(Solution)은 보다 낮아서 75~79% 수준이다.²⁹⁸⁾ R&D 및 기술 혁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적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출원건수도 많으나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

한국의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아이러니한(Ironic) 것은 이것이 ODA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경쟁력 있는 품목과 수출 효과품목인 반도체나 LCD, 고급 휴대폰 등은 개도국 사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PC, 통신선, 솔루션 이외에 고기능의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OS 시스템 등의 장비는 국산품이 없어 수입품을 써야 하는 실정이다.²⁹⁹⁾ 우리나라는 휴대폰과 전자통신 강국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를 활용한 원조도 활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계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Vodafone)은 휴대폰 신규 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³⁰⁰⁾ 그라민폰(Grameenphone)은 “Village Phone Program”으로 휴대폰 대여를 통해 방글라데시 벽지의 농촌 여성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력사업을 찾기 힘들다.³⁰¹⁾ 또한 이는 한국의 산업적 비교우위가 꼭 원조산업에서의 비교우위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행정 정보화 관련 전자정부 구축은 한국의 비교우위/UN 전자정부 준비지수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중 2004-2005년 2년 연속 5위, 2008년에는 6위로 평가 받았다. 또한 UN과 OECD 등에서 공공서비스상(Public Service Award)을 받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선정되었으며,³⁰²⁾ 성균관대의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자참여(e-Participation) 지수는 UN 2008년 전자정부 준비지수 중 2위로 거의 최상위에 위치한다.³⁰³⁾ 전자정부 달성수준에 대해 살펴

298)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299) 정보통신팀 면담(2009. 10)

300) (통계청, 2009)

301) 이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제품의 A/S가 되지 않는 지역에 자사 제품을 공여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팀 면담(2009. 10)

302) 2003년 First UN Public Service Award, 2004년 Best e-Government Service Provider by the OECD, 2004 UN의 Best practice model for e-procurement from around the world, 2005년 BS 15000 by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6년 Global IT Excellence Award in the Public Sector by the 15th World Congress on IT.

303) (United Nations, 2008)

보면, ‘착수’ 및 ‘발전’단계의 달성수준은 각각 100점과 93점을 받아 선진국에 버금가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상호작용’ 단계의 달성수준은 76점으로 선진국 최고점수(90점 내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자거래나 통합처리 등 전자정부 상위단계에 대한 발전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처별 전자정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표 20] 정부혁신 국내의 공인인증, 수상, 및 수출실적

부처명	사례명	공인인증 수상실적	수출 대상국	수출액
법무부	출입국심사 혁신브랜드 “KISS”	국제공항협회(ACI): 출입국심사 부문 5분기 연속 1위		
국세청	“홈택스”	’06년 OECD보고서: 세계적인 전자세정 활성화 우수사례로 수차례 소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UNI-PASS”	반부패포럼: 세계적 부패방지 우수사례로 선정(’03), 미주개발은행 주관 아시아지역 최우수사례 선정(’02)	도미니카, 카자흐스탄	278.54억 원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 통합 서비스 “POSTNET”	UPU EMS 금상 수상(’05), World Mail Award 2관왕 수상(’05, ’06), CMMI level 3 인증,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우편서비스 8년 연속 1위, 택배산업부문 4년 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NSCI): 공공행정서비스 4년 연속 1위	미국, 유럽	2,457억 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 1회 UN 공공서비스상 수상(’03.6), 전자조달 세계 대표사례 선정(’04.11), 제 4회 세계정보기술올림픽 공공분야 최우수상 수상(’06.5)	베트남 (진행 중)	28.5억 원
특허청	온라인 특허출원시스템 “특허로”	국제특허출원 전자접수시스템 WIPO 정보기술표준으로 채택(’06.5), ISO 9001인증 및 국내정부기관 최초 CMMI Level 4 획득	스페인, 미국	1.9억 원

<Source: (경제정책 비서관실, 2007)>

통신기반정비 같은 사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텔레콤 사업에서의 성공이 돋보이고 한국 통신망 시장 자체는 매우 경쟁력 있다.³⁰⁴⁾ 그러나 ITD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은 개발단계에서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예산의 제약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³⁰⁵⁾ 통신 정보처리 관련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수주규모도 매우 작고, 예상과는 달리 세계은행 2003-2007년 수주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³⁰⁶⁾

304) (EIU, 2009)

305) (조원권 & 박정호, 2005)

306) 이는 세계은행의 발주사업 중 도로, 수자원, 보건의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 ICT, 폐기물 처리

봉사자 활용 면에서 보면, 컴퓨터는 봉사단원 선발이 가장 용이한 분야 중 하나이다. 협력단 단독만으로도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봉사단 파견 중 21.8%에 해당하는 336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디지털 봉사단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1,026명을 51개국에 파견하는 등 많은 해외 봉사단 파견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만큼 원조의 분절화도 심한 분야이며, 국내 타 부처의 개발도상국 정보화 사업 추진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도국 자문은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그리고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 사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파견되었다.³⁰⁷⁾ 타 정부부처 봉사단 파견 사업으로도 행안부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6개국에 2,415명(연평균 400명)을 파견하였고, 교육과학부에서도 대학생 봉사단 및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을 2008년 한 해에만 2,800명을 파견하였다.³⁰⁸⁾ 해외 봉사 통합 브랜드인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가 2009년 출범하면서 이 세 부처 봉사단 브랜드는 통합이 되었으나, 한국이 이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의 단일 브랜드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 IT 관련 원조전략과 실행의 전 부문에 있어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살려야 할 것이다.

6) 지역개발 분야

A. 지역개발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농업 부문은 2007-2008년 총액 평균이 210억, 협력단 평균 지원비중이 8.64%로 환경과 함께 지원이 적은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2007년의 6.0%에 비해 2008년 지원이 8.8%로 78%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업 섹터의 22.26% 이상의 사업이 한국형 사업으로 모델화 될 수 있는 농촌종합개발, 즉 새마을운동사업 유형에 쓰였는데, 다른 공여국도 종합농촌개발에 22%를 지원하여 이 분야가 가장 상위를 차지한다[Chart 17, 표 21, 표 22]. 협력단 지역개발 섹터에서 또한 중점을 두는 세부 분야는 15.17%를 차지한 농업용수 지원과 11.54%의 비중인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이다[표 21]. 농촌개발은 69%가 프로젝트이며, 11%가 물자지원, 10%가 연수생 초청으로 이루어져 있다[별첨 10]. 다음으로 농업용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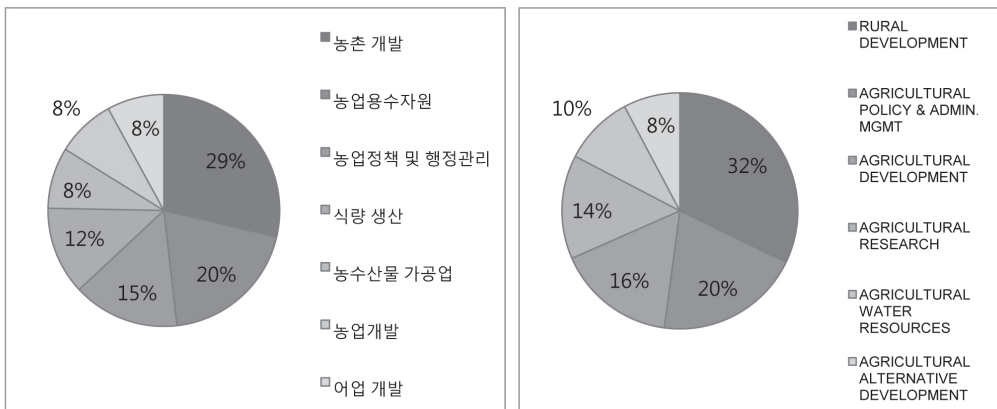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있을 것임.

307)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308)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년 5월 7일 보도자료 “해외 봉사단 통합,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본격화”

은 프로젝트가 79%로 대부분이고 개발조사가 12%이다. 여기에는 관개용수 개발, 저수지 복구, 수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 농업정책은 개발조사가 73%로 주류에 해당하며 전문가가 그 다음인 16%를 차지하며, 농업정책 관련 사업은 중국 농업 통계조사, 아프간 농업정책지원 등이 포함된다. 농촌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하나의 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CHART 17]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지역개발 분야 세부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Chart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표 21] KOICA 지역개발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기타 다부문	43040	농촌 개발	13,441	22.26%	1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6,967	11.54%	3
	31120	농업개발	3,855	6.38%	6
	31130	농지개발	268	0.44%	17
	31140	농업용수자원	9,162	15.17%	2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804	1.33%	14
	31161	식량 생산	5,748	9.52%	4
	31162	경제 작물/ 수출 작물	2,277	3.77%	10
	31163	축산	2,735	4.53%	8
	31166	농업 지도	40	0.07%	21
	31181	농업 관련 교육/ 훈련	2,568	4.25%	9
	31182	농업 연구	1,002	1.66%	12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986	1.63%	13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136	0.23%	18
	31195	축산 진료	1,769	2.93%	11
산업/공업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4,000	6.62%	5
	32162	임산물 가공	11	0.02%	23
어업	31310	어업 정책/행정/관리	31	0.05%	22
	31320	어업 개발	3,733	6.18%	7
	31381	어업 교육 및 훈련	283	0.47%	16
	31382	어업 연구	132	0.22%	19
임업	31281	임업 교육/훈련	42	0.07%	20
	31282	임업 연구	385	0.64%	15
Grand Total			60,386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22] 타 공여기관 지역개발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V.2. Other Multisector	43040	RURAL DEVELOPMENT	3,857	22.45%	1
III.1.a. Agriculture	31110	AGRICULTURAL POLICY & ADMIN. MGMT	2,390	13.92%	2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1,954	11.38%	3
	31182	AGRICULTURAL RESEARCH	1,706	9.93%	4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1,149	6.69%	5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932	5.43%	6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766	4.46%	7
	31150	AGRICULTURAL INPUTS	591	3.44%	8
III.1.c. Fishing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49	2.62%	9
	31161	FOOD CROP PRODUCTION	412	2.40%	10
	31320	FISHERY DEVELOPMENT	350	2.04%	11
	31181	AGRICULTURAL EDUCATION/ TRAINING	247	1.44%	12
	31163	LIVESTOCK	229	1.34%	13
	31391	FISHERY SERVICES	225	1.31%	14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218	1.27%	15
III.2.a. Industry	32161	AGRO-INDUSTRIES	203	1.18%	16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187	1.09%	17
	31191	AGRICULTURAL SERVICES	175	1.02%	18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155	0.90%	19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VPT	153	0.90%	20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152	0.89%	21
	31192	PLANT/POST-HARVEST PROT. & PEST CTRL	140	0.82%	22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134	0.79%	23
	31164	AGRARIAN REFORM	90	0.53%	24
	31381	FISHERY EDUCATION/TRAINING	74	0.43%	25
	31282	FORESTRY RESEARCH	70	0.41%	26
	31382	FISHERY RESEARCH	57	0.33%	27
	31291	FORESTRY SERVICES	44	0.26%	28
	32162	FOREST INDUSTRIES	29	0.17%	29
	31281	FORESTRY EDUCATION/TRAINING	23	0.14%	30
III.1.b. Forestry	31261	FUELWOOD/CHARCOAL	4	0.03%	31
Grand Total			17,180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지역개발 분야 평가

지역개발은 절반 정도의 공여국이 중점을 두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대표적 한국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농촌종합개발 혹은 참여적 지역개발 사업은 다른 공여국과 한국 모두 22% 정도 지원하여 농촌 분야에서 가장 높게 지원되는 세부 분야이다. 독일과 룩셈부르크가 각각 절대적·상대적 주 공여국이다.

참여적 지역개발사업의 예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실시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있고 과거 우리의 농촌과 유사한 베트남의 경우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수행기관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사업지구의 현황 분석을 하였고, 주민 참여 하에 마을의 생산기반정비,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주민주도로 시행하였다. 또한 이렇게 2개 지역 7개 마을에서 시작된 사업이 실시 3년 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움직임도 보였다.³⁰⁹⁾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2008)에 의하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업 역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기회 증대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의 경우 주민의 협동심이나 자립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단, 효과저해요인으로서는 소규모 사업의 다수 시행으로 인해 마을 공동 인프라 형성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보다는 개인의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에 치중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사업의 종합적 운영원리가 짧은 현지교육 후 실시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였고, 시범마을마다 정주형태, 지도력, 정치적 성향, 주민 요구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점이 있다. 「캄보디아 농촌 개발사업 종료평가」(2009)에서는 한국 농촌개발경험의 적용이나 이 방식에 대해 KOICA의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세계은행이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또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추천된 마을은 개발에 대한 주민의지가 낮고 주민의 협동과 자조적 노력에 의한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이를 보면 한국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공요소였던 (1) 주민들이 마을개선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Ownership) (2) 마을간 경쟁을 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했던 결

309) (KOICA, 2008)

과 중심적 운영(Results-based management) (3)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4) 정신계몽(Empowerment)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사업요소(Holistic approach) (5) 장기적 지원(Long-term support) 등의 원칙이 시범사업에 제대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일본이 주 공여국인 관개용수 사업은 타 공여국에서도 평균 6.69%를 지원하는 비중이 아주 낮지는 않은 분야이나 우리나라는 15-17%를 지원함으로써 타국보다 훨씬 중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성공적인 원조사례는 캄보디아 타목 저수지 복구지원사업(2007)으로 성공적인 농업용수 관개사업 후, 충분한 수자원이 확보되고 마을이 형성되어 인구가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고 양식장이 50개에서 330개로 증가하며 공장이 증가하였다.³¹⁰⁾

이 밖에 농산물 보관, 가공, 유통설비 지원도 최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타 공여국 지원이 농업 분야 전체에서 1.18%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KOICA는 6.62%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우수사례로 언급될 수 있는 필리핀 오로라주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수요분석결과 미국처리장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큰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수확 후 손실률 감소로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쌀 가격 안정 및 우기시 저장소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³¹¹⁾

지역개발 분야 사업평가는 한국의 경험 전수시 현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 협력사업 평가」(2005)³¹²⁾에 따르면 라오스 법씨 증산사업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법씨생산 및 관리기술 그리고 기계화 영농기술 전수를 통해 라오스 법씨 생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보급된 한국의 우량품종은 라오스 국민의 식미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시장수요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농가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평가서에 따르면 종자관리 시스템 개선은 세계은행에서도 성과가 미미한 어려운 분야인데, 라오스의 실정이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은 다소 안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밭 작물 농업 중점 개발사업(2007)에서 역시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농업을 잘 알지 못해서 농민들에게 작물

310) (KOICA, 2007d) 여기에는 효과귀인(Attribution) 이슈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KOICA 사업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311) (KOICA, 2008h)

3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재배법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³¹³⁾ 그리고 2005년에 실시된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사업은 한국의 농기계가 도입되고 기계화 영농기술을 전수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노동력이 풍부하여 기계화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산 경운기를 공급한 점이 지적되었다.³¹⁴⁾ 이러한 사례를 보면, 한국적 경험의 전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수원국 지역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C. 비교우위

농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농가인구 비율은 선진국의 2-3%에 비해 7%로 높은 수준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 농촌개발사업과 농업용수, 농협, 잠업에는 비교우위가 있고, 농기계, 유통, 열대작물재배에는 비교열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나 NGO로부터 개발도상국 농촌개발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인데, 「대 개도국 농촌개발 경험전수 방안 연구」(2008)³¹⁵⁾에 따르면 농림부분 전문가 62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및 한국의 개발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11.3%가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사업을 답하였다. 또한 민간협력사업 중 활발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로, 이는 한국 NGO가 현지 NGO와 합작(Joint)으로 해당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소규모 축산업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이용한 소득창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⁶⁾ 이것은 2004년 한국 NGO 해외 봉사단 파견 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가 24%를 차지하여,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이 많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농업,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관리 역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이다. 한국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농업용수 관개율을 나타내는 수자원 인프라는 20점 만점에 19.3점을 획

313) 아프리카에서도 기계화 영농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가 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중대형을 농기계를 쓰는 반면 인구가 적고 땅이 많은 아프리카는 초대형이 필요한 점 등 때문이다. (농어촌팀 인터뷰, 2009.10).

3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315) (정기환, 김용택, 허장, 2007)

316) 민간협력팀 인터뷰

득하여 비교대상 147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였다.³¹⁷⁾ 전문가 설문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경우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이 5점 만점 중 비교적 높은 3.04로 나타났다.³¹⁸⁾

한국의 농기계 기술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의 70-90% 수준이고, 농기계 소재와 부품, 농기계 자체의 품질 등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농기계 설계 등은 선진국 대비 70-90%이나 성능 평가 및 측정기술, 품질관리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농기계는 다자은행 수주 비교열위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경우 쌀이 3.11(5)로 가장 높은 점수이고, 양잠이 3.10, 버섯이 3.08로 나타났다.³¹⁹⁾ 우리나라는 미국 생산기술을 보유, 고품질 쌀 신품종, 볍씨 생산기술, 관리기술, 영농기술 전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중국, 미국도 우리처럼 자포니카계 쌀을 생산하는데, 미국 중국 쌀에 비해 우리 쌀이 3-10배 비싸고 일본은 브랜드화한 고품질 쌀인 아끼바래(추청벼), 고시히카리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이들과 비교시 우리나라 쌀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가공기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 개도국 농촌개발경험 전수방안 연구」(2008)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및 한국의 개발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9.9%만 농산물 가공기술 및 유통관련 분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열대지역 농업 및 삼림경영, 화훼와 채소 및 과채류에서도 기술이 높지 않다고 하여 대부분의 개도국이 속한 열대지방에서의 사업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농촌 분야 및 지역개발을 수행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분야는 개도국의 수요에 비해서 한국의 인적 공급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봉사사업부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수산양식, 수의사, 원예 작물재배, 채소재배는 한국 봉사단 파견요청에 비해 각각 13, 24, 36, 36명이 부족하였다.³²⁰⁾ 봉사단원이 20-30대로 젊은 층인 경우 농업 관련 인력이 더욱 부족한 면이 있다. 2009년 9월 기준 시니어 봉사단원의 모집 실적에서는 농업 분야가 15명이 모집되어, 교육 부문 25명과 산업 에너지 부

317) (박복영, 권율, 정성춘,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2008)

318) (정기환, 김용택, 허장, 2007)

319) (정기환, 김용택, 허장, 2007)

320) 봉사사업부 2009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분 27명에 이어 모집율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 봉사단원 파견 직종 비율에서 교육(35.0%), 정보통신(21.8%), 보건의료(14.2%), 환경·여성(11.1%)에 이어 농업이 5위(7.2%)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연수과정 종료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잠업관련 기술, 즉 잠종, 생산, 제사, 견직, 나염 등의 분야에서는 고급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축적되어 있으나, 현재 잠업은 사양화되어 가는 추세여서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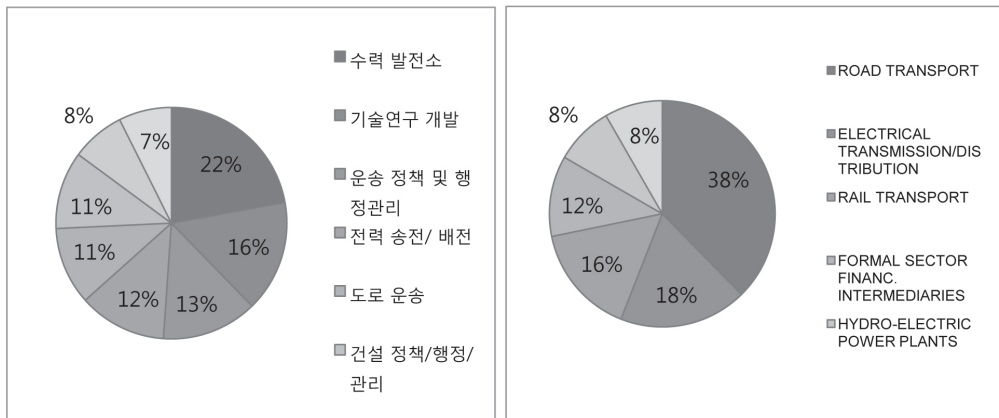
7) 산업 에너지 분야

A. 산업 에너지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산업 에너지는 2007-2008년 평균 원조금이 309억 원으로 12.27%의 비중을 차지한다. 2007년 전체 원조액의 12%에서 2008년 10%로 비중이 소폭 낮아졌다. 2001-2007년 산업 에너지의 세부 분야별 지원은 건립예산이 막대한 수력 발전소가 15.66%로 1위인데, 이는 타 공여국에서 도로운송이 22.73%로 가장 지원이 높은 분야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Chart 18, 표 24]. 다음으로 기술연구개발이 11.03%,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가 9.49%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표 23], 하나의 집중 분야가 있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 지원이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력 발전소는 91%의 예산이 프로젝트 사업에 쓰였으며³²¹⁾ 아프간 이스타리프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이 그 예이다[별첨 10]. 기술연구개발은 67%가 프로젝트, 21%가 해외 봉사단 파견으로 이루어지고[별첨 10], 국가 표준제도 및 정밀 측정, 이집트 공산품 품질관리 시스템, 수산물 품질검사 등이 사업 예이다. 운송은 도로 및 철도 분야로 대부분이 개발조사와 연수생 초청으로 이루어져있다. 한국 전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 및 타당성 조사(23040)에는 8.70%가 지원되었으며 그 형태는 개발조사가 75%, 연수생이 24%이다. 역시 한국의 신도시 개발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43040)은 산업 에너지 분야의 2.24%로 비중이 적으며 개발조사가 대부분인 83%, 연수생초청이 11%이다. 산업 에너지의 한국 경험 공유사업은 대부분 개발조사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21) KOICA의 사업별 원조목적 통계(2001-2007)를 합산하면 개발조사 형태로 지원한 수력 발전소(23065)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0년과 2001년에는 네팔의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 실시설계가 개발조사로 진행되어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8% 정도가 개발조사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CHART 18]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산업 에너지 분야 세부 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 Chart 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표 23] KOICA 산업 에너지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건설	32310	건설정책/행정/관리	6,249	7.67%	6
광물	32210	광물/광업정책, 행정, 관리	926	1.14%	19
	32220	광물탐사	540	0.66%	21
	32262	석유 및 가스	175	0.22%	25
	32263	철금속	19	0.02%	31
교통/저장	21010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7,725	9.49%	3
	21020	도로 운송	6,261	7.69%	5
	21030	철도 운송	2,824	3.47%	11
	21040	수로 운송	816	1.00%	20
	21050	항공 운송	4,271	5.24%	8
	21081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66	0.08%	28
금융	24020	중앙금융기관	18	0.02%	32
기업	25020	민영화	196	0.24%	24
무역정책	33181	무역교육 및 훈련	1,151	1.41%	18
물/ 위생	14040	하천 개발	505	0.62%	22
산업/공업	32110	공업정책/행정/관리	3,489	4.28%	10
	32120	공업 개발	472	0.58%	23
	32140	가내공업 및 수공업	1,514	1.86%	15
	32163	섬유, 피혁 및 대체소재	1,784	2.19%	14
	32166	시멘트/인조대리석/소석회	31	0.04%	30
	32169	철강 산업	38	0.05%	29
	32171	엔지니어링(기계공업)	3,847	4.72%	9
	32172	수송기계 산업	2,264	2.78%	12
	32182	기술연구 개발	8,980	11.03%	2
에너지	230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4,321	5.31%	7
	23030	전력 생산/ 재생 가능 자원 사용	85	0.11%	27
	23040	전력 송전/배전	7,086	8.70%	4
	23063	석탄 화력 발전소	154	0.19%	26
	23064	원자력 발전소	1,334	1.64%	17
	23065	수력 발전소	12,754	15.66%	1
	23081	에너지 교육/ 훈련	1,500	1.84%	16
	23082	에너지 연구	38	0.05%	29
다부문	43040	도시개발 및 관리	1,821	2.24%	13
Grand Total			81,450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24] 타 공여기관 산업 에너지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40	RIVER DEVELOPMENT	376	0.85%	22
II.1. Transport & Storage	21010	TRANSPORT POLICY & ADMIN. MANAGEMENT	2,219	5.02%	6
	21020	ROAD TRANSPORT	10,051	22.73%	1
	21030	RAIL TRANSPORT	4,220	9.55%	3
	21040	WATER TRANSPORT	992	2.24%	12
	21050	AIR TRANSPORT	2,048	4.63%	9
	21061	STORAGE	6	0.02%	48
	21081	EDUC./TRNG IN TRANSPORT & STORAGE	24	0.06%	43
II.3. Energy	23010	ENERGY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153	4.87%	7
	23020	POWER GENERAT./NON- RENEWABLE SOURCES	1,449	3.28%	11
	23030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297	0.67%	24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 DISTRIBUTION	4,893	11.07%	2
	23050	GAS DISTRIBUTION	658	1.49%	14
	23061	OIL-FIRED POWER PLANTS	73	0.17%	31
	23062	GAS-FIRED POWER PLANTS	180	0.41%	26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554	1.26%	15
	23064	NUCLEAR POWER PLANTS	329	0.75%	23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2,238	5.06%	5
	23066	GEOTHERMAL ENERGY	25	0.06%	41
	23067	SOLAR ENERGY	152	0.34%	27
	23068	WIND POWER	378	0.86%	21
	23069	OCEAN POWER	0.38	0.00%	55
	23070	BIOMASS	40	0.09%	37
	23081	ENERGY EDUCATION/TRAINING	58	0.13%	32
	23082	ENERGY RESEARCH	20	0.05%	44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3,075	6.96%	4
	24040	INFORMAL/SEMI-FORMAL FIN. INTERMED.	803	1.82%	13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25020	PRIVATISATION	486	1.10%	16
III.2.a. Industry	32110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432	0.98%	17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397	0.90%	19
	32140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57	0.13%	33
	32163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42	0.10%	35
	32164	CHEMICALS	26.72	0.06%	39
	32165	FERTILIZER PLANTS	12	0.03%	46
	32166	CEMENT/LIME/PLASTER	9	0.02%	47
	32167	ENERGY MANUFACTURING	428	0.97%	18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16	0.04%	45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26	0.06%	40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5	0.01%	49
	32171	ENGINEERING	115	0.26%	30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40	0.09%	36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393	0.89%	20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10	MINERAL/MINING POLICY & ADMIN. MGMT	270	0.61%	25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129	0.29%	28
	32261	COAL	24	0.06%	42
	32262	OIL AND GAS	2,050	4.64%	8
	32263	FERROUS METALS	0.40	0.00%	54
	32264	NON-FERROUS METALS	32	0.07%	38
	32265	PRECIOUS METALS/MATERIALS	2	0.01%	51
	32266	INDUSTRIAL MINERALS	2	0.01%	52
	32267	FERTILIZER MINERALS	1	0.00%	53
	32268	OFF-SHORE MINERALS	3	0.01%	50
III.2.c. Construction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 MGMT	120	0.27%	29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52	0.12%	34
IV.2. Other Multisector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1,706	3.86%	10
Grand Total			44,213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산업 에너지 분야 평가

산업 에너지 분야는 크게 (1) 수송분야 (2) 국토개발 (3) 전력공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송 분야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포함하며, 캄보디아 시엠폴 우회도로 건설사업, 베트남 나짱-호치민 철도 복선화 타당성 조사사업,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필리핀 클라크 공항 타당성 조사는 협력단이 다른 원조기관에 이어 10번째 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수요조사에만 의존한 사업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³²²⁾ 타 공여국에서도 도로는 산업 에너지 분야의 22.73%가 지원될 정도로 1순위의 사업이며, 철도가 그 다음인 9.55%, 항공이 4.63%, 항만 2.24%의 순서이고, 모두 일본이 절대적·상대적 주 공여국이다.

국토개발 중 신도시 개발은 분당·강남 신도시 개발의 경험과 토지주택공사, 단지연구를 실시하는 국토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을 통해 한국형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하이퐁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사업, 알제리 과학기술 신도시 개발 및 마스터플랜 사업이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및 주거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추진 후 대우건설에서 9억 달러의 신도시 개발 본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으나 이 사업은 적정가격의 토지보상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이다.³²³⁾ 또한 알제리 마스터플랜 사업은 알제리 정부가 수립한 국토종합개발 및 예산에 반영되는 등 공식사업으로 채택되고, 차후 경남기업이 7억 달러 공사를 수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타국과 비교시 산업 에너지 분야의 9.49%가 신도시 등 도시개발 및 관리 부문에 투자되는 협력단과 달리 타 공여국에서는 평균 3.86%를 지원하고 있어 KOICA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하겠다. 도시개발 부문은 프랑스가 원조면과 비중에서 모두 주 공여국이며, 건설정책 분야는 영국이 주 공여국, 포르투갈이 상대적 공여국이다.

전력부분은 한국전력의 자동원격검침시스템(Automated Meter Reading System: AMR)과 배전자동화시스템(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을 활용하여 송배전 효율성 향상 및 배전 자동화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한국형 사업이 있다. 산업 에너지 분야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이 사업의 2010년 수요는 5건으로 이 분야의 여타 사업보다는 높은 편이다. 미얀마 전력망 사업은 ‘계획수립-설계-운용기술’에 이르는 단계 일체를 지원하여서 단발성 사업이 아닌 전력 분야에 대한 장기적 통합의 지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22) 산업 에너지팀 면담(2009. 10)

323) 산업 에너지팀 면담(2009. 10)

인도네시아 배전체계 타당성 조사 및 자동화 시범사업은 한전 신기술을 소개하였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별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보고서에 한전 운영체계 및 현황 등 프로젝트의 핵심사항이 아닌 부분이 기술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이후 CRS 개발조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이 발주한 640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전력망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이 분야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성 면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데, 다른 공여국 산업 에너지 부문 55개 CRS 코드 사업 중 상위 2위인 11%를 차지하여 비교적 지원이 많이 되는 분야이다. 미국이 투자액과 비중에서 모두 주 공여국이다. 또한 AMR, DAC가 기본적으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도국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다.³²⁴⁾

발전 부문에서는 피지, 아프간 소수력 발전소 건립, 필리핀 보홀 주 말리나오 댐 개선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이 있었다. 네팔 모디강 및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 및 실시설계사업은 차후 경제협력기금, 유상원조와 연결되었고, 특히 차멜리야사업의 경우 한국 기업의 건설공사 계약으로 이어졌다.³²⁵⁾ 수력발전은 선진국 평균 정도인 5%를 지원하나, 원자력(0.67%) 혹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 발전(0.75%)은 타 공여국의 지원이 매우 작아 차별성이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핵 보유 등 분쟁과 안전 관련 이유로 원자력 지원은 매우 민감한 부분일뿐 아니라, 수원국이 국가 기관산업에 대한 정보를 꺼리는 이유로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³²⁶⁾ 에너지 교육훈련 부문 역시 DAC 공여국 평균 지원이 0.13%, KOICA 평균 지원이 1.67%로 매우 원조가 낮은 하위 섹터(Sub-sector)이다.

산업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중점 협력 지원 분야로 꼽는 공여국이 많지 않으며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절대적·상대적 원조자원 규모가 커서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다. 산업 에너지 분야의 평가를 위해 발간된 「개발조사 사업형태별 평가 보고서」(2009)³²⁷⁾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까지 하드웨어(Hard-ware) 위주의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르면 파트너국에 전달된 개발조사 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가 갖는 기여도는 경제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 높으나 재정적·사회적·제도적·환경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또한 투입비용은 적절하다

324) 산업 에너지팀 검토의견

325) (KOICA, 2009b)

326) 산업 에너지팀 면담(2009.10)

327) (KOICA, 2009a)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에서 실시된 12건의 개발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

고 나왔으나 보다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있었는지에 묻는 항목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산업 에너지 분야는 개발조사사업형태가 많지만, 개발조사사업의 성과물인 보고서를 활용하기 위해 본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지원 대상국이 아닌 경우는 소규모 도로 포장, 교량 건설, 배전검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건설을 하고, EDCF 지원 대상국인 경우는 EDCF 사업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³²⁸⁾ 산업 에너지 분야의 무상사업은 개발조사사업을 주로 하고 본 사업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로 차관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표 25]에서 철도가 양자 유상사업 148개 중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로가 2위, 그리고 대규모 식수 및 위생 시설, 공항, 수력발전 등이 모두 상위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양자 무상사업으로는 철도가 122위, 도로가 26위인 점을 보면 철도 및 도로사업은 무상지원이 매우 미미하고 특히 유상지원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하는 대용지표(Proxy indicator)로 EDCF와의 연계성과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된다.

[표 25] 양자 유상지원의 CRS 코드별 순위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Rank
XII. UNALLOCATED/ UNSPECIFIED	99810	SECTORS NOT SPECIFIED	19,859.72	1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4,914.04	2
II.1. Transport & Storage	21030	RAIL TRANSPORT	4,004.35	3
II.1. Transport & Storage	21020	ROAD TRANSPORT	3,367.82	4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2,706.38	5
II.1. Transport & Storage	21050	AIR TRANSPORT	1,650.11	6
II.3. Energy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1,557.75	7
VI.1. General Budget Support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1,051.46	8

328) 산업 에너지팀 검토의견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965.27	9
II.3. Energy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DISTRIBUTION	921.34	10

<Data Source: OECD Stats>

C. 산업 에너지 분야의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에서는 송·배전 분야, 항만, 도로에 비교우위가 높으나 건설 엔지니어링은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는 송전과 배전 등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및 세계적 전력공급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송·배전 손실을 면에서 선진국에 앞서고, 2006년 기준, 전력 부문 노동 생산성 면에서도 일본, 대만,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다.³²⁹⁾ 한국은 독자적으로 디젤 엔진 발전기를 개발하였고, 전력발전 부문 부하율(73.8%), 설비 이용률(66.9%)은 독일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앞서고 있다.³³⁰⁾ 「KIEP 보고서」(박복영 외,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2회선 765kV 송전선로 구성 및 운영, 세계 최초 옥외 GIS 기술 보유, 친환경적이고 높은 송전용량과 저손실을 가진 345kV XLPE 전력 케이블 개발 및 운영, 최첨단 전력구 감시 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술 보유, 초대형 장거리 해상선로 세계 최초 운영 등 여러 면에서 경쟁국들을 앞서고 있다. 또한 원전정비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송전 공사 안전성을 위한 장비 및 공법 보유 등으로 중전기나 시공 및 정비 부문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운영기술 및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High Tech) 변전소 건설기술 개발 등 높은 수준의 변전기술 보유, 세계 전력 산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에디슨 대상”을 1997년과 2006년에 수상하였다.

전력생산 면에서는 한국은 원전기술자립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원자력 발전규모 세계 6위, 원자력 설비용량은 세계 4위의 원자력 강국이며,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기술자립의 모범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2003-2007년 수주에서 전력은 우리 전체 수주의 32%를 차지할 만큼 최대 수주 부문이고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세계은행 부문별 발주비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수주비중의 비율로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가 4로 높다.³³¹⁾ 원자력의 경우 2010년에 400억 달러의 아랍에미리트연합

329)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330)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331)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United Arab Emirates: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도 성공하였다. 화력 발전소의 경우 열효율은 일본과 비슷하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다.

다음으로 운송 부문을 보면, 한국의 도로, 교량 등 도로운송 부문의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발주사업 실적 중 가장 큰 부문이 도로운송으로 31.3%를 차지하며 금액 면에서는 12.1%에 이른다. 이는 세계은행 발주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다. RCA 지수는 0.39³³²⁾로 낮은 수준이다. 「ODA 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2008)에 의하면 한국의 건설 공정별 기술수준은 시공 부문이 선진국 대비 81% 수준이며, 설계 및 유지관리는 77%이나, 고부가가치인 기획·타당성 공정은 75%에 불과하다. 한편 국가교통시스템 기술수준은 65-77%(2007년), 교통, 안전 및 환경, 물류 기술기준은 65-68%이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65-73%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격차는 7.3년이다.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은 69.6%, 기술격차는 4.9년으로 나타난다. 첨단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인프라 건설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은 72.8%로 낮고, 기술격차 역시 12.3년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철도연구기술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 전문 분야인 토목, 건축, E & M, 시스템 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 등의 수준을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토목, 건축일반 분야는 비교적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으나 토목·건축 엔지니어링과 차량 및 부품은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3-2007년간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ODA 수주에서 발주사업 부문 철도운송은 전체의 2.7%, 금액 면에서는 12.1%를 차지한다. 세계은행 RCA 지수가 2.04(우리나라 수주비중 5.45%: 세계은행 발주비중 2.67%)로 1보다 커서 높은 편이고, 한국은 이 분야 수주순위 30개국 중 16위이다.

해운항만 분야는 우리나라가 총 선박 보유량 1,063척(3,675만 Dead Weight Ton, DWT: 재화 중량톤)으로 세계 6위(2008년 1월 기준), 컨테이너 선대의 경우 115척(307만 DWT) 규모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선박 건조량은 429척(1,128만 CGT: Compensated Gross Tonnage, CGT: 표준화물선 환산톤 수)이며 세계 1위, 수주량도 3,286만 CGT(1,201척)로 세계 1위 수준(2000년 기준)으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상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

332) 한국 수주비중 12.08%/세계은행 발주비중 31.29%

서 채택한 협약 38개(발효 28건) 중 17건의 협약에 가입했고, IMO의 이사국이기도 하다. 특히 세부적인 비교우위는 해운정책 및 항만관리전략 공유 및 발전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³³³⁾ 항만 토목도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나, 관련업계는 20 여 개 정도로 많지 않다.³³⁴⁾

「개발조사사업 확대발전방안 보고서」(2006)³³⁵⁾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은 해외시장 점유율, 기술수준, 전문성, 플랜트 건설의 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열세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 분야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며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획, 설계 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관리기술(Engineering process management technology)의 부족이다.³³⁶⁾ 동 보고서에 의하면 토목, 건축, 플랜트 건설의 엔지니어링, 구매조달, 시공 부문을 합한 종합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을 1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 수준이 약 8.1 정도로 조사되었다. 토목 부문의 경우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선진국의 80% 수준이나 댐, 항만, 공항의 설계는 이보다 약세이다. 「건설교통부 조사」(2004)에 의하면 건축 분야별로는 창고, 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높아 선진국의 82-85%로 가장 근접하고 있었으나 병원, 공항의 경우는 최하위 점수를 보였다. 플랜트 건설은 역시 설계부문이 취약하다. 반면 담수화 분야는 경쟁력이 있으며 설계, 구매, 시공 모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발전소도 85%로 비교적 높다.

측정 분야에서는 표준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도량형총회와 아시아·태평양 측정 표준 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고,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31건의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KS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도 완료되었다. 타 공여국에서는 이 세부 분야에 0.89%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9.98%로 월등히 높게 지원하고 있다.

수자원 분야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친수성 환경조성을 위한 공업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개발이 진일보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인프라는 경쟁력이 있는데, 2006년 세계 각국의 물 빈곤지수(Water Poverty Index) 평가에서 수자원 인프라가 20점 만점에 19.3점을 획득하여 비교대상 147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였다.³³⁷⁾ 재

333) 2007, 2008 연수사업평가

3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운수 박사 인터뷰

335) (권율, 박영호, 이종운, 황주성, 2006)

336) (권율, 박영호, 이종운, 황주성, 2006)

337)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생 가능한 수자원의 하천수 취수율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IT나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분석기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선진적 설계공법과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기법 등에 관한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다.³³⁸⁾

8) 환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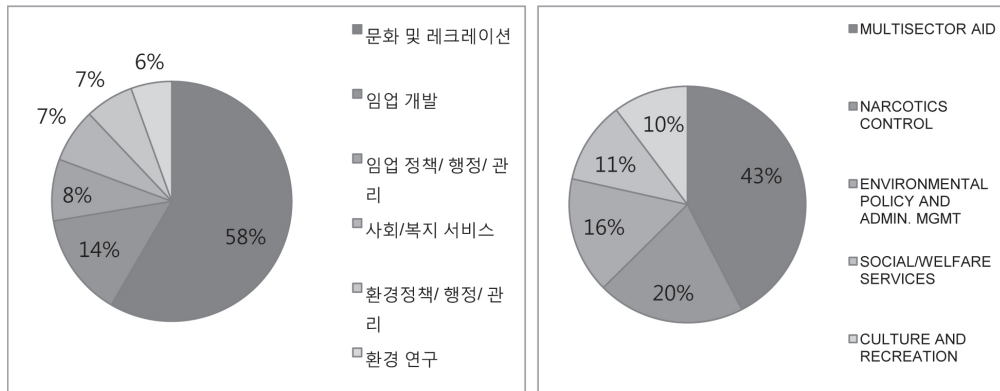
A. 환경 분야 세부 지원 내용 및 비중

환경 분야는 2007-2008년도 KOICA 전체 사업 중 7.97%를 차지하여 가장 지원이 적은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2007년 대비 증가율은 34.84%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³³⁹⁾ 환경은 기타 사업도 포함하는데 태권도 기술향상 및 기법교육 같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이 42.59%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26]. 이를 보면 환경 분야는 ‘환경’ 사업보다는 ‘기타’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타 공여기관 경우 다부문 지원과 마약이 각각 33.10%와 15.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KOICA와 차이를 보인다[표 27]. 협력단 환경 섹터의 세부 분야 2위는 임업개발로 10.19%이고, 그 다음으로 임업정책이 6.06%이다. 임업개발은 74%가 프로젝트, 26%가 연수생 초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별첨 10] 한국 정부의 최근 집중 투자사업인 물 관련 사업으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있으나, 이는 1.57%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폐기물 사업은 프로젝트가 78%로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22%인 연수생 초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338)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339) 2007년의 경우 “환경”항목에 개발인식증진비 22,301백만 원이 포함되어 전체 환경액수가 38,807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은 이 부분이 “기타” 항목에 들어감. 두 년도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7년 환경 지원금은 16,506백만 원으로 계산함.

[CHART 19] 협력단과 타 공여기관 환경 분야 세부지원 비교



<Data Source: OECD Stats, KOICA ODA 통계. ※Chart 의 비율은 상위 4-5% 이상 되는 세부 분야만 선별하여서 구성하였으므로 표의 수치와 조금 틀림. 정확한 수치는 표를 참고할 것>

[표 26] KOICA 환경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1-2007

하위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총합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관광	33210	관광정책/행정/관리	1,338	1.92%	10
기타 다부문	43010	다부문 원조	71	0.10%	16
기타사회인프라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3,686	5.30%	4
	16040	저비용 주택개발	306	0.44%	15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29,633	42.59%	1
	16063	마약 관리	609	0.88%	13
물/ 위생	14050	폐기물 관리/ 처리	1,089	1.57%	11
일반환경보호	41000	환경보호	51	0.07%	17
	41010	환경정책/ 행정/ 관리	3,316	4.77%	5
	41020	생물권역 보호	1,555	2.24%	9
	41030	생물 다양성	402	0.58%	14
	41050	홍수방지/ 대책	847	1.22%	12
	41081	환경교육/ 훈련	2,123	3.05%	7
	41082	환경 연구	2,797	4.02%	6
임업	31210	임업 정책/ 행정/ 관리	4,217	6.06%	3
	31220	임업 개발	7,086	10.19%	2
정부/시민사회	15164	성평등 조직 및 제도	1,901	2.73%	8
Grand Total			69,573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표 27] 타 공여기관 환경 세부 분야 지원액, 비중, 순위 2002-20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IV. 2. Other Multisector	43010	MULTISECTOR AID	11,940	33.10%	1
	16063	NARCOTICS CONTROL	5,690	15.77%	2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4,481	12.42%	3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10	SOCIAL/WELFARE SERVICES	3,162	8.77%	4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2,893	8.02%	5
	41030	BIO-DIVERSITY	1,267	3.51%	6
	31220	FORESTRY DEVELOPMENT	1,154	3.20%	7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 general	15164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836	2.32%	8
	41020	BIOSPHERE PROTECTION	733	2.03%	9
III.1.b. Forestry	31210	FORESTRY POLICY & ADMIN. MANAGEMENT	642	1.78%	10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614	1.70%	11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560	1.55%	12
	16040	LOW-COST HOUSING	506	1.41%	13
	14050	WASTE MANAGEMENT/DISPOSAL	502	1.39%	14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 TRAINING	296	0.82%	15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289	0.80%	16
	41040	SITE PRESERVATION	254	0.70%	17
III.3.b. Tourism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47	0.69%	18
Grand Total			36,075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B. 환경 분야 평가

환경 분야는 임업사업, 폐기물 및 폐수 관련 사업, 대기오염사업, 그리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성공적인 치산녹화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임업개발, 임업정책 행정관리사업은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한 조림사업 등은 수원국 수요가 비교적 높아 2010년 수요 중 16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타 공여국의 경우, 환경 분야 내에서 임업정책은 평균 1.78% 만을, 임업개발은 평균 3.20%만을 지원하는데 비해 KOICA는 각각 6.70%와 11.26%를 지원하여 협력단의 지원비중이 더 크며,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일본이 주 공여국이며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공여국이고, 세부 분야별로는 임업개발보다 임업정책 행정관리 쪽이 조금 더 차별성 있

는 하위 섹터(Sub-sector)이다.

「환경 분야 협력사업 평가」(2007)³⁴⁰⁾에 의하면 임업사업은 정치적인 혹은 공여국 위주의 사업선정, 우리 기술의 무리한 적용, 전체적인 환경산업과 동떨어진 파편적 물자지원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 파급효과, 수원국의 수요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되었다. 사업의 예로 북경 밀은 저수지 수원 보호림 조성사업은 우리의 황폐산지 조림녹화 기술이 높기 평가되었던 조림사업이긴 하나, 무리한 임도건설, 탁도계 설치 등은 현지의 예산과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한국의 경험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평이다. 또한 이 사업은 대 중국 조림사업에 대한 종합적 전략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었다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홍보효과를 위해 선정되어 단발적 사업에 그쳤다.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의 경우, 중국은 사막지역에 대한 전통적 조림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동 사업을 통하여 제공된 한국의 조림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고 사후관리 역시 미약하였다.

폐기물, 폐기수, 대기오염 관련 사업은 모두 타 공여국이 별로 지원하지 않는 하위 섹터이다. 폐기물은 1.39%, 수자원보호는 0.30%만 평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차별화 가능성이 크다. 「환경분야 협력사업 평가」(2007)에 따르면, 또 다른 사업으로 요르단 폐수처리시설 확장 타당성 조사사업은 한국의 폐수처리 기술축적 및 소개와 기업진출의 간접 지원효과를 내었고, 76억 원의 유상원조로 마다바 지역 폐수처리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산업오염 방지사업의 경우 물적 공여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제공된 우리의 기술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베트남이 수질오염을 개선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질적인 환경산업의 발전과 연계되는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는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상용화되기 어려운 모의시설을 베트남에 제공하였고, 베트남 측 역시 사업 목적이 오염처리설비의 상용화 보다는 선진화된 시험장비의 확보에 더 관심 있었기 때문이다.³⁴¹⁾ 대기오염 관련 사업은 중국 측의 수요가 낮으나 우리나라의 황사예보를 위한 감시체계구축의 필요에 의해 한 경우였다. 또한 중국 천진과 우리나라 부산의 환경오염관련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중국 천진 도시대기 분진사업이 있는데, 중국 측 수혜기관이 지방대학 부설 연구소인 점으로 인해 연구결과와 실행 및 법제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⁴²⁾ 이밖에 튀니지 대기오염 모니터링 능력강화사업도 2008년에 실시되었다.

340)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2007)

341)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2007)

342) (KOICA, 2009c)

물 사업은 일본이 독보적이며, 선진국들의 지원도 늘지 않는 편이다. 「MDG Gap Task Force Report」(2008)에 의하면 사회 부문 섹터 ODA의 1995년부터 2006년 지원에서 보건, 공공행정, 교육 관련 사업이 15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물 분야는 70억 달러에 그쳐왔으며, 1999년 이래 안보나 건강의 가파른 증가에 비해 물 분야의 증가는 거의 없다. 공여국 전체를 볼 때, 물 분야에서는 ‘식수공급 및 위생: 대규모 시스템 분야’가 식수공급 및 위생 관리(Water Supply & Sanitation) 부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위 섹터이며, 이중 65%가 유상이다.³⁴³⁾

C. 환경 분야의 비교우위

2006년 환경산업시장은 전체 수출의 1%도 못 미치고,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세계적 환경기업이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환경은 아직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라 하기 힘들다. 오·폐수 고도처리,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기술, 배연탈황기술 등 오염처리와 사후처리 중심의 기술은 선진국 대비 70%에 이르러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사전오염 예방, 유해 물질 평가, 지구환경 대책기술, 생태계 복원 및 복원기술, 폐기물 재활용 등의 첨단 청정 환경기술 등 많은 분야에의 기술수준은 기초기술습득 또는 기술도입단계로 선진국 대비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³⁴⁴⁾

환경 분야 중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은 소각로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정비, 녹화조림사업, 도시환경 인프라 정비 등이다. 폐기물 처리는 2003-2007년 세계은행 RCA 지수 24.03, 수주비율 2.8%로 우리의 현시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는 세계은행 발주 총액의 0.12%에 불과하여 전체 발주 규모 자체가 작고 우리나라의 수주실적도 우즈베키스탄에서 1건의 Goods & Works 사업에 불과하므로 경쟁력 평가가 곤란하다.³⁴⁵⁾ 폐기물 처리 중에서도 특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세부 분야는 소각로 및 고체 폐기물 처리이다.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5%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2002-2007년 ADB 사업에서 폐기물 관리 부문은 전체 수주국 중 10위로 비교적 높은 수주순위를 차지하였다.³⁴⁶⁾ 임업에서는 조림과 시비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육종, 개량 등은 선진국

343) (OECD, 2009d). 기초식수분야(Basic drinking water)는 무상지원이 대부분인 것과 대조적이다.

344) (박복영, 권을, 2008).

345) (박복영, 권을, 2008).

346) (박복영, 채욱, 2007)

에 비해 기술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³⁴⁷⁾

대기오염방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6%, 수질오염방지는 59%이다.³⁴⁸⁾ 집진기, 폐수처리설비, 여과기 등의 경우는 관련 기술 확보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탈황기술 등과 같은 고급기술 분야에는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의 미비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³⁴⁹⁾ 또한 환경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토목, 건축 분야를 겸업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수자원 면에서 보면 인프라와 상하수도 보급률이 147개국 중 27위이고 하천수 수취율이 36.5%에 이르는 등 세계물빈곤지수(WPI)상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천과 댐 관련 건설기술이 빠르게 향상되어 현재 각각 선진국 대비 77%~73%까지 향상되었다. 취수와 하수처리사업 등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정도에 이른다. 우리나라 물 산업의 84.5%를 상하수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기술은 2007년 기준 선진국의 76%까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⁵⁰⁾ 물 산업은 최근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자될 예정인 미래 중점 투자부분이며 국제적으로도 물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부족과 외국에 비해 자본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의 기치 하에 친환경 에너지 부문은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태양광은 환경 분야의 0.34%, 풍력은 0.86% 밖에 차지하지 않는 등 두 분야 모두 타 공여국 지원이 매우 적은 하위 섹터(Sub-sector)이다. 태양 에너지는 스페인이, 풍력은 독일이 주 공여국이다. 협력단도 이 분야에서는 아직 프로젝트 사업이 없으나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 재원이 있어, 앞으로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중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태양광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1%, 모듈가격은 80% 수준이다.³⁵¹⁾ 국내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되어 실증연구가 이루어지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모든 전략품목이 최신기술의 개발은 활발하나 특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은 82%로 높으나, 3극 특허비율은 28% 밖에 미치지 않는다.³⁵²⁾ 선도기업으로는 중국의 Suntech, 일본 Sharp, 독일 Q-cell 등이 있다. 우리

347) 기후변화대응반 연구관 인터뷰

348) (박복영, 채욱, 이제민, 2007)

349) (권율, 박영호, 이종운, 황주성, 2006)

350) (박복영, 권율, 정성춘, 2008)

351)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2009)

352)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2009)

의 중공업, 조선, 해양건설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풍력은 시스템 위주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³⁵³⁾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역시 특허 경쟁률에서 보유특허의 최신 특허비율은 82%로 높으나 3국 특허비율은 7%에 불과하다. 현재는 덴마크, 스페인, 미국, 독일 등이 기술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 기업이 세계 풍력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³⁵⁴⁾

5. 섹터 분석 총정리

타 공여국이 사회 섹터에 집중하고 다부문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생산 부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추세는 최근에 와서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원은 원조의 보완성과 다양성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절대 지원액 면으로 보았을 때 2007년 기준으로 타 공여국보다 절대 지원액이 많은 섹터는 DAC 평균 4배인 통신 (Communication)과 1.1배인 수송 및 저장(Transport & Storage) 부문이며 이는 모두 경제 상위 섹터에 속한다. 이는 경제, 수송, 통신, 에너지 등의 경제하부구조와 물, 농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패턴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부문 중에서도 협력단은 ICT를 중점 지원 분야로 꼽을뿐 아니라 원조액도 집중하고 있어 차별화된다. 협력단이 중장기 전략에서 표방하는 세부 분야에 따른 목적과 타겟은 전자정부와 ICT 분야 인력양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JICA나 USAID 중기 전략 목적과 겹친다는 점도 협력단이 ICT 분야로 특화되기 유리함을 보여 준다. 또한 운송 및 저장과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등 산업 에너지 부문에서도 절대적 자원 면과 상대적 비중 면에서 타 공여국과 차이가 있다. 사회 부문 교육 섹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비중이 타 공여국보다 월등히 높고 원조규모도 0.92배로 타국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차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 면에서는 DAC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비중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제도 부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부 지원 분야인 공공행정 하위 섹터(Sub-sector)의 대부분이 물자지원이어서 한국형으로 모델화하기에는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섹터의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는 타 공여기관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나라가 인권과 법의 지배(Rule of law), 민주주의 지원, 분권화, 부패방지, 행정 서비스 개혁

353)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2009)

354)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2009)

(Public service reform) 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경제개발, 산업개발정책, 중소기업 육성, 무역 활성화, 수출진흥 등 타국에서는 대부분 ‘민간 부문 개발’, ‘무역’, 혹은 ‘경제 개발’ 섹터 하에 포함된 사업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부와 시민사회(Governance & Civil society) 지원이 평화와 안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제정책 및 계획 세무 부문에 대한 지원은 1995년 이래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경제발전정책과 계획 부문에 더 많은 원조액을 투자를 할 경우 규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차별화의 여지가 크다.

KOICA의 중점 분야는 경제(정보통신, 산업 에너지), 사회(교육, 보건, 행정제도), 생산(지역 개발), 다부문(환경) 모두를 담고 있어서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제 2장의 선진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대로, 특화를 위해서는 비슷한 중점 분야가 클러스터(Cluster)화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가지기에 불리한 위치라 하겠다. 협력단의 중점 분야를 타 DAC 공여국과 비교 가능한 그룹으로 세분화했을 경우 섹터 수가 12개로 DAC 공여국 평균 8개를 넘을뿐 더러 최다라는 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겠다. 특히 원조규모의 절대적 액수가 적은 KOICA와 같은 기관은 특히 목표하는 원조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섹터 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한정된 분야의 지원액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우리처럼 원조액이 적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사회 부문에 80%를 집중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KOICA의 섹터별 세부 분야를 분석해 본 결과, 교육 및 정보통신, 지역개발 등 한국형 모델 화할 수 있는 사업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보건과 행정제도, 환경 분야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산업 에너지 사업은 여러 세부 분야에 분산되어서 한국형 관련 사업비중이 높지도 낮지도 않다 하겠다.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는 세부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는 독일이어서, 독일의 사업내용을 참고하면 유용할 것이다.

제 4장 분석틀과 데이터베이스

이 장에서는 제 2장에서 논의된 한국형의 정의에 따라 한국형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틀(Framework)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제 3장에서 논의된 협력단의 7개 분야 44개 세부 분야 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계량적으로 점수화시키기 위한 기준과 방법이 논의된다.

1. 분석틀(FRAMEWORK)

한국형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틀은 크게 열과 행으로 나뉘는 매트릭스이다. 열에 있는 선정기준(Criteria)을 통해 행에 제시된 44개 프로그램 리스트(List)가 분석이 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은 한국형 모델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열의 선정기준은 공여국인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공급적 측면과,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의 목적 중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를 다루는 수요적 측면의 기준으로 나뉘어진다. 행의 44개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Positioning)에서 논한 것처럼 각각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개발이라는 세 가지 원조방식과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의 6개 컬럼은 5점 만점으로 점수화되어 총합이 30점 만점이 되며 마지막 컬럼은 ± 1 점을 준다. 열과 행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도식과 같다.

[그림 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열										
					공급적 측면				수요적 측면	
행	Criteria				한국적 경험과 적용성	산업적 비교 우위	타 공여국 과 차별성	KOICA 사업 성과	국제 개발 목적 MDG	특정 국가 그룹에 적용성
	Program List (44개)									
	분야	세 부분 분야	프로그램 명	원 조 목 적 코드	정책 프로그램 예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예					
					인적역량 프로그램 예					
					점수 및 척도	5	5	5	5	5 혹은 1
						5	5	5	5 혹은 1	±1

1) 열(COLUMN)

열은 무상원조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공여국인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공급적 측면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에 부합하면서도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보는 수요적 측면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 제시된 각 컬럼의 요소가 모두 충족될수록 총합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 군을 한국형 모델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는 [별첨 17]에 제시가 된다. 여기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컬럼이 의미하는 바와 컬럼별 숫자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다.

A. 공급적 측면

공급적 측면은 (1) 한국적 경험과 적용성 (2) 산업적 비교우위 (3)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4) KOICA의 사업성과 및 연수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기타 항목으로는, 특별한 기술 없이 점수만 산정한 (5) 한국 정부의 미래 중점 사업 부문³⁵⁵⁾이 있다. 각 기준이 어떤 세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래 일반적 설명에 이어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한 농촌종합개

355) 녹색사업, 수자원 관련 사업

발사업 혹은 참여적 지역개발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아래에 사용된 숫자는 [별첨 17] 및 [표 29] 데이터베이스의 숫자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라 하겠다.

i. 한국의 개발경험 및 적용성

정부정책을 통해 이룬 성공적인 한국의 구체적 개발경험과 관련된 제도, 제도도입의 배경과 효과와 구체적 사례, 그러한 성공을 이룬 요소, 그리고 타 개도국에 이러한 요소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1-1) 시대별 관련 제도와 법률
 - 1-2) 시대별 개발 정책 사용의 배경, 결과 및 효과, 성공사례 및 스토리
 - 1-3) 관련 기관: 공기관, 학술 및 연구기관, NGO, 기업, 국제기구³⁵⁶⁾ 등
- 2. 한국적 성공의 요소와 보완점 및 적용 가능성은?
 - 2-1) 내적 · 외적 성공요소
 - 2-2) 보완점
 - 2-3) 우리 개발경험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정치 · 경제 · 사회적 배경과 현재 수원국이 처한 환경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우리 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성
- (참고문헌)
- 점수책정은 KOICA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경험의 적용성이 낮을 경우 1점이 가점 혹은 감점된다.
- 예시 [박스 3]

356)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따로 국제기구리스트를 첨가하지 않았으나 해당 세부 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국제기구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박스 3] 새마을 운동을 통해 본 한국적 경험과 적용성

1-1)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전국의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되어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직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

1-2) - 정부가 1971년 잉여 시멘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잉여 시멘트를 마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공공목적의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전국 3만 3,267개 마을에 마을당 335 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시멘트를 농로개선, 상하수도 시설설치, 하천제방보수, 공동우물 및 세탁시설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하도록 권장.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기대이상으로 농촌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고 이에 고무되어 내무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마을을 조사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발전수준에 따른 다른 지원 시도. 이는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마을간 경쟁 유발.

- 1972년도에 내무부에 범부처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주도로 전국의 마을단위로 추진 시, 군, 읍, 면 새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 1975년도에는 도시와 공장 등 전국적으로 확대. 초창기의 농촌 새마을사업은 하나의 마을을 사업단위로 하여 추진하였지만 1976년부터는 개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 주택, 공동시설, 농로, 생산기반사업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는 하나의 계획 속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소득개발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 1980년 12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설립 시, 군, 구 지회가 설립됨. 1982년부터는 생산기반시설과 문화복지사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이 여러 마을의 이해에 해당하는 경우 5-10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권사업을 실시.

-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 총 52,58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가 51%에 해당하는 27,987억 원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49%에 해당하는 24,596억 원을 투자.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은 그 재원을 정부나 외부의 원조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농촌 새마을운동은 총 투자액의 49%를 주민이 부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된 점에서 농촌개발의 신기원을 이룩함.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 인프라가 크게 발전하고 농촌이 현대와 근대화 되었으며, 근면·자주·협동의식 고취하는 데 기여.

1-3)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 리더십센터, 한국농촌공사, 단국대학교 국제농업훈련연구소, 경북대학교 국제농업훈련원, 가나안 농군학교, UNDP, FAO, IFAD, ECOSOC

2-1) - 새마을운동은 소득증가, 생활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사회통합 및 의식개조의 다차원적인 농촌개발사업. 새마을운동은 (1) 추진 및 지원체계가 전국적·범정부적이고 (2) 지원체계는 하향식이나 사업의 추진체계는 상향식 (3) 단순한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운동차원에서 “근면, 자조, 협동”의 슬로건을 통해

“하면 된다”는 정신을 키워 농촌주민의 정신 개조까지를 포함하는 마을단위의 종합개발사업 (4) 새마을 지도자의 리더십(Leadership)과 대통령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 (5) 결과 중심적 관리: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간 경쟁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경쟁원리와 인센티브(Incentive)제 도입 (6)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통해 주인의식과 재정적 자립성 제공 (7)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 등이 성공요소로 꼽힐 수 있음.

-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동계 등 마을 총회 기구가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1년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예산과 결산을 하며 공동 건축물 및 노동에 대해 구성원이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 온 전통이 있었음. 이러한 전통사회에서의 자치적 농촌개발방식은 일제에 의해서 농촌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방식에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으로 바뀌어짐.

2-2) 농촌빈곤의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함.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의 강제력이 수반된 점 등이 있어 부작용이 많았으며, 획일적인 행정지시로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됨. 예를 들어 전통적 가옥이 없어지고 획일적 오렌지 지붕의 집들이 들어섬. 또한 정부관료가 개입하면서 획일적인 계획과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는 것을 강조하게 됨. 그리고 민간 주도로 재 출범한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제5공화국 하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관변단체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앞장서고, 새마을운동 본래의 근면, 자조, 협동 및 “하면 된다”의 새마을정신과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개발의 이념이 쇠퇴하면서 그 활력을 상실. 또한 Brandt (1981)는 경작지가 없는 극빈층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봄.

2-3) - 개도국에 전수된 새마을운동은 한국정부로부터 원조받는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조와 지속성, 범정부적, 전국적, 종합적, 장기적 측면이 지켜지지 않고,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종료평가 2009년 PPT자료에 따르면 타국 모델과 차별성도 모호함. 한국형 농촌개발은 여럿을 꼽을 수 있으나 지역과 농촌유형 발달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 있음. 파견된 전문가들의 현지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 또한 공급자중심 청사진 사업계획이 장애요인임.

- KDI의 연구원인 Elijah Munyi는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쉽지 않음을 역설하면서 (1) 아프리카 정부는 강한 정치적 동기가 없고 (2) 한국의 농업지원정책은 일종의 농업에 대한 보조로 높은 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한다거나 쌀 수입을 금지하며 시장을 보호했을 때 효과적이었는데 아프리카 정부들은 1970년대 한국정보보다 보조금 활용 면에서 약할뿐 아니라 자유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을 펴기가 힘들고 (3) 한국의 경우처럼 거의 모든 농부들이 ‘쌀’이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농부들은 훨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지원작물의 선택에 있어서 집중할 수 없음을 제기. 이에 따라 한국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활용 가능한 지식(Feasible & Usable knowledge)이 되도록 할 것을 권고.

(참고: 허길행 외(2008)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 개발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Saemaul Handbook, Elijah, N. Munyi(2008.7.22)., "Exporting Saemaul Movement", Korea Times, Park, Sooyoung (2009). Analysis of tKorea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ii. 산업적 비교우위

비교우위는 원조사업 수행기술과 역량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 1. 일반적, 산업적 비교우위
- 2. ODA 산업에서의 비교우위
- 3. 현시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 RCA 지수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수출비중 ÷ ODA 분야별 발주비율로 1 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봄. 2000년-2007년 한국의 수출율이 1.2%인 세계은행과 2.93%인 ADB를 위주로 봄. 그러나 아프리카 개발은행(수출율 0.5%), UN(수출율0.19%),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이나 조달시장 수출율은 매우 적어서 제외함.

- 점수책정은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예시 [박스 4]

[박스 4] 농촌종합개발 분야의 비교우위

1. 농업 분야 경쟁력이 높지 않음. 한국의 농가인구 비율은 선진국 2-3%에 비해 7%이나 규모의 경제 실현 못함.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5.5%에서 2.6%로 감소. 농가소득/도시가구 소득비율(%)은 95.1%에서 78.2%로, 가구당 농가부채는 916만 원에서 2,721만 원으로, 농가인구는 485만 명에서 343만 명으로, 농촌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25.9%에서 40.3%로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16 (제 604호))
2. - 「대 개도국 농촌개발경험 전수방안 연구」(2008)에 따르면 농림부분 전문가 62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및 한국의 개발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11.3%가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사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다고 응답.
 -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몽골, 네팔, 필리핀, 우간다,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9개국 18개 마을 130명 지도자 초청 Central Training Institute에서 연수, 대학생 해외봉사 파견, 2008년 말까지 74개국 4만 7천명에 대한 교육 실시. (새마을운동 중앙회)

-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의 「농촌개발 KOICA 봉사단 활동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협력하여 참여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와 대학병원을 통한 현지주민 확장사업을 한 것이 효과적이라 평가되었음. 각기 전문 분야를 살려 약초 조제실 신축, 기자재 공여 및 기술지도 등으로 지역 소득 증대 사업을 하였고 병원 지원 및 무료 진료 등을 통한 모자보건 개선사업으로 지역의 보건향상 기여.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2007)

- 새마을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UN 등 국제기구나 NGO로부터 개발도상국 농촌개발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음. (연수과정 종료평가)

- 2004년 한국 NGO 해외 봉사단 파견 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가 24%를 차지하여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짐. (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7)

- 60-70대의 퇴직한 개발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며, 이들은 JICA, USAID에서 원조 받은 경험과 우리나라의 개발 단계를 몸소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 (농어촌 개발팀 인터뷰)

3. 농업은 RCA 지수 0.08, 순위 93위로 우리의 현시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부분 중 하나임. 2003-2007년 세계은행 수주에서는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Goods & Works 분야의 1건이 전부이며, 아시아 개발은행 역시 1건이 전부임(1.0%). 농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이 강세를 보여 수원국 자체 참여 비율이 높으며, 선진국은 영국이 18위권이고 나머지 유럽국가들도 20위권 밖임. (박복영, 권율, 정성춘,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2008)

iii.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 이 컬럼에서는 2002-2007년도 사이에 DAC 양자 공여국과 다자 공여기관의 유·무상 ODA 을 분석하여서 교육, 보건, 행정, 정보통신, 지역개발, 환경의 7개 분야 내에서 특정 세부 분야와 매치되는 CRS 코드에 타 원조기관의 원조가 지원되는 비중이 낮으면 차별화 되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데이터는 “1. 타국섹터 % 평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DAC 공여국과 KOICA의 각 세부 분야별 원조규모 및 비중, 그리고 상대적 절대적 주 공여국에 대해서 분석한다. 콜론(:)의 왼쪽이 DAC 공여국의 2002-2007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 공여국이 1년에 얼마씩을 몇 %로 특정 세부 분야에 지원하는지’를 본 것이다. 콜론의 오른쪽은 2001-2007년 협력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KOICA가 연평균 특정 세부 분야에 얼마씩을 몇 %로 지원하는지를 본 데이터다.

• 1. 특정 세부 분야의 지원비중(%): 특정 세부 분야가 그 분야 내에서 몇 %를 차지하는

지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부문 농촌개발(CRS 코드: 43040)이라는 특정 세부 분야가 “지역개발”이라는 분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공여국의 경우 22.45%이고 협력단에서 22.26%이면, 이는 22.45% : 20.26%으로 기술된다. 관련 데이터는 3장 4섹션의 KOICA와 타 공여기관의 세부 분야별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 2. 특정 세부 분야의 순위(위/위): 특정세부 분야가 그 분야 내에서 지원 순위가 몇 위인지를 보는 것이다. 농촌개발은 DAC 공여국의 31개 지역개발 세부 분야 중 1위를 차지하는데, 협력단의 23개 지역개발 관련 세부 분야 중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1위/31위: 1위/23위로 표시된다. 역시 관련 데이터는 3장 4섹션의 KOICA와 타 공여기관의 세부 분야별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 3. 지원액 평균(USD million): 이는 특정 세부 분야에서 DAC 1개 공여국 당 연평균 지원액을 뜻한다. 즉 DAC 공여국은 농촌개발에 연평균 23.28 백만달러를 지원하는데, KOICA는 2.10백만달러를 지원한다. 이 경우 23.23 : 2.10로 표시된다. 단 다른 DAC 공여국 평균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ODA 활동이 들어가는데 반해, KOICA 원조액은 다른 한국기관의 ODA지원액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차이를 유의해야 한다. 즉, 여기서는 KOICA 데이터만 사용하였으므로 ‘타국 대 한국’의 비교로 보아서는 안 된다[평균 지원액 데이터는 별첨 12: KOICA의 CRS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1-'07/별첨 13: DAC 양자 무상 ODA CRS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참고].
- 4. 공여국간 비교시 절대 액수 면에서 가장 많이 원조하는 공여국과 그 공여국의 연평균 원조액수(\$)가 콜론 앞의 데이터다. 콜론 뒤의 데이터는 상대적인 면에서 주 공여국과 그 주 공여국의 연평균 배분비중(%)이다. 상대적 공여국은 특정 세부 분야에 한 공여국 내 ODA 할당시 가장 큰 비중으로 원조하는 나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농촌개발 분야에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공여국은 독일로 연평균 지원액은 \$94.34백만이며, CRS 코드 43040에 상대적 비중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서 지원비중이 4.25%이다. 이 경우 ‘독일’ 94.34% : 룩셈부르크 4.25%로 표시가 된다[별첨 14: 절대적 주 공여국 평균 지원액 '02-'07/별첨 15: 상대적 주 공여국 평균 지원비중 '02-'07 참고].
- 종합 평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비중과 액수로 지원되는 분야인지 여부, 타 공여국과 협력단 지원 액수 및 비중 차이, 공여국 총 지원액별로 CRS 코드를 정렬했을 때의 순위 등을 논의한다. 하위 섹터 숫자가 4개 밖에 되지 않아, 섹터별 순위가 의미가 적은 IT 분

야의 경우 분야별 순위 대신 전체 CRS 코드에서의 순위를 논의한다.

- 점수는 주로 차별성을 따져서 타국의 지원 비중이 1% 이하면 5점, 1-3%면 4점, 4-7%면 3점, 7-10%면 2점, 10% 이상이면 1점을 주었다. 그러나 지원액 등 다른 종합적인 면도 고려하였다. 단, ICT 분야는 세부 분야가 4개로 적어서 하위 섹터가 많은 다른 분야와 같이 위의 방법으로 점수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CRS 코드에서 ICT 사업의 순위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ICT는 양·다자 유·무상 ODA 사업 194개 분류 중 150위를 차지하여 다른 공여국에서 많이 지원되지 않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별첨 11: 양·다자 유·무상 ODA CRS 코드별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정보통신 분야는 또한 다른 전통적인 원조 분야만큼 세분화 되지 않고 CRS 코드가 하나만 있으며, ICT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주로 '수단'으로 취급되어 다른 원조목적코드 아래 분류될 수 있으므로 타국과의 비교가 힘들다.

• 데이터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

CRS 코드는 효율적으로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한 코드 안에 워낙 다양한 사업내용과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허락한다면 개별 공여국별 프로젝트 이름(Project title)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아니면 국별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베트남의 경우처럼 수원국이 자체 집계하는 공여국 원조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⁵⁷⁾

분야별 카테고리는 협력단 사업과 다른 공여국의 차별성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KOICA 기준에 맞추었다. 즉, 협력단에서 섹터를 분류하는 방법을 다른 공여국에게도 적용시켜서 특정 CRS 코드를 어떤 분야에 넣을지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식수 분야가 다른 공여국에서는 '환경' 아래 있다고 해도, 협력단에서는 '보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모든 CRS 코드가 아니라 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코드 위주로 분석하였다. 하나의 세부 분야 및 코드는 여러 분야에서 중복되어 쓰일 수 있으나, 협력단의 2007-2010년 중장기 전략에서 중점 세부 목적(Goal)과 목표(Target)로 분류된 분야를 따랐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및 관리(43030)는 다부문 환경이나 산업 에너지에서 모두 쓰이는 코드이나, [표 8]을 보면 신도시 개발이 산업 에너지의

357) 교육팀 면담(2009. 9)

Goal 2인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로 잡혀 있어 산업 에너지 하에 분류하였다.

타 공여국의 데이터는 2002-2007년 실제 지불액(Disbursement)으로 OECD 통계의 기초 데이터(Raw data)를 통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분야별 지원비중 및 순위 데이터는 2002-2007년 모든 양·다자, 유·무상 원조를 합하여 계산된 것이다.³⁵⁸⁾ 양·다자와 유·무상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 이유는 한국의 원조 차별성을 수원국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수원국 측에서는 어떤 성격의 공여기관에게 어떤 형태로 받느냐 보다 해당 세부 분야가 국제적 차원의 원조 배분시 비중 있게 지원되는 분야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DAC 공여국 연평균 지원액과 절대적 및 상대적 공여국 데이터는 DAC 양자 회원 22개국의 실제 지불액으로 구하였다. 이는 협력단 혹은 한국 ODA가 얼마를 어떤 비중으로 지원할지 참고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다자기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DAC 공여기관의 경우 2001년은 데이터의 수집율이 60% 이하이고 2002년부터는 90%가 넘으므로 2002년부터 분석에 포함하였다.³⁵⁹⁾ KOICA의 경우는 2001년부터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2001년부터 포함하였다. KOICA 자료는 2001-2007년 실제 지불액(Disbursement)이며 원화로 계산돼 있는 데이터에 ODA 통계에 쓰이는 공식적인 경상가격(Current) 달러 환율(USD)³⁶⁰⁾을 적용하였다.

CRS 코드를 분석, 분야별로 정렬하여 공여국 당 연간 ODA 지불액(Disbursement)(USD) 평균을 내었는데, 1개국당 연평균과 5-6년간 총 지원액의 합계 두 데이터를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별첨 12: KOICA의 CRS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1-'07/별첨 13: DAC 양자 무상 ODA CRS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별첨 8: KOICA CRS 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2-'07/별첨9: DAC 양자 무상 ODA CRS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예를 들어 한 분야에 1년만 100만 달러를 지원한 국가 A와 3년 동안 50만 달러씩 지원한 국가 B를 비교시 실제 총액은 B가 150만 달러로 A의 100만 달러보다 더 높으나, 미제공 연도를 제외한 연평균은 B가 50만 달러,

358) 양자기관은 DAC 22개국[국가명은 [별첨 4] 참고]이며 다자기구는 AfDB, AfDF, ASBD, ASDF, EC, Global Fund, IBRD, IDA, IDB, IBD SP. Fund, IFAD, UNAIDS, UNFA, UNICEF 이다

359) 2002년 전의 CRS 지출액은 연간 Coverage가 60% 이하인 관계로 권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는 90%가 넘고 계속 향상되고 있다(OEDC Stats, http://stats.oecd.org/qwids/about.html#SOURCES_OF_THE_DATA).

360) 2008년: \$1=1110.1원, 2007년: \$1=929.2원, 2006년: \$1=955.51원, 2005년: \$1=1024.31원, 2004년: \$1=1144.67원, 2003년: \$1=1191.89원, 2002년: \$1=1251.24원, 2001년: \$1=1290.83원

A가 100만 달러로 A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주 공여국 계산시 5년간 전체 원조 총액이 가장 높은 공여국을 먼저 선정하고, 이 공여국의 연평균을 그 분야의 원조가 제공되었던 해에 한에서 구하였다.

• 예시 [박스 5]

[박스 5] 다부문 종합농촌개발 사업의 차별성 분석

43040 (다부문 농촌개발)

1. 22.45% : 22.26%

2. 1위/31위 : 1위/23위

3. \$23.28 : \$2.10

4. 독일 \$94.34 : 룩셈부르크 4.25%

독일이 주 공여국, 선진국 및 한국 모두 농촌개발에 많이 지원, 그러나 내용 면에서 한국은 직접 개발경험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차별화 가능.

iv. 협력단의 사업성과

• 성과를 보인 사업의 이름, 년도, 액수 및 평가 내용

• 참고문헌: 기본적으로 현재 협력단에서 발간된 모든 분야별, 형태별 사후 외부평가[별첨 7: 분야별 평가 및 프로젝트 사후평가 보고서 목록 참고] 및 일부 종료평가에 기초하였다. 분야별 평가는 교육, 보건, ICT, 농업 환경 분야 평가를, 사업형태별 평가서는[별첨 7]의 프로젝트 사후 평가서 및 「1992-2008 프로젝트 사업현황」(2009), 「연수과정 종료평가 보고서」(2007, 2008), 「전문가 파견사업 평가 보고서」(2003), 「봉사단, 개발조사 사업형태별 평가 보고서」(2009),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2007, 2008) 및 「2007 무상·기술 협력사업 수혜자 평가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평가가 없을 시에는 사업 종료평가를 참고하였다. 평가내용이 없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때는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2009)이나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 이름과 목적, 내용을 나열하였다.

• 연수사업은 2007년과 2008년 내용을 담았으며, 숫자는 평가 보고서 페이지 수를 가리킨다. 연수사업 평가는 약식이기 때문에 정식 평가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업에 대

한 개괄적인 평가만 참고하였다.

- 점수는 사업 평가서를 위주로 하되, 사업의 수 및 연수사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 예시 [박스 6]

[박스 6]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한 KOICA의 성과

1.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2008)**: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2008)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의 경우 주민협동심이나 자립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캄보디아와 라오스 양국 모두 자국의 농촌개발모델로 새마을운동을 검토하게 됨. 그러나 효과 저해 요인으로는 소규모 사업의 다수 시행으로 인해 마을 공동 인프라 형성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보다는 개인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 또한 짧은 현지교육 후 사업이 실시되어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마을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운영 원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였음. 그리고 시범마을마다 정주형태, 지도력, 정치적 성향, 주민 요구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됨.
2. **베트남 2개 지역 새마을운동 시범사업(2001~2002/30만 달러)**: 2000~2005년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저소득 농민 부락을 선정하여 새마을운동 형태의 농촌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 2005~2010년 2차 프로그램 추진.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2006년부터 650개 농촌에서 동 사업을 모델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 2만4천 달러를 지원한 농업신용자금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률도 각각 33.4%와 40%로 5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용 중. 베트남은 과거 우리 농촌과 유사하고 베트남 정부 측의 적극적 관심과 사업의지가 있어 지속 가능성 있음. 마을의 문제를 소득증대, 환경개선, 교육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빈짜마을 등 시범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함. 2개 지역 7개 마을에서 시작된 사업이 실시 3년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수 모두 깊은 관심 가지고 있고 성공한 모델로 평가. 그러나 정부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이 적고 젊은 인력이 부족한 베트남 농촌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조직적이고 실효성 높은 농촌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음.
3. **캄보디아 3개 지역 농촌지역 개발사업(2005~2006)**: 농촌개발사업 모델로 채택되었으며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 「캄보디아 농촌 개발 사업 종료 평가」(2009)에서는 동 사업이 마을회관 건립, 마을 기금 적립, 소규모 용자제도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소득훈련사업이 단기로 이루어져 참여 저조했음. 주민이 문맹인 상황에서의 마을 문고 이용도는 저조할 것이며, 농기계 등은 공여기종, 기술수준에의 적합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 유지에 어려움 예상. 자발적 새마을운동 정신이 뿌리내리기는 한계가 있고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음.

4. **파라과이 농촌개발 시범사업**: 당초 계획대로 농장이 운영되지 못하여, 사업효과는 미흡한 실정임. 주 원인은 이전 정부 하 농목부의 관리 및 지원 부재에 기인함. 시범농장사업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투입요소가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검토 실시를 통한 검증 및 준비절차가 필수적이며, 특히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원국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5.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Korean Millennium Village)** 사업(진행 중): 유엔은 2004년 만성적 기아 및 질병 문제 등이 심각한 아프리카 최빈국 마을을 선정하여 교육·보건·농업 등 개발 분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마을의 MDG를 달성하기 위한 밀레니엄 빌리지 이니셔티브 도입. 현재까지 아프리카 10개국 80개의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이 진행 중임. 사업계획의 수립, 실시,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수원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마을지도자, 주민, 현지인 전문가가 MP/UNDP와 협의, 사업형성),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MP와 한국측 3개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구체 협력약정 체결 추진.

v. 미래 중점 분야

비교적 명확하게 점수가 책정될 수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컬럼을 만들어 기술을 하지는 않았다. 이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녹색성장과 물 관련 분야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역시 5점 만점이다.

B. 수요적 측면

수요적 측면은 (1) MDG로 대표되는 국제적 차원의 개발목표 (2) 수원국의 사업요청 (3) 특정 국가 그룹 및 지역에서의 적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MDG와 수원국의 사업요청은 데이터베이스의 한 컬럼에 모두 기술이 되어 있다. 각 기준이 어떤 세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i. 국제적 개발목표

- 1. MDG와의 관련성: MDG 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개발목표라고 볼 수 있기에, 이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 국제적 원조목적에 더 일치되는(Align) 사업이라 할 수 있다[별첨 16: MDG]. 넓게 보면 사실 MDG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관련 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해, 여기서는 MDG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에만 해당 목적(Goal)과 목표(Target), 지표(Indicator)를 표시하였

다.³⁶¹⁾ 또한 MDG 목적 중에 진전이 별로 없거나 후퇴되어서 격차가 큰 분야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원조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 점수는 특정 세부 분야의 사업이 직접적으로 몇 개의 MDG 지표(Indicato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개수를 세서 개수가 많은 만큼 높은 점수를 받는 5점 척도 방법과, 단순히 MDG 지표와 관련이 있으면 1점을 받는 방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는 MDG 지표와 많이 관련된 사업이 꼭 국제적 원조목적과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점 때문이다.

- 모자보건 사업의 예시 [박스 7]³⁶²⁾

[박스 7]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본 국제적 개발목표 및 MDG와의 연관성

1. 「MDG Gap Report」(2008)에 의하면 MDG 4(아동사망률 감소)와 5(모성보건 향상) 특히 모자보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함

MDG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Target 4.A: Reduce by two-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4.1 Under-five mortality rate

4.2 Infant mortality rate

4.3 Proportion of 1 year-old children immunized against measles

MDG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Target 5.A: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5.1 Maternal mortality ratio

5.2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ii. 수원국의 사업요청

- 2. 수원국의 특정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수요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점수화 하였다. 협력국 수요에 대한 점수는 2010년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원국에서 들어온 세부

361) MDG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단의 정책 및 지원사업의 이행실태 및 분야별로 MDG와 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에 대한 현황은 우동완, 조아영, 전명현(2009), “천년개발목표의 정책반영 및 사업이행상황 평가(Evaluation on KOICA's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MDGs)” 참고.

362) 새마을운동은 MDG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모자보건사업 예시를 들음.

분야별 사업요청 건수에 따라 점수화하였고, 이러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수요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참고하였다. 다른 해의 수요 요청은 데이터 부족으로 참고하지 못하였다.

- 수원국의 수요점수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다. 먼저 5점 척도는 2010년 총 340개의 수요요청 중 해당 세부 분야의 사업요청이 1건이면 1점, 2건이면 2점, 3-4건이면 3점, 5-9건이면 4점, 10건 이상이면 5점을 주었다. 이는 요청 건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2010년 수요조사만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요란 공여국의 영향을 받거나 관련 수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수요 총점을 1점화하고 건수가 3개 이상일 때만 1점을 주고 나머지는 0점을 주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였다.
- 예시: 농촌종합개발사업의 2010년도 수요요청은 11건이어서 5점을 받았다.

iii. 특정 국가 및 지역 그룹에 적용 가능성

- 1. 국가 그룹별: 발전단계, 소득수준(LDC/LIC/MIC), 취약국 및 고채무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HIPC) 여부, 자원 유무, 인구, 지리적 여건(내륙/해안), 정치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국가 그룹별로 한국적 경험의 적용 가능성과 원조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
- 2. 지역적 위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등 지역별로 한국의 경험의 적용 가능성 및 원조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
- 점수는 우리의 특정 시대, 특정 경험이 어떤 국가 그룹이나 지역에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특성이 우리가 특정 제도를 적용했던 시점 및 조건과 너무 상이할 경우 적용성은 더 떨어질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적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적용성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자료가 매우 적어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자세히 평가가 기록된 프로그램이 불리하게 점수가 책정될 수 있으므로, 5점 만점의 점수책정을 주는 대신 1점 가감을 하였다.
- 이 컬럼은 해당 세부 분야가 한국적 모델로 선정되었을 때 수원국의 선정이라든지 사업 수행시 국가 특성별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개괄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예시 [박스 8]

[박스 8] 특정 국가 및 지역 그룹에 새마을운동 혹은 참여적 지역개발사업의 적용가능성

1. -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형성 되어야 하기에 소농이 지배적인 농업국가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임.
 -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적용 가능함(참고: (허길행, 전승훈, 유철, 최미애, 2008) “아프리카 빈곤 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 농촌 새마을운동: 종합개발의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적용 가능함
2. 새마을연수원은 동남아시아에 설립 지원 가능 예: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 분야 협력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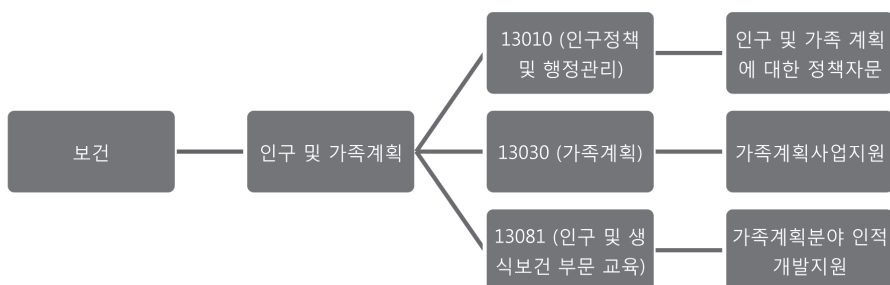
2) 행(ROW): 섹터별 국별 프로그래밍

열에는 7개 분야 44개 세부 분야 프로그램이 제시되며 이들과 가장 일치(Match)되는 CRS 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제 2장에서 논의한 한국형 프로그램의 정의에 따라서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 각각에 대한 사업 예시를 들었다. 아래는 행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이다.

A. 분야-세부 분야-CRS CODE-세부 프로그램 예시

아래 그림은 ‘보건’ 분야의 ‘인구 및 가족계획’ 세부 분야에 대한 3가지 요소의 프로그램과 그 각각에 해당하는 CRS 코드를 보여준다.

[그림 8] 분야-세부 분야-CRS CODE-세부 프로그램 예시의 연결고리



B. 3가지 프로그램 요소별 사업 예시

아래 표는 3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업형태의 예를 ‘직업훈련’과 ‘농촌종합개발’이라는 하위 섹터(Sub-sector)를 통해 보여준다.

[표 28] 정책,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의 세 가지 프로그램 요소와 각 요소별 사업형태의 예

프로그램 요소	사업형태의 예	‘직업훈련’ 세부 분야 예	‘농촌종합개발’ 세부 분야 예
정책전략 자문연구 및 옹호활동 • Policy consultation • Research • Advocacy	• 전문가 컨설팅, 개발조사, 연구공유 등을 통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 문 및 연구	• 국가자격법 제정에 필요한 법률·규정 수립 • 수원국 산업 인력에 대한 마켓 수요조사 • 직무표준분석	• 참여적 지역개발형 농촌개발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 지원 • 마을발전단계 조사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 Technical assistance	• 시범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인프라 구축	• 자격검정시설 시행기관 건립 • 직업훈련원 건립 및 시설 확충, 기자재 지원 • 진로지도시스템 도입 • 고용통계시스템 개발	• 시범사업현장에서 의 사업 실시 및 진 행 지원
인적역량개발 • People-to-people cooperation • Capacity building • Training	• 봉사단, 전문가 파견 및 개도국 연수 등을 통해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사람들의 역량강화와 훈련 • 인식고취 캠페인	• 노동부 등 직훈 관리 공무원 교육 • 직업훈련 교사양성 및 현직 교사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정책 담당자, 사업 관리자, 농촌 지도 자 등 초청 연수

2.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설명한 분석틀에 따라서 44개 프로그램을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단 세부 분야 별로 자료의 유무의 따라서 분석 내용이 제한된 경우가 있다.

[44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첨 17] 참조]

[표 29]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부사업을 예시로

분야	세부분야	프로그램	CRS	프로그램 예시	한국적 경험
프로그램 예시	제도적 기반 구축	전자정부 구축	15140 공공행정 인프라인터넷	전자정부 초기 단계인 국가의 경우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1-1)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1, 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정보화촉진기본법)을 추진하였고,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우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부처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 정부적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을 1999년에 수립.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생산성 높고, 국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형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함. 또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리고 체계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11대 전자정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선정, 추진. 2002년에는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여 국가정보화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최근에는 ‘u-Korea’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자정부 실현을 이루어 가고 있음. (안문석 외 《전자정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행정자치부, 2000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 발전사》 아이월, 2005) - 국민의 정부 시절 11대 중점과제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1대 로드맵 과제 수행을 위해 약 9,180억 원을 투자. - 이명박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9조3000원(정부 14조 1000억원, 민간 175조 2000억 원)을 투자해 IT융합-SW·주력 IT·방송통신·인터넷 등을 육성하는 IT코리아 5대 전략을 발표했고,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IT특보를 신설했음.” 1-2) - 전자조달: 조달청 ‘나라장터’는 3만 9000개 공공기관과 15만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2008년 한해 63조원 거래. 하루 웹사이트 방문 178,000건과 140,000 건의 전자문서 교환. 일년에 US \$410 억 불 시간 및 운송 면에서 절약, 조달정보가 공개되고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 입찰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경쟁을 가져오며 투명성 향상효과. 전자조달은 또한 전자상거래를 발달 촉진시키는 계기가 됨. 2003년First UN Public Service Award, 2004년Best e-Government Service Provider by OECD, 2004 UN의 Best practice model for e-procurement from around the world, 2005년 BS 15,000 by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6년Global IT Excellence Award in the Public Sector by the 15th World Congress on IT. 최근에는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으로 수출됨 (참고: Dadang Solihin, Public Officials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ogram for Government Innovation, 2007).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 분야에서 ISO 20000 인증. 국제청 홈텍스 - Web 기반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었던 2002년부터 민원신청 및 발급에 대한 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무관, 창구무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실현. 또한 행정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9년 8월까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문서업무 재설계(BPR) 사업을 통해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 문서의 종류를 도출. 2001년부터 정부 내 유통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는 행정을 구현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정부문서의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대폭 단축. 또한 2개 부처 이상에서 중복 관리되는 행정정보를 일원화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보공동활용을 지원하여 정보자원관리와 효율성을 제고. 끝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성된 정보의 전자화 및 DB구축, 네트워크구축 등을 통하여 전자적 정보공개에 위한 기반을 구축. 이와 함께 인터넷, 키오스크,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2002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전자민원 만족도가 향상됨. 1-3) -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 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T 인재개발원, 통계청,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산원, 행정자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전자정부 관련 로드맵 수립	
프로그램 예시	한국적 경험	전자정부 구축	15140 공공행정 인프라인터넷	기본인프라: 초고속통신망 및 네트워크구축 지원, 통합데이터센터, 통합통신망구축,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실시	2-1) 전자조달 성공요소: (1) 전자정부에 대한 전정부적 추진 시스템이 있었으며 (국민연금, 교육, 조세, 인사 등) 전자조달은 그 11개 프로젝트 중 하나였음. (2) 예산지원에서 최우선이었음. (3) 사용자의 의견을 개발 단계 초기부터 반영. (4) 전 국가적으로 통신 인터넷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었음. (5)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법을 개정이 1999년부터 계속 있었음. (6)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조달 시스템을 만들. (참고: Dadang Solihin, Public Officials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ogram for Government Innovation, 2007). -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요인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유관부처간의 협력과 조정, 민간부문의 기술력, 민간위원과 담당부처 공무원의 헌신 등으로 요약됨. 또한 추진 전략상으로는 선택과 집중원리, 주관부처 위주의 개발, 공통 애로사항의 제거, 그리고 체계적인 점검전략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됨. (참고: 나라기록원) 2-3)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나 정보격차 해소 등의 성과도 정보화 촉진 기금 등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추진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선진국이나 여타 개도국이 쉽게 모방하거나 이식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음. - 수원국 정부 인프라 구축 능력과 우리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능력 간에 현격한 차이로 인해 향후에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도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오류 등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연수 및 전문가 파견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각 국내에 특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대두됨.
				정부전산담당 인력양성 및 정부부처 공무원 전산교육 강화	

산업적 비교우위	타 공여국과 차별성	KOICA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 국가 그룹 별 적용 가능성
1.-UN전자정부 준비지수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중 2004~2005년 2년 연속 5위, 2008년에는 6위로 평가 받았음. 또한, 선진국과의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됨. - 전자정부 달성수준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전자거래나 통합처리 등 전자정부 상위단계에 대한 발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단계별로 '착수' 및 '발전' 단계의 달성수준은 각각 100점과 93점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매우 우수한 수준, '상호작용'단계의 달성수준은 76점으로 선진국 최고점수(90점 내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국가기간망 구축사업(SI)은 개발단계에서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예산의 제약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USAID의 전자정부 사업은 일본 JICA와 제휴를 통해 실시. UNDP도 주 공여국.	1. 가나 전자정부 구축사업 (2007-2008/150만 달러): 현지 열악한 전압사정으로 시스템 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6월) 정상화하여 운영. 가나 외교부 내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오류 등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가나 정부 인프라 구축 능력과 우리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능력 간에 현격한 차이로 인해 향후에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전자정부 사업 등 고난이도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측 전문가를 1년 정도 상주 파견시켜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집트 국립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건립사업(2004-2006/130만 달러): 우리가 지원해준 기자재 및 기술을 바탕으로 6개의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모델사업으로 효과가 큼. 2개 회사를 대상으로 2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1개 프로젝트는 진행중임. 최근에는 Int'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 Board (ISTQB)에 이집트 소프트웨어 테스트보드를 추가하는 등 활동이 활발. 3. DR 콩고 4개 부처 정보통신망 구축사업(2007-2008/161만 달러): DR 콩고 관료들의 컴퓨터 등 OA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해 데이터통신망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4. 몽골 외교부 외교문서 DB 시스템 구축사업 (2005-2006/60만 달러): 지원 기자재 및 장비의 활용 상태 양호함. 외교부 및 타부처 직원과 일반 시민들도 외교문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짐. 몽골 정부 부처 및 여타기관에서도 동 사업의 성과를 인지하여 동 기관 내 전자문서 보관소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임. 5. 요르단 2개 정부부처 정보화 지원사업 (2004-2005/90만 달러): 동 사업의 주요 구성 요소인 기자재 지원이 사업목표 달성에서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IT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함. 오라클 분야에 리눅스 전문가가 잘못 파견되는 등 파견자 전문성이 수원국 희망과 불일치. 6.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2004-2005/ 950달러):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인트라넷 및 문서유통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차량등록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부대모시스템을 구축. 7. 파라과이 외교부 현대화 지원사업 (1997년/ 400만 달러)	2007- 과테말라 전자정부 165, 모로코 전자정부 181(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 베트남 IT감사 세미나 188(연수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수원국에 수요에 맞는 목적제시 미흡), 아프리카 전자정부 203, 이라크 전자정부 228, 전자정부 271(기간 조정 필요), 행정정보화 관리 327 : (비교우위 높음, 커리큘럼 우수, 효과적인 적용도 보여줌, 전문적이고 심화된 주제 필요) 2008- 과테말라 전자정부 9, 모로코 전자정부 18, 미얀마 전자정부 24, 베트남 전자정부 31, 이라크 아르빌 정부DB구축 및 관리 기술 45(통역문제), 이집트 전자정부 58(프로그램 다양성 필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64, 전자정부 73, 카메룬 전자정부 121, 파라과이 전자정부 129	2. 2010년 수요 요청 16건으로 세부 분야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임.	1. - 전자정부사업은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되고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된 이집트와 같은 수원국에 지원가능 하며 가나와 라오스 등의 예에서 보듯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은 관리·유지가 힘들. -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등 정책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국가는 전자정부 및 ICT 응용기술 부문 중점지원 필요. 2. 전자정부 지수 전체 평균은 0.42이며,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이 가장 낮음 (OECD, "Exampl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National Development Plans as of February 2003"). 수원국 선정시 UN 전자정부준비지수를 참고할 수 있음.

3. 점수

[표 30]은 위의 분석틀을 통해 낸 점수이다. 물론 개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자료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와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서열변수(Ordinal variable)로서 점수의 간격(Interval)에 따른 차이도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여러 핵심적 요소를 통합한 한국형 모델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가 유용할 수 있다. 어떤 컬럼을 포함할지와 어떤 척도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총점이 달라지므로 기준과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한다.

[표 30] KOICA 44개 세부 분야에 대한 점수표

분야	세부 분야	한국적 경험	비교 우위	차별성	사업 성과	MDG 5점	MDG 1점	수요 요청 건수	수요 점수 5점	수요 점수 1점	적용성	미래 중점 육성
교육	고등교육개선	3	4	2	4	1	1	6	4	1		
교육	기초교육 확대	5	3	3	3	3	1	10	5	1		
교육	직업교육 훈련	5	4	3	5	1	1	18	5	1	1	
보건	기생충 관리	5	3	2	5			0	1		1	
보건	모자보건	4	3	4	4	5	1	3	3	1		
보건	안전한 식수공급	4	3	2	5	2	1	5	4	1		3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5	4	4	3	4	1	0	1			
보건	전염병 예방 관리	3	3	2	4	5	1	6	4	1		
보건	전통의학 지원	3	4	5	3			1	2			
보건	지역의료서비스	3	3	4	4	1	1	20	5	1		
산업 에너지	공항 인프라 구축 지원	4	3	3	3			3	3	1		
산업 에너지	국토종합개발 지원	3	3	5	3			5	4	1		
산업 에너지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4	3	1	4			3	3	1		
산업 에너지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공급 확대	4	4	4	4			2	2			
산업 에너지	신도시 및 단지 개발	4	3	4	5			1	2			
산업 에너지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충	5	5	1	4			4	3	1		
산업 에너지	에너지 자원 확보 기술지원	3	4	4	3			5	4	1		
산업 에너지	종합수자원 개발	4	3	4	3	1	1	5	4	1		5
산업 에너지	철도 인프라 구축 지원	4	3	2	3			1	2			
산업 에너지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	4	4	4	3			2	2			
정보 통신	ICT 분야 인력양성	4	4	4	5			4	3	1		
정보 통신	분야별 정보화 촉진	4	4	3	4			16	5	1		
정보 통신	전자정부 구축	5	5	4	4			16	5	1	-1	
정보 통신	통신기반 정비	4	4	2	2	3	1	1	2			

분야	세부 분야	한국적 경험	비교 우위	차별성	사업 성과	MDG 5점 만점	MDG 1점 만점	수요 요청 건수	수요 점수 5점	수요 점수 1점	적용성	미래 중점 육성
지역 개발	농산물 보관 가공 유통 설비 지원	4	3	4	3			4	3	1		
지역 개발	농·어업 관련 조직 강화	4	4	5	2			1	2			
지역 개발	농업소득지원정책	4	3	1	3	2	1	2	2			
지역 개발	농업연구 및 품종 개발	4	3	2	4			2	2		-1	
지역 개발	농업용수 확보	4	4	3	4			9	4	1		5
지역 개발	쌀 증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	4	4	4	2	2	1	4	3	1	-1	
지역 개발	종합지역개발사업	5	4	3	4			11	5	1	-1	
행정 제도	경제개발전략 수립 지원	5	3	5	3			9	4	1		
행정 제도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3	4	5	2			0	1			
행정 제도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	3	4	2	3			5	4	1		
행정 제도	수출진흥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	4	4	4	3			1	2			
행정 제도	시장경제 정착 지원 및 금융부문 강화 개혁	3	2	4	4			2	2			
행정 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5	4	1	4			6	4	1		
환경	대기오염 개선	2	3	4	2			2	2	1		5
환경	산림보전역량강화	4	4	4	3	3	1	16	5	1		5
환경	상·하수 관리개선	4	4	5	3			3	3	1		5
환경	여성권익강화	4	2	4	2			0	1			
환경	친환경 에너지개발	3	3	5	2			8	4	1		5
환경	폐기물 관리개선	4	4	4	3			4	3	1		5
환경	해양보호 역량강화	3	3	4	1	3	1	1	2			
정보 통신	ICT 분야 인력양성	4	4	4	5			4	3	1		
정보 통신	분야별 정보화 촉진	4	4	3	4			16	5	1		
정보 통신	전자정부 구축	5	5	4	4			16	5	1		
정보 통신	통신기반 정비	4	4	2	2	3	1	1	2			

제 5장 한국형 모델의 선정

이 장에서는 제 4장의 점수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을 받은 프로그램 중 한국형으로 우선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부 및 섹터부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선정하겠다.

1. 선정기준(CRITERIA)을 다양화한 프로그램 선정

종합점수는 [표 30]에서 어떤 기준, 즉 컬럼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또한 MDG 및 수요는 5점 척도로 할지, 1점 척도로 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제시하고, 상대적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10개 정도를 선정하였다.³⁶³⁾

1) 종합적 고려

[표 31]은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차별화, 협력단 성과, MDG 1점 처리, 수요 5점 처리, 경험의 적용성을 합산, 총점을 낸 후 높은 점수 순으로 10개를 정렬한 것이다. 직업훈련(직훈), 전자정부, 산림보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요를 1점으로 처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363) 예를 들어 만약 같은 점수가 10위-13위까지 있다면 9위까지만 고려한다.

[표 31]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종합적 측면

분야	세부 프로그램	종합 점수	순위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23	1
정보통신	전자정부 구축	22	2
환경	산림보전 역량강화	21	3
보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20	4
정보통신	분야별 정보화 촉진	20	4
지역개발	종합지역개발사업	20	4
교육	기초교육 확대	20	4
행정제도	경제개발전략 수립지원	20	4
정보통신	ICT 분야 인력양성	20	4

2) 공급적 측면 위주

공급적 측면의 컬럼인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차별화, 협력단 성과를 고려하여 상위 9개가 선정되었다. 전자정부, 직업훈련, ICT 분야 인력양성이 높게 나왔다. [표 32]에서 1-4위는 위의 종합적 고려와 겹치는 프로그램이고, **세로선**으로 표시된 5-9번째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다.

[표 32]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공급적 측면

분야	세부 프로그램	공급위주 종합점수	순위
정보통신	전자정부 구축	18	1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17	2
정보통신	ICT 분야 인력양성	17	2
행정제도	경제개발전략 수립지원	16	4
환경	상하수 관리개선	16	4
산업 에너지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	16	4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16	4
산업 에너지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공급 확대	16	4
산업 에너지	신도시 및 단지 개발	16	4

3) 차별성 제외

다른 선진국에서 많이 지원되는 분야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제외하고 점수를 내볼 수 있다. 한국적 모델의 유용성을 묻는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74.4%) 비교우위를 살린다(70.5%) 보다는 차별성 부문이

40.3%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차별성 컬럼을 제거하고 계산하면 [표 33]과 같다.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사업은 “1) 종합적 측면”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고 **음영**으로 표시된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충”과 “기생충 관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은 차별성 제외시 새로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표 33]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차별성 기준 제외시

분야	세부 프로그램	차별성 제외 종합점수	순위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14	1
ICT	전자정부 구축	14	1
산업 에너지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충	14	1
ICT	ICT 분야 인력양성	13	4
보건	기생충 관리	13	4
지역개발	종합지역개발사업	13	4
행정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13	4

4) MDG 중심

MDG 지표(Indicator) 수와 많이 관련된 사업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기존의 1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바꾸어 계산했을 때의 결과가 [표 34]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선정되는 프로그램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모자보건’이며 **진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34]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MDG 중심

분야	세부 프로그램	MDG 가산점 종합점수	순위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24	1
보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23	2
환경	산림보전 역량 강화	23	2
보건	모자보건	23	2
ICT	전자정부 구축	22	5
교육	기초교육 확대	22	5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21	7

5) 한국의 현재 중점 육성사업 중심

녹색사업과 물 관련 사업일 경우 5점 척도로 점수를 주어서 현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는 육성사업에 가산점을 주었다. [표 35]에서 **빛금무늬**로 표시된 4개의 사업들은 미래사업 가산점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표 35] KOICA 세부 분야별 프로그램 종합적 평가 점수 및 순위: 한국의 현재 중점 육성사업 중심

분야	세부 프로그램	미래산업 종합점수	순위
환경	산림보전 역량 강화	23	1
환경	상·하수 관리개선	21	2
산업 에너지	종합수자원 개발	21	2
환경	친환경에너지 개발	21	2
농업	농업용수 확보	20	5
환경	폐기물 관리개선	20	5

이런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언급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하면 23개의 프로그램이 [표 36]과 같이 선정된다.

[표 36] 상위 점수를 획득한 23개 프로그램

분야	세부 프로그램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교육	기초교육 확대
보건	지역의료서비스향상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보건	기생충 관리
보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	모자보건
산업 에너지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 에너지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공급 확대
산업 에너지	신도시 및 단지 개발
산업 에너지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충
산업 에너지	종합수자원 개발
정보통신	전자정부 구축
정보통신	분야별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ICT 분야 인력양성
지역개발	농업용수 확보
지역개발	종합지역개발사업

행정제도	경제개발전략 수립지원
행정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환경	산림보전 역량 강화
환경	상·하수 관리개선
환경	폐기물 관리개선
환경	친환경에너지 개발

그리고 각 시나리오 별로 상위 3-4개만 추리면 다음과 같이 7개 분야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종합될 수 있다 [박스 9].

[박스 9] 경쟁력 있는 상위 10개 프로그램

- 교육: 직업훈련
- 정보통신: 전자정부, ICT 인력양성
- 행정제도: 경제개발전략 수립 지원
- 환경: 산림보전, 상·하수 관리개선
- 산업 에너지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충, 종합수자원 개발
- 지역개발: 농촌종합개발
- 보건: 모자보건

위의 프로그램들은 KOICA가 섹터 수와 섹터 내의 프로그램 수를 줄여 나갈 때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선정된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과제

협력단의 지역 정책부와 섹터 부서 팀원 및 팀장들과의 개별 인터뷰 및 팀 포커스 그룹 미팅(Focus group meeting) 등을 통해서 위에서 선정된 사업들 중 우선적으로 한국형 모델화를 하여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 즉,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적 요소, 제도, 관련 기관의 여부, 협력 파트너의 역량, 기존의 사업성과,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각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한국형 특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제약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 직업훈련의 경우, 한국의 산업화에 맞는 성공적인 기능인력 양산이라는 성공사례

와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관련 제도와 기관을 가지고 있다. 협력단 성과 역시 제도 자문, 인프라 구축부터 인적역량개발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수원국의 수요요청도 최상위인 사업 중 하나이고 고용과 빈곤감소라는 MDG에 부합한다. 또한 타 공여국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지원해 왔고 절대 원조액도 다른 DAC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규모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역사가 깊은 독일 등 타 선진국과 우리의 사업을 차별화시키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최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IT 산업의 비교우위가 활용가능하며 ‘기술과 혁신’이라는 국가의 이미지와도 맞는다.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이 풍부하고, 수원국의 수요요청이 최상위인 사업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잘 적용되려면 이미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정보화가 진행된 곳에 실시해야 하므로, 최빈국이나 저소득국 중심의 지원이 어렵고 국가개발전략시의 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또한 전자정부는 정부혁신, 직원교육, 통신망 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다뤄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넓은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라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므로 전자조달, 전자관세 등 지원범위를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원조규모가 작은 경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보다는 정보접근센터, ICT 교육센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ICT 인력양성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젊은 층의 봉사단 모집과 활용도 용이하다. 그러나 IT 인력양성 분야는 전자정부보다는 한국의 제도구축 사례가 분명치 않고, JICA와 세계은행 등 다른 공여국들과 차별화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협력단이 원조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타 공여국의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별로 없는 소규모 교육센터 건립 보다는 더 특화된 ICT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건 분야의 모자보건사업은 MDG 달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협력단은 보건소 건립사업을 상당수 실행해 왔다. 그러나 보건소 건물의 건축과 시설지원 외에 국가 모자보건체계와 통합된 제도적인 구축에 대한 지원 경험이 적고, 최근 이 분야 수요요청도 많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어촌 위주 행정구역 단위의 매뉴얼화된 보건소 업무를 실시한다는 점과 파견되는 협력의사나 간호사들이 한국인이라는 것 외에 어떤 한국적 요소를 전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동 분야는 추후 가족계획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모자보건 사업형태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타 공여국이 HIV/AIDS에 연

관된 하향(Top-down) 형식 사업을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는 상향(Bottom-up) 방식의 가족계획요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³⁶⁴⁾ 동시에 비교우위를 살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아동질병 통합관리(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 IMCI) 프로그램에 접목한 컴퓨터 기반 아동질병 진단 프로그램(Computer-based Learning Program for the Diagnosis of Childhood Diseases: ICATT)을 기획하여 이러한 사업을 수원국에 적극 홍보 한다면,³⁶⁵⁾ 미래에 전망 있는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뇌염, 홍역, 간염 등의 성공적인 전염병 관리 및 퇴치 경험과 인터넷 기반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이 될 수 있는 파트너인 질병관리본부 등이 원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전염병 관리는 미국 등 타 선진국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이며, 원조규모에서 협력단은 이 분야 DAC 평균 지원의 60분의 1 밖에 지원하지 않는 등 특화를 위한 규모 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제도는 한국적 경제개발 경험공유의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수원국의 복잡한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한국적인 경험을 자문해 줄 수 전문인력이 많지 않을 뿐더러, KSP와 사업내용과 인력 풀(Pool)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가 주요 성과물이 되기보다는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하고, 수원국의 국가 및 섹터 개발전략의 큰 틀과 연계해서 지원해야 한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도국의 수요는 높으나 선진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틈새시장이며, 한국의 사례가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한국의 주력산업이었던 적이 없었고, 젊은 세대에서 농업경제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과제가 있다. 특히 참여적 지역 개발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운동(Community Mobilization)은 전문가의 역량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체험하고 관여한 전문가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젊은 층이 이러한 지식에 대한 전수를 받아 새로운 환경에 놓인 개도국에 적용 가능하게 향상시켜 가고,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핵심 요소를 사업화가 가능하게끔 매뉴얼화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실시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산업 에너지에서 안정적 전산망 구축사업은 자동 송배전이라는 한국 전력의 최신 기술을 전수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국내·외적 관심에도 부응한다. 2010년 수원국 수요

364) 보건의료팀 검토의견

365) 보건의료팀 검토의견

가 4건으로 전체 사업요청을 보면 보통이나 다른 산업 에너지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최빈국과 인도네시아 등 저소득국에 지원했던 경험을 살려 소득이 낮은 국가, 즉 수요(Need) 위주의 수원국 선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마스터플랜부터 송전망 타당성 조사 자동화 시범사업 그리고 EDCF까지 연결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³⁶⁶⁾ 그러나 이 부분은 타 공여국에서도 높은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어 원조 보완성 면에서 떨어지고, DAC 평균에 비교하거나 미국 등 주요 공여국에 비해 원조규모와 비중이 적은 편이다.³⁶⁷⁾ 또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도국에서 활용도가 낮을 수 있고, 이전된 기술이 수원국에서 자체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 협력단 사업 사례와 성과가 더 축적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타국에서 보기에 상업성이 강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³⁶⁸⁾

환경 부분은 기후변화 이슈와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으로 인해, 그리고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강조로 최근에 사업요청이 늘고 있으나, 산림보전 사업의 성과가 많지 않고, 원조규모나 비중이 매우 적었다.

상·하수 관리개선이나 종합 수자원 개발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는 수자원 및 녹색성장 관련 사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자원 인프라가 발달하고 수자원 관리 기술과 오·폐수 처리 기술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토목, 전기,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과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융합기술(Information Technology-Biotechnology-Nanotechnology: IT-BT-N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필요한 물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이 부족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자본, 기술력 역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우리에게는 노르웨이의 Oil for Development 프로그램과 같이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국가 주요 산업과 연결되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으며, 이 프

366) (1) 송배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2) 전력망 진단사업, 배전손실 감소, 송전망건설 타당성 조사, 전력시스템 설계 표준화 타당성 조사사업, (3) 자동화 전력계통운영 및 보호 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자동화 시범사업까지는 무상이 커버하고 본 사업은 EDCF 등 유상이 커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무상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고 원조의 규모확대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송배전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연수사업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67) DAC 평균 산업 에너지 분야 중 전력송전 배전, 즉 CRS 코드 23040에 지원비율: 11.07% vs. KOICA 지원비율: 7.88%/미국 연평균지원액: \$545.19 million, DAC 연평균 지원액: \$41.50 million, KOICA 연평균 지원액: \$1.11 million

368) EDCF 경험개발실 이동훈 차장 인터뷰 (본 문장 침표 뒷부분의 상업성 논란가능성만 인용.)

로그래미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국가³⁶⁹⁾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술전수 모델이 아직 분명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형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로 각각 한계점이 있으므로, 한국형 모델의 구축은 협력단의 현재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노력과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3. 최종 선정

최종적으로는 다음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박스 10]. 단 이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한국형 모델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KOICA가 중점을 뒀야 하는 전반적인 세부 섹터는 [박스 9]로부터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직업훈련은 종합 점수에서 1위를 하여,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균형 있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제도 및 직업훈련 공과 등에서 타 선진국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모델화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 주 공여국인 독일과의 차별화된 요소에 대한 파악과 우리의 원조방식을 타 공여국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직업훈련을 어떻게 선진적인 한국형 모델로 사업화시키느냐는 다음 7 장 1섹션에서 논의하겠다.

두 번째 방안은 우리 정부가 최신 경험과 기술, 그리고 산업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한 전자정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전산화’라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국이나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이나 빈곤감소전략의 순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주로 중소득국 이상의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화 방안으로는 다음 장의 두 번째 섹션 “모델 발굴시 프로세스(Process)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산업 에너지 부문의 송·배전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나라가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술력에서도 앞서고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국내외적 관심에도 부응한다. 수원국 수요도 다른 산업 에너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도국이

369) 노르웨이의 경우, 이 특정 국가 그룹은 개도국 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하겠다.

보편적으로 전력문제를 겪고 있다는 면에서 다양한 소득수준의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다만 양자 무상사업 194개 중 21위를 차지하는 등 타 공여국에서 많이 지원되는 분야이며, 우리보다 DAC 원조액수가 평균 40배, 주 공여국인 미국은 500배³⁷⁰⁾가 넘는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대상국 개발 및 빈곤감소전략과의 일치성이나 고급기술의 활용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 가장 ‘한국적’ 색채가 강한 두 가지 프로그램인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전략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수요가 높으나 선진국에서 적게 지원하는 농업 부문의 틈새시장을 파고 들 수 있고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사례를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과 농업이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아니어서 최신 기술에 대한 축적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수행방식은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7장 2섹션 모델 발굴시 프로세스(Process) 가이드라인과 제 4장의 [박스 2-6]을 참고할 수 있다.

경제개발전략자문 역시 우리의 경제, 사회, 정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 컨설팅이라는 면에서 독특성과 강점(Selling point)이 있다. 단지 이 프로그램들을 막연히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상적 구호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타 개도국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내실화시키고 KSP와 분절화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르웨이처럼 다양한 부처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며, KSP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7 장 3섹션에서 논하겠다.

[박스 10] 최종 선정 상위 5개 한국형 모델 후보

- 교육: 직업훈련
- 정보통신: 전자정부
- 행정제도: 경제개발전략지원
- 지역개발: 농촌종합개발
- 산업·에너지: 안정적 전력망 구축

이 최종 5개 후보 중 시범사업으로 종합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직업훈련과 전자정부 사업을 채택해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370) 이는 협력단 내 타 공여국 평균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타 공여국은 유상과 무상을 비롯한 모든 자국 ODA를 합한 수치이다.

제 6장 한국형 모델의 수행

이 장에서는 한국형 모델로 선정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 기존 사업 수행방식과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한국형 모델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안을 분석하겠다. 이를 먼저 직업훈련의 예를 들어 분석하고 나서, 다른 사업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형 모델을 발굴하는 과정(Process)을 살펴보겠다. 또한 국별 프로그램의 실시 과정에서 한국형 모델과 본 연구의 분석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1. 한국형 모델 사업화 방안: 직업훈련을 예시로

여기서는 제 5장에서 선정된 가장 유망한 한국형 사업 중 하나인 직업훈련 분야를 한국형 모델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한국형 모델의 정의에 맞추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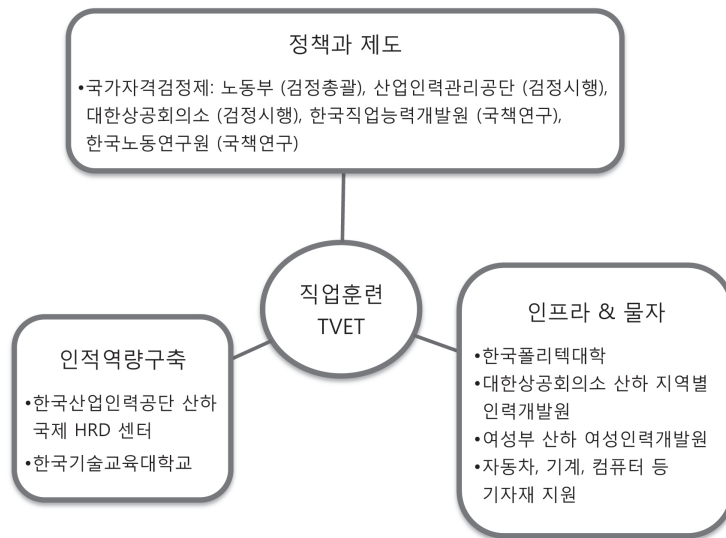
1) 한국적 경험의 요소

수원국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적인 요소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에서 이 경험의 정책적 요소는 선진국과 달리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기술자격검정제도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자격검정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은 노동부³⁷¹⁾와 기술 분야 자격검정 집행기관인 산업관리인력공단, 사무능력 분야 검정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정책 자격제도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있다. 특히,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노동부와 함께 개도국 사업을 진행해 온 경력이 있으며,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의 자격검정구축 사업과 인도네시아, 수단, 베트남, 중국 등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및 연수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 직업훈련 및 종합기술전문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존

371) 노동부 외에도 교육과학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부, 지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자격검정 운영에 관여함.

재하며, 직업훈련 분야의 정부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모델 학교를 갖추고 있다. 또한 외국인 초청 전담 연수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국제 HRD 센터에서는 직업훈련원 교사 및 관리자 교육과 커리큘럼 개발, 자격검정시험제도 및 노동시장 정보분석 등과 관련한 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9]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적인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경제·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비슷한 여건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원국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60년대 직업훈련제도 도입배경은 기술계 인력수요가 급증하였고, 무기능 인적자원이 많았으며, 기존 실업교육과 견습공 제도가 기술계 인력공급에 미흡했던 때문이었다.³⁷²⁾ 예를 들어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소요되는 24만 2천 명의 기술인력 중 일반 교육기관으로부터의 공급만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 12만 명의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³⁷³⁾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정책에 의해서 산업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새로운 기능인력 양성이 시급했으나, 사농공상의 유교적 사상 등의 영향으로 기능직 생산자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능인 우대풍토를 마련하고자 기능검정실시와 자격증자

372) (서상선, 2002)

373) (이경구, 2004)

의 채용우대를 하게 되었다.³⁷⁴⁾ 그리고 과도기적 형태로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자격시험을 운영하다 보니 통합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에 맞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이 통합적 체계를 수립하는 배경이 되었다.³⁷⁵⁾ 이와 함께 1982년 산업인력공단의 설립배경은 국가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시로 변하는 산업과 훈련수요에 융통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훈련방법을 개발하며 인력배분기능을 담당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해서였다. 이와 같이 개도국 직업훈련제도나 집행기관 설립 지원시에는 우리가 검정제를 도입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던 당시와 비슷한 필요와 역량,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비교우위

우리나라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발전으로의 응용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교수법 및 훈련원, 운영관리법 등에 있어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⁶⁾ 「2009-2010년 국제경쟁력 보고서」도 한국이 고등교육과 훈련부문에서 133개국 중 16위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산업수요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 교과목이 편성·운영되고, 직업학교에서 기능인·기술인으로 직업관과 긍지를 가지고 적성에 따라 직종을 선택하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아직 훈련 교과목 편성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성에 대한 직업선택도 불확실한 편이다. 우리나라 공고생의 50% 이상이나 직업훈련생의 30% 이상이 과정 이수 후 자기 전공에서 이탈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적성과 상관없이 직종을 선택하거나 인문계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을 가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폄하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기에 기능인이 직업관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적인 면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⁷⁾

산업 면에서는 최근에 와서 조금씩 수요가 생기는 ICT 분야의 직업훈련이나 이러닝(e-Learning) 등 IT를 활용한 교육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전자통신 분야의 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정비 등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및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

374) (서상선, 2002)

375) (Lim, Kyungbim)

376) (KOICA, 2008)

377) (서상선, 2002)

적 비교우위 분야이다. 특히 공과 중 자동차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모자라는 분야이다.³⁷⁸⁾ 이와 함께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 이주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봉사단 활용과 관련해서는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필요가 많지 않은 미용, 요리, 전기, 자동차 등의 직업교육 및 한국어 교육, 과학 교육, 수학 교육은 봉사단 파견이 쉬운 분야이다.³⁷⁹⁾

3) 차별성

협력단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에 해당하는 CRS 코드 11330이 교육 분야의 38.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DAC 공여국의 경우는 직업훈련이 전체 교육 분야 중 4위로 연평균 자국 교육 분야 ODA의 4.94%를 지원하고 있다. 액수로는 협력단과 타 공여국 모두 연평균 약 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분야에서 절대 액수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국가는 독일이고, 상대적 비중을 많이 두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다. 특히 이 사업은 직업훈련 분야의 오랜 역사,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전문가와 연구기관, 산업기능장(Meister)제도와 산악협동훈련제도 등에 대한 비교우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³⁸⁰⁾을 활용하는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업평가에 의하면 우리는 독일과 비교하여 국별 경제발전전략과 노동시장에 기반한 직훈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과과정 특화나 학비, 훈련기간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이다.³⁸¹⁾ 독일 사업을 살펴보면 (1) 노동시장에 기반한 TVET 제도를 위한 전략제시, 자격검정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및 민영화 지원 (2) 기술 집약적 산업 및 지역 선정, 금융지원에 대한 자문과 고급기술 훈련 (3) 여성 등 특정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소규모 자영업 개발과 연계한 비공식 노동시장(Informal sector)에서의 직업훈련 (4) ICT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등의 교습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³⁸²⁾ 따라서 협력단 사업도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직훈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도심과 지방, 현대적 기술 및 전통

378) 봉사사업부 2009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379) 봉사사업부 검토의견(2009. 12)

380) (GTZ), (이경구, 2004)

381)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평가, 2007)

382) (GTZ)

적 기술, 공식 및 비공식 부분의 사업, 청소년, 여성, 농민 등의 사업대상 등 사업타겟을 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제도 면에서의 차별화는, 아직까지 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국가가 자격훈련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적인 제도로 가능할 것이다.³⁸³⁾ 선진국의 경우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민간에서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개도국에는 정부 및 공급자 중심의 검정이라는 과도기적인 형태가 필요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IT 쪽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자격검정시험용 전산 시스템 구축, 문제은행의 서버 및 DB 관리,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출제, 즉 인터넷 기반 시험(Internet-Based Test)이나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 등에 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전자 통신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청소년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삼성의 “리얼 드림 프로그램(Real Dreams Program)”,³⁸⁴⁾ IT 센터를 베트남에 건립한 SK,³⁸⁵⁾ 인도 청소년들에게 냉장고와 CTV의 수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LG,³⁸⁶⁾ 중국 베이징의 자동차 정비공 양성 기술학교에 차와 엔진을 지원하는 현대자동차³⁸⁷⁾ 등을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민관 협력 파트너로 활용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전통적인 공여국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공여국과 다르게 한국의 원조는 미국, 독일, 일본, 벨기에의 원조를 받아 한국식 직업훈련 제도를 발전시킨 후 이를 또 다른 후발 개도국을 돕는 데

38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국가 기술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김덕기, 2004)”에 따르면 자격의 신설·통합·폐지, 검정시험 등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이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산업 현장의 요구 반영이 어려워 자격제도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차 민간에 검정제도를 이양하는 추세라고 함.

384) 아프리카 4개국(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원함. <http://www.youngsamsung.com>. 삼성 리얼 드림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와 미션은 청년 기업이 정신을 조성하고, 향후 취업시장에 나서게 될 수천 명의 이집트 청소년들을 위해 고용과 소득창출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500명의 학생 및 학교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370개에 달하는 인턴십과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ameinfo.com/187484.html>

385) SK 텔레콤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SK Telecom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ttp://www.sktelecom.com/>

386) LGEIL 은 NGO 단체인 Jan Shikshan Sansthan (JSS)과 협력하여 재단 및 뜨개질의 형태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in.lge.com/experience%20LG/exp-responsibleCitizen.aspx>

387) “Moving the World Together”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활동 백서(Hyundai Motor Company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hite Paper)(2008)

활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직훈제 도입 초기에는 외국 전문가 및 원조기관들로부터 노동청이 직업훈련 업무를 주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독일 정부 지원 및 IBRD의 차관, 그리고 UNDP 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직원훈련원을 운영·설치할 수 있었다.³⁸⁸⁾ 따라서 한국은 ‘타 원조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경험’을 다시 원조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 흡수·발전시킨 직훈제도가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인적 개발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례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타 개발원조 단체인 수출입은행과 연계하여 원조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입은행에서 10개국에 직업훈련 지원을 하였는데, 이중 80%인 8개국이 KOICA와 중복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평균 28 백만 달러로 역시 협력단과 큰 차이가 없다.³⁸⁹⁾ 따라서 두 사업이 최소한 동일 관심지역에서는 통합된 CAS와 프로젝트 관리 사이클 및 사업 수행절차의 통일, 통합평가³⁹⁰⁾ 등을 통해 유·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업성과를 통한 개선방안

직훈 분야는 한국의 직훈 모델을 바탕으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큰 기술적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개발의 세 부문에 대한 지원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자격검정제도 구축지원사업이 정책자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베트남의 산업기술학교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실습이 70%, 이론이 30%로 실습비율이 높은 이상적 학과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균 취업률이 85%로³⁹¹⁾ 졸업생이 호치민과 하노이 및 하이퐁의 공업단지와 응에안성 소재 산업체에 취업을 하였고, 일부는 한국 산업 연수생, 대만, 중국, 호주 등지로 송출되기도 하였다. 이집트는 1993-1998년에 걸친 쇼브라 직원훈련원 및 자동차 정비원 지원에 이어 2004-2006년 알

388) (서상선, 2002)

389) 1991년부터 2008년까지 EDCF 자금으로 인도네시아, 케냐,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탄자니아, 스리랑카, 니카라과, 예멘, 베트남, 카메룬의 직업훈련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예멘과 카메룬을 제외한 8개 국가가 KOICA의 직업훈련 사업 국가와 중복됨.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2008년 말 현재) 참고. http://www.koreaexim.go.kr/kr2/02_edcf/05_data/02.jsp

39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평가소위원회는 KOICA와 수출입은행 타 정부부처의 ODA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통합평가활동을 심사감독할 예정이다.

391) 수료인원 중 기계, 산업설비, 자동차정비, 전기과는 약 95% 이상 취업되었으나, 전자와 정보처리과는 40% 정도 취업됨.

렉산드리아에 자동차 정비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지원을 하였고 재정자립도 가능한 모델이 되었다[박스 11 참고].

[박스 11] 교육부문 직업훈련원의 사업성과

제도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1. **카자흐스탄 자격검정확인시스템 구축사업(2006-2008/100만 달러)**: 카자흐스탄의 자격검정센터는 우리 전문가의 자문, 초청연수 경험, 지원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자격검정을 시행 중에 있음. 국가자격검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양질의 기술인력을 산업현장에 배출하는 데 기여함. 2007년 자격검정을 실시, 850명의 공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함. 특히, 현지 건설시장의 활황에 부응하여 검증된 건설 분야 인력을 공급함.
2. **캄보디아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사업(2007-2009/120만 달러)**: 국가검정기관 설립, 7개 분야에 전문가를 파견해 검정제도 마스터플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 실무자를 국내 초청해 연수 실시. 전산 및 사무 장비를 제공하여 기술자격검정제도의 국가적 표준 구축.

인프라 및 인적역량 구축

3. **스리랑카 개방대학교 자동차실습실 지원사업(1996-1998/100만 달러)**: 지원 기자재와 시설의 활용도와 만족도 매우 높음. 동 사업완료 후, 2차례(1999년, 2001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는데, 자동차 산업 분야의 신기술 전수가 필요함.
4. **한·필 다바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03-2005/500만 달러)**: 취업률은 59%이며, 미취업자 중 일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음. 대통령장학금 수혜기관이고 입학경쟁률이 10대 1로 높음. 정부 지원금 확대,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한 수익이 훈련에 재투자되고 있음. 다바오지역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됨.
5. **이집트 쇼브라 자동차정비센터 지원사업(1996-1999/150만 달러)**: 학생 외에 관련 기업체의 요청으로 2-3개월의 특별 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라크, 리비아, 탄자니아 등의 주변국 엔지니어를 위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음.
6.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2004-2006/180만 달러)**: 이집트는 1996-1998년간 지원한 바 있는 쇼브라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의 성과가 우수함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동 사업을 통해 건설된 직훈련원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자동차 정비훈련 핵심 센터로서 잘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이 자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Financial sustainability) 높임.

7. **이집트 기자지역 엠바바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2006-2008/200만 달러)**: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수익모델사업을 구축.
8. **튀니지 국립직업훈련센터 자동화실(AMIRA) 지원사업(1994-1995/40만 달러)**: 1995년 지원 이후 2003년까지 동 센터 내에서 7년 동안 기 지원된 기자재를 100% 활용하여 연간 100여 명(현재까지 500여 명)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함. 다만 2003년부터 부즈세드리야 수치제어기계 직업훈련원이 설립되면서 응용력이 떨어진 동 기자재를 이전하여 사용 중. 우리 기술이전으로 동 직업훈련센터 내 강사들의 기술력이 향상. 교육자 양성에 현재 동 강사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출신의 강사들 또한 우리 기자재를 사용,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 그러나 기 지원된 IT 장비가 10여 년이 넘어, 현재 구축하려는 통합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음.
9. **과테말라 기술교육 훈련원 건립사업(2002-2004/120만 달러)**: 현재 자동차 정비 공과에만 매년 160여 명을 교육하는 등 훈련원 전체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훈련생을 육성하고 있음. 과테말라 동부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INTECAP은 동 사업을 직업훈련원 설립 모범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음.
10.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2007-2008/230만 달러)**: 실습 70%, 이론 30%의 비율로 학과목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임, 수료인원 중 기계, 산업설비, 자동차정비, 전기과는 약 95% 이상 취업되었으나, 전자 및 정보처리과는 40% 정도 취업됨. 평균 취업률 85%로 취업업체 분포는 호치민과 하노이 및 하이퐁의 공업단지와 응에안 성 소재 산업체에 취업을 하였으며, 일부는 한국 산업 연수생, 대만, 중국, 호주 등으로 송출되기도 함. 성 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 입학생에 여성을 포함하고 건축시 여성용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함.
11. **라오스 직원훈련원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2002-2005/200만 달러, 2007-2008/80만 달러)**: 연간 500여 명의 졸업생 배출, 취업률이 60-70%로 타 직업훈련학교(50%) 보다 높음, 졸업증 발행이 가능한 학교로 승격시킬 예정.
12.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03-2007/800만 달러)**: 이라크에서 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기관. UN에서 직업훈련기관 및 전후복구와 관련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후복구 지원기관으로 지정함.
13. **베트남 국별 연수사업(2005.8.13-9.3/4만 달러)**: 하노이 기술직업전문대학의 전기 기계부분 교사를 재초청 한 경우. 연수과정 중 습득한 특수기술(Computer numerical control)을 높이 평가하여 훈련원에 동 기술과목을 신규로 개설하였고 동 과목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음.
14. **기타 연수사업(2007, 2008년)**
2007: 네팔 직업훈련교사 정보통신기술 향상, 아프리카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 이

라크 아르빌 자이툰 기술학교(연수 만족도 낮은 편이며, 전문 분야와의 연관성, 강의의 난이도 등에서도 매우 낮은 평가 받음), 팔레스타인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 APEC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언어소통문제, 일반직원이 강의를 진행하여 전문성 감소시킴, 일반 다 국가 과정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 검토 필요)

2008: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워크숍, 스리랑카 직업훈련 교사 기술향상, 팔레스타인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과정기획상의 문제점 개선필요)

앞으로 직훈사업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개발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의 모델은 제조업 발전이 열악한 현재의 개도국 실정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직훈사업 모델을 정형화하여 사업규모의 대소 및 공과 레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공과를 부여하며 지원장비만 차등화하는 경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시 현지 산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현지 주요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과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분야의 상황 분석(Situation analysis)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및 필요인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직훈원이 특정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며, 직업훈련제도 부문 중에서도 어느 세부 섹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비록 노동시장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제기구, 수원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다른 공여국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 해당 지역의 자료(Local data)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현재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 4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업 계획서에 사업의 요청배경과 지원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 소련으로부터 '91년 독립 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음.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국가발전 핵심 분야로 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산업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교육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990개 가량의 학교가 기술학교(Vocational College, 직업교육)이나 이들 기술학교에서의 교육은 실습이 거의 배제된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있음. 또한, 두 곳에 불과한 직업훈련원에서도 실

습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뿐 아니라 교육훈련 수준도 낮고 개설공과도 제한되어 있으며, 훈련기
 자재 및 우수한 훈련교사 부족으로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제적인 직업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통해 선진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우즈베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우수 기능인력을 적시에 양성할 수 있을뿐 아니라, 미취업
 자, 실업자 및 산업현장에서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 직업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국가 산업발전과 직업훈련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일반적인 KOICA의 사업 계획서 형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계획경
 제에서 시장경제로 진입하면서 갖는 직업훈련 분야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이 하고 있는 원조내용, 그리고 이에 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으로 한국이 직업훈련
 분야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교우위 세부 분야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즈베
 키스탄 등 체제전환국은 구 소련 하에 계획 경제에서 특정 국가가 특정 산업을 담당하는 시
 스템³⁹²⁾이었기 때문에 직업기술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VET)이 현재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VET 공급과 노동시장의 시장수요
 와 맞지 않는다. 즉, 새로운 직업들, 소규모 기업, 그리고 비공식 노동시장이 VET 시스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직무 분석표를 현대화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
 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과 중앙화된 VET 시스템의 분권화
 가 핵심 이슈라는 문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기관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우즈베키스탄에서 EU는 2004-2006년에 “교육과 훈
 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Uzbekistan)”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으며, ADB는 2002-2007년 42개의 전문대학에
 교사훈련을 제공하였다. 또한 JBIC은 2002-2004년 50개의 농공대학에 기자재를 지원했으
 며, GTZ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는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분야에서 파일럿(Pilot) 직업기술대학의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다.³⁹³⁾

392) IDSS (Austr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ulting Company)의 직원 Stephen Duggan 인터뷰.

393) (ETF, Uzbekistan ETF Country Plan 2009, 2009)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와 보완점,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치를 부가(Value add)할 수 있는 공과(자동차, 용접, 기계, IT, 전기, 전자, 건설 등)와 공과 레벨(IT의 경우, MS office만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CAD 등 고급 프로그램을 가르칠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커리큘럼이 될 것임), 훈련대상(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지역(대도시, 위성도시, 지방, 특정 산업 도시 등), 산악훈련 파트너 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협력단 사업 예산규모가 적고 단기적인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다년간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한 인력 및 시간 투자가 적다. 다른 나라의 경우 1,000-1,300만 달러 사업의 경우 30-50만 달러를 사전 평가(Assessment)에 1년 정도 투자하는데, 우리는 4,000만 달러 사업에 20만 달러가 사전 조사 및 사업평가 예비비로 배정이 되어 큰 차이를 보인다.³⁹⁴⁾ 수요조사 내용 역시 기본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건축 및 환경 전문가를 단기 파견하고 있어, 수원국 환경에 맞는 직훈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 발굴 및 형성뿐 아니라 직훈사업 시행시에도 기존 사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업 평가서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 평가서가 제시한 (1) 일반역량과 숙련기술의 균형 (2) 근대화를 위한 남성인력 중심이 아닌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의 통합 (3) 건물과 기자재가 80% 이상이 되는 재정 분배에서 역량 개발에 최소 30%를 투자하는 방안 (4) 직훈원 단일 모델에서 직훈원 외 과학기술훈련 모델(Polytechnic model) 혹은 통합모형 등 다양한 모델 제시 (5) 팀장(Project Manager, PM) 개인의 역량 활용 보다는 로그 프레임(Log-frame) 등 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도구(Project Design & Management Tool) 활용 (6) 기존 전문가를 프로젝트별로 계약하기 보다 전문가 풀(Pool)을 육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³⁹⁵⁾ 한편,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7)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장비가 현지에 있다면 훈련교사나 훈련생들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품을 구입,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알제리 보리유(Beaulieu) 직업훈련원 지원사업(2008.12) 역시 한국산 제품은 국내가 아니면 구입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시 신고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사업 수행시 현지에서 구하기 용이한 기자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후평가에 직훈원의

394) 교육팀 인터뷰 및 사업 계획서

395) (KOICA, 2008)

훈련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해서 사업효과가 실제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들의 조언을 프로젝트의 발전에 환류하는 노력을 한다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원조가 단지 수사(Rhetoric)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력단이 직업훈련을 특화시키고 발전시켜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국이 가진 국가 중심의 자격검증제도의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며, 산업화에 맞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훈련을 시범적으로 건립해주고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인력양성을 고집한다거나 현지 구입이 어려운 한국산 물품으로 실습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5) 국제적 수요와 수원국의 요청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적인 MDG 달성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박스 12]에 나타나 있다. 직업훈련은 Goal 1의 Target 1B, 즉 여성과 젊은이를 위한 생산적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겠다.

[박스 12] 직업훈련의 MDG 기여

-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Target 1.B: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Target 2.A: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 Indicator 2.3: Literacy rate of 15–24 year-olds, women and men

수원국 수요 면에서도 직업훈련은 2010년도에 19개의 요청을 받음으로써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21개의 요청에 이어 2위를 하였다. 2010년 직훈 수요조사 분석 [표 37]을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의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요청을 받았으며, 최빈국은 없고 저중소득국의 요청이 가장 많으며 저소득국에서도 요청이 많은 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7개의 저소득국, 11개의 저중소득국, 1개의 고중소득국, 1개의 취약국 등에서 요청을 받았고, 협력단의 중점 지원국을 대표하는 해외 사무소의 경우,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페루, 요르단 등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요청을 받았다.

[표 37] 직업훈련에 관한 2010년 수요조사

지역	국가	소득수준	사업형태	사업명
아시아	몽골	LMIC	프로젝트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2010-2012/500만 달러)
아시아	베트남	LIC	프로젝트	박장성 직업훈련대학 설립사업(2010-2011/1천만 달러)
아시아	베트남	LIC	프로젝트	광찌성 직업훈련원 개선사업(2010-2011/3백만 달러)
아시아	베트남	LIC	프로젝트	까마우성 직업훈련대학 설립사업(2010-2013/12백만 달러)
아시아	베트남	LIC	프로젝트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스템 구축사업(2010-2012/3백만 달러)
아시아	스리랑카	LMIC	프로젝트	트린코말리 직업훈련원 신축사업(3년/1,800만 달러)
아프리카	가나	LIC	프로젝트	아크라 직업훈련센터 재건(2010-2011/200만 달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LIC	프로젝트	직업훈련원 건축(코기주)(2010-2012/300만 달러)
아프리카	튀니지	LMIC	프로젝트	부즈세드리아 수치제어기계 직훈련 역량강화사업(2010-2011/210만 달러)
아프리카	튀니지	LMIC	프로젝트	IT 직업훈련원 지원사업(미정/480만 달러*건축포함시 870만 달러)
중남미	파라과이	LMIC	프로젝트	이따뿌아지역 직업훈련원 건립사업(3년/200만 달러)
중남미	페루	LMIC	프로젝트	리마 청소년 직업기술개발 프로그램 (2010-2012/300만 달러)
중남미	에콰도르	LMIC	프로젝트	금속기계분야 기술센터건립 개발조사사업(2010/55만 달러)
중동	요르단	LMIC	프로젝트	직업훈련 역량확충사업(2010-2011/500만 달러)
중동	요르단	LMIC	전문가파견	직업훈련 정책
중동	이라크	LMIC	프로젝트	디와니와 직업훈련 지원사업(2010-2012/700만 달러)
중동	이라크	LMIC	프로젝트	바빌 직업훈련 지원사업(2010-2012/700만 달러)
동구 CIS	카자흐스탄	UMIC	프로젝트	세미팔라친스크 직업훈련지원사업(2010-2011/2백만 달러)
동구 CIS	키르기즈스탄	LIC	프로젝트	직업훈련소 내 컴퓨터학과 설립사업(2010/1백만 달러)

6) 지원 가능 지역

우리나라의 중점 공과나 사업성과 그리고 수요 요청을 보면 직업훈련은 주로 DAC 수원국 중 LMIC, 즉 2007년 1인당 GNI가 \$936-\$3,705인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박스 11]의 사업성과가 기술된 국가들을 보면 LIC인 베트남, 최빈국인 라오스, 그리고 UMIC인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LMIC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부문에서는 특히 중소득국에 고급기술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모델의 정의에 따라 지원국을 설정하면, 우리와 언어적·문화적·역사적·지역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직업훈련 지원경험이 있는 나라는 최빈국 캄보디아, 저소득국 베트남, 그리고 중저소득국인 몽골이 될 것이다. 수요가 높은 국가 면에서 보면 기존에도 사업요청을 하였고, 계속 수요가 있는 곳은 베트남, 튀니지, 이라크, 카자흐스탄이라고 할 수 있다[표 37 참고: 직업훈련에 관한 2010년 수요조사].

또한 초기 개발 조건이 비슷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자원 의존형 국가를 제외하고, 연간 소득수준이 250-2,000달러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인구 규모에서는 2004년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매우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 공업화를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충족한 국가³⁹⁶⁾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가들 중 중점 협력국은 탄자니아, 일반 협력 대상국은 세네갈, 가나, 말리, 우간다 등이며, 특히 가나는 2010년에 직업훈련 수요 신청을 하였다.

협력단의 중점 협력 대상국 가운데 공여국 수가 20개 이하인 곳은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3곳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저소득국이면서 취약국으로, 수요(Need)에 비해서 ODA 지원이 적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형 모델은 중점 협력 대상국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나 만약 일반 협력 대상국도 포함한다면 공여국 수가 15개 이하인 파푸아뉴기니, 투르크메니스탄, 자메이카, 피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저소득 및 중소득이면서 우리와 지역적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나라 중 수요가 있는 나라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을, 그리고 우리의 협력 대상국 중 상대적 원조 소외국이자 저소득국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또한 수요 및 원조 소외의 측면에서는 중소득국인 카자흐스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개

396) (박복영, 채욱, 이제민, 2007)

발 초기 조건이 비슷한 아프리카 중점 협력국 중 직업훈련 수요가 있었던 나라로는 탄자니아를, 그리고 올해 직업훈련 수요가 있는 일반 협력국으로는 가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의 선택은 국별지원전략인 CAS에 따라 그 나라의 개발 및 빈곤감축 전략과 맞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선택되는 국가 풀을 조금 넓게 잡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이렇게 후보 국가군을 먼저 선택한 후, 우리나라의 개발 CSO가 교육 및 직훈 분야, 지역개발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현지 한국기업이 OJT나 CRS 등으로 협력단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재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기업 관련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CSO 관련해서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직훈 사업시 국가 특성별로도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이 잘 발달하지 않은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최신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원보다는 비공식 부문의 훈련(Training)이나 지역시장에 맞는 소규모 창업지원이 적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우간다 GTZ의 지역 기술발전 프로젝트(Local skill development project)로, 우간다의 농촌 마을에서 GTZ는 금속공예, 봉제, 미용업, 바닐라 재배, 파인애플 가공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³⁹⁷⁾ 독일이 우리나라의 개발연대 전기에 지원했던 것처럼 직업훈련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국에서는 일반기술 분야 기능사 및 직업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³⁹⁸⁾ 이와는 달리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의 중소득 국가는 숙련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기능 전문 기술자 훈련을 위한 기능대학을 설립하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가 학술교육과 기능교육을 병행하는 종합직업기술교육을 위한 기술대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멘, 나이지리아와 같은 취약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평한 기회제공,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체제전환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반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TVET 시스템에 대한 정책자문과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개방적 시장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IT, BT, NT 등의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

397) (GTZ)

398) (이경구, 2004)

고자 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지원규모

한국형 모델로서의 직업훈련이 효과성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직훈 분야의 절대적 규모가 얼마만큼 증가되어야 하고, 협력단 ODA의 비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하는지는 다른 공여국 사례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비중이 공여국 중에서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전체 CRS 코드 중에서 직업훈련 부분에 4.12%를 지원한다. 협력단의 경우, 6.12%를 지원하여 상대적 지원비중은 KOICA가 DAC 공여국 중 최고라 할 수 있다. 한편 절대적 지원액으로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독일이며 2002-2007년 평균 지원액이 7천 6백만 달러이다. DAC 공여국 1개국당 1년간 평균 지원액은 1천 백만 달러여서 독일이 타국보다 7배 정도 높은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협력단 역시 2001-2007년간 직훈 분야에 DAC 평균인 연평균 1천 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단, 타 공여국은 나라 전체의 ODA를 합산한 것이고 협력단의 경우는 타 한국 공여기관을 제외한 단독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공여국 평균이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KOICA가 자국 ODA에서의 분배 비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분야에서 규모적으로도 주 공여국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원조규모를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최소한 DAC 평균인 10.77백만 달러보다는 커야 할 것이며, 이상적으로는 독일의 7천 6백만 달러와 같게 되거나 넘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원조방법

직훈이 한국형 사업이 되면, 중점 수원국의 국별 지원 계획에 기초하여 수원국의 섹터 프로그램을 SWAp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중점 수원국별로 수립된 국가지원전략에서 교육 부문과 직업훈련 부문이 빈곤감축과 경제개발 목적달성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하는 중점 분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직업훈련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른 공여국의 원조분업과 조화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공과, 공과 수준, 지역, 훈련 대상을 수원국에게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비교우위에 대한 판단이 수원국으로부터 결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별 프로그램은 먼저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의 세 부분을 통합하여 지원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이 세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한 프로젝트에 통합된 경우가 적지 않으나, 기존에는 이 세 요소 중에서도 인프라 구축에 약 80%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형 사업에서는 정책자문과 인적역량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을 강화하여 이 세 요소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GTZ의 직업훈련 협력사업 보고서 역시 정책자문과 시범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사업을 조화되도록 지원한 접근방법이 실용적이었으며 지난 25년 동안 잘 운영되었다고(Work well) 보고하고 있다.³⁹⁹⁾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성공적인 직업훈련 사업 지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16,870 마르크(Deutsche Mark)를 지원한 한독직업훈련원과 13,520 마르크를 지원한 창원 기능대학 등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에도 전문가 파견,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책 및 기술자문과 같은 연성 요소가 각각 83.4%, 64.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장비 및 기재공여 등의 경성요소는 16.6%, 36% 밖에 차지하지 않아 연성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⁰⁾

세 가지 요소별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정책자문

- 직업자격 및 직업교육관련 법제도 보완
- 국가별 산업발전단계, 기술력 수요 등을 고려한 중점 양성 분야 선정
- 자격검정시행 및 관리기관 설립을 통한 수준별 · 종류별 자격의 체계적 관리
- 직무표준 · 분석 실시
- 포괄적 직업자격 등급체계 구축
- 노동시장 정보 및 관련 통계관리를 위한 고용정보시스템(System) 개발

B. 인프라 구축

- 검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
- 자격검정제도시행기관 설립
- 공과수준, 과목, 대상자, 지역에 대한 분석과 학생들의 접근성 및 산업체기반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원 건립 및 시설 확충

399) (GTZ) 동 보고서는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400) (이경구, 2004)

- 공과별 정원, 교사, 교과과정 편성, 예산운영 등 직훈련별 운영기본계획 수립
- 공과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 지원
- 훈련기관별 진로지도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개발센터(Career center)를 운영하여 진로지도 실시
- 자격검정제도시행기관 설립
- 검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

C. 인적역량개발

- 직업훈련 담당 정부부처 공무원 교육
- 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 지원
- 현직교사대상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교사교육 및 직업자격 검정 관련 교재 개발·보급

이런 세 가지 요소별 지원을 위해서 협력단의 각 부서들은 유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 국가에 우리가 직업훈련 분야를 지원한다고 하였을 때, 프로젝트 사업과 봉사, 연수, 민간협력팀이 각자의 연간 계획대로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분리된 수요조사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직업훈련이라는 단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수사업부는 본 사업 전에 직업훈련 분야 관련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관련 기관을 소개하고 수원국의 상대(Counterpart)기관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쌓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¹⁾ 그리고 봉사사업부에서는 봉사단을 사전조사 성격으로 미리 선정지역에 파견(Pre-staging)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⁰²⁾

본 사업시는 섹터 부서에서 건축물을 구축해 주는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다른 형태의 사업도 활용 가능하다. 먼저 정책구축과 관련된 자문은 행정제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월드 프렌즈 어드바이저(World Friends Advisor) 사업이나 전문가 파견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일대일 교육이 중요한 분야에서 봉사단 활용도가 크다는 점을 활용, 봉사사업부는 컴퓨터 및 ICT 교육 분야나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한국어 분

401) 봉사기획팀 면담(2009. 11)

402) 봉사사업부 검토의견(2010.1)

야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하고,⁴⁰³⁾ 각 공과의 교육을 담당하는 동시에 현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층이 주류인 한국의 봉사단은 CAD와 컴퓨터 그래픽 등 고급기술부터 기초직무까지 다양하게 교사 활동이 가능하며, 미국이나 일본 봉사자에 비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민주적 진행에는 약하지만, 열정적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차별화되는 면이 있다.⁴⁰⁴⁾ 민간협력팀은 CSO를 활용하여 산간벽지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영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집행을 할 수 있다. NGO들은 현지밀착형 지역사업에 경쟁력이 있으므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시장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주민의 자영업 기술을 향상시켜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개발 NGO들은 다른 외국의 NGO 직원들이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것과 달리, 현지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어를 구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주민의 요구반영과 지역적 맥락(Local context)이 중요한 지역단위 사업에 적절할 것이다.⁴⁰⁵⁾

본 사업 후에도 사후관리(Follow-up)를 위해 연수사업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기술학교 교사들을 초청하는 일반연수 장기 유학기회나, 특정 국가에 초점을 두는 다년간 국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독일이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사업처럼 연수 참여자 수준, 훈련 희망 요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하고, 민간 연구기관, 기업체 등 다면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18개월 이상으로 심도깊은 교육과정을 실시할뿐 아니라, 연수 전 충분한 자국어 능력을 확보하게 하는 등⁴⁰⁶⁾ 현재와는 다른 형태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나 봉사단도 집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곳에 파견하여 새로 구축된 시스템이나 제도가 자리 잡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조방식 중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간, 즉 장기적인 지원이다. 물론 CAS와 SWAp은 다년간의 지원을 전제하고 있으나, 한국형 모델은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틀 이상의 장기성을 요구한다. 독일로부터의 우리나라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지속됨으로써 거의 3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직업훈련제도가 정착되어 완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당시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1970년대 중반에 무상 기술원조사업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403) 봉사기획팀 인터뷰(2009. 11)에 의하면 컴퓨터와 함께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는 모집이 잘 되고 있는 분야이다.

404) 봉사기획팀 면담(2009.11)

405) 민간협력팀 면담(2009. 11)

406) (이경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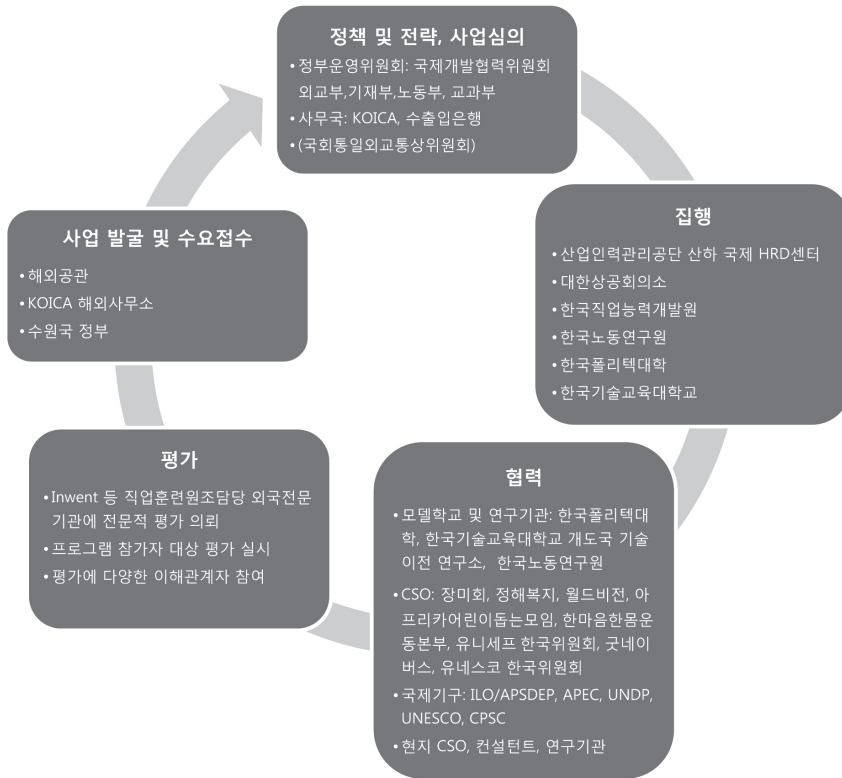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로 우리 나라는 교육과학부가 아닌 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이론보다는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독일식의 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리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은 진정한 “한국형 제도와 경험 전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9) 협력기관

이러한 직업훈련 분야의 한국형 모델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는 이상적으로는 [그림 11]과 같아야 한다. 이는 노르웨이의 Oil for Development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원조 관련 정부부처와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포함되는 정부 운영위를 결성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DAC의 한국에 대한 특별 심사가 개발협력에 대한 단일한 목적, 통합적인 정책과 전략을 가진 단일한 권위를 가진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권고한 것과도 부합한다.⁴⁰⁷⁾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사업 수행시에도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책과 전략 부분을 협력단이 먼저 시범적으로 맡아 운영하고, 집행 및 협력기관 부분에서도 먼저 핵심 관련기관만 포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그림 10]의 운영위와 집행 체계를 가진 종합적인 협력체제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한국형 모델을 함께 운영한 경험이 쌓이면 우리나라 ODA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그림 10] 한국형 직업훈련사업의 운영체제 및 관련기관



한국형 모델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기재부), 원조집행기관(KOICA, 수출입은행)과 섹터적 전문성이 있는 정부부처(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선택적으로 자문 성격의 국회(외교통상위원회)를 포함하여 단일한 의사결정기구, 즉 [그림 10]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무상이 통합되기 전까지 사무국에서 무상사업은 협력단이, 유상은 수출입은행이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형 모델사업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굵직한 사업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중점 협력 대상국의 외교부 공관 및 KOICA 해외 사무소에서는 사업발굴과 수원국의 사업요청을 접수하고, 나아가 소규모 사업의 심사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업집행은 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업훈련 원조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공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직훈의 전신이자 기술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은 모델학교로서 기능을 함과 동시에 직업훈련 학사제도에 관한 자문과 연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기관으로 CSO, 기업과 국제기구, 현지 인력 및 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먼저 직훈 및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인 장미회, 정해복지, 월드비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모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은 현지 NGO와 합작(Joint)으로 농촌 마을에서 소규모 창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제 사회공헌 활동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지사나 공장이 위치한 개도국에서 전자제품 수리교육, 소규모 창업 및 기업이 정신 함양 프로그램, 그리고 IT 교육을 국제사회공헌 차원(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성, LG, SK,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자금력 네트워크를 한국형 직훈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산학협력이나 OJT 및 PPP의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APEC, CPSC(콜롬보플랜기술교육대학), UNDP(유엔개발계획), UNESCO/UNEVOC(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사업), ILO/APSDEP(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능개발계획), OECD DAC 등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지원하여 양자차원에서 하기 힘든 차원을 다룰 수 있다. 즉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국가 및 지역별 원조성과 등에 대해서 연구,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개발, 개발경험 공유 사업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 형성, 연례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실시 등을 위해 다자 지원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서 2008년부터 2년간 바트켄(Batken) 지역의 통합적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UNDP와 KOICA가 공동 실시하는 사업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사업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조사와 함께 선정된 훈련원에 기술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과 지방정부 그리고 UNDP에서 협동으로 이루어진 사업 제안(Proposal)을 한국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잠재적인 투자기회를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⁴⁰⁸⁾

이와 함께 우리 지식과 경험의 현지화를 위해 현지 CSO와 컨설턴트, 연구기관, 정부기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수원국 수요와 맥락에 일치시킨다 함은 수원국 정부 차원뿐 아니라 풀뿌리 차원(Grass-roots level)에서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에 충실하고, 이

408) 여성기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20건을 선별하여 재봉공장 9곳과 제과점 10곳이 설립되었다.(UNDP, 2008)

들의 역할을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 전반에 걸쳐 확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David Korten의 “Learners approach”, William Easterley의 “Searcher” 개념, 그리고 Samir Rihani가 논한 “Non-linear”⁴⁰⁹⁾ 시각은 개발과정을 불확실하고 열려 있으며 진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지의 수요(Local needs)에 대한 탐색과 충족, 내부자의 지식과 능력 활용, 그리고 연구자와 실행자, 평가자의 통합된 역할을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한국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원국의 민간 차원 개발주체들을 협력기관으로 설정하고 참여적 과정(Participatory process)⁴¹⁰⁾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그리고 우리 사업의 국제기준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국내 외부 전문가 평가, 나아가서는 독일의 국제능력개발원(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GmbH: Inwent,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과 같은 직업훈련 원조 전문 외국기관에게 사후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및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위탁해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는 협력단 내부 혹은 국내에만 평가 결과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 및 다른 선진 양·다자 원조기관과 함께 공유 할 수 있게 하면서 수원국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사업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원조수준을 선진국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현지어 등으로도 쓰여진 평가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근거 중심적인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으로 쓰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축적이 되면, 한국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원조를 신흥 공여국의 모범적 원조 사례로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형 모델 사업화 가이드라인

위에서는 직업훈련을 예로 한국형 사업의 수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는데, 이는 비단 직업훈련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훈련과 같이 선정된 전자정부, 안정적 전력망 공급 및 새마을운동 등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도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한국형으로 발전시

409) (Korten, David., 1980), (Easterly, William., 2006), (Rihani, Samir., 2002)

410) UN Habitat의 “People’s process” 참고

킬 수 있다. 여기서는 모델 발굴의 프로세스를 [표 38]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DB”는 [별첨 17]의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한다.

[표 38] 한국형 모델발굴의 프로세스(PROCESS)

분석틀	참고	가이드라인
한국적 경험의 요소	- DB “한국적 경험” 열 - [그림 9]	- 정책, 인프라, 인적역량별로 수원국이 벤치마킹 가능한 한국적 요소를 나열하여 [그림 9]와 같이 표현 - 시대별로 특정 제도 및 기관의 도입배경 설명
비교우위	- DB 컬럼 산업적 비교우위	- 일반산업적 비교우위 - 원조사업에서의 비교우위 - 다자은행/타국 양자 ODA 수주실적 - 사업형태별 지원과 관련한 비교우위 - 위의 비교우위 측면에 대한 종합적 논의
차별성	- DB “타공여국과 차별성” 열	-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단과 타 공여국의 원조지원 액수 및 지원비중 비교 분석 - 특정 분야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주 공여국 및 원조기관 파악 - 주 공여국들의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해 기술 - 해당 분야의 산업적 비교우위나 협력 파트너를 고려하여 더 경쟁력이 있고 특화 가능한 세부 분야를 선정하고 원조방식 면에서의 차별화 전략과 주 공여국과 비교한 한국의 제도적 차이 등에 대해 기술 - 국내에서 비슷한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 기관과 협조 및 사업통합 전략 논의
사업성과	- DB “KOICA 사업성과” 열 - DB 컬럼 연수사업 - [박스 11]	- 해당 분야 협력단 사업의 성과를 종합 기술 - 현재까지 평균 원조액수, 건수, 사업 기간, 지역 및 협력 대상국의 국가그룹(소득수준, 취약국 여부 등)에 대한 분석 - 협력단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 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 개선 방향 도출
국제적 수요와 수원국 요청	- DB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열 - [별첨 16] - [표 37] - [박스 12]	- 국제수요는 [별첨 16]의 MDG 지표를 보고 해당사업이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MDG 목표, 타겟 지표에 대해서 기술 - 차년도 수요조사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요청의 건수와 순위 논의를 위해 [표 36]작성 - 사업요청 수원국의 지역, 소득,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논의

어느 지역에?	- DB “지역·국가별 적용 가능성” 열 - [표 1] [표 37] - 국가별 기업 및 NGO 현황에 대해 KOTRA, 해원협 자료 참고	-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국가 언급 - 한국의 개발조건과 비슷한 국가 언급(인구, 자원유무, 지리적 여건, 산업 구성 등) - [표 1]을 활용하여 우리의 중점 및 일반 지원국 중 주 공여국(Main donor) 수가 비교적 적은 수원국에 대해서 파악. 특히 최빈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고려 - [표 37]과 같이 차년도 수요조사표를 보고 해당 분야의 지원을 요청한 수원국 중 기존에도 사업을 했던 원조국 선정 - 그 중에서 한국 NGO와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가에 대해 파악 -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원국 후보선정
얼마를?	- DB “타공 여국과 차별성” 열	- 절대적 원조액수: 해당 분야 DAC 평균 이상이 되게 하고 해당 분야 주 공여국 수준에 맞추도록 함 - 상대적 원조비중: 해당 분야 상대적 주 공여국의 비율을 참고하여 그 이상으로 지원 - 한 개의 한국형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의 CRS 코드와 관련이 있으면 각각의 코드에서 주 공여국을 찾아 평균을 구함
원조방식	- DB “세부 내용 예시” 열	- 정책, 인프라 인적역량 구축의 요소별로 프로그램 예시 제시 - PBA/SWAp, SDP의 원조 접근방식(Approach)에 따른 논의 - 협력단 현재 사업형태가 각 프로그램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논의
협력기관	- DB “한국적 경험” 열 1-3) - 협력기관 - [그림 10]	- DB를 참고로 관련 협력기관을 파악 - 정부 및 원조기관, 공기관, 민간기관(NGO, 연구기관, 학교, 기업) 및 국제기구, 평가기구별로 각 협력기관을 [그림 10]과 같이 역할별로 배치

3. KSP와 프로그램 통합안

여기서는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대표이자, 한국형 ODA로 인식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KDI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기재부는 2009년 12월 제 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 추진전략(2010-2012)”의 10대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한국형 ODA 모델의 정립”을 선정하였으며, 동 과제는 KSP 사업을 한국형 ODA 모델의 대표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KSP는 한국형 ODA 모델의 개념과 분야, 그리고 원조양식에 대한 인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형 모델의 수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KSP 사업과 이와 유사한 KOICA 행정제도팀의 경제개발전략 지원사업을 비교해 보고, 분석결과에 따라 통합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1) KSP 프로그램

KSP 3대 목표는 정책 운영 및 수립 역량 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 모색,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이며, 2004-2009년까지 총 15개국에 134개 과제에 대한 개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⁴¹¹⁾ 주요 사업 분야는 경제개발전략, 산업수출진흥, 지식기반경제, 조기 위기관리, 인적역량 개발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출진흥정책 수립, 무역산업구조 분석, 수출입은행 설립 지원제시, 인적자원개발 등의 정책평가와 권고이며, 형태는 전문가 파견과 OJT, 정책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아래 표와 차트를 보면 사업규모는 2004년 10억 달러 규모로 2개국에서 시작해 2008년 8개국 25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0억 원 규모 11개 대상국으로 더욱 확장되었다.⁴¹²⁾ 2009년에는 베트남에 대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포괄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등 협력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규모 확대와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지원국가는 4년째 지원을 받고 있는 베트남과 2년간 지원을 받은 인도네시아(인니), 터키,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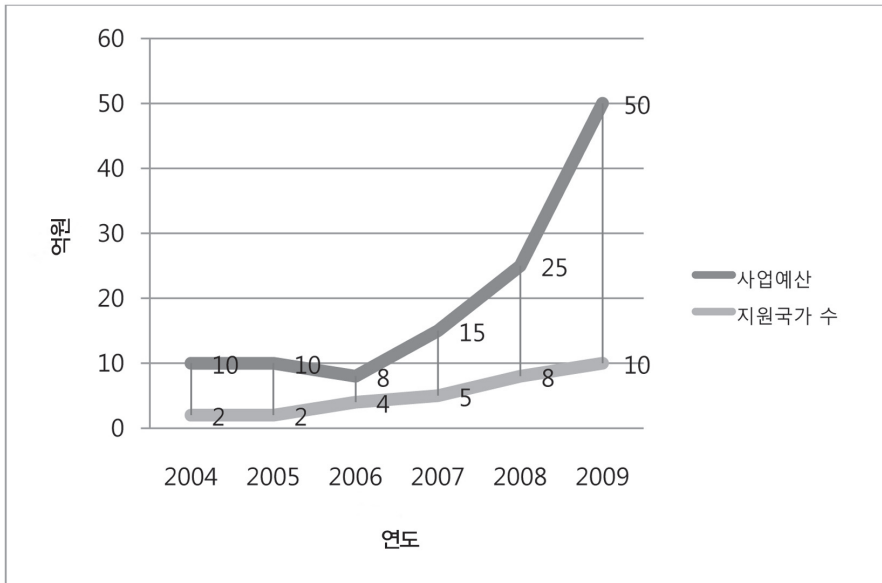
[표 39] KSP 사업예산, 지원국가 수, 지원국가 2004-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예산 (억 원)	10	10	8	15	25	50
지원국가 수	2	2	4	5	8	11
신규국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캄보디아	쿠웨이트, 가나, 아제르바이잔	오만, 도미니카(공), 모잠비크, 우크라이나	리비아, 카자흐스탄
후속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터키,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도미니카(공),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우즈베키스탄

411) (김은미, 2010)

412) 지역정책부 자료, “기획재정부 KSP 사업 확대추진 현황 및 문제점”(2009 2.3)

[CHART 20] KSP 사업 지원예산 및 지원국 숫자 추이 2004-2009



2) KSP와 KOICA 사업 비교 및 통합 필요성

[표 40]을 보면 KSP는 주로 미래의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중저소득국과 고소득국 그리고 DAC 수원국이 아닌 국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지원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히 ODA라고 하기는 어렵다.⁴¹³⁾ 지원국가는 협력단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비중이 크며, KSP에서 2회 이상 지원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은 협력단의 중점 협력국이자 2008년 상위 수원국이기도 하다. KSP 사업의 투입요소(Input)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이며 산출물(Output)은 컨설팅 페이퍼(Consulting paper)라고 볼 수가 있다. 사업규모는 협력단의 행정제도 섹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보다 1/2 정도로 작은 편이고, 주기는 1년에서 2-3년까지 다양하다. 전문가의 투입시간 비교는 하기 힘들지만 투입숫자는 협력단 보다 많은 편이며 현지 컨설턴트 활용이 부족한 협력단 사업과 달리 분야별로 현지 컨설턴트와 매칭(Matching)이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KSP 사업의 분야별 실적을 보면, 주로 무역과 인적자원개발의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공통 지원 분야는 주로 협력단의 행정제도의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건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이 중복된다 하겠다. 협력단의 중점 중기 전략이 아닌 부분 중 KSP에서 다루는 것은 재무나 공공재

413) DAC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무상지원은 ODA 계상에 포함되지 않음.

정, 위기관리시스템, R & D 개발, 사회 안전망 등이 있으나 이 역시 협력단 연수사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다.⁴¹⁴⁾ 이렇듯 분야와 지역이 중복되므로 비슷한 사업을 같은 국가에 지원하는 중복사례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알제리 등에서 발견된다. 베트남의 경우를 예로 들면, KDI는 FDI 활용,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시스템의 통합, 재무정책과 수출입은행 설립 등의 핵심 경제 분야를 맡고, 협력단은 농업과 인적역량 개발 등 사회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였다.⁴¹⁵⁾

[표 40] KOICA 행정제도팀의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사업과 KSP 사업 비교

	KOICA 사업	KSP 사업
목적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 능력 향상 및 제도개편 노력을 지원
ODA 여부	무상 ODA임	무상지원형태이나 DAC 수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지원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만 ODA임.
사업형태	프로젝트, 개발조사, 인력협력 (연수, 봉사단, 전문가 파견), 민간협력(NGO 지원)	컨설팅형 프로젝트(전문가 파견 및 연수 포함)
사업규모	2008년도 경제개발 추진능력강화 약 80억 (725만 달러)이며 순수 자문 프로젝트만 포함시 평균 10억(98만 달러) 예) 르완다 국가개발전략 수립 45만 달러, 알제리 국가산업정책전략 및 이행 청사진 수립사업 100만 달러, 알제리 산업정책개발 자문사업 150만 달러, 카자흐스탄 경제선진화 역량강화사업 50만 달러	연평균 약 40억, 프로젝트당 3억
전문가 투입	• 르완다 전문가 7 명 2-5개월 파견하였고 PM인 연구원이 지속 관리 • 알제리 17명 4-6주 현지파견, 연수 27명 • 카자흐스탄 세미나 연수 현지연구인력 2-3명 고용	15-30명이 전임(Full-time) 및 파트타임(Part-time)으로 일하며, 현지 전문가와 분야별로 1:1 매칭으로 투입
사업 주기 및 기간	• 1년 혹은 2-3년 • 1, 2, 3차 등 장기간 후속 사업진행 경우 있음	• 1년 혹은 2-3년 • 문제분석과 개발사업 도출 1년과 EDCF로 연결되는 2차 사업
수요조사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해외공관에 매년 수시로 사업 제안서(Project proposal) 형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역조정팀에서 정책적으로, 섹터팀에서 기술적으로 심사	KDI에서 수원국으로부터 서면 설문조사(Written survey form)와 중점 수요 리스트를 받고 있는데 점차 이를 사업 제안서(Project proposal) 형태로 바꾸어 나갈 계획.

414) KSP 사업은 최근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20개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발굴, 수출진흥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자금지원, 조세수입 확대, IT 산업 육성, 기업생산성 향상, 교육공급 확대, 무역자유화 추진,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기업정책, 기술인력 양성으로 구성된다.

415) KOICA 행정제도팀 인터뷰(2009. 10)

공통 중점 지원 분야	• 행정제도: 경제개발전략, 민영화, 수출진흥, 중소기업육성, 산업개발정책 • 정보통신: 전자정부 • 교육: 교육, 직업훈련 • 농업분야 • 산업·에너지	• 경제개발전략: 경제계획, 재정개혁 • 산업 및 수출: 민영화, 수출진흥, 기업가 정신함양, WTO 시스템 대응, • 지식기반경제: 전자정부와 IT 산업 • 교육: 산업 관련 인적역량, 노동시장 • 농림수산업 수자원관리, 농업정책 • 산업 및 인프라, 에너지와 환경
공통되지 않은 중점 지원 분야	• 보건 분야 ※ KOICA분야별 사업은 표 9 KOICA의 7개 섹터별 목적(Goal)과 타겟(Target)참조	• 경제개발: 환류 메커니즘 • 지식경제: R & D 지원, 혁신 클러스터(Cluster) • 산업 및 수출: 제조업개발 • 경제위기관리: 조기위기대체시스템, 거시경제 안정, 부실채권처리, 구조조정 • 사회 안전망과 재교육 • 재정, 공공재정
수원국 선정	외교부의 중점 및 일반 협력국	전략적 경제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KSP인덱스(Index)에 따라 선정: 전체 (100%) 중 자원수출에 60%, 인구, 1인당 GNI, 학교진학률, 정치적 안정성에 각 10% 가중치 부여
공통 지원국가	• KSP 15개국 중 10개국이 협력단 지원국가와 공통이며 특히 중·저소득국과 아시아의 공동지원비율이 높음. KSP에서 2회 이상 지원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은 협력단 2008년 상위수원국. • 최빈국: 캄보디아 • 저소득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나 • 중저소득국: 인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도미니카, 우크라이나	
공통되지 않는 지원국가	• 최빈국: 아프간, 앙골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 (민주), 에티오피아,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네팔,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동티모르, 예멘, 잠비아 • 저소득국: 코트디부아르, 케냐,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짐바브웨 • 중저소득국: 볼리비아, 카메룬,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온두라스, 이란,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튀니지 • 고중소득국: 피지,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 고중소득국: 멕시코, 브라질, 리비아 (1인당 GNI \$3,706-\$11,455) • 비 DAC 수원국: 사우디, 쿠웨이트
사업내용 중복사례	• 베트남 행정발전, 사회경제정책평가, 수출진흥전략, 국별연수 • 우즈베크 조세정책, 공공발전 • 인니 기상예보, 국제통상, 관세행정 • 캄보디아 재정운영, 공공정책 • 알제리 공공서비스정책, 정보통신진흥	• 베트남 공공발전, 수출진흥사업, 인적역량 개발 • 우즈베크 산업개발정책, 경제자유구역 • 인니 조기경보시스템, 수출, 관세 • 캄보디아 공공재정 •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장점	• 원조 과정(Process)에 대한 전문성과 PD/AAA등 국제원조규범 준수 노력 • 컨설팅 사업 전후에 협력단의 프로젝트, 연수, 전문가 파견, 봉사, NGO 등 다양한 사업형태와 연결하여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 수원국의 수요 발굴에 협력단 27개 해외 사무소와 재외 공관 활용가능	• 일부 섹터 특히 수출금융, 민간투자, WTO, 산업발전, 경제전략 등에 초점 • 최고위층을 상대로 함. • 사업진행이 비교적 유동적. •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OECD, 아시아 재단 등과 함께 성과측정과 평가를 연구 결과 공유 • 포괄적 경제정책 자문 지향 • 기재부 지원으로 예산 확대 용이
단점	• 선택과 집중이 비교적 약함 • 경험전수 프로그램의 패키지화, 브랜딩 및 홍보전략 부족 • 자문사업과 프로젝트, 연수 등 다른 사업 형태간의 유기적 연계 및 해외사무소의 수요발굴 능력이 아직 미흡	•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무상 원조정책은 원조의 분절화를 야기하고, 공여국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줄임 • 개발경험 전수를 위한 컨설팅형 원조사업은 개발조사, 본 사업과 연계되고 연수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물 활용에 제약이 있음 • 국제원조규범에 맞는 사업실시에 제한
공통이슈	• 전문가들이 섹터적 지식과 한국의 개발전략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개별 국가적·지역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우리 개발경험을 수원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어려움 또한 구체적 정책사례 중심이 아니라 시대순으로 각종 제도 및 정책 개요를 서술하여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고, 과거 성공적 발전 경험 중심이어서 최근 사례 및 실패 사례 제시에 한계 • 우리의 개발모델과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Joint Staff Assessment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와의 부합성 • 수원국 내의 다른 원조 공여기관의 프로그램과 조화성 • 개발전략의 효과성 측정 및 사후평가 내실화 • 주인의식과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 간의 균형 • 수원국 선택에 있어서 요구 중심적으로(Needs-based) 할 것인지 원조성과(Performance-based)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사이의 우선 순위와 균형 • 컨설팅 주제에 대한 수요 발굴	

<Source: 표 내용은 KOICA 지역 정책부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09년, '10년 추진계획 및 그간의 실적자료, KDI에서 KSP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희 연구위원과의 면담 및 도미니카 사업을 담당했던 수출입은행 최성규 과장과의 전화 인터뷰, 그리고 KSP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표 40]을 보면 KSP는 KDI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정책의 섹터적인 전문성이 있고, 기재부 지원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KSP는 협력단과 비슷한 지역과 내용으로 대규모 무상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분절화를 야기하고, 파리선언이나 아크라 회의 등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규범에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책자문 단독 사업의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조사업의 기획력, 원조집행 과정(Process)에 대한 전문성, 국제 원조동향과 논의 이해, 수원국에 대한 정보 면에서 장점을 지닌 KOICA와 통합이 되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원조 집행 전문기관으로서 KOICA의 전문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제 원조규범에 맞게 협력단의 원조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한 연구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즉, 방대한 DAC 권고사항을 정리하는 연구 용역 발주나, PD/AAA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CAS 연구,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프로그램 방식 원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KOICA 사업은 컨설팅 사업 전에 단기 연수를 통한 수요발굴 및 관련 기관 공무원과 네트워크(Network) 형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을 도울 수 있는 봉사단 파견 및 관련 NGO 지원, 퇴직 공무원인 월드 프렌즈 어드바이저(World Friends Advisor) 파견, 컨설팅 후 사후 관리로 관련 기관 담당자 연수 등 다양한 사업형태와 연결하여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 현지의 사정이나 국가개발전략과 보다 부합하는 수요발굴을 위해 협력단 해외 사무소와 해외 공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반면 KOICA와 외교부는 경제정책의 싱크탱크(Think-Tank)인 KDI와 비교하여 경제정책 분야의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파견 컨설턴트의 자문 보고서를 관리하고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 제약점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경험 전수 협력사업을 브랜딩화 하는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단의 원조사업 중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 드물다고 할 정도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지식 및 경험 공유는 새로운 일이 아니나, 협력단 사업은 KSP 사업에 비해서 구체성과 명확성, 연구 그리고 홍보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KSP는 지식공유사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웹사이트(Web site)를 구축하여, 2004-2007년 사이에 작성되었던 컨설팅 페이퍼(Consulting paper)를 공개하였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정책 연구를 축적해왔으며, 사업내용, 분야, 국가에 대해서 자료 보관소(Archive)를 만들었다. 이에 비교하여, 협력단에서는 한국형 모델과 관련된 연구는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사업모델이나 경험공유사업의 브랜딩(Branding)화, 지식축적 및 홍보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KSP 사업이 주로 경제 및 산업정책인 수출, 금융, 조세, 재정관리, 민영화, 거시경제 안정 등의 제한된 분야를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띠는 것에 반해 협력단의 지식공유사업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전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KSP와 협력단 사업을 분석해보면 두 사업이 상당히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단점이 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통합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먼저 KDI의 섹터적 전문성을 가진 정책자문이 KOICA의 인프라 구축과 인적역량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와 결합되어 원조집행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의해 집행이 되고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가 된다면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재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증액하고, 외교부의 공관이 가진 지역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요발굴을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 39]에서도 언급되었듯 두 가지 프로그램은 지역적인 전문성 부족과 수원국 내 타국 원조와의 조화성, 컨설팅의 실제 프로젝트와의 연계강화, 평가와 효과성 측정강화라는 공통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연구해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는 두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제의 규모를 살리고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자원의 규모는 의도한 적절한 결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과 측정시에도 국가나 지역, 섹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어야만 산출물(Output) 이상의 결과(Outcome)나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확장은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와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 및 실시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이 관심을 가지는 수원국은 다른 공여국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원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같이 저소득국이면서도 사업성과가 비교적 우수하며, 미래의 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큰 곳은 원조 공여국 수가 많고 원조액 규모도 매우 크다. 따라서 소규모 공여국은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관심과 협조, 정책대화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수원국과 ODA 공식 채널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 및 여타 공여국과 원조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ODA의 전략성이 저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DAC 회원국으로서 DAC의 지침과 권고사항에 따르기 위해서도 두 프로그램의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DAC 가입을 하면서 국제적인 기준(Standard)에 맞는 원조를 실시해야 하는 대내외적인 압력이 증가될 것이고, 이를 미리 대비하는(Proactive) 대처가 필요하다. DAC 동료심사(Peer Review)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상지원이 30여 개 개별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적되었다.⁴¹⁶⁾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무상 원조 중 단일 사업형태로 최대인 KSP는 공여국 정부의 정책일관성과 분절화를 줄이도록 하는 DAC 권고사항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고, 차후 시행될 한국의 동료심사에서도 이러한 분

4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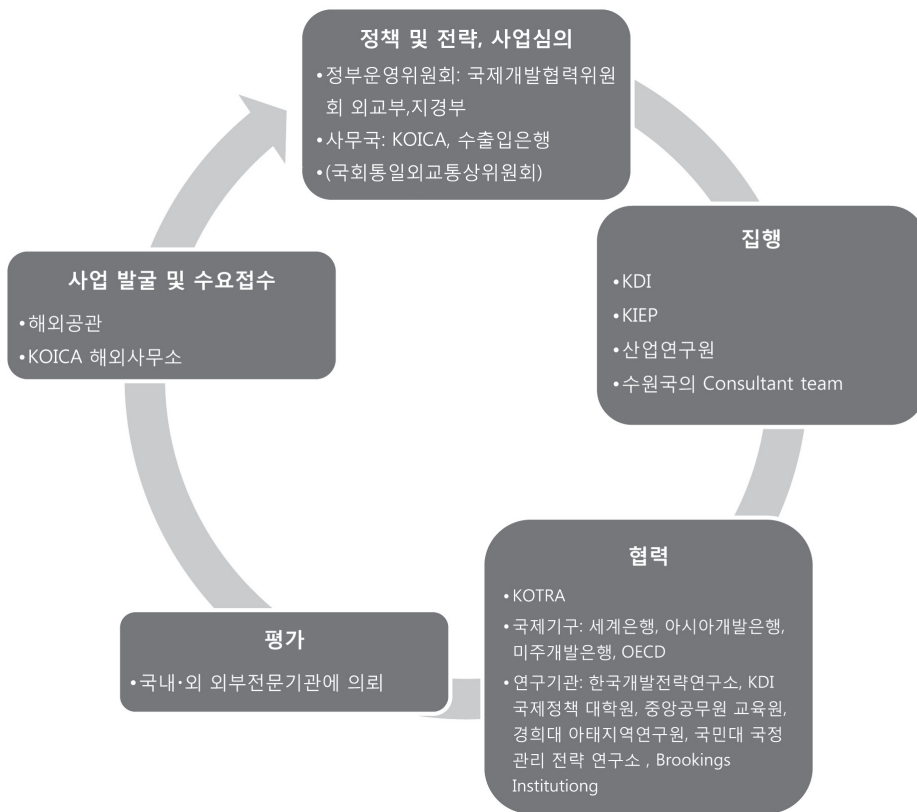
절화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 될 것이기 때문에 독자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관할 부처와 집행기관이 다른, 그리고 모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두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컨설팅의 권고가 실행되고 사업과 수원국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두 사업의 공통의 목적이고,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통합이 더 효과적이라면, 정치 역학상 및 과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조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외지향적인 것이고, 국내 행위자(Actor)들간의 경쟁은 한국이 국외의 원조기관들과 해야 하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에 비하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후발 공여국에게는 국내 자원과 지식의 통합이 없어서는 선진 공여기관들 사이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 힘들 것이다.

3) 통합방안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국제 원칙상 무상원조사업 수행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선의 방법은 KDI의 현재 사업이 KOICA의 사업 프로세스에 통합이 되는 것이다. 단, 협력단 사업은 입찰을 통해 사업시행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DAC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제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KDI를 실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KSP는 경제정책 전문 싱크탱크(Think-Tank)면서 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표 40]에서와 같은 관심 분야 및 지역의 사업을 KOICA가 입찰시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운영체계는 [그림 11]과 같이 구성 할 수 있고, 본 장에서 논의했던 한국형 모델 발굴시 프로세스(Process)와 국별 프로그램 실시 체계 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협력 파트너로는 KOICA와 KDI가 모두 MOU를 맺고 있는 KOTRA를 활용하고 KIEP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DI가 성과측정향상과 관련된 워크숍에 참여했던 국제기구인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KOICA와 HLF-4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등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경험 공유 및 적용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한국형 경제개발전략 추진능력강화 사업의 운영체제 및 관련기관



이러한 무상원조 일원화를 향해가는 차선적이고 과도기적인 형태로 행정제도팀의 경제개발전략 수립 자문사업 일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KSP와 공동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KDI 는 별도의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KOICA의 CAS 및 수요조사 프로세스(Process)를 활용, KOICA와 협의하여 공동 지원 분야 및 지역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한 가지 투입 요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OICA의 종합적인 경제개발 역량강화 사업계획과 관리 하에서 KDI가 사전조사성격의 전문가 정책자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KOICA는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공무원 인적역량 강화의 후속관리(Follow-up)를 하면 서로 중복을 피하고 보완되는 원조분업 형태로 공동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같은 국가의 사업 실시과정에서 두 기관은 포괄적인 전략, 프로그램 디자인, 사이클, 재정관리,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서 공동 틀을 사용하거나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 후보 한국형 모델 통합안

직업훈련,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경제개발전략 수립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국형 모델을 하는 경우는 [그림 10]이나 [그림 11]과 같은 수행체계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이런 후보군의 사업을 2-3개 선정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정부 운영위원회를 원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KOICA, 기재부, 수출입은행으로 구성하고, 섹터적 전문성을 가진 정부부처와 협력기관을 모아 각 모델 사업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행정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한국형 프로그램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상충관계(Trade-off)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핵심 관계 기관들을 먼저 한국형 모델의 운영체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착수시키고, 차후 모델이 정착 되면 2차적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안도 가능할 것이다.

5. 협력단 내에서 비교우위에 근거한 협력사업 실행방법

1) 업무분장

현재 협력단의 사업발굴체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분장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연구실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임직원 및 국내외 ODA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과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선정된 후보 세부 분야에서 한국적 경험의 적용성에 대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책부서에서는 정책연구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중기 섹터 전략과 CAS 수립시 한국의 섹터적 비교우위 분석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조정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수원국 수요 요청서에 한국형 사업의 독특한 장점과 구체적인 사업 분야, 원조방식 운영체제, 규모, 사업기간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한국형 모델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과를 취합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한국형 데이터베이스의 성과 부문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실에서는 수원국과 타 공여국, 한국정부부처, KOICA 협력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한국형 모델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대상별로 정리해서 홍보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모델의 시행순서

먼저 한국형 섹터별 모델에 관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단내 세미나를 통해 한국형 사업의 필요성과 개념, 브랜드, 세부 분야, 지역, 그리고 실시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협력단 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직원이 75%로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하나, “보통”과 “필요 없음” 그리고 “매우 필요 없음”의 답변도 23%나 차지해서 우선 협력단 내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필요성과 세부 분야 및 실시방법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단외 개발포럼, 혹은 민관 합동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세운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식화 과정이 완료되면 외부 협력 기관들과 사업실시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실시하고 시험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협력단 사업수행 체계에 한국형 모델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발굴을 위해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국별 CAS 수립 가이드라인, 지역별 섹터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사업에 대한 성과를 축적함과 동시에 타 공여국과 일반 국민에게도 한국형 원조사업에 대한 인식고취가 필요할 것이다. 단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협력단이나 정부부처는 한국형 사업을 찬성하는 편이지만, 타 공여국과 일반국민은 무관심한 편, 그리고 협력단 사업 파트너나 타 국내 원조기관은 중립 혹은 반대하는 편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타 공여국, 일반 국민, 협력 파트너들의 한국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국형 모델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협력 파트너의 협조가 있어야 원조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서만이 한국 및 아시아의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대안적인 원조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ODA 교육원, 대학 ODA 강의 개설 등의 인지 강화사업을, 타 원조기관에 대해서는 DAC의 원조 효과성 작업반(Working Party for Aid Effectiveness) 및 HLF-4를 활용 가능하다.

3) 국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KOICA 업무 프로세스에서 본 연구의 활용

본 연구는 국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협력단 업무 프로세스에서 크게 (1) 중기지원전략 내의 섹터 전략 수립과 (2) CAS 수립, 그리고 (3) 사업발굴 가이드라인 작성시 활용될 수 있다.

[표 41] 전략, 사업발굴 및 집행과정

단계	업무추진	수행부서
<1단계> 정책 및 제도적 틀	1-1. 지역적 섹터적 전략수립 및 백서작성 1-2. 국별지원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1-3. 국별 예산배분계획 수립 1-4. 사업발굴 및 형성제도 정비	정책부 정책부/정책연구실 정책부/기획부 정책부/사업부/사무소
<2단계> CAS 수립 및 사업발굴	2-1. 정책심사 및 하위 지원 분야 도출 2-2. 수원기관 및 공여기관과 정책대화 및 협의 2-3. 다년간 프로그램 및 전략에 대한 합의 2-4. 연간계획 수립	사무소/정책부/정책연구실 사무소/정책부 사무소/정책부 정책부
<3단계> 사업 수행	3-1. 사업별 R & D, EN과 MOU 체결 3-2. 기술적 타당성 조사 3-3. 단일 국별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RBM과 PDM의 공통적 사용 3-4. 프로그램 요소에 형태별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사무소/사업부 사무소/사업부 섹터팀/봉사팀/연수팀 민간협력팀 정책부/사업부

<Note: 외교부는 정책 및 제도적 틀 그리고 CAS 수립시 협력해야 함. 직제 개편 후 개편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음. Source: (박수영, 2009)을 참고로 재구성.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 & D),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N(Exchange of Notes), 결과중심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Project Design Matrix: PDM)>

[표 41]의 1단계 “정책 및 제도적 틀 수립”은 앞으로 협력단이 지역중심체제로 바뀌면서 국별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부분이다. 1-1에서 협력단은 지역적 및 섹터적 측면에서 중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섹터적 측면의 전략 수립시 제 4장에서 선정된 후보 프로그램군을 위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반으로 줄인 23개의 프로그램과 이의 반인 10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5개의 한국형 프로그램군을 선정함으로써, 단계별로 필요에 맞게 사용하도록 특화 프로그램 풀(Pool)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별 CAS 수립시 해당 수원국의 중점 개발목표와 지원 분야, 그리고 다른 원조 공여국들의 활동과 조화 및 보완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41]의 2-1단계에서는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및 타 원조 공여국의 지원 분야, 협력단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지원 가능한 2-3개의 하위 섹터를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 도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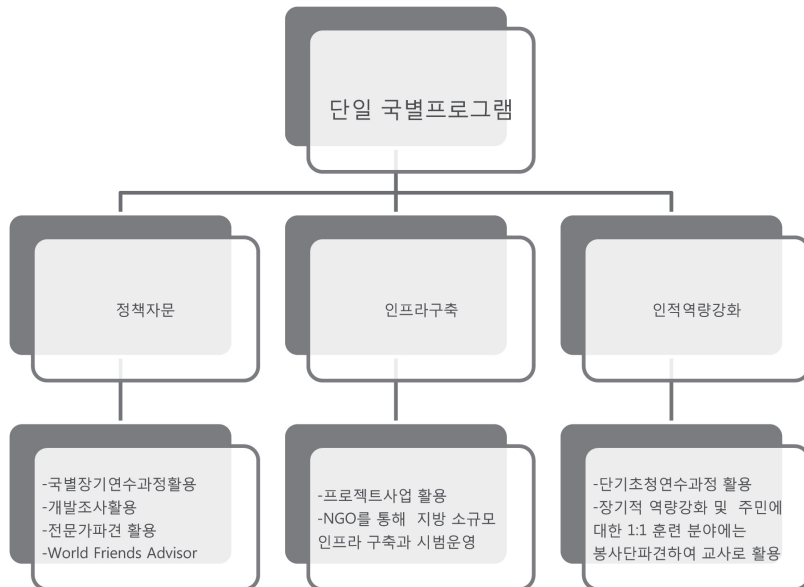
수 있다.⁴¹⁷⁾ 이때 한국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분석틀(Framework)로 본 연구 제 4장 한국형 모델의 선정틀과 기준, 즉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타 공여국과 차별성 및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원조사업 성과, MDG와의 관련성,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는 표준화된 과정(Standardized process)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수원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일관성 없는 사업 신청서를 다수 작성하고 KOICA에서도 신규사업반영도가 3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서 전체를 정책적·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⁴¹⁸⁾

마지막으로 단일 국별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의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로그 프레임 접근방식(Log frame approach)을 사용하여 수직적 논리고리, 즉 목적(Objectives)과 결과(Outcome), 산출물(Output), 투입물(Input)을 정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Indicators of achievement), 지표 검증방법(Means of verification), 주요 가정 및 위험(Important assumption & risk) 등의 수평적인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직적 논리(Logic)에는 정책, 인프라, 인적 개발이라는 프로그램(Program)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업 투입형태를 결정할 때 본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별 강점을 토대로 한국형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그림 12]를 참고할 수 있다.

417) 원조분업의 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2-3개 이내의 섹터에 관여해야 한다.

418) 정유아(2009), “CAS 수립을 위한 현지공동 정책대화 실시방안 협의 결과” KOICA 내부문서

[그림 12] 단일 국별 프로그램 하에 사업형태별, 요소별 연계 강화



그러나 장기적 · 안정적으로 한국형 모델을 국별 프로그램 하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체제로 편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협력단 인력이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편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중점 협력국 수와 섹터 수를 대폭으로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별 팀을 만들고,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그 안에서 다시 섹터별로 조직을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체제 하에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국별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작업에 책임 부여가 가능하여 국가별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원조에 활용하는 것이 원활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단이 각국 마을에서 활동한 자료나 연수생들이 자국의 상황에 대해 발표한 자료가 지역적인 정보로 축적, 통합되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6. 기존 섹터 부서의 사업과 한국형 모델 사업의 차이 요약

이 장에서는 직업훈련 등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던 사업을 한국형으로 모델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하던 직훈 등의 사업이 한국형으로 실시하는 직훈사업과 어떤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형 모델로서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사업 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적 경험의 요소와, 비교우위, 선진국

과의 차별성 그리고 협력단 사업성과에서 얻은 교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적 선정에 있어서 한국적 경험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지역과 원조 소외국, 그리고 개발 NGO나 민간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대해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수원국에 대해 타겟팅을 함으로써 협력단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틈새지역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의 다양한 개발주체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원조규모에서도 해당 분야의 주요 공여국 및 DAC 평균에 이르도록 하여 기존 사업보다 크게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원조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운다는 점이다. 한국형 프로그램은 국별 섹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수원국 국별지원전략과 일치되고 다른 원조 공여국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표 41]과 같이 새로운 전략, 사업발굴 및 형성, 그리고 수행 체계를 거친다는 면이 기존 사업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원조양식(Modality) 측면에서도 기존 섹터 사업이 인프라 건축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70-80%의 자원분배가 이루어지고 사업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한국형 사업은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개발에 대한 비중을 높여 세 요소가 균형 있게 지원된다는 것이다. 협력기관에 있어서도 [그림 10], [그림 11]과 같이 한국적인 분야별 경험을 원조 프로그램으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파트너들을 무상원조 집행체계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제 7장 제언 및 결론

이 장에서는 한국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차원의 정비에 대해 제언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제언

1) 지식의 축적, 분석, 전파의 강화

한국적 무상원조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 축적, 전파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형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험을 현지화(Localize)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수원국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기존 섹터별 사업 및 선진 공여국의 원조관행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차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활용하는 기관 차원의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직원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점은 현재까지 수행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 성공 및 실패 사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원조의 장점과 고유성을 물었을 때 다소 추상적이거나 단편적인 내용이 언급되었고, 학습이나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시각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원조나 KOICA의 원조 사업, 그리고 협력단에서 파견된 한국 인력의 장점으로 유동성, 인정이 많음, 열정적임, 빠름, 개도국 입장에서 이해 등이 몇몇 사례와 함께 언급이 되었으나, 이것이 보다 구체화·일반화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세부 섹터의 다른 선진 공여국은 협력단 사업 방식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 평가의 결과라든지 다른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다음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이는 환류 작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과 보고서의 질이 차후 사업을 개선시킬 정도로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부서별로 매년 진행되는 수요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직원들이 성과 보고서나 다른 선진국 사례를 탐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변화와 혁신을 권장하는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때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관 전체에 배움과 변화(Learning & growth),⁴¹⁹⁾ 그리고 혁신의 선순환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협력단에서는 인트라넷에 “최신 지식” 공유를 통해 개별 직원이나 학습 동아리의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관련 분야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과 분석, 전파와 활용**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섹터별·지역별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다.

여러 부서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지역적 섹터별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32,000명에 달하는 각국의 연수생들이 연수를 받고, 많은 연수생들이 자국의 실정에 대한 국별 보고서(Country report)와 연수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지식이 국가별, 섹터별로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축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연수 시행기관에서 연수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든 자료 역시 핵심적인 내용을 국가별·지역별·섹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봉사단이나 협력단 지원 NGO가 산간벽지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특정 지역과 마을에 대한 지식은 개도국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얻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출처(Source)에서 얻은 지식들은 협력단 웹사이트(Website)에 국가별·섹터별로 저장되어 필요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USAID의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 UNICEF의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세계은행의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LSMS)와 The Core Welfare Indicators Questionnaire (CWIQ) 등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개도국 가구조사 데이터에 대한 웹링크와 함께 소개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데이터와 지역적 차원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사업의 주 공여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외 연수나 학습을 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직업훈련 사업을 한다면 독일이 지원한

419) Kaplan & Norton의 Balanced Score Card 에서 하나의 축

직훈원에 대한 견학과 탐방이 필요할 것이고, 전자정부사업을 위해서는 UNDP⁴²⁰⁾나, 세계은행(World Bank), 개발도상국 정보격차해소재단(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등의 원조관행에 대해서 탐구하고 우리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섹터 부서 별로 각기 전문가 풀이나 협력기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어떤 전문가나 협력기관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업수행능력은 어떤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협력단 전체 차원에서 공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분야별, 지역별 지식이 유용한 정보로 쓰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례를 종합하여, 섹터별·지역별·마커(Marker)별로 추세를 보았을 때 성공적이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일반화시켜 볼 수 있고, 또한 프로젝트의 위험률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⁴²¹⁾ 이를 위해서는 독일부흥금융금고(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가 도입한 등급평가시스템(Rating system) 등을 눈 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fW는 2004년과 2005년에 12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였을 때 71%의 성공률이 있었고 아시아 지역의 수송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률이 높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시멘트 공장 지원에 대한 성공률은 몇 년간에 걸쳐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여서 이 사업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등의 다른 접근방식으로 대체하였다. 물론 개발은행에서 실시하는 비교적 투입요소(Input)와 산출물(Output)이 명확한 하드웨어 프로젝트와 달리 사회분야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은 계량화가 힘든 제약점은 있으며, 내부 사업일 경우 보다 관대하게 점수를 매긴다는 점, 그리고 등급평가시스템은 그 안에 포함되는 평가지표의 선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한계점이 있다.⁴²²⁾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다른 성과들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을 것이다. 비슷한 예는 1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3만 4천여건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하여 점수화하는 DFID의 성과 보고 정보 시스템 (Performance Reporting Information System)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²³⁾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 축적, 분석된 지식이 개발협력사업의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

420) 예: UNDP Development of the E-Procurement System in Jordan, World Bank's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421) (Jung, Woojin., 2007)

422) (Jung, Woojin., 2007)

423) (OECD, 2006b)

들에게 **보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혁신적인 지식으로 활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협력단이 원조 전문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이 필요하다. KSP 사업이 협력단 사업에 비해 널리 알려지고 한국형 모델로 부각되는 이유도 협력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에 맞게 전략적으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보는 국내 원조 관련 이해자, 연구자, 일반 대중, 국회의원, 타 공여국 등이 찾는 주요 정보에 따라 모두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Message)가 다 들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책에의 시사점을, 연구자는 통계나 객관적 데이터를 타 공여국은 영문 자료를, 일반 국민은 연보와 같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개괄적인 소개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것이며 관련 자료는 이들의 욕구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대상 그룹 중에서도 협력단에게 가장 중요한 청중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제한된 자원을 할당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KOICA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할 대상자는 원조 이해관계자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메인 사이트(Main site)를 통해서 협력단의 차별적이고 비교우위에 근거한 사업 모델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KOICA 사업에 대한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가장 핵심적인 홍보대상이 아니라면 현재처럼 ‘청소년 마당’을 첫 화면인 홈페이지에 할당하기 보다는 KOIC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Signature program)이라든지 다른 국내외 원조기관과 주제 면에서 차별화 되는 최근 연구보고서 등에 관해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식의 활용에서 또 하나 핵심이 되는 것은 협력단의 평가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 평가 보고서가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평가 보고서의 설문조사 문항 등 유용한 분석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연수 종료평가 보고서처럼 짧고 반복적이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차후 사업에 반영할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 평가 역시 상당 부문 진행이 되었으나, 행정제도 등 아직 분야별 평가가 없는 섹터도 있고, 산업 에너지처럼 ‘개발조사사업 형태별 평가’로 ‘분야별 평가’가 대체된 경우도 있다.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은 프로젝트의 목적(Goal)과 목표(Target), 목적달성을 위한 가정(Assumption) 등이 시작 전에 정해지고 관리되지 못하며, 아직 협력단 조직 차원에서 이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도 기인하므로, RBM 등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보편화도 시급하다.

국제기구에서는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식될 정도

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협력단에서도 한국형 모델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로 파생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집결할 수 있는 장치와 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섹터 재정비

KOICA 사업은 섹터별, 형태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각기 수요조사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개별 수원국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형태간 시너지를 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일 국별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협력단 내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⁴²⁴⁾ 지역체제 전환을 위한 실마리는 가장 먼저 중점 협력 대상국과 함께 중점 섹터 수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협력단의 섹터 사업이 경제, 사회, 생산, 다부문의 모든 상위 섹터를 다 커버할뿐만 아니라 DAC 회원국 중 최다라는 면에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섹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섹터의 중점 하위 섹터(Sub-sector) 수를 줄일 수 있다. KOICA의 주요 세부 섹터별 프로그램만도 44개에 이르므로, 본 연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군으로 선정한 23개, 10개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한국형 모델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중점 섹터 역시 서서히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섹터를 특화하는 동시에 섹터간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일 경우에는 다른 공여국이나 다자기관에 사업을 대리시키는(Delegation)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협력단 예산이 2015년까지 세 배가 증가되는 속도로 인력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빠르게 증액되는 예산을 제한된 인력이 집행하다 보면 사업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타 공여 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만약 현재 섹터 체제를 유지시에도 섹터 분류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정부는 ICT와 행정제도 분야 모두에 해당한다. 물 관련 사업을 환경, 산업 에너지, 보건, 농업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항구관리 시스템 현대화 역시 산업 에너지와 ICT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있다. 이런 혼돈이 있을시 섹터별 팀장 및 각 국별 담당자가 개별 케이스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팀 인력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유로 분류가

424) 개별 및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함.

되기도 한다. 즉, 팀별 인원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특정 사업은 그 해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팀이 맡는 경우가 있다.⁴²⁵⁾ 이러한 분류의 혼란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섹터팀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사업부 내에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봉사사업부는 직종에 따라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전자, 기계, 자동차 부분에서 선발하여 직업훈련 교사로 활용하는 봉사원이 교육 부문이 아닌 산업 에너지 부문에 속하게 되어 있다.⁴²⁶⁾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다. 먼저 CRS 코드처럼 특정 사업이 최종적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섹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러닝(e-Learning)은 교육을 위해 IT가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기술적인 면으로 인해 정보통신팀에서 다루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정부 사업도 행정제도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협력단의 중기 전략 목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종합개발제도는 산업 에너지의 중장기 전략 Goal 2이므로 국가표준제도 관련 사업은 행정제도가 아니라 산업 에너지 팀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사례(Case)별로 중기전략과 CRS 코드 및 원조목적에 따라 분류를 확립해 놓으면 추후 사업 분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섹터 이름 역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연보와 내부문서, 그리고 조직표가 각기 다른 섹터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농촌’, ‘농어촌 개발’이 혼재되어 있고, ‘ICT’, ‘IT’, ‘정보통신’이 혼용되며 ‘환경 및 기타’, ‘환경 및 여성’, ‘환경’ 등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름에 대한 통일을 해야 사업 범위도 명확해질 것이다. 지역개발은 도시개발도 포함하기 때문에 농어촌 개발과는 다른 개념이며 여성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CRS 코드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을 다른 공여국과 분야별 세부 분야별로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은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분류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즉, 협력단에서의 분류와 타 공여국의 섹터 분류가 차이가 있음을 물론이고, 중기 전략에서와 통계상 분류가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다부문 도시개발 및 관리(43030)는 협력단 실제 사업에서는 환경 및 기타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데,⁴²⁷⁾ 산업 에너지 부문에서 신도시 사업이 중점 지원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섹터에 포함시켜야 할지 모호한 면이 있다. 두 분야에 모두 넣는 방법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중기 전략

425) 정책기획팀 인터뷰

426) 봉사기획팀 인터뷰

427) 정책연구실 통계담당자 인터뷰

에 따라 세부 분야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산업 에너지 하에 분류하였다. 차후 이 보고서에서의 CRS 코드별 사업분류 방법을 검토하여, 향후에 분야 및 세부 분야 레벨에서 국제 원조액과 지원비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한국형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PROCESS) 개선

많은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떤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나 보다는 정석의 과정을 거쳤느냐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짧은 사전조사기간, 프로젝트 관리도구(Project management tool)의 부족, 적은 원조규모, 수원국의 개발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평가의 제한적 활용, 투입요소 위주의 원조, 타 공여국의 모범관행에 대한 학습부족, 정치적 이유에서의 사업대상 지역 및 대상인구 선정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한국형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효과적인 결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모델을 전기관 차원에서 원조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개선의 과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국형 모델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하며, KOICA는 한국형 모델 시범실시를 조직 선진화를 위한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이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도록 고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다른 나라의 선진원조를 배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개발을 이루어 온 만큼 혁신, 열정, 의지, 패기 등이 강점이나, 시간을 들이고 원칙을 지키는 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협상하여 최적의 안을 이끌어 내는 점에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모범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제약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따르는 선진국의 원조는 왜 효과적이지 못했는지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런 모범관행이나 원칙 자체가 문제였다기 보다, 선진국 역시 여러 정치·경제적 어젠다(Agenda)에 의해 원칙을 지키는 이상적인 원조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2. 결론

본 연구는 한국형 섹터별 원조모델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사업화시키기 위한 수행방안을 논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협력단의 사업은 주로 형태별이나 지역별, 분야별로만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 분야별로 사업이 망라되고 분석되는 것은 최초의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형 사업의 위험성으로 제시되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각에서는 “한국형 모델”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형 모델을 “국제개발원조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되면서도 한국의 경험을 살린 특화된 원조”로 이해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국형 사업의 브랜드를 말 그대로 “한국형 원조 모델”이나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 하여 공여국인 한국을 드러내기 보다는 노르웨이의 Oil for Development Initiative처럼 선정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서 짓거나 “개발경험 공유 프로그램(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SDE, SADE)” 혹은 빈곤 격차 해소 프로그램(Bridging the Poverty Gap Program: BPG, BPGP) 등 사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려서 지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²⁸⁾

한국형 사업의 개념과 콘텐츠 그리고 체계적 시행절차가 부족한 것이 역시 한국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모델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로 협력단 직원들의 75.6%가 구체적 시행 절차 및 체계가 없음을 꼽았고, 개념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69.2%나 차지할 정도로 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모델의 정의와 콘텐츠 그리고 시행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 개도국의 적용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은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동 연구에서 선정된 가장 경쟁력 있는 세부 분야 프로그램에 한하여 그 섹터의 전문가, 원조 전문가, 지역 전문가 협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정책 및 제도의 시대별 도입배경, 효과, 보완점, 성공 및 실패를 가져온 내적·외적 요소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학술 및 문헌조사 및 관련 기관 탐방, 관련 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 및 기술이 시범사업을 할 국가군의 어떤 특정 개발목표 및 핵심 기저문제(Underlying causes)와 관련되어 있고, 이 국가군이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비슷한 혹은 상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제도 및 기술이 시범사업을 할 국가군의 어떤 특정 개발목표 및 핵심 기저문제(Underlying causes)와 관련되어 있고, 이 국가군이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비슷한 혹은 상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석시에는 우리의 개발 경험을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지 말고 복지(Well-being)나 역량, 혁신, 사회적

428) 만약 한국을 브랜드 안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SDEK (Sharing the Development Experience of Korea), KoDev Partnership (Korea Development Partnership)이나 CAKE(Creative Application of Korean Experience) 등의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Social capital), 인권, 성 평등, 환경 등 경제성장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⁴²⁹⁾ 또한 개발의 목적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감축에 있으므로 다차원적인 빈곤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권한부여(Empowerment), 불평등, 부와 재산(Wealth & asset), 안전, 자유, 결핍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의 균형, 한 국가 내에서 그룹간, 지역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예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효과를 언급할 때, GDP 외에도 대안적인 지표, 즉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 레가툼 번영지수(Legatum Institute Prosperity Index), 스티글리츠-센(Stiglitz-Sen) 위원회에서 개발중인 실질 순 국민 가처분 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한편 한국의 제도가 수원국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원국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으며 “Learning by doing”으로 알아가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즉, 협력 대상국측에서는 한국의 제도를 하나의 예로 보고 타국과 종합하여서 선택적으로 장점을 취할 것이며, 아무리 한국이 자국의 전통이 반영된 어떤 제도를 이전하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와 가치관과 문화가 다른 수원국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더 적용이 가능한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원조사업으로 담아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노하우가 활용 가능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제언에서 언급한 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 분석, 전파하는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가시적인 홍보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세부 원조 분야 중에서도 협력단의 성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형 사업을 모델화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 뚜렷한 원조결과가 증명되지 못하였지만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들은 기존 사업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을 하고, 이 중에서도 성과가 쌓이고 분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국형 모델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별작업을 위해 성과 측면의 기준이 포함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모델 선별이 가능하다.

한국형 경험 공유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면에서, 이를 노력하고 투자하여 내실을 키우는 작업 없이 속성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세우고자 해서는 안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브랜드는 지속성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내실

429) 제 3회 OECD 세계포럼에서의 논의(2009. 10)

(Substance)이 뒷받침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ODA를 통해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치명적인 위기를 관리하고, 우리의 노력을 국제 각층의 서로 다른 청중들에게 전략적으로 전달하다 보면 국가적 차원의 명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⁴³⁰⁾

한국형이 공여국의 공급 중심 원조이며 한국 경험을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우려는 “수원국 주도”의 원조 실시로 대응할 수 있다. 파트너 국가에서는 여러 공여국의 프로그램 중 가장 자국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의존하면 우려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다.⁴³¹⁾ 그러나 “수원국 중심”이라는 전략은 단순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 이상의 투자를 요구한다. 수요조사는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되, 수원국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여국은 수원국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원국은 자국의 정확한 필요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도 원조를 요청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해 수요조사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단순히 요청주의에 입각한 지원 외에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한 협력단에서도 현재 노력하는 바처럼 CAS와 SWAp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원국 주도의, 수원국 개발 전략에 일치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수원국의 공공재정 및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⁴³²⁾ 프로그램 참가자의 역할을 프로그램 사이클 전반에 걸쳐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인력과 기자재를 통한 한국적 경험의 전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형 모델은 비구속성 원조를 늘려 가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적 경험의 전달 채널을 한국적 기자재와 인력에 제한해서는 현지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구속성 조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현지 조달(Local procurement)⁴³³⁾ 등의 방법과 함께 각 개도국 상황에 맞게 우리 경험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Customize)하기 위해서 현지 컨설턴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파견 전문가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원조 효

430) 제 5회 제주평화포럼 중 “국제협력 분야의 한국 국가 브랜드” 부문 회의에서 국가 브랜드 인덱스(Nation Brand Index)를 만든 Simon Anholt의 발언 참고

431) OECD/DAC 원조효과 과장 브렌다 킬렌(Brenda Killen) 인터뷰 내용임.

432)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서 SWAp 방식으로 이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이현주, 수원국 공공재정 및 조달 시스템 활용방안, 2009), 이러한 권고들은 사실 다 하나의 연결된 고리라 할 수 있다.

433) 국제입찰여부는 입찰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에 따른 구분이며, 현지조달여부는 조달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른 구분임.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내 원조사업 평가시 여러 번 지적된 바처럼 파견 전문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갖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에는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은 지역의 역량이나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⁴³⁴⁾ 따라서 DAC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바처럼, 적절한 기술지원이 되려면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크면서 외부 컨설턴트로 기능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을 활용해야 한다.⁴³⁵⁾ 특히 우리나라는 재화, 용역, 서비스 조달에 관해 공여국을 위한 특별한 요구조건을 달지 않고 수원국의 공공재정이나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 2006, 2008년도 파리선언 모니터링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⁴³⁶⁾

한국형 원조 모델을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개발 주체들은 특화 가능한 섹터에서의 경쟁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 이를 향후 원조분업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모델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성공적인 원조수행에서는 다른 나라와 원조방법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는 것이 고유의 모델을 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형 사업을 원조분업에 대비하는 기회로 삼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독자적인 노선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모델이지만, 한국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여국의 모범 관행(Best case practice)을 적극 수용하고 조직적 차원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넘어서는(Beyond Korean model)”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형 모델이 한국의 경험을 판매, 수출하려고 하거나 한국 기업들의 수주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원조목적에 대한 공유, 원조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조주체간의 명확한 역할설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익을 위해 개발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해도, 여기서의 ‘국익’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국가간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구촌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수원국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여 전 세계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자기 이익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수원국 시민의 구매력(Purchasing power) 향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 불안정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야기되는 테러의 위협 감소,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그

434) (OECD, 2006d)

435) (OECD, 2006d)

436) (이현주, 2009)

리고 전염병의 위험감소 등 다소 간접적인 부분일 것이다. 이와 달리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익, 예를 들어 당장 우리 제품이나 제도를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전 국민의 세금으로 원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나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게 도와주는 것은 일부에게 개발협력이 이익이 돌아가게 됨을 뜻한다. 특정 그룹에 대한 혜택이 한국인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적하)”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한 그룹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기회가 박탈된 다른 그룹을 양산하게 되므로 논란이 될 것이다. 또한 협소한 국익론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큰 외교적 실리를 취하는 데 있어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며, DAC 가입국은 중국 인도 등 OECD 및 DAC 미가입 국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⁴³⁷⁾

한국형 모델은 신흥 공여국의 대안적 원조모델, 남남협력, 그리고 아시아 경제개발 모델의 대 개도국 적용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매우 흥미로운 화두를 던진다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 평가의 5대 측면에서 조망해보면 한국형 모델은 경쟁력 있는 섹터에 집중하며 협력기관 및 사업형태간 유기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효과성**(Effectiveness)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CAS에 근거하여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함으로써 **적절성**(Relevancy)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서 성공이 검증된 어느정도 표준화된 모형을 씌으로써 속도감 있고 비용 절감적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화할 수 있다. 더불어 다년간 집중적 지원으로 원조크기를 늘리고, PBA를 실시함으로써 **파급효과**(Impact)를 확대하고, 현지 사무소의 역할 확대와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현지 조달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흥 공여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아직 학술적으로 연구되거나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리고 2011년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인 HLF-4를 개최하여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이끌어 낼 주최국으로서, DAC의 새 회원국으로서, 또한 신흥 공여국과 전통 공여국의 가교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제원조사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대와 책임 속에서 한국형 원조의 성공적인 개발과 수행은, 한국의 대안적인 개발협력 모델과 그 효과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437) (쿠사노 아쓰시, 2008) 다른 논거를 들자면, Barber(2007)는 DFD가 세계적으로 양자 원조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식되는 원인 중 하나가 영국의 상업적 이익에 대한 단기적 압력에 저항하고 저소득국의 빈곤감소에 집중하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Haslam et al, 2007에 인용).

별첨(ANNEX)

별첨 1. 한국의 시대별 과제, 성장 방식 및 주요 전략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시대적 과제	근대화와 고도 성장 점화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평균 GDP 9% 이상 성장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증대기: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경제안정과 시장개방 진입기: 3저 호황과 무역자유화, OECD 가입	IMF 체제와 구조 조정기: 외환 위기와 한국 경제 경쟁력 제고	
성장방식	노동집약적 경공업육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육성	기술집약적 산업화	지식집약적 성장동력 창출	
주요 전략	정부 주도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및 대기업 육성, 녹색혁명 등 농업개발,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고속도로 건설, 의료보장제도 창설 등		경제 자유화 등 민간주도 경제 이행, 형평 및 분배, 대기업 규제	시장경제 개발 모델 전환(기업·금융·공공·노동 등) 구조조정, 글로벌 스탠더드화, 환경평가 정책 도입, 시장개방 및 질적 성장	

<Data Source: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종합대책(안). (2007)>

별첨 2.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항

성별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남	49(62.8%)	
2) 녀	29(37.2%)	

직급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임원	1(1.3%)	
2) 부장	7(9%)	
3) 팀장	15(19.2%)	
4) 차장	1(1.3%)	
5) 과장	26(33.3%)	
6) 대리	12(15.4%)	
7) 직원	13(16.7%)	
8) 전문직	3(3.8%)	

고용형태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정규직	71(91%)	
2) 계약직	7(9%)	

KOICA 근무년수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1년 미만	4(5.1%)	
2) 1년 이상-5년 미만	20(25.6%)	
3) 5년 이상-10년 미만	10(12.8%)	
4) 10년 이상-15년 미만	6(7.7%)	
5) 15년 이상	38(48.7%)	

한국형 모델의 필요성

한국형 섹터별 양자 무상원조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매우 필요함	27(34.6%)	
2) 필요함	32(41%)	
3) 보통	11(14.1%)	
4) 필요없음	6(7.7%)	
5) 매우 필요없음	2(2.6%)	

한국형 모델의 유용성과 위험성

한국형 모델이 어떤 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우리의 개발경험 및 성과를 공유	58(74.4%)	
2)	적은 양의 원조로도 선진국과 차별화	33(42.3%)	
3)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려 원조 효과성 제고	55(70.5%)	
4)	향후 원조분업에 대비	21(26.9%)	
5)	원조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힘	21(26.9%)	
6)	기타	6(7.7%)	

한국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risk)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과거 우리의 개발경험은 현재 다른 개도국에 적용이 힘들	49(62.8%)	
2)	한국의 독특한 원조모델의 실체 및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모호	42(53.8%)	
3)	비교우위 파악이 힘들	24(30.8%)	
4)	고유의 모델을 앞세우다보면 국제흐름에 맞는 원조나 다른 공여국과 조화를 어렵게 함	45(57.7%)	
5)	가시적인 국가 홍보에 그치거나 tied aid의 가능성 높혀 원조의 질 저해	36(46.2%)	
6)	기타	7(9%)	

한국형 모델 및 비교우위의 개념

비교우위를 정의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공여국의 직접적 정치 사회 경제 개발경험	39(50%)	
2)	원조사업을 해오면서 쌓아온 Know-how와 증명된 성과	38(48.7%)	
3)	수원국과의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유사성	26(33.3%)	
4)	해당분야의 기술적 산업적 역량	48(61.5%)	
5)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원조의 규모	9(11.5%)	
6)	원조 실행 기관의 조직적 인적역량	24(30.8%)	
7)	원조의 전달 및 실시방식 (예: 직접사업을 실시, 빠르고 융통적인 사업수행)	31(39.7%)	
8)	기타	4(5.1%)	

공여국간의 원조분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우리의 섹터/주제별 비교우위를 파악,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41(52.6%)	
2) 국제적인 원조정책 조율과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47(60.3%)	
3) 원조의 가시성 약화	14(17.9%)	
4) 다른 나라와 협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적 소모 우려	32(41%)	
5) 원조분업의 개념에 대해 잘 모름	2(2.6%)	
6) 기타	9(11.5%)	

국별 프로그래밍

한국형 사업을 수원국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개별적 사업으로가 아니라 통합된 국별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매우 그렇다	35(44.9%)	
2) 그렇다	22(28.2%)	
3) 보통	9(11.5%)	
4) 아니다	5(6.4%)	
5) 매우 아니다	2(2.6%)	
6) 기타	5(6.4%)	

한국형으로 선별된 각각의 콘텐츠를 정책 및 전략지원,시스템 및 제도 구축,인적역량개발 세 요소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1) 찬성	40(51.3%)	
2) 반대	13(16.7%)	
3) 잘모르겠음	16(20.5%)	
4) 기타	8(10.3%)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라는 책자를 읽어보셨습니까?
78/370 명

응답수(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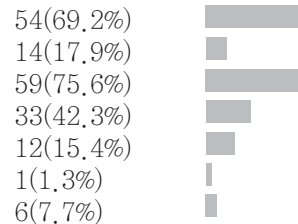
1) 예	37(47.4%)	
2) 아니오	37(47.4%)	
3) 잘 모르겠음	4(5.1%)	

수행방법

기존에 한국형 모델이 실시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음
- 2)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 3) 체계적 추진방법과 절차 부재
- 4) 인적 자원부족
- 5) 물적 자원부족
- 6) 현재 잘 실시되고 있음
-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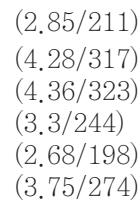
응답수(백분율) 78/370 명



한국형 원조모델에 대한 다음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일반적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5-찬성하는편
4-중립 3-반대하는편 2-무관심한편 1-잘 모르겠음)

- 1 일반국민
- 2 협력단 임직원
- 3 한국 정부
- 4 타 국내 원조기관
- 5 국외 원조기관
- 6 협력단 사업 파트너(NGO, 연구기관, 기업 등)

(평균/총계) 78/370 명



별첨 3. 관계 부처 분야별 한국형 프로그램

분야(sector)		주요 프로그램(예시)	소관부처
정부혁신 · 국정관리	정부 혁신	○ 전자민원(G4C), 업무관리(온-나라 BPS) 시스템 ○ 혁신진단 기법(정부혁신지수, G II) ○ 정보화마을	행자부
	전자 정부	○ 출입국심사시스템 ○ 특허넷시스템 ○ 전자통관(UNI-PASS)시스템 ○ 현금영수증 제도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법무부 특허청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반부패	○ 반부패 시스템 및 공직윤리 확립 시스템 ○ 기업투명성 제고방안 및 기업윤리 경영	청렴위
교육훈련·HRD		○ 초·중등·고등교육 정책 및 시스템 ○ 산업 기능·기술인력양성: 직업교육 및 훈련, 공업교육 혁신, 기능공 양성 등 ○ e-러닝 및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교육부
경제정책 · 산업육성	경제정책 · 산업육성	○ 거시경제 운영 및 금융부문 개혁 ○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및 수출진흥 정책 ○ SOC 투자정책 및 조세정책 ○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운영	재경부
	산업 육성	○ 수출산업 육성 정책 등 컨설팅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개발 ○ 화력·수력·원자력 발전 및 송배전시스템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기반 구축	산자부
농어촌개발 · 소득증대		○ 농촌소득 증대 전략(신품종 개량 등) ○ 농업외 소득 창출(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공업화)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컨설팅 ○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농림부
		○ 수산물 가공·저장 기술 및 유통시스템 구축	해수부
국토개발 · 사회 인프라 구축	국토 개발	○ 국토·지역 종합개발계획 ○ 신도시 건설 ○ 측량 및 지리정보체계 기술 ○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건교부
		○ 지적측량 및 토지등록 방법	행자부
		○ 항만개발계획 및 해양안전정보관리시스템	해수부
	사회 인프라	○ 해수 담수화 시설	건교부

보건의료 · 질병퇴치	○ 공중보건의료체계 구축 - 기생충 예방, 전염병 퇴치 등 ○ 기초보건 증진 - 보건소·모자보건센터 구축 ○ 인구 및 가족계획 ○ 의료보험제도		복지부
	○ 식수위생		환경부
과학기술 · 정보통신	과학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운영 ○ 산학연 클러스터(대덕연구단지) 설립·운영	과기부
	정보통신	○ 국가기본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국가정보화 및 통신정책 컨설팅 ○ WiBro, T-DMB 등 국내 독자 IT 기술	정통부
환경보호	○ 굴뚝원격감시시스템 ○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폐기물 매립시설설치 ○ 상·하수도 개발		환경부

<Data Source: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종합대책(안). (2007)>

별첨 4. DAC MEMBER'S PRIORITY SECTORS

Classification	Sectors/Themes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EC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Education	Education	1	1	1	1	1			1	1	1
Health	Health	1		1	1	1			1	1	1
Governance & civil society	Governance	1	1		1	1	1	1	1	1	1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Forestry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1	1		1		1	1	1	1
Food security	Food security	1		1			1		1	1	
Communications	ICT/New Tech.						1			1	
Industry	Transport					1	1				
Energy	Energy		1			1	1	1		1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1		1			1		1		
Environment	Environment	1			1		1		1	1	1
Environment	Water & Sanitation		1			1	1	1	1	1	1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1		1	1		1			
Trade	Trade									1	
Peace and Security	Peace building/Conflict prevention			1				1		1	
Cross-cutting	Human/Child rights			1						1	1
Cross-cutting	Gender(equality, rights, empowerment)				1		1		1	1	
Humanitarian aid	Humanitarian aid						1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1						1			
Other social infrastructure	Social development							1			
Other social infrastructure	Sustainable development								1		
Other social infrastructure	Social Protection									1	
Other social infrastructure	Micro-credit and income generation										1
Other social infrastructure	Culture										
Other social infrastructure	Employment and economy										
Other social infrastructure	Migration										
Other social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institutional reform										
Number of sectors	Number of sectors	7	6	7	6	9	10	8	10	14	8

<Data Source: (OECD, 2009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Sectors/Themes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 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 land	uk	us	Korea	Total
Education	1	1	1	1	1	1		1	1		1		1	1	19
Health	1	1	1	1	1	1		1	1		1		1	1	18
Governance	1				1	1	1	1	1	1	1	1	1	1	20
Rural Dev.		1	1	1				1					1	1	13
Food Security			1								1				7
ICT/New Tech.														1	3
Transport							1							1	4
Energy		1	1			1								1	9
Infrastructure			1								1			1	7
Environment	1	1	1		1	1		1	1	1	1		1	1	17
Water & Sanitation		1	1	1	1						1				12
Private sector Dev.					1				1		1				7
Trade			1			1					1	1	1		6
Peace building	1		1			1	1		1		1	1	1		11
Human/Child Rights					1	1	1								6
Gender equality	1	1				1	1		1	1					10
Humanitarian aid	1		1			1	1							1	6
Climate change	1						1			1		1		1	7
Social Dev.			1												2
Sustainable development															1
Social Protection															1
Micro-credit & Income				1											2
Culture									1						1
Employment & economy											1				1
Migration											1				1
International institutional reform												1			1
Number of sectors	8	7	12	5	7	10	7	5	8	4	12	5	7	11	8(Mean)

<Data Source: (OECD, 2009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별첨 5. COMPARISON OF PRIORITY SECTORS, GOALS AND TARGETS OF KOICA, USAID AND JICA

	Education	Health	Governance	Agriculture	ICT
KOICA 7 Sectors (환경·여성 포함)	- Expand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Provide vocational training - Improve higher education	- Provide quality health services - Improve maternal & child health -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Provide safe drinking water	- Strengthen capacity for economic development - Improve capacity for public administration & innovation - Improve legal system and social stability - Promote private sector	-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 Improve access to markets - Improve living conditions and income level	- Develop ICT human resources - Establish e-government - Expand ICT usage
USAID 8 Sectors	- Achieve equitable access to quality basic education - Increase the capacity of higher education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 Improve quality of workforce through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i>Family and Workforce Health</i> - Reduce Transmission and impact of HIV/AIDS - Prevent and control infectious diseases of major importance - Address other health vulnerabilities - Improve child survival, health, and nutrition - Improve maternal health and nutrition - Support family planning	<i>Democracy, Governance & Human Rights</i> - Strengthen the justice sector - Strengthen the legislative function & legal framework - Strengthen public sector executive function - Support democratic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 Promote and support credible elections processes - Strengthen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 Strengthen civil society - Establish and ensure media freedom and freedom of information - Promote and support anticorruption reforms - Protect human rights - Promote effective and democratic governance of the security sector <i>Operation & Management</i> -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Increase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Expand and improve access to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JICA 19 Thematic Areas	- Basic education - Higher education and technical education	- Infectious Disease Control - Maternal & child health, and reproductive health - Strengthening and restoring health systems -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health	- Assistance in the legal and judicial sector - Improving administrative functions	<i>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i> -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 Efficient water use - Desertification in agricultural areas <i>Fisheries</i> - Fishing village development - Effective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 Capacity building in the area of national IT policy formulation -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IT field - The utilization of IT in various sectors - The use of IT to improve aid efficiency

	Industry & Energy	Environment	Gender	Peace Building	Economic Development	Other Social Infrastructure
KOICA 7 Sectors (환경·여성 포함)	-Improve nat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Improv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 Improve energy infrastructure	- Strengthen capacity to control environmental pollutants - Strengthen capacity to preserve environment	- Empower women -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USAID 8 Sectors	(Expand and improve access to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 Improve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 Reduce, prevent, and mitigate pollution - Improve Access to Clean water and sanitation		<i>Conflict Mitigation</i> - Mitigate conflict and support peace - Support populations at risk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ex-combatants)	- Increase trade and investment - Improve economic policy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 Improve private sector competitiveness - Strengthe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increase access to capital - Expand and improve access to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 Increase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 Protect and increase the assets and livelihoods of the poor	<i>International Trafficking in Drugs and Persons</i> - Deter the illegal narcotics trade through integrated development intervention - Reduce Trafficking in persons
JICA 19 Thematic Areas	- Transportation - Resources and Energy - Electric power energy - Resources and energy conservation	- Natural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by citizens, biodiversity conservation, sustainable forestry management) - Environmental Management(Pollution control) - Water Resource/management	Not clarified Development of national machinery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 Incorporate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development effort		- Economic policy and finance - Preventing a recurrence of the Asian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 Public financial management - Private sector development - Trade and investment - Tourism - SM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Fostering supporting industries	-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 Assistanc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 Labor and employment - Not clarified - Formulation of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s and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plans

별첨 6. COMMON SUB-SECTORS OF KOICA, USAID AND JICA

Sector	KOICA	USAID	JICA
Education	√	√	√
Basic Education	√	√	√
Vocational & Technical Training	√	√	√
Higher Education	√	√	√
Health	√	√	√
Provide quality health services, health systems reform	√	√	√
HIV/AIDS & other infectious diseases	√	√	√
Safe drinking water	√		
Maternal and child health, nutrition, reproductive health	√	√	√
Family planning	√	√	
Environment	√	√	√
Pollution	√	√	√
Preserve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 biodiversity)	√	√	√
Water and sanitation		√	√
Governance	√	√	√*
Economic development	√	√*	
Public administration & innovation	√	√	√
Legal system & social stability	√	√	√
Private sector development			
(SME, Trade & Export)	√	√*	√*
Democratic government & Election Process		√	
Human rights		√	
Gender	√		√
Women's economic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		√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		√
Rural Development	√	√	
Agricultural productivity	√	√	√

Access to markets	√	√	
Living condition & income level	√	√	√
ICT			
ICT human resources	√		
Establish e-government	√		
Expand ICT usage	√	√	
Industry & Energy	√		
Industry & Energy	√		
Nat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	√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		
Energy Infrastructure	√	√	
Economic Prosperity and Security		√	
Strengthening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increase access to capital		√	
Reinforcement and stabilization of fiscal & financial systems			√
Drug & Crime		√	
Illegal narcotics trade		√	
Trafficking in person		√	
Conflict		√	
Conflict mitigation		√	
Support population at risk		√	
Social Security			√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
Assistanc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
Labor and employment			√
Peace building			√
South-South cooperation			√
Water resource management			√

<Data Source: (USAID, 2006), (JICA, 2008) *JICA와 USAID의 경우는 Governance 하에서가 아니라 Economic Development 하에서 지원됨.>

별첨 7. 분야별 평가 및 프로젝트 사후평가 보고서 목록

분야별	연도별	보고서 명
교육	2007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7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7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마을 학교건립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7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센터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7	코스타리카 우에따 노르페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7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7	한중 기생충 감염관리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8	교육분야 지원사업 분야별 평가 보고서
교육	2008	알제리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8	이집트 자동차 직훈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교육	2008	필리핀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국별평가	2008	과테말라 지원사업 국별평가
국별평가	2008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사업 국별평가
국별평가	2008	이라크 재건지원사업 국별평가
국별평가	2008	탄자니아 지원사업 국별평가
보건의료	2005	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 협력사업 평가
보건의료	2007	멕시코 유카탄주 의료센터 건립사업
보건의료	2007	에콰도르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보건의료	2007	중남미 보건분야 3개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보건의료	2007	한-페 Santa Rosa 천선병원 건립사업
보건의료	2008	보건의료분야 분야별 평가 보고서
보건의료	2008	케냐 및 에티오피아 식수개발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봉사단	2007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봉사단	2008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산업 및 에너지	2000	개발조사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산업 및 에너지	2009	개발조사사업형태별 평가결과 보고서
수해자평가	2007	2007년 무상·기술협력 수해자평가 보고서
수해자평가	2008	2008년 무상·기술협력 수해자평가 보고서
정보통신	2007	엘살바도르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사업 1차
정보통신	2007	엘살바도르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사업 2차
정보통신	2007	요르단 2개 정부부처 정보화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정보통신	2007	우즈베키스탄 IT훈련원 건립 지원사업

정보통신	2007	정보통신분야 4개 사업 위탁 평가 보고서
정보통신	2007	ICT 분야 협력사업 평가
정보통신	2008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정보통신	2008	미얀마 IT 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정보통신	2008	방글라데시 IT 훈련센터 건립사업
정보통신	2008	베트남 IT 입법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지역개발	2005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지역개발	2007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복구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지역개발	2007	한-필리핀 IT 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지역개발	2008	인도네시아 발작물농업 중점개발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지역개발	2008	필리핀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지역개발	2008	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초청연수	2007	국내초청 연수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초청연수	2008	국내초청 연수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행정제도	2008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행정제도	2008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배양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환경 및 여성	2007	환경분야 협력사업 평가

별첨 8. KOICA CRS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1-’07

섹터	하위섹터	원조목 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백만 원)	지원비중 (%)	Rank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40	공공행정	209,261	18.20%	1
공여국행정비용	공여국행정비용	91010	행정 비용	97,772	8.50%	2
통신	통신	22040	정보통신	87,625	7.62%	3
교육	중등교육	11330	직업훈련	70,567	6.14%	4
인도적지원	재건	73010	재건 구호	52,880	4.60%	5
보건	보건일반	12191	의료 서비스	47,567	4.14%	6
교육	교육일반	11120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43,661	3.80%	7
인도적지원	긴급구호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39,260	3.42%	8
보건	기초보건	12230	기초의료설비	34,232	2.98%	9
보건	기초보건	12220	기초보건진료	29,673	2.58%	10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29,634	2.58%	11
보건	보건일반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27,510	2.39%	12
교육	교육일반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21,034	1.83%	13
NGO지원	NGO지원	92010	공여국 내 NGO 원조	17,836	1.55%	14
교육	고등교육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6,622	1.45%	15
구분되지 않은 부문	구분되지 않은 부문	99820	개발인식 증진	14,238	1.24%	16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10	경제개발계획	13,966	1.21%	17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43040	농촌 개발	13,442	1.17%	18
에너지	에너지	23065	수력 발전소	12,754	1.11%	19
물/ 위생	물/ 위생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11,080	0.96%	20
통신	통신	22010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9,934	0.86%	21
농업	농업	31140	농업용수자원	9,162	0.80%	22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82	기술연구 개발	8,981	0.78%	23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43030	도시개발 및 관리	8,538	0.74%	24
교통/저장	교통/저장	21010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7,726	0.67%	25
에너지	에너지	23040	전력 송전/배전	7,087	0.62%	26
임업	임업	31220	임업 개발	7,087	0.62%	27
농업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6,967	0.61%	28
교육	교육일반	11100	교육일반	6,907	0.60%	29
교육	기초교육	11220	초등교육	6,690	0.58%	30
교통/저장	교통/저장	21020	도로 운송	6,262	0.54%	31

건설	건설	32310	건설정책/행정/관리	6,250	0.54%	32
교육	고등교육	11430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6,200	0.54%	33
교육	중등교육	11320	중고등학교 교육	6,097	0.53%	34
인도적지원	긴급구호	72050	긴급구호 조정 : 보호 및 안전 확보	5,913	0.51%	35
농업	농업	31161	식량 생산	5,749	0.50%	36
물/ 위생	물/ 위생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4,545	0.40%	37
에너지	에너지	230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	4,322	0.38%	38
교통/저장	교통/저장	21050	항공 운송	4,272	0.37%	39
임업	임업	31210	임업정책/행정/관리	4,217	0.37%	40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4,001	0.35%	41
농업	농업	31120	농업개발	3,855	0.34%	42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71	엔지니어링(기계공업)	3,848	0.33%	43
보건	보건일반	12182	의료 연구	3,810	0.33%	44
어업	어업	31320	어업 개발	3,734	0.32%	45
교육	기초교육	11240	취학전 교육	3,695	0.32%	46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3,686	0.32%	47
무역정책	무역정책	33110	통상정책/행정/관리	3,616	0.31%	48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10	공업정책/행정/관리	3,489	0.30%	49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3,419	0.30%	50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10	환경정책/행정/관리	3,317	0.29%	51
보건	기초보건	12250	전염병 관리	3,063	0.27%	52
무역정책	무역정책	33140	다자간 무역협상(WTO)	2,834	0.25%	53
교통/저장	교통/저장	21030	철도 운송	2,825	0.25%	54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82	환경 연구	2,797	0.24%	55
농업	농업	31163	축산	2,735	0.24%	56
구분되지 않은 부문	구분되지 않은 부문	99810	비특정 분야	2,622	0.23%	57
농업	농업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2,569	0.22%	58
금융	금융	24010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2,363	0.21%	59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30	중소기업개발	2,346	0.20%	60
농업	농업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2,278	0.20%	61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72	수송기계 산업	2,264	0.20%	62
기업	기업	25010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및 제도	2,216	0.19%	63
물/ 위생	물/ 위생	14010	수자원정책/행정관리	2,175	0.19%	64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81	환경교육/훈련	2,123	0.18%	65
보건	보건일반	12181	의료교육/훈련	2,031	0.18%	66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64	성 평등 조직 및 제도	1,901	0.17%	67
물/ 위생	물/ 위생	14015	수자원 보호	1,882	0.16%	68
무역정책	무역정책	33120	무역진흥	1,860	0.16%	69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63	섬유, 피혁 및 대체소재	1,784	0.16%	70
농업	농업	31195	축산 진료	1,769	0.15%	71
인도적지원	재난방지	74010	재난방지 및 대비	1,675	0.15%	72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20	생물권역 보호	1,556	0.14%	73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40	가내공업 및 수공업	1,515	0.13%	74
에너지	에너지	23081	에너지 교육/훈련	1,501	0.13%	75
식량지원	식량지원	52010	식량안보 프로그램/ 식량원조	1,454	0.13%	76
생식보건	생식보건	13020	생식보건	1,411	0.12%	77
관광	관광	33210	관광정책/행정/관리	1,338	0.12%	78
에너지	에너지	23064	원자력 발전소	1,334	0.12%	79
보건	기초보건	12240	영양	1,249	0.11%	80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61	선거	1,223	0.11%	81
통신	통신	22000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1,212	0.11%	82
무역정책	무역정책	33181	무역교육 및 훈련	1,151	0.10%	83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43081	다부문 교육 및 훈련	1,106	0.10%	84
물/ 위생	물/ 위생	14050	폐기물 관리/처리	1,090	0.09%	85
생식보건	생식보건	13081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1,090	0.09%	86
농업	농업	31182	농업 연구	1,002	0.09%	87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20	공공부문 재정관리	988	0.09%	88
농업	농업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987	0.09%	89
광물	광물	32210	광물/광업정책, 행정, 관리	926	0.08%	90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50	홍수방지/대책	848	0.07%	91
교통/저장	교통/저장	21040	수로 운송	817	0.07%	92
농업	농업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805	0.07%	93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3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705	0.06%	94
보건	기초보건	12281	보건 인력개발	700	0.06%	95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43082	연구/과학 기관	695	0.06%	96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611	0.05%	97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63	마약 관리	610	0.05%	98
교육	교육일반	11182	교육 연구	609	0.05%	99
광물	광물	32220	광물탐사	540	0.05%	100
물/ 위생	물/ 위생	14040	하천 개발	506	0.04%	101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20	공업개발	473	0.04%	102
교육	교육일반	11130	교사 훈련	444	0.04%	103

통신	통신	22030	라디오/텔레비전/ 인쇄 매체	433	0.04%	104
무역정책	무역정책	33130	지역 무역협정(RTAs)	413	0.04%	105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30	생물 다양성	402	0.03%	106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50	기초사회서비스 다부문 원조	396	0.03%	107
임업	임업	31282	임업 연구	386	0.03%	108
보건	기초보건	12261	보건 교육	374	0.03%	109
생식보건	생식보건	13030	가족계획	354	0.03%	110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62	통계능력 강화	314	0.03%	111
정부/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15163	자유로운 정보유통 (기자교육)	313	0.03%	112
기타사회인프라	기타사회인프라	16040	저비용 주택개발	307	0.03%	113
어업	어업	31381	어업 교육 및 훈련	284	0.02%	114
보건	기초보건	12200	기초보건	276	0.02%	115
농업	농업	31130	농지개발	268	0.02%	116
교육	기초교육	11230	비정규 교육	255	0.02%	117
통신	통신	22020	통신/전화	249	0.02%	118
안전/평화	안전/평화	15250	지뢰제거	202	0.02%	119
기업	기업	25020	민영화	197	0.02%	120
광물	광물	32262	석유 및 가스	176	0.02%	121
에너지	에너지	23063	석탄화력 발전소	154	0.01%	122
농업	농업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137	0.01%	123
어업	어업	31382	어업 연구	133	0.01%	124
물/ 위생	물/ 위생	14081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18	0.01%	125
물/ 위생	물/ 위생	14000	식수공급 및 위생	102	0.01%	126
금융	금융	24081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92	0.01%	127
에너지	에너지	23030	전력 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	86	0.01%	128
교육	고등교육	11400	고등교육	75	0.01%	129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43010	다부문 원조	72	0.01%	130
교통/저장	교통/저장	21081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67	0.01%	131
일반환경보호	일반환경보호	41000	환경보호	51	0.00%	132
임업	임업	31281	임업 교육/훈련	42	0.00%	133
농업	농업	31166	농업 지도	40	0.00%	134
에너지	에너지	23082	에너지 연구	39	0.00%	135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69	철강 산업	38	0.00%	136
금융	금융	24020	중앙금융기관	37	0.00%	137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66	시멘트/인조대리석/ 소석회	32	0.00%	138
어업	어업	31310	어업 정책/행정/관리	31	0.00%	139
보건	보건일반	12100	보건일반	31	0.00%	140
광물	광물	32263	철 금속	19	0.00%	141
안전/평화	안전/평화	15240	동원해제 및 무장해제	19	0.00%	142
생식보건	생식보건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13	0.00%	143
산업/공업	산업/공업	32162	임산물 가공	12	0.00%	144
생식보건	생식보건	13040	성병 대책 (HIV/AIDS 포함)	9	0.00%	145
				1,149,641	100.00%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별첨 9. DAC 양자 무상 ODA CRS 코드별 총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Sector Name	CRS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	Rank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20	DEBT FORGIVENESS	72,942.55	20.05%	1
VIII.1. Emergency Response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21,041.00	5.78%	2
I.1.d. Post-Secondary Education	11420	HIGHER EDUCATION	15,293.48	4.20%	3
IX.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91010	ADMINISTRATIVE COSTS	14,345.12	3.94%	4
I.3. Population Pol./ 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11,648.53	3.20%	5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10,937.78	3.01%	6
VI.1. General Budget Support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10,773.82	2.96%	7
IV.2. Other Multisector	43010	MULTISECTOR AID	10,246.60	2.82%	8
XII. UNALLOCATED/ UNSPECIFIED	99810	SECTORS NOT SPECIFIED	9,969.50	2.74%	9
VIII.1. Emergency Response	72040	EMERGENCY FOOD AID	9,813.47	2.70%	10
XI. REFUGEES IN DONOR COUNTRIES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8,599.68	2.36%	11
I.1.b. Basic Education	11220	PRIMARY EDUCATION	7,548.15	2.08%	12
VI.2. Dev. Food Aid/Food Security Ass.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6,280.56	1.73%	13
X. SUPPORT TO NGO'S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6,112.37	1.68%	14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5,756.69	1.58%	15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3	NARCOTICS CONTROL	5,639.60	1.55%	16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 PLANNING	5,480.67	1.51%	17
I.2.b. Basic Health	12220	BASIC HEALTH CARE	4,452.63	1.22%	18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4,451.14	1.22%	19

I.2.a. Health, General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4,045.63	1.11%	20
II.3. Energy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 DISTRIBUTION	3,937.30	1.08%	21
I.2.b. Basic Health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3,806.87	1.05%	22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3,723.42	1.02%	23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3,696.17	1.02%	24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3,488.43	0.96%	25
II.1. Transport & Storage	21020	ROAD TRANSPORT	3,331.72	0.92%	26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3,131.09	0.86%	27
VIII.2. Reconstruction Relief & Rehabilitation	73010	RECONSTRUCTION RELIEF	2,985.37	0.82%	28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2,774.40	0.76%	29
IV.2. Other Multisector	43040	RURAL DEVELOPMENT	2,760.05	0.76%	30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10	SOCIAL/WELFARE SERVICES	2,736.98	0.75%	31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2,735.21	0.75%	32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2,734.92	0.75%	33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30	POST–CONFLICT PEACE BUILDING (UN)	2,453.46	0.67%	34
III.1.a. Agriculture	31110	AGRICULTURAL POLICY & ADMIN. MGMT	2,179.35	0.60%	35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62	HUMAN RIGHTS	2,131.52	0.59%	36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10	WATER RESOURCES POLICY/ ADMIN. MGMT	2,111.35	0.58%	37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2	OIL AND GAS	2,031.43	0.56%	38
IV.2. Other Multisector	43081	MULTISECTOR EDUCATION/ TRAINING	1,862.41	0.51%	39
II.1. Transport & Storage	21010	TRANSPORT POLICY & ADMIN. MANAGEMENT	1,858.23	0.51%	40
II.3. Energy	23010	ENERGY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811.25	0.50%	41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10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674.86	0.46%	42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 MGMT.	1,668.54	0.46%	43
III.1.a. Agriculture	31182	AGRICULTURAL RESEARCH	1,581.62	0.43%	44
I.2.b. Basic Health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1,562.36	0.43%	45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2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1,510.02	0.42%	46
IV.2. Other Multisector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1,437.62	0.40%	47
III.1.a. Agriculture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1,417.26	0.39%	48
I.3. Population Pol./ 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1,379.32	0.38%	49
I.1.c. Secondary Education	11330	VOCATIONAL TRAINING	1,323.52	0.36%	50
XII. UNALLOCATED/ UNSPECIFIED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1,307.53	0.36%	51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63	DEBT BUY-BACK	1,224.33	0.34%	52
I.3. Population Pol./ 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30	FAMILY PLANNING	1,201.69	0.33%	53
I.3. Population Pol./ 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1,196.43	0.33%	54
I.2.a. Health, General	12182	MEDICAL RESEARCH	1,170.42	0.32%	55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 SERV.	1,159.15	0.32%	56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1,123.56	0.31%	57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50	LAND MINE CLEARANCE	1,115.85	0.31%	58
IV.2. Other Multisector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1,115.77	0.31%	59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10	FINANCIAL POLICY & ADMIN. MANAGEMENT	1,103.12	0.30%	60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30	BIO-DIVERSITY	1,086.42	0.30%	61
III.2.a. Industry	32130	SME DEVELOPMENT	1,037.76	0.29%	62
VI.3. Other Commodity Ass.	53040	IMPORT SUPPORT (COMMODITIES)	1,001.97	0.28%	63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997.13	0.27%	64
II.3. Energy	23020	POWER GENERAT./NON-RENEWABLE SOURCES	902.75	0.25%	65
III.1.a. Agriculture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898.86	0.25%	66
I.2.a. Health, General	12191	MEDICAL SERVICES	889.35	0.24%	67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61	ELECTIONS	884.54	0.24%	68
I.1.c. Secondary Education	11320	SECONDARY EDUCATION	846.71	0.23%	69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774.14	0.21%	70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64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761.57	0.21%	71
X. SUPPORT TO NGO'S	92030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724.98	0.20%	72
I.1.b. Basic Education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721.91	0.20%	73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721.68	0.20%	74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40	INFORMAL/SEMI-FORMAL FIN. INTERMED.	696.42	0.19%	75
I.1.d. Post-Secondary Education	11430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679.94	0.19%	76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669.47	0.18%	77
I.5.a. Government & Civil Society-general	15163	FREE FLOW OF INFORMATION	641.39	0.18%	78
I.2.b. Basic Health	12240	BASIC NUTRITION	632.75	0.17%	79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589.67	0.16%	80
III.1.a. Agriculture	31150	AGRICULTURAL INPUTS	561.98	0.15%	81
III.1.b. Forestry	31220	FORESTRY DEVELOPMENT	541.93	0.15%	82
II.2. Communications	22020	TELECOMMUNICATIONS	529.63	0.15%	83
III.1.a. Agriculture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528.28	0.15%	84
III.1.b. Forestry	31210	FORESTRY POLICY & ADMIN. MANAGEMENT	519.93	0.14%	85
III.1.a. Agriculture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482.41	0.13%	86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20	BIOSPHERE PROTECTION	451.34	0.12%	87

II.2. Communications	22010	COMMUNICATIONS POLICY & ADMIN. MGMT	445.43	0.12%	88
VIII.1. Emergency Response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440.24	0.12%	89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30	TEACHER TRAINING	440.15	0.12%	90
II.3. Energy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421.12	0.12%	91
II.5. Business & Other Services	25020	PRIVATISATION	416.16	0.11%	92
III.2.a. Industry	32110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413.14	0.11%	93
III.2.a. Industry	32167	ENERGY MANUFACTURING	401.13	0.11%	94
X. SUPPORT TO NGO'S	92020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387.78	0.11%	95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50	WASTE MANAGEMENT/ DISPOSAL	352.62	0.10%	96
III.2.a. Industry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331.46	0.09%	97
II.1. Transport & Storage	21040	WATER TRANSPORT	328.14	0.09%	98
III.1.c. Fishing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324.47	0.09%	99
II.1. Transport & Storage	21050	AIR TRANSPORT	323.12	0.09%	100
III.1.a. Agriculture	31161	FOOD CROP PRODUCTION	322.19	0.09%	101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320.90	0.09%	102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309.18	0.09%	103
III.1.c. Fishing	31320	FISHERY DEVELOPMENT	308.63	0.08%	104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288.17	0.08%	105
I.2.a. Health, General	12181	MEDICAL EDUCATION/ TRAINING	285.21	0.08%	106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40	RIVER DEVELOPMENT	264.32	0.07%	107
II.2. Communications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256.76	0.07%	108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20	TRADE FACILITATION	255.44	0.07%	109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253.00	0.07%	110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40	LOW-COST HOUSING	244.97	0.07%	111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242.20	0.07%	112
III.1.a. Agriculture	31181	AGRICULTURAL EDUCATION/ TRAINING	240.66	0.07%	113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TRAINING	238.36	0.07%	114
I.6. Other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 AIDS	233.65	0.06%	115
II.3. Energy	23030	POWER GENERATION/ RENEWABLE SOURCES	224.46	0.06%	116
III.1.c. Fishing	31391	FISHERY SERVICES	222.60	0.06%	117
III.1.a. Agriculture	31163	LIVESTOCK	211.99	0.06%	118
I.2.b. Basic Health	12261	HEALTH EDUCATION	208.11	0.06%	119
VI.3. Other Commodity Ass.	53030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196.54	0.05%	120
II.3. Energy	23064	NUCLEAR POWER PLANTS	191.38	0.05%	121
II.1. Transport & Storage	21030	RAIL TRANSPORT	188.67	0.05%	122
I.2.b. Basic Health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184.69	0.05%	123
III.3.b. Tourism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62.75	0.04%	124
III.1.a. Agriculture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155.34	0.04%	125
III.2.a. Industry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153.97	0.04%	126
III.2.a. Industry	32161	AGRO-INDUSTRIES	152.27	0.04%	127
III.1.a. Agriculture	31191	AGRICULTURAL SERVICES	150.72	0.04%	128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150.34	0.04%	129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40	SITE PRESERVATION	149.92	0.04%	130
III.1.a. Agriculture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148.22	0.04%	131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143.66	0.04%	132
IV.2. Other Multisector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VPT	142.32	0.04%	133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20	MONETARY INSTITUTIONS	133.67	0.04%	134
VIII.3. Disaster Prevention & Preparedness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133.47	0.04%	135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10	MINERAL/MINING POLICY & ADMIN. MGMT	132.12	0.04%	136

I.1.a. Education, Level Unspecified	11182	EDUCATIONAL RESEARCH	124.94	0.03%	137
III.1.a. Agriculture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121.16	0.03%	138
II.2. Communications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20.87	0.03%	139
III.2.a. Industry	32171	ENGINEERING	114.65	0.03%	140
III.1.a. Agriculture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109.56	0.03%	141
I.4. Water Supply & Sanitation	14081	EDUC./TRNG:WATER SUPPLY & SANITATION	108.28	0.03%	142
III.2.c. Construction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 MGMT	106.26	0.03%	143
I.2.b. Basic Health	12262	MALARIA CONTROL	101.55	0.03%	144
III.1.a. Agriculture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96.20	0.03%	145
I.1.b. Basic Education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89.92	0.02%	146
IV.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41050	FLOOD PREVENTION/ CONTROL	84.22	0.02%	147
III.1.a. Agriculture	31192	PLANT/POST-HARVEST PROT. & PEST CTRL	79.19	0.02%	148
III.1.c. Fishing	31381	FISHERY EDUCATION/ TRAINING	74.27	0.02%	149
II.3. Energy	23061	OIL-FIRED POWER PLANTS	71.47	0.02%	150
III.1.b. Forestry	31282	FORESTRY RESEARCH	70.33	0.02%	151
III.1.a. Agriculture	31164	AGRARIAN REFORM	58.34	0.02%	152
II.3. Energy	23081	ENERGY EDUCATION/ TRAINING	57.96	0.02%	153
III.2.a. Industry	32140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55.55	0.02%	154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53.92	0.01%	155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51.53	0.01%	156
I.2.b. Basic Health	12263	TUBERCULOSIS CONTROL	50.75	0.01%	157
II.3. Energy	23068	WIND POWER	44.46	0.01%	158
II.4.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4081	EDUCATION/TRNG IN BANKING & FIN. SERVICES	43.47	0.01%	159
III.1.b. Forestry	31291	FORESTRY SERVICES	42.39	0.01%	160
II.3. Energy	23067	SOLAR ENERGY	41.29	0.01%	161

III.2.a. Industry	32163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38.59	0.01%	162
III.1.c. Fishing	31382	FISHERY RESEARCH	38.54	0.01%	163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36.85	0.01%	164
II.3. Energy	23070	BIOMASS	36.81	0.01%	165
I.5.b. Conflict, Peace & Security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27.50	0.01%	166
I.3. Population Pol./ Program. & Reproductive Health	13081	PERSONNEL DVPT: POP. & REPRO HEALTH	22.28	0.01%	167
III.2.a. Industry	32162	FOREST INDUSTRIES	22.27	0.01%	168
II.1. Transport & Storage	21081	EDUC./TRNG IN TRANSPORT & STORAGE	22.11	0.01%	169
III.1.b. Forestry	31281	FORESTRY EDUCATION/ TRAINING	21.27	0.01%	170
III.2.a. Industry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19.49	0.01%	171
III.2.a. Industry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18.35	0.01%	172
III.2.a. Industry	32164	CHEMICALS	17.66	0.00%	173
II.3. Energy	23082	ENERGY RESEARCH	15.49	0.00%	174
II.3. Energy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13.19	0.00%	175
II.3. Energy	23050	GAS DISTRIBUTION	10.09	0.00%	176
III.2.a. Industry	32166	CEMENT/LIME/PLASTER	7.73	0.00%	177
II.1. Transport & Storage	21061	STORAGE	6.76	0.00%	178
III.2.a. Industry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5.73	0.00%	179
III.2.a. Industry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5.72	0.00%	180
II.3. Energy	23066	GEO THERMAL ENERGY	5.04	0.00%	181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1	COAL	4.95	0.00%	182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8	OFF-SHORE MINERALS	3.11	0.00%	183
III.1.b. Forestry	31261	FUELWOOD/CHARCOAL	2.62	0.00%	184
III.2.a. Industry	32165	FERTILIZER PLANTS	2.50	0.00%	185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6	INDUSTRIAL MINERALS	2.05	0.00%	186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5	PRECIOUS METALS/ MATERIALS	2.04	0.00%	187
II.3. Energy	23062	GAS-FIRED POWER PLANTS	1.92	0.00%	188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4	NON-FERROUS METALS	1.89	0.00%	189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7	FERTILIZER MINERALS	0.98	0.00%	190
II.3. Energy	23069	OCEAN POWER	0.38	0.00%	191
III.2.b. Mineral Resources & Mining	32263	FERROUS METALS	0.26	0.00%	192
VII. ACTION RELATING TO DEBT	60062	OTHER DEBT SWAP	0.20	0.00%	193
III.3.a. Trade Policies & Regulations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0.01	0.00%	194
			363,720.53	100.00%	

<Data Source: OECD Stats>

별첨 10. KOICA CRS 코드별 지원액과 사업형태

순 위	CRS	원조 목적 코드명	지원액 (백만 원)	프로 젝트	물자 지원	개발 조사	연수생	전 문 가	의 료 단	봉사단	협력 요원	협력 의사	NGO
98	11100	교육 일반	61,263,196										61
39	11110	교육 정책 및 행정관리	1,050,834,460	590			461						
7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9,217,007,856	6,731	1,621		661						204
71	11130	교사 훈련	322,444,199				322						
102	11182	교육 연구	40,990,228							21	20		
14	11220	초등 교육	4,656,597,015	640						3,605	360		51
82	11230	비정규 교육	153,157,990										153
25	11320	중고등학교 교육	1,933,930,356							1,427	507		
4	11330	직업 훈련	18,336,102,693	16,679			664			590	230		174
6	11420	전문대,대학, 대학원 교육	11,248,674,079	1,420			779			8,159	864	26	
20	11430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3,596,413,278				149			1,388	2,060		
104	12100	보건 일반	30,631,598										31
53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675,034,799				675						
67	12181	의료 교육/ 훈련	372,079,524	150						222			
54	12182	의료 연구	669,328,691		276		78			309		7	
10	12191	의료 서비스	6,665,083,242	4,995	41				1,538	29			61
73	12200	기초 보건	275,684,381										276
9	12220	기초 보건 진료	6,708,049,333	9	322					4,951	112	1,049	265
5	12230	기초 의료 설비	13,431,998,993	13,344									88
57	12240	영양	589,158,955							481	108		
22	12250	전염병 관리	2,216,956,953	715	938		564						
78	12261	보건 교육	237,693,141				79						158
75	12281	보건 인력 개발	270,667,094				271						

37	13020	생식 보건	1,125,841,916	569	557								
94	13030	가족 계획	85,488,712			85							
50	13081	인구및생식보 건부문교육	716,204,037		704			13					
88	14000	식수 공급 및 위생	102,105,327									102	
48	14010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828,231,746		401	427							
15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4,519,720,360	4,402		118							
30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402,717,853	850	481							71	
109	14040	하천 개발	8,928,881		9								
41	14050	폐기물 관리/ 처리	1,045,663,700	813		233							
107	14081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22,463,171									22	
18	15110	경제개발 계획	3,780,987,743		1,265	653	1,724	124	15				
81	15120	공공부문 재정관리	202,666,154			203							
51	15130	입법 및 사법 제도 개발	697,193,988		264	433							
1	15140	공공 행정	34,813,123,915	6,486	24,175	3,946	100	105					
59	15161	선거	572,381,306		466	107							
36	15164	성 평등을 위한 조직 및 제도	1,139,012,714			1,139							
91	15250	지회 제거	96,131,541		96								
40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1,049,957,980	337				713					
90	1603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97,519,341			98							
105	16040	저비용 주택 개발	30,631,598									31	
80	16050	기초사회 서비스 다부분 원조	211,273,728		140							71	
33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1,167,286,234										
95	16062	통계능력 강화	73,393,925			73							
56	21020	도로 운송	591,747,908	10	373	209							

72	21030	철도 운송	291,296,536			58	234						
68	21040	수로 운송	347,848,601			277	57	14					
24	21050	항공 운송	1,942,575,920	1,281		352	310						
44	22010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926,725,405		200	20	706						
2	22040	정보 통신	24,179,236,343	16,603			1,899	115		5,081	482		
65	230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	385,106,383				385						
93	23030	전력 생산/ 재생 가능 자원 사용	85,926,306	7			79						
23	23040	전력 송전/ 배전	2,174,383,284		25	1,639	510						
69	23064	원자력 발전소	339,738,217				340						
8	23065	수력 발전소	8,985,907,832	8,892			94						
74	23081	에너지 교육/훈련	275,183,593				70			154	51		
38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1,106,089,981			609	497						
58	25010	비즈니스 지 원 서비스 및 제도	587,566,292		278		95			215			
43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930,815,068		102	677		153					
34	31120	농업 개발	1,156,499,240	716			188			180			71
76	31130	농지 개발	268,039,420				98			170			
16	31140	농업용수 자원	4,146,639,864	3,296		488	280			59	24		
99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59,249,046							19	41		
32	31161	식량 생산	1,252,821,425	1,100			152						
70	31162	경제 작물/ 수출 작물	332,598,825				257			45	10		20
29	31163	축산	1,414,067,566	950			88			145	171		61
103	31166	농업 지도	40,082,197							40			
49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740,819,259	123						323	264		31
97	31182	농업 연구	71,473,728										71
85	31195	축산 진료	124,348,750				124						
61	31220	임업 개발	497,940,209	367			131						
106	31281	임업 교육/훈련	29,942,533							30			
46	31320	어업 개발	877,123,193				877						

86	31381	어업 교육 및 훈련	120,182,457							119	2		
110	31382	어업 연구	8,653,798					9					
87	32120	공업 개발	109,629,062				110						
63	32130	중소기업 개발	412,532,729				413						
83	32140	가내공업 및 수공업	151,251,910							151			
111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7,183,002	7									
84	32163	섬유, 피혁 및 대체 소재	137,916,058				138						
55	32171	(기계공업)	612,484,895							191	421		
19	32182	기술연구개발	3,650,059,326	2,434			212			764	240		
89	32220	광물탐사	99,003,862				99						
108	32263	철금속	19,142,610								19		
31	33110	통상정책/ 행정/관리	1,338,528,515		398	359	581						
60	33120	무역 진흥	556,039,108		468		89						
45	33140	다자간 무역 협상(WTO)	903,973,171				904						
35	33181	무역 교육 및 훈련	1,151,085,000		1,151								
62	33210	관광정책/ 행정/관리	464,093,177		138	13				313			
101	41000	환경 보호	51,052,663										51
42	41010	환경정책/ 행정/관리	966,276,690	518			448						
64	41020	생물권역 보호	395,986,858	141			255						
66	41030	생물 다양성	375,000,779	273									102
47	41050	홍수방지/ 대책	847,639,957	848									
52	41081	환경교육/ 훈련	696,215,293	498			199						
28	41082	환경 연구	1,505,083,958	926				99		398	83		
96	43010	다부문 원조	71,750,561					72					
26	43030	도시개발 및 관리	1,821,986,042	21		1,516	204	35		46			
13	43040	농촌 개발	4,835,973,906	3,339	503		522	69					403
92	43081	다부문 교육 및 훈련	88,311,216				68			20			

77	43082	연구/과학 기관	252,793,515							253			
79	52010	식량 안보 프로그램/ 식량 원조	235,850,000		236								
12	72050	긴급구호 조정 : 보호 및 안전확보	5,912,514,426		1,398								
11	73010	재건 구호	5,982,837,717	3,938	2,045								
27	74010	재난방지 및 대비	1,650,626,482	1,579		71							
3	91010	행정 비용	18,471,270,710										
100	92010	공여국 내 NGO 원조	56,157,929										56
21	99810	비특정 분야	2,586,270,778										2,586
17	99820	개발인식증진	3,830,026,439										
		합계	251,086,000,000	106,599	37,804	7,924	25,279	789	1,538	30,743	6,068	1,082	5,275

<Data Source: KOICA ODA 통계. ※ 긴급원조, 태권도,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 증진의 사업형태는 제외함>

별첨 11. 양·다자 유·무상 ODA CRS 코드별 지원 총액, 비중, 순위 '02-'07

CSR	Purpose Name	Disbursement in USD Million	Percentage (%)	Rank
60020	DEBT FORGIVENESS	72,956.79	15.61%	1
99810	SECTORS NOT SPECIFIED	30,993.01	6.63%	2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23,245.42	4.97%	3
91010	ADMINISTRATIVE COSTS	17,029.63	3.64%	4
11420	HIGHER EDUCATION	16,303.40	3.49%	5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16,253.18	3.48%	6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16,029.87	3.43%	7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13,032.25	2.79%	8
43010	MULTISECTOR AID	11,940.75	2.56%	9
72040	EMERGENCY FOOD AID	10,832.85	2.32%	10
21020	ROAD TRANSPORT	10,051.65	2.15%	11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8,605.51	1.84%	12
11220	PRIMARY EDUCATION	8,577.32	1.84%	13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7,378.05	1.58%	14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 PLANNING	6,843.13	1.46%	15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6,756.43	1.45%	16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6,141.42	1.31%	17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6,114.32	1.31%	18
16063	NARCOTICS CONTROL	5,690.17	1.22%	19
12220	BASIC HEALTH CARE	5,540.99	1.19%	20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5,298.49	1.13%	21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5,064.38	1.08%	22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DISTRIBUTION	4,893.30	1.05%	23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4,676.09	1.00%	24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4,481.09	0.96%	25
73010	RECONSTRUCTION RELIEF	4,463.16	0.96%	26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4,231.45	0.91%	27
21030	RAIL TRANSPORT	4,220.25	0.90%	28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4,009.56	0.86%	29
43040	RURAL DEVELOPMENT	3,857.63	0.83%	30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3,684.33	0.79%	31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3,513.34	0.75%	32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 SERV.	3,218.32	0.69%	33
16010	SOCIAL/WELFARE SERVICES	3,162.52	0.68%	34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3,075.94	0.66%	35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2,893.52	0.62%	36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2,858.80	0.61%	37
15162	HUMAN RIGHTS	2,685.88	0.57%	38
15230	POST-CONFLICT PEACE BUILDING (UN)	2,580.10	0.55%	39
14010	WATER RESOURCES POLICY/ADMIN. MGMT	2,529.95	0.54%	40
31110	AGRICULTURAL POLICY & ADMIN. MGMT	2,390.87	0.51%	41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2,238.98	0.48%	42
21010	TRANSPORT POLICY & ADMIN. MANAGEMENT	2,219.62	0.48%	43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2,192.79	0.47%	44
23010	ENERGY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153.58	0.46%	45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2,114.09	0.45%	46
33110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083.65	0.45%	47
32262	OIL AND GAS	2,050.70	0.44%	48

21050	AIR TRANSPORT	2,048.42	0.44%	49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1,954.55	0.42%	50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 MGMT.	1,875.32	0.40%	51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1,862.49	0.40%	52
1512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1,861.77	0.40%	53
11330	VOCATIONAL TRAINING	1,806.99	0.39%	54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1,753.07	0.38%	55
32130	SME DEVELOPMENT	1,733.81	0.37%	56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1,706.60	0.37%	57
31182	AGRICULTURAL RESEARCH	1,706.40	0.37%	58
23020	POWER GENERAT./NON-RENEWABLE SOURCES	1,449.71	0.31%	59
15161	ELECTIONS	1,446.87	0.31%	60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1,441.10	0.31%	61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1,404.17	0.30%	62
13030	FAMILY PLANNING	1,401.51	0.30%	63
12262	MALARIA CONTROL	1,378.24	0.29%	64
41030	BIO-DIVERSITY	1,267.06	0.27%	65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1,255.54	0.27%	66
15250	LAND MINE CLEARANCE	1,255.33	0.27%	67
60063	DEBT BUY-BACK	1,224.33	0.26%	68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1,212.76	0.26%	69
24010	FINANCIAL POLICY & ADMIN. MANAGEMENT	1,196.25	0.26%	70
12182	MEDICAL RESEARCH	1,175.19	0.25%	71
31220	FORESTRY DEVELOPMENT	1,154.85	0.25%	72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1,149.09	0.25%	73
12191	MEDICAL SERVICES	1,117.19	0.24%	74
53040	IMPORT SUPPORT (COMMODITIES)	1,025.05	0.22%	75

21040	WATER TRANSPORT	992.30	0.21%	76
11320	SECONDARY EDUCATION	948.76	0.20%	77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932.28	0.20%	78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863.98	0.18%	79
15164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836.97	0.18%	80
24040	INFORMAL/SEMI-FORMAL FIN. INTERMED.	803.94	0.17%	81
12240	BASIC NUTRITION	798.68	0.17%	82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791.37	0.17%	83
22020	TELECOMMUNICATIONS	791.09	0.17%	84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766.85	0.16%	85
11430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763.16	0.16%	86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737.04	0.16%	87
41020	BIOSPHERE PROTECTION	733.34	0.16%	88
92030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726.29	0.16%	89
12263	TUBERCULOSIS CONTROL	720.99	0.15%	90
15163	FREE FLOW OF INFORMATION	670.50	0.14%	91
23050	GAS DISTRIBUTION	658.36	0.14%	92
31210	FORESTRY POLICY & ADMIN. MANAGEMENT	642.51	0.14%	93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614.39	0.13%	94
31150	AGRICULTURAL INPUTS	591.07	0.13%	95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560.83	0.12%	96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554.92	0.12%	97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521.78	0.11%	98
22010	COMMUNICATIONS POLICY & ADMIN. MGMT	511.24	0.11%	99
16040	LOW-COST HOUSING	506.95	0.11%	100
14050	WASTE MANAGEMENT/DISPOSAL	502.53	0.11%	101

25020	PRIVATISATION	486.00	0.10%	102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468.36	0.10%	103
11130	TEACHER TRAINING	451.38	0.10%	104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49.54	0.10%	105
32110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432.14	0.09%	106
32167	ENERGY MANUFACTURING	428.13	0.09%	107
31161	FOOD CROP PRODUCTION	412.20	0.09%	108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397.45	0.09%	109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394.28	0.08%	110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393.46	0.08%	111
92020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391.96	0.08%	112
23068	WIND POWER	378.13	0.08%	113
14040	RIVER DEVELOPMENT	376.47	0.08%	114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372.73	0.08%	115
31320	FISHERY DEVELOPMENT	350.70	0.08%	116
53030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345.11	0.07%	117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340.68	0.07%	118
23064	NUCLEAR POWER PLANTS	329.57	0.07%	119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313.96	0.07%	120
23030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297.22	0.06%	121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TRAINING	296.16	0.06%	122
33120	TRADE FACILITATION	290.88	0.06%	123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289.92	0.06%	124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287.45	0.06%	125
32210	MINERAL/MINING POLICY & ADMIN. MGMT	270.92	0.06%	126
41040	SITE PRESERVATION	254.11	0.05%	127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253.00	0.05%	128

31181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247.69	0.05%	129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247.59	0.05%	130
12261	HEALTH EDUCATION	241.89	0.05%	131
31163	LIVESTOCK	229.41	0.05%	132
31391	FISHERY SERVICES	225.12	0.05%	133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218.75	0.05%	134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205.59	0.04%	135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204.86	0.04%	136
32161	AGRO-INDUSTRIES	203.10	0.04%	137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201.13	0.04%	138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187.29	0.04%	139
23062	GAS-FIRED POWER PLANTS	180.68	0.04%	140
31191	AGRICULTURAL SERVICES	175.80	0.04%	141
11182	EDUCATIONAL RESEARCH	155.99	0.03%	142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155.34	0.03%	143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VPT	153.95	0.03%	144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152.48	0.03%	145
23067	SOLAR ENERGY	152.06	0.03%	146
31192	PLANT/POST-HARVEST PROT. & PEST CTRL	140.63	0.03%	147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134.95	0.03%	148
24020	MONETARY INSTITUTIONS	134.63	0.03%	149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32.67	0.03%	150
14081	EDUC./TRNG:WATER SUPPLY & SANITATION	129.47	0.03%	151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129.25	0.03%	152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 MGMT	120.63	0.03%	153
32171	ENGINEERING	115.37	0.02%	154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110.88	0.02%	155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108.57	0.02%	156
31164	AGRARIAN REFORM	90.91	0.02%	157
31381	FISHERY EDUCATION/TRAINING	74.34	0.02%	158
23061	OIL-FIRED POWER PLANTS	73.43	0.02%	159
31282	FORESTRY RESEARCH	70.33	0.02%	160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60.88	0.01%	161
23081	ENERGY EDUCATION/TRAINING	58.11	0.01%	162
32140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57.92	0.01%	163
31382	FISHERY RESEARCH	57.46	0.01%	164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52.33	0.01%	165
24081	EDUCATION/TRNG IN BANKING & FIN. SERVICES	49.23	0.01%	166
31291	FORESTRY SERVICES	44.16	0.01%	167
32163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42.58	0.01%	168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40.79	0.01%	169
23070	BIOMASS	40.28	0.01%	170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39.75	0.01%	171
32264	NON-FERROUS METALS	32.68	0.01%	172
32162	FOREST INDUSTRIES	29.01	0.01%	173
32164	CHEMICALS	26.72	0.01%	174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26.13	0.01%	175
23066	GEOTHERMAL ENERGY	25.27	0.01%	176
32261	COAL	24.80	0.01%	177
21081	EDUC./TRNG IN TRANSPORT & STORAGE	24.47	0.01%	178
31281	FORESTRY EDUCATION/TRAINING	23.26	0.00%	179
13081	PERSONNEL DVPT: POP. & REPRO HEALTH	22.28	0.00%	180
23082	ENERGY RESEARCH	20.53	0.00%	181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16.20	0.00%	182

32165	FERTILIZER PLANTS	12.93	0.00%	183
32166	CEMENT/LIME/PLASTER	9.19	0.00%	184
21061	STORAGE	6.76	0.00%	185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5.72	0.00%	186
31261	FUELWOOD/CHARCOAL	4.87	0.00%	187
32268	OFF-SHORE MINERALS	3.11	0.00%	188
32265	PRECIOUS METALS/MATERIALS	2.97	0.00%	189
32266	INDUSTRIAL MINERALS	2.67	0.00%	190
32267	FERTILIZER MINERALS	1.08	0.00%	191
32263	FERROUS METALS	0.40	0.00%	192
23069	OCEAN POWER	0.38	0.00%	193
60062	OTHER DEBT SWAP	0.20	0.00%	194
		467,286.09	100.00%	

별첨 12. KOICA의 CSR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1-'07

섹터	원조목적코드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백만 원)	비율 (%)	순위
행정	15140	공공행정	34,813	13.87	1
통신	22040	정보통신	24,179	9.63	2
원조기관행정비용	91010	행정 비용	18,471	7.36	3
교육	11330	직업훈련	18,336	7.3	4
보건	12230	기초 의료 설비	13,432	5.35	5
교육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1,249	4.48	6
교육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9,217	3.67	7
에너지	23065	수력 발전소	8,986	3.58	8
보건	12220	기초 보건 진료	6,708	2.67	9
보건	12191	의료 서비스	6,665	2.65	10
인도적구호	73010	재건 구호	5,983	2.38	11
인도적구호	72050	긴급구호 조정: 보호 및 안전확보	5,913	2.35	12
다부문	43040	농촌 개발	4,836	1.93	13
교육	11220	초등교육	4,657	1.85	14
물공급 및 위생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4,520	1.8	15
농업	31140	농업용수자원	4,147	1.65	16
비특정분야	99820	개발인식 증진	3,830	1.53	17
행정	15110	경제개발계획	3,781	1.51	18
산업	32182	기술연구 개발	3,650	1.45	19
교육	11430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3,596	1.43	20
비특정분야	99810	비특정 분야	2,586	1.03	21
보건	12250	전염병 관리	2,217	0.88	22

에너지	23040	전력 송전/배전	2,174	0.87	23
운송 및 저장	21050	항공 운송	1,943	0.77	24
교육	11320	중고등학교 교육	1,934	0.77	25
다부문	43030	도시개발 및 관리	1,822	0.73	26
인도적구호	74010	재난방지 및 대비	1,651	0.66	27
환경	41082	환경 연구	1,505	0.6	28
농업	31163	축산	1,414	0.56	29
물공급 및 위생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403	0.56	30
무역정책 규제	33110	통상 정책/행정/관리	1,339	0.53	31
농업	31161	식량 생산	1,253	0.5	32
기타사회인프라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1,167	0.46	33
농업	31120	농업 개발	1,156	0.46	34
무역정책 규제	33181	무역교육 및 훈련	1,151	0.46	35
행정	15164	성 평등을 위한 조직 및 제도	1,139	0.45	36
생식보건	13020	생식보건	1,126	0.45	37
금융	24010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1,106	0.44	38
교육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051	0.42	39
기타사회인프라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1,050	0.42	40
물공급 및 위생	14050	폐기물 관리/처리	1,046	0.42	41
환경	41010	환경정책/행정/관리	966	0.38	42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931	0.37	43
통신	22010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927	0.37	44
무역정책 규제	33140	다자간 무역 협상(WTO)	904	0.36	45
어업	31320	어업 개발	877	0.35	46
환경	41050	홍수방지/대책	848	0.34	47
물공급 및 위생	14010	수자원정책/행정관리	828	0.33	48
농업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741	0.3	49
생식보건	13081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716	0.29	50

행정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697	0.28	51
환경	41081	환경교육/훈련	696	0.28	52
보건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675	0.27	53
보건	12182	의료 연구	669	0.27	54
산업	32171	엔지니어링(기계공업)	612	0.24	55
운송 및 저장	21020	도로 운송	592	0.24	56
보건	12240	영양	589	0.23	57
비즈니스	25010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및 제도	588	0.23	58
행정	15161	선거	572	0.23	59
무역정책 규제	33120	무역진흥	556	0.22	60
임업	31220	임업 개발	498	0.2	61
관광	33210	관광정책/행정/관리	464	0.18	62
산업	32130	중소기업 개발	413	0.16	63
환경	41020	생물권역 보호	396	0.16	64
에너지	230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385	0.15	65
환경	41030	생물 다양성	375	0.15	66
보건	12181	의료교육/훈련	372	0.15	67
운송 및 저장	21040	수로 운송	348	0.14	68
에너지	23064	원자력 발전소	340	0.14	69
농업	31162	경제 작물/수출 작물	333	0.13	70
교육	11130	교사 훈련	322	0.13	71
운송 및 저장	21030	철도 운송	291	0.12	72
보건	12200	기초보건	276	0.11	73
에너지	23081	에너지 교육/훈련	275	0.11	74
보건	12281	보건인력 개발	271	0.11	75
농업	31130	농지 개발	268	0.11	76
다부문	43082	연구/과학 기관	253	0.1	77
보건	12261	보건 교육	238	0.09	78

물품 및 일반재정	52010	식량 안보 프로그램/식량 원조	236	0.09	79
기타사회인프라	16050	기초사회서비스 다부문 원조	211	0.08	80
행정	15120	공공부문 재정관리	203	0.08	81
교육	11230	비정규 교육	153	0.06	82
산업	32140	가내공업 및 수공업	151	0.06	83
산업	32163	섬유, 피혁 및 대체소재	138	0.05	84
농업	31195	축산 진료	124	0.05	85
어업	31381	어업 교육 및 훈련	120	0.05	86
산업	32120	공업 개발	110	0.04	87
물공급 및 위생	14000	식수공급 및 위생	102	0.04	88
광물	32220	광물탐사	99	0.04	89
기타사회인프라	1603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98	0.04	90
평화 및 안전	15250	지뢰제거	96	0.04	91
다부문	43081	다부문 교육 및 훈련	88	0.04	92
에너지	23030	전력 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	86	0.03	93
생식보건	13030	가족계획	85	0.03	94
기타사회인프라	16062	통계능력 강화	73	0.03	95
다부문	43010	다부문 원조	72	0.03	96
농업	31182	농업 연구	71	0.03	97
교육	11100	교육일반	61	0.02	98
농업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59	0.02	99
NGO 지원	92010	공여국 내 NGO 원조	56	0.02	100
환경	41000	환경보호	51	0.02	101
교육	11182	교육 연구	41	0.02	102
농업	31166	농업 지도	40	0.02	103
보건	12100	보건일반	31	0.01	104
기타사회인프라	16040	저비용 주택개발	31	0.01	105
임업	31281	임업 교육/훈련	30	0.01	106

물공급 및 위생	14081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22	0.01	107
광물	32263	철금속	19	0.01	108
물공급 및 위생	14040	하천 개발	9	0	109
어업	31382	어업 연구	9	0	110
산업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7	0	111
	합계		251,086	100	

<Data Source: KOIDA ODA 통계>

별첨 13. DAC 양자 무상 ODA CRS 코드별 연평균 지원액, 비중, 순위 '02-'07

CRS	Purpose Name	CRS Year AVG (Million)	Percentage (%)	Rank
60020	DEBT FORGIVENESS	801.54	20.21%	1
60063	DEBT BUY-BACK	306.08	7.72%	2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163.26	4.12%	3
11420	HIGHER EDUCATION	122.44	3.09%	4
91010	ADMINISTRATIVE COSTS	120.47	3.04%	5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100.35	2.53%	6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92.34	2.33%	7
72040	EMERGENCY FOOD AID	90.37	2.28%	8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89.78	2.26%	9
43010	MULTISECTOR AID	88.88	2.24%	10
99810	SECTORS NOT SPECIFIED	87.56	2.21%	11
16063	NARCOTICS CONTROL	87.14	2.20%	12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86.33	2.18%	13
32262	OIL AND GAS	72.88	1.84%	14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66.72	1.68%	15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61.64	1.55%	16
11220	PRIMARY EDUCATION	58.87	1.48%	17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46.16	1.16%	18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 PLANNING	44.02	1.11%	19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42.93	1.08%	20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 DISTRIBUTION	41.50	1.05%	21

12220	BASIC HEALTH CARE	34.86	0.88%	22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34.77	0.88%	23
53040	IMPORT SUPPORT (COMMODITIES)	34.58	0.87%	24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31.98	0.81%	25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31.71	0.80%	26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29.67	0.75%	27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29.59	0.75%	28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29.55	0.75%	29
21020	ROAD TRANSPORT	27.77	0.70%	30
73010	RECONSTRUCTION RELIEF	25.45	0.64%	31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24.90	0.63%	32
32167	ENERGY MANUFACTURING	24.89	0.63%	33
43040	RURAL DEVELOPMENT	23.28	0.59%	34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22.58	0.57%	35
15230	POST-CONFLICT PEACE BUILDING (UN)	22.53	0.57%	36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22.07	0.56%	37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21.79	0.55%	38
16010	SOCIAL/WELFARE SERVICES	21.71	0.55%	39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21.31	0.54%	40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19.38	0.49%	41
21010	TRANSPORT POLICY & ADMIN. MANAGEMENT	18.72	0.47%	42
31110	AGRICULTURAL POLICY & ADMIN. MGMT	18.43	0.46%	43
15162	HUMAN RIGHTS	17.78	0.45%	44
23010	ENERGY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7.43	0.44%	45

14010	WATER RESOURCES POLICY/ADMIN. MGMT	16.95	0.43%	46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16.76	0.42%	47
13030	FAMILY PLANNING	16.34	0.41%	48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15.67	0.40%	49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15.38	0.39%	50
33110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5.12	0.38%	51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14.90	0.38%	52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14.47	0.36%	53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 MGMT.	14.05	0.35%	54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13.95	0.35%	55
31182	AGRICULTURAL RESEARCH	13.93	0.35%	56
1512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13.12	0.33%	57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12.74	0.32%	58
23020	POWER GENERAT./NON-RENEWABLE SOURCES	12.67	0.32%	59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12.61	0.32%	60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12.44	0.31%	61
53030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12.39	0.31%	62
12182	MEDICAL RESEARCH	11.78	0.30%	63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11.66	0.29%	64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 SERV.	11.38	0.29%	65
24010	FINANCIAL POLICY & ADMIN. MANAGEMENT	11.20	0.28%	66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11.13	0.28%	67
92030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11.01	0.28%	68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10.97	0.28%	69

11330	VOCATIONAL TRAINING	10.77	0.27%	70
15250	LAND MINE CLEARANCE	10.50	0.26%	71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10.25	0.26%	72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9.51	0.24%	73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9.50	0.24%	74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9.35	0.24%	75
41030	BIO-DIVERSITY	9.13	0.23%	76
32130	SME DEVELOPMENT	9.02	0.23%	77
25020	PRIVATISATION	7.80	0.20%	78
11320	SECONDARY EDUCATION	7.59	0.19%	79
15161	ELECTIONS	7.48	0.19%	80
12191	MEDICAL SERVICES	7.35	0.19%	81
31150	AGRICULTURAL INPUTS	7.15	0.18%	82
23064	NUCLEAR POWER PLANTS	7.04	0.18%	83
24040	INFORMAL/SEMI-FORMAL FIN. INTERMED.	6.98	0.18%	84
15164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6.56	0.17%	85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6.34	0.16%	86
31391	FISHERY SERVICES	6.19	0.16%	87
11430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6.11	0.15%	88
15163	FREE FLOW OF INFORMATION	5.88	0.15%	89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5.88	0.15%	90
22020	TELECOMMUNICATIONS	5.85	0.15%	91
12240	BASIC NUTRITION	5.83	0.15%	92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5.45	0.14%	93
31220	FORESTRY DEVELOPMENT	5.39	0.14%	94

31210	FORESTRY POLICY & ADMIN. MANAGEMENT	4.95	0.12%	95
32110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4.77	0.12%	96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4.68	0.12%	97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4.65	0.12%	98
41020	BIOSPHERE PROTECTION	4.63	0.12%	99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VPT	4.59	0.12%	100
92020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4.51	0.11%	101
22010	COMMUNICATIONS POLICY & ADMIN. MGMT	4.40	0.11%	102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4.22	0.11%	103
11130	TEACHER TRAINING	4.18	0.11%	104
21050	AIR TRANSPORT	3.94	0.10%	105
21040	WATER TRANSPORT	3.76	0.09%	106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3.65	0.09%	107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3.47	0.09%	108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3.46	0.09%	109
32171	ENGINEERING	3.43	0.09%	110
14040	RIVER DEVELOPMENT	3.33	0.08%	111
16040	LOW-COST HOUSING	3.29	0.08%	112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3.20	0.08%	113
12262	MALARIA CONTROL	3.17	0.08%	114
21030	RAIL TRANSPORT	3.10	0.08%	115
33120	TRADE FACILITATION	3.08	0.08%	116
31320	FISHERY DEVELOPMENT	3.05	0.08%	117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3.05	0.08%	118
14050	WASTE MANAGEMENT/DISPOSAL	3.04	0.08%	119

31161	FOOD CROP PRODUCTION	2.94	0.07%	120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2.69	0.07%	121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2.64	0.07%	122
23061	OIL-FIRED POWER PLANTS	2.63	0.07%	123
24020	MONETARY INSTITUTIONS	2.54	0.06%	124
32210	MINERAL/MINING POLICY & ADMIN. MGMT	2.43	0.06%	125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2.41	0.06%	126
23030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2.39	0.06%	127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2.35	0.06%	128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TRAINING	2.17	0.05%	129
31181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2.16	0.05%	130
12261	HEALTH EDUCATION	1.94	0.05%	131
31163	LIVESTOCK	1.93	0.05%	132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85	0.05%	133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1.75	0.04%	134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1.72	0.04%	135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1.67	0.04%	136
32161	AGRO-INDUSTRIES	1.61	0.04%	137
12263	TUBERCULOSIS CONTROL	1.60	0.04%	138
41040	SITE PRESERVATION	1.58	0.04%	139
31191	AGRICULTURAL SERVICES	1.54	0.04%	140
11182	EDUCATIONAL RESEARCH	1.50	0.04%	141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1.50	0.04%	142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1.47	0.04%	143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43	0.04%	144
31291	FORESTRY SERVICES	1.34	0.03%	145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1.30	0.03%	146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 MGMT	1.26	0.03%	147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1.25	0.03%	148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1.25	0.03%	149
14081	EDUC./TRNG:WATER SUPPLY & SANITATION	1.21	0.03%	150
31381	FISHERY EDUCATION/TRAINING	1.19	0.03%	151
31282	FORESTRY RESEARCH	1.02	0.03%	152
31164	AGRARIAN REFORM	1.01	0.03%	153
23068	WIND POWER	1.00	0.03%	154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0.99	0.02%	155
31192	PLANT/POST-HARVEST PROT. & PEST CTRL	0.99	0.02%	156
23070	BIOMASS	0.92	0.02%	157
23081	ENERGY EDUCATION/TRAINING	0.88	0.02%	158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0.82	0.02%	159
32140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0.69	0.02%	160
24081	EDUCATION/TRNG IN BANKING & FIN. SERVICES	0.69	0.02%	161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0.67	0.02%	162
31382	FISHERY RESEARCH	0.65	0.02%	163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0.63	0.02%	164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0.62	0.02%	165
23067	SOLAR ENERGY	0.59	0.01%	166
21081	EDUC./TRNG IN TRANSPORT & STORAGE	0.59	0.01%	167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0.58	0.01%	168
13081	PERSONNEL DVPT: POP. & REPRO HEALTH	0.50	0.01%	169

32164	CHEMICALS	0.49	0.01%	170
32163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0.48	0.01%	171
32162	FOREST INDUSTRIES	0.48	0.01%	172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0.46	0.01%	173
32261	COAL	0.46	0.01%	174
23050	GAS DISTRIBUTION	0.43	0.01%	175
32268	OFF-SHORE MINERALS	0.42	0.01%	176
32166	CEMENT/LIME/PLASTER	0.38	0.01%	177
32165	FERTILIZER PLANTS	0.38	0.01%	178
23069	OCEAN POWER	0.38	0.01%	179
31281	FORESTRY EDUCATION/TRAINING	0.37	0.01%	180
23082	ENERGY RESEARCH	0.36	0.01%	181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0.35	0.01%	182
21061	STORAGE	0.31	0.01%	183
23066	GEOTHERMAL ENERGY	0.30	0.01%	184
32264	NON-FERROUS METALS	0.26	0.01%	185
23062	GAS-FIRED POWER PLANTS	0.25	0.01%	186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0.21	0.01%	187
31261	FUELWOOD/CHARCOAL	0.17	0.00%	188
32265	PRECIOUS METALS/MATERIALS	0.15	0.00%	189
32266	INDUSTRIAL MINERALS	0.11	0.00%	190
32267	FERTILIZER MINERALS	0.11	0.00%	191
60062	OTHER DEBT SWAP	0.07	0.00%	192
32263	FERROUS METALS	0.06	0.00%	193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0.01	0.00%	194
		3965.69		194

<Data Source: OECD Stats>

별첨 14. 절대적 주 공여국 평균 지원액 '02-'07

CRS	Purpose Name	Rank No. 1 Donor	미제공 연도 제외 평균 (USD Million)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France	115.43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Germany	22.76
11130	TEACHER TRAINING	Belgium	11.18
11182	EDUCATIONAL RESEARCH	Spain	7.68
11220	PRIMARY EDUCATION	United Kingdom	245.01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Germany	23.69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Netherlands	3.27
11320	SECONDARY EDUCATION	France	65.29
11330	VOCATIONAL TRAINING	Germany	76.73
11420	HIGHER EDUCATION	France	1,021.03
11430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Germany	53.63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United Kingdom	143.86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Belgium	13.90
12182	MEDICAL RESEARCH	France	104.98
12191	MEDICAL SERVICES	Japan	49.40
12220	BASIC HEALTH CARE	United States	345.09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United States	132.75
12240	BASIC NUTRITION	United States	48.61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United States	276.07
12261	HEALTH EDUCATION	United Kingdom	9.22
12262	MALARIA CONTROL	Global Fund	–
12263	TUBERCULOSIS CONTROL	Global Fund	–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Canada	4.72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United States	203.32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UNFPA	–
13030	FAMILY PLANNING	United States	143.02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United States	1,420.15
13081	PERSONNEL DVPT: POP. & REPRO HEALTH	United States	2.57
14010	WATER RESOURCES POLICY/ADMIN. MGMT	United States	158.94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Japan	8.51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Japan	58.30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Japan	84.42
14040	RIVER DEVELOPMENT	Japan	20.42
14050	WASTE MANAGEMENT/DISPOSAL	Germany	9.07
14081	EDUC./TRNG:WATER SUPPLY & SANITATION	Germany	6.08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 PLANNING	United States	295.77
1512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United Kingdom	77.63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United States	237.47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1,081.59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United States	259.29

15161	ELECTIONS	EC	–
15162	HUMAN RIGHTS	Sweden	94.88
15163	FREE FLOW OF INFORMATION	Germany	42.22
15164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Spain	45.96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United States	100.64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United States	404.99
15230	POST-CONFLICT PEACE BUILDING (UN)	United States	109.88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United States	89.57
15250	LAND MINE CLEARANCE	United States	70.61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UNICEF	–
16010	SOCIAL/WELFARE SERVICES	United States	116.92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 MGMT.	United States	144.93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Sweden	15.24
16040	LOW-COST HOUSING	France	0.00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 SERV.	EC	–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France	131.70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United Kingdom	15.82
16063	NARCOTICS CONTROL	United States	922.07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Netherlands	22.00
21010	TRANSPORT POLICY & ADMIN. MANAGEMENT	United States	208.49
21020	ROAD TRANSPORT	Japan	199.19
21030	RAIL TRANSPORT	Japan	5.21

21040	WATER TRANSPORT	Japan	22.98
21050	AIR TRANSPORT	Japan	11.79
21061	STORAGE	Germany	0.78
21081	EDUC./TRNG IN TRANSPORT & STORAGE	Germany	1.77
22010	COMMUNICATIONS POLICY & ADMIN. MGMT	Japan	31.79
22020	TELECOMMUNICATIONS	United States	58.63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Japan	17.14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ada	9.99
23010	ENERGY POLICY AND ADMIN. MANAGEMENT	United States	146.64
23020	POWER GENERAT./NON-RENEWABLE SOURCES	United States	133.54
23030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Germany	10.57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DISTRIBUTION	United States	545.19
23050	GAS DISTRIBUTION	Japan	–
23061	OIL-FIRED POWER PLANTS	Japan	13.40
23062	GAS-FIRED POWER PLANTS	Japan	–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Japan	–
23064	NUCLEAR POWER PLANTS	United States	58.29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Japan	6.37
23066	GEOTHERMAL ENERGY	Japan	–
23067	SOLAR ENERGY	Spain	1.30
23068	WIND POWER	Germany	3.20
23069	OCEAN POWER	Italy	0.38

23070	BIOMASS	Germany	2.25
23081	ENERGY EDUCATION/TRAINING	Norway	3.12
23082	ENERGY RESEARCH	EC	–
24010	FINANCIAL POLICY & ADMIN. MANAGEMENT	United States	88.07
24020	MONETARY INSTITUTIONS	Netherlands	19.35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Germany	26.99
24040	INFORMAL/SEMI-FORMAL FIN. INTERMED.	Belgium	36.15
24081	EDUCATION/TRNG IN BANKING & FIN. SERVICES	Germany	1.45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United States	445.76
25020	PRIVATISATION	United Kingdom	40.41
31110	AGRICULTURAL POLICY & ADMIN. MGMT	United States	122.73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EC	–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Japan	19.38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Japan	22.18
31150	AGRICULTURAL INPUTS	Japan	80.07
31161	FOOD CROP PRODUCTION	EC	–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France	1.45
31163	LIVESTOCK	Japan	11.32
31164	AGRARIAN REFORM	EC	–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United States	126.74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Germany	6.60
31181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Germany	5.35

31182	AGRICULTURAL RESEARCH	France	126.15
31191	AGRICULTURAL SERVICES	United States	4.91
31192	PLANT/POST-HARVEST PROT. & PEST CTRL	EC	–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France	2.12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Belgium	4.84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Japan	6.97
31210	FORESTRY POLICY & ADMIN. MANAGEMENT	Japan	26.05
31220	FORESTRY DEVELOPMENT	Japan	12.31
31261	FUELWOOD/CHARCOAL	EC	–
31281	FORESTRY EDUCATION/TRAINING	Germany	0.89
31282	FORESTRY RESEARCH	Netherlands	3.33
31291	FORESTRY SERVICES	United Kingdom	3.67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Japan	24.94
31320	FISHERY DEVELOPMENT	Japan	15.64
31381	FISHERY EDUCATION/TRAINING	Japan	4.17
31382	FISHERY RESEARCH	EC	–
31391	FISHERY SERVICES	Japan	35.34
32110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Japan	52.07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EC	–
32130	SME DEVELOPMENT	EC	–
32140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Spain	2.72
32161	AGRO-INDUSTRIES	United States	6.77

32162	FOREST INDUSTRIES	Japan	2.29
32163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Japan	1.47
32164	CHEMICALS	Japan	2.14
32165	FERTILIZER PLANTS	Germany	0.18
32166	CEMENT/LIME/PLASTER	Greece	3.55
32167	ENERGY MANUFACTURING	United States	76.62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Germany	0.14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Japan	2.28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Greece	3.73
32171	ENGINEERING	Japan	21.66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Spain	0.36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Japan	13.16
32210	MINERAL/MINING POLICY & ADMIN. MGMT	EC	–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EC	–
32261	COAL	Germany	0.37
32262	OIL AND GAS	United States	333.50
32263	FERROUS METALS	Canada	0.21
32264	NON-FERROUS METALS	EC	–
32265	PRECIOUS METALS/MATERIALS	United States	0.27
32266	INDUSTRIAL MINERALS	Canada	0.26
32267	FERTILIZER MINERALS	United States	0.17
32268	OFF-SHORE MINERALS	Norway	0.97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 MGMT	United Kingdom	7.26
33110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United States	169.28
33120	TRADE FACILITATION	Japan	35.61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EC	–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anada	2.20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EC	–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Sweden	3.05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EC	–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United States	187.01
41020	BIOSPHERE PROTECTION	Japan	1.25
41030	BIO-DIVERSITY	United States	47.82
41040	SITE PRESERVATION	EC	–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Japan	1.64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TRAINING	France	0.19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France	53.42
43010	MULTISECTOR AID	United States	858.56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France	28.79
43040	RURAL DEVELOPMENT	EC	–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VPT	United States	23.33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Germany	71.29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France	78.79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EC	–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United States	736.51
53030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Spain	6.75
53040	IMPORT SUPPORT (COMMODITIES)	United States	183.30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France	60.51
60020	DEBT FORGIVENESS	France	2,426.43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EC	–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Japan	–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Spain	32.44
60062	OTHER DEBT SWAP	Portugal	0.07
60063	DEBT BUY-BACK	United Kingdom	887.41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United States	1,216.12
72040	EMERGENCY FOOD AID	United States	1,240.31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Netherlands	121.95
73010	RECONSTRUCTION RELIEF	EC	–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United States	26.61
91010	ADMINISTRATIVE COSTS	United States	967.00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Netherlands	661.85
92020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Switzerland	45.87
92030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Japan	129.78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France	640.56
99810	SECTORS NOT SPECIFIED	Japan	360.13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Netherlands	53.81

<Data Source: OECD Stats>

별첨 15. 상대적 주 공여국 평균 지원비중 '02-'07

CRS Code	Purpose Name	Rank No. 1 donor	%
11110	EDUCATION POLICY & ADMIN. MANAGEMENT	Finland	3.39%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Greece	2.99%
11130	TEACHER TRAINING	Finland	1.39%
11182	EDUCATIONAL RESEARCH	New Zealand	0.46%
11220	PRIMARY EDUCATION	New Zealand	6.07%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Luxembourg	1.11%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Greece	1.26%
11320	SECONDARY EDUCATION	Greece	1.90%
11330	VOCATIONAL TRAINING	Luxembourg	4.12%
11420	HIGHER EDUCATION	France	14.51%
11430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Germany	0.77%
12110	HEALTH POLICY & ADMIN. MANAGEMENT	Ireland	6.31%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Belgium	1.13%
12182	MEDICAL RESEARCH	France	1.49%
12191	MEDICAL SERVICES	Luxembourg	2.60%
12220	BASIC HEALTH CARE	Greece	6.56%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Luxembourg	2.36%
12240	BASIC NUTRITION	Canada	1.31%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Canada	3.97%
12261	HEALTH EDUCATION	Switzerland	0.33%
12262	MALARIA CONTROL	United Kingdom	0.11%
12263	TUBERCULOSIS CONTROL	Italy	0.07%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Finland	0.43%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United States	1.06%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Luxembourg	1.39%
13030	FAMILY PLANNING	United States	0.75%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United States	7.42%
13081	PERSONNEL DVPT: POP. & REPRO HEALTH	Luxembourg	0.46%
14010	WATER RESOURCES POLICY/ADMIN. MGMT	Netherlands	1.11%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Switzerland	0.34%
14020	WATER SUPPLY & SANIT. – LARGE SYST.	Luxembourg	3.08%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Denmark	2.96%
14040	RIVER DEVELOPMENT	Finland	0.50%
14050	WASTE MANAGEMENT/DISPOSAL	Denmark	0.65%
14081	EDUC./TRNG:WATER SUPPLY & SANITATION	Denmark	0.18%
15110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PLANNING	Australia	4.07%
1512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Australia	1.58%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Australia	5.92%
15140	GOVERNMENT ADMINISTRATION	Australia	8.78%
15150	STRENGTHENING CIVIL SOCIETY	Ireland	5.09%
15161	ELECTIONS	Greece	3.44%
15162	HUMAN RIGHTS	Sweden	4.56%
15163	FREE FLOW OF INFORMATION	Germany	0.61%
15164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Spain	2.34%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Portugal	1.93%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witzerland	2.45%
15230	POST-CONFLICT PEACE BUILDING (UN)	Greece	21.36%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United States	0.47%
15250	LAND MINE CLEARANCE	Norway	1.41%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Norway	0.07%
16010	SOCIAL/WELFARE SERVICES	Portugal	2.87%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 MGMT.	Spain	1.57%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Sweden	0.73%
16040	LOW-COST HOUSING	Spain	0.45%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 SERV.	Spain	1.79%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Spain	2.87%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United Kingdom	0.29%
16063	NARCOTICS CONTROL	United States	4.82%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Ireland	0.91%
21010	TRANSPORT POLICY & ADMIN. MANAGEMENT	Switzerland	1.42%
21020	ROAD TRANSPORT	Japan	5.75%
21030	RAIL TRANSPORT	Spain	4.17%
21040	WATER TRANSPORT	Japan	0.68%
21050	AIR TRANSPORT	Japan	2.35%
21061	STORAGE	Denmark	0.02%
21081	EDUC./TRNG IN TRANSPORT & STORAGE	Greece	0.04%
22010	COMMUNICATIONS POLICY & ADMIN. MGMT	Finland	0.42%
22020	TELECOMMUNICATIONS	Denmark	0.53%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Portugal	0.51%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ada	0.34%
23010	ENERGY POLICY AND ADMIN. MANAGEMENT	Norway	1.08%
23020	POWER GENERAT./NON-RENEWABLE SOURCES	United States	0.70%
23030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Denmark	1.04%
23040	ELECTRICAL TRANSMISSION/DISTRIBUTION	United States	2.85%
23050	GAS DISTRIBUTION	Japan	0.90%
23061	OIL-FIRED POWER PLANTS	Japan	0.10%
23062	GAS-FIRED POWER PLANTS	Japan	0.26%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Japan	0.77%
23064	NUCLEAR POWER PLANTS	EC	0.38%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Norway	2.82%
23066	GEOTHERMAL ENERGY	New Zealand	0.06%
23067	SOLAR ENERGY	Spain	0.53%
23068	WIND POWER	Germany	0.59%
23069	OCEAN POWER	Italy	0.00%
23070	BIOMASS	Finland	0.12%
23081	ENERGY EDUCATION/TRAINING	Norway	0.17%
23082	ENERGY RESEARCH	Sweden	0.04%
24010	FINANCIAL POLICY & ADMIN. MANAGEMENT	Switzerland	1.03%
24020	MONETARY INSTITUTIONS	New Zealand	0.73%
24030	FORMAL SECTOR FINANC. INTERMEDIARIES	Germany	3.27%
24040	INFORMAL/SEMI-FORMAL FIN. INTERMED.	Belgium	2.96%
24081	EDUCATION/TRNG IN BANKING & FIN. SERVICES	Luxembourg	0.77%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 INSTITUTIONS	United States	2.33%
25020	PRIVATISATION	United Kingdom	0.75%
31110	AGRICULTURAL POLICY & ADMIN. MGMT	Canada	1.72%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Denmark	2.34%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Switzerland	1.01%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Japan	0.78%
31150	AGRICULTURAL INPUTS	Japan	0.70%
31161	FOOD CROP PRODUCTION	Switzerland	0.70%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France	0.18%
31163	LIVESTOCK	Belgium	0.42%
31164	AGRARIAN REFORM	Australia	0.24%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United States	0.66%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Canada	0.38%
31181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New Zealand	0.31%
31182	AGRICULTURAL RESEARCH	France	1.79%

31191	AGRICULTURAL SERVICES	Denmark	0.28%
31192	PLANT/POST-HARVEST PROT. & PEST CTRL	Australia	0.23%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Denmark	0.49%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Belgium	0.39%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Greece	0.21%
31210	FORESTRY POLICY & ADMIN. MANAGEMENT	Finland	1.45%
31220	FORESTRY DEVELOPMENT	Finland	1.13%
31261	FUELWOOD/CHARCOAL	Norway	0.01%
31281	FORESTRY EDUCATION/TRAINING	Finland	0.09%
31282	FORESTRY RESEARCH	Australia	0.10%
31291	FORESTRY SERVICES	United Kingdom	0.06%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 MANAGEMENT	Norway	0.37%
31320	FISHERY DEVELOPMENT	Denmark	0.39%
31381	FISHERY EDUCATION/TRAINING	Norway	0.22%
31382	FISHERY RESEARCH	Denmark	0.09%
31391	FISHERY SERVICES	Japan	0.31%
32110	INDUSTRIAL POLICY & ADMIN. MGMT	Switzerland	0.71%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Finland	0.50%
32130	SME DEVELOPMENT	Italy	1.67%
32140	COTTAGE INDUSTRIES & HANDICRAFT	Luxembourg	0.27%
32161	AGRO-INDUSTRIES	Denmark	0.42%
32162	FOREST INDUSTRIES	Finland	0.39%
32163	TEXTILES – LEATHER & SUBSTITUTES	Denmark	0.09%
32164	CHEMICALS	Spain	0.04%
32165	FERTILIZER PLANTS	Germany	0.03%
32166	CEMENT/LIME/PLASTER	Greece	0.31%
32167	ENERGY MANUFACTURING	United States	0.33%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Belgium	0.03%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Finland	0.07%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Greece	0.32%
32171	ENGINEERING	Japan	0.16%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Spain	0.14%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 DEVELOPMENT	Sweden	0.63%
32210	MINERAL/MINING POLICY & ADMIN. MGMT	United Kingdom	0.10%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Portugal	0.06%
32261	COAL	Germany	0.05%
32262	OIL AND GAS	United States	1.74%
32263	FERROUS METALS	Canada	0.00%
32264	NON-FERROUS METALS	United States	0.00%
32265	PRECIOUS METALS/MATERIALS	Sweden	0.00%
32266	INDUSTRIAL MINERALS	Portugal	0.01%
32267	FERTILIZER MINERALS	United Kingdom	0.00%
32268	OFF-SHORE MINERALS	Norway	0.03%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 MGMT	Portugal	0.27%
33110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Switzerland	1.28%
33120	TRADE FACILITATION	Switzerland	0.37%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Netherlands	0.27%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Finland	0.17%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Canada	0.00%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Sweden	0.07%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	New Zealand	0.78%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 MGMT	Denmark	4.78%
41020	BIOSPHERE PROTECTION	Australia	0.00%
41030	BIO-DIVERSITY	Netherlands	0.00%
41040	SITE PRESERVATION	Greece	0.95%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Japan	0.63%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TRAINING	Canada	0.40%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France	0.81%
43010	MULTISECTOR AID	Switzerland	7.90%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France	1.31%
43040	RURAL DEVELOPMENT	Luxembourg	4.25%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VPT	Finland	0.27%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Australia	4.67%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Sweden	2.59%
51010	GENERAL BUDGET SUPPORT	United Kingdom	10.33%
52010	FOOD SECURITY PROGRAMMES/FOOD AID	United States	3.93%
53030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Spain	1.17%
53040	IMPORT SUPPORT (COMMODITIES)	United States	0.80%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Italy	2.35%
60020	DEBT FORGIVENESS	Austria	55.48%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Norway	0.79%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Portugal	35.25%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Spain	1.38%
60062	OTHER DEBT SWAP	Portugal	0.01%
60063	DEBT BUY-BACK	United Kingdom	2.75%
72010	EMERGENCY/DISTRESS RELIEF	Luxembourg	13.13%
72040	EMERGENCY FOOD AID	United States	6.48%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Netherlands	1.06%
73010	RECONSTRUCTION RELIEF	Ireland	4.05%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Spain	0.17%
91010	ADMINISTRATIVE COSTS	Greece	9.46%
92010	SUPPORT TO NATIONAL NGOS	Netherlands	17.20%
92020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Switzerland	2.61%

92030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New Zealand	1.21%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Sweden	7.50%
99810	SECTORS NOT SPECIFIED	Japan	26.29%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Belgium	2.29%

<Data Source: OECD Stats>

별첨 16. MDG: OFFICIAL LIST OF MDG INDICATOR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s and Targets (from the Millennium Declaration)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A: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1.1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1 (PPP) per day 1.2 Poverty gap ratio 1.3 Share of poorest quintile in national consumption
Target 1.B: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1.4 Growth rate of GDP per person employed 1.5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1.6 Proportion of employed people living below \$1 (PPP) per day 1.7 Proportion of own-account and contributing family workers in total employment
Target 1.C: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 from hunger	1.8 Prevalence of underweight children under-five years of age 1.9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minimum level of dietary energy consumption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Target 2.A: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2.1 Net enrolment ratio in primary education 2.2 Proportion of pupils starting grade 1 who reach last grade of primary 2.3 Literacy rate of 15–24 year-olds, women and men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Target 3.A: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eferably by 2005, and in all levels of education no later than 2015	3.1 Ratios of girls to boys i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3.2 Share of women in wage employment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3.3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Target 4.A: Reduce by two-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4.1 Under-five mortality rate 4.2 Infant mortality rate 4.3 Proportion of 1 year-old children immunised against measles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Target 5.A: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5.1 Maternal mortality ratio 5.2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Target 5.B: Achieve, by 2015, universal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5.3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5.4 Adolescent birth rate 5.5 Antenatal care coverage (at least one visit and at least four visits) 5.6 Unmet need for family planning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Target 6.A: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6.1 HIV prevalence among population aged 15–24 years 6.2 Condom use at last high-risk sex 6.3 Proportion of population aged 15–24 years with comprehensive correct knowledge of HIV/AIDS to school attendance of non-orphans aged 10–14 years 6.4 Ratio of school attendance of orphans to school attendance of non-orphans aged 10–14 years
Target 6.B: Achieve, by 2010, universal access to treatment for HIV/AIDS for all those who need it	6.5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dvanced HIV infection with access to antiretroviral drugs
Target 6.C: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6.6 Incidence and death rates associated with malaria 6.7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sleeping under insecticide-treated bednets 6.8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with fever who are treated with appropriate anti-malarial drugs 6.9 Incidence, prevalence and death rates associated with tuberculosis 6.10 Proportion of tuberculosis cases detected and cured under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A: Integra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country policies and programmes and reverse the loss of environmental resources Target 7.B: Reduce biodiversity loss, achieving, by 2010,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ate of loss	7.1 Proportion of land area covered by forest 7.2 CO2 emissions, total, per capita and per \$1 GDP (PPP) 7.3 Consumption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7.4 Proportion of fish stocks within safe biological limits 7.5 Proportion of total water resources used 7.6 Proportion of terrestrial and marine areas protected 7.7 Proportion of species threatened with extinction
Target 7.C: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7.8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n 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 7.9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n improved sanitation facility
Target 7.D: By 2020, to have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lives of at least 100 million slum dwellers	7.10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A: Develop further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non-discriminatory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ncludes a commitment to good governanc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arget 8.B: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es: tariff and quota free acces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orts; enhanced programme of debt relief for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and cancellation of official bilateral debt; and more generous ODA for countries committed to poverty reduction Target 8.C: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 outcome of the twenty-secon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arget 8.D: Deal comprehensively with the debt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in order to make deb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Some of the indicators listed below are monitored separately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frica,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u>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u> 8.1 Net ODA, total an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percentage of OECD/DAC donors' gross national income 8.2 Proportion of total bilateral, sector-allocable ODA of OECD/DAC donors to basic social services (basic education, primary health care, nutrition, safe water and sanitation) 8.3 Proportion of 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OECD/DAC donors that is untied 8.4 ODA received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s a proportion of their gross national incomes 8.5 ODA received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s a proportion of their gross national incomes <u>Market access</u> 8.6 Proportion of total developed country imports (by value and excluding a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dmitted free of duty 8.7 Average tariffs imposed by developed countries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textiles and clothing from developing countries 8.8 Agricultural support estimate for OECD countries as a percentage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8.9 Proportion of ODA provided to help build trade capacity <u>Debt sustainability</u> 8.10 Total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reached their HIPC decision points and number that have reached their HIPC completion points (cumulative) 8.11bt relief committed under HIPC and MDRI Initiatives 8.12 Debt service as a percentage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Target 8.E: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8.13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on a sustainable basis
Target 8.F: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make available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8.14 Telephone lines per 100 population 8.15 Cellular subscribers per 100 population 8.16 Internet users per 100 population

<Data Source: United Nations <http://mdgs.un.org/unsd/mdg/Host.aspx?Content=Indicators/OfficialList.htm>>

별첨 17.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보건	인구 및 가족 계획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인구 및 가족 계획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가족계획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인구관련 통계체계 구축 지원, 가족계획캠페인에 관한 자료, 청소년 성 관련 정책개선 지원	1-1)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증가억제 정책 1-2) - 가족계획 확산기 (1962~1975년): 가족계획사업은 급격한 인구증가가 경제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고, 동시에 피임약제 기구의 국내생산과 수입금지조치가 해제, 1963년 보건국 모자보건과에 가족계획계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가족계획사업이 시작. <제1차 5개년 계획 (1962~1966년)> 기간에는 피임보급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사·군 지역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가족계획계몽원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계몽 및 피임보급을 위한 가정방문과 집단지도를 담당. <제2차 5개년 계획 (1967~1971년)>기간에는 지역사회중심 피임보급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와 가족계획어머니회를 통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으며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조사·평가 작업을 실시할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창설. <제3차 5개년 계획 (1972~1976년)>기간에는 특수집단을 위한 선별적 사업을 전개했고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또한 교과과정에 인구교육을 포함 - 사회정책적 지원의 도입기 (1976~1990년): 1976년에 <가족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지원정책을 발표. 이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법 개정, 의료보험의 분담금어 및 피임시설 포함,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2자녀로 국한시키고 동시에 불임수용자 중 2자녀 가정에 대한 1차 무료 진료, 생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포함. 또한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이주법」을 제정. 1981년까지 활동해오던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요원을 통합하여 다목적 보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규 보건직으로 양성화. 또한 가족법을 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순위권, 상속분 등의 남녀차별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여아와 남아의 법적 차별문제를 해결하여 소자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1. 인구정책, 인구관련 행정관리 지원 및 출산 관련 건강 향상, 가족계획 캠페인 비교우위 있다고 연수사업 평가서에 나옴 2. 2003~2007년까지 세계은행 수주에서 Consulting 부문은 0%여서 142위로 최하위임. ADB에서도 컨설팅 부문은 0.3%의 수주비율로 35위에 머무르고 있음. 컨설팅은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WB), 미국, 호주, 인도, 영국,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필리핀 (ADB) 등 영어권 국가가 높은 비율 기록
			13030 (가족계획)	가족계획, 훈련센터 등 시범의료시설 건립 지원, 콘돔 등 피임도구 지원,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관리 강화사업	- 가족계획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높은 출생률의 억제에 통해 선진국형 인구 양태의 전환을 30여 년 만에 이룸.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1960년대 (1966년)의 '세 자녀 갖기 운동' (3,3,3: 세 자녀를 세 살 터울로 서른다섯 안에) 1962년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돌만 낳아서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가 있음. 1970년대부터는 '돌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딸, 아들 구별 말고 돌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슬로건이 사용됨. 지역사회중심 피임보급사업 시행함 - 그러나 1990년 이후, 출산율이 1% 이하로 저하됨에 따라 정부의 가족계획중심의 보건소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전환됨.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모자보건, 성비불균형 시정, 청소년 성문제, 인공임신중절, 여성 및 노령인력 활용 등 사회적 정책과제와 함께 가족복지 차원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 1.19명으로 나타나 이에 정부는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함	
	가족 계획 분야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13081 (인구 및 생식보건 관리자 양성, 현지 주민대상 교육·훈련)	인구 보건 정책담당자, 보건소 사업관리자 양성, 현지 주민대상 교육·훈련	- 신인구정책은 1996년 7월,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카이로 행동계획>에 따라 인구의 질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추진사업으로 신인구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저출산 유지, 사망률 개선, 인공임신중절 방지, 청소년 성행동 예방, 인구분포 균형, 출생성비 균형, 여성지위향상, AIDS 및 성병 예방, 취약계층 복지 증진, 가족보건 향상을 명시함 1-3)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성가족부, 보건사회연구원 2-1) - 내적 요인: 관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이래 지난 30년간 사업추진모형의 근간을 이룬 가족계획요원제도, 목표량 제도(인구 목표 달성을 위한 피임보급량의 할당제), 지점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목표량 중 불임기술로 달성하는 피임방법의 운영),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관련 기관의 기능별 분담의 효과성, 관리·운영상 통제 및 평가 기능의 활성화, 간편한 가족계획 서비스 이용,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큰 규모의 재정 투입, 인력 면에서 간호 조무사를 중추로 하는 임시직 요원의 투입과 자발적 지역사회 참여 유도, 비교적 풍부한 의료인력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 가족계획사업 추진시 외원(중전 보사부의 자문교섭의 창구역인 경제기획원 등과 기술교류의 효과적 운영, 효과적이고 널리 알려진 슬로건 - 외적 요인: 30년간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가족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됨. 즉, 영아 사망률의 감소, 일반사망률의 저하, 남녀 교육수준의 향상,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 형성, 여성 지위의 향상,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의 제반 여건이 호전됨 (인구보건복지협회, 여성부 《한국여성정책 관련 사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1991)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3010: 1. 3.40%: 0.01% 2. 9위/22위: 22위/23위 3. \$14.90: \$0.00 4. 미국 \$203.32 : 미국 1.06% 타 공여국과 달리 한국은 정책지원에 미흡				
13030: 1. 2.28%: 0.20% 2. 12위/22위: 17위: 23위 3. \$16.34: \$0.09 4. 미국 \$143.02: 미국 0.75%	1.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관리강화 사업: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청소년 임신방지 사업으로, 일차보건의료 개념에 입각, 수원국 여성부의 주도적 청소년 성교육 및 HIV/AIDS 예방교육 워크숍을 지원함	2007 – 에티오피아 인구와 생식보건 197, 인구와 생식보건 238: 비교우위 높음 2008 – 과테말라 인구와 생식보건 10, 인구와 생식보건 61, 인구와 생식보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가나, 이집트) 68 (참여도와 만족도 매우 높음, 내실 있는 연수)	MDG 5: Improve maternal health Target 5.B: Achieve, by 2015, universal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5.3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5.4 Adolescent birth rate 5.5 Antenatal care coverage (at least one visit and at least four visits) 5.6 Unmet need for family planning	1. 높은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주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피임을 원하지만 가족계획서비스가 부족한 여성들이 많은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에 적용
13081: 1. 0.03%: 0.63% 2. 22위/22위: 14위/23위 3. \$0.50: \$0.21 4. 미국 \$2.57: 룩셈부르크 0.36% 인적자원개발지원에는 매우 차별성이 있으나 이 부문에 한국의 지원적용 (평균 1.90%, 미국이 주 공여국)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보건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 관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 조사 및 이를 근거로 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 의료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 응급후송체계관련 법률제정	1-1) 건강보험제도, 의약보험제도 1-2) ~ 1960-1970년대: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년 12월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 적용 방식으로 사회여건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함.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그러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함. 1979년 강제인의적용의 병행과 당면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 또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 '의료보호법' (현재는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강제적용 (486개 조합설립)하고, 1979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29개 지구공동조합 설립. 그리고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0년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981년 7월부터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982년 7월부터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확대·실시.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2년 12월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다가, 1988년 7월에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에 실시함에 이어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 ~ 1990년대-현재: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그 동안 다수 보험자 방식(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 합의, 1999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142개 직장조합을 포함한 완전 통합을 이룸.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	1. 개발 조사사업 확대 발전 방안 (2006)에 따르면 세계 11번째 신약개발국이 며 원료의약품 합성 등 응용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그러나 신물질 개발이나 기초기반 기술력은 열세여서 선진국 수준의 약 70%에 미침. 전자의료기기산업, 의료정보기술 모두 선진국 50-60% 수준, 4-5년 격차. 초음파 진단기, 전자식 혈압계, 인큐베이터 등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90%. X-ray 기기, MRI, CT 등에 대한 핵심기술 및 소재개발은 선진국의 60% 이하로 많이 미흡. 제약산업은 세계 10위권, 바이오 의약품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5-68%로 3.6년의 기술격차 보유. 개발단계별 의약품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63%로 4.6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바이오 보건의료 분야별로는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7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분야인 줄기세포, 바이오 장기, 나노·바이오 기술 등의 기술수준은 60% 미만으로 평가됨. 의정보도 분야별로는 Information Retrieval와 Hospital Information System, Image Management System 등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4-69%인 반면, Knowledge representation, Decision Support, Telematics in Health Care 등의 기술수준은 60% 미만으로 평가됨. 보건의료업의 산업기반 수준은 선진국 대비 40-60% 수준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부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보건의료부문 비율 OECD 평균 8% (1995)에 미치지 못하는 6.5% (권을 등, 2005) 2.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2008)에 따르면 간호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단원선발이 쉬운 분야임. 수원국의 병원 및 대학에 파견되어 발달된 한국 보건의료기술 전수 및 파견된 주정부 보건국의 정책개발 돕거나 병원 위생관리 및 간호사들에 대한 기술 감독 맡고 있음 3. 보건의료 RCA가 1보다 작지만 비교적 경쟁력 보유
			12191 (의료서비스), 12230 (기초의료서비스)	보건의료시설 건립 및 개보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원, 응급처치 관련 의약품 및 애플리케이션 지원		
			12181 (의료교육/훈련), 12281 (보건인력개발)	지역보건의료인력양성, 응급의료인력양성, 의료기기 유지보수인력을 위한 교육 활동 강화, 보건정책 관리인력양성	2-1) 선 성장, 후 의료서비스 확충의 전략,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건의료 등 사회개발부문에 환류하는 한국 특유의 순환의 경제사회 발전 모델 구축 2-3) 보건산업은 IT나 Bio Technology와 맞물려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한 Role Model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있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2110: 1. 7.26%: 15.91% 2. 5위/22위: 4위/22위 3. \$31.98: \$4.18 4. 영국 \$143.86: 아일랜드 6.31%	1. 응글 혈액센터 지원사업 (2001~2002년): 55개 병원에 혈액공급능력이 3~10배 향상, 혈액 공급자도 10배 이상 증가하여, 1일 100~120여명, 연간 4만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음 2. 필리핀 카비테 천선병원 건립사업 (1999~2001년, 2007~2008년): 외래 환자 약 12배 증가, 입원환자 수 약 7배 증가, 병상가동률 약 4배 증가 등 연간 약 3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 페루 제1의료센터 건립사업 (1992~1993년): 연간 외래환자수가 39,000여명에 달하는 등 페루 제1 항구도시인 까야오시 지역의 주요 보건소로 발전하였으며, 중 사업의 성과를 계기로 페루 정부는 제5 의료센터 건립까지 요청함			
12191: 1. 1.73%: 27.52% 2. 15위/22위: 1위/23위 3. \$7.35: \$7.17 4. 일본 \$49.40: 룩셈부르크 2.60% 12230: 1. 2.72%: 19.80% 2. 11위/22위: 2위/23위 3. \$12.61: \$5.50 4. 미국 \$132.75: 룩셈부르크 2.36% 협력단은 병원건물 건립 및 기자재 지원을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하고 있음	4. 불가리아 장애인 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 (1997~1998년): 소피아 시내 유일한 장애인 의료복지센터로 월평균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주요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5. 베트남 득포병원 건립사업: 저소득 밀집지역인 득포지역은 물론 광남이성 인근 남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 동 지역에 양질의 의료시설지원을 통해 지방의 기초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함 6.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 보건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건물 및 내부시설물이 우수, 보건부 및 국제협력처에서는 열악한 국경지역에서의 모범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2009년 4월 1일 부로 보건부의 협조 하에 예산 및 전문인력지원을 받음으로써 최고의 보건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얻게 됨 7. 제2 한-페 의료센터 건립사업: 조립식 건물로 건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큰 무리 없이 사용 중이며 관할지역 내에서 중심 보건소로 역할을 다하고 있음	2007 - 보건의료정책 165(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강의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가 낮았음, 강의내용 개선 및 유관기관 견학 늘리는 노력 필요), 스리랑카 보건의료정책 173, 이라크 병원관리 215, 이라크 아르빌 보건정책 및 관리 228, 이라크 임상병리 기술 233 2008 - 베트남 지역의료보건 발전 17, 에티오피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25, 이라크 아르빌 병원운영 및 관리 기술 32, 이라크 중앙정부 응급의료 시스템 운영 48 (진료실습 등의 강의 요청,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실습 및 특강추가 필요), 이라크 의사 연수 57, 탄자니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90, 페루 보건의료정책 105 (만족감 보임)	MDG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E: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1. - LDC: 인적 자원 개발 - LIC: 인적&물적 자원 - MICs: 물적 자원 지원, 보건 의료사업 활성화 - Fragile State: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평등한 접근
12181: 1. 0.45%: 1.17% 2. 18위/22위: 10위/23위 3. \$2.69: \$0.50 4. 벨기에 \$13.90: 벨기에 1.13% 12281: 1. 0.32%: 0.41% 2. 20위/22위: 15위/23위 3. \$1.72: \$0.18 4. 캐나다 \$4.72: 핀란드 0.43% 보건의료전문인력양성사업은 매우 차별성 있으나 한국은 인력양성에 미흡 평균 2.50%	8. 제3 한-페 의료센터 건립사업: 하루 평균 내원 환자가 60~70명으로 월평균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 9. 제4 한-페 의료센터 건립사업: 2006년 우아누교주 소재 보건소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립병원체에 이어 두 번째 의료시설로 발전하였음, 하루 평균 환자수는 약 70~80명이며, 우리 의료인력에게 진료받기 위해 인근지역에서도 내원함, 월수입은 미화 약 1만 불로 직원 인건비,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함 10. 파나마 911 긴급 구조시스템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사업내용은 보건의료장비와 인프라지원이 대부분 이어서 수원국 보건시스템과 통합성 및 연계력이 떨어짐 (병원건립에 대부분, 보건의료장비와 인프라 지원)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보건	모자 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향상	13020 (생식 보건)	보건소 운영 및 산전 산후 관리 정책수립, 영유아 예방접종관리사업 기획 및 정책 자문, 모자보건 통합관리체계 구축, 응급분만관리체계 구축, 모자보건관련 통계 구축 지원		
				무의촌 중심 분만시설 건립, 임산부 파상풍 예방접종, 산전 검진을 위한 의료기기 분만 도구 지원, 응급 분만을 위한 의료기자재 및 한생재 등 응급의약품 지원	1-1) 1차 예방 보건에 보건소시스템을 행정구역 위주로,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매뉴얼화된 보건소 업무를 실시. 1961년 이후 보건소법 정비함 1-2) 1961년 이후 보건소법이 정비되면서 정책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설치 급증 ex)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의료기관 중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 전국평균치의 2배를 상회하여 행정구역 위주의 보건소 설치했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후원 아래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의료망 확충 및 개선 사업은 기초보건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함.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평균수명은 9.6년이나 연장되었고, 합계출산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아동사망을 감소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1. LG생명과학㈜와 독심자가 B형간염과 일본뇌염백신을 자체 개발하여 WHO Prequalification 통과, 그 중 일본뇌염은 동남아에 적용하기 힘든 점이 있으나, B형간염은 적용 가능. 그 외는 지역의료서비스의 상황과 동일
				예방접종백신 지원, 관련 시스템 전산화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기 지원, IMCI (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 지원, 영양교실, 부모 상담	1-3) 국제 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월드비전, 글로벌케어,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플랜 한국위원회, 한아름한울문동본부, 보건산업진흥원, 인구보건 복지 협회, 보건사회연구원 2-3) 하지만 이러한 행정구역에 따른 보건소 설치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상황에 알맞은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변화된 현대사회에 비추어 기존의 보건업무가 너무 협소하다는 견해도 있음. 그러나 개도국에서 필수 진료 위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개도국 사업에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도시 부근 위성도시의 취약 지구에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조선원 양성, 임산부 및 부모 대상 보건 및 영양 교육, 모자보건 인력 훈련과 기술 지원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3020: 1. 3.28%: 0.82% 2. 10위/22위: 12위: 23위 3. \$11.13: \$0.38 4. 미국 \$56.50: 룩셈부르크 1.39% 미국이 주 공여국, 선진국 보건의료 부문에서 모자보건에 중간수준으로 지원	1. 캄보디아 국립아동병원 현대화 사업 (2005-2006년): 하루 평균 400여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등 캄보디아 내 아동전문병원으로 발전함 2. 페루 파차쿠텍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2005-2007년): 월평균 2500-3000여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등 페루 국민지역인 파차쿠텍의 주요보건소로 발전 3. 중국 마을파원 모자보건소 지원사업: 시설물 건축만 지원되고 기술자문 및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사업효과가 미약함. 또한 협력의사가 면허증 문제 때문에 환자를 볼 수 없었고 의도했던 제왕절개 등을 못하는 상황. 지역선정에도 Referral system에 문제가 제기됨 4. 한-페 파차쿠텍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국민주민 7-8만 명이 진료대상이나 보건소 건립 소식을 듣고 타지역에서도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음, 하루 평균 130-170명의 환자가 이용, 응급 산모에 대한 응급 처료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어 지역의 의료보건 서비스향상에 기여함 5. 봉사단: 지역모자보건개선사업 추진, 보건소시설 개선 및 보건지도소 신축, 구급약상자 지원, 지역의 대학병원 내 위생관리 및 감독 지도를 하고 임산부 위생관리 및 무료진료 통해 지역에 위생관리 선진기법을 전수, 유아교육 등 타 분야와 협력을 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2008)에 따르면 필리핀 일로일로지역에서는 유아교육, 지역개발, 생약제조실험실 신축 등 소득증대사업과 함께 모자보건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향상 및 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기술이전의 효과 높음 6.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2007-2008년): 산로렌조 지역주민 건강상태 조사, 주민보건의료 요구도 파악, 향후 주민센터 운영 방향 제시하는 기초조사 실시, 카톨릭대학교와 연세대와 협력사업을 통해 보건 의료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보건소 신축 및 초음파기, X-ray 등 기자재 제공	2007 - 온두라스 신생아 질병 관리 203 (매우 우수)	1. MDG Gap Report (2008)에 의하면 MDG 4 (아동사망률)와 5 (모자보건) 특히 모자보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Health System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 MDG 4: Reduce child mortality Target 4.A: Reduce by two-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4.1 Under-five mortality rate 4.2 Infant mortality rate 4.3 Proportion of 1 year-old children immunised against measles MDG 5: Improve maternal health Target 5.A: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5.1 Maternal mortality ratio 5.2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1. 전세계 모성 사망 (Maternal Mortality)의 99% 이상이 최빈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빈국 위주 지원 필요 2. Maternal Health와 관련해서는 Sub Saharan Africa는 모자보건, 아동 보건 모두, South Asia는 모자보건 면에서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초 보건 중에서도 모자보건부분이 매우 취약)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보건	전염병 및 기생충 퇴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12250 (전염병 관리)	말라리아-결핵 등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위한 정책수립, 전염병 환자보고-감시 정책 수립, 전염병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살충처리 모기장, DDT 살충제 등 지원, 진단검사 기기 지원, 예방 접종 실시를 위한 진단 검사 시설 지원, 전염병 환자 보고-감시체계 관련 시스템 전산화, 예방접종백신 및 전염병 치료제 제공 전염병 관리 보건 인력양성, 현지 주민대상 예방교육	1-1) - 천연두 관리, 온병 (독감) 관리, 콜레라 예방, 일본뇌염, 결핵 예방사업 - 1954년에 제정 2006년까지 개정되어 온 「전염병 예방법」을 통해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전염원의 차단. 「결핵예방법」. 전염병 관리에 대한 법규로는 천연두, 온역, 콜레라, 일본뇌염, 결핵, 전염병 관리 등에 관한 법규가 있음. - 천연두 관리사업-결핵 관리 사업과 같은 전염병 관리 사업 실시 - 1970년: 국가 주요 관심 질환은 결핵,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의 예방이었음 - 1980-1990년: 주요 관심은 질병보다도 의료보험 도입, 의약분업과 같은 의료제도의 개선 - 2005년: 「법국민손씻기운동본부」가 발족되어, '1830 손씻기 운동'을 전개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에 대한 진단, 예방, 조사연구 및 관리,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진단 및 조사: 유전체 실용화 사업을 통한 맞춤형 치료기술 연구, 검역소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검역관리 실시. 1999년 감염질환부 신설, 2004년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 및 지방 13개 검역소를 둠. 2007년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설 1-2) 2006년 서태평양지역 최초로 홍역퇴치, 2008년 사상중증퇴치, WHO로부터 인증 받은 B형 간염관리 등의 성과 1-3)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방글라데시 개발협회, 월드비전	1. 인터넷기반 전염병 관리 시스템은 국가결핵관리에서 선도적 역할 2. 질병관리본부가 있으나 ODA 사업 참여는 적조
		기생충 관리	12250 (전염병 관리)	효과적인 기생충 감염 관리 모델 제시 검사장비 및 인력 지원으로 기생충 관리기관 능력 제고 기생충 감염 관리자 훈련 양성	1-1)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시행으로 일반주민, 매년 2회에 걸친 초중고 학생집단 검사 실시하여 1995년 읍면동 단위검사가 마무리 되어 종결(종결시 평균 감염률 1%미만). 1968년 일본 해외기술협력단(OTCA)의 기술지원과 장비를 받음. 외국 인단체(KAVA) 원조로 막대한 양의 구충제 무료 투약. 1966년 4월 기생충질환 예방법 제정. 1971년 5년마다 전국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를 조사하였고 1971년 84.3%였던 감염률이 1997년 2.3%로 현저히 저하. 이동검진버스로 오지에서 검진 실시. 기생충예방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식품류 기생충 검사 1-2) 1960년대 초 한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은 80%이상이었음. 1964년에 한국기생충 박멸협회가 창설되었고 1990년초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5%이하로 감소함 1-3) 한국건강관리 협회(전신: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2001년 WHO 총회에서 한국은 토양 매개성 기생충 박멸을 선포하여 성공적 기생충 퇴치 사례국가로 인정 받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2250: 1. 6.57%: 1.77% 2. 6위/22위: 8위: 23위 3. \$31.71: \$0.51 4. 미국 \$276.07: 캐나다 3.97% Infectious disease control은 양자무상사업의 194개 사업 중 22위로 다른 나라의 원조가 매우 많으며 원조액 평균 측면에서도 60배나 차이나. 미국이 주 공여국 성과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MDG 6에 Private Foundation을 비롯 많은 Resource가 투자되는 경향. 예를 들어 르완다 인구의 3%만이 HIV 양성을 보이나, USAID의 대 르완다원조의 2/3가 AIDS를 위해 쓰임. MDG 6 HIV/AIDS나 전염성 질환은 거대 국제자금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 차별성이 적음. 전염병 관리 내에서도 타 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HIV/AIDS보다 다른 전염병 쪽으로 특화시킬 수 있음	1. 아세안 6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사업 (2002-2006년/2500천불): 일본뇌염의 감염실태 분석, 백신공급, 백신의 효능평가 등을 지원하여 수원국들의 일본뇌염을 포함한 전염병 예방 및 퇴치에 기여, 국별 백신개발단계별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였음, 일본뇌염의 감염실태 분석과 백신 효능평가 지원에 기여함, 사업후 속조치로 '필리핀 전염병예방' 국별연수(2007년/43일간) 실시, 미얀마의 경우, B형 간염백신 공장에서 GMP를 준수한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FDA에서는 2008년 1월부터 Lot Release 관리체계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성과가 있었음, 사업대상 6개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백신 생산 및 규제관리 기술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저렴한 백신의 자체생산능력을 향상시켰음 (Source: 보건외교분야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 엘살바도르 전염병 검사관리 역량강화사업: 수원기관은 우리측이 제공한 실험장비를 전염병 검사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도 산살바도르 등 5개주 의료해택 인구의 80% 이상이 본 사업의 수혜자로 파악됨, 지원 의료기자재에 대한 유지관리는 보건부의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 파견을 통해 습득한 경험 및 노하우를 자체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신규 연구인력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등 중앙집단의학센터의 시설유지 및 활용 노력이 양호함 3. 몽골 가족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센터 건립사업 (2007-2009년/1300천불):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족 질병 바이러스의 신속진단 및 방역능력을 향상시켜 악성 가족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몽골 축산물의 대외 수출 증진에 기여 (축산분야는 몽골 전체 GDP의 36% 및 전체 수출의 30% 차지)	2007 - 필리핀 전염병 예방 252 (만족도 높음, 특수분야 강의 개설 필요)	MDG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Target 6.C: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6.6 Incidence and death rates associated with malaria 6.7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sleeping under insecticide-treated bednets 6.8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with fever who are treated with appropriate anti-malarial drugs 6.9 Incidence, prevalence and death rates associated with tuberculosis 6.10 Proportion of tuberculosis cases detected and cured under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12250: 1. 6.57%: 1.77% 2. 6위/22위: 8위: 23위 3. \$31.71: \$0.51 4. 미국 \$276.07 : 캐나다 3.97% 위와 상동. 차별성 별로 없고 미국이 주 공여국임	1. 한-중 기생충 감염관리 시범사업 (1995-1999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제협력단의 NGO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측의 기생충 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위생부 산하 예방의학과학원 (Chinese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은 기생충 감염관리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적 보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생충 감염관리 시범사업 지원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였음. 중국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국의 보건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생충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기에 수원국의 수요 및 정책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고 판단됨.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사업지역 내 간흡충 감염률이 40%에서 15%로이하로, 회충 감염률이 71%에서 35% 이하로 감소		중국에서 기생충은 높은 감염률 (1992년 통계조사: 62.6%)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과 타 사업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특히, 동 사업에서 관리대상이었던 간흡충, 회충 등 법정관리대상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성단위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음	

분야	세부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보건	식수 위생	안전한 식수 공급 확대 및 식수원 관리 효율화	14081 (식수 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4020 (식수 개발 및 위생 처리), 14030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 위생)	식수원개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수자원 통계구축 및 관련 DB 구축 관정 개발 인프라 구축, 취수 및 정수 시설 지원, 빗물 저류장치 개발, 빗물 정수 취수 지원 식수원 관리자 및 개발기술자 양성	1-2) - 관정과 정수를 거쳐 가정에 식수 보급 - 1970년대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개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하여 단일목적 수력발전댐 개발함. 이에 따라 이수 취수를 병행한 수자원을 개발하였고, 소양강 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시작. 다목적댐 개발. 수도권에 1단계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하고 한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함 - 1980년대는 지속적 안정적 용수공급 위하여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댐 및 하구둑을 건설하고자 하였고, 그 성과로 충주댐, 합천 댐, 주안 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광역용수공급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수계 별 치수사업을 시작하였고 낙동강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함 - 1990년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첫째, 지구온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홍수재해 방지 및 수변환경을 조성, 둘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하천유지요수의 증가로 전국적 용수공급의 안정화를 추진, 셋째, 수자원의 보존과 물 부족 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위한 수자원관리의 합리화 및 조사·연구를 활성화, 이러한 성과로 하천 정비 시 하천환경 관리개념과 지하수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오펜 댐, 횡성 댐, 밀양 댐 등 1억㎡ 이하의 중규모 댐을 개발. 또한 5대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중·소 수계로 확대됨 -1995년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 하면서 먹는 물 관련규정을 통합한 단율법으로 먹는 물 관리법 제정, 상수질개선 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와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 -2000년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수종합계획에 따라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수질 개선하고자 함 (건교부) 1-3) 한국수자원공사, 건교부, 환경부, 농어촌공사, 지구촌 공생회, 팀엔팀인터네셔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복지재단, 글로벌케어, 다일복지재단, 월드비전, 플랜한국위원회	수자원공사는 100건 이상의 해외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며, 무료로 수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K-water 수돗물 품질확인제 시행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4020: 1. 10.49%: 6.41% 2. 3위/22위: 5위/23위 3. \$29.55: \$0.35 4. 일본 \$58.30: 룩셈부르크 3.08% 14030: 1. 5.45%: 2.63% 2. 7위/22위: 6위/23위 3. \$22.07: \$0.52 4. 일본 \$84.42: 덴마크 2.96% 평균 8.45%로 다른 공여국이 많이 원조하는 분야. 특히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에는 차별성이 적고 평균 지원액도 40배 가량 적음. 일본이 주 공여국임	1. 한 폐 의료센터 건립사업: 안정적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주민 기초생활 개선 및 소득증대와 농축산업에 기여함,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개발 기술을 이전함 2.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킬테 아우렐로지역 식수개발사업: 지하수 관정 2개소, 상수도 공급 송수관로 (3Km), 배수지 2개소, 배수관로 (10Km), 마을 별 물탱크 5개소 등이 건설되었음, 지역 주민들이 이들 시설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식수개발 시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기 인입 공사를 실시, 주민들이 전기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면서 만족도 높음, 주민들이 공사현장 진입도로 (산악지역 5Km) 건설을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적 개발의 모델을 제시한 사례임 3. 케냐 우물개발 및 개보수 사업 (2006-2007년/37만 달러): 50개의 우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제공해 주는 사업임, 투입 비용 대비 사업 효율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지역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예방에도 기여 4. 케냐 아셀보 정수장 건립 및 수스와 상수도 개보수 사업 (2007-2009년/242만 달러): 케냐 수자원부에서는 KOICA 수자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높은 관심, 더 효과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해자 중심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하며 전문가 파견을 통한 품질관리 및 교육과 같은 사후 관리 요구 5. 탄자니아 식수개발사업: 관정개발 8개소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 빗물집수정지 및 물탱크 설치, 수도관 연결 및 이용시설설치, 지역주민이 식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시설보수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도도마 지역의 4개 마을 주민과 신앙가 바리이다 군 주민들 약 2만4천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음, 그 동안 식수난에 고통을 겪었던 주민들이 동 사업의 결과 건설된 우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 6. 엘살바도르 농촌식수공급사업: 지역주민 3400여명이 하루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음으로써 건강증진 및 위생환경 개선의 혜택을 누림, 또한 수원기관이 사업을 자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공여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홍보효과가 좋으며, 식수시스템이 보통 수십 년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함 7. 이라크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아르빌 지역의 상·하수도 종합 마스터 플랜 및 지하수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 시설 설계, 취정수장 기술진단 및 기존 설비를 개량 지원한 바, 아르빌 지역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이라크 재건 사업 중에서 성공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투입대비 성과가 우수함		1. MDG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C: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7.8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n 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 7.9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n improved sanitation facility	2. - 안전한 식수 사업: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매우 필요 - 위생 관련: 중서 부아시아와 SSA에서 매우 필요 - Central Asia에서 전반적 식수개발의 높은 필요성 보임 -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취수시설을 만들어야 함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교육	정책·제도 수립	교육 정책·제도 수립	11182 (교육 연구), 11110 (교육 정책 및 행정관리)	재원의 초등교육 우선 배치 정책 등의 공유 기초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자료와 연계된 정책 및 제도 개발	2-1) -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고등교육의 팽창이 억제된 가운데 지원을 초등교육에 집중하여 초등교육 보편화가 확보된 이후 중등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자가팽창 과정에 의해 확대함. 한국 정부는 1965년에서 1975년에 이르기까지 초등교육에 전체 교육비의 약 65%를 중등교육에 20-25%, 고등교육에는 약 10%를 각각 투입하였음.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완성 단계에 이른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초등교육에의 투자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대신 중등교육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함. 반면, 남아 및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초등교육에 20-50% 정도를 투입하였으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투자함. 인도의 경우 초등교육보다 중등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다가 점차 초등교육에의 투자 비중을 높여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취학률이 저조함. 이를 뒷받침하는 또다른 통계로서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4에 의하면 1960년에 초등교육 취학률은 94%에 달하였으나 중등과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각각 27%, 4.6%에 불과하였고 전 세계 평균 취학률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취학률은 월등히 높지만 중등과 고등교육 취학률은 월등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음, 중등학교 취학률은 1975년,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0년에 이르러서야 세계 평균 취학률을 상회함 -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완성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럽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유급제도를 적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학생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자동적으로 진급시키는 자동진급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임. 중도탈락이 낮은 또 다른 이유로 사회적 상승 이동 기제로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한 강한 믿음과 높은 교육열이 작용하였음 -또한 의무 초등교육제를 단행하고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2부제 및 3부제 4부제 교육, 야간 학교제도 도입, 사립학교의 설립 등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함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학교분포도와 같은 기초 작업 수행, 모델학교(초등, 농업, 여학교 등) 건립, 교실, 과학실, 특별활동실, 운동장,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설치, 필수 과학 실험 실습장비 및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 지원, 소규모 문자해독 교육 시설 건축 교과서 개발보급: 문자해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퇴자 및 유급자 대상의 특별과정 개설 교육과정 및 평가 기관 설립, 학업 성취도의 정기적 측정	1-2) 이러한 정책으로 한국의 초등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었음.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는 남녀가 비교적 균등하게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추었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단순 노동력을 대량으로 양성,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1970년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가운데 초등교육의 기여도가 5.17%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초등교육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이는 초등교육이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초기의 노동집약적 공업화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주고 농업종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1-3)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국제교류증진협회, 서울교육대학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국제봉사기구 2-3)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투자배분의 경험은 기초교육에의 우선적 투자가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기초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정된 교육재정을 낮은 학교급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 투자의 내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육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유아교육, 청소년지도, 기초교육; 비교우위 가지고 단원선발이 쉬운 분야 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2009에 의하면 Quality of Primary Education은 134개국 중 20위, Primary Enrollment은 134개국 중 24위. 두 부문 다 Competitive Disadvantage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 - 국제개발 NGO의 2004년 해외 봉사단 파견분야 중 교육분야가 16건 (49%)으로 가장 많고 이에 직업훈련 활동 2건 (6%)까지 합하면 교육관련이 과반을 넘어 가장 NGO들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볼 수 있음
			11130 (교사훈련)	초등교육 교사양성 교사양성기관 설립 및 현직교사 연수제도를 확립하고 교사 재훈련 실시 문자해독교육을 실시한 전문교사 양성	1-1) 시설 및 교원 확충을 위하여 1962년부터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 그리고 1967년부터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1971년에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책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됨 1-2) 과학교육과 수학교육 분야에 많은 연구와 성취를 이루어 옴 1-3)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국제교류증진협회, 우석대학교, 서울대 중등교육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동서문화개발연구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3) 학교의 건축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서, 빠른 초등교육 의무화와 남녀평등 초등교육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 정책의 경험을 살리지 못함 (교육부, 1996)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1220: 1. 23.43%: 3.64% 2. 2위/12위: 6위/14위 3. \$58.87: \$1.30 4. 영국 \$245.01: 뉴질랜드 6.07%		2007 - 교육정책 8, 이라크 아르빌 교육정책 61 (연수만족도 다소 낮은 편, 수요 높은 과정, 커리큘럼 구성에 많은 노력 필요) 2008 - 교육정책 기획 및 실행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115 (교수법 및 문화교육 강의 및 실습에 치중, 교육정책 기획분야와 균형 맞춰야), 에티오피아 교육정책 기획 및 실행 166 (직접참여기회 부여)	MDG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2.1 Net enrolment ratio in primary education 2.2 Proportion of pupils starting grade 1 who reach last grade of primary	1. - LIC: 일반 기술 분야 기능사 및 직업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의 설립을 지원 - 중소득국가: 숙련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지원 (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고기능 전문 기술자 훈련을 위한 기능대학을 설립, - 고중소득국: 학술교육과 기능교육을 병행하는 종합직업기술교육을 위한 기술대학 대한 지원
11230: 1. 2.16%: 0.14% 2. 8위/12위: 13위/14위 3. \$6.34: \$0.08 4. 독일 \$23.69: 룩셈부르크 1.11%	1. 베트남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1-2002년): 전쟁피해로 낙후된 중부지역 5개 성에 학교시설과 교육장비 제공. 학교는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각종 기자재 부족 및 학교의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MDG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Target 3.A: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eferably by 2005, and in all levels of education no later than 2015 2.1 Net enrolment ratio in primary education 2.2 Proportion of pupils starting grade 1 who reach last grade of primary 2.3 Literacy rate of 15-24 year-olds, women and men	- 중소득국: 학술교육과 기능교육을 병행하는 종합직업기술교육을 위한 기술대학 대한 지원
11240: 1. 0.30%: 2.01% 2. 12위/12위: 9위/14위 3. \$0.99: \$0.67 4. 네덜란드 \$3.27: 그리스 1.26%	2. 도미니카 농촌지역 1, 2차 초등학교 건립사업 (1992-1994년):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를 건립하여 문맹퇴치 노력. 9개교 36개 교실이 정상 운영			- Fragile State: 인도주의적 차원, 평등한 접근 - 체제전환국: 시장경제의 새로운 성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필요
11120: 1. 3.43%: 23.79% 2. 6위/12위: 2위/14위 3. \$9.50: \$6.98 4. 독일 \$22.76: 그리스 2.99%	3. 벨리즈 교육환경개선 및 재해대책 지원사업 (2006-2007년): 소형훈련원 지원하였으며 허리케인에 대비한 구호시설로도 활용			
11110: 1. 10.95%: 11.46% 2. 3위/12위: 3위/14위 3. \$29.59: \$2.65 4. 프랑스 \$115.43: 핀란드 3.39%	4. 팔레스타인 초등학교 건립사업 (1997-1998년): 정규교육 및 각종시험장소로 활용, 시설관리가 미흡하여 위생환경 재건 및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 설치 필요			
11130: 1. 1.23%: 0.24% 2. 10위/12위: 12위/14위 3. \$4.18: \$0.16 4. 벨기에 \$11.18: 핀란드 1.39%	5.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 (2007년): 교과서 발간 및 보급, 교육과정개발 자료, 인쇄출판 기자재 지원 및 기술 전수 등			
11182: 1. 0.43%: 0.33% 2. 11위/12위: 11위/14위 3. \$1.50: \$0.04 4. 스페인 \$7.68: 뉴질랜드 0.46%	기초교육 지원사업이 학교 신·개축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기여. 한국의 초등학교 보편화 정책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신업이 별로 없고 프로젝트 개발과정에서 기초교육전문가가 아니라 건축 전문가만 참여. 그러나 개도국 기초교육에서는 교실보다는 교사의 제약성 극복이 더 중요한 과제이나 교사양성을 직접적 목적의 하나로 제시한 사례는 드물	2007 - 아프리카 초등교육교사 양성과정 (한-유네스코 콜로움비) 47, 이라크 아르빌 중등학교 교사훈련 67, 이라크 아르빌 초등학교 교사훈련 82, 이라크 중등학교 교사 훈련 88, 이라크 중앙 초등학교 교사훈련 94: 만족도 높음		
평균 5.99%, 초등교육,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에는 다른 공여국이 많이 지원: 취학전교육, 교육연구 및 교사 훈련은 다른 나라들과 한국 모두 지원미약하고 이 분야 지원 시 차별화 가능		2008 - 벨리즈 초등학교 교사 양성 140(연수기관 자격 불충분), 스리랑카 초등학교 교사 역량강화 158(상동), 이라크 중앙 중등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188 (실제 중등교사들과의 만남이나 수업참관 필요), 이라크 중앙 초등학교 능력배양 200, 초등학교 교사 역량강화 (탄자니아, 잠비아) 228(연수기간 부족, 전문화 노력 필요), UNESCO 아프리카 초등교육 교사 양성 299: 역량강화기여	대부분의 공여국은 아동 및 성인을 위한 비공식 교육 분야에 덜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2. LIC: Sub-Saharan Africa에서는 최첨단 직훈 시설보다는 Informal Sector에서의 Training이 필요할 것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양질의 직업훈련제도 지원		실용적 교과과정 재편성 및 교재개발, 국가 자격법 제정에 필요한 법률 규정 수립	1-1) 기능대학법, 직업훈련 기본법: 비진학 청소년의 양성훈련으로 제조업 생산직 위주 1-2) -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산업화의 길에 들어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완료되고 <제2차 5개년 계획> 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당시 필요한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제도를 마련.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과 중등 건설 붐에 의해 기능인력의 부족 및 인건비의 급증 현상에 직면하자 기존의 「직업훈련법」을 폐지하고,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인력양성을 기업에게 강제. 이후, 「직업훈련기본법」이 기업에게 너무 가혹하고 정부 주도의 기능인력 운영에 대해 비판이 있자,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제정. 동 법에 의해 기업의 의무적 직업훈련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인간의 자율적인 평생직업능력 개발의 기반이 확립. 이후 지식 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되자, 2004년 동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령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함 (이원덕 권,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3) - 196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화 정책은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음. 이러한 판단 아래 1967년 정부는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시작.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정책과 함께 해외로의 인력송출 붐이 일자, 국내에서는 기능 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상승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에 정부는 1976년 12월 31일,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능 인력의 양성을 요하는 정부 주도의 기능 인력 운영을 폐하게 됨 - 여성직업교육: 1980년대 이래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여성직업훈련이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전체의 9.9%에 불과했고, 여전히 몇몇 직종에 한정됨. 정보처리, 공예, 서비스, 섬유, 전자 및 기계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사내 직업훈련에서는 전자, 섬유, 건축 및 산업응용분야에, 인성직업훈련에서는 정보처리와 서비스 분야에 각각 집중. 즉 미용, 도배, 컴퓨터관련 기능공을 양성했는데, 기능의 단계가 낮았고, 질적으로 미흡. 영세여성들은 국립 직업보도소, 여성회관, 부녀복지관을 통해 무료기술교육을 받음. 199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계획이 수립됨 - 1991년에는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여성여자직업훈련원'을 개원하고 여성인력양성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여자 공고, 여대의 공과대학을 신설. 1993년부터 시작 2006년까지 전적으로 50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 그러나 이들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은 여전히 훈련기간이 짧은 단순 서비스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님.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과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할 상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구체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여성직접 직종을 신설하였고, 우수한 여성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여성여자기능대학과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마련. 1998년에 여성의 정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자재의 지원을 동반한 대대적인 정보화 교육이 실시됨 - 한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훈련 역시 제조업 중심 훈련에서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연차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행하는 것으로,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했던 제도를 점차 실업자의 재훈련 추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그 중심을 전환시킴 - 한국폴리텍대학 (과거 정수한독직업훈련원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취업을 원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기능사)을 양성함. 또한,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과 신 산업분야의 다기능 기술자·기능장 등 중간기술 인력을 양성.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수행. 이 외에도 향상훈련, 훈련정보 개발·보급, 기업에 대한 훈련상담·기술지도 기타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다양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 서울정수기능대학: 1973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정수직업훈련원이 모태. 당시 정수직업훈련원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을 정예 기능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원 후 공공직업훈련원으로 변경되기 이전 시기까지 훈련 연한은 주간생 1년, 야간생 1년 6개월. 훈련과정은 기계계열로는 기계조립공과·선반공과·밀링공과, 용접·배관계열로는 용접공과·배관공과, 그리고 중기계열로는 중기계정비공과, 건축목공계열로 건축목공과, 전기계열로 전자공과·전기공과, 공예계열로 공예공과·지수공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과에서는 주·야간 별로 25~40명씩을 훈련. 전원 기술사 생활에 입학금·수업료·실습비·기숙비 등이 일체 무료였으며, 실기 위주의 단기교육으로 2급 기능사를 양성. 1977년 6월 제1법원에서 공공직업훈련원으로 변경된 후, 1981년 1급 기능사 훈련과정을 개설했고, 1982년 3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991.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개칭)에 통합되면서 12월 서울지역 기능개발센터를 개설하여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촉진사업을 벌임. 1988년 8월에 통상과정, 1990년 9월에 일반 야간 6개월 과정을 개설. 훈련과정에서는 공예계열에 도자기 공과가 추가되었으며, 중기계정비공과가 차량공과로, 건축목공과는 목재가공과로 변경·운영됨. 1996년 1월 정수기능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전문대학이자 직업교육을 병설·운영하는 대학이 됨. 2005년 12월 직업전문학교 통합령이 결정되어, 2006년 3월 전국에서 공공직업훈련을 전담해 온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43개 기관을 7개 권역별 지역거점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대학과, 4개 특성화(여자·바이오·항공·섬유패션)대학, 19개 지역 캠퍼스로 통합하여 교명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바꿈 - 1970년대 직업교육 관련 정책이 시행된 후 기능인력의 공급이 약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대	1. 자동차 정비, 용접 컴퓨터, 기계 등 분야에 비교우위. 선진국에서는 민간주도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부, 산업관리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관과 체계가 아직 남아 있어 비슷한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개도국에 대응할 것임. 또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발전으로의 응용형 협과 노하움을 보유하고 있음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진로 지도		국가별 산업발전단계, 기술력 수준 등을 고려한 중점 양성 분야 선정 직무표준·분석을 실시,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 지원, 자격검정시험 및 관리기관 설립을 통한 수준별·종류별 자격의 체계적 관리 학생들의 접근성 및 산업체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원 건립 및 시설 확충, 직종별 운영기본계획 (공과별 정원, 교사, 교과과정 편성, 예산운영 등) 수립	2-1) 정형화된 직종 모델과 풍부한 전문가,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발전으로의 응용 경험과 노하우 보유, 교수법 훈련원 운영관리법 등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능인력양성에 Role Model이 될 수 있음 2-3) 지원전략이 한국식의 제조업 중심 산업인력의 단기간 육성에 두기 보다는 수월원의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공급하도록 해야 함	
		기능인력양성	11330 (직업훈련)	기자재 지원, 훈련기관별 진로지도시스템 도입하여 진로지도 실시, 인력개발센터 (Career Center) 운영 노동시장 정보 및 관련 통계 관리하는 고용정보 System 개발 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 및 훈련, 현직교사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 기술이전 연구소, 장비회, 정해복지, 월드비전,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한미유한물운동본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1) 정형화된 직종 모델과 풍부한 전문가,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발전으로의 응용 경험과 노하우 보유, 교수법 훈련원 운영관리법 등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능인력양성에 Role Model이 될 수 있음 2-3) 지원전략이 한국식의 제조업 중심 산업인력의 단기간 육성에 두기 보다는 수월원의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공급하도록 해야 함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 별 적용가능성
11330: 1. 4.94%: 38.45% 2. 4위/12위: 1 위/14위 3. \$10.77: \$10.71 4. 독일 \$76.73: 룩셈부르크 4.12% 독일과 비교하여 국별 경제발전전 략과 노동시장에 기반한 직종이 제공되지 못하고 교과과정 특화나 학비 훈련기관 면에서 부족.	1. 중국 직업훈련협력사업 (1997-2000년): 중국의 기능검정제도 구축 및 기능검정 총괄기관으로 발전 2. 카자흐스탄 자격검정확인시스템 구축사업 (2006-2008년/100만 달러): 카자흐스탄의 자격검정센터는 우리 전문가의 자문, 초청연구경험, 지원기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자격검정을 시행 중에 있음. 국가자격검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양질의 기술인력을 산업현장에 배출하는 데 기여함. 2007년 자격검정을 실시, 850명의 공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함. 특히, 현지 건설시장의 활황에 부응하여 검정원 건설분야 인력을 공급함 3. 캄보디아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사업 (2007-2009년/120만 달러): 진행 중. 국가검정기관 설립, 7개 분야에 전문가를 파견해 검정제도 마스터 플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 실무자 국내 초청해 연수 실시. 전산 및 사무 장비 제공하여 기술자격 검정제도의 국가적 표준 구축 4. 스리랑카 개발대학교 자동차실습실 지원사업 (1996-1998년/100만 달러): 지원기자재와 시설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음. 동 사업 완료 후, 두 차례 (99년, 01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자동차 산업 분야의 신기술 전수가 필요함 5. 한-필리핀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3-2005년/500만 달러): 취업률은 59%이며, 미취업자 중 일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음. 대통령장학금 수혜기관으로 입학경쟁률이 10대 1로 높음. 정부 지원금 확대,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한 수익이 훈련에 재투자되고 있음. 다바오 지역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됨 6. 이집트 소브라 자동차정비센터 지원사업 (1996-1999년/150만 달러): 학생 외에 관련 기업체의 요청으로 2-3개월의 특별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라크, 리비아, 탄자니아 등의 주변국 엔지니어를 위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음 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2004-2006년/180만 달러): 이집트는 96-98년 간 지원한 바 있는 소브라 자동차 정비직업훈련원의 성과가 우수함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동 사업을 통해 건설된 직종원이 알렉산드리아지역의 자동차 정비 훈련 핵심센터로서 잘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이 자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Financial Sustainability) 높임 8. 이집트 기가지지 엘바하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2006-2008년/200만 달러):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수익모델사업을 구축 9. 튀니지 국립직업훈련센터 자동차실 (AMIRA) 지원사업 (1994-1995년/40만 달러): 1995년 지원 이후 2003년까지 동 센터 내에서 7년 동안 기 지원된 기자재를 100% 활용하여 연간 100여명의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함 (현재까지 500여명). 다만 2003년부터 부츠세드리아 수치고 동 교육자 출신의 기술력이 향상, 교육자 양성에 현재 동 감사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출신의 감사들 또한 우리 기자재를 사용,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 그러나 기 지원된 IT 장비가 10여 년이 넘어, 현재 구축하려는 통합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음 10. 파테말라 기술교육 훈련원 건립사업 (2002-2004년/120만 달러): 현재 자동차정비 공과에 만 매년 160여명을 교육하는 등 훈련원 전체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훈련생을 육성하고 있음. 파테말라 동부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INTECAP은 동 사업을 직업훈련원 설립 모범사례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 11.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2007-2008년/230만 달러): 실습 70%, 이론 30%의 비율로 학과목을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임. 수요인원 중 기계, 산업설비, 자동차정비, 전기과는 약 95%이상 취업되었으나, 전자와 정보처리과는 40% 정도 취업됨. 평균 취업률 85%로 취업업체 분포는 호치민과 하노이 및 하이퐁의 공업단지와 응에안 성 소재 산업체에 취업 하였으며, 일부는 한국 산업 연수생, 대만, 중국, 호주 등으로 송출되기도 함. 성 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 입학생에 여성을 포함하고 건축 시 여성용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함 12. 몽골 기술대학 지원사업 (2000-2002년): 취업률이 80%로 높으며, 최신시설을 갖춘 기술교육 훈련기관으로 알려져 여타 직업훈련기관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함 13.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3-2007년/800만 달러): 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기관. 유엔에서 직업훈련 기관 및 전후 복구와 관련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후 복구 지원 기관으로 지정됨 14. 라오스직업훈련원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2002-2005년, 2007-2008년): 연간 500여명의 졸업생 배출, 취업률이 60~70%로 타 직업훈련학교(50%)보다 높음, 졸업장 발행이 가능한 학교로 승격시킬 예정/ 몽골 기술대학 지원사업(2000-2002년): 취업률이 80%로 높으며, 최신시설을 갖춘 기술교육 훈련기관으로 알려져 여타 직업훈련기관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함 정책, 인프라, 인적역량강화 모든 부문에 걸쳐 성과가 있음	2007 - 라오스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2차 23, 스리랑카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30, 109 (연수기관 전문성 상대적으로 취약) 2008 - 라오스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124, 이라크 중앙 직업훈련정책 및 시스템 운영 195, 자격검정 전문가 능력 향상 206 (원활한 진행 및 참여도 매우 활발),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운영 213, 짐바브웨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221, 케냐 직업훈련 정책 및 제도 과정 236, 파키스탄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242: 높은 만족도 베트남 국별 연수사업 (2005년 8월 13일-9월 3일/4만 달러): 하노이 기술직업전문대학의 전기 기계부문 교사들 초청한 경우, 연수과정 중 습득한 특수기술 (Computer Numerical Control)을 높이 평가하여 훈련원에 동 기술과목을 신규로 개설하였으며, 동 과목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음 2007 - 네덜란드 직업훈련 교사 정보통신기술 향상, 아프리카 직업훈련 교사 기술향상 16,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기술학교 75 (연수만족도 낮은 편이며, 전문분야와의 연관성, 강의의 난이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 받음), 팔레스타인 직업훈련 교사 기술향상 118, APEC 직업훈련 교사 기술향상 151 (인어소통문제, 일반직원의 강의 진행으로 전문성 감소시킴, 일반 다국가 과정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 검토 필요) 2008 - 베트남 직업훈련 교사 워크숍 130, 스리랑카 직업훈련 교사 기술향상 149, 팔레스타인 직업훈련 교사 기술향상 249 (과정기획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1. MD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B: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MDG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Target 2.A: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2.3: Literacy rate of 15-24 year-olds, women and men 2. 수원국 수요요청 건수 KOICA 사업 중 매우 높음	1. - LIC: 기능인력 양성지원, 직업훈련 - 중소득국가: 숙련 및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 Fragile State: 인도주의적 차원, 평등한 접근 - 체제전환국: 시장경제의 새로운 시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필요 2. LIC: Sub-Saharan Africa에서는 최첨단 직종 시설보다는 Informal Sector에서의 Training이 필요할 것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기타	고등교육 환경 개선	교육제도 전수		고등교육제도, 대학특성화제도 및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1-1) 「고등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회의법」,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사업, 전문대학원 설립운영방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원격교육을 위한 방송통신설치령, 「사립학교법」 1-2) - 1980년대 이전에는 국가의 계획적 정원관리에 의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대학특성화정책이 추진됨. 이 시기에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원 관리를 추진.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지방대학 육성사업 (국책공과대학사업)을 통해 산업특성과 관련 있는 부산단 기지, 경북대 전자 등의 대학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중점 육성하였으며, 지방거점대학별로 국가전략사업 분야를 지정하고 재정을 집중 투자. 1980년~1990년대는 고등교육기회확대정책으로 입학정원 대폭 증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빠른 추세로 인하여 대학들간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특성화와 연계한 재정지원사업 실시. 1996년에서 2003년까지 8년간 97개 사업에 총 2조 3백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1단계 BK 21사업, 중견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중점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실무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등 포함. 또한, 2003년부터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교조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중견인력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육성사업 (NURI) 및 실무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 특성화 사업을 진행함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방송통신대학은 1972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설되어 원격교육형태로 2년제 초급대학과정의 5개 학과 (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를 운영하기 시작. 1981년에는 2년제 초급대학과정에서 5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됨. 또한 이 해에 경제학과, 법학과, 영어과 등의 3개의 독립 학사과정을 증설하고 전문대학과정인 유아교육과를 신설. 1991년에는 5년제 학사과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 1996년에는 방송대학 TV (OUN)를 개교. 2000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7008호)으로 특수대학원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200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 (대통령령 제17146호)으로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교육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 최근에는 전자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강의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용 되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교육의 방식도 다양해짐. 두 번째는 인쇄교재와 원격교육매체가 갖는 일반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출석 수업의 방식. 출석 수업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과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전교 14개 시도에 지역대학을 비롯하여, 35개 주요 시·군에 설치된 학습관에서 방송대학교의 교수, 지역협력대학의 교수 그리고 전공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06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 15차례의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으며, 본질적인 기능인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 이외에도 고교교육과의 관계, 고등인력에 대한 인력수급계획 등 대학교육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옴 (교육부 50년사). -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4년 7개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7년 동안 173개교 (분교포함)에 대해 실시. 매년 대학들의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교육대학은 1997년, 신학계 대학은 1998년, 산업대학은 1999년에 일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00년은 1996년까지 신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함	1.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에 의하면 고등교육과 훈련부문에서 세계 134개국 중 12위를 하고 5.5 (7점 만점)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평가 받음
		교육시설 확충, 기자재 지원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1430 (고급기술 및 관리 교육)	전자 도서관 및 정보화 교육장 건립, 정보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 공대 대상 자동화기기 (로봇) 지원을 통한 설계 및 생산·기술 분야의 융합교육을 위한 시설을 지원		
		고등인력 양성		공대 대상 자동화기기 지원을 통한 설계 및 생산·기술 분야의 융합교육 지원		
		고등인력 양성		기술대학 설립 등에 대해 자문	1-3)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한국자유총연맹 2-2) - 대학의 양적 팽창기를 통해 나타난 대학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학과 설치·운영, 사회적 수요를 초과한 석·박사학위 설치·운영, 산업현장의 수요와 유리된 대학교육, 사회변화에 뒤떨어진 대학운영시스템, 재정확충을 위한 규모 확대에 치중한 종합대학화 등과 같은 문제 - 대학통폐합으로 순수학문 및 비인기 학문 고사 위기 - 너무 잦은 대입제도 변화로 혼란 가중	
				장학금 및 유학 기회 제공	2-3) e-Learning은 전기시설,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개도국 및 Rural Area에 적용 힘들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 가능성
11420: 1. 44.53%: 9.06% 2. 1위/12위: 4위/14위 3. \$122.4: \$2.74 4. 프랑스 \$1021.03: 프랑스 14.51% 11430: 1. 2.08%: 3.38% 2. 9위/12위: 7위/14위 3. \$6.11: \$1.98 4. 독일 \$53.63: 독일 0.77% 평균 23.3%지원으로 다른 국가들이 매우 많이 지원하는 분야, 특히 전문대학교육은 44.53%로 타 공여국 교육분야 1위임. 선진국 지원이 높음, 프랑스가 전문대 교육에, 독일은 고급기술 관리자 교육에 주 공여국.	1.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 협력센터 건립사업: 한국의 KAIST와 같은 베트남 과학기술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베트남 산업화의 8개 중점분야를 선정,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산업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함, 베트남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공여자중심의 일반적인 Ready-made 방식과는 달리 Taylor-made 방식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베트남 과학기술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함 2. 팔레스타인 제논시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 (2007년)			1. -고등인력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상위중소득국가 및 자원부국에 적용 (예: 카자흐스탄, 터키, 남아공,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MCS: 고등교육환경 개선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 제도	경제 개발	경제 개발 전략 수립 지원	15110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5개년 계획, 산업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제고, 자문 등을 통해 각 산업별 구체 발전전략 방안 마련, 경제위기 극복전략 전수 (경제위기 초래 원인 및 결과, 부문별 개혁과제 등), 지식기반경제 구축전략 (과학기술 우대정책, 지식기반경제정책, 혁신정책 등, 생존형 최적기술정보 보급, 상품 브랜딩 지원사업 지원)	1-1) 기업의 외자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및 과감한 인센티브의 제공, 금융통제와 재정정책을 통한 재원의 정책적 배분 등 성장우선의 불균형 개발전략의 추진과 함께 특정 산업 부문의 육성, 부상기업의 인위적 구조조정 등 정부주도의 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유치단계의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발전, 확충해 나감. Economic Planning Board (EPB)는 경제부처 간의 이해 조정하면서 경제개발계획 및 예산수립 집행, 부총리 하에 있었음, SOC 투자정책 및 조세정책, 한국개발연구원 (KDI) 설립 및 운영 1-2) OECD 회원국, UN 통계위원회 회원국, SIAP 이사국 등 선진 통계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위치를 확보, 2001년 서울 ISI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통계역량을 입증한 바 있음 (통계는 국가의 현재상황과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본정보로서 국가비전제시나 정책수립과정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 1-3)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원대학교 아태협력아카데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정관리전략연구소, 통계청 2-1) 수출대체산업화 대신 수출 지향적 정책, 강력한 정부주도의 선택적 산업육성정책, 다양한 산업화 단계를 거침 (천연자원의존적 경제 1960 → 노동집약적 산업 1970 → 자본집약적 산업 1980 → 기술집약적 산업 1990), 인적자원개발, 높은 저축률, 경쟁 및 실적의 결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여 인센티브를 높이고 부패가능성 줄임, 교육보건과 같은 Egalitarian Policy에 투자, Good Coordinator로서의 정부 역할 2-2) 재벌중심산업과 중소기업 위축, 정경유착과 Rent Seeking, 중화학 공업팽임 투자, 지나친 수출의존과 빈약한 내수시장, High Debt/Equity Ratio, 외국자본에의 지나친 의존, 관치금융, 세계경제의 영향에 매우 취약 등의 문제 있음 2-3) -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주 요소로 다른 나라와 차별적인 역사, 지정학적·문화적 (높은 교육열, 유교 문화 등) 유산이 있을 수 있으며, Hard State or Benevolent Dictatorship은 보통 개도국에서 비슷한 조건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 특히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으며 우리가 발전을 이뤘던 시기보다 무역의존도는 높고(36.8%: 4.3%) 제조업 수출비중은 낮으며 부채비율은 높음 (81.1%: 16.1%). 강력한 동원체제 도 아님 - 각종 Resource Endowment나 Internal Heritage는 Binding Constraints가 아닐 수 있고 인과관계가 역으로 설명될 것일 수도 있음: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Institutional Adaptation도 Technology 처럼 불변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봄 - 다른 개도국은 우리 산업화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역측면에서 개방되어 있고 Highly Liberal Post-UR 국제교역체제로 인해 산업정책의 선택적 직접적 특성은 사라지고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산업정책 영역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노동·자본·기술을 De-bundling해서 외국에서 도입한 우리와는 다르게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International Subcontracting이 증가함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국내로의 기술이전이라든지, 저개발국의 국내기업(가) 육성 혹은 Champion 기업의 출현이 어려워지고 있음.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던 우리와 달리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며 Regional Integration이 심화됨. 또한 교육을 강화하여 Skilled Labor를 키우는 경우는 Brain Drain의 부작용 역시 우려됨 - UNCTAD에 따르면, LDC들은 여전히 Permissible Subsidies, Quantitative Restriction을 이용할 수 있고 Trips에서 2016년까지 면제되는 등 어느 정도 보호무역과 각종 산업정책 시행이 가능함. 최근의 Commodity 가격 상승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실패와 성공의 요소를 포함한 Broad lessons를 얻고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KIEP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발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나라를 선택하여 자원집약적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꼭 수입 정도와 품목, 속도와 정책순서, 마켓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각 개도국의 상황에 맞는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수립할 수 있도록. 즉,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너무 강하게 서둘러 추진한 한국의 산업정책보다는 국제무역환경 변화, 강력한 행정력 부재, 그 외 기타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남아나 (Second, Third-Tier NIEs) 중국의 산업정책과 비슷하거나 더 약한 것을 택하라고 권고할 수 있음. 또한 신흥공업들 자체가 시장이 될 수 있고 남남 협력의 기회 이용. IDRC에 따르면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어떤 국가가 최소한 일정한단계의 발전을 이루고 난 후 가능해짐	2. - 정부주도 개발전략의 성공한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연수사업 비교우위 높음. 그러나 정책컨설팅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경험과 Communication/Packing Skills, Language면에서 많이 떨어짐 - 기재부와 KDI의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와 중복으로 인해 전문가 파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5110: 1. 10.77%: 5.60% 2. 2위/29위: 2위/23위 3. \$44.02: \$2.14 4. 미국 \$295.77: 호주 4.07% -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높게 투자하는 분야이며, 특히 미국/호주 등이 주 공여국. 타국들은 평균 우리의 22배를 투자함 -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음 (1) 개도국 → 수원국으로 변모한 나라의 직접적 개발 경험 (단 스페인, 폴란드, 중국, 인도 등도 수원국이었던 타 공여국이 되었거나 두 역할을 모두 하고 있음) (2) 일반의 수출 지원 정책 경험은 따르기는 했으나 일본과는 달리, 식민지였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신흥개발 국가로서 다른 개도국과 비슷한 출발점을 가진 상황 (3) 자원이 부족하나 수출 지원 정책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점 등은 자원부족국에게 적용 가능 (4) 한국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선기에 Conflict-affected, War-torn Country에 시사하는 점 있음 (5) 빠른 성장과 짧은 기간에 다양한 산업 단계를 거쳐 비교적 여러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적용 가능 (6) 홍콩과 싱가포르의 City-state에서 특수발전경험이라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현재 개도국과 비슷함	1. 베트남 경제연구소 지원사업: 사업의 산출물인 베트남 경제개발전략보고서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함.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데 크게 기여함. DSI 전문 인력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효과적으로 달성됨.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의 시초가 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예정인 '한국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단초를 제공함 2. 알제리 산업정책개발 자문사업 (2007-2008년/1000천불): - 알제리 정부가 입안한 산업정책청서를 평가 감수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에 기초하여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제시, 알제리 정부가 Post-oil 시대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으로 수립하는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알제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발전전략에 만족감을 표명하고 후속사업을 요청함 - 사업의 종료평가에 의하면 알제리는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과 거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중화학 공업 위주로 구축된 국영 대기업의 생산성 하락의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의 경제여건과 판이하게 다름에도 이런 차이를 심도 깊게 다루지 않았을. 한국처럼 수출위주의 산업화 개발 정책만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중요성도 심도 깊게 다루어 외화지출을 줄이는 점에 대한 강조 미흡. 또한, 보고서가 경제현황 파악, 문제점 도출, 비전 형성, 알제리 통계에 바탕을 둔 현실성 있는 문제 해결수단인 정책안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지 않음 3. 르완다 국가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사업 (2007-2009년/진행중): - 본 사업의 주 투입요소는 ①산업개발전략 (2)투자 및 수출진흥전략 ③인적자원개발전략 (직업훈련) ④농업개발전략 ⑤에너지전략의 총 5개 분야에 대한 전문자 파견임. 목표는 재정기획부와 대통령실 고위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자문인. 파견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자원활동을 위해 해당분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사전 정리하고, 르완다 정부는 해당분야의 국가발전전략과 현안을 정리하여 우리 전문가에게 제출 → 전문가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소개하고 르완다의 개발전략안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 및 자문 실시 → 자문결과를 워크숍세미나를 통해 확산하고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 - 본 사업의 직업훈련 관련 종료평가는 한국의 정책 및 제도를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없이 소개하고 한국의 경험사례가 단편적으로 인용되며 당시 한국의 역량과 현재 르완다의 역량이 비교되지 않음을 지적함. 예를 들어, 르완다의 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한 data 제시 없이 한국의 "직업훈련법"과 같은 법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실용성에 의문을 갖게 함. 즉, 수원국의 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이 부족	2007 - 경제개발전략 9 (연수주제로서 적합하나 짧은 연수기간 고려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타국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몽골 경제개발전략 93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경험이 선진국의 개발경험보다 더 적합함, 몽골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국가발전전략 심층해부를 통해서 보완), 베트남 지방정부 한국담당관 143 (한국을 경제발전모델로 도입하려는 취지가 강함, 강의 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모두 구체적이고 실용적), 세네갈 경제개발전략 197 (국별 수요에 맞는 강의 준비의 중요성 확인), 스리랑카 경제개발전략 고위 파트너십 204 (전문 지식 및 경험 전수, 고위인사들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아프리카 경제개발전략 224 (비교우위가 높은 연수), 이라크 경제개발전략 311, 콩고 경제개발전략 444 (이론적-실천적 노하우 전수, 양국의 정책방향 일치), 탄자니아 고위급 경제개발전략 457 (공정적 목표달성 결과, 운영 효율성 개선필요), 파라과이 경제발전전략 2차 492 (비교우위 선정, 만족도 높음), 한심 지식 재산권 제도 520 (특허행정의 정보화 및 자동차 사업발전에 기여, 실무교육) 2008 - 경제개발전략 10 (경제개발전략분야는 비교우위 높음, 한국의 성공적 경영혁신기법과 활용 사례 등의 경영전략 전수), 나이지리아 경제개발전략 84 (새마을운동 관련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 산유국인 점을 감안, 에너지관련기관 방문), 네 팔 경제개발전략 90 (세정정책 및 개발 금융, 대학생 봉사활동 평가 좋음), 미얀마 경제개발전략 130 (연수생의 영어구사능력 문제), 세네갈 경제개발전략 205 (효율성은 뛰어났으나 진행능력 결여, 고위급연수는 Training이 아니라 Int'l Cooperation 단어 사용제한), 스리랑카 경제발전정책 213 (뛰어난 강사진, 단순한 강의 내용은 지적당함, Action Plan 수립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함), 아세안 지적재산권 세미나 220 (비교우위 높음), 아프리카 파트너십 267 (아프리카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끌어냄), 에티오피아 경제개발전략 281, 우간다 경제개발전략 319, 이라크 아르빌 국가기술통계작성 370 (통역의 어려움), 이라크 국가기술통계작성 383, 이라크 중앙자원을 통한 경제개발정책 수립 404 (원활한 진행 및 높은 만족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전략 444, 코트디부아르 경제개발전략 556 (참여도 및 효과 높음), 탄자니아 고위급 공무원 경제개발 572, 통계실무 611, 파라과이 경제개발전략 (3차) 628 (매우 만족), 지식 재산권제도 (한심 공동연수) 683 (원활한 진행이었으나 특정분야 선택 필요), CIS 경제개발전략 688 연수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은 많으나 너무나 일반적 과정, 짧은 기간, 전문적이지 않은 평가 때문에 속과 측정의 어려움	1. MD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A: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1.1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1 (PPP) per data 1.2 Poverty gap ratio 1.3 Share of poorest quintile in national consumption 2. 한국의 경제개발정책 공유에 대한 수요 높음	1. -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빈곤 감소를 위한 체계적 경제개발계획 수립은 최빈국에 적용 (예: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텐 등) - 과학적 거시경제의 관리 및 분석은 저소득 국가에 적용 (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거시경제지표의 안정화 정책: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사례는 중소득국가에 적용은 중소득국가에 적용 (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 장기 경제개발계획 및 비전 수립과 정부의 역할: 중화학공업 및 대기업 육성정책: 산업 다각화 수립은 상위중 소득국가 및 자원부국에 적용 (예: 카자흐스탄, 터키, 남아공,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 Fragile State: 국가안보구조의 장기적 개발 등 State Building에 초점 맞춰서 지원 2. 1) 자원의존형 국가 제외 2) 소득수준이 250-2,000달러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3) 인구규모에서는 2004년 현재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매우 작은 나라들은 제외 4) 공업화를 위한 기초적인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SSA 국가는 세네갈, 가나, 탄자니아, 말리, 우간다 등 (중점 및 일반협력 대상국 포함) (Source: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카자흐스탄에 경제개발정책, 제도개선부분 공헌할 필요성 있음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림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 제도	경제 개발	시장 경제 정책 지원 및 금융 통 화 개 혁	15120 (공공부 문 재 정 관 리), 24010 (금융 정 책 및 행 정 관 리), 24020 (중 장 기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Top-down 재 정 편 성, 성 과 관 리 시 스 템 등), 24081 (금융 및 재 무 부 문 교 육), 25020 (민영 화)	금융정책(중앙은행의 역할, 정책금융과 여신관리, 금융실명제 등)의 운용, 공공기업의 효율화 및 민영화정책(공공부문 평가, 통합 및 민영화, 민영화의 구조적적용 사례 등)	1-1) 「은행법」, 「은행거래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1-2) - 1950년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은행을 중심으로 정비됨.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한국산업은행이 1954년 4월 그리고 농업은행이 1956년에 설립됨. 「은행법」이 1954년에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가 진전. 대한증권거래소는 1956년 설립되어 거래소를 통한 증권도 시작됨.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도 다수 신설됨. 1960년대 군사정부가 등장한 이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이 커짐. 정부는 농업협동조합(1961년), 중소기업은행(1961년), 국민은행(1963년), 한국외환은행(1967년), 한국주택은행(1969년), 한국수출입은행(1969년) 등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많은 특수은행을 정부출자로 설립하거나 재편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시도에 지방은행을 설립. 그러나 1962년 증권파동의 여파로 증권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함. 정부는 1972년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단행하고 사(私)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고 비(非)은행에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설립. 그리고 정부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공개추진법을 제정하고 한국투자신탁 등도 설립. 198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정부 소유의 시중 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은행경영에 간섭을 줄임. 그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진입장벽을 낮추어 시중은행,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의 설립이 증가. 정부는 금융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중첩을 허용하고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합작회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 정부는 금융개방정책은 1990년대 더욱 가속되었음. 이러한 추세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됨. 정부는 외환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을 퇴출, 인수 및 합병, 국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 1997년에 33개였던 은행이 2005년에는 19개로 줄어들었고, 중소은행과 지방은행이 주로 퇴출됨.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퇴출되고,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2005년까지 27개만 남아있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1956년 3월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영단조적의 대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조직화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됨. 그 후 대한증권거래소는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 시 주식회사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가 증권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1963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5월 정부가 출자한 공영제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그 명칭이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 1980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 또 1982년 3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량주식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1984년 7월에는 채권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장외시장이 제도화. 그 밖에 유망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확대를 위해 1986년 12월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1987년 4월 주식장외시장이 개설. 1995년 7월부터 기관투자자 간의 채권 거래 시 증권예탁원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실패수도에 따른 결제의 비효율과 위험을 제거. 한편 주식장외시장은 1997년 1월 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매매되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증권거래법」에 반영됨으로써 법제화. 2000년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개설. 2000년 7월에는 금융기관 보유채권과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채권시장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8월에는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국제입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입찰방식을 단일글로벌결정방식으로 전환. 2002년 10월에는 국제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 국제전도달러에 대해 지표채권의 장내거래를 의무화하고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허용. 그리고 2005년에는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함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실금융 정리 경험 및 점진적 금융개방의 경험 1-3) 한국증권거래소, 채권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예탁결제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2-2) 판치금융 2-3) 한국의 자본조달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이미 경제가 비교적 성숙한 단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물적, 인적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생산 및 수출기반이 다양화되지 못함	1.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한국 은행들의 건전성은 90위/133개국이며 개국으로 은행 부문 경쟁력은 약한 편임. 은행들의 경영실적은 호전되고 있으나 경쟁력은 구미선진국에 비해 뒤짐. 자기자본비율(BIS)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기준 이상이어서 경영의 건전성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수익성 등 계량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ROA 총자산이익률은 2005년 1.2%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호전. 그러나 경영인프라, 사업구조,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자산운영, 전문인력, 해외점포망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증권: 첨단화된 거래시스템, 온라인 증권사, 효율적인 법률 등. 이 분야는 비교우위가 높은 연수임 (면수 2008 pp. 10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Financial Market Sophistication은 57위/133개국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구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24010: 1. 1.88%: 0.95% 2. 17위/ 29위: 6 위/23위 3. \$11.20: \$0.36 4. 미국 \$88.07: 스웨덴 1.03%				
24081: 1. 0.08%: 0.04% 2. 28위/29위: 21 위/23위 3. \$0.69: \$0.04 4. 독일 \$1.45: 룩셈부르크 0.77%		2007 -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3 (경쟁법 분야의 전문성 고려 시 연구 대상국 중 경쟁법 및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초기인 국가인 경우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다국 연구인만큼 연구생들의 편차 존재로 인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짐), 라오스 증권거래시스템 지원 72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거래 시스템과 유가증권 예탁결제 시스템은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 몽골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85 (한국경쟁법의 이론과 집행 경험 파악, 통역으로 진행되어 내용 이해도는 높았으나, 통역사가 경쟁법 분야 전문용어에 익숙지 않아 시간 지체), 베트남 자본시장육성 159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태국 증권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시스템을 수출, 서울에서 제9차 세계중앙예탁결제기관회의 개최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의 우수성 알려짐, 한국의 증권거래시스템이 장기적 모델이 될 수 있음), 베트남 증권거래시스템 지원 167 (증권분야 전문가 육성 통해 한국 모델로 개설된 베트남 증권거래소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용에 기여, 감사인의 전달방식 숙련 부족),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11 (증권 및 금융이 분화되고 있는 참여국에 유용함), 알제리 체제전환제거의 금융시장 257 (체제전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강의 전달 한계), 재정운영 (고급) 387, 재정운영 (일반) 395 (재정운영 및 혁신사례 전수, 개도국의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 노력 지원, 연구 운영 개선필요), 필리핀 재정 및 금융정책 향상 프로그램 2차 504(재정운영시스템 개선에 기여)		2. - 조세나 이자율, 환율 등의 현실화를 통한 내자동원기능의 강화와 해외 원조의 적극적 확보, 그리고 이를 포함한 제정의 효율적·생산적 관리는 최빈국에 적용 (예: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 -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내재원 확대와 활용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 국영기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제도 마련, 공공부문의 효율적 투자와 관리는 저소득 국가에 적용 (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 공기업 민영화 및 대기업 육성정책은 중소득국가에 적용 (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 금융개혁 위주의 경제위기 관리 및 구조조정 경험은 상위중소득국가 및 자원부국에 적용 (예: 카자흐스탄, 터키, 남아공,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 시장경제의 정착 지원 등은 취약국에 적용
15120: 1. 2.93%: 0.40% 2. 13위/29위: 13 위/23위 3. \$13.12: \$0.25 4. 영국 \$77.63: 호주 1.58%	1.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 (2.3차) (1996-2002년/1800천불): 증권시장을 베트남에 도입하는데 초석 역할을 한 사업, 베트남 내 상장기업 증가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증권거래 투자자를 확대하는 기반 형성, 베트남 증권시장 개방 시 한국 증권업계 및 투산업계가 외국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것으로 예상			
24020: 1. 0.21%: 0.01% 2. 25위/29위: 22 위/23위 3. \$2.54: \$0.01 4. 네덜란드 \$19.35: 뉴질랜드 0.73%	2.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지원사업 (2007-2009년/1800천불): 주식시장을 통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공정한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가속화시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 우리나라는 중시하부구조 선점을 통한 후속사업 추진,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략과 부합하여 우리의 우수한 시스템 홍보효과 거양 가능, 향후 매매거래 시스템, 공시 시스템, 시장감시 시스템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수출 및 용역제공을 통한 수익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25020: 1. 1.10%: 0.22% 2. 16위/55위: 24 위/32위 3. \$7.80: \$0.21 4. 영국 \$40.41: 영국 0.75%		2008 -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3 (강의 질적 향상), 라오스 증권거래시스템 지원 109 (거래시스템과 유가 예탁결제시스템은 벤치마킹 대상),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분야 인적자원 능력배양 350 (적극적 수업참여 이끌어냄, 매우 성공적, 우리나라의 선진인프라 홍보), 재정운영 (고급) 476(차별화된 고급과정 개발 필요), 재정운영 (일반) 483 (만족도 높으나 연구기관과의 과정 개선협의 필요), 필리핀 재정 및 금융정책 향상 프로그램 3차 658		
하위섹터평균 1.24%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지 않는 부문. 그 중에서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중앙금융기관에 차별성 제일 높음. 그러나 한국은 중앙금융기관에 미흡한 지원. Public Financial Management에 경험이 우수한 영국이 주 공여국임.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부패 방지 및 효율적 행정제도 구축	15140 (공공 행정), 15161 (선거)	사회적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윤리 확립, 부패 방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 제도 등을 지원: 정부혁신 및 참여행정 정책	1-1) - 1960년 제 2공화국은 직업공무원 선발제도를 도입, 고위직 관료부패 억제하고 비교적 소규모의 저비용으로 관료제 유지. 1984년 공직자윤리법을 시작으로 금융거래실명제 (1993), 공직자재산등록제 (1993), 「자급세탁방지법 (1995)」, 「부패방지법」 (2001) 제정-시행 - 한국에서는 특히 IMF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 관리 정부로 시작한 김대중 행정부에 의해 영미계 국가의 노리에 따라 강력한 행정개혁을 단행했으며, 실제로 모든 공공 부문에 걸친 구조 조정을 비롯하여 전례 없는 개혁 조치를 단행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1-3) 감사교육원, 선거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2-1) - 고위공무원 선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직권공무원 제도 및 공무원에 대한 직업 안정성 제공이 엘리트 공무원 양산의 효과가 있었음. 문민정부 이후부터 금융실명제 등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고 실효를 거두었으며 그 후 의무직 공직자재산공제 제도 도입, 부패방지 위원회, 특별검사제도, 고위관료의 인사청문회 제도 등은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의 부패를 예방하고 감시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연성진 1999, 강성남 2002, 김태룡 2003) - 외적 요인으로는 보편교육과 민주주의 확대가 중요하며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성과 중심적 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중요.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부족하고 민주주의 결여된 상태에서 하향식의 반 부패 정책은 실질적 효과 없을 가능성 높음.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나 한국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공직자 재산공제제도, 특검, 각종 위원회 제도가 있었으나 큰 실효를 못 거둠. 또한 때로는 정책방향은 맞으나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이 Process에 결함이 많은 경우가 많음 2-3) 부패유발요인도 다각적이어서 이를 각국에 적용해 보아야 함. 제 1공화국은 원조나 천연자원수출 등에서 온 분배식 부패, 제 3, 4공화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한된 생산요소를 획득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산형 부패, 제 5, 6공화국은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거대부패가 있었음. 이에 따라 개도국도 거대부패, 관료부패 등을 나누어 생각해야 함 (박복영 등, 2007)	1. 선거관리 제도, 투표지 분류기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 등 선거관리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음 2. 2008 Worldwide Government Indicator는 한국정부의 제도적 효율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Government Efficiency는 75th Percentile을 1996부터 2009까지 계속 넘는 유일한 분야. 반면 Political Stability는 하위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및 행정전산화: 국가통계구축	1-1) 전자민원 (G4C), 업무관리 (온-나라 BPS) 시스템, 혁신진단기법 (정부혁신지수, GI), 정보화 마을 1-2) 효율적 국가 행정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가의 기획기능을 보완하는 전문인 정책 및 과학기술 R&D 시스템의 과감한 구축을 통해 국가의 발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KIST, KDI 등과 같은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전문 두뇌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실시) 1-3)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산감리원	1. 행정정보화 관련 전자정부 구축 등은 UN 등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한국의 비교우위. 특히 출입국 심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출입국심사 브랜드 KISS를 바탕으로 출입국심사 과학화, 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역량강화, 출입국 심사 조직 통합 및 팀제 도입 등의 혁신성과가 있음. KISS는 UN 공공행정상 수상뿐만 아니라 국제공정협의회의 세계 공행서비스평가(ASQ)에서 출입국 심사 서비스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행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음
	공공 행정역량 배양	15140 (공공 행정), 15161 (선거)	공무원 능력 개발	1-1) 한국의 공무원 인사관리, 조직관리, 공무원 교육분야 (시정관리, 공무원 의사전달 기법, 행정 업무 절차) 및 전자정부제도 경험전수가능, 한국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의 주요내용과 특징, 재개정 절차 등도 교육 및 경험 전수 1-3)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 한국능률협회, 생산성협회 2-1) 정부 주도의 체계적 관료 시스템 수립, 효율적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갈 수 있는 행정-제도 구비로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음.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으며 성과 및 능력주의 원칙하에서 철저한 교육훈련 강조. 직업 안정성으로 인해 엘리트 공무원 증가하고 정부 효율성 높아짐 2-3) - 한국의 성공사례와 핵심요소를 국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 또한 우리와 초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개발단계상 그 행정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집단을 선택해야 함 - World Bank 등은 반 부패, 성과관리, 변화관리를 강조하는데, 이는 과거 우리나라 공공분야 역량배양에서 강조하던 분야는 아니었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5140: 1. 20.50%: 83.87% 2. 1위/29위: 1위/23위 3. \$86.33: \$31.91 4. 미국 \$1081.59: 호주 8.78% 15161: 1. 2.28%: 0.49% 2. 15위/29위: 10위/23위 3. \$7.48: \$0.40 4. 영국 \$31.00: 그리스 3.44% 평균 11.39%. 공공행정은 한국이나 타 공여국 모두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이며, 공공행정은 미국이 선거는 영국이 주 공여국, 한국은 선거 부문에 지원을 거의 안 함	1. 카자흐스탄 감사정책분야 개혁연구 (2009-2010년/400천불) 대부분 물자지원이며 연수사업은 성과 측정 어려움	2007 - 국제공공감사 41 (시스템 감사기법 도입으로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갖추었으나 개론 위주의 강의가 많았음. 연수 주제 다양화와 실무 교육 및 관련 기관 방문 필요), 선거관리 189 (선거관리 제도 및 투표지 분류기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 등 선거관리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음. 부재자 선거, 선거운동, 투·개표현장 등의 직접 참관이 교육효과 증진. 일반적 이론 강의보다는 구체적 내용의 강의 필요) 2008 - 공공감사 16 (맞춤형 연수로의 발전 필요), 선거관리 198(선거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구축 상황 및 투표지분류기, 터치스크린 투표기 등 설비 부분 등에서 한국은 선거관리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음), 캄보디아 선거관리 540, UNDP 아시아 반 부패 역량제고 (방글라데시) 727, UNDP 아시아 반 부패 역량제고 (부탄) 735		1. - 터치스크린 등은 MIC 이상에 지원 가능 - LDC: 부패방지 - LIC: 정부혁신, 전산화 - Fragile State: 투명성 강화, 부패방지	
	1. 카자흐스탄 국가통계시스템 개선 (2009-2010년/3천불) 2. 콜롬비아 정보통신 실행계획 수립지원사업 (2007-2009년/150만 달러): 정보통신문화창출, 중소기업정보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통신 교육수준 향상 면에서 ICT 자문 및 연구, 단계별 초청 연수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2007 - 러시아 공공서비스 및 행정발전 78 (세계적 수준의 행정역량과 혁신 성공사례 인정 받음, 실무 강의의 부족과 소극적 참여), UNDP 몽골 행정정보화 관리 548 (행정정보화 관련 전자정부 구축 등은 한국의 비교우위), 정보통신 311 (특허행정정보화) 2008 - UNDP 몽골 행정정보화 관리 719 (보안상 공개하는 내용이 적어 실질적 경험 축적에 한계)	2007 -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16 (전반적인 진행 원활하였으나, 일부 연수생들의 영어능력문제로 인해 전달 어려움), 공무원 행정발전 22 (만족도 100%), 라오스 공무원 행정발전 65 (라오스의 경우 주요 산업이 농업이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은 부적절한 측면 있으며, 전자정부 혁신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이 미미하므로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정부 및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조직관리분야의 혁신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판단됨), 몽골 출입국 관리 및 정책 120 (한국인 대상 강의에 몽골 연수생들도 참가, 연수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정 개설), 베트남 공무원 행정발전 137 (한국의 정부 자율성 강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국가발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강조, 전년도 강의와의 차별성 전무), 아프리카 공무원 행정발전 230 (참가국 언어사용 필요), 에티오피아 공무원행정발전계획 271 (공공행정분야 비교우위, 연수생 구성에 강의 내용 적절), 우즈베크 공무원 행정발전 2차 290 (한국의 인사관리, 조직관리 및 전자정부 제도 등 소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 이집트 공무원 행정발전 4차 (고위정책개발) 366 (행정정보화 및 국가발전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경험 전수, 비교우위 선정,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 포함 건의), 중국 공무원 행정발전 409 (한국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특징, 재·개정 절차 등을 학습하여 참고하고자 함, 기간 문제로 인해 효율성 저하), 콩고 (DRC) 공무원 행정발전 2차 452 (효율성 제고 위해 실무자급의 연수가 목적에 부합하는 더 바람직한 연수라고 판단됨), 튀니지 공무원 행정발전 486 (연수국 수요에 맞는 과정개발 요구됨)		
	1. 아프간 공무원교육원 건립사업 2.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교육원 역량강화 (2007-2009년): 공무원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개혁분야 연수 실시 3. 인도네시아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1, 2차 사업 (2007-2009년/65만 달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등 정부혁신사례를 소개하여 인니 공무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행정개혁부, 반 부패위원회, 공공행정연구원, 국가개발기획청, 대검찰청, 재무부 소속 등 정부 12개 부처 공무원 100명을 초청 총 6회 연수를 하고 전문가 4명을 4주간 현지에서 파견하고 워크숍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행정관리와 개혁방안에 대한 자문 제공, 본국에 귀국한 연수생들의 역선평 실시. 인니측 요청에 의해, 2009-2011년 (160-70만 달러) 2차 사업을 추진 중임. 종료평가에 따르면 수원국은 동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 정부 역량강화와 같은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연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008 -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23 (전반적 강의구성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높음, 언어문제, 이론과 실제 접목된 커리큘럼 교육효과 극대화), 공무원 행정발전 30 (경험공유, 실시 기관의 원활한 운영능력), 라오스 공무원행정발전 103 (한국의 지방거버넌스, 지방재정, 지역경제개발 및 세마을운동 등에 관한 경험 전수, 정부부처기관 방문 더 필요), 베트남 공무원행정발전 (3차) 163 (한베트남어 통역이 더욱 매끄러울 것임), 베트남 사회경제정책 평가 능력배양 연수과정 170 (정책실무자로서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연수의 본보기, 난이도 상황조정 필요,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경험), 이집트 공무원 행정발전 (5차) 435 (작년 피드백으로 인해 질적 개선 가능),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 467, 튀니지 공무원행정발전 617, 필리핀 출입국 관리 666, CIS 공무원 행정발전 695		1. - 터치스크린 등은 MIC 이상에 지원 가능 - LDC: 부패방지 - LIC: 정부혁신, 전산화 - Fragile State: 투명성 강화, 부패방지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 제도	법체 제비 및 사회 안전 지원	선진 법제 계 마련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사법제도 개혁	1-1) - 1, 2, 3차에 걸친 사법파동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법개혁. 자의적 임의배당, 대법원장제의 권력집중 - 2005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2006년 1월에 완성한 '사법제도개혁법안'(이하 사법개혁안). 개혁추진 위원회가 만든 개혁안은 조서 중심의 재판을 법정 공방 중심인 '공판중심주의'로 개선하는 것,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해 법조인의 수를 늘리고 전문화하는 것,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으나 논의진행이 안됨 2-2) 법조인들의 이익집단화, 국회의원대부분이 법조인 1-3) 법무연수원, 대법원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	16063 (마약관리)	사이버 범죄에 방 등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투명성 제고	1-2) - 사이버 경찰: 1995년 10월 외사관리관실 국제형사과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전신인 '해커범죄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 2000년 10월 24일 사이버경찰청을 개청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범죄 급증에 대처. 또 2000년 사이버경찰청의 개청과 함께 정부기관 최초로 인터넷방송국 (IPBN)을 개국하여 동영상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함 - 사이버 테러: 1995년 10월 외사관리관실 국제형사과에 '해커범죄수사전담반'을 운영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장비로 구성된 '해커수사용 인터넷 중앙센터'를 설치, 본격적으로 국가정보 보호. 1997년 8월에는 기존의 해커수사대를 확대·개편하여 경찰청 형사과에 '컴퓨터 범죄수사대'를 발족하여 모든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를 총괄. 1999년 12월에는 컴퓨터 범죄수사대를 '사이버 범죄수사대'로 확대함. 이어 각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편성. 하지만, 해킹과 바이러스의 급증,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 7월 11일 사이버공간의 선제적 치안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창설행사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정식 직제에 반영됨 1-3)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외교통상부 안보대테러협력과,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경찰청(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사이버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2-2) 2009년 7월 DDOS 공격에 정부 등의 사이트가 공격받았으나 신속히 대처 못함 2-3) - 국내외 선진국들에서 우리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 대응 조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 교육제도, 첨단장비 및 수사기법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적음 - 연수사업 등은 한국의 성공사례와 핵심요소를 국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 또한 우리와 초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개발단계상 그 행정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집단을 선택해야 함	1.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 코리아'에서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2000년 공공부문 5대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 사이버보안분야는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 과학수사 분야 (범죄수사에 첨단 IT기술 접목 시킨 분야) 역시 비교우위를 지님
		체제 전환 국법 정비 지원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법조인 양성 및 훈련	1-3) 대법원	1.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04년부터는 프랑스, 독일, 태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이 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경찰의 사이버 수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5130: 1. 5.80%: 1.37% 2. 5위/29위: 4 위/23위 3. \$24.90: \$0.51 4. 미국 \$237.47 : 호주 5.92%	1. 베트남 고위법관 한국 사법제도 연수 과정 (2005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 법관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함. 베트남에서 자국의 법령 제·개정에 참고하여 심다면서 한국의 행정소송, 한국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강의를 요청하였고, 한국의 사법제도와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사법개혁을 소개 2. 베트남 법관연수원 선진화 사업(2008-2011년/3백만 달러): 베트남 법관연수원 신축을 통한 법관 교육환경 개선,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한국의 사법시스템 소개, 베트남 법관연수 교육 시스템 및 교육비용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 베트남 최고 인민법원에게 한국의 법관연수원 운영 및 법관교육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자 함	2007 -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28(한국 선진 형사 사법체계 전수, 의사소통문제), 사법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 사법행정 173(전쟁이후 한국이 경험하고 발전시켜온 사법개혁의 패러다임 제시, 맹인 참가자 위하여 연수생에 대한 신체 조건 관련 사전 점검 필요), 아프리카 법정비 지원 236(언어문제) 2008 - 사법 공정성 제고 및 효율적 사법행정 182(전문적 강의), 필리핀 사법 공정성 제고 및 효율적 사법행정 652		
16063: 1. 15.77%: 0.97% (환경 및 기타) 2. 2위/18위: 14 위/18위 (환경 및 기타) 3. \$87.14: \$0.18 4. 미국 \$922.07: 미국 4.82% 법 개발, 마약관리 등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큰 공여국, 원조액수도 3만 배 차이	1.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현대화 사업 (2004-2005년/53만 달러): 우리나라가 비교적 우위를 지니는 마약통제경험 전 수와 IT 분야와 접목하여 마약통제자료 수집 및 공유, 마약통제행정능력강화 관련 장비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방화벽 등의 문제로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후관리가 안됨	2007 - 대테러 역량강화 56(비교우위 점하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서 사이버 테러의 개념정립 및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연수기관의 역량 부족 및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 동굴 과학수사 101, 베트남 과학수사 151(과학수사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경험 비교우위), 사이버 범죄수사 180(범죄수사에 첨단 IT기술 접목시킨 비교우위 분야, 연수담당자와 사전에 과정에 대한 협의 필요, 통역 배치 필요), 지방행정 422(문제해결형 연수 한계, 지방행정과 지역개발, 전자정부 실현 관련경험 공유 유용), 탄자니아 고위급 지방행정 465(국가균형발전, 한국기업 홍보, 창계천 복원사업 홍보 및 관심도 높음) 2008 - 과학수사기법 38(참여형 수업, 연수신규기관이나 큰열의 보임), 동굴 수사기법 116(첨단 증거수집 분석을 위한 장비에 특별한 관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54, 사이버 범죄수사 188(사이버 수사 분야의 다양한 기법과 경험 전수, 범죄수사에 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비교우위, 한국이 우수한 인프라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타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임, 각국의 상황 파악 필요: IT 인프라 구축 여건등), 온두라스 과학수사기법 288, 오르단 과학수사 302, 우즈베키스탄 과학수사기법 330, 우크라이나 지방자치행정 363, 지방행정 503(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 필요), 탄자니아 고위급 지방행정 582, 필리핀 과학수사 기법 644	사이버 범죄 등은 공공기관의 웹인프라가 잘 구축된 중소득국 이상에 적용. 수원국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15130: 1. 5.80%: 1.37% 2. 5위/29위: 4 위/23위 3. \$24.90: \$0.51 4. 미국 \$237.47: 호주 5.92% (평균 10.7%로 이미 상당한 지원이 되는 분야. 안전분야는 미국 등 타 공여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		2007 - 우즈베크 고위법관 사법제도 284 (한국 사법제도와 운영경험 전수, 유관기관 방문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관리 필요), 인도네시아 고위법관 사법제도 373 (각 연수생 상황 고려 필요), 태국 고위법관 사법제도 472 (프로그램 취지는 좋으나 질적 개선 필요) 2008- 라오스 고위법관 사법제도 97 (사법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 고위 법관들의 사법역량강화에 기여, 사법분야는 개도국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필수분야), 방글라데시 고위법관 사법제도 145, 아제르바이잔 고위법관 사법제도 234, 259, 509 (체계적 운영), 태국 고위법관 사법제도 588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 제도	민간 경제 활성화	국제 무역 활성화 기 반 구축	33120 (무역 진흥), 33130 (지역무역협정 (RTAs)), 33140 (다자 간 무역협상 (WTO))	자유무역촉진 제도 및 국제 무역금융 제도	1-1)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무역 3대 기본법. 과거의 무역법은 수출 진흥과 수입 조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1987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보호제도의 실효를 골자로 함. 수입 대체정책, 수출진흥정책 및 무역자유화	1.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발판 삼아 관세청은 1992년 이후 수출인통관 등 관세 행정 분야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화 시스템 (UN-PASS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히 ISO 2000 IT 서비스 품질인증 취득과 동시에 국외에서는 UN, APEC 우수사례 선정, e-Asia 어워드 수상 및 지재권 보호 최우수국 선정 등으로 대외 인지도 제고
				무역협정 담당 기관 지원	1-2) - 무역의 증진과 점진적 개방의 확대를 도모하여 시장 친화적인 기업활동 및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전략적 기간산업 및 인적자원과 사회적 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비교우위산업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 - 수출진흥정책: 종합수출진흥대책으로 수출기업의 대출에 공식금리적용 (특혜수출신용),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간접세 면제,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입허가 및 쿼터의 수출실적에 연계,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국내공급자에 대한 관세 및 간접세 면제, 주요수출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률 인정, 연례수출목표 설정,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 및 주요 수출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월례수출진흥회의 개최, 최종소비재 및 사치품의 수입은 금지되거나 제한. 1967년 GATT 가입과 함께 수량제한은 관세로 대체되고 무역외적 이유로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 - 무역자유화 정책: 1980년대에 들어서 수입자유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공산품 관세 크게 인하. 그러나 다양한 비관세장벽 존재하고 무역법에 근거한 수입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수입규제가 유지됨. 1980년 고정환율제 대신 복수통화바스켓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고 1982년 수출특혜금융제 폐지. 1990년 복수통화바스켓 고정환율제를 시장평관환율제로 대체. 1980년 수입자유화를 가속화하여 수입자유화를 확대하고 평균관세율을 인하. 그러나 복잡한 법령 및 규제 구조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은 정치적 이유로 매우 더디어짐. 1986-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여, 1995년 WTO회원국이 되어 다자간무역질서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 및 무역정책이 WTO에 합치되도록 수정. 수출에 대한 직접적 지원제도 및 기존의 관리-통제무역제도 철폐, 양허관세를 인하. 정부의 수출추천요구제도 및 수입추천요구제도 폐지. 보조금 및 면세정책 등 개정. 1996년 OECD 가입과 함께 환율제도 역시 더욱 자유화. 1997년 외환위기 시 외환 금융산업 무역정책의 자유화 조치 단행. 무역관련보조금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조정관세 대상 품목 수 축소. 외국 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및 M & A규제 철폐. 일일 환율변동폭 자유화. 2000년대는 FTA 등 지역주의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옮겨감. 전략적·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통해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주요 대륙별 국가 및 미국, EU,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	
				국제협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무역투자진흥연수, WTO 관련 교육, 관세행정기법 교육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청, 한국 무역협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희대 아태지역연구원, 국제교류증진협회, 무역투자연구원, 관세청, 한국수입업협회 2-1) 2-2) - 수출대체정책: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주도형 공업화는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국제적으로 비교적 경쟁력 있는 경공업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써 수출실적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무역자유화 정책: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한국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IMF, WB 등의 권고에 의해 자유화, 경제자유화로 가격외국이 제거되고 정부와 기업의 밀착관계로 인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개선하는데 기여. 1990년 후반부터 추진한 FTA 정책은 통상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드러냄. 즉 FTA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이해집단의 강력한 저항을 받음으로써 정치·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름. 이는 특히 한미 FTA에서 두드러졌으며, 농산물·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인 자유화 협상을 어렵게 함. 뿐만 아니라, 한-칠레 FTA를 추진할 당시부터 제공되어 온 일부 피해보상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비용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회의적 평가 제기 (박복영 등, 2007)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3120: 1. 0.46%: 0.75% 2. 23위/29위: 9 위/23위 3. \$3.03: \$0.47 4. 일본 \$35.61: 스위스 0.37% 33130: 1. 0.17%: 0.32% 2. 16위/29위: 24 위/29위 3. \$3.05: \$0.13 4. 네덜란드 \$10.29: 네덜란드 0.27% 33140: 1. 0.10%: 1.14% 2. 27위/29위: 5 위/23위 3. \$0.82: \$0.73 4. 캐나다 \$2.20: 핀란드 0.17% 평균 0.21% 로 매우 차별화됨. 특히 다자간 무역협상은 캐나다-핀란드가 주 공여국이며, 지역 무역협상은 네덜란드가 주요 공여국. 전반적으로 타 공여국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분야임	1.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사업 (2004-2005년/870천불): ASEAN 통합을 대비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무역역량 배양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FTA의 활용,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및 WTO 협정의 이용 및 대응에 대해 적절한 정책 제언 및 과제 제시	2007 - 관세행정기법 29 (일부 강사 영어능력 미흡), 관세행정정보화 35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초래), 국제통상과 WTO 59 (한국만의 독특한 개발경험 전수), 몽골 수출 및 국제거래진흥 114 (축산업에 관중된 현 산업구조 개선하기 위해 무역 및 국제거래 증진을 위한 목표 의식, 1950년대 당시 한국의 산업구조와 매우 유사하여 벤치마킹 가능), 아세안 투자협상담당자 능력배양 217 (아세안과의 FTA 투자 분야 협력 제고), 아프리카 파트너십 (국제통상과 WTO) 251 (세부 주제 외에 아프리카-한국간 파트너십 협력 강화 측면에서 유용), 알제리 해외직접투자 264 (구체적 사례 소개 필요), 이라크 관세기법 318 (통관자동화시스템 등 관세행정정보화 우수성 인정 받음, 체계적 관세행정시스템 구축 기여 및 정보격차해소, 이라크의 특수한 상황과 경제기술적 수요가 주제 선정에 반영되지 않고 비교우위인 관세정보화에만 치중), 이란 파트너십-국제통상 및 WTO 359 (연수국 경제사정 등에 대한 지식 부족), 인도네시아 국제통상 및 WTO 2차 380 (만족도 다소 낮음, 전문적 강의내용에 대한 연수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조세행정 402 (현실적 대안 제시의 타당성, 연수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카자흐스탄 무역투자진흥 2차 429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산업발전, 무역정책 방향 논의, 무역촉진 위한 민간 역할 논의), 한-싱 무역투자정책 및 FTA (교차) 512 (FTA 가입에 대한 필요와 전문성에 부합, 체계적 통상전략과 FTA에 대한 이해제고),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불어) 555 (비교우위 있으나 추진 지연되어 애로사항 발생, 교수법 개선 필요),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영어) 562 (한국의 경제발전사례), CP 국제무역, WTO 및 FTA 534 (서비스산업 이해 구축,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기술 전수) 2008 - 관세행정기법 44 (관세행정 정보화 시스템, UNI-PASS 시스템의 우수성, 해외 통관 애로점 해소, 컨퍼런스 참관기회 부여), 무역진흥 124 (한국무역시장의 다변화 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 참가국의 IT기반 시설이 대부분 미흡하여 실효성 발생), 아세안 FTA 금융투자 협상능력 배양 228 (전문성 보유, 토론시간과 모의협상시간 더 필요), 에콰도르 무역투자 진흥 274, 요르단 무역투자진흥 311, 우즈베키스탄 조세행정 341, 우크라이나 경제개혁 및 투자유치 전략 과정 356, 인도네시아 국제통상 및 WTO (3차) 450 (연수기관의 매년 교제로 인해 연수기회 - 운영 - 평가의 일관성 결여, 운영 미숙), 인도네시아 무역진흥 458 (연수국 사전정보파악 필요), 조세행정 490 (한국형 모델 적용계기 마련), 카자흐스탄 관세행정기법 517 (UNI-PASS 등의 높은 퀄리티 보유, 높은 목표달성도), 카자흐스탄 무역투자진흥 3차 525, 캄보디아 조세제도 546 (세부과정 필요), 콜롬비아 무역투자진흥 564, 무역투자정책 및 FTA 추진전략/한-싱공 동연수 674 (강의내용보다 진행개선 필요), 콜롬보플랜 국제무역, WTO 및 FTA 704 (연수기관 인력부족),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불어) 741,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영어) 750 (프로그램 비율 균형적)	MDG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A: Develop further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non-discriminatory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8.9 Proportion of ODA provided to help build trade capacity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제도	민간경제 활성화	수출진흥책 중 소기업 육성	33110 (통상정책/행정/관리)	선별적 산업육성 정책, 수출지원시스템, 수출목표제 등 공유	1-1) 정부주도의 선별적 산업육성, 보조금 지급을 수단으로 하는 산업정책, 수출목표제 1-2) 1960년에 33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1964년 1억불, 1971년 10억불, 1977년 100억불, 1995년 1,000억불, 2000년 1,500억불, 그리고 2006년에 3,000억불 달성 1. 수출지원시책 태동 (1945-63년): 대외원조가 줄고 주요 수출품목인 중석(重石)수출이 각감되는 상황에서 수입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고자 1956년 12월 「수출 5개년 계획과 수출진흥요령」을 발표. 1957년 「무역법」이 제정·공표. 이후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시 독점수출권 부여, 수출진흥 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쏟아져 나옴 2. 수출드라이브정책 (1964-68년): 1964년 9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을 통해 구로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967년 기존의 「무역법」, 「수출진흥법 및 수출진흥장려보조금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폐합하여 「무역거래법」을 제정하고 무역업 허가제를 실시. 1967년 수출입기별공고제(輸出入期別公告: 현재 수출입공고)를 포지티브 (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 1963년 한국보세가공수출협회를 설립하여 보세가공수출 촉진. 1964년 11월, 「수출의 날」 제정 및 수출유공자 포상. 1965년 10월, 「수출진흥위원회」를 「수출진흥위원회 청와대 확대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 1966년 한일무역협정 체결. 1967년 11월에 상무관제를 해의주재관파견제로 부활. 1967년 GATT 가입 등을 통해 수출드라이브 추진체계를 구축. 1966년 내국 신용장(Local L/C)제도 실시, 수출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육성자금 (1964년), 수출진흥한시실자금 (1965년), 수출 산업 융·합 시설 재수입을 위한 외화대부 (1967년) 등 시설자금 지원제도 마련, 1966년 수출용 시설재에 대한 특별상각제시행 등 수출지원제도도 확충 3. 수출진흥체제의 질적 전환 (1969-1977년): 정부는 1972년에 1980년까지 1백억불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장기수출계획을 수립. 1969년 1월 수입금액의 1%를 징수하여 조성하는 수출진흥특별회계 설치. 1969년 7월 중장기 수출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수출은행의 설립. 1969년 12월 미산 및 이리 수출자유지역 설치. 1970년 KOTRA내에 「수출정보센터」 설치. 1975년 4월 종합무역상사를 육성. 이는 대내외 수출조건약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역 전문화를 통한 시장개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1971년 2월 무역협회에 「수출절차 간소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수출절차를 간소화 (수출산업을 중점개발산업, 안전산업 및 원료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활동) 4. 수출다각화 및 수입자유화 (1978-1988년): 1980년 2월 가격경쟁력의 종합적 강화방안을 실시하였고, 1986년 12월 「무역거래법」, 「수출조업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통합한 「대외무역법」을 제정·시행하여 무역관리체제의 선진화를 도모. 이는 환율변동의 실제화, 수출금융금리 및 운차비율의 적정수준 유지, 관세징수 유예제도의 연장 실시 및 임금·물가의 안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보안을 위한 정책 변화, 계속해서 1988년 2월 개별 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의 지원 폐지. 1987년 6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 폐지. 1988년 10월 관세징수 유예제도 폐지 등을 통해 수출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음. 미국, 캐나다 등 무역역주국과는 무역이탈 완화, 일본, 호주 등 적자국과는 무역역조 개선 및 수출증대, 후발개도국과는 교역확대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꾀하는 다각적 통상진흥활동도 진행하였음. UR, MFA IV, GSP 등 국제무역질서 형성에도 적극 참여하여 1978년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발족 및 1984년 연도별 수입자유화 품목 예시를 통해 수입자유화를 본격 추진하였음.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완조치로 1977년 수입선다변화, 1976년 6월 수입감시제도, 1986년 무역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함 5. 수출지원제도 보장 및 수입관리제도 개선 (1989-1997년): 국내외 무역환경의 다각화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 금융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출지원제도의 보장이 필요. 1989년 8월 무역어음제도 도입. 1992년 6월 수출보통금지 폐지. 1992년 10월 수출신용보증제도 실시,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 확대, 경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북방교역 확대, 1992년 해외시장개척기금 조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이와 별도로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여 1992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5월, 종합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 무역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이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여 수입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감. 한편 수출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제한 폐지. 수출입승인을 네거티브 (Negative)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승인대상건수를 축소. 1996년 7월 수출입통관면허제의 신고제 전환, 1997년 7월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1994년 4월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수입제한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997년 산업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종합대책을 추진	1.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수출진흥체제는 정부주도 수출진흥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일컬어지는데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무역환경의 이점을 활용하여 과감한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구사했음. 그러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점 (The Most Problematic Factors for Doing Business) 중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cracy가 정치적 불안정성에 이어 2위를 차지 2. ODA 정책 Consulting 역량은 부족
				경제특구, 수출자유지대 및 산업단지 개발,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의 기관 설립 및 지원	2-1) - Stiglitz는 자원을 성과에 따라 배분하여 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활발한 교육정책이 생산적인 노동력을 만들고 평등한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 정치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정부가 수출·교육·기술을 강조한 점, Good Coordinator로서 기업간 경쟁을 유발한 점 등을 성공 요소로 꼽음 - 한국의 성장 87%지 요인: 중화학공업화가 전반적인 수출 지향적 발전 위에서 이루어진 것. 제품주지상 성숙산업의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선별, 국내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서 기업들간 유효경쟁 (Effective Contest)이 진행, 기업가적 재능의 공급, 수출 보조금과 덤핑에 힘입어 수출가능, 유효경쟁과 점진적 개방의 실행을 위한 Hard State, Embedded Autonomy (박명옥 등) 2-2) 관리금융, High Debt/Equity Ratio, Massive Foreign Borrowing이 외환위기를 가져옴. 또한 지나친 수출의존과 내수시장 약화, 오일에의 의존도 등으로 세계 경제상황 등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게 되고 중소기업 부실을 초래 2-3) -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산업화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적어도 교역 측면에서는 개방되어 있고 세계 및 지역 경제와 통합되고 있음. 따라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만으로는 더 이상 실효력을 갖기 어려움. 산업적 예를 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당시 선진국 경제가 호황인 상태에서 수출 보조금과 덤핑에 의해 수출이 가능했으나 현재 개도국은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보조를 통해 특정 산업 육성정책을 쓸 여지가 적어짐. 그러나 LDC 등은 여전히 수출 보조금 지급으로부터 예외이며 여전히 Quantitative Restriction을 (Section B GATT article XVIII) 통해 자국사업 보호 가능. 이들 국가에는 Trips 등의 조항도 2016년까지 예외 - 대만 외에는 경쟁자가 없던 한국과 달리 현재 개도국들은 인도와 중국 같은 커다란 경쟁자가 생겼으나 이들을 오히려 시장으로 이용할 기회 또한 생김. 개도국간의 교육은 더 다양한 무역상품 및 기술 개발의 기회가 됨. 또한 Regional Integration Arrangement를 통해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Transaction Cost를 줄일 수 있음 - 최근의 Commodity Price 상승을 1차 상품의 교역을 많이 하는 개도국이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음 - 최근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존의 단일 제조회사에서 이루어지던 기능들을 분할하여 세계적으로 재배치 (단순노동이 필요한 생산과정의 일부분 개도국에 배치). 따라서 한국처럼 기술이나 자본을 경쟁능력에서 분리(De-bundle)하여 도입하거나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서도 초기기업이 기술을 흡수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워지고 Global Champion이 될만한 기업 및 기업가 육성이 어려움. 기술 이용으로 오고 예전과 비교해서 선진국들이 더욱 기술이전에 관대하지 못함. 최근 일부 자개발국에서는 자국 대기업 육성정책과는 상이한 전략, 즉 다국적 기업생산선인의 일부나 셀 센터 등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전략이 관찰됨 결론적으로: - 개도국에 실현 가능한 한국의 성공요소: 중화학공업화가 전반적인 수출 지향적 발전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제품주지상 성숙산업의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선별, 국내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서 기업들간 Effective Competition 유효경쟁이 진행 - 개도국에 적용이 힘들 수도 있는 한국의 성공요소: 기업가적 재능의 공급, 수출 보조금과 덤핑에 힘입어 수출가능, 유효경쟁과 점진적 개방의 실행을 위한 Hard State, Embedded Autonomy - UNCTAD에 의하면 한국과 같은 폭록, 정도, 속도, 순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고 보다 큰 그림을 배울 수는 있음. IDRC에 따르면 Export Nutritious Export Sector를 찾아야 함. 즉,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을 너무 강하게 서둘러서 추진했으나 동남아의 2nd, 3rd NIE 나 중국 등은 수출 지향적 발전을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선별적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수출과 생산을 주로 외국이 투자에 의해 존함. 그래서 National Champion이나 Global Player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외환위기는 적었음. 행정력의 부재나 무역자유화 등으로 인해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같이 전면적인 것을 추진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산업정책보다는 동남아나 중국의 산업정책과 비슷하거나 더 약한 것을 택할 수 있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 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3110: 1. 3.28%: 1.45% 2. 10위/29위: 3 위/23위 3. \$15.12: \$0.55 4. 미국 \$169.28: 스 위스 1.28%	1.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출 지원 역량강화 개발조사 사 업 (2007년): 카자흐스탄 수 출 및 투자 촉진에 대한 이 해증진 및 국제무역 전문이 력 능력배양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제언	2007 - 아프리카 원면수출 지원 243 (한국의 모범적 섬유기업들 의 글로벌한 형태로의 국제경영 경험은 벤치마킹 가능) 2007 - 관세행정기법 29 (일부 강사 영어능력 미흡), 관세행정 정보화 35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초래), 국제통상과 WTO 59 (한 국 만의 독특한 개발경험 전수), 몽골 수출 및 국제거래진흥 114 (육산업에 편중된 현 산업구조 개선하기 위해 무역 및 국제거래 증진을 위한 목표 의식, 1950년대 당시 한국의 산업구조와 매우 유사하여 벤치마킹 가능), 아세안 투자협상담당자 능력배양 217 (아세안과의 FTA 투자 분야 협력 제고), 아프리카 파트너십 (국 제통상과 WTO) 251 (세부 주제 외에 아프리카-한국간 파트너십 협력 강화 측면에서 유용), 알제리 해외직접투자 264 (구체적 사 례 소개 필요), 이라크 관세기법 318 (통관자동화시스템 등 관세 행정정보화 우수성 인정받음, 체계적 관세행정시스템 구축 기 여 및 정보격차해소, 이라크의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기술적 수 요가 주제 선정에 반영되지 않고 비교우위인 관세정보화에만 치 중), 이란 파트너십-국제통상 및 WTO 359 (연수국 경제사정 등 에 대한 지식 부족), 인도네시아 국제통상 및 WTO 2차 380 (만 족도 다소 낮음, 전문적 강의내용에 대한 연수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조세행정 402 (한실적 대안 제시의 타당 성, 연수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카자흐스탄 무역투자진흥 2차 429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산업발전, 무역정책 방 향 논의, 무역촉진 위한 민간 역할 논의), 한·싱 무역투자정책 및 FTA (교차) 512 (FTA 가입에 대한 필요와 전문성에 부합, 체계적 통상전략과 FTA에 대한 이해제고),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 흥 (불어) 555 (비교우위 있으나 추천 지연되어 애로사항 발생, 교수수 개선 필요),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영어) 562 (한국의 경제발전사례), CP 국제무역, WTO 및 FTA 534 (서비스 산업 이해 구축,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기술 전수) 2008 - 관세행정기법 44 (관세행정 정보화 시스템, UNI-PASS 시스템의 우수성, 해외 통관 애로점 해소, 컨퍼런스 참가기회 부 여), 무역진흥 124 (한국무역시장의 다변화 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 참가국의 IT기반 시설이 대부분 미흡하여 실효성 발생), 아 세안 FTA 금융투자 협상능력 배양 228 (전문성 보유, 토론시간 과 모의협상시간 더 필요), 에콰도르 무역투자 진흥 274, 오르 단 무역투자진흥 311, 우즈베키스탄 조세행정 341, 우크라이 나 경제개혁 및 투자유치 전략 과정 356, 인도네시아 국제통상 및 WTO (3차) 450 (연수기관의 매년 교체로 인해 연수기획 - 운 영 - 평가의 일관성 결여, 운영 미숙), 인도네시아 무역진흥 458 (연수국 사전정보파악 필요), 조세행정 490 (한국형 모델 적용 계기 마련), 카자흐스탄 관세행정기법 517 (UNI-PASS 등의 높 은 퀄리티 보유, 높은 목표달성도), 카자흐스탄 무역투자진흥 3 차 525, 캄보디아 조세제도 546 (세부과정 필요), 콜롬비아 무 역투자진흥 564, 무역투자정책 및 FTA 추진전략/한·싱공동연수 674 (강의내용보다 진행개선 필요), 콜롬보플랜 국제무역, WTO 및 FTA 704 (연수기관 인력부족),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불어) 741,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영어) 750 (프로그램 비율 균형적)	1. MDG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A: Develop further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non-discriminatory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8.9 Proportion of ODA provided to help build trade capacity 2. 아프리카의 연화수출국은 우리의 섬유산 업 육성 및 수출 정책과 기술이 전을 희망	1. - 정부 주도 수출진흥정책의 추진은 최빈국에 적용 (예: 라오스, 방글라데 시, 캄보디아, 에맨 등) - 수출진흥정책 및 대기업육성정책 은 저소득국가에 적용 (예: 몽골, 베 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 공업화를 위한 수출진흥정책은 중 소득국가에 적용 (예: 스리랑카, 인도 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아제르바이 잔, 알제리,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 IDRC에 따르면 Export-led Growth 는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나라에 적용 가능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행정 제도	민간 경제 활성화	수출진흥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	32130 (중소기업개발)	중소기업 육성 및 진흥정책관리자 교육	1-1) 1-2) - 전문 무역인 양성 교육. 무역은 그 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무역인력양성 또한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무역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에 무역학과를 설립하고, 기업에는 종합상사를 지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인력의 공급체계를 담당.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무역인력 해소를 위해 온라인 무역 교육과 지방소재 대학에 Trade Incubator제도 시행하여 무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무역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그 결과 71사업은 국내제조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고 평가됨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김학민, 이호형 <무역인력의 초기경력개발계획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2006) - 1960년대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영세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체, 그리고 대정부정책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화부문에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 (1975))을 제정하는 등 정부는 일관되게 중소기업의 전문화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 진흥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들의 선택으로 이는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함. 1970년대까지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과 기구가 만들어졌으나, 1980년대를 통해서도 산업조직상의 대·중기업간 균형 있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함. 그 결과 중소기업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정보통신혁명과 우주과우이라운드에 따른 개방과 경쟁 확대 속에서 오히려 더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술·정보 등 혁신역량을 대기업과 큰 격차가 생김. 이에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그 역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내생적이며 구조적인 문제, 즉 중소기업간 협력, 중소기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중소기업제품 판로의 안정적 확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의 필요성 대두됨 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경험 1-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1.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 등으로 경공업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대기업 및 재벌들에게 주어진 관심과 동기부여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함
		ICT 교육 제도 기반 구축		ICT 교육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ICT 교육 중장기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술 인력 육성계획 자문: ICT 교육기관 운영계획 수립		
정보 통신	ICT 분야 인력 양성	ICT 교육 인프라 구축	22040 (정보통신)	ICT 교육센터 설립, 교육 기지재 등 기초 인프라 사업 지원	1-1) 고등교육지원의 방송통신대 참고 1-2) IT 산업은 제조업 위주이므로 교육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선진 컴퓨터 관련 기술을 전수. 지방국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 관련 기초 교육 및 교사들에 대한 지도와 학교의 전산실 지원을 통해 지역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함 1-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아시아협력기구 2-3) IT 교육센터 등 인적 개발분야를 하위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사회적 수요의 종합적 검토 속에서 교육이 디자인되어야 함	2. -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보다는 정보접근센터, IT 교육센터, S/W 지원센터 등 Human Resource Development와 관련된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과 우리가 경험을 축적한 전자정부사업을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된 수원국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ICT 협력사업추진 전략) - 시설구축의 경우 지속적인 교체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위험 부담이 있는 하드웨어 보다는 운영프로그램, 교재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방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IT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크므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역량이 낮을 수 있음
		교사 양성		강사인력양성, 교사 연수 커리큘럼과 교재 지원	1-3) 대한상공회의소, 다우데이터 교육원, 방송통신대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2130: 1. 2.73%: 0.94% 2. 14위/29위: 7 위/23위 3. \$9.02: \$0.30 4. 미국 \$52.61: 이태리 1.67% 평균 2.73%로 차별성 있고 통상행정정책을 제외한 중소기업 육성분야는 원조액도 많지 않음. 통상행정정책 및 중소기업개발은 모두 미국이 주요 공여국임	1.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개발센터 IT 인프라 구축 (2001년): ITC 분야 협력사업 평가 (2007)에 의하면 평가된 4개 사업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음. 그러나 성과가 높게 나온 사업과 격차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무름 연수사업 외에 경험이 많지 않아 평가가 어려움	2007 - 우크라이나 기술혁신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 303 (전문통역인 필요, 탁월한 운영능력, 한국 중소기업현황 및 지원정책의 이해), 중소기업육성 416 (다국 참여로 인해 효율성 증감), 케냐 중소기업육성 436 (산업시설에 대한 만족도 높음), 페루 중소기업육성 496 (역량강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노하우 전수), APEC 중소기업 혁신경영전략 526 (경영혁신마인드 제고, 조직혁신 및 기술혁신, 기술습득, 국가별 적용 가능한 혁신전략수립에 기여, 양극화 문제 해결,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 전수), CP 중소기업육성 540 (육성전략 수립 및 대안 모색, 노하우 공유) 2008 - 중소기업육성 496 (맞춤형강의), 튀니지 중소기업진흥정책 623 (다양한 관심분야 허용이 어려워 목표달성 측면에서 취약), 파라과이 중소기업 육성 635, 콜롬 보틀랜 중소기업육성정책 711		1.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정책이 낙후된 국가 (APEC 국가) 및 LIC
22040: 1. 7.34%: 89.19% 2. 4위/4위: 1위/4위 3. \$1.85: \$21.69 4. 캐나다 \$9.99: 캐나다 0.34%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JICA나 세계은행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캐나다가 주 공여국이며 한국도 캐나다만큼 많이 지원하고 있음 ITC 분야는 전통적인 개발 섹터가 아니기에 상위 섹터로 분류시 하위 섹터가 4개밖에 나오지 않음. 따라서 하위 섹터가 많은 다른 분야처럼 차별성에 관한 점수를 매기기 어려움. 오히려 전체 CRS 코드의 순위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함. ICT는 전체 ODA 사업 194개 분류 중 (양다자/무-무상) 150위를 차지하여 다른 공여국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ITC 분야는 세분화 되지 않고 CRS 코드 하나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기 힘들	1. 방글라데시 교육분야 ICT 훈련원 건립 사업 (2006-2007년): 교육인원이 1일 2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연간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중등교사, 교육부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받은 중등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내용 전파 2. 엘살바도르 IT 교육센터 지원사업 (2006-2007년): 연평균 100여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최고의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 발전 중 3. 모로코 알아카와인대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건립사업 (2006-2007년): 동 센터가 개발한 교육자료를 인근지역 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간 회의 시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협력체제 구축에도 기여 4. 한·필 IT 훈련원 건립사업: 케손, 불라칸 두 곳의 훈련원 모두 활용도가 매우 높아 지역 내 고급 IT 인력양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었음. 필리핀 IT 훈련원 건립 사업은 교육대상·커리큘럼·기업체의 인력 및 기술 요구 수준·채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고급인력양성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교육 콘텐츠 역시 확보 필요. 기자재 위주의 공여에 대한 위험성 존재. 제품 사이클이 짧고 우리와 IT 사용환경이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충들로 방치될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낮음 5. 이집트 정보통신원격교육센터 지원사업 (e-Learning): 당초 통신분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무바라크 경찰대학을 위한 e-Learning 과정을 제공하는 등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원격통신을 통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타 사업 전문가 파견시 등 스토리지에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기간을 연장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6. 탄자니아 다레살람 대학교 ICT 교육강화사업: 탄자니아 최고 수준의 ICT 교육기관을 구축했다는 평을 듣고 있음. ICT 교육 모델 케이스로 부각되고 있음 7. 엘살바도르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 2차 사업: 매년 e-Commerce, e-Learning, ERP, Multimedia 등 4개 과정의 1000여명의 훈련생들이 활용하는 등 지원된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높음. 여타 훈련기관에 개설되지 않은 위의 4개 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훈련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취업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2007 - e-Learning 350 2008 - e-Learning 149		1. 경제규모가 크고 정보화 수준이 낮은 국가: 정보화 의식 촉진,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봉사단 등 기초인력 중심의 협력사업, 국내 기업의 간접적 연계 강화, IT 코리아 홍보 및 이미지 제고 "1.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된 수원국: 정보 접근센터, IT 교육센터, S/W 지원센터 등 HR Development와 관련된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2.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ICT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인력 양성 및 PC 등 ICT 관련 물자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
		2007 - 벨리즈 IT 교사능력개발훈련 195 (매우 우수, 기간조정방안 검토), IT 인적자원개발 366 2008 - 가나 IT 교사 양성 3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정사 에노 보조	전자 정부 구축	제도 적 기 반 구 축		전자정부 초기 단계인 국가의 경우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1-1) -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1, 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추진하였고,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우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부처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 정부적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1999년에 수립,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 높이고, 국민 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함. 또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설자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그리고 체계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11대 전자정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선정 추진, 2002년에는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여 국가정보화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최근에는 'u-Korea'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자정부 실현을 이루어 가고 있음 (안문석 외, <전자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행정자치부, 2000.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 발전사>, 아이엘, 2005) - 국민의 정부 시절 11대 중점 과제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1대 로드맵 과제를 수행을 위해 약 9,180억 원을 투자함 -이명박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9조3000원 (정부 14조 1000억원, 민간 175조2000억원)을 투자해 IT융합·SW주력 IT·방송통신·인터넷 등을 육성하는 IT코리아 5대 전략을 발표했고, 업계 간의를 받아들이며 청와대에 IT 특보를 신설했음.	
			인프라 지 원	기본인프라: 초고속통신망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통합 데이터센터, 통합통신망 구축,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실시 전자조달, 관세행정, 주민등록, 우편정보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행정정보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 및 정보처리 환경을 온라인 중심으로 구축하는 그룹웨어 구축	1-2) - 전자조달: 조달청 '나라장터'는 3만 9000개 공공기관과 15만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2008년 한해 63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짐. 하루 웹사이트 방문 횟수 178,000건과 140,000건에 달하는 전자문서 교환, 시간 및 운송 면에서 절약 (일 년에 US \$410 억 불). 조달정보가 공개되고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져 입찰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경쟁을 가져오며 투명성 향상 효과를 가져옴. 전자조달은 또한 전자상거래를 발달·촉진시키는 계기가 됨. 2003년 The First UN Public Service Award, 2004년 The Best e-Government Service Provider by OECD, 2004 UN의 Best Practice Model for e-Procurement from Around the World, 2005년 BS 15000 by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6년 the Global IT Excellence Award in public sector by the 15th World Congress on IT 수여 받음. 최근에는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으로 수출됨 (참고: Dadang Solihin, Public Officials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ogram for Government Innovation, 2007)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 분야에서 ISO 20000 인증 - 국제청 헬프데스크 - Web 기반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었던 2002년부터 민원신청 및 발급에 대한 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무관, 창구무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실현. 또한 행정 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9년 8월까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문서 업무 재설계 (BPR) 사업을 통해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 문서의 종류를 도출, 2001년부터 정부 내 유통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는 행정을 구현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정부문서의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대폭 단축시킴. 또한 2개 부처 이상에서 중복 관리되는 행정정보를 일원화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하며 정보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전자 지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보를 정보적으로 생산하고, 생성된 정보의 전자화 및 DB구축, 네트워크구축 등을 통하여 전자적 정보관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 이와 함께 인터넷, 키오스크,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2002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관청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전자민원 만족도가 향상됨	
	정보통신	전자정부 구축	15140 (공공행정)		전자조달, 관세행정, 주민등록, 우편정보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행정정보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 및 정보처리 환경을 온라인 중심으로 구축하는 그룹웨어 구축	1-3) 성공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 연구소, 성공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T인재개발원, 통계청,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산원, 행정자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 전자조달 성공요소: (1) 전자정부에 대한 전정부적 Promotion System이 있었으며 (국민연금, 교육, 조세, 인사 등) 전자조달은 그 11개 프로젝트 중 하나였음 (2) 예산지원에서 Top priority였음 (3) 사용자의 Input을 개발단계 초기부터 반영함 (4) 전국각처에서 통신 인터넷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었음 (5)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1999년부터 계속 있었음 (6)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조달 시스템을 만들 (참고: Dadang Solihin, Public Officials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ogram for Government Innovation, 2007) -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요인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유관부처간의 협력과 조정, 민간부문의 기술력, 민간위원과 담당부처 공무원의 헌신 등으로 요약됨. 또한 추진 전략상으로는 선택과 집중원리, 주관부처 위주의 개발, 공동 애로사항의 제거, 그리고 체계적인 점진전략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됨 (참고: 나라기록원) 2-3)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나 정보격차 해소 등의 성과도 정보화 촉진 기금 등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추진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선진국이나 여타 개도국이 쉽게 모방하거나 이식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음 - 가나와 같이 수원국 정부 인프라 구축 능력과 우리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능력 간에 현격한 차이로 인해 향후에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도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오류 등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미얀마 IT 마스터 플랜, 요르단 정보화 지원 등도 연수 및 전문가 파견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각 국에 특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 대두됨
	전자정부 담당 인력 양성			정부전산담당 인력양성 및 정부부처 공무원 전산교육 강화		

1.
- UN 전자정부 준비지수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중 2004-2005년 2년 연속 5위, 2008년에는 6위로 평가 받았음. 또한, 성공관대의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됨
- 전자정부 달성수준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전자거래나 통합처리 등 전자정부 상위단계에 대한 발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단계별로 '착수' 및 '발전' 단계의 달성수준은 각각 100점과 93점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상호작용' 단계의 달성수준은 76점으로 선진국 최고점수(90점 내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국가기간망 구축사업 (SN)은 개발 단계에서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선진국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 룹별 적용가 능성
USAID의 전자정부 사업은 일본 JICA와 제휴를 통해 실시. UNDP도 주 공여국 임	1. 가나 전자정부 구축사업 (2007-2008년/150만 달러): 현지 열악한 전압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6월) 정상화하여 운영 중. 가나 외교부 내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오류 등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됨. 가나 정부 인프라 구축 능력과 우리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능력 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향후에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전자정부사업 등 고난이도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측 전문가를 1년 정도 상주 파견시켜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집트 국립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건립사업 (2004-2006년/130만 달러): 우리가 지원해준 기자재 및 기술을 바탕으로 6개의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모델사업으로 효과가 큼. 2개 회사를 대상으로 2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17개 프로젝트는 진행 중임. 최근에는 ISTQB (Int'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 Board)에 이집트 소프트웨어 테스트보드를 추가하는 등 활동이 활발함 3. DR 콩고 4개 부처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2007-2008년/161만 달러): DR 콩고 관료들의 컴퓨터 등 OA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해 데이터 통신망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4. 몽골 외교부 외교문서 DB 시스템 구축사업 (2005-2006년/60만 달러): 지원 기자재 및 장비의 활용 상태 양호함. 외교부 및 타 부처 직원과 일반 시민들도 외교문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짐. 몽골 정부 부처 및 여타기관에서도 동 사업의 성과를 인지하여 동 기관 내 전자 문서 보관소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임 5. 요르단 2개 정부부처 정보화 지원사업 (2004-2005년/90만 달러): 동 사업의 주요 구성 요소인 기자재 지원이 사업목표 달성에서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IT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함. 오라클 분야에 리눅스 전문가가 잘못 파견되는 등 파견자 전문성이 수원국 희망과 불일치함 6.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2004-2005년/950천불):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인트라넷 및 문서유통시스템·출입국관리시스템·차량등록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부 대모시스템을 구축 7. 파라과이 외교부 현대화 지원사업 (1997년/400만 달러)	2007 - 과테말라 전자정부 165, 모로코 전자정부 181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베트남 IT 감사 세미나 188 (연수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수원국에 수요에 맞는 목적 제시 미흡), 아프리카 전자정부 203, 이라크 전자정부 228, 전자정부 271 (기간 조정 필요), 행정정보화 관리 327 (비교우위 높음, 커리큘럼 우수, 효과적인 적용도 보여줌, 전문적이고 심화된 주제 필요) 2008 - 과테말라 전자정부 9, 모로코 전자정부 18, 미얀마 전자정부 24, 베트남 전자정부 31, 이라크 아랍빌 정부 DB 구축 및 관리기술 45 (통역문제), 이집트 전자정부 58 (프로그램 다양성 필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64, 전자정부 73, 카메룬 전자정부 121, 파라과이 전자정부 129	2. 2010년 수요요청 16건으로 세부 분야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임	1. 전자정부사업은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되고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된 이집트와 같은 수원국에 지원이 가능하며 가나와 라오스 등의 예에서 보듯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은 관리·유지가 어려움 2. -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등 정책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국가가 전자정부 및 ICT 응용기술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 - 전자정부 지수 전체 평균은 0.42이며,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이 가장 낮음 (OECD, 'Exampl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National Development Plans as of February 2003'). 수원국 선정시 UN 전자정부준비지수를 참고할 수 있음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정보통신	분야별 정보화 촉진	전자상거래, 경영정보시스템 등 ICT 활용 기술 계획 수립	22010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 법안 제시: 국가적 ICT 마스터 플랜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ICT 산업육성정책	1-1)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한 이래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계획>, 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 정보화 추진 위원회 및 정보화 촉진 기금의 설치, 1998년에는 정보화 전략 회의 등을 통한 범국가적이고 일원화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였으며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선순환의 구조를 확립함. 2002년에는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여 국가정보화 고도화 단계에 들어섬.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 정보화, 금융정보화, 재정정보화, 행정정보화, 교육정보화, 문화정보화, 보건복지정보화, 지역정보화, 환경정보화관련 시행계획 및 법이 있음 2-1) 2000년대 벤처산업에 대한 지나칠 만큼의 과감한 지원책으로 ICT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벤처사업시장이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함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T인재개발원	1. ICT 기술경쟁력 상위(선진국 대비 87%): 미국, 유럽, 일본에 다수 뒤짐. - SW 보다 제조업비율 큼. 하드웨어 부문은 최근 중국과 대만의 급부상으로 인해 예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광대역통합망, 디지털 TV방송분야의 홈네트워크, 차세대 컴퓨팅 및 주변기기, 지능형 로봇, IT SoC 및 부품, RFID/USN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정보보호는 83~89% 수준, IT 융합과 소프트웨어 Solution은 낮아서 75~79% 수준임. R&D 및 기술혁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적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 특허 출원 건수도 많음, 그러나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 IT 수출경쟁력은 양적 지표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급 2. - ICT의 수출특화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가 OECD 국중 2.3으로 1위임에도 (OECD ICT Outlook 2008) 예상과 달리 세계은행 2003-2007년 수주실적이 한 건도 없음. 이는 세계은행의 발주사업 중 도로, 수자원, 보건 의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 ICT, 폐기물 처리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있을 것임 - 컴퓨터: 비교우위 가지고 봉사단원선발이 쉬운 분야
		교육, 의료, 농업,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ICT 활용 기술 역량 강화		인터넷 기반의 ICT 신기술 지원을 통해 전자도서관, 원격진료, 기상업무 등 경제·사회분야에 관련된 ICT 활용 자문, 경영 정보시스템 등 구축사업 (e-Business, e-Commerce)	1-1) 정보화촉진기본법 1-2) - 부문별로는 e-Post 서비스 혁신으로서 추진전략에 기반한 체계적인 우정사업 정보화 추진과 인터넷우체국 시스템 성능향상 및 서비스 고도화, 지식경영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우편전략사업 시스템 고도화, 우체국금융 정보화 중점기 정보전략계획 수립, 우체국금융 위험관리 및 자산부채관리 시스템 구축,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구축, 우체국보험 고객재무설계시스템 구축 - 기술적인 변화로는 RTE, BPM, EA 등 최신 IT 관리방안 발전과 Web Service, 유비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이 발전해옴. 또한 지식네트워크의 광대역화가 추진되고 있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있음 - 1996년부터 인터넷 쇼핑을 등장, 1999-2000년 국가적인 벤처붐이 일어남 1-3) 한국정보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다우데이터시스템 교육원, 기상청, KT인재개발원 2-2) 이런 IT 브랜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화의 성과 부족, 사회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의 심화, 정보사회에 부적합한 법·제도 관행의 진존, 정보화 역기능의 확대 등으로 종래적인 정보화 수준은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됨 (홍종화). 또한 Explorer 등 MS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 보안 문제 등이 대두됨	
		담당인력 양성 및 정보화 교육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 양성	1-2) 한국 디지털 청년봉사단 사업 추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1026명을 51개국에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 24276명을 대상으로 IT교육 및 한국 IT 산업의 홍보 등을 수행하여 큰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 봉사단은 기술협력 가능 1-3) 다우데이터 교육원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22010: 1. 28.28%; 10.11% 2. 2위/4위; 2위: 4위 3. \$4.40: \$1.39 4. 일본 \$31.79: 핀란드 0.41% (통신평가와 행정은 99위/194개로 차별성 보통. 일본이 주 공여국)	1. 과테말라 외교부 e-Library 구축사업: 수원기관의 지속적 투자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e-Library 활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통합관리 및 검색 소프트웨어'의 코드공유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원 효과는 일부 외교부 직원 및 관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사업: 중요 도서관의 전자화를 통한 도서 부족 문제를 해결. 우즈베크 내 유일한 전자도서관으로서 타 대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음. 효과 의문 3. 몽골 IT PARK 구축 지원사업 (2002-2003년): 동 사업 실시 이전에 몽골에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없었으나, 동사업 이후 다수의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설립 운영 중. 현재 추진중인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관세통관시스템 구축사업'에 동 IT Park에 입주했던 업체가 참여중 (개발도상국 정보화사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 획득) 4.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개발센터 IT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목표달성 등 만족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실제 활용 및 성과 미흡. IT분야 협력사업 평가 가장 낮게 나옴 5. 우크라이나 원격진료 네트워크구축 사업 (2005-2007년/1000천불): 우크라이나 최초로 원격진료기술 도입. 표제사업을 원격진료센터 모델로 정립하여 타 지역까지 확대 예정	2007 - 알제리 정보통신진흥 211, 이라크 아르빌 정보통신정책 219, 이라크 정보통신기술관리 236, 이라크 정보통신정책 245, 정보통신정책 (FEALAC 회원국 대상) 279, 카메룬 정보통신정책 303 (실질적 적용을 위한 내용부족, 전문성 결여, 비교우위 높음, 연수생 자질 문제제기) 2008 - 이라크 (아르빌) 정보통신관리기술 38 (강의 및 교재준비 부족, 연수생의 영어 실력 부족 등으로 효율성 저하), 정보통신정책 96, 정보통신정책 (카메룬, 이집트) 104, SAARC 특별연수-정보통신정책 163 (만족감 높음) 2007 - 전자무역 및 수출진흥과정 (OAS 회원국대상) 263, 정보통신활용기술능력 배양 287, 중소기업과 e-Business 295, e-Business 343, ICT를 이용한 기업업무향상 358 (수원국의 실정과 형편에 맞는 수준 포함) 2008 - 정보통신 활용기술 능력향상 87, 중소기업의 E-Business화 112, COMS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향상 134, e-Business 143, ICT를 이용한 기업업무향상 155, SAARC 정보통신활용기술 능력 배양 170 (비교우위 높음, 기간연장 필요) 2008 - 정보통신활용기술 능력배양-네트워크 관리전문가 양성 80, ICT분야 협력사업 평가 91 (사업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IT분야만으로 엄격히 교육분야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KOICA의 봉사단 사업에 통합하여 내실 있는 해외 IT교육봉사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2. 비교우위 높으므로 수원국의 요청의 제1 순위	1. - LDC: ICT 인력 양성 - LC: 네트워크 환경 등 인프라 - MICs: 정보화 발전시스템 구축, 응용기술 - 경제규모가 작고 정보화 수준이 낮은 국가: 정보화 의식 촉진, 정보격차 해소 노력 강화, 국제기구와의 연계강화 필요함 - 경제규모가 크고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정보화 응용 및 활용분야 협력 추진, 전문 고급 인력 중심의 협력사업, 시장진출 전략 구체화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정보통신	통신 전략	통신 기반 정비	22020 (통신/전화)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보급 전략	1-1) 1999년에 'Cyber Korea 21'을 발표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통신망의 고속화 및 고도화를 적극 추진 1-3) KT 인재개발원 2-3) 지속적인 교체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위험 부담이 있는 하드웨어보다는 운영 프로그램, 교체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방식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텔레콤 사업에서의 성공이 돋보이고 한국 통신망 시장이 매우 경쟁력이 있으나 (EIU) 통신정보처리 관련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수주 규모가 매우 작음 - 2007년 6월 기준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9.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전반적인 국가정보화 수준에 있어 세계 10위권 이내에 속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유국으로 급성장 2. - ICT 협력사업 추진전략 (2005)에 따르면 정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활용도에 맞게 현지화 되어야 하는 국가기간망 구축사업 (SI)은 개발 단계에서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예산의 제약으로 JICA 등 선진국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SI는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발전방안에서 주요협력 분야로 제시되었으나 실상 위의 제약점을 고려하지 않음 - 각 개도국의 건축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잡함
	통신 장비 지원			Telephone networks, Telecommunication Satellites, Earth Stations 기술 및 장비지원		
	통신 능력 배양 지원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제공		
지역 개발	농업 생산 향상	농업 용수 확보	31140 (농업용수자원),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하천수와 저수지 활용에 관한 자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설치에 관한 자료, 농업용댐 및 농수로 건설	1-1) 한국농어촌공사는 수해면적 50~3,000ha미만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한국전쟁이후 국제원조기관의 도움으로 관개용 담인 가창댐과 종리댐 건설. 또한 1962년부터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삼천강댐, 춘천댐, 남강댐 등 건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 1-2) - 1970년대 <수자원 개발 10개년 계획 (1970~1980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용저수지를 개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하여 단일목적 수력 발전댐의 개발에 목표를 둔, 그 결과 이수와 치수를 병행한 수자원을 개발하였고, 소양강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을 시작, 그리고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에 1단계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한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 1980년대 <수자원 장기 종합개발계획 (1981~2001년)>: 지속적으로 안정된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댐 및 하구둑을 건설하고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며 오일위기로 인한 정부의 탈석유 정책에 부응하여 수력에너지원을 증대, 이 계획의 성과로 충주댐 (저수량 2,750백만 t), 합천댐 (790백만 t), 주안댐 (707백만 t) 등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광역용수공급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며, 수계별 치수사업을 시작하였고 낙동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 1990년대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1991~2011년)>: 하천정비시 하천 환경 관리개념과 지하수관리제도를 도입, 운문댐, 횡성댐, 밀양댐 등 1억㎥ 이하의 중규모댐을 개발하고, 5대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중·소 수계로 확대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년 7월)>, 건설교통부 <담건설장기계획 (2001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 - 1986년 FAO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관개용지는 1.20*106 ha. 수자원공사 통계 (2007)에 의하면 1인당 한국의 가용 수자원은 1491m3임. 국제 인구증가동향구조에 의하면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며 이는 수자원개발이 없는 자연하천수에 물 공급을 의존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인 물 공급문제가 발생됨을 의미. 우리나라는 재생가능한 수 자원량에서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하천수 취수율은 36.5%로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어서 물 이용률이 높음을 의미 1-3) 건교보,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이 통합된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연구원, 지하수넷, 한국관계배수위원회, 함께하는 사람들, 지구촌 나눔운동	1. 농업,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관리는 비교우위 분야임. 주요 분야의 기술력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경우 용수 및 수리시설개발이 3.04로 나타남 2. 한국은 수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인프라와 하천수 수취율 등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유. 특히, 상하수도 보급률과 농업용수 관개율을 나타내는 수자원 인프라는 20만점에 19.3점을 획득하여 비교대상 147개국 중 27위를 차지함. 하천이나 댐 관련 건설기술도 비교적 빠르게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관개배수시설 건설 및 보수, 관개수로 내 침전 토사 제거, 경지정리·간척지 개발 등 대단위 농업생산기반 정리, 지하수 관리		
				생산지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양성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 별 적용가능성
22020: 1. 43.76%: 0.25% 2. 1위/4위: 4위/4위 3. \$5.85: \$0.22 4. 미국 \$58.63: 덴마크 0.53% (통신 쪽은 전체 84/194위이기 때문에 차별성 크지 않음. 주 공여국이며 한국은 거의 지원하지 않음)	1. 예멘 통신망 현대화 사업 (1998년) 2. 파라과이 중앙부처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 사업 (2007년): 중앙정부 10개 부처간 통신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각 부처 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업무능률 향상 지원 3. 콩고민주공화국 6개 부처 정부통신망 구축사업 (2008년): 4개 정부부처 내 로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평가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음	2007 - 파라과이 통신인프라구축 및 인터넷 보급 316 (목표달성도 매우 낮음, 구체적·실질적 내용 부족) 2008 - 이라크 중앙 통신 인프라구축 및 인터넷 보급 51 (이라크는 높은 편)	1. MDG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E: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8.14 Telephone lines per 100 population 8.15 Cellular subscribers per 100 population 8.16 Internet users per 100 population	
31140: 1. 6.69%:15.17% 2. 5위/31위: 2위/23위 3. \$4.68: \$1.49 4. 일본 \$22.18: 일본 0.78%				
31150: 1. 3.44%: 1.33% 2. 8위/31위: 14위/23위 3. \$7.15: \$0.09 4. 일본 \$80.07: 일본 0.70%	1. 태국 농경 저수원 개발사업: 완공된 저수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담수어 양식장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우리의 새마을운동식 농촌개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	2007 - 이라크 지하수 개발 및 관리 68 (한국의 비교우위), 아프리카 지하수 개발 및 관리 (농업용수) 88 (토론 및 현장견학, 실수 위주로 개선 필요), 이라크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125 (만족도 전반적으로 높음)		1, 2. - 아시아 최빈국의 경우, 기초 인프라 낮은 기술의 문제가 있음. 생산성 기술향상을 위한 용수개발과 수리시설 확충 지원 -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식량증산 위한 농업 용수개발과 수리시설, 생산성 향상 위한 영농 기술개발, 수확 후 관리 기술 적용가능
평균 5.1%로 차별성은 크지 않음. 일본이 주 공여국. 타국은 기자재보다 용수지원이 더 많음	2. 캄보디아 타목 저수지 복구지원사업 (2007년): 매우 성공적인 사례. 성공적인 농업용수 관개 사업 후 충분한 수자원이 확보된 후 마을이 형성되어 인구가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고 양식장이 (50개→330개) 증가하며 공장들이 세워짐. 관개면적이 당초 1,500ha에서 1,900ha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3모작이 가능함	2008 - 르완다 농업용 수자원관리 218 (지속적 연구과정 개설필요), 세네갈 농업용 수자원관리 244, 이라크 아르빌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319, 이라크 중앙 관개용수 관리 및 자동화 공급 시스템 326, 잠비아 농업용 수자원관리 342 (원활한 진행, 연수기간 대체적으로 부족, 지역: 아프리카 및 아세안, 지하수 개발, 이라크 농업용수 관리·관개개발, 르완다·세네갈·잠비아 농업용수 자원 관리)		- 중남미의 경우, 영세소농지원을 위해서는 전작용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에 지원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지역 개발	농업 생산 향상	농업 연구 및 종개발	31182 (농업연구) 31120 (농업개발)	우량 및 신품종 개량, 재배기술 개선: 잠업 기술 및 버섯 재배 기술 전수	1-1) 잠종 육종 및 잠종 생산 기술 지원, 육작 및 잠견 생산 기술 지원, 제사 및 견적 기술 지원, 천연 염색 및 견직물 가공 기술, 한국의 양송이, 느타리, 표고, 영지버섯 등 고급버섯 재배 기술 보유. 농촌진흥청이 직무 육성한 우수품종의 농가 보급.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유전자원정보DB 구축 1-2) 22만 4천 개의 유전자원 보유하여 세계 6위권의 유전자원 보유국으로 성장 1-3) 한국과기산업,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국립종자관리소, 지구촌 나눔 운동, 원도문화개발기구 2-3)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산업으로서의 접점은 한국에서 이미 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잠업 관련 기술이 유훈화되고 있는 실정임. 살아있는 현장을 보여주지 어려움	1. 잠업관련 기술 즉, 잠종 생산, 제사, 견직, 나염 등의 분야에서 고급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축적되어 있음
				시험연구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중앙지방정부의 관련 보급정책 및 DB 구축, 가축 사양 및 번식기술 지원 (종돈 생산 및 양돈 진흥사업 지원, 종개 생산 및 양계 진흥사업 지원, 구제 역 방역기술 지원)		2. 농기계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90%로 비교우위 높음, 열대지역 농업 및 삼림경영은 경쟁력이 낮음,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기술에서도 기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및 한국의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20.2%가 식량작물 분야 지적하고 있음. 주요 분야의 기술력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경우 쌀이 3.11 (5)로 가장 높은 점수, 양잠이 3.10, 버섯이 3.08로 나타남
		농업 소득 지원 정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가 소득 지원 정책, 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농업구조개선 정책, 선별적 농촌 공업화, 농공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1. 농업분야 경쟁력이 높지 않음. 한국의 농가인구 비율은 선진국 2-3%에 비해 7%이나, 규모의 경제 실현 못함 2. 한국의 농업정책개혁에 관한 KREI-OECD 공동 워크숍의 발표자료 중 Korean Agricultural Policy Reform OECD Perspective 따르면 OECD의 한국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19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지역개혁은 OECD minister들에 의해 정의된 원칙에 일반적으로 맞음. 그러나 Producer Support Estimate (농민에 대한 Gross Transfer)에서 한국은 60~70%로 OECD 국가들의 30~40%에 비해 높은 편. 가격정책은 99% (1986~1988년)에서 91%로 줄었고 소득보조금은 5% 늘어남. 고정지급금은 가격보조정책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소득문제를 겪고 있는 농부를 대상으로 하는 budgetary payment가 더 바람직할 수 있음. 땅에 대한 사용제한은 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안될 수 있음
				농업통계조사 지원		
				농업통계조사 지원	1-1)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지역의 선별적 공업화, 농외소득 증대 정책, 농가규모 확대 및 경영안정정책, 농가등록제를 통한 차별적 지원 - 농외소득 증대는 1960년대 말 농가부업개발사업에서 출발. 그 후 개방화와 함께 농외소득 증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됨에 따라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농산물가공사업 육성, 농공단지개발,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됨.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농외소득개발정책에는 1968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 (1989년 이후 농어촌특수단지로 개명)과 1973년~1983년에 걸쳐 상공부와 농촌공업화촉진본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새마을공업단지 조성사업,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농공단지 및 관광농원개발사업, 그리고 198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전통식품개발사업 및 산지농산물가공공장건설사업이 있음. 1990년 WTO 대책을 마련하면서 농외소득원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사업들은 계속 추진함 1-2) - 농외소득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 1단계는 1960년대 후반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으로 당시 농촌지역의 풍부한 유류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산자재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에 참여하거나 과수나 약초를 재배 혹은 양봉, 토끼 등과 같은 중소가축을 활용한 부업형태의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려 함. 제 2단계 (1973~1982년)는 새마을공업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을 농촌지역에 유치하여 취업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영세업체를 농촌지역에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제 3단계 (1983~1989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관광농원 등의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시행규고와 방식에서 변화가 조금씩 있었을 뿐 큰 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제 4단계 (1990~현재)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에 의해 1980년대의 농외소득정책을 수용,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개방화 논쟁 속에서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짐에 따라 농외소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저하.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감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농외소득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함. 다만 농촌이 메니티란 새로운 시각으로 농촌체험이나 향토문화 등 농촌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농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농촌관광과 동농교류를 시도 - 농가의 농업소득은 명목가치 기준으로 1990~1995년에 67.1%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엔 속도 둔화되어 1995~2000년에는 4.1%, 2000~2006년에는 11%에 그침. 수입농산물 급증 등으로 농가 총당 평균 부채는 1990년 4,734천원에서 2006년에는 28,161천원으로 6배 증가 (소득에 비해 2배 빠르게 증가)하며 농가의 재무구조가 악화됨 1-3) 농업수신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공무원 교육		
				농림부 공무원 교육	2-1) 농업 이외의 부문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자원의 일부를 생산성이 낮은 농업 및 농촌 부문의 사회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도모 (순환 투자),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 부문 간에 급속하게 벌어지는 개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었음 2-2) - 농외소득증대정책은 취업가능인력의 부족 등으로 전반적 농촌의 산업화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에 그침. 한국과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농가의 농외소득이 크지 않고 주로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것으로 미루어 농촌공업화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함 - 1990~1995년 사이 농가의 양극화 진행 2-3)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및 FTA 등으로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가격정책을 쓰지 못함. 세계경제통합과 개방압력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음식의 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경쟁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더 악화시킴 (OECD Promoting Pro-Poor Growth: Agriculture)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 별 적용가능성
31182: 1. 9.93%: 1.66% 2. 4위/31위: 12 위/23위 3. \$1.02: \$0.13 4. 프랑스 \$126.15: 프랑스 1.79% 31120: 1. 11.38%: 6.38% 2. 3위/31위: 6 위/23위 3. \$11.66: \$0.41 4. 일본 \$23.28: 덴마크 2.34% 평균 10.66%, 프랑스가 주 공여국. 농업연구에 한국의 지원 미흡	1. 미얀마 점염개발사업: 한국의 점염분야 기술전수로 미얀마의 점염생산, 누에사육, 콩나무재배 및 가공기술이 향상됨. 보다 세밀한 연구 및 기술지원이 필요함 (전문가 또는 봉사단 파견 통해 지속적 지원 필요) 2. 필리핀 양잠 개발사업: 동 사업 시작 전인 1990~1994년에 2명의 점염분야 봉사단원이 각각 2년간 동 사업수행기관인 농업부와 섬유개발청에서 활동했으며, 동 사업 이후 2004년 과 2005년 농업부 및 섬유개발청, 점염 유망지역인 오로라주에 전문가 2명 파견과 꾸준한 연수생초청사업 (일반연수)를 통해 필리핀 양잠 개발사업에 추가로 기여했음. 기존된 양잠 기지재는 현재 사용되고 있음. 농가의 소득향상 및 기술수준 향상 3. 우루과이 국립농업연구소 지원사업: 벼농사 관련 연구수준 향상 및 생산 증대 효과 달성함. 중남미 지역 내 관련기관과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 시행하고 유사프로그램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데 활용함. 연구를 토대로 실제 벼 생산 증대 등의 성과 도출 4. 알제리 농작물 기술지원사업 (2007~2006년/1800천불): 우리나라의 씨 감자 생산기술은 알제리의 감자증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감자는 알제리 주식 중 하나) 5. 인도네시아 발작물 증점개발 사업: 공급자위주의 시각이 뚜렷함. 지역 상황에 대한 지식 부족	2007 - 에티오피아 점염기술 100 (점염이 한국에서는 사향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장을 보여주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음),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145 2008 - 아세안 농업통계자료 265 (실습연장필요),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372	2.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네팔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버섯재배기술, 종균생산기술, 버섯관련 R&D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1, 2. - 점염의 생산기반이 이미 형성된 동남아 점염국, 즉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잠기술개발은 아프리카 최빈국가에 적용가능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31110: 1. 13.92%: 11.54% 2. 2위/31위: 3 위/23위 3. \$18.43: \$0.13 4. 미국 \$122.73: 케냐 1.72% 차별성 없음. 한국도 지원 많이 함. 미국이 주 공여국	1. 중국 농업통계 조사지원사업 (2차): 통계자료수집 및 가공 절차의 제정 및 표준화하였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농촌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동 사업 및 1, 3차 사업과 더불어 중국의 농업분야 통계 내규 및 표준으로 채택되고 법제화되었음	2008 - 아세안 농촌지도시스템 향상 272	MD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A: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1.6 Proportion of employed people living below \$1 (PPP) per day 1.7 Proportion of own-account and contributing family workers in total employment	2. 아프리카의 분산형 정착농촌이나 중남미 중소득 국가의 경우, 농식품 가공산업 기술 보급으로 농익소득 기반 확충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래	CP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지역 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쌀 증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	31161 (식량생산)	국가 양곡관리정책 및 미국중산정책 자문, 벼 재배 농지 개발 타당성 조사	1-1) - 식량이 부족하던 1960년대는 쌀당수매를 통해 소요물량확보에 중점을 뒀. 1970-80년대 중반까지는 쌀의 국내자급유지를 위한 이중곡가제와 통일계 쌀 중심의 정부수매 실시. 1980년대 중반,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부활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누적과 소비자들의 양질미 선호로 통일계 수매 중단. 정부관리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양곡정책이 민간유통기능의 위축과 정부재정의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93년 양정개혁 추진하고 쌀값의 개선타당허용을 통해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며 미국중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설치사업 추진. 또한 농협이 산지 쌀 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농협차액 수매제도 도입. 95년 WTO 출범 이후 수매량감축과 최소시장접근 형태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등 여건이 변화했으며 보조금 (AMS) 감축의무이행 (AMS 95년 2조 1,825억 원 → 04년 1조 4,900억 원). WTO개방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기반정비, 유통구조개선, 수매제도개편 (1997년 추곡수매제도도 약정수매제도도 개편)하고 직접지불제도 도입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최근에는 쌀 재고량의 누적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중산위주의 양곡정책에서 고품질 우량종자의 공급으로 양곡 정책 변화 (이수화) - 1950년대 자원의존형 농업에서 1960년대 비료와 농약 등 생화학적 기술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변화. 1960-70년대에는 농가의 고리채질리사업을 통해 고리채로 인하여 영세 농가가 안고 있던 구조적 생활의 어려움 극복. 또한 2중 곡가제의 실시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의 증대와 농업생산의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시장 조정적 특별정책 실시. 1980년대 상업적 농업이 확산되고 기계화 시설 농업 확대, 농업의 전문화 자본화 진행. 이때는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의 선택적 공업화를 통한 소득기화를 창출하여 도시 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함. 1990년대 개방화대에 대응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거쳤으며 농업구조조정농정에서는 우선적 정책지원대상인 이전의 영세소농에서 중대농으로 바뀜. 이때는 체소 과잉 유통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과 농업상장이 이루어짐. 1997년 촉발된 외환위기 후 농업부문은 큰 타격을 받고 정책현상이 장기화 되었으며 시장은 만성적 공급상태 보임. 정부는 연평균 1조 2165억을 쌀 직불금으로 지출하였고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쌀 목표가격의 97.3%가 되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 (한국형 모델의 프로그래밍 방안)	1. - 일본, 중국, 미국도 우리처럼 자포니카계 쌀을 생산. 미국·중국 쌀에 비해 우리 쌀이 3-10배 비쌌. 일본은 브랜드화한 고품질 쌀 아가바레 (추정비), 고시히카리 생산. 우리나라 쌀은 저렴한데도 많을 뿐더러 고급화되지도 않아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함 -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기술과 농산물 가공기술, 화훼와 채소 및 과채류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농기계 기술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의 70-90% 수준임. 농기계 소재와 부품, 농기계 자체의 품질 등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농기계 설계 등은 선진국 대비 70-90%이나 성능평가 및 측정 기술, 품질관리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음
				벼씨 육종, 증산 재배기술, 기계화 작업기술 보급, 농기계 지원, 농약농업토목 지원, 한국형 수초제거기 지원	1-2) - 국제 벼 연구소 (IRRI)에서 개발한 벼씨를 들여와 1971년에 최초로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이 개발 보급되고 이어서 이의 단점이 개선된 다수성 통일형 품종들이 1970-80년대에 40여 품종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77년 쌀 자급 생산 달성하며 세계 최고 다수확 국가로서 녹색혁명을 이룬. 1980년 심한 냉해를 받게 되고 또한 양질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0년대에는 통일형 품종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이에 대비한 자포니카 Semi-dwarf 다수성 품종의 개발 보급으로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안정된 쌀 자급생산이 이루어져 옴. 또한 육종체계 및 선발기술면에서도 지난 30년간 세대축진 재배를 동반한 관행육종체계, 효율적 내병충성 및 내재해성 검정기술의 확립, 미질 평가기술의 개선, 약배양 육종 기술의 실용적 정착, 세포질 유전자적 음성불임성 (CGMS)을 이용한 통일형 일대잡종 품종개발, 배양에 의한 중간잡종 이용 기술 개발, 생물공학 기술의 실용화 연구 및 직파재배 적응성 품종개발체계 확립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옴. 최근에는 고품질 벼 품종인 운광벼와 고품벼 등 우량품종을 해외에서 종자를 증식하여 보급.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전국 33개소 탑 라이스 생산단지 선정. - 2007년 농림업 주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8.9%이며 여기에 재고량과 의무수입량 등을 포함하면 실제 자급률은 100%를 상회. 1994년의 87.8%라는 최저치 이외에는 대부분 90-100%를 유지해 옴	2. 전문가 설문에서 주요 분야의 기술력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경우 쌀이 3.11 (5) 중 가장 높은 점수. 미국 생산 기술 보유, 고품질 쌀 신품종·벼씨 생산기술, 관리기술, 영농기술 전수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임
				양곡관리정책 및 미국생산기술 교육 및 훈련	1-3)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공사, 경북대학교 국제농업훈련원 2-2) 보호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이중곡가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와 쌀의 공급과잉과 그 다음해 가격폭락의 문제. 직불제는 비경작자의 부담수령을 발생시켰고 직불금액도 소득을 보전 할 만큼 크지 않음 2-3) 개도국 중 논농사를 짓는 나라는 많지 않음. 물 부족으로 인해 밭농사를 지음. 땅이 작은 아프리카 보다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농기계 수요가 있으나, 아프리카 국은 초대형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우리는 중대형을 씀. 또한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농지, 구획정리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나, 아프리카는 토지개혁,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고 이는 민감하며 자금이 많이 드는 문제. 또한 땅 소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틀려서 같은 땅을 계절별로 다른 사람이 경작함 (적용성: -1→라오스, 인도네시아 사업)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 별 적용가능성
31161: 1. 2.40%: 9.52% 2. 10위/31위: 4 위/23위 3. \$2.94: \$0.89 4. 스위스 \$9.81: 프 랑스 0.18% 스위스가 주 공여 국, 한국도 지역개 발 부문의 9.5%나 지원하고 있어서 상 대적 중점 분야임	1. 라오스 벼씨 증산 사업 (2007년):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 진 벼씨생산기술, 관리기술, 기계화 영농기술 전수가 라오 스 벼씨 생산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판단. 그러나 종자관리 시스템 개선은 세계은행에서도 성과가 미미한 어려운 분야 인데 라오스의 실정이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 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은 너무나 안이함. 한 국의 우량품종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했으나 시 장성이 없어 농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 소비자의 식미와 가격 등에 시장수요가 정해진다는 사실이 간파됨. 벼씨 종 자 보급체계의 개선은 한국에서 파견된 벼씨 증식 기술자 1 인으로는 부족하며 법, 제도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 2.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사업: 한국산 농기계 지원, 쌀 생산량 30~60% 증대, 농작업 노동력 90% 절감. 벼 재배 면적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기계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기계화 영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농 촌진흥청에서 농기계 실무자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그리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산 경운기를 공급함. 이러한 실 패 사례는 수원국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한국형 처방책 을 고집했던 공급자 위주의 시각과 지역상황에 대한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임. 지속가능성이 결여됨.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농가 단위에서 기계 화 영농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기계 의 교체나 부품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는 농기계의 사용이 어렵게 됨. 그리고 이 지역 농민들이 경 운기 부품을 구입하려 해도 한국산 경운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없고, 한국산 경운기를 구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와 같은 현실 하에서 이 사업의 효과에 의해서 한국산 농기계의 수입계기를 마련한 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한,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인 것 으로 판단됨	2007 - 미국생산기술-수확 후 관리 39 2008 - SAARC 미국생산기술 397	MD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C: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 from hunger 1.8 Prevalence of underweight children under-five years of age 1.9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minimum level of dietary energy consumption 2. - 쌀을 주로 생산 하는 국가가 많지 않음 - 세계 식량위기 극복, 최근의 Food price crisis 대처	1. - 쌀 증산을 위한 종합적 자원과 같 은 프로젝트는 식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소농중 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적합 함 - 농기계 지원은 농지 개혁, 구획정 리가 이루어진 곳 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2. - 벼씨 육종 및 육 종연구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에 지원가능 (농업 분야 협력사업 평 가) - 아시아에서는 특히 산간 고령지 에 적합한 내냉성 벼 품종 육종, 병 충해에 강한 내병 충성 벼 육종 육종 에 대한 수요가 큼 - 대륙별 개발 Need에 차이가 있 는데 아시아는 쌀 재배 위한 수리시 설에 대한 Need가 큼. 아프리카는 땅 이 넓고 인구가 적 어 초대형 농기계 에 대한 수요가 큼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지역 개발	농산물 시장 근접 개선	농산물 가공 통신티원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유통관련 법 제도 정비, 농업가격정책 및 농업금융의 역할 전수, Marketing 기법 자료 농수산물 집하 보관, 가공시설 및 기자재 지원, 가공품의 품질과 신선도 유지 기준 및 검사체제 지원, 유통시설 설비 관리 시스템 구축, 농수산물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 농수산물 유통분야 정보화 구축 농수산물 집하 보관, 가공시설 관련 인력양성, 유통정보시스템 정비 및 유통 관련 공직자경매사·중매인·산지유통 중사 등 양성 교육	1-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농업인 홈페이지 통합 사이트 운영 (hi-farm.com),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농업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 유통센터 운영, 도매시장의 핵심기능인 가격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경매사 자격관리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1986년 「도소매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제정됨.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2005년 12월 23일 개정시 유통정보화시책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유통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유통연수기관에 대한 정의, 지정과 취소 및 해산」, 「유통관리사의 자격취소 후 조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 1-2) - 1993년 농림수산부는 산지유통개혁, 공영도매시장 유통개혁, 소비자 유통경로의 다양화, 유통정보체계의 확립을 골자로 하는 1차 농안법을 제정. 그러나 개정 내용 가운데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매인들이 집단반발하는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농산물유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9월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수립 추진. 그 결과 산지와 소비지에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도매시장 운영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남. 그러나 규격화를 비롯한 산지유통여건이 아직 미비하고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농림부(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명칭 변경)는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국내외 급격한 유통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의 시설투자 중심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물류 흐름에 보다 더 비중을 둔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을 마련하여 1997년 7월부터 실시. 이 개혁안은 산지시범농업육성,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규격품 대량출하거점으로 육성,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농산물유통경로를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다원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 -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고관리시스템·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점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 또한 이러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유통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 1-3) 농산물유통공사, 전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농촌경제연구원, 한민족복지재단 2-2) 1994년 농안법 파동: 중매인의 위탁판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고자 했으나 이 조항에 중매인들이 집단적으로 발발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 중단되었던 사태 발생	2. 대개도국 농촌개발경험 전수방안 연구 (2008)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및 한국의 개발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9.9%가 농산물 가공기술 및 유통관련 분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다고 응답. 농산물 가공기술에서 기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2161: 1. 1.18%: 6.62% 2. 16위/31위: 5위/23위 3. \$1.61: \$0.96 4. 미국 \$0.19: 덴마크 0.42% 미국이 주 공여국, 한국 많이 지원하는 편에 속함, 절대적 평균 지원 금액도 큰 차이 없음	1. 중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개발조사 사업 (1994년) 2. 필리핀 오로라주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미국처리장 건설을 통한 정부재정자립도 제고, 수확 후, 손실을 감소로 인한 농민소득증대, 쌀 가격 안정 및 유기시 저장소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농민소득 증대, 쌀 가격 안정, 쌀 품질 향상, 기존 유통업자 수매 관행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수요분석결과에 따라 미국처리장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큰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향상시킨 우수 사례가 도출됨		1. 필리핀은 쌀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이고, 방글라데시는 쌀 최대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 처리장 기술 전수 등의 수요가 많음.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어느 정도 식량 생산이 가능하여 미국처리장 수요 있음	1. 식량의 자급단계에 이르거나 이미 자급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국가에 지원. 또한 같은 소농중심의 농촌지역이지만, 식량부족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지역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현금성 품목중심으로 다양화, 농업생산시설의 지원, 저장·가공 시설의 지원,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의 지원이 필요함 2.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MIC)에 축산물, 채소, 과일, 낙농제품 가공과 저장 기술, 효율적 유통기술 보급, 시장확대와 생산기반 확충 지원 - 아프리카 MIC에는 가축방역체계 구축, 육·유가공품 생산기술개선, 수확 후 관리, 유통체계 개선 등 지원 - 중남미 경우 수출농업, 가공, 저장 관련사업, 유통사업은 대농들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합치 않을 수 있음. 영세소농을 위해 수확 후 관리, 가공방역, 육·유가공, 유통체계 개선, 가공저장 지원가능 (농업분야 협력사업평가)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지역 개발	농업 관련 조직 강화	농업 관련 조직 강화	31194 (농업협동조합)	농협, 수협 구성 및 운영능력 강화 전략 자문 농산물 공동판매 및 농자재 공동구매 등 경제활동 지원, 저축운동 및 소규모 용자금 운영 및 지역 농협 조직, 판로개척, 상품 브랜드화와 인증제도 지원,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마을 지도자 및 농어민 권익 향상 및 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1-1) 1999년 제정하여 2008년까지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농협중앙회 정관 1-2) - 1960년대 초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舊)농협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농업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농협은 두 조직을 통합한 종합농협체제로 출범. 식량증산에 초점, 1970년대 농협은 농촌지역의 고리채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해 상호금융과 연쇄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착, 1980년대는 농가 기계화, 농업 민주화·자율화의 방향으로 나아감. 특히 1988년에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농업은행체제가 개선. 또한 1990년대는 농산물 신 유통시스템 구축, 미국종합처리장을 통한 쌀 유통혁신 추진. 2000년 이후에는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도농상생의 농촌사랑운동이 전개되면서 농업인의 생산증진, 농축산물의 제값 받기와 농가소득 증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조직 역량을 결집 - 농협의 사업은 (1)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FTA 협상 등 각종 농정현안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농협협상 대응과 권익증진사업, 농축산 관련 신기술 신품종 연구개발 및 조합원 생활개선 사업 추진. 영농현장강설팀, 우수 농업인 선발하여 새농민상 수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재해시 물품지원 등 공익사업 (2) 경제사업: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공동 판매하고 농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금 공동 조성,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경제 사업 지원하여 판로확대 노력,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NH식품 등 상품화. 하나로 대형 마트 등 14개 대형판매장 운영. 축산업을 선도한 핵심농가 육성. 우리농산물 관리제도 (GAP)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인증 및 농협식품안전연구의 유전자변경농산물 (GMO) 등의 상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 (3) 신용사업: 농축산 관련 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 순수국내자본으로 구성하며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주택자금, 농업기대출, 농축산업 재해와 관련한 재해보험 가축공제사업 등 실시. 농업전문펀드 설립을 통해 기존의 주력업무영역을 대충에서 투자로 확대. 상업적 일반금융기관과는 달리 조달된 자금과 수익을 농업생산지도 농축산물 유통사업 지원에 씌. 예금·대출·카드·외환 등 일반 시중은행 취급 업무뿐 아니라 보험사업, 증권사업, 농림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업무까지 실질적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또한 모바일 뱅킹, 전화화폐, 가상계좌, IPTV 뱅킹, 전자 통장 등의 서비스를 도입 (농업협동조합) - 유기농 농산물 판매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쿱 (looop), 두레, 우리 생협 2-2) - 1961년 농업은행과 통합하면서 신용-경제사업 경영체제를 구축한 농협중앙회는 40여년을 지나오면서 거대한 생산자 단체, 금융회사, 유통회사로 발전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조직·인력·자본이 신용사업에 집중된 반면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고, 외형적 확장에만 초점을 둠. 또한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한 신용사업도 정부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농업금융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함. 그리고 읍·면의 일선조합도 금융 유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 비전문적 경영 등으로 변화하는 유통·금융여건에 적응하는데 한계.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농업·유통·금융시장 거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 계획서, 신·경분리위원회 건의안을 참고하여 2007년 3월 29일 농협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 - 반품 고추장 사건, 면세유 불법 유통 등 농협비리 - 2009년 농협회장제가 단임제 간선제로 바뀌고 회장의 인사권한을 없앴 1-3) 농협협동조합, looop, 두레 생협 (제)가나안복민회 신희 가나안 농군학교, 지구촌 나눔 운동, 웰드비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1. 농협은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 & P와 Moody's 및 Fitch로부터 국내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음 2. 농협협동조합분야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음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1194: 1. 0.89% 2. 21위/31위 3. \$1.67 4. 벨기에 \$4.84: 벨 기에 0.39% 농업섹터 중 다른 나라에서 별로 지원 하지 않는 하위분야 임. 일본이 주 공여 국. 한국은 이 code 에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옴. 태국 영농개발지원사업 도 농업정책 및 행 정 쪽으로 code가 분류되어 있음	1. 태국 영농개발 지원사업: 사업시행 후 농민조직을 지속 운영하여 '마을영농기금' 마련 등 각종 영농활동을 확대·발 전시키고 있음. 건기 휴농 지역에 한국 콩 재배 방법을 도입 하여 농가소득이 증가함	2008 - 농촌 지역사회 지도 자 양성 193, 농촌협동조합 역량강화 209 (아시아개도 국에게 비교우위 높음, 만족 도 높음; 지역사회 지도자 양 성, 아시아-농협역량강화)		1. 농촌지역의 자조협동 정신에 의 해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 회적 역량이 있는 아시아 중소득국 (MIC)에 지원. 디지털 뱅킹 역시 소 득이 중간 이상인 국가에 지원 가능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지역 개발	참여적 종합 지역 개발 사업	새마을운동	43040 (농촌개발)	새마을운동형 농촌 개발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 지원, 마을발전단계 조사	1-1)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전국의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되어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직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 1-2) - 정부가 1971년 잉여 시멘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잉여 시멘트를 마을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공공목적의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전국 3만 3,267개 마을에 마을당 335 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시멘트를 농로 개신, 상하수도 시설설치, 하천제방보수, 공동우물 및 세탁시설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하도록 권장.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기대 이상으로 농촌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고 이에 고무되어 내부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마을을 조사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발전수준에 따른 다른 지원 시도. 이는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마을 간 경쟁 유발 - 1972년도에 내부부에 범부처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주도로 전국의 마을단위로 추진 사·군·읍·면 새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 1975년도에는 도시와 공장 등 전국적으로 확대. 초창기의 농촌 새마을사업은 하나의 마을을 사업단위로 하여 추진하였지만 1976년부터는 개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 주택, 공동시설, 농로, 생선기반시설을 취리각구 개신사업이라는 하나의 계획 속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소득개발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 1980년 12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설립 사·군·구 지회가 설립됨. 1982년부터는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사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이 여러 마을의 이해에 해당하는 경우 5-10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사업을 실시 -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 총 52,58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가 51%에 해당하는 27,987억 원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49%에 해당하는 24,596억 원을 투자. 개발 도상국의 농촌개발은 그 재원을 정부나 외부의 원조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농촌 새마을운동은 총 투자액의 49%를 주민이 부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된 점에서 농촌개발의 신기원을 이룩함.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 인프라가 크게 발전하고 농촌이 현대와 근대화 되었으며, 근면·자주·협동·의식 고취하는데 기여	1. 농업분야 경쟁력이 높지 않음. 한국의 농가인구 비율은 선진국 2-3%에 비해 7%이나 규모의 경제 실현 못함.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5.5%에서 2.6%로 감소. 농가소득/도시가구 소득 비율 (%)은 95.1%에서 78.2%로, 가구당 농가부채는 916만원에서 2,721로, 농가인구는 485만명에서 343만명으로, 농촌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25.9%에서 40.3%로 증가. ((삼삼경제연구소, 2007. 5. 16 (제 604호)) 2. - 대·개도국 농촌개발경험 전수 방안 연구 (2008)에 따르면, 농림부분 전문가 62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및 한국의 개발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 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11.3%가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사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다고 응답함 -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몽골, 네팔, 필리핀, 우간다,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9개국 18개 마을 130명 지도자를 초청하여 Central Training Institute에서 연수, 대학생 해외봉사 파견, 2008년 말까지 74개국 4만 7천명에 대한 교육 실시 -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의 농촌개발 KOICA 봉사단 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 보건의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협력하여 참여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와 대학병원을 통한 현지주민 환자사업을 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됨. 각기 전문분야를 살려 약초 제조실 신축, 가자재 공여 및 기술 지도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사업을 하였고 병원 지원 및 무료 진료 등을 통한 모자보건개선사업으로 지역의 보건향상에 기여함. (해의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2007) - 새마을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UN 등 국제기구나 NGO로부터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음 (연수과정 종합평가) - 2004년 한국 NGO와의 봉사단 파견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가 8로 24%를 차지하여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짐 - 60-70대의 퇴직한 개발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며 이들은 JICA, USAID에서 원조를 받은 경험과 우리나라의 개발단계를 몸소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
				시범 사업 현장에서의 사업 실시 및 진행 지원	1-3)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 리더십센터, 한국농촌공사, 단국대 국제농업훈련연구소, 경북대 국제농업훈련원, 가나안 농공학교, UNDP, FAO, IFAD, ECOSOC 2-1) - 새마을운동은 소득증가, 생활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사회통합 및 의식개조의 다차원적인 농촌개발사업. 새마을운동은 (1) 추진 및 지원체계가 전국적 범 정부적이고 (2) 지원체계는 하향식이나 사업의 추진체계는 상향식 (3) 단순한 농촌개발 사업이 아니라 운동차원에서 '근면, 자주, 협동'의 슬로건을 통해 '하연 빈다'는 정신을 키워 농촌주민의 정신 개조까지를 포함하는 마을단위의 종합개발 사업: Development + Empowerment- Holistic approach (4) 새마을 지도자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 (5) Result based management: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간 경쟁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경쟁원리와 인센티브제 도입 (6) Matching fund를 통해 Ownership and financial sustainability를 제공 (7) 재정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힐 수 있음 -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동계 등 마을 총회 기구로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관리하고 1년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예산과 결산을 하며 공동건축을 및 노동에 대해 구성원이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온 전통이 있었음. 이러한 전통사회에서의 자치적 농촌개발방식은 일제에 의해서 농촌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으로 바뀌어짐	
				정책담당자, 사업관리자, 농촌지도자 등 초청 연수	2-2) 농촌빈곤의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함.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의 강제력이 수반된 점 등이 있어 부작용이 많았으며, 획일적인 행정지시로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 예를 들어 전통적 가옥이 없어지고 획일적 옌지 지붕의 집들이 들어섬. 또한 정부관료가 개입하면서 획일적인 계획과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는 것을 강조하게 됨. 민간 주도로 재출범한 새마을운동은 제5공화국 (1980년대) 하에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관련단체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앞장서고 새마을운동 본래의 근면·자주·협동 및 '하연 빈다'의 새마을정신과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개발의 이념이 쇠퇴하면서 그 활력을 상실하게 됨. 또한 Brandt (1981)는 경각지가 없는 국민층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봄. 2-3) - 개도국에 전수된 새마을운동은 한국 정부로부터 원조받은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조와 지속성, 범 정부적, 전국적, 종합적, 장기적 측면 (Aspect)이 지켜지지 않고,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종료평가 2009년 PPT자료에 따르면 타국 모델과 차별성도 모호함. 한국형 농촌개발은 여럿을 꼽을 수 있으나 지역과 농촌유형 발달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파견된 전문가들의 현지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급급자 중심의 Blue print 사업계획이 장애요인임 - KDI의 연구원인 Elijah Muriy는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쉽지 않음을 역설하면서 (1) 아프리카 정부는 강한 정치적 동기가 없고 (2) 한국의 농업지원정책은 일종의 농업에 대한 보조로 높은 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한다거나 쌀 수입을 금지하여 시장을 보호했을 때 효과적이었는데 아프리카 정부들은 1970년대 한국정부보다 보조금 활용 면에서 약할 뿐 아니라 자유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을 평가가 힘들고 (3) 한국의 경우처럼 '쌀'이라는 거의 모든 농부들에게 해당하는 작물만 지원할 수가 없고, 아프리카 농부들은 훨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작물의 선택에 있어서 집중할 수 없음을 제기. 이에 따라 한국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활용 가능한 지식 (Feasible & Usable knowledge)이 되도록 할 것을 권고 (참고: 허길형 외(2008)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 개발개발 전수 중심으로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Saemaul Handbook, Elijah, N. Muriy(2008. 7.22.), "Exporting Saemaul Movement", Korea Times, Park, Sooyoung (2009). Analysis of tKorea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3. 농업은 RCA 지수 0.08, 순위 93위로 우리의 현지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부분 중 하나임. 2003-07년 세계은행 수주에서는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Goods & Works 분야의 1건이 전부이며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1건이 전부임 (1.0%). 농업분야에서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이 강세를 보여 수월국 자체 참여 비율이 높으며, 선진국은 영국이 18위권이고 나머지 유럽국가들도 20위권 밖임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43040: 1. 22.45%: 22.26% 2. 1위/31위: 1 위/23위 3. \$23.28: \$2.10 4. 독일 \$94.34: 룩셈부르크 4.25% 독일이 주 공여국. 선진국 및 한국 모두 농촌개발에 많이 지원. 그러나 내용 면에서 한국은 직접적 성공 경험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함	1.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2008년):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2008)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의 경우 주민협동심이나 자립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캄보디아와 라오스 양국 모두 자국의 농촌개발모델로 새마을운동을 검토하게 됨. 효과 저해 요인으로는 소규모 사업의 다수 시행으로 인해 마을 공동 인프라 형성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보다는 개인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 또한 짧은 현지교육 후 사업이 실시되어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마을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 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운영 원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였음. 그리고 시범마을마다 정주형태, 지도력, 정치적 성향, 주민 요구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됨 2. 베트남 2개 지역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2001-2002년/30만 달러): 2000-05년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저소득 농민 부락을 선정하여 새마을운동 형태의 농촌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 2005-10년 2차 프로그램 추진. 농업농촌개발 부문에서는 2006년부터 650개 농촌에서 동 사업을 모델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 2만 4천불을 지원한 농업인용 자금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률도 각각 33.4%와 40%로 5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용 중. 베트남은 과거 우리 농촌과 유사하고 베트남 정부 측의 적극적 관심과 사업의지가 있어 지속 가능성 있음. 마을의 문제를 소득증대, 환경개선, 교육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빈곤 마을 등 시범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함. 2개 지역 7개 마을에서 시작된 사업이 실시 3년 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가능성 보임. 중앙정부 지방정수 모두 깊은 관심 가지고 있고 성공한 모델로 평가. 그러나 정부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이 적고 젊은 인력이 부족한 베트남 농촌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조직적이고 실효성 높은 농촌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도 있음 3. 캄보디아 3개 지역 농촌지역 개발사업 (2005-2006년): 농촌개발사업 모델로 채택되었으며 소득대출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종료평가 (2009)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업목표는 한국 농촌개발정책의 적용이지만, 이 방식에 대해 협력단의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World Bank나 FAO 기법을 적용. 동 사업의 대상지역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 개발에 대한 주민의지가 낮아 주민의 협동과 자조적 노력에 의한 농촌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낮다고 봄. 또한 포스트 정권하에 사회조직이 붕괴되어 있으며 정부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마을회관 건립, 마을기금 적립, 소규모 용자제도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소득훈련사업이 단기로 이루어져 참여율이 저조했음. 주민이 문맹인 상황에서 마을 문고 이용도는 낮을 것이며, 농기계 등은 공여기증, 기술 수준 등의 적합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 자발적 새마을운동 정신이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음 4. 파라과이 농촌개발 시범사업: 당초 계획대로 농장이 운영되지 못하여 사업효과는 미흡한 실정임. 주 원인은 이전 정부 하의 농목부의 관리 및 지원 부재에 기인함. 시범농장 사업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투입요소가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검토 실시를 통한 검증 및 준비 철저가 필수적이며, 특히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원국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5.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Korean Millennium Village) 사업 (진행 중): 유엔은 2004년 만성적 기아 및 질병 문제 등이 심각한 아프리카 최빈국 마을을 선정하여 교육·보건·농업 등 개발분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마을의 MDG를 달성하기 위한 밀레니엄 빌리지 이니셔티브를 도입함. 현재까지 아프리카 10개국 80개의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이 진행 중임. 사업계획의 수립·실시·평가 등 전 과정에서 수원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지도자, 주민, 현지인 전문가 MP/UNDP와 협의, 사업 형성),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MP와 한국측 3개 참여기관간 양해각서 (MOU) 체결 및 구체적인 협력약정 체결 추진	2007 - 네팔 농촌개발 10, 라오스 농촌개발 3차 17, 미얀마 농업발전 3차 46 (차별화 필요), 아세안 농촌종합개발 60, 에콰도르 농촌개발 96, 이라크 농촌개발 133,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직원 능력 배양 2차 138 (캄보디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선진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움), AARDO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2차 154 (토론 강화 필요, 만족도 높음) 2008 - 과테말라 농촌개발 179 (연수수요 높음, 강의내용의 중복, 현장학습과 강의 연계성 부족, 직접체험 기회 부족), 네팔 농촌개발 186, 아프리카 농업개발정책 282, 에콰도르 농촌개발 288 (토론배정시간 연장 필요),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296, 카메룬 농업발전 349, 캄보디아 농촌개발 356(강의 다양화 필요), 탄자니아 농촌개발 363 (연수기간 연장 요청), AARDO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3차 383, SAARC 농촌개발 390 (실무내용 추가필요), 한국의 비교우위 높은 분야, 농촌개발정책: 네팔·미얀마·라오스, 신상품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2.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베트남과 새마을운동을 오랫동안 도입하고자 노력해 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 등으로부터 관심과 수요가 있음	1. -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하기에 소농이 지배적인 농업국가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임 -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적극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적용 가능 (참고: 허길행, 전순훈, 유철, 최미애, 《아프리카 빈곤 대책으로서의 농촌 개발》, 2008) - 농촌 새마을운동: 종합개발의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적용 가능 2. 새마을수원은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설립하여 지원 가능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2005)

분야	세부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	국가 교통 인프라 개선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21020 (도로운송)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교통수요 예측, 접근성 및 개발 가능성 확인, 기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자원 조달계획 수립, 도로 건설 및 개량계획 지원	1-1)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등.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와 강원도 등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1997년 말에 1998-2011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도로교통 현황, 장애 요인변화, 수요전망, 도로정비 목표 등을 바탕으로 한 전국 단위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 1-2) - 한국전쟁 이후 도로의 복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도로망의 개발은 외국의 전쟁복구를 위한 원조를 통하여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됨. 전쟁 복구사업과 병행하여 서울-부산간 국도 포장과 함께 서울-인천, 부산-마산 등 국도 확장 및 포장사업이 실시되었는데 당시는 체계적인 도로망의 확충보다는 도시간 도로의 포장에 중점을 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투자정책도 철도중심에서 도로중심으로 전환되어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지방도 시·군도는 개발수준이 미약. 1970년대에는 대도시, 공단 항만 등을 상호 연결하는 경제활동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호남, 남해, 영동, 구마고속도로 등이 건설됨.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도로의 질적 개선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중부고속도로, 1988올림픽도로가 건설. 1990년대에는 도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부담 투자확충의 전기를 마련함 - 지난 30년간 도로개발은 산업인프라 등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 산업업지 패턴을 철도의 역세권 중심에서 고속도로 IC 주변으로 변화시키는 등 제조업 성장 및 거점도시 성장에 크게 기여. 국토공간의 시간거리 단축으로 전국의 1일 생활권을 실현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의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우리나라 도로는 2001년 말 현재 도로 91,369km 가운데 포장도로가 70,146km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은 76.7%. 고속도로 포장을 100%, 일반국도 96.5%, 특별광역시도 93.6%, 지방도 78.4%, 시도 74.4%는 비교적 높으나 군도 49.9%, 농어촌도로의 경우 25.6%에 불과. 주요 국가의 도로 포장률과 비교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00%), 스페인 (99%), 네덜란드 (90.0%) 보다는 낮고, 일본 (76.0%)과 비슷함. 미국 (58.8%) 보다는 높음 (도로국 도로관리과) 1-3)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함께하는 사람들	1. 도로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기획분야 73%, 설계분야 74%, 입찰분야 78%, 시공분야 76%, 유지관리분야 71%로 선진국과 비교 평균 80% 정도임 2.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발주사업 실적 중 가장 큰 부문이 도로운송으로 31.3%를 차지하며 금액 면에서는 12.1%임 3. RCA 지수 (*RCA 지수는 세계은행 부문별 발주비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수주비중의 비율)는 0.39로 현시비교우위는 낮은 수준임 (한국 수주비중 12.08%, 세계은행 발주비중 31.29%)
				노후교량 및 재난지점의 주요 시설물 개보수 추진, 건설공사 관리기법 등 도로건설 및 개량사업 지원, 도로포장 및 구조물 관리매뉴얼 개발, 교통관리 및 유지관리정보 운영지침 작성, 전산 프로그램 개발	2-2) 고속도로와 도심의 도로는 잘 발달했으나 농어촌 도로는 취약함. 지속적인 도로투자사업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많은 도로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교통여건의 변화로 보다 장기적인 도로정책이 필요. 2003년 기준 연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 22조원(GDP의 3.16%), 물류비용 90조원(GDP의 12.47%), 교통사고비용 15조원(GDP의 2.15%) 등으로 나타남	
산업 에너지	국가 교통 인프라 개선	철도 인프라 구축 지원	21030 (철도운송)	중·장기 철도건설 계획 수립, 철도등급별 설계기준 수립, 환경 친화적인 철도건설 방안, 신설 및 기존철도 개량에 대한 타당성 조사	1-1) 「도시철도법」,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06년)>. 정부는 2006년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10년 단위) 기본 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함. 본 기본 계획은 기본 전략으로 전국적으로 고속화된 철도망 확충, 고속화된 철도 물류망 형성,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노선 확충 등을 제시 1-2) -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된 계기는 일본이 대륙철도 횡단망을 구상하면서임. 1899년에 경인선 (노량진-서울교의 33.2km)가 개통되었으며, 그 이후 용서보통조차선이 체결된 1905년에 서울-부산 구간이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됨. 1960년대 이전까지는 국지적인 노선 외에 이렇다 할 신규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으로 탄광지역인 강원도와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연결하는 산업철도가 주류 건설됨. 이때 건설된 철도는 서울교외선 (능곡-의정부) 경인선(영등포-인천), 고한선 (여미-고한), 경전선(진주-광양) 등임. 이 당시에는 교통부만 투자하는 64.2%가 철도부문에 투자되었음. 1970년대는 고속도로의 시대와 열리고 철도부문에는 전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람과 화물의 수송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투자가 열악했음.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원철도의 복선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서울지하철 2·3·4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1990년대에는 제2기 지하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지하철 5·7·8호선과 부산지하철 2호선이 개통. 최근에 와서는 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을 반나절권으로 연결한다는 목표 하에 건설된 경부고속철도(KTX)가 2004년 4월에 개통되어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철도부문의 수요는 그 동안 감소추세에서 고속철도 개통 이후 증가세로 반전함으로써 지역간 여객수송에서 철도의 역할 증대 효과를 가져옴.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가교통체계 및 국토공간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지역간 교통체계가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환됨 1-3)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65~73%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 격차는 7.3년. 철도산업 특성상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2. 철도운송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은행 ODA 수주에서 발주사업 부문에서 전체의 2.7%, 금액 면에서는 12.1%를 차지. 철도운송 기술경쟁력 중간 정도의 경쟁력 (선진국 대비 73%) 3. 세계은행 RCA 지수가 2.04로 1보다 커서 높은 편임. 한국은 이 분야 수주순위 16위/30개국임(우리나라 수주비중 5.45%, 세계은행 발주비중 2.67%)
				철도 운영 현대화, 철도 개량,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교육	2-2) - 정부가 철도신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구조, 소유 구조가 초래하는 철도사업 주변의 내부적 (인사, 관리 경영체계 등), 외부적 (정부규제, 시장구조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해 철도의 만성적 재정 적자 - 최근에는 공로(公路)상의 교통정책 현상으로 일부 교통수요가 철도로 전환되고 있으나, 고속도로건설정책에 밀려 철대시설부족으로 전환수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2-3) - 우리나라 철도는 2001년 말까지 3,121km의 영업연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선진국 일본의 20,160km, 영국의 16,406km, 프랑스의 29,343km, 미국의 23,067.4km에 비하면 절대수준에서 부족한 실정이었음. 특히, 이들 선진국은 대부분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현재의 철도시설 공격을 완비하였으며, 시대적으로 자동차 시대의 도래 이전에 철도에 대한 대량수송체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 1960년대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철도를 발전시킨 우리와 다른, 이제 철도구축을 하는 개도국에는 우리의 경험이 더 유용할 것이라 예상됨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국 교통정책), 2003.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구조개혁 이후의 과제와 정책방향>, 2004)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릴별 적용가능성
21020: 1. 22.73%: 6.96% 2. 1위/55위: 6 위/32위 3. \$27.77: \$0.87 4. 일본 \$199.19: 일본 5.75% 도로운송은 다자무상으로 많이 하는 사업. 다자무상일 때는 전체 CRS 코덱스 지원순위 11위/1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양자무상사업만 고려했을 때 (26위/194)와는 다른 일본이 주 공여국이고 우리의 200배 정도 지원. 한국도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임	1.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사업 (2005-2006년):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관광산업 증진에 기여.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원조사업 홍보 2.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단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2004-2005년/500천불): 도로설계 (KOICA), 시공 및 감리 (EDCF)의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를 완성하여 항구에서 마나도 통합경제개발지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비용 및 시간 절감에 기여 3. 베트남 N-18 국도개량 타당성 조사 사업 (1993-1994년/55.7만 달러): 우리기업이 주주 4. 스리랑카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 개량 실시설계사업 (2005-2006년/90만 달러): 2008년 9월 EDCF 550만 달러 지원 승인 5.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단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2004-2005년/43만 달러): EDCF 1600만 달러 지원	2007 - 아프가니스탄 건설 공무원 94, 이라크 도로기술 QJT 107 (만족도 높음, 활발한 참여) 2008 - 도로경영 및 교통기술 42 (연수기간 짧음), 이라크 (중앙) 도로 복구 및 건설 기술 QJT 195, 캄보디아 도로 정비 301 (만족도 높음)		2. - 초기 산업화 국가 (베트남, 인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자원확보 지원, 도로·철도 등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 내륙국가 국경지역 (아제르바이잔, 태국, 미얀마): 철도 및 도로 인접국 교통 연계망 구축 지원, 국경 지역 연결 (Source: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LIC: 산업 및 무역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1030: 1. 9.55%: 3.14% 2. 3위/55위: 12 위/32위 3. \$3.10: \$0.46 4. 일본 \$5.21: 스페인 4.17% 철도는 주로 유상원조로 지원되고 있음 일본이 주 공여국. 차별성 거의 없고 액수 면에서도 10배 정도 차이가 남. 양자무상 측면에서 차별성은 있으나 양자유상사업의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상으로 많이 지원. 양자유상에서 항공 운송 사업은 100/194로 0.09%를 차지함. 반면 양자유상 Sector allocable aid 중에서는 철도 사업이 1위를 차지하며 양자유상 형태로 많이 지원됨	1. 베트남 나짱-호치민 철도복선화 타당성 조사 (2005-2007년/90만 달러): 베트남 측은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북철도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자료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차 사업 (하노이-빙) 사업 지원을 요청함 2. 베트남 하노이-빙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사업: 한국의 철도분야 비교우위가 인정되어 베트남 교통부에서는 라오스-베트남 국경 간 철도건설 FS를 한국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줌 3. 아세안 5개국 (태국, 미얀마) 철도연결 타당성 조사: 동 사업을 통해 여객열차 3회, 화물열차 29회의 교통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철도 노선 260km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그 외에도 사회적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평가 등을 시행했음. 해당구간이 교통 요충지로서 가차와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태국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역할 및 비중 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효과가 높음	2007 - 가나 철도운영현대화 3, 나이지리아 철도운영현대화 39, 아제르바이잔 철도 개량 및 고속철도 건설 86 (사전조사 및 현황파악을 통해 적절한 커리큘럼의 구성이 요구됨, 적극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노력 필요) 2008 - 나이지리아 철도운영현대화 35, 아제르바이잔 철도개량 및 고속철도건설 102, 철도운영현대화 286, 철도정책 및 경영 293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진행)		1. (아래 내용이 위와 동일하나 번호 상이) - 초기 산업화 국가 (베트남, 인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자원확보 지원, 도로·철도 등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 내륙국가 국경지역 (아제르바이잔, 태국, 미얀마): 철도 및 도로 인접국 교통 연계망 구축 지원, 국경 지역 연결 (Source: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LIC: 산업 및 무역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21050: 1. 4.63%: 4.75% 2. 9위/55위: 9위/32위 3. \$3.94: \$0.72 4. 일본 \$11.79: 일본 2.35% 차별성 크지 않음, 일본이 주 공여국이며 이 지원분야가 양자유상원조에서는 6위/194를 차지하고 양자무상 원조에서는 100위/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원조가 유사형태로 주로 이루어짐. 한국도 타국 정도의 비율로 지원	1. 필리핀 부수입가 공항개발사업 (2006-2008년): 취항 항공사가 당초 2개에서 4개로 확대. 항공편 주 10회에서 28회로 확대. 공항이용객 주당 300여명에서 4200여명으로 증가 2. 파푸아뉴기니 나자브 공항 확장 타당성 조사 (1991년) 3. 몬테네그로 티밋공항 공사 (2007년): 현재 낙후된 몬테네그로 티밋 공항 시설을 개선하여 향후 항공 여객 증가에 대비하고 몬테네그로의 관광산업 개발에 기여함	2007 - 레이더 접근 관제 47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송 순위 7위 국가이자 ICAO 상임이사국으로 동 분야 비교 우위 가지고 있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 229, ICAO 위성항법시스템 296 (연수기간이 짧음, 우수한 과정) 2008 - ICAO 레이더 접근 관제 392 (개별 실습을 받고 피드백을 받기에는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감사 등으로 실습 시간이 부족하여 인원 축소 및 기간 연장 고려 필요), ICAO 위성항법시스템 401 (맞춤형 교육), ICAO 전방향 무선표지 시설 409 (만족도 높음)		1. - 도서·해안국가 (필리핀, 몬테네그로, 알제리): 공항·항만 개선 및 건설 지원 (Source: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LIC: 산업 및 무역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1040: 1. 2.24%: 0.91% 2. 12위/55위: 20위/32위 3. \$3.76: \$0.19 4. 일본 \$22.98: 일본 0.68% 다른 공여국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 일본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주 공여국. 한국은 이 분야에 많이 지원하지 않음	1. 알제리 선박 안정성 제고 사업 (2007-2008년/150만 달러):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법령을 구축하여 선박안전성 제고. 09년 5월 우리기업이 어선 위치추적시스템 공급 프로젝트 (804만 달러 규모)를 수주	2007 - 한·싱 항만관리 (교차) 268 (상대국과의 비교우위를 비교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305 (연수기관의 강의 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 2008 - 투르크메니스탄 물류항만 및 해사분야 전문가 양성 324 (성공적인 연수, 토론 시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아쉬움 표시), 항만관리 과정 (한·싱공동연수) 346 (해운 정책 및 항만관리전략 공유 및 발전방안 등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연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중도 저하됨), ACS 항만관리 371 (높은 관심도 제고),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419 (분야 전문성 높음, 감사 영어능력 문제, 강의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		1. - 도서·해안국가 (필리핀, 몬테네그로, 알제리): 공항·항만 개선 및 건설 지원 (Source: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LIC: 산업 및 무역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	국토 관리 기반 조성 및 종합 개발	국토 종합 개발 지원	32182 (기술연구 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1-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 2조 (1963년), 「국토기본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2) - 1960년대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단기간에 이룩된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과 과밀화, 지역 간 불균형, 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국토가 심각하게 훼손됨 - 국토의 자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립 1. 1950년대: 빈곤의 극복과 한국전쟁 후 복구 중심의 개발 2. 1960년대: 체계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국토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3. 1970년대: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 제1차 계획의 기본목표는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시간간접자본 확충, 국토자연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에 두고 있음. 제1차 계획의 수단으로 성장거점개발 방식과 권역별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전국을 4대권·8중권·17소권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8중권을 중심도시와 함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함. 이 결과 울산, 포항, 마산, 창원, 여수 등에 대규모 사업인 신 공업단지가 개발되었으며,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고속국도와 다목적댐이 다수 건설 4. 1980년대: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 제 2차 계획에서는 기본 목표를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존에 둠.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토의 다핵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생활권을 조성하며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전략을 세움.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후진지역의 개발촉진을 추진. 특히 이 중에서도 주택과 같은 국민생활 환경의 정비, 에너지와 같은 자원 개발, 그리고 도로와 통신 등과 같은 국토개발의 기반 확충 및 도시 개발과 같은 국토공간의 구조개선 등에 투자 집중. 제 2차 계획에서는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각 생활권은 한두개의 성장거점도시를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된 성장거점정책을 도입. 그러나 분산된 성장개발 방식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계획의 목표로 인해 투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역간 빈부 격차 심화를 초래함 5. 1990년대: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 1980년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문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지역 간 소득격차, 기반시설의 부족, 지가의 상승, 환경오염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 제 3차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공간의 형성, 생산적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국민 복지 향상과 국토 환경의 보존,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의 조성 등을 포함. 제 3차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도시육성, 서남부 신산업지대 조성과 첨단화, 교통 통신 유통 연계화,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참여와 지방과 중앙의 역할분담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중점 사업들을 보면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인구집중억제, 공업용지 및 여가공간의 조성, 통합적 교통규망의 구축,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원관리,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기반구축 사업 등임 6. 2000년대: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 제 4차 국토계획은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인프라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국토의 안정성 결여가 그 배경으로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 통일국토를 목표로 함. 제 4차 국토계획의 특징은 국토계획 전 부문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중앙정부주도의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Bottom-Up 방식을 채택하고, 보다 장기적인 인상을 위하여 기존 계획과는 달리 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권, 분산, 분업을 정책기조로 삼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중남 연기 중심으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기업도시건설을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서 이전을 위한 혁신신도시건설을 추진 - 우리나라는 또한 1995-2015년까지 국가 GIS 사업을 통한 부문별 국토정보를 구축 활용 할 예정임 (국토개발연구원, 국가 GIS 추진위원회, 국토연구원, 건교부) 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표준원, 국토개발연구원, 국가 GIS 추진위원회, 국토연구원, 건교부 2-2) 수도권 밀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환경훼손, 지역간 소득격차	1. 측정표준분야의 최고 의 사결정기구인 국제도량형 총회와 아시아태평양 측정 표준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음.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다수의 국가간 협정 (31건) 체결. KS 규격의 국제규격부합화 완료
				국가 기준점·수평점 구축 지원, 수평국의 고정밀 위치정보 데이터 구축, GIS를 통한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지원		
				국가 표준제도 및 정밀 측정기술 교육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2182: 1. 0.89%: 9.98% 2. 20위/55위: 2 위/32위 3. \$4.22: \$1.52 4. 일본 \$13.16: 스 웨덴 0.63% 타 공여국에서 이 세부 분야에 0.89% 만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9.98%로 상 대적으로 매우 많이 지원. 일본이 주 공 여국임	1. 캄보디아 측량기준점 설치사업 (2차): 설치된 측량 기준 점은 캄보디아 국토관리 및 측량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원활하게 진행됨. 캄보디아 캄퐁치낭 주 및 푸삿 주에 측량 기준점 설치	2007 – 국가표준제도 및 정 밀측정기술 25 (측정표준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Action Plan 발표 의미 있는 시간이 있음, 실습 위주로의 기획 필 요), 이라크 지역개발정책 395 (만족도 높음) 2008 – 국가표준제도 및 정 밀측정기술 19 (참여기회 제 공),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 가 능력 배양 28		1. 국토기초자료 미비 국가 (캄보디 아, 우즈베크): 국토개발 기초정보 자 료 확충지원 측량기준점 설치, 지도 제작 및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 구 축 (Source: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LDC: 효율적 국토관리: 국토개발 기초정보자료확충, 지도제작,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의 산업단계별 발달과 비슷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 시기에 우리가 적용했던 국토종합계획에 서 시사할만한 점 적용. 예를 들어 MIC 같은 경우, 도시화·산업화에 따 른 국토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제 3, 4차 개발계획 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림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	국토 관리 기반 조성 및 종합 개발	종합 수자원 개발	14010 (수자원 정책/행정/관리),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14040 (하천개발)	상·하수도 서비스 장·단기 개발 투자 계획 타당성 조사, 유역별 장·단기 개발입지 타당성 조사, 하천종합개발계획 수립, 도심하천복원 마스터 플랜 다목적댐 (농업용수·전력·관개) 지원: 수력 개발, 수도·용수 수요, 환경보전, 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자연재해 방지 지원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자원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1-1) -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계획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 1965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개발 10개년 계획 (1970-80년)>은 계획의 기초를 다목적댐 개발에 둔. 1980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 종합 개발 계획 (1981-2001년)>은 대규모 댐 개발 및 치수사업에 계획의 기초를 두고 작성. 1990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1991-2011년)>의 기조는 수자원 개발 및 관리. 그리고 1996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수정·보완 (1997-2011년)>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의 기초를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수자원 계획의 기조를 하향식 개발중심의 계획에서 점차 환경을 중시하는 상향식 관리계획으로 진화되고 있음 - 「국토기본법」 법률 제6654호, 「하천법」 법률 제7796호, <제 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년)> - 4대강 살리기 사업 1-2) - 1960년대 말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시작된 4대강 유역조사를 효시로, 현재 많은 다목적댐이 계획되어 안정적 수력확보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 1970년대 <수자원 개발 10개년 계획 (1970-1980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지수를 개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하여 단일 목적 수력 발전댐의 개발에 목표를 둔. 그 결과 이수과 치수를 병행한 수자원을 개발하였고, 소양강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을 시작. 그리고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에 1단계 광역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한강 홍수 예방보 시스템을 구축. - 1980년대 <수자원 장기 종합 개발 계획 (1981-2001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용 및 하구둑을 건설하고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여 오일위기로 인한 정부의 탈석유 정책에 부응하여 수력 에너지를 증대. 이 계획의 성과로 중수댐 (저수량 2,750백만 l), 합천댐 (790백만 l), 주안댐 (707백만 l) 등 대규모 다목적댐이 개발. 광역용수 공급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수계별 치수사업을 시작하였고 낙동강 홍수 예방보 시스템을 구축. - 1990년대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1991-2011년)>: 하천 정비시 하천환경 관리개념과 지하수 관리제도 도입, 운문댐, 화성댐, 밀양댐 등 1억 l 이상의 중규모 댐을 개발하고, 5대강 홍수 예방보 시스템을 완성하였으며 홍수·수계로 확대한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년 7월. 건설교통부 <댐건설장기계획>, 2001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 앞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개발도상국의 수질개선, 홍수 조절, 수자원관리, 물류개선, 관광개발 등을 위한 대안적 국토개발전략으로 공유 가능 - 1947년 급인수가 18.5%였고 상수도 시설용량은 하루 24m3였으나 제 1차 경제개발계획 (1962-1966년)에서는 시설 용량을 크게 늘리고 급수 보급률을 22%로 확대함 - 청계천 복원사업 등 도심하천 복원 사업의 경험 보유 1-3)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팀엔엠 2-3) 선진국에서 지원받은 기술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고, 수자원 개발역사 과정 중 초기와 중기 그리고 완성기에 이르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게 물 분야에 있어 최상의 사례 및 교육 장소가 될 수 있음	1. 수자원 분야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친수성 환경조성을 위한 공업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개발이 진일보하였음. 우리나라는 2006년 세계 각국의 물 빈곤지수 (Water Poverty Index) 평가에서 수자원 인프를 19.3점 (20점 만점) 획득하여 비교대상 147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함. 그리고 재정 가능한 수자원의 하천수 확보를 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함. 그러나 최근 IT나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분석 기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선진적 설계공법과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법 등에 관한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음 2. 상하수도 산업 등 물 산업은 환경·토목·전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IT, BT, N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이 없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7~7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물 산업 분야의 우수한 역량성을 위한 특화된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도 부족함. 다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건설기술이 1980년 선진국의 59%인 것이 2007년 현재 76%까지 향상됨. 기업 여건을 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기술력 부족하여 외국의 물 전문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함 3. 수자원 관리 RCA가 1보다 작음.
				주택·신도시 개발, 환경친화적 도시·국토계획, 도심하천 복원 및 공업화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과학기술 연구산업단지·공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대역연구단지와 같은 과학단지 및 신도시 개발 기술지원: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등 설립 공공 주택 및 도시 정책, 신도시·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교육 훈련	1-1) 분당 신도시 건설,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뉴타운 건설, 일산 신도시 건설, 성남 판교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1-2) -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계획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신도시의 개발은 크게 지역개발차원에서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되거나, 서울의 도심기능분산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 혹은 대도시 인구분산 및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개발되거나, 수도권 주택공급수단으로 개발됨 -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물론에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배후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시작됨. 공업화 기지를 내세운 제 3공화국 정부는 동·남해안에 공업벨트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포항과 구미 등에 공업단지 종사원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연이어 개발하기 시작. 이처럼 초기의 신도시들은 대부분 인구분산이나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개발된 것이 주를 이룸. 처음에는 공업단지와 분리된 배후지역의 형태로 시작되던 것들이 점차 공업단지와 결합하여 신 공업도시의 형태로 성장. 공업단지의 배후도시가 주로 전국에 걸쳐 개발된 것과는 반대로, 주택개발을 위한 신도시는 주로 인구 집중이 이루어진 서울권에 개발. 공업도시가 아닌 최초의 신도시로는 1960년대 말 서울권에 개발된 광주 대단지 (현재의 성남시)를 들 수 있음.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인구가 300만을 넘어서고 인구의 증가속도도 빨라져 과거와 같은 시기지 확장 만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한강 이남에 대규모 시가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울이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됨. 1970년대 강남개발은 서울인구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정부는 서울의 인구중가를 정부의 권한집중과 산업집중으로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구분산정책을 수립. 그 중 하나가 정부기관의 지방 분산을 위한 실행수도 건설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중소 수공업 공장들의 이전·수용을 위한 신 공업도시 개발. 그러나 실행수도 이전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혜사건과 더불어 중단되었고, 서울의 무허가 공장들의 이전을 위한 반월 신도시 개발만 진행. 이 무렵 실행수도 이전을 위한 과도적 중간단계로서 파천에 중앙정부의 상당기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정부창설의 임주가 시작되면서 배후도시격인 파천 신도시가 개발.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던 1970년대 후반에는 창원신도시와 반월 신 공업도시 (현재의 안산시) 등 본격적인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정치·경제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중화학공업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미 지정된 신도시 개발이 부진하게 되는 가운데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불가능하게 됨. 서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주택난이 심각해짐. 부진한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생겨난 택지공급 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목동 (1983-89년)이나 상계동 개발 (1985-89년) 등 도시 내 신도시 개발. 1987년 제 6공화국 출범 직후 정부는 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건설 200만호의 개발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서울 시내와 외곽 주택공공에 치중했으나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밖의 값싼 토지에 눈을 돌려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신사업'을 발표. 이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신분, 중동 등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km 이내에 입지한 베드타운 성격의 5개 신도시 건설이 서둘러 추진됨.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 부족으로 2000년 10월에 건교부는 <판교, 화성, 천안-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화성과 판교는 2001년 택지개발에 정지부로 지정되었으며, 천안-아산지역은 2002년 9월 택지개발에정지부로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됨 (국토개발연구원(원) <국토50년>, 서울프레스, 1996. 성영준 편저 <도시계획기술사>, 예문사, 2005) - 1. 서울은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좁은 지역에서 성장하다가 내파적 성장을 하면서 확산된 경우 2. 신도시 개발의 예: 일산, 분당 3. 대형 건설업체의 빠른 몰락 위주의 건설업 4. 좁은 땅의 아파트 5. 주택 재개발 - U-City (Ubiquitous City), GIS 등 한국의 도시 개발분야 신기술 활용 1-3) 대한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한국토지공사, 한국 사람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 한국희망재단, 다일복지재단 2-3) 한국은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좁은 지역에서 성장하다가 확산된 내파적 성장을 하였음. 이와 달리 (1) 베이징은 지난 20세기 아시아 국가들이 가졌던 개발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전략의 도시 전략 택하고 있음 (2) 하노이처럼 저밀도, 다중 심화된 도시에서 분당과 같이 멀리 떨어진 외곽에 신도시 건설 하는 방향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 발생	1. 토목·건축·플랜트 건설의 엔지니어링, 조매조달, 시공부문을 합한 종합기술경영력은 선진국을 1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 수준 8.1 정도로 조사됨 (KIEP) 2.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은 해외시장 점유율, 기술수준, 전문성, 플랜트 건설의 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열세에 있다는 평가를 받음. 우리나라 건설기술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어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회, 설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 토목부분의 경우, 단지조성·도로·상하수도는 선진국의 80% 수준 (개발조사사업평가)

타 공여국과의 자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 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4010: 1. 3.93%: 1.26% 2. 8위/22위: 9 위/23위 3. \$16.95: \$0.35 4. 미국 \$158.94: 네 덜란드 1.11% 14040: 1. 0.85%: 0.56% 2. 22위/55위: 22 위/32위 3. \$3.33: \$0.18 4. 일본 \$20.42: 핀 란드 0.50% 평균 2.39%. 대체 로 선진국과 한국 모두 하천개발에 많 이 투자하지 않음. 미국과 일본이 주 공여국. 다자유상 (16위)이나 양자유 상 (15위)일 때 높아 유상의 형태로 지 원이 많이 됨. 무상 일 때는 25위 (전체 194)	1. 캄보디아 크랑프리카강 유역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 사업 (2004-2005년/74만 달러): 캄보디아의 국가 수자원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교육, EDCF 지원으로 크랑프리카강 종합개발사업 실시 중 2. 라오스 비엔티안 메콩강변 제방보수 및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사업 (2006-2007년/800천불): 비엔티안 메콩강 제방 정비를 통한 제방의 안전성 향상으로 강변 인근 시민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 동 사업은 EDCF와 연계되어, 금년 하반 기 중 수출입은행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예정	2007 -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69, 이라크 수자원 관리 158, 이라크 아르빌 수자원 관 리 172, 캄보디아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238 (시간 다소 부족), 필리핀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252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의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이 필 요함, 강사들의 영어능력 개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정, 만 족도 높음) 2008 - 방글라데시 수자원 관 리 57 (정수처리와 관계배수 과 목에 관심이 높음, 세부적 학 습 필요),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69, 알제리 수자원 및 환경 개발 정책 수립 역량 개발 137 (환경분야가 추가되어 강 의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기간 부족), 이라크 (중앙) 도시 수도 공급 시스템 계획 및 운영 204 (전체적 만족도에 차 이가 있음: 연수분야와 관련성 이 낮은 연수생이 포함되어 이 해수준 상이했기 때문으로 판 단),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307, 페루 수자원 관리 340 (수원국 의 필요성이 큰 분야. 만족도 대 체적으로 높음)	2007 - 이라크 건설 관리 102, 한국의 신 도시개발 유형과 실 행 260 (효과적인 연 수), 이라크 공공주택 정책 374 (유용한 과 정, 연수기간이 다소 짧아 향후 심화과정 개설 제안) 2008 - 이라크 (아 르빌) 건설관리기술 161 (일부 주제에 대 해 심화학습 희망, 다 소 상업적), 이라크 (중앙) 건설 및 노무 관리 184, 도시 및 지 역개발정책 462 (비 교우위), 몽골 주택정 책 479, 베트남 주택 및 도시정책 505, 아 프리카 도시 및 지역 개발 정책 534	2. 수자원 보유국가 (캄보디아 등 CLMV 국가, 인니): 종합적 수자원 관리체계 및 기술지원
43030: 1. 3.86%: 9.49% 2. 10위/55위: 3 위/32위 3. \$10.25: \$1.22 4. 프랑스 \$28.79: 프랑스 1.31% 32310: 1. 0.27%: 6.95% 2. 29위/55위: 7 위/32위 3. \$1.26: \$1.26 4. 영국 \$7.26: 포르 투갈 0.27% 평균 2.06%. 미국 과 영국이 주 공여 국. 한국은 대체로 지원하는 편	1.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1, 2차) (1999-2001년/1000천불): 베트남의 주요 개발과제인 도시 현대화 및 신도시 개발에 부합하는 조사 사업으로 베트남 측의 만족도가 큰 사업임 2. 인도네시아 화산회 혼합 시멘트 사업: 저가의 시멘트 대 체용 건축자재 보급을 통해 주거생활 환경 개선. 고가의 시 멘트 대체 건축자재로서 폼공지역 내에 혼한 Pozzolana를 이용한 시멘트 대체 기술은 동 지역 서민주택 개량시 유용 하게 활용됨 (인니 자체평가결과 우수기술로 분류됨). 사업 종료 후 시멘트 제조공장 활용이 다소 미흡 3. 알제리 Sidi 과학기술신도시 개발 마스터 플랜 사업: 신도 시 개발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알제리 정부의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추진이 담보상태였으나 마스터 플랜을 충실히 수립·제공하여 알제리 정부가 수립한 국토종합개발 및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공식사업으로 채택되는 성과로 이어 짐. KOICA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할 수 있 으며, 또한 알제리 신도시 개발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 플랜 을 제공. 그러나 마스터 플랜에 알제리 수출의 98%를 차지 하는 석유·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빠져 있 음 (권율 등, 2006) 4.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 개발 마스터 플랜: 베트남은 1970 년대 서울의 강남 개발과 같은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고자 한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2007 - 이라크 건설관리 102, 한국의 신도시개발 유형과 실 행 260 (효과적인 연수), 이라크 공공주택정책 374 (유용한 과 정, 연수기간이 다소 짧아 향후 심화과정 개설 제안) 2008 - 이라크 (아르빌) 건설관 리기술 161 (일부 주제에 대해 심화학습 희망, 다소 상업적), 이라크 (중앙) 건설 및 노무 관 리 184,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462 (비교우위), 몽골 주택정책 479, 베트남 주택 및 도시정책 505, 아프리카 도시 및 지역 개 발 정책 534	2. - 한자 문화권에 있는 유교 전통, 분단의 경험, 중국의 변방이라는 배 경 등 복합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이 많고 역사적 궤적이 비슷한 국가 - 공동에서 한국식 아파트를 지으 면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안 팔 림. 단지나 생활방식, 유틸 같은 것 을 수출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질충과 조화를 찾아야 함 - 초기산업화 국가(베트남, 인니):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지원	

분야	세부 분야	프로 그래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	에너지 산업 인프라 건설	발전 전력 공급 확대	23030 (전력생산/재생 가능 자원사용), 23063 (석탄 화력발전소), 23064 (원자력 발전소), 23065 (수력발전소)	수력(댐 건설), 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건립 및 보수,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1-1) 1957년 국내 설계 시공기술로 최초로 고산수력발전소 완공. 1962년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을 확대·개편하여 수자원 개발 총괄, 수자원개발촉진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등 근거법령 제정 1-2) - 국내 수력설비 총 용량은 1,595MW이며, 이중 소수력은 수자원 공사를 포함하여 총 53개소 136기 69,650kW가 보급 (수공비중 23.3%). 국내 개발 가능한 소수력 자원 잠재량은 약 502개소 150만kW 정도로 평가. 국제적으로는 수차 발전기 용량별 표준 모델을 제작하는 등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최근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따라 소수력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수자원공사) -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197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원전건설로 2007년 현재 20기 (17,716MW)가 가동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원전국가가 됨. 최근에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수용도 제고가 필수적인 요소임 - 수력은 무연탄과 함께 1960년대의 주요 전력공급원이었으나 수력발전이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개발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설비증설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수력발전의 다른 형태로서 1979년 청령 양수발전소의 준공, 양수발전은 경우바 시간대에 여유 기저설비(원자력, 유연탄)를 이용하여 하루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린 후 피크 시간대에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피크설비증설을 억제하고 부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전원 - 4대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제방 보강으로 강 유역 저수지에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 가능	1. - 우리나라의 발전부분 부하율(Load factor)과 설비이용률(Utilization plant factor)은 일본·프랑스·미국·영국 등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부하율은 73.8%로 독일을 제외한 위의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으며, 설비이용률은 66.9%로 일본·독일·프랑스·미국·영국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원전기술자립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원자력발전 규모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 국제사회에서 원자력기술자립의 모범적 국가로 평가됨
			23040 (전력 송전/배전)	발전소 운영 및 관리 기술 교육: 원전 및 수력 사업 계획 및 관리 능력 배양	1-3)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1) -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적극적인 신기술의 도입·활용 및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이 단기간 내에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더불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발전설비의 건설, 노후 설비들에 대한 성능복구 및 시설확충공사, 연료원 전환공사, 제어설비 개조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전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설비 건설 및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정전시간 미처 정격주파수 유지율 등 우수한 전기 품질과 저렴한 전기요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음	2. 세계은행수주에서 전력 우리 전체 수주의 32%를 차지할 만큼 최대 수주 부문. 댐 관련 건설 기술 비교적 빠르게 수준이 향상됨.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일본보다는 비슷하나 다른 비교대상 선진국들보다는 높게 분석됨. 원자력 설비용량(4위)로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 물 산업 부문은 취약 3. 전력 기술경쟁력 상위 (선진국 대비 RCA 4.0, 전수주비 중 1.93%로 현시비교우위가 두 번째로 높은 부문임 (수력과 원자력을 같이 지원할 경우))
산업 에너지	에너지 산업 인프라 건설	안정 전력 공급 확충	23040 (전력 송전/배전)	송배전망 기초 및 타당성 조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실시계획, 배전 손실감소 타당성 조사	1-1) - 「전기사업법」, 1961년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이후 정부는 6차에 걸친 「전원 개발 5개년 계획」과 1989년의 「89 장기전원개발계획」 시행, 이후 5차에 걸친 「장기전력수급계획」 시행,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07년까지 3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총 15차에 걸쳐 전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 이들 계획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성장의 기반이 됨. 한전은 독점 공기업으로서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전회사업, 타 에너지산업 지원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 2001년에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경쟁을 도입. 전기요금은 구조개편 이전까지는 투자보수를 규제를 받아 왔으나 구조개편 이후 현재는 도매요금의 경우 발전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소비자요금은 투자보수를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 - 한전의 AMR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과 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을 활용 송배전 효율성 향상 및 배전자동화 구축. - 2009년 5월 G8에서 Smart Grid 중점추진 국가로 결정, 제주도 시범사업	1. - 송배전 손실을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 우리나라는 4.02%인데 비해 영국 (2005년)은 8.9%,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6.7% (2005년)으로 나타남. 또한 노동생산성 면에서도 2006년 우리나라는 9,254MWh/인원으로 일본·대만·프랑스·캐나다 보다 월등히 높음 (한국전력공사) - 또한 세계 최초 2회선 765kV 송전선로 구성 및 운영, 세계 최초 육외 GIS 기술 보유, 친환경적이고 높은 송전용량과 서순실을 가진 345kV XLPE 전력케이블 개발 및 운영, 최첨단 전력구 감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술 보유, 초대형 정거리 해상선로 세계 최초 운영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시스템 및 세계적 전력공급 기술능력 보유. 발전부분 부하율과 설비이용률은 비교대상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앞섬 (KIEP)
			23040 (전력 송전/배전)	송배전망 운영기술 협력사업(배전자동화, 원격검침, 516kV 건설 등) 및 시범사업 실시: 자동검침시스템 지원: 손실 저감기술, 시스템 보호기술 등 선진기법 전수	1-2) - 1948년 북한의 송전 중단과 6.25 동안으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된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활한 전력공급이 최우선적 과제가 됨. 지속적 공급불안을 겪던 전력산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발전소의 대폭적인 건설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설비 과잉현상까지 발생.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는 전력수요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적정 수준의 예비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전력수급이 불안정했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에는 민자발전을 추진하기도 했음.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일부 민자발전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다가 2001년 발전경쟁이 도입, 최근에는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전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또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력산업에도 디지털화, 정보화 등 기술의 융·복합화가 나타나고 있음. - 1923년 강원도 중대리와 서울을 잇는 66kV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1935년 서울-평양간 154kV 170km를 시작으로 송전계통은 점차 154kV 중심의 확산망으로 구축. 이후 1976년 신여수 T/L에 345kV 초고압 송전선이 운전 개시되었고, 1998년 765kV 송전선로가 준공되어 공급신뢰도 향상과 전력손실 감소에 기술적으로 기여함 - 한전의 송전계통 전압은 기가송전망인 765kV 및 345kV 와 지역송전망인 154kV 및 66kV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6kV 선로는 점차 폐지되고 있음. 현재 21세기 기가송전망으로 765kV 대전력 송전망을 구축하는 1단계 건설사업에 이어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섬 지역인 제주도는 육지와 해저 케이블을 통하여 고압 직류 (HVDC) 로 계통을 연계하고 있음. 원거리에서 변전소를 감시, 제어하는 원격 감시제어시스템(SCADA)을 설치하여 운영. 2005년에는 220kV 배전전압 송입사업을 완료하였음	2. 송배전 손실을 및 전력부분 노동 생산성에서도 경쟁력 보유. 독자적으로 디지털 발전기 개발, 원전적분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보유함 - 송전망을 집중화 High Tech 변전소 건설기술 개발 등 높은 수준의 변전 기술 보유. 세계 최초로 89기의 해상철망 시공 신공법 개발 및 고강도 알루미늄 전선 등 신기술 적용과 환경친화적 공사시행으로 345kV 영흥 해상송전선로를 건설·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전력수급난 해소하고 연간 3천 7백억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아 세계 전력산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에디슨 대상'을 1997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상하였음
산업 에너지	에너지 산업 인프라 건설	안정 전력 공급 확충	23040 (전력 송전/배전)	송배전망 관리 및 전력 분야 전문가 양성	1-3) 한국전력, 민간발전회사: 포스코파워, GS EPS, GS Power, 메이아울론 등 2-1)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적극적인 신기술의 도입·활용 및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이 단기간 내에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23030: 1. 0.67%: 0.10% 2. 24위/55위: 27위/32위 3. \$2.39: \$0.09 4. 독일 \$10.57: 덴마크 1.04% 23063: 1. 1.23%: 0.17% 2. 15위/55위: 26위/32위 3. \$0.62: \$0.06 4. 일본 \$—: 일본 0.77% 23064: 1. 0.75%: 1.48% 2. 23위/55위: 17위/32위 3. \$7.04: \$0.20 4. 미국 \$58.29: 미국 0.15% 23065: 1. 5.06%: 14.18% 2. 5위/55위: 1위/32위 3. \$5.45: \$3.22 4. 일본 \$6.37: 노르웨이 2.82% 평균 1.93%. 수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타 공여국 모두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야. 독일·일본·미국이 주 공여국. 재생가능자원을 통한 전력 생산·원자력·석탄 모두 지원이 미흡한 분야여서 한국이 지원할 경우 차별화 쉬움	1. 파키스탄 파트룬드 수력발전사업 (150MW 규모) 2. 필리핀 카판간 수력발전사업 3. 피지 Muana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인근지역주민 1,5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기기계작동·소규모 공장 가동에 대한 동력을 제공함. 야간 경제활동도 가능해졌으며, 소규모 외부 투자 유치도 이끌어 올 수 있는 효과를 거둠 4. 아프간 이스타라프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5. 필리핀 버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개발조사사업 (1993~1994년/38만 달러): 사업 실시기관인 한국전력이 7억불 상당의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1000억 상당의 말라야 발전소 1, 2호기 복구공사 수주 6. 인니 카리안델 건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사업 (2004~2006년/1700천불): 인니 정부는 카리안델 후속사업으로 수로건설, 정수처리장, 물 판매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예정 7. 이라크 아르빌 베칼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2007~2009년): 진행 중 8. 아프간 이스타라프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2004~2006년) 및 1차 (2006~2007년) 2차 (2008~2011년) 사후관리: 진행 중 9. 필리핀 보홀주 말리나오섬 개선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2007~2008년/1,000천불) 10.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설계사업 (1993~1994년/73만 달러): EDCF 1500만 달러 지원, 14,800Kw급 수력 발전소를 건립. 연평균 92.5GWh 전력 생산 11.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건설 실시설계사업 (2000~2002년/66.3만 달러): 2008년 10월 EDCF 4500만 달러 지원 MOU 체결. 2009년 4월 우리 기업 건설공사 계약 체결	2007 - 나이지리아 원전기술 및 사업관리 (2차) 32 (수원국의 의사와 능력 고려해 지속 추진여부 결정해야 함), 이라크 수력발전기술 150, 인니 원전기술 및 사업관리 능력 배양 2차 (3차) 205 (질의응답 시간 확대, 요청과목 개설 확대), IAEA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 289 2008 - 이라크 (아르빌) 화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 178 (강사의 영어실력 및 보조자로 활용 부족), 이라크 (중양) 수력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31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짐), 인도네시아 원전기술 및 사업관리 능력배양 (3차) 256, IAEA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 385	2. 원전 등 발전소 사업은 기간 국수 사업으로서 공여국에 정보를 주는 것이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음. 원전은 또한 핵 문제, 안보 문제와 연결됨.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대규모 담보다는 소수력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2. 수자원 보유 국가 (캄보디아 등 CLMV 국가, 인니): 댐 건설 지원을 통한 수자원 확보
23040: 1. 11.07%: 7.88% 2. 2위/55위: 5위/32위 3. \$41.50: \$1.11 4. 미국 \$545.19: 미국 2.85% 다른 나라도 많이 지원하는 분야. 미국이 주 공여국. 절대 지원액수가 500배 정도 차이남.	1. 인니 3개 도시 배전체계개선 타당성 조사 및 자동화 시범사업 (2006~2007년/95만 달러): 배전자동화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한전의 배전분야 신기술 소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별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니 보고서의 작성이 작성자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느낌을 줌.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등 프로젝트의 핵심 수행사항 보고기술보다 한전 운영체계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함. 일부 공사의 세밀한 방법까지 기술하는 등 불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보고서를 다수를 차지함.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요망 2. 미얀마 전력망 진단사업 (2001~2002년/40만 달러) 3. 미얀마 송전망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 (2003~2004년/ 40만 달러) 4. 미얀마 전력계통운영 및 보호시스템 구축사업 (2006~2008년/140만 달러): 미얀마사업은 '계획수립 → 설계 → 운용기술 이전'에 이르는 건설 전단계 일체를 지원하게 되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전력분야에 대한 정기적 통합적 지원의 가능성 보여줌	2007 - 이라크 송배전 142, 이라크 아르빌 송배전 능력 향상 교육 165, 이라크 아르빌 전력개발 및 운영 179, 이라크 전력개발 운영 187, 전력기술 213, 전력분야 전문가 양성 220 (선진국에 위치하지 않는 경쟁력 보유, 만족도 높음, 적극 연수생 초청 필요) 2008 - 도미니카공화국 송배전망 관리 50, 온두라스 전력서비스에 관한 공공캠페인 147, 온두라스 전력요금 체계 발전 154, 이라크 (아르빌) 전력에너지 수급 정책 170, 이라크 (중양) 송배전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224 (연수기간 연장 필요), 이라크 (중양) 전력기술 복구 및 개발계획 수립 239 (주제를 세분화, 전문화하여 강의 수 줄이고 연수기간 연장 필요), 전력기술 271, 튀니지 전기산업 발전 332 (토론시간 확대필요), SAARC 특별연수-전력기술 428 (만족도 높음)	수원국 수요 높음	1. - 전력생산 기반이 있는 국가 (예: 파라과이,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 초기산업화 국가 (예: 베트남, 인니):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23081 (에너지 교육/훈련), 32210 (광물/광업 정책, 행정, 관리), 32220 (광물탐사)	에너지 개발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광산개발 타당성 조사,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1-1) 「석탄산업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광산지역종합개발계획」, 「한국의 광해방지제도」, 「도시가스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운령규정, 「석유산업 자유화계획」 1-2) -광복이후 탄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한석탄공사'가 1950년 설립. 1961년 5.16 이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석탄중산이 강력히 추진. 특히 1961년 「석탄개발임시조치법」, 1962년 「광업개발조성법」 등이 제정되면서 석탄산업의 육성기반이 확립되었으며, 1·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국내 석탄산업은 성장을 지속. 그러나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1987년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의 보급,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등의 요소가 지속적인 국민소득의 증가와 상승작용으로 이어져 연탄소비가 크게 감소. 이에 따라 1989년부터 폐광 지원사업을 추진, 석탄생산 및 탄광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1987년 363개 탄광 24.3백만 톤 생산에서 2005년 8개 탄광 2.8백만 톤 생산 등으로 감소. -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소비 세계 7위, 석유수입 세계 4위, 정제능력 세계 5위로서 에너지 대국임. 에너지의 석유의존도가 43.3% (2006년 기준)로 여전히 1차 에너지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개방화를 추진 - 제 2차 석유파동 후 정부는 석유의존도 감소의 필요성과 소득향상에 따른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 수요에 대응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발전용 석유와 도시가스를 LPG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 1986년 LNG가 도입되기 시작한 후, 정부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천연가스의 도입과 가스 자원의 개발 및 도매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공공기업체로 가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ADB에서의 에너지 발주 RCA는 1.41로 가장 높은 부문을 기록함
				에너지 경제성 평가방법 및 광산 개발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광물탐사사업, 국가 에너지 정보시스템 구축 관계 인사 교육, 폐광 복구 및 광해 방지 관련 교육	1-3)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1)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적극적인 신기술의 도입·활용 및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이 단기간 내에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환경 여성	환경 오염 관리 능력 강화	폐기물 관리개선	14050 (폐기물관리/처리)	폐기물 관리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 공동연구 (예: 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품목의 확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강화 등), 하폐수 배출기준 및 징수시스템 자료	1-1) 1-2)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폐기물을 오물인 청소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오물청소법 (1961년)」으로 규율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처분개념에 기초한 초보적 단계에서 출발.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향이 종전의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환경보전적 개념」으로 전환. 이 시기에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여전히 폐기물은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어짐. 1986년에는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에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새로 제정, 일원화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 그리고 1990년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응비율정지, 「저체량제계획」 수립대상자 및 화학물질범위 등을 다루고 있음. 또한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수·분뇨 등의 처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됨.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자원의일괄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는 남비현상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분별. 또한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국내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3년 12월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단일화함. 동 법은 일시에 다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광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1993년 「국가폐기물관리법」을 수립한 이후, 새로운 법령의 제정,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 등 계획수립 당시와는 폐기물 발생특성 및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지방화·세계화가 더욱 가속됨에 따라 국가의 폐기물관리 목표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96년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정계획 (1996-2001년)이 작성되었음. 환경부는 제 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발전시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2002년 3월 「제 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2011년)」을 확정 -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재활용량 증가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행위 등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1년 12월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상반기에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을 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 국내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비율이 크게 낮아진 한편, 소각 처리율은 전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4년에는 재활용률이 49.2%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 처리율은 36.4%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처리 구조가 변화됨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계,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거방식은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문전 수거방식으로 수거하여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수거장비는 손수레에서부터 덤프트럭, 압축압차량, 암롤트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병이 현대화에 따라 덤프트럭이 압축차량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매립에 의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0.0%에 이를	1. 기술경쟁력 선진국 대비 65%로 낮은 편임 2. 폐기물처리는 2003-2007년 세계은행 분야별 발주 비교우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은 소각로 및 고체 폐기물처리. 2002-2007년 ADB 사업에서도 폐기물 관리 부문은 전체 수주국 중 10위로 비교적 높은 분야 차지 3. RCA 지수 24.03, 수주비율 2.8%로 우리의 현시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분야임. 그러나 세계은행 발주총액의 0.12%에 불과하여 전체 발주 규모 자체가 작고 우리나라의 수주실적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1건의 Goods & Works 사업에 불과하므로 경쟁력 평가가 어려움
				폐기물 수거·집하처리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 처리 시설 건립 및 관리시스템, 수자원보호구역 관리 지원 (Integrated water management) 폐기물 관리 관련 교육: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금지 협약 수행능력강화 교육	1-3)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산, 코로롱, 삼성, 현대 엔지니어링 2-2) 재활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 83.8%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소각시설 건설 지연으로 인해 소각률은 14.4%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며,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매립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0.0%에 이를 (2006 환경백서)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 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23081: 1. 0.13%: 1.67% 2. 32위/55위: 16 위/32위 3. \$0.88: \$0.23 4. 노르웨이 \$3.12: 노르웨이 0.17% 32210: 1. 0.61%: 1.03% 2. 25위/55위: 19 위/32위 3. \$2.43: \$0.45 4. 일본 \$13.74: 영 국 0.10% 32220: 1. 0.29%: 0.60% 2. 28위/55위: 21 위/32위 3. \$0.67: \$0.09 4. 일본 \$25.69: 포 르투갈 0.06% 평균 1.03%로 타 공여국과 한국 모두 많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 에너지 교육 훈련은 노르웨이, 광물사업은 일본이 주 공여국임	1. 인도네시아 석탄성형 기술사업: 동 기술은 산업용 연료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가정용 대체 연료로 사용은 못하고 있음. 석탄성형 기술 이전을 통한 산림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함. 사업종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산업용 에너지로 동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2. 중국 복건성 광물자원 개발조사사업: 자원주권을 내세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작업을 불허하는 법령까지 발효시키고 있는바, 향후에 유사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3. 과테말라 광물탐사사업: 수권기관의 후속사업 추진 가능 여부 및 EDCF 확보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사업의 성과물인 광물 지화학도 등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과테말라 정부측에서 개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사업을 추진할 만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을 갖고 있지 않고, 과테말라 국회에서도 EDCF와의 연계 등을 통한 후속사업 추진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과테말라의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투자환경으로 인해 과테말라 국내의 기업 등이 후속사업의 추진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임 4. 필리핀 수리가오 해저광물 탐사 개발조사사업 (1996-1997년): 해양 지질, 지구 물리 및 지화학 탐사 및 탐사자료 종합해석을 통해 유망광종 및 경제성 평가. 필리핀 내 광물 개발 유망지역인 민다나오섬 수리가오 델 노르테 지역의 해양지질 탐사 자료는 국내 기업 및 필리핀의 광물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됨 (광물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으나, 친환경 에너지 연수사업은 유용함)	2007 - 과학기술정책 11, 광산 프로젝트 개발 및 평가 20 (업무 관련도 높음), 이라크 석유부 공무원 특별 123, 이라크 석유비축 시설 운영관리 131, 이라크 정유 전문가 195,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전문가 능력배양 275 (친환경 에너지개발분야는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분야, 원활한 진행, 유용한 과정) 2008 - 광물자원탐사 및 GIS 11, 석유산업개발 파트너십 63 (국별 보고 시간을 개인 발표가 아닌 토론 및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 희망), 아세안 폐광지역 복구 및 광해방지 87, 아프간 광물자원 개발협력 111,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석유화학발전 119, 이라크 (중양) 석유부 고위공무원 특별연수 210, 이라크 (중양) 석유 비축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217, 자메이카 에너지 다변화 정책: LNG 전환 264 (강사의 영어능력 문제, 강의진행 방식의 다양화 필요), 천연가스산업 개발 및 기술 279 (강사의 영어능력 문제, 만족도 높음), 한일공동연수-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353,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전문가 능력배양 362 (수원국 수요 높음, 실용적 강의 추가 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음)		
14050: 1. 1.39%: 1.73% 2. 14위/18위: 12 위/18위 3. \$3.04: \$0.58 4. 독일 \$9.07: 덴마크 0.65% 선진국과 한국 모두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야. 독일과 덴마크가 주 공여국 임	1.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지원사업 (2003-2005년/600천불): 베트남 산업폐수의 연구 및 처리능력강화. 베트남 실정에 맞는 폐수처리 기술을 제시하고 폐수처리 기초시설 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초를 마련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사업은 산업오염방지라는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물적 공여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서 실질적인 환경산업의 발전과 연계되는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공된 우리의 기술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베트남이 수질오염을 개선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비용-효과 측면에서 상용화되기 어려운 모의시설을 베트남에 제공하였고, 베트남 역시 목적이 오염처리설비의 상용화 보다는 선진화된 시험장비의 확보에 더 관심 있었음 2. 이집트 수온폐기물 통합관리 사업 (2007년):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파견과 국내연수 실시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 능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함	2007 - 아세안 고형폐기물 관리 348 (강의시간 부족, 연수기획 동일한 기관에서 해야, 강의 및 시설견학 집중적 배제 필요), 이라크 아르빌 고형쓰레기 처리 기술 382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음) 2008 - 니카라과 고형폐기물 관리 453,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관리 485, 세르비아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정책 526, 튀니지 고형폐기물 관리 599 (만족도 대체적으로 높음)		2. MICs: 폐기물 관리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환경오염 관리 강화	환경오염 관리 강화	상하수 관리 개선	14015 (수자원 보호)	상하수 관리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구축, 상하수도 체계 개선 마스터 플랜	1-1) - 정부는 1961년 「수도법」을 제정하여 수도수원보호와 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1989년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수도물의 안전성으로 공급하고자 한. 또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89년에는 최초로 전국단위의 수질보전대책인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995년에는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을 제정,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 구입하는 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보호함 - 〈전국수도종합계획〉은 2006년을 목표로 국가수도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도법」, 제4조의 규정(외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998년에 수립. 이 계획은 기초지조조사, 상수도 수요전망, 상수도개발계획, 수요관리, 수질관리, 대체수원개발계획, 운영계획관리 계획을 포함함	1. - 세계국가별 수질지수 8위의 기술력 보유 (UN 수자원 개발 보고서, 2003). 또한 세계물빈곤지수 (WPI) 수자원 인프라와 수자원 사회적 관련을 측면에서 147개국 중 각각 27위와 29위로 순위가 측정됨 - 상하수도 보급율을 나타내는 수자원 인프라는 20점 만점에 19.3점을 획득하여 비교대상 147개국 중 27위를 차지함 - 진기술·폐수처리기술 등 사후처리 분야는 상업화 단계로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 하고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의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 - 프랑스에 세계적인 물 관련 기업 많음
				도시지역 상하수 위생처리시설 건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지원	1-2) - 2007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2%, 하수도 보급률은 87%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하수도 보급률 도달 (1990~2006년) -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과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되며,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함.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 1-3)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기업 20개국 28억 4천만 달러 물 관련 해외사업 수행 2-2) 우리나라는 상수원의 90% 이상을 지표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인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미생물에 의한 수도물의 오염가능성은 항상 존재, 실제로 1989년부터 이어진 수 차례의 수도물 오염파동은 그 결과 정부의 수도물이 안전하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끝없는 의혹을 갖게 하여, 수도물을 기피하고 정수기와 생수기 산업의 발달 계기가 됨. 수도물 오염파동은 1989년 중금속 오염파동부터 시작하여, 1990년 수도물에서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된 사건, 1991년 낙동강 폐쇄 유출 사건, 1993년 서울 시내 수도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건, 1994년 낙동강 벤젠투루메 검출사건 등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함 (참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 환경 50년사〉, 1996) 2-3)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 80% 이상, 정부는 매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하수처리시설과 건설에 투자하고 있음. 하수처리공법의 경우, 지난 10년간 국외 선진기술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력이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환경부의 정책, 수질관련 학계와 설계·건설 및 운영기술력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개도국이 발전모델로 삼기에 적합함	
환경오염 관리 강화	환경오염 관리 강화	대기 오염 개선	41030 (생물 다양성)	대기오염 측정망 건립, 월경선 대기오염 전성비 저감 등 관리 정책 수립, 환경관리 연구센터 지원	1-1) 「대기환경보전법 (1995년 12월 29일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보건복지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 「대기환경보전법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해방지법」, 「교통증축촉진기대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1-2) - 기존 배출량 산정방식의 문제 개선: 기존에는 연료사용에 따른 배출량만을 산정하여 생산공정, 에너지공급, 유기용제 사용 등 비연소부문의 배출량은 산정하지 못하는 문제 존재. 따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정책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역별 부문별로 세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전산조치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 (CAPO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추진. 동 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식으로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정확도의 제고와,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연간, 월간 배출량 산정 등이 가능하게 됨 - 5대 권역시 및 광역시 지역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인체유해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이산화질소의 2차 반응에 의해 오존과 미세먼지가 증가하므로 동 규제기준을 프랑스 파리 수준인 22ppb로 설정하고, 이산화질소는 상대적으로 오존도가 높은 울산지역에 대하여 연평균 농도 10ppb를 대기질 관리목표로 설정할. 오존에 대해서는 대구, 광주만 등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을 대상으로 1시간 평균 99.9 Percentile 기준 (100ppb)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오염원별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정부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여도가 높은 울산·마포·온산·여수·신안 등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등 기초 조사 실시 (2006년), 배출량 정밀조사 실시 (2007~08년) 결과들과 수도권 지역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특별대책지역에 적합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 - 주요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회수장치 부착 의무화: 전국에 있는 총 11,000여 개의 주요소 중 3,500여개(32%)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있으며 주유에서 배출되는 VOC 총 배출량의 70%를 동 지역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급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를 회수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	1.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기술, 배연탈황기술 등 오염처리와 사후처리 중심의 기술은 선진국 대비 70%의 경쟁력 확보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수행능력 강화	1-3)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 2-2) 우리나라 대기질 환경정책은 부분적으로 일차 오염물질 배출량이 저감되어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그렇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에너지 사용량 당 다환성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일본보다 4배 이상 높으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대기정책 효율성은 낮은 편. 특히 주요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데, 인구의 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심각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역별 피해액 또한 막대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남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14015: 1. 0.80%; 2.99% 2. 16위/18위: 9 위/18위 3. \$2.41: \$0.52 4. 일본 \$8.51: 스위 스 0.34% 다른 공여국과 한국 모두 많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 일본이 주 공여국임	1. 오르단 폐수처리시설 확장 타당성 조사 사업: 76억원의 유상원조 지원, 터키 방식으로 코오롱에서 2005년 마다바 지역 폐수처리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음. 한국의 폐수처리 기 술축적 및 소개와 기업진출의 간접지원효과를 냄. 하드웨어 원조보다는 타당성 조사, 세부설계, 마스터 플랜 등 소프트 웨어적 기술협력 지원방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2000년 11월, 76억원 상당의 EDCF 지원 2. 베트남 산업폐수처리 역량강화 (2007년) 3.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2007년): 마스터 플랜 개발을 위한 전문가파견, 국내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2007 - 이라크 오폐수 처리 389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 80% 이 상, 정부는 매년 4조원 이상의 예 산을 하수처리시설과 건설에 투자 하고 있음. 하수처리공법의 경우, 지난 10년간 국외 선진기술을 정 책적으로 받아들였고 현재는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그 기술력이 부 족하지 않음. 특히 환경부의 정책, 수질관련 학계와 설계, 건설 및 운 영기술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개도국이 발전모델로 삼 기에 적합함), 폐·하수 처리시설 관리 417 (참여도 및 만족도 양호, 실무위주의 강의 확대필요), 한·일 호소수질 관리 (교차) 442 (비교우 위 높음)		2. LDC: 수질오염
	1. 중국 천진도시대기분진 연구지원사업 (1996년/20만 달 러): 중국 천진과 우리나라 부산의 환경오염관련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중국 측 수해기관이 환경관리 당국 이나 국가 환경 연구소가 아니라서 지방 대학 부설 연구소 인 점이 연구결과의 실행 및 법제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임		대기오염 관리개선 부문은 수원국 개 별정책에서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음	
41020: 1. 2.03%; 2.47% 2. 9위/18위: 10 위/8위 3. \$4.63: \$0.39 4. 일본 \$1.25: 호주 0.67%				
환경분야에서는 정 책 41010 (12.42%) 보다는 환경교육 41081 (0.82%) 및 환경연구 41082 (1.78%)가 훨씬 더 차별적임		2007 - 한·일 대기오염 방지 (교 차) 433 (수원국 개발정책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 2008 - 한·일 공동연수 (2008-10 년) 대기오염 방지기술 616 (연수 필요성 및 참여도에 편차 존재)		

분야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환경 여성	지구 환경보전 역량 강화	산림 보전 역량 강화	31210 (임업 정책/행정/관리), 31220 (임업개발)	산림보전, 복원 (산림녹화 조성) 기술 공동연구 및 관리정책 수립: 사막화 및 황사방지 공동연구	1-1) - 「산림법」은 1961년에 제정된 것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산림이용 및 임업진흥 등 여러 분야의 정책과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 정부는 해방 이후 황폐된 국토의 녹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편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다가 제3 공화국 출범 이후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로 이관. 이는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데는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하고 산림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임, 또한 유신헌법 제 119조에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산림청이 내무행정의 일환으로 흡수됨과 동시에 내무부 장관 주도하에 「제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계획은 종합적 경제사회발전계획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과 상충을 피하기 위해 「이 계획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새마을운동 등과 유기적인 연결 속에 계속 발전시키면서 보완을 거듭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움, 이 계획은 <제 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를 국토의 녹화에 두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조림에국사상의 생활화로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이후 <제 2차 치산 녹화 계획>은 경제림 조성을 위한 80개 경제림단지를 형성하고, 1997년 <제 3차 산지 자원화 계획>은 목재자급기지 육성을 위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함. 2003년 <제 4차 산림 기본 계획>에서는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 - 치산녹화를 목표로 했던 규제 위주의 '산림법 입법정체' 단계를 넘어 산업화-환경인정을 지향하며 2001년 5월에 제정된 「산림기본법」 제정. 국제적으로는 리우 환경회의 이후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국내적으로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보호 등이 중시됨에 따라 산림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명정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조림, 사비, 육종, 개량 등의 기술	1.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델이다. 세계를 다시 숲으로 덮을 수 있다' Lester Brown Plan B 2.0 (2006)에 따르면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됨 2. 조림과 사비 등에는 비교우위 있으나, 육종, 개량 등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떨어짐
				임목개량시설 건립, 조림 및 산림공원, 양묘장 건립: 국립공원 관리 및 보존, 생태관광 시설 구축, 사막화 예방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 구축 (친환경 에너지 공원 등), 기후 변화 대응역량강화	1-2)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3차례 이르는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산림기본 계획 (1973-97년)>을 세움으로써 6.25 전쟁으로 인한 황폐지를 완전히 복구하고 30년 동안 100억 그루 이상의 조림을 조성 국토의 65%를 산림으로 채움, 그 주요 시책 및 결과를 보면 우선 1975년부터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춘기조림을 실행하는 범국민식수기간을 정착시켰고, 산림의 보호차원에서 벌채 및 무단입산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모든 지역의 경찰공무원과 산림공무원이 분담하는 보호관리·보호단속·기술지도의 삼위일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이룩함. 또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화전정리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농촌의 연료공급을 위한 대단위 연료림을 조성. 특히, 1978년 당초 조림목표량 100만ha 보다 많은 108만 ha의 녹화사업을 초과 달성하여 계획기간을 4년 앞당기게 됨 1-3)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임업연구원, 미래숲 2-2) - 이와 같이 <제 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기간 동안 대부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나 적지적수원칙 없는 조림지 선정, 사방사업과 용자식재 등 일부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열대림 등 우리나라에 없는 종에 대해서는 비슷한 계열 종에 대한 지식 활용(예: 케냐의 자트로파나는 우리나라의 아주까리와 비슷한 종)	
환경 여성	지구 환경보전 역량 강화	해양 보호 역량 강화	41020 (생물권역 보호)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오염관리정책 수립	1-1) - 지구 및 지역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부는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 (2001-2005년)」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양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예방조치와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도모 - 2003년 한국 해양연구원이 남해연구소에 APEC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AMETEC) 정식 개소 1-2) 2001년 6월에는 환경친화적인 「제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01-2011년)」이 수립되어 농경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도시용지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조성 등의 대규모 매립을 제한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공법의 적용. 「연안관리정보시스템 (1999-2003년)」이 구축되어 관련정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2002년부터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연안모니터링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UN 해양협약」에 기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연안통합 관리정책 수립,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등을 추진. 또한 해양수산부는 오염상태가 심각한 인천-시화호 연안,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함평만, 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을 환경보전해역으로 분류 지정하여 관리하는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을 2000년에 수립·시행함.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해양자원의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1999년부터 오염원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중침적폐기물수거와 같은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추진 중. 적조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소, 각 대학의 적조연구자가 참여하는 적조관련 자료의 생산 및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내 중앙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 1996년 8월부터 정부는 태안반도에서 동해안에 달하는 구간에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 유류오염사고의 예방책을 마련 1-3)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AMETEC, 서해수산연구소 2-3) Ocean Observation과 Hydro-graphic Surveying을 통한 운영에는 반면, 연수 참가국 대부분이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한국 시스템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 (적용가능성: -)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 (IHO) 회원국이자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EAHC) 회원국이며, IHO 선복량 기준 8위의 선진해양기술 보유국임
				해양오염저감기술 전수, 해양오염 모니터링 시설지원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리기술 연구인력 양성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가능성
31210: 1. 1.78%: 6.70% 2. 10위/18위: 3위/18위 3. \$4.95: \$0.84 4. 일본 \$26.05: 핀란드 1.45% 31220: 1. 3.20%: 11.26% 2. 7위/18위: 2위/18위 3. \$5.39: \$1.59 4. 일본 \$12.31: 핀란드 1.13% 평균 2.49%. 일본이 주 공여국이며 핀란드의 중점 분야. 부문별 상대적 비율로 보면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세부분야별로는 임업개발보다 임업정책 행정관리 쪽이 조금 더 차별성 있는 분야임	1. 중국 밀운저수지 수원보호림 조성사업 (2001~2003년): 화분식 식재기술을 응용하여 조림작업을 실시한 결과, 율창한 숲 조성. 화분식 식재법이 보급되어 베이징, 화북성 일대 녹화사업에 기여. 적용성: 무리한 임도건설, 탁도계 설치 등은 한국의 경험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단발적 사업에 그침 2.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 (2001~2005년): 5개 지역에 방호림, 생태림이 조성됨. 총 8,040ha의 인공조림 성공. 지역별 조림기법 및 기술이 해당 지역의 인공조림 표준으로 채택.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음. 그러나, 한국의 조림방법에 대한 선호도 높지 않았고 사후관리 미약 3.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2차): 산림녹화효과가 크게 향상됨. 관정설치로 식재목 관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 4. 인도네시아 소경목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1998~1999년/46만 달러): 벌채와 산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경목 활용방안을 산림청 및 임업연구원과 함께 연구조사. 소경목 최적 이용 제품화 및 시장화 방안 수립	2007 - 산림관리 339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정책이 성공한 대표적 국가, 참여도 및 만족도 높음) 2008 -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관리과정 585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의 녹화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서 6·25 전쟁 이후, 황폐지를 완전 복구하고 100억 그루 이상의 조림을 조성하였음, 높은 목표 달성도)	2. MDG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B: Reduce biodiversity loss, achieving, by 2010,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ate of loss 7.1 Proportion of land area covered by forest 7.2 CO2 emissions, total, per capita and per \$1 GDP (PPP) 7.3 Consumption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41020: 1. 2.03%: 2.47% 2. 9위/18위: 10위/18위 3. \$4.63: \$0.39 4. 일본 \$1.25: 호주 0.00% 일본이 주 공여국.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비중은 대부분 비슷함	프로젝트 사업은 없음	2007 - 중국황해해양 환경조사 411 (효과높음), 해양조사기술 451 (실습 강화 필요), APEC 해양환경평가 465 (만족도 높음, 강의시간 부족) 2008- 해양조사기술과정 632, APEC 해양조사기술 658 (높은 목표 달성도 및 만족감)	2. MDG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B: Reduce biodiversity loss, achieving, by 2010,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ate of loss 7.3 Consumption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7.6 Proportion of terrestrial and marine areas protected 7.7 Proportion of species threatened with extinction	

분류	세부 분야	프로그램	CRS CODE	세부내용 예시	한국적 경험	산업적 비교우위
지구 환경보전 역량 강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 (원자 제외)	23030 (재생 에너지 이용 관련 혁신 생산), 23065 (수력 발전 시설 등의 기존 환경화) 등에 대한 LED 교체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로드맵 및 법규지원, 기술개발 지원	1-1) -그린홀 100만호 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정부주도 보급시장을 기반으로 보급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8 연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40%, 태양광·풍력·연료전지분야의 보급률은 0.1% 미만. 정부는 12년 신재생에너지 자 공급 의무화(RPS) 도입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2009년에 완료 예정 - 국내 일관생산 체계 구축 (태양광), 일부 부품 소재의 수출개시 (태양광, 풍력) 등 소기의 성과를 거감. 태양광은 기초 핵심소재 (폴리실리콘)부터 모듈생산 및 최종 시스템사업 (발전사업)까지 일관생산체계 구축, 풍력은 체계적 조성, 중금속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진행중임. 750KW급은 상용화 완료, 1.5MW급은 개발반드시 및 국산인쇄 회로, 2MW 급 이상 대형 풍력시스템의 상용화 진행중. 연료전지는 가정용의 경우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이며, 수출용은 모나터링사업을 통한 성능개선 진행 중. 아울러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조식상용화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 -초기 1987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작하였으나 점차 개발 된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 따라서 1997년 12월에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진흥조치」, 「사업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용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 2000년에는 동 기간제 약령을 수정하여 실용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업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법,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2002년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전기요금과 계통손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2004년부터는 건축면적당 3,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 건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의 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를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를 실시. 한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에 설치 비용 및 표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산업화에 준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동구매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 확대 도입, 신재생에너지특정전문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1. -시스템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신소재 등 요소기술은 크게 열위 -태양광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1%, 모듈가격은 80% 수준. 국내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되어 실용연구가 이루어지는 수준. 우리나라는 모든 전략목표이 최신기술의 개발을 활발히 특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특허의 최신 특허 비율은 82%, 3국 특허 비율은 28%). 중국, 독일, 일본 Sharp, 독일 Q-cell 등의 선도 기업 존재 -태양광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주도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핵심요소기술 및 부품소재기술은 확보하였으나, 생산 공정 단순화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성확화가 요구됨. 또한 태양광은 기초핵심소재 (폴리실리콘)부터 모듈생산 및 최종시스템사업 (발전사업)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구축, 특히 2-3년간 국내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이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 가능 -풍력 시스템 위주 기술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 보유 특허의 최신 특허 비율은 82%로 높으나 3국 특허 비율은 7%에 불과. 현재는 덴마크, 스웨인, 미국, 독일 등 기술력과 자금력을 보유하여 소수기업이 세계 풍력시장 70% 지배하고 있음 -우리의 중공업-조선-해상건조-설비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최저포함 (WEF)의 환경과학기술지수는 세계 1위 (2002년)
				태양광 판별, 지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시범마을 조성,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 학교, 병설 공공시설 등의 기존 환경화 등에 대한 LED 교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법,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2002년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전기요금과 계통손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2004년부터는 건축면적당 3,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 건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의 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를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를 실시. 한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에 설치 비용 및 표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산업화에 준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동구매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 확대 도입, 신재생에너지특정전문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환경보전 정책		태양광 판별, 지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시범마을 조성,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 학교, 병설 공공시설 등의 기존 환경화 등에 대한 LED 교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법,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2002년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전기요금과 계통손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2004년부터는 건축면적당 3,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 건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의 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를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를 실시. 한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에 설치 비용 및 표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산업화에 준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동구매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 확대 도입, 신재생에너지특정전문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법,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2002년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전기요금과 계통손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2004년부터는 건축면적당 3,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 건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의 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를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를 실시. 한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에 설치 비용 및 표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산업화에 준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동구매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 확대 도입, 신재생에너지특정전문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태양광 판별, 지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시범마을 조성,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 학교, 병설 공공시설 등의 기존 환경화 등에 대한 LED 교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법,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2002년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전기요금과 계통손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2004년부터는 건축면적당 3,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 건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의 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실시를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를 실시. 한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에 설치 비용 및 표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산업화에 준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동구매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 확대 도입, 신재생에너지특정전문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에 분야별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하고 기술수준, 상용화가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특히 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신산업 ICG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청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소분야에 기초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내걸.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는 중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W급 주력용 발전시스템 등을 개발 -성남과 창원 등 전국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총 용량은 현재 약 170KW
여성	여성의 권익 진흥 강화	15164 (성평등 및 조적제)	여성들의 교육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여성의 고용안정성 제고	1-1) -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법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 여성부: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로 정무장관 제(2대)는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해 종합·조정. 그 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 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하여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2월 28일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 특히,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미 말미암은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련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집행할 여성부설치, 신설 여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리행위의 정의 및 위반부 및 일제치하에 있는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분야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질 사무를 이관 받고 생활문화에 이명하 정부 아래 2008년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관되었고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편. 여성부의 주요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실행평가 분석 및 평가,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인력의 개발과 정책,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임 1-2) 1960년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여성노동문제와 남녀차별적 고용관행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치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아동보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효과,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3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 또한 2004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 평등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가족법의 제정 및 개정의 일환으로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는 2005년 3월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루어짐.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2006년 10%)를 시행하였을 (추진율향 2003년 6.4%, 2004년 7.4%, 2005년 8.4%), 이의 함께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목표율 30%)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2005년에는 중앙정부에 여성 17명, 지방정부에 124명 (남성 68명, 여성 56명)을 채용. 2003년 국회입법예고수 조처수 채용목표제 시행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을 개정 (여성부) 1-3)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이화여자대학교	1. 한국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발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평등은 매우 취약. GEM (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이 정치 및 경제활동에서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여주는 지표)은 108개국 중 68위 기록, 0.540점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2.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양성평등과 관련한 비교우위agu를 (Peer Review)	
			여성부 등 여성관련 기관 지원	여성들의 교육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여성의 고용안정성 제고	여성들의 교육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여성의 고용안정성 제고	여성들의 교육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여성의 고용안정성 제고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KOICA의 사업성과	연수사업	국제 및 수원 국 수요	지역·국가그룹별 적용 가능성
23030: 1. 0.67%: 0.10% (산업에너지 부 문) 2. 24위/55위: 27위/32위 3. \$2.39/\$0.09 4. 독일 \$10.57: 덴마크 1.04% 23067: 1. 0.34% 2. 27위/55위 3. \$0.59 4. 스페인 \$1.30: 스페인 0.53% 23068: 1. 0.86% 2. 21위/55위 3. \$1.00 4. 독일 \$3.20: 독일 0.59% 23070: 1. 0.09% 2. 37위/55위 3. \$0.92 4. 독일 \$2.25: 핀란드 0.12% 평균 0.49%. 선진국 거의 지원 안 함. 독일, 스페인이 주 공여국임	1. 피지 Muana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인근지역주민 1,5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기, 기계작동, 소규모 공장 가동에 대한 동력을 제공함. 야간 경제활동도 가능해졌으 며, 소규모 외부 투자유치도 이끌어 올 수 있는 효과를 거둠 2. 아프간 이스타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3.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개발조사사업 (1993-1994년/38만 달러): 사업실시기간인 한국전력이 7억 불 상당의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1000억 상당의 말 라야 발전소 1, 2호기 복구공사 수주 4. 아프간 이스타리프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2004-2006 년) 및 1차 (2006-2007년) 2차 (2008-2011년) 사후관리: 진 행 중. - 기존의 KOICA 소수력 사업은 재생에너지 범주에 해당하 나 기존 산업에너지팀에서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공급 학 대' 사업으로 수행해 옴. 따라서 소수력 관련 사업을 중복 표기함	2008 - 한 일공동연수-에너지 지질약 및 환경보호 616	중앙 전력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촌산간의 오 지 및 격차를 중 심으로 독립형 또는 소규모 그 리드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2. - 태양광은 햇빛이 강한 대부분의 개도국에 지원 가능 - 풍력의 경우는 지역임 지선정이 6m/sec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므로 몽골, 필리핀 등 바람이 강한 지 역이어야 함 -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확보이므로 옥수수, 사탕 수수, palm oil 등이 종무 한 개도국 및 작물이 빨리 자라고 땅 넓고 인건비 적 은 나라에 지원 가능
15164: 1. 2.32%: 3.02% 2. 8위/18위: 8위/18위 3. \$6.56: \$0.32 4. 스페인 \$45.96: 스페인 2.34% 스페인인 주 공여국이며 타 공여 국에서도 많이 지원되지 않는 편 임	1. 파라과이 이민청 및 여성부 정보화 사업 (2005년): 연수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참여와 만족도 높음. 그러나 이 분야 협력단 사업이 매우 적고 평가 보고서도 없음	2007 - 베트남 여성발전 2차 324, 아프간 여성공무원 연 수과정 357, 여성인권 및 여 성발전 366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과정, 참여와 만족도 높음) 2008 - 네팔 여성개발 437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 리, 다양한 교과목 강의구성 매우 좋음), 농촌여성 경제력 증진 과정 445, 베트남 여성 개발 3차 과정 498, 성 평등 정책 역량강화 519, 여성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향상 540, 여성인권 및 여성발전 548 (중장기 연수로의 전략적 기 획 필요), 여성정책개발 555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 창적인 여성정책 개발 및 집 행 구조를 가지고 있음, 만족 도 높음, 원활한 진행)	MDG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참고문헌

- 경제정책 비서관실. (2007). “개발경험 해외전수 판매사업 활성화 방안.” 경제정책 비서관실.
- 경향신문. (2007년 1월 25일). ODA 전문가 좌담. “경향신문”.
- 관계부처합동. (2007).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안).”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 권율, 김한성, 박복영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권율, 박영호, 이종운 & 황주성. (2006). “개발조사사업 확대발전방안.” KOICA.
- 권혁주, Hemmingson, Anna. & 이영미. (2005).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 베트남 경제제도 구축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KOICA,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발전 연구센터.
- 김은미. (2010).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현황과 국제협력: 행정학을 중심으로 (Powerpoint presentation). “한국 행정학회 제 15회 국정포럼.” 한국 행정학회.
- 김진오 외. (2009).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푸른세상.
- 박복영, 권율 & 정성춘. (2008).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박복영, 채욱 & 이제민. (2007).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박수영. (2009). “사업발굴 및 형성체제 평가연구.” KOICA.

-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16 (제 604호)).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선택: 농업경영. “CEO Information”.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Saemaul Handbook.”
- 서상선. (2002). “한국직업훈련제도의 발자취.” 대한상공회의소.
- 이경구. (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 규모와 분야 효과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KOICA.
- 이계우. (2009). 한국의 국제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정책. “국제개발협력”. No.4
- 이현주. (2009). “수원국 공공재정 및 조달 시스템 활용방안.” KOICA.
- 이현주. (2010).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
- 이현주. (2009a). “KOICA 사업의 삼각협력 추진방안.” KOICA.
- 전승훈, 이경구, 이재홍 & 손성애. (2007).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KOICA.
- 전승훈, 이태주, 김달현, 이태희 & 전은영. (2006).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KOICA.
- 정기환, 김용택 & 허장. (2007). “대 개도국 농촌개발경험 전수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유아. (2009).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국가지원전략(CAS)’활용 현황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No.2

- 조성준 & 홍소정. (2007).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 미니 모자보건소의 설립을 중심으로, 제 3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페이지: 13-49). KOICA.
- 조원권 & 박정호. (2005). “ICT 협력사업 추진전략.”
- 주동주 편저. (2008).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알타미라.
- 통계청. (200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통계청.
- 쿠사노 아쓰시. (2006). “해체(解體): 국제협력은행의 정치학.” 동양경제 신보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KOICA.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2009).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태양광, 풍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환경분야 협력사업 평가.” KOICA.
- 한무영, 허옥경, 김충일 & 외. (2010년 1월). 빗물저장 튜브 보급을 통한 아시아 물 빈곤 지역 식수난 해결 전략. “국제개발협력학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ICT 분야 협력사업 평가.” KOICA.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7). “한국국제개발협력 NGO 편람.”
- 허길행, 전승훈, 유철 & 최미애. (2008). “아프리카 빈곤 대책으로서의 농촌 개발: 한국 농촌 개발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홍동표, 고상원 & 문성배. (2005). “2004 IT 산업 경쟁력 국제 비교 - OECD 국가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Actionaid International. (2005). “Real Aid: Making Technical Assistance Work.”
Actionaid International.
- Anholt, Simon. (2003). “Brand New Justice.” Butterworth–Heinemann.
- Bucar, Maja, et al. (2007). Towards a Division of Labour in
European Development Co–operation: Case Study.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 Cassen, R. (1994). Does Aid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Ha–Joon. (2003).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 Rethinking
Development Economics. Anthem Press.
- Chang, Ha–Joon. (2007).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The Miracle,
the Crisis & the Future.” Zed Books.
- CIA. (2009년 10월).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
the-world-factbook/index.html](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에서 검색됨
- Clemens, Michael., Radelet, Steven, & Bhavnani, Rikhil. (2004). “Counting chic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 term effect of aid on growt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 Crola, Jean–Denis. (2009). “Aid for Agriculture: Turning Promises into Reality on
the Ground.” Oxfam.
- DAC Evaluation Network. “Evaluation Systems and Use: a Working Tool for Peer
Reviews and Assessments.” OECD.
- DFID. (2008). “Annual Report.”
- Dollar, David, & Pritchett, Lant. (1998). “Assessing Aid—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World Bank.
- Easterly, William.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The Penguin Press New York.

- EIU. (2009). "Industry Report: Telecoms and Technology – South Korea."
- Endberg–Pedersen, Poul. (June 29, 2009). Objectives and Management of Norwegian Development Policy and Aid. "ODA Joint Workshop".
- ETF. (2009). "Uzbekistan ETF Country Plan 2009." European Training Foundation.
- Europa. (2007). "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the Division of Labour in Development Policy."
- European Commission. (200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M(2008) 409. "Environment Policy Review".
- European Commission. (2008). "DAC Division of Labour Questionnaire: The Results." Brussels.
- Feng, Lu. (2009). China's Economic & Technical Cooperation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Powerpoint Presentation). "The 2nd International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 Government of Japan. (2005). "Japan's 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9). "Memorandum o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 GTZ. "GTZ's Cooperation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TZ.
- Hansen, Henrik & Tarp, Finn. (2000). Aid and Growth Regression. Centre for Research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 Haslam, P. Schafer, J. & Beaudet, P. (2009).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pproaches, Actors, and Issues" Oxford University Press.

- Jerve, Morten Alf. & Selbervik, Hilde. (2009). "Self-Interest and Global Responsibility: Aid Politics of South Korea and India in the Making." CHR, Michelsen Institute.
- JICA. (2008). "ODA White Paper: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 Joo, Dong-Joo. (2009). "Republic of Korea: Transforming from Recipient to Donor (Powerpoint presentation)." The 2nd International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 Jung, Woojin. (2007). Analysis of Impact Evaluation Systems for Exim Bank Development Assistance Loans, Harvard Kennedy School.
- KOICA. (2009). "1992-2008 국제협력단 프로젝트사업 현황." KOICA.
- KOICA. (2009a). "개발조사사업형태별 평가결과 보고서." KOICA.
- KOICA. (2009b). "개발조사사업 활용실태." KOICA.
- KOICA. (2007).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 KOICA.
- KOICA. (2008). "교육분야 지원사업 분야별 평가 보고서."
- KOICA. (2009c).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현황." KOICA.
- KOICA. (2008a).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b). "미얀마 IT 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c).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d). "베트남 IT 입법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e). "보건의료분야 분야별 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7a). "연수과정 종료평가." KOICA.
- KOICA. (2007b). "요르단 2개 정부부처 정보화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7c). "정보통신분야 4개 사업 위탁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9c). “제 3회 ODA 서울 국제컨퍼런스 결과 보고서.”
- KOICA, (2008g).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7d).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복구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h).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7).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평가.” KOICA.
- KOICA, (2008i).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 “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KOICA.
- KOICA, (2008f). “KOICA 연수과정 종료평가.” KOICA.
- KOICA,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KOICA.
- KOICA, (2007). “ODA 국제컨퍼런스 결과 보고서.”
- KOICA,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한국 국제협력단 보건의료 협력사업 평가.” KOICA.
- Korten, David, (1980). Community Organ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A Learn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0(5).”, Pp. 480-511.
- Lancaster Carol, (1999). Aid effectiveness in Africa: The unfinished agend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487-503.
- Leipziger Danny, & Kim, Kihwan, (2000). Korea: A Case of Government-Led Development. , Lessons from East Asia. The University of Michigna Press.
- Lim, Kyungbim, “Korea’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Current State and Task Ahead.”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 Munyi, N.Elijah. (2008). Exporting Saemaul Movement. "Korea Times".
- National Council of Saemaul Undong Movement in Korea. (2003). Saemaul Undong Handbook.
-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2008). "Oil for Development Annual Report." Norad.
- OECD. (2008b).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OECD.
- OECD. (2009e). "Aid Effectiveness: A Progress Report O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
- OECD. (2006). "Analysis of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1995–2004." OECD.
- OECD. (2009). "Austria DAC Peer Review." OECD.
- OECD DCD/DAC. (2007).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OECD.
- OECD. (2007d). "Denmark Peer Review." OECD.
- OECD. (2009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9. "OECD Journal on Development".
- OECD. (2007a). "EC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7b).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OECD.
- OECD. (2006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OECD.
- OECD. (2009b). "International Good Practice Principles for Country-Led Division of Labor and Complementarity." OECD.
- OECD. (2004). "Japan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8). "Luxembourg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9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OECD.

- OECD. (2008a). "Measuring Aid to Health." OECD.
- OECD. (2009d). "Measuring Aid to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OECD. (2006a). "Portugal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7c). "Spain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0d). "Sweden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6b). "UK DAC Peer Review." OECD.
- OECD. (2006c).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OECD.
- Oyejide, Ademola. (2004). "Trade Liberalization, Regional Integration, and African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Adjustment." IDRC.
- Park, Sooyoung (2009), Analysis of Saemaul Undong: A Korea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16(2).441
- Rihani, Samir. (2002). "Complex Systems Theory and Development Practice: Understanding Nonlinear." Zed Books London & New York.
- Roeske, Kerstin. (2007). The Code of Conduct for a Better Division of Labor in the Development Policy—Is it a real milestone? "Brussels Focus".
- Rowlands, Dane. (2008). "Emerging Don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DRC).
- Schulz, Nils-Sjard. (2007). Division of Labour among European Donors: Allotting the Pie or Committing to Effectiveness? "FRIDE Comments".
- Smith, F. James. (June 14, 2009). US Faces Global Health Aid Dilemma. "Boston Globe".
- Stiglitz, Joseph. (August, 1999). Some Lessons from the East Asian Miracle.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pp. 157–177.
- UNCTAD. (1996).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UNCTAD.

- UNDP. (2008). "Batken Area Based Development Programm: Draft Brief Update for the Korea Policy Consultation Meeting." UNDP.
- UNESCO. (2008).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UNESCO.
- United Nations. (2008). "e-Government Survey: From e-Government to Connected Government."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08b).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United Nations.
- USAID. (2006). "USAID Primer: What We Do and How We Do It." USAID.
- Varughese, George. (2009). Emerging Era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Role of India. The 2nd International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Workshop Steering Committee of the 2nd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November 2009). "Co-Chair Summary." The 2nd International Policy Workshop on Aid Effectiveness in Seoul.
- World Economic Forum. (200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 World Economic Forum. (200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World Economic Forum.

저자 약력

정우진

주요 경력

KOICA 정책연구실 Policy Analyst (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International Cooperation(국제협력론)” 강의 (현)

UNICEF New York, Division of Policy and Practice 컨설턴트

Harvard University, Malcolm Winner Center for Social Policy 연구원

주요 연구실적

The Empowerment of Women from Excluded Communities in Bihar State, India

Analysis of Impact Evaluation Systems for Exim Bank Development Assistance Loans

Aid Works (Forthcoming)

연구자료 정책연구 2010-07-032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발 행 2010년 3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우: 461-833)
전 화 031) 740-0301
팩 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아테라커뮤니케이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469-004-8 13320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